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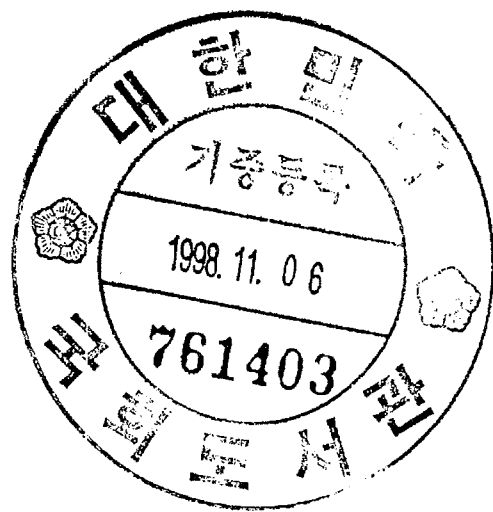
19813140

1998년도

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농 립 부

본 보고서는 농업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의 동향과 정책에 관한 내용을 1998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음



목 차

제 1 부 농업부문

제 1 편 1997년도 농업동향

제 1 장 경제동향	5
제 1 절 국내외 경제동향	5
1. 국내 경제동향	5
가. 경제성장	5
나. 물가와 금리	11
다. 고용과 임금	13
라. 경상수지와 환율	14
2. 해외 경제동향	18
가. 경제성장과 고용	18
나. 교역과 경상수지	20
다. 물가	21
라. 국제금리	22
마. 국제환율	23
제 2 절 농촌경제 동향	23
1. 농업구조	23
가.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23
나. 농경지	24

2. 농가경제	27
가. 농가소득	27
나. 가계비	33
다. 농가자산	33
라. 농가부채	34
마. 농가편의용품 보유현황	38
바. 전·겸업 농가별 주요현황	38
사. 도별 주요 현황	39
3.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40
가. 개황	40
나. 농가판매 가격 동향	40
다. 농가구입 가격 동향	43
4. 농림어업 부가가치	45
5. 농업생산성	47

제 2 장 국내농산물 수급동향

제 1 절 국내 주요 농산물 수급동향

1. 식량 작물	49
2. 원예·특용작물	52
가. 채소류	52
나. 과실류	53
다. 특용작물	53
라. 인삼류	54
마. 잠사류	55
3. 축산물과 사료작물	56
가. 축산물	56
나. 사료작물	59

제 2 절 식품 수급동향	61
1. 식품소비와 식생활의 변화	61
2. 식품수요와 공급현황	64
가. 식품수요	64
나. 식품공급	68
3. 식품가공산업 현황	70
가. 생산현황	70
나. 생산업체 현황	72
다. 고용실태	73
제 3 절 농림산물 교역동향	75
1. 농림산물 수출입동향	75
가. 수출동향	75
나. 수입동향	76
2. 농림산물 남북교역동향	77
가. 농림산물 교역규모	77
나. 농림산물 교역동향	77
제 3 장 국제 농업동향	80
제 1 절 국제곡물수급과 가격동향	80
1. 국제곡물 수급동향	80
가. 생 산	80
나. 소 비	81
다. 교 역	81
라. 기말재고	81
2. 국제곡물 가격동향	83

제 2 절 주요 국가의 농업동향 및 양국간 통상협력	83
1. 주요국가의 농업동향	83
가. 미 국	83
나. 중 국	86
다. 일 본	88
라. EU	90
2. 양국간 통상협력	94
제 3 절 농업관련 국제기구 관련활동	98
1. WTO 활동	98
2. OECD 활동	102
가. OECD 농업위원회 활동	102
나. OECD의 한국농업정책 검토	103
3. FAO 활동	104
4. WFP 및 IFAD의 대북한 지원사업	105
5. APEC 관련활동	106
6. 농업·환경·무역연계 논의동향	107
7. WTO/SPS위원회 동향	109

제 2 편 1997년도에 시행한 주요 농정 시책

제 1 장 농촌발전대책 추진 지원토대 확립	113
제 1 절 구조개선사업 및 농특세 예산조달	113
1. 농어촌구조조정사업 재원확보	113
가. 예산편성 기본방향	113
나. 예산규모	113
다. 중점투자 분야 및 재원확보 내용	114

2. 농어촌구조개선 투융자사업 평가	117
가. 농어촌 투융자사업 개요	117
나. 농어촌 투융자 내역	118
다. 농어촌 투융자사업의 평가 및 개선방향	120
제 2 절 농림사업의 객관적 평가실시	121
1. 사업평가 개요	121
가. 평가배경 및 목적	121
나. 평가대상	121
2. 사업평가 결과	123
가. 평가결과 종합	123
나. 산업별 평가결과	124
3. 향후 추진방향	128
제 3 절 농림행정 쇄신 및 법령·제도개선	128
1. 농림법령 및 제도개선	128
2. 농림행정 쇄신 및 규제완화	132
가. 주요 추진 상황	132
나. 주요 개선 내용	132
3. 재해지원 등 추진	134
4. 농정모니터제 운영	136
5. 축산식품 가공업무관리 일원화	137
6. 낙농제도 개선	140
제 2 장 농촌발전대책 및 선진농업의 기반구축	142
제 1 절 농업전문 경영체의 육성	142
1. 농업인 후계자 및 전업농업인 육성	142

2. 품목별 농업인 교육	143
3. 농업계 교육 활성화	146
4. 농업경영혁신 종합지원	147
5. 법인경영체의 육성	148
가. 영농조합법인	148
나. 농업회사법인	149
다. 농업회사법인 등 법인 경영체 지원	150
제 2 절 주요곡물의 자급기반 확충 및 시설 현대화	151
1. 생산기반 확충	151
가. 일반 경지정리사업	151
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152
다. 밭기반 정비사업	153
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55
마. 배수개선 사업	156
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57
사. 농업용수 개발사업	157
아.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158
2. 생산·유통시설의 현대화	159
가. 원예특작부문 지원	159
나. 인삼산업 육성지원	160
다. 축종별 경쟁력제고 사업	161
라.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	162
3. 농업기계화	163
가. 농업기계 공급지원	163
나. 농업기계 이용조직 육성	166
다. 농업기계 사후관리 및 기술훈련강화	167
라.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의 개발	169

4. 농업자재 공급	171
가. 농약의 수급관리	171
나. 종자의 수급관리	171
다. 비료의 적정공급 및 가격안정	172
제 3 절 농업기술개발 보급과 정보화 촉진	174
1. 농업기술 개발	174
가. 개요	174
나. 농업특정 연구사업	175
다. 분야별 농업기술 개발	177
라. 농업기술 보급	185
2. 농업정보화 촉진	190
가. 농업정보화 기반의 확충	190
나. 실용적인 농업정보의 개발·보급	191
다. 정보통신 이용교육 강화	193
라. 농산물 유통정보 서비스의 확대	193
마. 원격영농기술 지도시스템구축 운용	195
바. 정보화 응용 지원사업 확대	195
사. 농림부 홈페이지 개설·운영	196
제 4 절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수급안정	197
1.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197
가.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197
나. 농산물 공판장 건설	198
다.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	198
라.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제도 개선	200
2. 농축산물 수급안정	200
가.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	200

나. 과실류 수급안정 지원	201
다. 축산물 수급안정 지원	202
제 5 절 농축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과 환경농업 육성	205
1. 농축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205
2. 축산물위생 및 가축방역 대책	206
가. 축산물 안전성 및 위생수준 제고 대책	206
나.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208
다. 「구제역」 국내유입방지대책	210
3. 환경농업육성	213
가. 여건	213
나. 환경농업육성방향	214
다. 1997년 환경농업 주요시책	215
제 6 절 농산물 수출진흥 및 수입관리	224
1. 농산물 수출 진흥 대책	224
가. 해외시장 개척	225
나. 농산물 수출지원체제 강화	227
2. 수입관리	227
제 7 절 농촌활력 증대 및 농업인 복지 증진	229
1. 농촌생활환경의 지속적 개선	229
가. 정주생활권 개발	229
나. 농어촌 도로 확·포장	230
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231
라. 농촌생활여건 개선	232
2. 다양한 소득원 개발	233
가. 농공단지 운영 지원	233

나. 농촌관광 휴양자원 개발	233
3. 농어업인 복지제도 확충	234
가. 농어촌 교육여건과 개선 대책	234
나. 농어업인 후생복지 증진	241

제 3 편 1998년도 농정 시책

제 1 장 1998년도 농업정책 방향	249
----------------------------	-----

제 1 절 1998년도 농정목표	249
-------------------------	-----

제 2 절 1998년도 농정방향	251
-------------------------	-----

1. 주곡자금으로 민생안정과 식량안보 확보	251
-------------------------------	-----

2. 농산물 유통구조개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동시보호	252
-------------------------------------	-----

3.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고품질·안전농산물 공급	253
----------------------------------	-----

4. 수출 농업 본격 전개로 우리 농업의 활로개척	254
-----------------------------------	-----

5. 농업구조조정의 촉진으로 경쟁력 제고	255
------------------------------	-----

6. 농정개혁의 추진과 농정추진 체계 개편	255
-------------------------------	-----

제 3 절 1998년도 농림부문예산 확보	256
------------------------------	-----

1. 1998년 농림예산과 추경 편성 방향	256
-------------------------------	-----

가. 1998년 농림예산 편성방향	256
--------------------------	-----

나. 1998년 추경예산 편성방향	257
--------------------------	-----

2. 1998년 당초 농림예산과 추경규모	258
------------------------------	-----

3. 1998년 농림예산 주요 제도개선내용	259
-------------------------------	-----

제 2 장 1998년도 주요농정 시책	261
----------------------------	-----

제 1 절 주곡의 안정적 자금과 양곡관리제도 개선	261
-----------------------------------	-----

1. 우량농지 보전시책의 지속 추진	261
2. 생산기반 확충	263
가. 일반경지정리 사업	263
나.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264
다. 밭기반 정비사업	264
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265
마. 농업용수 개발사업등 기타	266
3. 주곡 안정적 공급을 통한 쌀 식량안보강화	267
4. 양곡관리제도의 개선	269
제 2 절 농산물 유통구조의 획기적 개혁	269
1. 농산물 유통개혁 추진배경	269
2. 유통시설의 효율성 증진	270
가.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270
나. 농수산물 공판장 건설	270
다.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로 유통경로 다원화	271
라.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제도 개선	271
마. 생산자 조직중심의 산지유통혁신	272
3.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273
가. 직거래의 중요성 및 의의	273
나. 향후 추진방향	274
제 3 절 농업구조조정 추진으로 경쟁력 제고	275
1. 농업인력육성	275
가.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업인 육성	276
나. 농업경영혁신 종합지원	277
다. 가족농을 중심으로 한 농업인력 육성	278
2. 법인경영체의 육성	279

가. 영농조합법인	279
나. 농업 회사법인	280
다. 농업회사법인 등 법인경영체 지원	281
3. 농업의 기계화 및 현대화	282
가. 농업의 기계화	282
나. 농업시설의 현대화	284
4. 농업기술의 개발·보급	286
가. 공공기술개발	286
나. 농업기술개발	290
다. 농업기술 보급	297
라. 비용절감형 축산경영체계 구축	302
5. 농업 정보화의 확대 추진	305
가. 농업정보화의 기반마련	305
나. 농업경영 및 유통의 정보화 촉진	306
다. 농업인의 정보이용능력 제고 및 정보문화의 확산	307
제 4 절 수출농업의 기틀 구축	308
1. 수출여건과 전망	308
2. 농산물 수출진흥대책 추진	309
가. 국내 소비안정에 기반을 둔 수출규격품의 생산지도 강화 ...	310
나. 농산물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	310
다. 수출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와 해외시장 개척활동 강화	311
3. 수입관리 대책	312
가. 1997년도 평가	312
나. 1998년도 수입관리 대책	313
제 5 절 국내부존자원을 활용한 저투입 친환경농업 육성 ...	314

1. 축산분뇨의 자원화와 Recycle(유기질 비료화)	314
2. 국내 부존자원을 활용한 저투입 친환경농업 육성	315
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원 경감	315
나. 농업환경의 유지·개량	316
다. 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	317
라. 환경농업 육성제도 완비	317
제 6 절 농업인 소득지원과 복지지원 강화	318
1. 직접지불제의 단계적 도입	318
2. 농가경영 안정대책 추진	319
3. 농어촌교육·의료 등 복지지원 강화	320
가. 농어촌교육환경 개선	320
나. 농어업인 연금제의 내실화	322
다. 농어촌 의료환경 개선	323
라. 농촌생활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325
4. 여성농업인의 역할제고 및 권익신장	326
가. 추진배경	326
나. 주요정책 내용	327
5. 농어촌의 생활환경개선	328
6. 재해농가 지원강화	330
제 7 절 농정추진체계의 개편	331
1. 농업인·소비자·정부의 협조체제 강화	331
2. 현장농정의 실천	332
3. 농림사업의 투융자 방식 개선	332
4. 농업행정쇄신 및 규제개혁	333
5. 농정추진조직의 개편	334

가. 농림부 및 외청의 직제개편	334
나. 농림관련 기관 및 단체의 정비현황과 계획	341
6. 협동조합개혁 추진	347
가. 협동조합개혁 추진배경	347
나. 협동조합 개혁위원회 활동	348
다. 협동조합개혁 추진방향	349
7. 농업·농촌기본법 제정추진	350
8. 농정모니터 운용 개선	352

제 8 절 WTO차기 농업협상 대책 추진 및

남북농업 교류·협력 활성화	353
1. 차기 농업협상 논의동향	353
가. WTO 차기협상 관련동향	353
나. 농업분야 주요 논의사항	353
2. 대외협상체계 구축	356
가. 추진 기본방향	356
나. 세부대책 추진	356
3. OECD 한국농업정책 검토와 WTO 차기협상	357
4. 남북농업교류·협력 활성화	358
가.북한식량 수급상황과 전망	358
나. 대북농업지원 및 교류·협력방안	359

제 9 절 IMF 위기극복을 위한 농림분야 지원대책

1. 사료곡물과 영농자재의 안정적 확보 공급	362
가. 사료곡물의 수급안정 지원	362
나. 영농자재의 안정공급	364
2. 농·축산 경영자금 지원	366

3. 귀농자에 대한 영농정착 지원추진	366
가. 귀농가구 동향	366
나. 귀농자 영농정착 지원대책	367
4. 농림분야 실업대책 추진	368
가.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사업무에 보조인력 채용	368
나. 숲 가꾸기 사업추진	368
다. 서울역 광장에 「농촌 일자리 합동안내센터」설치·운영	369
라. 농어촌 용·배수로 준설사업 추진	369

제 2 부 임업부문

제 1 편 1997년도 임업동향	373
제 1 장 국내외 임업동향	375
제 1 절 해외 임업동향	375
1. 세계의 산림자원 동향	375
2. 세계의 목재수급동향	378
3. 임업분야 국제회의동향 및 협약체결	382
가. 일반동향	382
나. FAO 제13차 산림위원회	383
다. 국제열대목재(ITTO)이사회	384
라. 기후변화 협약	385
마. 생물다양성 협약	386
4. 외국의 임업동향 및 임업정책	387
가. 말레이시아 임업현황	387
나. 대만의 임업현황	390
제 2 절 국내 임업동향	393
1. 산림자원현황	393
2. 우리나라의 임업현황	396
제 2 장 임산물 수급동향	399
제 1 절 임산물 생산동향	399
1. 용 재	400

2. 종 실 류	401
3. 버 섯 류	402
제 2 절 임산물 수출입 동향	403
1. 임산물 수출	403
2. 임산물 수입	404
제 2 편 1997년도 임정의 성과	407
제 1 장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	409
제 1 절 산지자원화계획 평가	409
1. 산지자원화 계획의 성과	409
2. 미흡한점	410
제 2 절 제4차 산림기본계획 수립	410
1.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411
가. 정책목표	411
나. 추진전략	411
2. 중점추진과제	411
가. 합리적 산지관리체계 확립	412
나. 경영임정의 촉진과 임업인 육성	412
다. 산림자원의 경제림화 촉진과 관리기반 구축	413
라. 임산업의 경쟁력 강화	413
마. 산림생물자원의 보전·관리 강화	414
바. 산림재해의 효율적인 방지와 도시림 확충	414
사. 산림휴양·문화의 진흥과 산촌 종합개발	415
아. 산림자원 외교의 강화와 남북임업 협력증진	416

제 3 절 산림관련 법령정비	420
1. 산림법령	420
2. 임업진흥촉진법	421
3.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421
제 4 절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422
1. 추진개요	422
2. 주요내용	423
제 5 절 산림행정 조직개편	424
1. 기능직 감축(1997.3.30)	424
2. 실무인력조정(1997.8.13)	424
제 2 장 경쟁력있는 임업육성	425
제 1 절 산지의 자원화 촉진	425
1. 경제림화 추진	425
가. 조림의 질적 전환	425
나. 육림의 확대·내실화	426
다. 종자 국가관리와 양묘생산체계개선	428
2. 자원화 기반조성	429
가. 임도시설 확대	429
나. 임업기계화 촉진	432
다. 전문인력 육성	433
제 2 절 임업경영기반 확충	434
1. 사유림 경영활성화	434
가. 사유림 경영선도 임업인 육성	434
나. 협업경영의 내실화	436

다. 복합경영유도	437
라. 대리경영제도 도입	438
2. 산촌종합개발	439
3. 임산물 유통·이용·가공	441
가.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441
나. 임산물 가공·이용	442
4. 단기소득임산물 개발지원	443
5. 국유림 경영개선	443
가. 국유림책임경영제 조기정착	443
나. 산림경영시범단지 조성으로 선진임업 선도	444
다. 국유림 확대 및 관리강화	445
제 3 절 산림의 환경적 기능 증진	446
1. 맑은물 깨끗한 공기 공급기반 확충	446
가. 5대강유역 산림특별관리	446
나. 도시 생활환경림 조성	447
2. 산림휴양공간 확대와 국민의식 함양	448
가. 산림휴양시설 확충	448
나. 산림문화 확산	450
3. 야생동·식물 보호	451
가. 야생동물보호	451
나. 야생식물보호	454
4. 광릉숲 보전대책추진	455
제 4 절 산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456
1. 산지이용체계 재편	456
2. 산지이용질서 확립	459

제 5 절 임업기술개발·보급	460
1. 현장기술개발·보급	460
2. 첨단기술개발	463
제 6 절 산림재해방지	465
1. 산불방지	465
가. 주요추진상황	465
나. 산불발생 현황	466
2. 산림병해충 방제	468
3. 산사태 예방	470
제 7 절 해외임업협력 증진	472
1. 지구환경협력강화	472
2. 자원협력강화(약정체결)	473
3. 통일대비 북한 산림관리방안 마련	473
가. 북한산림 현황	473
나. 대책	474

제 3 편 1998년도 임정시책

475

제 1 장 1998년 임업정책방향

477

제 1 절 임정의 목표와 방향

477

제 2 절 임업부문 예산

479

1. 임업예산

479

2. 임업자금지원

481

제 2 장 1998년 주요임정 시책	482
제 1 절 산지의 자원화	482
1. 경제림의 지속적 육성	482
가. 조 림	482
나. 육 림	483
다. 종 묘	484
2. 임도시설의 확대 및 내실화	485
가. '98 임도시설 계획	485
나. 기본방향	486
다. 추진계획	486
라. 임도시설 장기계획	487
3. 임업기술개발·보급	488
가. 임업기술개발	488
나. 임업기술보급	488
4. 산지이용질서 확립	489
제 2 절 임업의 산업화	490
1. 국내재 이용촉진 및 목재산업 육성	490
2. 단기소득임산물 육성	491
3.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492
4. 사유림경영의 활성화	493
5. 임업경영 주체육성	494
가. 독립가·임업후계자 육성	494
나. 임업기능인 육성	494
6. 산촌 종합개발	495

제 3 절 산림의 공익화	496
1.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496
가. 환경조림 확대	496
나. 5대강유역 산림특별관리	497
2. 생물다양성 보전·관리	498
가. 야생식물자원보전·관리	498
나. 야생조수보호대책 강구	498
3. 산림휴양시설 확충	501
가. 휴양시설 확대	501
나. 휴양시설 조성·운영 개선방안 강구	501
4. 산림문화 진흥	502
가. 추진배경	502
나. 기본방향	502
다. 추진계획	503
5. 산불방지 종합대책	504
가. 우리나라 산불의 특성	504
나. '98 산불방지 종합대책	504
6. 산림병해충 방제	506
7. 산사태 예방	507
제 4 절 국제협력의 강화	509
1. 산림자원 외교 및 국제협력 강화	509
2. 임산물 수출촉진과 통상협력 증진	510
가. 임산물 수출촉진	510
나. 통상협력증진	511
3. 해외조림 확대	512
4. 통일대비 북한산림관리대책	512

제 5 절 고용창출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 추진	513
1. 숲가꾸기 사업	513
가. 배경	513
나. 추진방향	514
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의 종류	514
라. '98 추진계획	514
2. 생명의 숲 가꾸기 운동	515
제 3 장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516
제 1 절 산림관련 법령정비	516
제 2 절 산림행정 규제개혁	516

표 · 그림

제 1 부 농업부문

제 1 편 1997년도 농업동향

<표 1-1- 1> 경제활동 부문별 성장률	6
<표 1-1- 2> 총저축과 총투자 추이	7
<표 1-1- 3> 농림어업의 성장률	8
<표 1-1- 4> 광공업의 성장률 추이	9
<표 1-1- 5> 건설업의 성장률 추이	9
<표 1-1- 6> 전기·가스·수도사업의 성장률 추이	10
<표 1-1- 7> 서비스업의 성장률 추이	11
<표 1-1- 8>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의 상승률	12
<표 1-1- 9> 취업자수와 실업률	13
<표 1-1-10> 연도별 국제수지 현황	15
<표 1-1-11> 세계 경제성장 추이	19
<표 1-1-12> 주요국가의 실업률 추이	20
<표 1-1-13> 세계 교역(상품과 서비스) 신장률 추이	20
<표 1-1-14> 세계 경상수지 추이	21
<표 1-1-15> 주요 국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22
<표 1-1-16> 주요 국가의 단기금리 추이	22
<표 1-1-17> 주요 국가의 환율 추이	23
<표 1-1-18>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24
<그림1-1-1> 경지면적 변동추이	25
<표 1-1-19> 농경지 이용현황	26

<표 1-1-20> 농경지 사유별 증감내역	27
<표 1-1-21> 휴 경 면 적	27
<표 1-1-22> 농가소득의 구성	28
<표 1-1-23> 경지규모별 농가소득	28
<표 1-1-24> 지대별 농가소득	29
<표 1-1-25> 농업소득의 구성	30
<표 1-1-26> 경지규모별 농업소득	30
<표 1-1-27> 지대별 농가소득	31
<표 1-1-28> 농외소득의 구성	31
<표 1-1-29> 경지규모별 농외소득	32
<표 1-1-30> 지대별 농외소득	32
<표 1-1-31> 가계비 구성	33
<표 1-1-32> 농가자산 현황	34
<표 1-1-33> 용도별 농가부채	35
<표 1-1-34> 차입처별 농가부채	36
<표 1-1-35> 부채규모별 농가분포	36
<표 1-1-36> 경지규모별 농가부채	37
<표 1-1-37> 농가자산과 부채비중	37
<표 1-1-38> 농가편의용품 보유현황	38
<표 1-1-39> 전·겸업 농가별 주요현황	38
<표 1-1-40> 도별 주요현황	39
<표 1-1-41> 농가교역조건 동향	40
<표 1-1-42>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42
<표 1-1-43>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44
<표 1-1-44> 농촌임료금 동향	45
<표 1-1-45> 농림어업 부가가치 추이	46
<표 1-1-46> 농림어업 구조 추이	47

<표 1-1-47> 농가호당 생산요소 투입량	47
<표 1-1-48> 농업생산성 지표	48
<표 1-2- 1> 주요작물의 경지이용면적 추이	50
<표 1-2- 2> 연도별 전체양곡 수급 추이	51
<표 1-2- 3> 1인당 연간 양곡소비량 추이	51
<표 1-2- 4> 채소류 수급 동향	52
<표 1-2- 5> 과실류 수급동향	53
<표 1-2- 6> 특용작물 수급 동향	54
<표 1-2- 7> 인삼 생산 동향	54
<표 1-2- 8> 양 잠 현 황	55
<표 1-2- 9> 누에고치 수급 동향	56
<표 1-2-10> '97 축산물 수급동향	57
<표 1-2-11> 1인당 연간 축산물소비량	57
<표 1-2-12> 육 류 자 급 율	58
<표 1-2-13> 사 료 수 급 추 이	59
<표 1-2-14> 배합사료 용도별 생산량	60
<표 1-2-15> 초지조성 실적	60
<표 1-2-16> 1인 1년당 식품공급량, 1990~96	61
<표 1-2-17> 1인 1일 에너지 공급량, 1990~96	62
<표 1-2-18>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 1990~97	63
<표 1-2-19> 주요 국별 1인 1년간 식품공급량 비교	64
<표 1-2-20> 1인 1일당 영양 공급량	65
<표 1-2-21> 영양권장량(RDA)에 대한 영양소별 섭취비율 추이	66
<표 1-2-22> 주요 국별 1인 1일당 영양공급량 비교	67
<표 1-2-23> 연도별 주요 식품의 공급량	68
<표 1-2-24> 연도별 주요 식품 자급률 추이	69
<표 1-2-25> 식품가공산업의 부문별 생산액	70

<표 1-2-26> 식품가공산업 부문별 가공업체수	72
<표 1-2-27> 식품가공산업 부문별 종업원수	74
<표 1-2-28> 농림산물 수출동향	75
<표 1-2-29> 농림산물 수입동향	76
<표 1-2-30> 교역동향 총괄	77
<표 1-2-31> 반출입 통관실적	78
<표 1-2-32> 주요품목별 반출실적	78
<표 1-2-33> 주요품목별 반입실적	79
<표 1-3- 1> 세계 곡물 기말재고 상황	81
<표 1-3- 2> 세계 곡물 수급 상황	82
<표 1-3- 3> 국제 곡물가격 동향	83
<표 1-3- 4> 미국농업 주요지표	85
<표 1-3- 5> EU 농업의 주요 지표(1995)	91
<표 1-3- 6> 긴급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쿼터물량	101
<표 1-3- 7> WFP의 북한식량지원 상황	105

제 2 편 1997년도 시행한 주요 농정 시책

<표 2-1- 1> 42조원 구조개선 + 15조원 농특세사업 예산(1997)	116
<표 2-1- 2> 42조원 구조개선 투융자사업 예산(1997)	116
<표 2-1- 3> 15조원 농특세 투융자사업 예산(1997)	117
<표 2-1- 4> 농어촌투융자계획	118
<표 2-1- 5> 총 투융자실적	118
<표 2-1- 6> 지원대상별 투융자 실적	119
<표 2-1- 7> 분야별 평가참여기관	122
<표 2-1- 8> 농림사업 중간평가 비교	123
<표 2-1- 9> 1997년 제·개정된 농림법률	130

<표 2-1-10> 농림행정 쇄신 및 규제완화 추진상황	132
<표 2-1-11> 과수·화훼·버섯류 대파대 지원단가	134
<표 2-1-12> 복구지원단가 상향조정 내역	135
<표 2-1-13> '97 재해지원 실적	135
<표 2-1-14> 건의·제안 수신 추이	136
<표 2-2- 1> 1997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현황	142
<표 2-2- 2> 농림수산계 학교지원 실적	147
<표 2-2- 3> 일반경지정리 추진현황	152
<표 2-2- 4> 연차별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	153
<표 2-2- 5>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154
<표 2-2- 6>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155
<그림 2-2-1>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56
<표 2-2- 7>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	156
<표 2-2- 8>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157
<표 2-2- 9>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계획	158
<표 2-2-10>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	159
<표 2-2-11> '97 품목별 지원실적	160
<표 2-2-12> '97 인삼산업 육성 지원실적	161
<표 2-2-13> '97 축종별 경쟁력제고사업 지원내역	162
<그림 2-2-2> 축산물 종합처리장의 육가공라인	163
<표 2-2-14> 연도별 주요 농업기계공급 및 자금지원	164
<표 2-2-15> 주요 농업기계 보유현황	165
<표 2-2-16> '97 농업회사법인 농기계 구입지원실적	166
<표 2-2-17> '97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구입지원실적	167
<표 2-2-18> 농업기계 사후봉사 지정업소 설치현황	168
<표 2-2-19> 농업기계 기술훈련 실적	169
<표 2-2-20> 신기술 농업기계 주요 특성	170

<표 2-2-21> 연도별 농약 소비상황	171
<표 2-2-22> 연도별 보급종 공급량	172
<표 2-2-23> 곡종별 증수율	172
<표 2-2-24> 비료소비량 추세	173
<표 2-2-25> '97 주요 비종별 대농업인 판매가격(20kg당)	174
<표 2-2-26> 기업체 기술이전 과제 내역	176
<표 2-2-27> 분야별 중점개발과제 선정	177
<표 2-2-28> '97 벼 육성 신규 장려품종	179
<표 2-2-29> '97 전작물 품종 신규장려품종	180
<표 2-2-30> 농촌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현황	187
<표 2-2-31> 병해충 발생현황	189
<표 2-2-32> 농림수산정보망(AFFIS) 이용현황	191
<표 2-2-33> 기관별 주요 데이터베이스(D/B)	192
<표 2-2-34> 경영지원용 소프트웨어개발 현황	192
<표 2-2-35> 정보통신이용교육현황	193
<표 2-2-36>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시스템 구축 현황	194
<표 2-2-37> 공영도매시장 유통정보망구축 현황 및 계획	194
<표 2-2-38> 농산물 물류정보시스템 구축현황 및 계획	195
<표 2-2-39> 원격영농기술지도 시스템운영 현황	195
<표 2-2-40> '97개장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황	197
<표 2-2-41> 1997 완공 농산물공판장 현황	198
<표 2-2-42>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설추진내역	199
<표 2-2-43> 주요 채소류 가격안정사업 추진실적	201
<표 2-2-44> 과실류 가격안정사업 추진실적	202
<표 2-2-45> 연도별 국내산 축산물안전성검사현황	208
<표 2-2-46>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주요 추진내용	212
<표 2-2-47>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현황	217
<표 2-2-48>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실적	226

<표 2-2-49> 도로포장 현황	230
<표 2-2-50>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획	230
<표 2-2-51> 상수도 보급현황('96년말 현재)	231
<표 2-2-52>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계획	231
<표 2-2-53> 농촌휴양자원 개발 계획	234
<표 2-2-54> 교단선진화사업 연차별 추진계획	235
<표 2-2-55>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 투자계획	236
<표 2-2-56> 공공도서관 지원 추진실적과 계획	236
<표 2-2-57> 농어가와 도시가계의 교육비 지출 비교	237
<표 2-2-58> 농어촌 지역의 교육비 부담요인별 비중	238
<표 2-2-59>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정책의 변천	238
<표 2-2-60>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실적	239
<표 2-2-61> 기숙사 건립 투자계획	239
<표 2-2-62> 학자금 융자 실적	240
<표 2-2-63> '97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입학 현황	241
<표 2-2-64> 농어촌소재 고등학교 학생수 변화 추이	241
<표 2-2-65> 우리나라 노령인구 증가 추이	242
<표 2-2-66> '97 농어업인연금 가입자 현황	243
<표 2-2-67> 농어업인연금 지원현황 (농특세)	244
<표 2-2-68> 농어촌보건소의 한방진료실설치 및 공중보건한의사 배치계획	245

제 3 편 1998년도 농정 시책

<표 3-1- 1> 1998년 농림예산 기능별·재원별 규모(2청 예산 포함) ...	258
<표 3-1- 2> 1998년 농림예산 주요 사업별 사업비 규모	259
<표 3-2- 1> 일반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	263

<표 3-2- 2> 연차별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	264
<표 3-2- 3> 연차별 받기반정비사업 추진계획	265
<표 3-2- 4>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계획	266
<표 3-2- 5> 쌀 수급 현황	268
<표 3-2- 6> 산지유통 시범농협선정 현황	272
<표 3-2- 7> 1997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현황	276
<표 3-2- 8> 미곡종합처리장 설치현황	285
<표 3-2- 9> 기술개발 성과활용내역	289
<표 3-2-10> 1998년도 조사료수급계획	302
<표 3-2-11> '98년도 농산물 수출전망	309
<표 3-2-12> '97 농림수산물 수입현황	312
<표 3-2-13> 농축산물 개방 일정표	313
<표 3-2-14> '98년도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현황	320
<표 3-2-15> 1998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현황	322
<표 3-2-16> 농가인구 및 농업종사자중 여성비율 추이	327
<표 3-2-17> 연도별 여성농업인 후계자 육성 실적	327
<표 3-2-18> 농림부 직제개편현황	335
<표 3-2-19> 농촌진흥청 직제개편현황	336
<표 3-2-20> 산림청 직제개편현황	336
<표 3-2-21> 농림부 공무원 정원조정현황('98.2.28)	339
<표 3-2-22> 농림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조정 현황('98.2.28)	339
<표 3-2-23> 각 기관별 공무원 정원조정 계획	341
<표 3-2-24> 대북 지원 현황	361
<표 3-2-25> 밀·사료 원료곡물 L/C 개설·지원('98.6.25)	363
<표 3-2-26> GSM-102 자금사용실적('98.6.25)	363
<표 3-2-27> 농자재 재고량과 판매동향	365
<표 3-2-28> 연도별 귀농가구 현황	367
<표 3-2-29> 귀농창업자금 지원실적	368

제 2 부 임업부문

제 1 편 1997년도 임업동향

<표 1-1- 1> 세계의 산림면적	375
<표 1-1- 2> 산림면적이 큰 나라들	376
<표 1-1- 3> 지역별 임목축적	377
<표 1-1- 4> 인공조림지 보유 주요국	377
<표 1-1- 5> 개도국의 인공조림	378
<표 1-1- 6> 인공조림지 보유 주요 개도국	378
<표 1-1- 7> 세계 목재생산 및 소비현황('94)	379
<표 1-1- 8> 품목별 5대 생산국('94)	380
<표 1-1- 9> 말레이시아 산림면적	388
<표 1-1-10> 말레이시아 천연림의 임상별 분포	389
<표 1-1-11> 대만의 임상별 면적	390
<표 1-1-12> 소유별 산림면적 및 축적	393
<그림1-1-1> 선진임업국의 ha당 임목축적	394
<그림1-1-2> 임목축적 및 ha당 임목축적 추이	394
<표 1-1-13> 임상별·영급별 임야면적	395
<그림1-1-3> 영급별 임목축적 추이	395
<그림1-1-4> 소유규모별 산주수 추이	397
<표 1-1-14> 사유림 소유형태별 추이	397
<그림1-2-1> 1997년도 임산물 생산액	399
<그림1-2-2> 1997년도 용재 생산량	400
<표 1-2- 1> 연도별 종실류 생산량	401
<표 1-2- 2> 연도별 버섯류 생산량	402
<표 1-2- 3> 임산물 주요품목별 수출실적	403

<표 1-2- 4> 임산물 국별 수출실적('97)	404
<표 1-2- 5> 임산물 주요품목별 수입실적	405
<표 1-2- 6> 임산물 국별 수입실적	406

제 2 편 1997년도 임정의 성과

<표 2-1- 1> 산지자원화 계획기간 투자실적	409
<표 2-1- 2> 제4차 산림기본계획 투자소요액	417
<표 2-1- 3> 제4차 산림기본계획 주요지표 전망	418
<표 2-2- 1> 조림실적('97)	426
<표 2-2- 2> 고성산불피해지 복구상황	426
<표 2-2- 3> 육림 국고보조금 개선	427
<표 2-2- 4> 육림실적('97)	428
<표 2-2- 5> 임도시설 추진실적('97)	430
<표 2-2- 6> 임도시설 연도별 추진실적	431
<표 2-2- 7> 임업기계·장비 보급실적('97)	432
<표 2-2- 8> 영림단 조직현황('97)	433
<표 2-2- 9>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선발요건	435
<표 2-2-10>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현황	436
<표 2-2-11> 협업체 조직현황('97)	437
<표 2-2-12> 산촌개발 마을현황	440
<표 2-2-13> 임산물 가공·이용 지원실적('97)	442
<표 2-2-14> 국유림 확대실적	446
<표 2-2-15> 큰나무 조림실적('97)	448
<표 2-2-16> 월드컵대비 국토경관 조성계획	448
<표 2-2-17> 자연휴양림 조성실적 및 계획	449
<표 2-2-18> 야생동물 서식밀도	451
<표 2-2-19> 엽기 수렵장 운영현황('97)	453

<표 2-2-20> 자생식물 자원조사 실적	455
<표 2-2-21> 보전임지 지정현황	458
<표 2-2-22>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의 주요 기술개발내용('97)	461
<표 2-2-23> 첨단기술개발사업의 주요 기술개발내용('97)	464
<표 2-2-24> 최근5년간 산불발생현황	467
<표 2-2-25> 산림병해충 발생현황	469
<표 2-2-26> 산림병해충 방제실적	469
<표 2-2-27>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현황('97)	471
<표 2-2-28> 최근 5년간 산사태 발생추이	471

제 3 편 1998년도 임정시책

<표 3-1- 1> 임업부문의 예산비율	479
<표 3-1- 2> 사업별 투자예산	480
<표 3-1- 3> 임업자금 융자현황	481
<표 3-2- 1> 조림계획('98)	483
<표 3-2- 2> 육림계획('98)	484
<표 3-2- 3> 임도시설 계획('98)	486
<표 3-2- 4> 임도시설 장기계획	487
<표 3-2- 5> 임업기술지도원 배치 운영상황	489
<표 3-2- 6> 환경조림 추진계획('98)	496
<표 3-2- 7> 5대강유역 산림사업계획('98)	497
<표 3-2- 8> 산림휴양시설 조성계획	501
<표 3-2- 9> 산림병해충별 방제계획('98)	507
<표 3-2-10> 산사태 위험지 현황('97)	508
<표 3-2-11> 산사태 발생예보 및 행동요령	508
<표 3-2-12> 임산물 수출목표 ('98)	511
<표 3-2-13>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514
<표 3-2-14>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교육계획	515

제 1 부 농 업 부 문

제 1 편 1997년도 농업동향

제 2 편 1997년도에 시행한 주요 농정 시책

제 3 편 1998년도 농정 시책

여백

제 1 편 1997년도 농업동향

여백

제 1 장 경 제 동 향

제 1 절 국내외 경제 동향

1. 국내경제 동향

가. 경제성장

1997년중 우리 경제는 전년에 이은 경기하강 국면이 지속된 데다 연말에는 외환위기의 충격까지 겹쳐, 실질 GDP 기준 경제성장률이 전년의 7.1%에서 5.5%로 감소하였다. 1인당 GNP도 환율 상승으로 전년보다 1,032달러 줄어든 9,511달러였다. 1/4~3/4분기중에는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 힘입어 6% 내외의 성장률을 유지하였으나, 4/4분기에는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소비와 투자 등 경기가 급속히 위축됨에 따라 성장률이 3.9%로 급락하였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2.5%)을 포함해 제조업(6.2%), 서비스업(6.5%)의 성장세가 둔화됐으며, 특히 건설업(2.8%)이 부진했다. 총 저축률(34.6%)은 전년(34.8%) 대비 소폭 하락한 반면, 국내총투자율(35.3%)은 설비투자 감소 등으로 전년(38.8%)보다 크게 낮아져, 투자재원 자립도(97.8%)가 전년(89.8%)에 비해 높아졌다.

(1) 소비지출

최종 소비지출은 수출(23.6%)이 중화학제품을 중심으로 호조를 보였으나, 설비투자(-11.3%)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내구소비재를 비롯한 민간소비(3.1%)의 신장세도 크게 둔화되어 전년의 6.9%에서 3.5%로 낮아졌다. 민간 소비는 소득증가세 둔화와 고용 불안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전년의

6.8%보다 크게 낮은 3.1% 늘어난 데 그쳤으며, 특히 4/4분기에는 실질소득의 감소 등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가계소비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승용차 등 내구소비재에 대한 지출이 줄어들고, 의복 등 준내구재와 비내구재에 대한 소비도 부진한 데다 그 동안 증가추세였던 해외 여행에 대한 지출이 감소추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정부지출은 인건비와 물건비 등에 대한 지출이 낮아져 5.7% 증가에 머물렀다.

<표 1-1-1>

경제활동 부문별 성장률

(단위 : %)

구분	'90	'94	'95	'96	'97(p)
국내총생산(GDP)	9.5	8.6	8.9	7.1	5.5
국민총생산(GNP)	9.6	8.4	8.7	6.9	4.9
농림어업	△5.1	1.6	3.7	4.0	2.5
제조업	8.7	10.4	10.8	7.4	6.2
전기가스수도사업	16.3	12.6	8.7	12.3	10.7
건설업	23.7	4.7	8.6	6.6	2.8
서비스업 ¹⁾	10.9	10.8	10.1	7.9	6.5
소비	10.1	7.0	7.2	6.9	3.5
(민간)	(10.3)	(7.6)	(8.3)	(6.8)	(3.1)
(정부)	(8.9)	(4.2)	(1.0)	(7.8)	(5.7)
총고정자본형성	18.3	11.8	11.7	7.1	△3.5
(건설)	(29.1)	(4.5)	(8.7)	(6.1)	(2.7)
(설비)	(18.4)	(23.6)	(15.8)	(8.3)	(△11.3)
수출	4.2	16.5	24.0	13.0	23.6
(상품) ²⁾	(3.4)	(14.6)	(25.3)	(13.0)	(24.7)
수입	14.4	21.7	22.0	14.8	3.8
(상품) ³⁾	(14.0)	(21.8)	(21.3)	(14.1)	(3.2)

주: 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금융귀금속서비스(공제), 수입세를 포함

2) F.O.B. 기준

3) C.I.F. 기준

자료: 한국은행

(2) 저축과 투자

총저축률(34.6%)은 전년(34.8%) 대비 소폭 하락한 34.6%였으나, 국내총투자율은 설비투자 감소 등으로 전년의 38.8%보다 크게 낮아진 35.3%였다. 따라서 투자재원 자립도는 1996년에 89.8%에서 97.8%로 높아졌다.

1992년 이후 하락추세에 있던 민간저축률은 소비 위축으로 전년(23.6%)보다 다소 상승한 24.3%로 상승추세로 돌아섰으며, 정부 저축률은 직접세 등 세수수입의 증가세 둔화로 전년(11.3%)에 비해 낮은 10.3%에 머물렀다.

민간투자율은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4.1% 포인트 하락한 29.2%였으나, 정부투자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전년의 5.6%에서 6.1%로 높아졌다.

<표 1-1-2>

총저축과 총투자 추이

(단위 : %)

구 분	'90	'94	'95	'96	'97
총 저 축 률	35.9	35.4	36.2	34.8	34.6
- 민 간	27.4	26.0	25.7	23.6	24.3
- 정 부	8.5	9.3	10.6	11.3	10.3
국내총투자율	37.1	36.2	37.4	38.8	35.3
- 민 간	32.7	31.2	32.5	33.3	29.2
- 정 부	4.3	5.0	4.9	5.6	6.1
투자재원자립도	N.A.	97.7	96.9	89.8	97.8

자료 : 한국은행

(3) 산업별 생산활동

농림어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 걸쳐 성장세가 둔화되었는데, 특히 건설업의 성장 둔화가 두드러졌다.

농림어업 성장률은 전년의 4.0%에서 2.5%로 하락하였다. 농업부문은 미곡과 과실류의 생산은 증가하였으나 보리와 고추, 마늘 등 채소류의 생산은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부진하였고, 축산업도 한우와 젓소의 사육두수

감소로 부진하여 전체적으로 1.8% 성장에 그쳤다.

어업은 연근해 어획(고등어, 갈치)은 줄었으나 원양 어획(오징어, 다랑어류)이 호조를 보이고, 양식업(넙치류, 미역)도 크게 늘어나 전체적으로 9.3% 성장하였다.

<표 1-1-3>

농림어업의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

구분	'90	'94	'95	'96	'97(p)
농림어업	△5.1	1.6	3.7	4.0	2.5
농업	△5.5	1.0	5.4	3.9	1.8
재배업	△6.0	1.7	4.9	4.3	2.4
축산업	△1.5	△3.8	9.6	1.3	△1.8
임업	△10.9	8.0	△7.0	0.9	△4.1
어업	0.1	3.7	△5.1	5.4	9.3

자료: 한국은행

광공업은 전년의 7.3%에서 6.2%로 성장세가 다소 줄어들었다. 광업 및 채석업은 대체에너지 보급 확대로 석탄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금, 티타늄 등 금속광물도 매장량 고갈로 크게 줄었으나, 모래와 천일염 등 비중이 큰 비금속 광물생산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0.4% 감소에 그쳐 전년(-5.3%)보다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제조업은 중화학공업의 호조로 지난해(7.4%)보다 다소 줄어든 6.2% 성장하였다. 경공업은 수출과 내수부진으로 섬유, 의류, 신발 등 대부분의 제품생산이 줄어들어 2.2% 감소하였다. 중화학공업은 전기전자, 화학제품 생산이 수출 호조에 힘입어 크게 늘어났으나, 설비투자 부진 등에 따른 산업용 기계 및 수송장비 생산이 줄어들어 전년(10.6%)보다 낮은 8.5% 성장에 그쳤다.

<표 1-1-4>

광공업의 성장률 추이

(전년동기대비, %)

구 분	'90	'94	'95	'96	'97(p)
광업 및 채석업	△10.6	4.0	△5.5	△5.3	△0.4
제조업	9.1	10.5	10.8	7.4	6.2
경공업	2.7	3.5	△0.1	△2.8	△2.2
중화학공업	12.7	13.1	14.7	10.6	8.5

자료: 한국은행

건설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건설이 비교적 활발하였으나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 건설 감소로 2.8%에 성장에 그쳐 성장률이 전년(6.6%)보다 크게 낮아졌다. 주거용 건물은 지방아파트의 분양가 자율화 조치 등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감소했음에도 자금난이 심화된 건설업체의 부도 급증으로 아파트 및 단독주택 건설이 부진하여 4.9% 감소하였으며, 비주거용 건물도 공장, 상가 등의 건설이 줄어들어 4.0% 감소하였다.

민간토목건설은 도시토목공사가 감소하였으나, 인천국제공항, 부산 가덕도 신항만, 서해안고속도로 건설과 월성 원자력 2호기 건설 등 전력부문을 중심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이 호조를 보여 12.0%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부 및 공기업 건설은 공공관서 등 건물 건설이 꾸준히 늘었으나 도로 및 지하철 건설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상하수도 건설도 부진하여 전년(16.3%)보다 낮은 8.5% 증가에 머물렀다.

<표 1-1-5>

건설업의 성장률 추이

(전년동기대비, %)

구 분	'90	'94	'95	'96	'97(p)
건설업	23.7	4.7	8.6	6.6	2.8
민간건설	27.5	2.2	10.7	3.5	12.0
정부건설	12.9	8.3	1.1	16.3	8.5

자료: 한국은행

도시·가스·수도사업은 전년(12.3%)에 이어 10.7%의 높은 성장을 유지하였다. 전기업은 경기위축으로 가정용 및 산업용 전력 수요가 둔화됐으나, 공공 및 서비스용을 중심으로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한 데 힘입어 10.8% 성장하였다. 가스 및 열 공급업도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와 함께 지역난방 공급세대의 증가 등으로 15.7% 성장하였다.

<표 1-1-6> 전기·가스·수도사업의 성장률 추이

(전년동기대비, %)

구 분	'90	'94	'95	'96	'97(p)
전기·가스·수도	16.3	12.6	8.7	12.3	10.7
전 기 업	15.6	11.4	7.4	12.5	10.8
가스 및 열공급	34.8	26.6	26.5	18.1	15.7
수 도 업	10.2	11.0	△0.8	△0.2	△1.2

자료: 한국은행

서비스업은 운수 및 통신업이 높은 신장세를 보였으나 도소매·음식숙박업, 보험금융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등의 부진으로 인해 전년의 7.9%보다 낮은 6.5% 성장에 그쳤다.

도소매업은 수출물량 증가로 수출상품 거래는 활발했으나 내수 부진으로 수입상품 및 공산품 거래가 위축되어 5.1% 성장에 그쳤다. 음식숙박업은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숙박업이 다소 늘어났으나 음식점 및 주점업은 소비 위축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어 4.8% 성장에 그쳤다.

운수·창고 및 통신업은 수출상품 및 삼국간 화물수송 증가로 꾸준히 성장한 운수업과 이동통신부문(이동전화, 무선호출기)의 빠른 성장과 국제전화 및 시외전화 이용 증가 등으로 계속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통신업에 힘입어 전년(12.4%)보다 다소 늘어난 15.2% 성장하였다.

<표 1-1-7>

서비스업의 성장률 추이

(전년동기대비, %)

구 분	'90	'94	'95	'96	'97(p)
서비스업 ¹⁾	10.1	10.8	10.1	7.9	6.5
도소매·숙박·음식	7.9	8.6	8.3	5.8	5.0
운수·창고·통신	11.5	12.6	13.3	12.4	15.2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	13.3	9.8	7.7	7.0	5.8
사회 및 개인 서비스	9.4	9.8	9.3	4.1	3.0

주 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수입세를 포함하고 금융귀금속서비스는 삭감

자료: 한국은행

나. 물가와 금리

(1) 물 가

1997년 12월 기준으로 생산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7%에서 3.9%로 오름세가 약간 높아졌고, 소비자 물가는 전년의 4.9%에서 4.5%로 오름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안정세를 지속하던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 것은 12월 들어 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수입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농수축산물 가격은 연초에 채소류와 과일류를 중심으로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어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이들 품목의 수급 차질이 해결되면서 안정되었다. 또한 3/4분기에는 곡물, 과일, 채소류 등의 작황 호조로 가격이 하락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4/4분기 들어서면서 사료값 상승에 따른 축산물 가격의 상승과 수입농산물 가격의 상승으로 하락세는 상승세로 반전됐다.

<표 1-1-8>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의 상승률

(전기말월대비 등락률, %)

구 분	'90	'94	'95	'96	'97
생산자물가	4.2	2.8	4.7	2.7	3.9
농림수산물	14.3	12.1	3.9	2.1	1.6
공산품	2.4	1.6	4.9	2.9	4.2
전력·수도·도시가스	△5.8	0.5	3.5	2.2	4.5
전도시 소비자물가	8.5	6.2	4.5	4.9	4.5
식료품	10.0	9.4	3.4	3.9	3.8
식료품 이외	7.7	4.7	5.0	5.4	4.6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공산품 가격은 상반기에는 국제원자재 가격의 안정과 경쟁 심화 등으로 가격이 하락한 석유제품, 종이제품, 영상·음향 및 통신기기 등에 힘입어 안정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12월 들어 석유류, 음식료품 등 대부분 품목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빠르게 상승하였다.

소비자물가도 연중 안정추세를 보이다가 연말 들어 환율 급등으로 오름세가 확대됐다. 상반기 중 소비자물가는 상승률이 0.1~0.2%로 낮아지는 등 뚜렷한 안정세를 보였다.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다소 불안정해지던 소비자물가는 연말 환율 급등에 따른 석유제품과 배합사료 등의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오름세가 크게 확대됐다.

(2) 금 리

시장금리는 1/4분기에는 일부 대기업의 부도 등에 따른 자금시장의 불안정으로 다소 불안정했으나, 2/4분기에는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 3/4분기 들어서면서 기업의 신용리스크 증대, 일부 금융기관의 신인도 하락 등에 따른 자금 조달 애로 등으로 점차 상승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IMF 긴급자금을 신청한 11월 이후에는 금융긴축을 우려한 자금선취수요(先取需要), 금융기관의 자금공급 기피, 기업부도의 확산 가능성에 따른 프리미엄 확대, IMF의 고금리 유지방침 등으로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해 12월말에는 회사채수익률이 연중 최고치인 31.1%까지 상승하였다.

다. 고용과 임금

(1) 고 용

1997년 1/4분기에는 고용기회 확대로 취업자수가 늘어났으며,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가로 경제활동인구가 3.3% 늘어났다. 그러나 2/4분기 들어서면서 경기부진에 따른 인력수요가 감소하면서 취업자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경제활동인구도 취업난 심화에 따른 여성의 구직활동 포기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4/4분기에는 지속적인 경기부진과 기업의 연쇄 부도로 고용기회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취업자수는 1984년 3/4분기(-1.0%) 이후 가장 낮은 0.1% 증가에 그쳤다. 또한 구직활동 포기자수가 증가하여 경제활동인구도 전년 동기 대비 0.6% 상승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급격히 상승하여 12월에는 3%를 상회하였다.

산업별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제조업 취업자수는 생산활동 둔화에 따른 고용기회의 위축, 기업들의 감량 경영 노력 등으로 연중 감소하다가 연말에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건설업 취업자수는 점차 둔화추세를 보이다가 4/4분기 들어 1986년 3/4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취업자수 증가를 주도해오던 공공 및 서비스업 취업자수도 4/4분기에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표 1-1-9>

취업자수와 실업률

(단위 : 천명, %)

구 분	'90	'94	'95	'96	'97	구성비(97)
경제활동인구	18,487	20,326	20,797	21,188	21,604	-
취업자수	18,036	19,837	20,377	20,764	21,048	100.0
농림어업	3,152	2,698	2,547	2,405	2,324	11.0
광공업	4,990	4,735	4,799	4,701	4,501	21.4
SOC, 기타 서비스업	9,816	12,398	13,041	13,657	14,223	67.6
실업률	2.3	2.4	2.0	2.0	2.6	-

자료: 한국은행

(2) 임 금

1997년 전 산업 명목임금 상승률은 경기 부진 및 이에 따른 고용불안 등으로 1996년의 11.9%보다 낮아진 7.0%를 기록하였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의 임금이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감소했으며, 1996년 전체 임금 상승을 주도했던 건설업과 운수창고업, 통신업 등의 임금상승세도 크게 둔화됐다.

라. 경상수지와 환율

1997년중 우리 나라의 경상수지¹⁾는 86.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230.0억 달러)보다 적자폭이 143.9억 달러 축소되었다. 경상수지 적자가 이와 같이 대폭 축소된 것은 수출의 회복 및 수입의 감소로 상품수지 적자가 크게 줄어든 데다 서비스수지도 적자폭이 작아지고 경상이전수지가 흑자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1) 상품수지

상품수지는 전년(-149.6억 달러)에 비해 110.9억 달러 줄어든 38.7억 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다. 수출(국제수지 기준)은 화공품, 금속제품 등 중화학공업 제품의 호조로 전년대비 6.6% 증가한 1,385.9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수입(국제수지 기준)은 경기침체로 자본재와 소비재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데다 원자재 수입의 증가세도 둔화되어 전년대비 1.7% 감소한 1,424.6억 달러에 머물렀다.

1) 1997년부터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바뀐 국제수지 편제를 따랐다. 새로운 편제에서는 개편전의 경상계정, 자본계정, 금융계정이 경상계정, 자본계정 및 준비자산증감으로 변경되며, 금융계정에 계상되던 예금은행의 대외자본거래는 민간기업의 대외거래와 함께 자본계정에 계상된다. 또한 준비자산증감에는 각종 대외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통화당국의 외환보유액 증감만을 기록하게 된다.

경상계정의 개편전 무역수지, 무역외수지, 이전수지 등은 상품·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및 경상이전수지로 변경되며, 자본계정은 장·단기 기간구분을 폐지하고 자본의 성격에 따라 투자수지와 기타 자본수지로 구분된다.

<표 1-1-10>

연도별 국제수지 현황

(단위 : 10억 달러)

구 분	'90	'94	'95	'96	'97
경상수지	△2.0	△3.9	△8.5	△23.0	△8.6
상품 및 서비스수지	△3.1	△4.7	△7.4	△21.1	△6.8
상품수지	△2.5	△2.9	△4.4	△15.0	△3.9
수 출	63.7	95.0	124.6	130.0	138.6
수 입	66.1	97.8	129.1	144.9	142.5
서비스수지	△0.6	△1.8	△3.0	△6.2	△2.9
수 입	9.6	16.8	22.8	23.4	26.3
지 급	10.3	18.6	25.8	29.6	29.2
소득수지	△0.1	△0.5	△1.3	△1.8	△2.7
경상이전수지	1.1	1.3	0.2	△0.05	0.9
자본수지	2.6	10.3	16.8	23.3	5.4
투자수지	2.9	10.7	17.3	23.9	6.0
기타자본수지	0.3	△0.4	△0.5	△0.6	△0.6
준비자산증감	1.2	△4.6	△7.0	△1.4	11.9
오차 및 누락	△1.7	△1.8	△1.2	1.1	△8.7

자료: 한국은행

(가) 수 출

연중 통관기준에 의한 수출은 전년대비 5.0% 증가한 1,361.6억 달러를 기록하여 증가세가 전년보다 다소 확대되었다. 이는 화공품, 금속제품 등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이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대선진국 수출이 EU지역의 호조에 힘입어 전년의 감소에서 증가로 반전하였으며 대개도국 수출은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부진하여 증가세가 전년보다 크게 둔화되었다.

품목별로 보면, 먼저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은 4월 이후 64MDRAM 메모리 반도체의 출하와 비메모리 분야의 호조, 화공품 및 철강제품의 단가하락세 둔화, 화공품의 생산능력 확장 및 해외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925.3억 달러로 전년대비 4.3% 증가하였다. 경공업제품은 섬유사(18.5%)의 대중국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의류시설의 해외 이전, 후발개도국의 시장 잠식

등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한 326.7억 달러에 그쳐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의 24.3%에서 24.0%로 하락하였다.

지역별로는 대선진국 수출이 대EU 수출의 증가(10.0%)에 힘입어 전년의 감소에서 벗어나 전년대비 4.8% 증가한 600.3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대개도국 수출은 동남아지역의 외환위기, 중동(-10.7%), 독립국가연합(1.7%) 등에 대한 수출 부진 등으로 5.1% 증가한 761.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그 증가세는 크게 둔화되었다. 대선진국 및 대개도국 수출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4.1%, 55.9%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나) 수 입

연중 통관기준 수입액은 전년대비 3.8% 감소한 1,446.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1996년중에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수입이 감소세로 반전한 것은 소비 및 투자수요의 위축으로 자본재 및 소비재의 수입이 감소한 데다 원자재도 외환사정 악화에 따른 수입신용장 개설 애로 등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세로 반전하였으며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품목별로는 자본재 수입은 설비투자 위축에 따른 기계류(-21.3%)와 항공기, 선박 등 수송장비(-45.8%)의 수입이 대폭 줄어들어 전년대비 10.4% 감소하였고, 원자재 수입은 전년대비 2.3% 증가하였으며, 소비재 수입은 국내경기 침체, 기업부도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전년대비 7.9%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36.5%, 10.8%로 전년보다 하락하였으며, 원자재 수입은 전년의 49.6%에서 52.7%로 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년대비 9.4% 감소한 894.4억 달러로 나타난 반면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년대비 6.8% 증가한 551.8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수입 가운데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의 65.6%에서 61.8%로 낮아지고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년의 34.4%에서 38.2%로 높아졌다.

(2) 서비스수지

1997년중 서비스수지는 29.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61.8억 달러)보다 적자폭이 32.5억 달러 축소되었다. 이는 화물수송물량 증가 등으로 운임·보험수입이 늘어난 데다 내국인의 해외여행 감소로 여행지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서비스수지 중 수입은 화물운임, 사업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12.4% 증가한 263.2억 달러, 지급은 화물운임, 여행경비 등을 중심으로 1.2% 감소한 292.4억 달러를 나타냈다. 한편, 서비스거래가 상품 및 서비스의 대외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5%로 전년(16.2%)보다 소폭 상승하였다.

항목별로는 운수수지가 5.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여 전년(-14.6억 달러)의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여행수지는 원화 환율 상승에 따른 내국인 출국자수의 감소로 전년(-26.0억 달러)보다 다소 줄어든 22.6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기타서비스 수지는 12.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21.1억달러)보다 적자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3) 환 율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1/4분기에 다소 절하되기도 했지만, 4월 이후에는 경상수지 적자 감소 및 자본 유입 증대 등으로 달러당 890원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7월 이후에는 기아사태 및 동남아 통화의 불안정 등으로 900원대까지 절하되기 시작했으며, 3/4분기에는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른 국제금융기관 단기유동성 사정의 악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유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달러화 강세 등으로 절하폭은 더욱 커졌다. 4/4분기에는 환율의 1일 변동폭 확대(11월 20일, 기준환율 $\pm 2.25\%$ --> $\pm 10.0\%$), IMF 자금지원 요청(11월 21일) 등으로 환율은 1,200원대까지 절하됐으며, IMF의 긴급자금 조기지원 발표 직전인 12월 23일에는 2,000원대까지 절하되었다. 이후 대미달러 환율은 IMF 자금의 유입,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점차 안정되기 시작하였다.

대엔화 환율은 엔화 약세로 3/4분기까지는 절하폭이 크지 않았으나, 4/4

분기에는 원화의 대폭 절하를 반영하여 100엔당 1,000원 이상까지 절하폭이 확대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해외경제 동향

가. 경제성장과 고용

(1) 경제성장

1997년에 세계경제는 1996년에 이어 4.1%의 높은 성장을 나타냈다. 비록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률이 떨어졌으나, 선진국과 중남미개도국의 경제는 건실한 오름세를 나타냈고, 체제 전환국도 1990년대 들어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선진국 경제는 3% 성장했다. 미국 경제는 고용 수준이 오르고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민간소비가 크게 늘었으며, 설비투자와 수출도 호조를 보여 4% 가까이 성장했다. 유럽연합은 미국 달러화 강세와 세계경제 회복세에 따른 수출 및 투자 증가에 힘입어, 1996년보다 거의 1% 포인트 높은 경제 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일본 경제는 소비세율 인상과 일부 은행 및 증권회사의 도산에 따라 금융시장 불안 등이 나타나면서 내수가 부진하여 1% 미만의 낮은 성장에 머물렀다.

개도국 경제는 6%에 미치지 못하는 비교적 낮은 성장을 보였다. 특히, 태국은 수출 감소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부동산경기 침체에 의한 기업 도산, 금융기관 대출 부실, 바트화 고평가, 외자유출 등이 심화되면서 외환위기를 맞았고, 그 여파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인접국으로 파급되어, 각국의 통화가치와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그 결과, 태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했고, 인도네시아 경제도 8%에서 5%로 성장률이 떨어졌다.

그러나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다른 아시아신흥공업국(NIEs)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늘어나면서 6%대의 성장률을 유지했다. 중국은 경제안정

정책을 추진하면서 성장세가 조금 떨어졌으나, 수출과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에 힘입어 설비투자가 커지면서 거의 9%에 이르는 성장을 기록했다. 중남미 개도국도 미국에 대한 수출증가와 외국자본의 유입에 따른 투자 증가로 성장세가 확대됐다.

체제 전환국은 경제구조개혁 정책의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면서 1990년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표 1-1-11>

세계 경제성장 추이

(단위 : %)

구 분	1990	1994	1995	1996	1997
세계경제성장률	2.6	3.9	3.6	4.1	4.1
선진국	2.7	3.1	2.5	2.7	3.0
미국	1.2	3.5	2.0	2.8	3.8
유럽연합	3.0	2.9	2.5	1.7	2.6
일본	5.0	0.6	1.5	3.9	0.9
개도국	4.0	6.8	6.0	6.6	5.8
아시아신흥공업국	7.3	7.6	7.3	6.4	6.1
중국	3.8	12.6	10.5	9.7	8.8
중남미	0.7	5.1	1.2	3.5	5.0
체제전환국	-3.8	-7.6	-1.3	-0.1	1.7
러시아	-	-12.6	-4.0	-2.8	0.4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1998. 5.

(2) 고용

선진국의 실업률은 세계경제 회복의 영향으로 낮아졌다. 미국은 경기호황에 힘입어 199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한 반면, 일본은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실업률이 오름세를 나타냈다. 1993년부터 11%대의 높은 실업률을 지속하고 있는 유럽연합은 고용문제를 풀기 위해 평균 GDP의 3.5%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하여 갖가지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그 성과가 적은 실정이다. 특히, 실업률이 12%에 이르는 독일과 프랑스의 높은 실업수준은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남아있다. 일본과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실업률은 1996년 수준보다 조금 올랐다.

<표 1-1-12>

주요국가의 실업률 추이

(단위 : %)

구분	1990	1994	1995	1996	1997
선진국	5.9	7.6	7.3	7.3	7.1
미국	5.6	6.1	5.6	5.4	4.9
유럽연합	8.1	11.6	11.2	11.4	11.1
일본	2.1	2.9	3.1	3.3	3.4
아시아신흥공업국	2.1	2.1	2.1	2.3	2.6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1998. 5.

나. 교역과 경상수지

(1) 교역

세계교역(물량기준) 성장률은 1996년 수준보다 거의 3% 포인트 늘어난 9.4%를 기록했다. 비록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ASEAN 등 아시아 국가들의 수입수요는 둔화됐지만,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내수가 확대됨으로써 교역량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선진국의 교역조건은 악화된 반면, 개도국의 교역조건은 소폭 개선됐다.

<표 1-1-13>

세계 교역(상품과 서비스) 성장률 추이

(단위 : %)

구분	1990	1994	1995	1996	1997	
세계무역	5.6	9.3	9.5	6.6	9.4	
선진국	수출	6.7	8.8	8.8	5.9	9.8
	수입	5.7	9.7	8.9	6.4	8.6
개도국	수출	7.2	13.2	10.6	8.7	10.8
	수입	5.9	7.1	11.9	9.3	12.1
교역조건	선진국	-0.4	-	0.1	-0.1	-0.7
	개도국	1.4	-0.2	2.1	3.0	0.2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1998. 5.

(2) 경상수지

선진국의 경상수지는 1996년보다 2.4배나 늘어난 479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은 서비스수지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으나, 상품수지 적자규모가 거의 2,000억 달러에 이르는 최고치를 나타냄으로써 무역과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더욱 커졌다. 유럽연합은 세계경제 회복과 주요 유럽통화의 약세에 힘입어, 1,0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나타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크게 늘었다.

아시아신흥공업국의 경상수지는 적자에서 큰 폭의 흑자로 돌아섰으나, 개도국 전체의 경상수지는 악화됐다. 체제 전환국의 경상수지도 1995년부터 지속적인 적자로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표 1-1-14>

세계 경상수지 추이

(단위: 억 달러)

구분	1990	1994	1995	1996	1997
선진국	△846	201	353	198	479
미국	△919	△1,335	△1,291	△1,482	△1,664
유럽연합	△322	220	533	909	1,158
일본	439	1,306	1,114	658	941
개도국	△251	△885	△944	△743	△821
아시아신흥공업국	185	154	54	△1	93
체제전환국	△220	44	△39	△194	△256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1998. 5.

다. 물가

선진국에서 소비자 물가는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하향안정세를 나타냈다. 유럽연합은 실질임금 상승률 둔화에 따른 구매력 감소와 수입물가 안정으로 2% 미만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개도국의 물가상승률은 5% 포인트 가량 떨어졌으며, 아시아 신흥공업국도 3%대의 비교적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통화위기를 겪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물가상승률은 큰 폭으로 올랐다.

체제 전환국의 물가상승률은 40%대에서 20%대로 크게 낮아졌다.

<표 1-1-15> 주요 국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단위 : %)

구 분	1990	1994	1995	1996	1997
선진국	5.2	2.6	2.5	2.4	2.1
미국	5.4	2.6	2.8	2.9	2.3
유럽연합	5.4	3.0	2.9	2.5	1.9
일본	3.1	0.7	-0.1	0.1	1.7
개도국	68.1	50.7	21.7	13.7	8.5
아시아신흥공업국	6.9	5.6	4.6	4.2	3.6
체제전환국	38.6	268.4	124.1	41.4	27.8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1998. 5.

라. 국제 금리

선진국에서 3개월 만기 기준 단기금리는 평균 4%로 안정세를 나타냈다. 미국의 단기금리는 연초에 연방기금의 목표금리 인상 등으로 올랐으나, 물가가 안정세를 나타냄으로써 5%를 지속했다. 일본은 금융시장 불안으로 가산금리가 올랐지만,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단기금리가 0.3%에 머물렀다.

아시아신흥공업국의 금리는 외환위기의 과급영향으로 큰 폭으로 증가해, 거의 11%에 이르렀다.

<표 1-1-16> 주요 국가의 단기금리 추이

(단위 : %)

구 분	1990	1994	1995	1996	1997
선진국	9.1	4.9	5.2	4.1	4.0
미국	7.5	4.2	5.5	5.0	5.1
유럽연합	11.1	6.5	6.8	5.0	4.5
일본	6.9	1.9	1.0	0.3	0.3
아시아신흥공업국	10.9	8.8	9.0	8.6	10.9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1998. 5.

마. 국제 환율

미국 달러화는 영국 파운드화를 뺀 주요 국가 통화에 대해 강세를 나타냈다. 이는 주로 경제성장률과 금리 등의 경제여건 차이에 따른 결과이다. 1996년 수준과 비교하면, 일본 엔화는 달러당 121엔으로 11% 가량 절하됐으며, 독일 마르크화와 프랑스 프랑화도 각각 15%와 14% 가량 절하됐다. 그러나 영국 파운드화는 5% 정도 절상됐다.

<표 1-1-17> 주요 국가의 환율 추이

(단위 : 각국 화폐/\$)

구 분	1990	1994	1995	1996	1997
일 본(엔)	144.8	102.2	94.1	108.8	121.0
독 일(마르크)	1.62	1.62	1.43	1.50	1.73
프랑스(프랑)	5.45	5.55	4.99	5.12	.84
이태리(리라)	1,198	1,612	1,629	1,543	1,703
영 국(\$/파운드)	1.78	1.53	1.58	1.56	1.64
캐나다(달러)	1.17	1.37	1.37	1.36	1.38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1998.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 2 절 농촌경제 동향

1. 농업구조

가.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97년말 현재 총농가수는 1,440천호이고, 농가인구는 4,468천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농가수는 40천호(2.7%), 농가인구는 224천명(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18>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구분	단위	1991	1996	1997	전년대비		6개년('91~'97) 평균증감율(%)	
					증감	증감율(%)		
농가호수	천호	1,702	1,480	1,440	△40	△2.7	△2.6	
농가인구 (총인구비중)	천명 (%)	6,068 (14.0)	4,692 (10.3)	4,468 (9.7)	△224	△4.8	△4.4	
호당농가인구	명	3.56	3.17	3.10				
연령별 농가인구	50세이상 (구성비)	천명 (%)	2,370 (39.1)	2,173 (46.3)	2,118 (47.4)	△55	△2.5	△1.8
	50세미만 (구성비)	천명 (%)	3,698 (60.9)	2,519 (53.7)	2,350 (52.6)	△169	△6.7	△6.1
성별 농가인구	남자 (구성비)	천명 (%)	2,931 (48.3)	2,263 (48.2)	2,149 (48.1)	△114	△5.0	△4.4
	여자 (구성비)	천명 (%)	3,137 (51.7)	2,429 (51.8)	2,319 (51.9)	△110	△4.5	△4.3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담당관실

농가와 농가인구의 감소는 농촌지역의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취업기회의 확대, 대규모 경영농가의 영농규모 확대에 따른 소규모 영세농가의 상대적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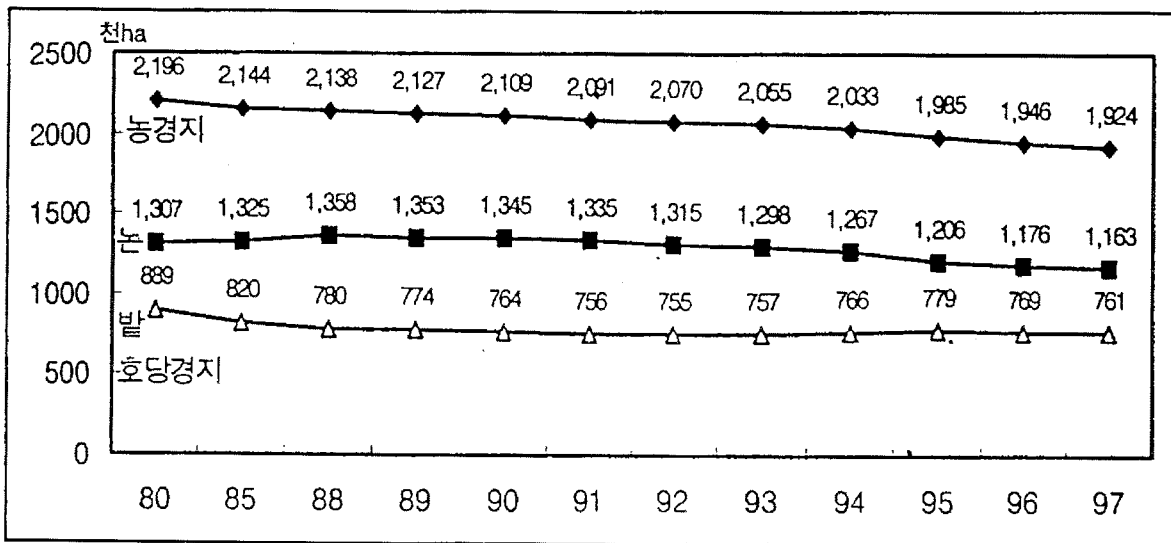
총인구에 대한 농가인구의 비중은 9.7%로 일본의 12.1%(1995년기준)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 농가인구 비중은 47.4%로 1996년도의 46.3% 보다 높아져 고령 농가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율은 남자가 48.1%, 여자가 51.9%로 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농경지

농경지 면적은 도시화에 따른 건물건축, 공공시설 등 타용도 전환면적이 크게 증가되고 유휴지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5년간 해마다 연평균 29.3천ha씩 줄고 있다.

'97년말의 경지면적은 '96년보다 22천ha 줄어든 1,924천ha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논은 전년에 비하여 13천ha 감소한 1,163천ha이고, 밭은 9천ha 감소한 761천ha로 나타났다. 경지면적의 변동사유를 살펴보면 건물·건축용 10.4천ha, 공공시설용 7.1천ha, 기타사유 15.4천ha로 총 32.9천ha 감소하였으며, 개간·간척 8.6천ha, 복구 등 2.3천ha로 총 10.9천ha 증가하였다.

<그림 1-1-1> 경지면적 변동추이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담당관실

'97년의 경지 이용면적은 2,097천ha로 전년보다 45천ha가 감소 하였으며, 경지이용율은 전년의 107.9%에서 107.8%로 낮아졌다. 경지이용 면적의 감소내용을 살펴보면, 식량작물의 이용면적은 미곡과 잡곡면적이 소폭 증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파종기 일기불순에 따른 맥류면적의 큰폭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 26천ha가 감소하였다.

채소·과수 등 경제작물중 채소면적은 고추, 마늘등 조미채소의 면적이 큰폭으로 감소하였고 과채류를 제외한 엽채류, 근채류 등의 면적도 감소하여 채소전체면적은 26천ha가 감소하였으나, 과수면적이 3천ha, 기타특용작물 등의 면적이 4천ha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19천ha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휴경면적은 29.5천ha가 발생하여 전년보다 4.8천ha가 감소되었으며 이는 휴경지 생산화에 주원인이 있다.

<표 1-1-19>

농경지 이용 현황

(단위 : 천ha)

구 분	'91	'92	'93	'94	'95	'96	'97
경지이용면적	2,332	2,261	2,285	2,205	2,197	2,142	2,097
식 량 작 물	1,563	1,478	1,467	1,403	1,346	1,340	1,314
(미 곡)	(1,208)	(1,157)	(1,136)	(1,103)	(1,056)	(1,050)	(1,052)
(맥 류)	(127)	(103)	(117)	(85)	(90)	(95)	(70)
(두류 등)	(228)	(218)	(214)	(215)	(200)	(195)	(192)
경 제 작 물	769	783	818	802	851	802	783
(채 소)	(299)	(306)	(378)	(303)	(322)	(311)	(285)
(과 수)	(137)	(146)	(154)	(161)	(172)	(171)	(174)
(기 타) ¹⁾	(333)	(331)	(286)	(338)	(357)	(320)	(324)
경 지 면 적	2,091	2,070	2,055	2,033	1,985	1,945	1,924
경지이용율(%)	110.6	108.1	110.4	107.3	108.1	107.9	107.8
(논)	(105.4)	(103.4)	(105.5)	(102.5)	(104.1)	(106.1)	(104.8)
(밭)	(119.7)	(116.4)	(118.9)	(115.7)	(114.7)	(110.7)	(112.4)

주 : ¹⁾ 특·약용작물, 시설작물, 과수원, 뽕밭, 관상수 심은 밭, 묘포, 기타를 뜻함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담당관실

<표 1-1-20>

농경지 사유별 증감 내역

(단위 : 천ha)

연도별	증 가				감 소				증감 면적
	계	개간	간척	복구	계	건물 건축	공공 시설	기타	
'91	5.4	1.3	3.3	0.8	23.4	9.0	5.0	9.4	△18.0
'92	4.9	1.0	1.4	2.5	25.9	8.4	4.7	12.8	△21.0
'93	10.0	2.1	5.0	2.9	25.1	7.8	4.5	12.8	△15.1
'94	9.9	4.9	3.5	1.5	32.0	11.2	6.5	14.3	△22.1
'95	15.6	5.1	9.0	1.5	63.0	24.7	11.2	27.1	△47.4
'96	12.1	8.9	0.5	2.7	51.9	16.8	6.6	28.5	△39.8
'97	10.9	5.5	3.1	2.3	32.9	10.4	7.1	15.4	△22.0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담당관실

<표 1-1-21>

휴 경 면 적

(단위 : 천ha)

구 분	'91	'92	'93	'94	'95	'96	'97
휴 경 면 적	67.5	68.9	66.5	62.5	64.6	34.3	29.5
논	24.0	31.0	30.3	31.4	33.5	14.5	10.3
밭	43.5	37.9	36.2	31.1	31.1	19.8	19.2
휴경율 (%)	3.2	3.3	3.2	3.0	3.2	1.7	1.5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담당관실

(농업통계담당관실 사무관 신대식)

2. 농가경제

가. 농가소득

'97년도 농가호당 평균소득은 전년대비 0.8% 증가한 23,488천원이었으며, 이중 농업소득은 미곡의 단보당 생산량 증가와 농가판매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채소, 과수등의 가격하락에 따른 조수입 감소와 소값하락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한 10,603천원으로 나타났다. 농외소득은 상업, 수산업 및

서어비스업의 수입증가와 기타 노임, 임대료, 배당이자 등 사업이외 수입의 증가로 전년대비 10.6% 증가한 8,278천원이었다. 이전수입은 출타가족의 송금보조 및 축·조의금등 피증 보조금 수입의 감소로 전년대비 7.4% 감소한 4,607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1-1-22> 농가소득의 구성

(단위 : 천원,%)

구분	'90	'94	'95	'96	'97	증 감 율		
						'95	'96	'97
농가소득	11,026	20,316	21,803	23,298	23,488	7.3	6.9	0.8
농업소득	6,264	10,325	10,469	10,837	10,603	1.4	3.5	△2.2
농외소득	2,841	6,184	6,931	7,487	8,278	12.1	8.0	10.6
(비중)	(25.8)	(30.5)	(31.8)	(32.1)	(35.2)			
이전수입	1,921	3,807	4,403	4,974	4,607	15.7	13.0	△7.4

자료 : 농림부 농업정보통계관실

경지규모별 농가소득을 보면, 0.5~1.0ha를 경작하는 농가의 소득은 20,535천원으로 평균 농가소득의 84.7% 수준에 불과하며, 5.0ha이상 경작하는 농가의 소득은 43,076천원으로 평균농가소득의 1.8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0.5ha미만 농가의 농외소득 비중은 59.4%에 달하며 5.0ha이상 농가의 경우 농외소득 비중은 6.7% 수준이었다.

<표 1-1-23> 경지규모별 농가소득

(단위 : 천원, %)

구분	평균	0.5ha 미만	0.5~1.0	1.0~1.5	1.5~2.0	2.0~3.0	3.0~5.0	5.0ha 이상
농가소득	23,488	22,176	20,535	23,012	25,040	28,426	35,164	43,076
농업소득	10,603	4,301	7,445	11,690	14,426	18,263	26,302	35,470
농외소득	8,278	13,162	8,404	6,363	6,187	5,349	4,742	2,872
(비중)	(35.2)	(59.4)	(40.9)	(27.7)	(24.7)	(18.8)	(13.5)	(6.7)
이전수입	4,607	4,713	4,686	4,959	4,427	4,814	4,120	4,734

자료 : 농림부 농업정보통계관실

지대별 농가소득을 보면, 도시근교와 평야·중간은 평균보다 높고 산간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농외소득 비중은 도시근교가 49.7%로 가장 높고 산간이 28.5%로 가장 낮았다.

<표 1-1-24>

지대별 농가소득

(단위 : 천원, %)

구 분	평 균	도시근교	평 야	중 간	산 간
농가소득	23,488	25,218	26,557	23,889	20,637
농업소득	10,603	8,343	13,658	11,215	10,107
농외소득	8,278	12,541	7,892	8,050	5,890
(비 중)	(35.2)	(49.7)	(29.7)	(33.7)	(28.5)
이전수입	4,607	4,334	5,007	4,624	4,640

자료 : 농림부 농업정보통계관실

(1) 농업소득

(가) 농업조수입

'97년도의 농가호당 평균 농업 조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17,284천 원이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미곡은 단보당 생산량의 증가와 농가판매 가격 상승등으로 전년대비 4.6% 증가한 7,370천원이었다(조수입중 미곡의 비중은 42.6%로 전년보다 1.8%포인트 증가함). 채소류에 있어서는 마늘과 김장무·배추 등의 가격은 증가하였으나, 양파, 수박, 참외, 토마토, 오이 등의 가격 하락으로 전년대비 8.1% 감소하였다. 과일류는 사과, 배 등의 가격은 증가하였으나 포도, 감, 밀감 등의 농가판매가격 하락으로 전년대비 0.9% 감소하였다. 축산의 경우에 소, 돼지, 닭 등 호당 사육두수는 증가하였으나 돼지를 제외한 소, 닭 등의 가격하락으로 전년대비 0.3% 증가하였다.

<표 1-1-25>

농업소득의 구성

(단위 : 천원, %)

	'95		'96		'97		증감율 ('97/'96)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농업소득	10,469		10,837		10,603		△2.2
농업조수입	16,012	100.0	17,284	100.0	17,284	100.0	0.0
미곡	5,450	34.0	7,049	40.8	7,370	42.6	4.6
채소	3,386	21.2	3,808	22.0	3,498	20.2	△8.1
특용작물	805	5.0	733	4.2	816	4.7	11.3
과수	1,542	9.6	1,666	9.6	1,651	9.6	△0.9
축산	3,981	24.9	3,085	17.9	3,093	17.9	0.3
기타	848	5.3	943	5.5	856	5.0	△9.2
농업경영비	5,543	100.0	6,447	100.0	6,681	100.0	3.6
비료비	345	6.2	377	5.8	367	5.5	△2.7
농약비	350	6.3	389	6.0	432	6.5	11.1
농구비	808	14.6	916	14.2	1,071	16.0	16.9
양축비	1,261	22.8	1,604	24.9	1,624	24.3	1.2
노임	441	8.0	489	7.6	496	7.4	1.4
임차료및수리비	1,099	19.8	1,289	20.0	1,264	18.9	△1.9
기타	1,239	22.3	1,383	21.5	1,427	21.4	3.2

자료 : 농림부 농업정보통계관실

(나) 농업 경영비

농업경영비는 기계화의 추진에 따른 농기계 보유 증가로 인한 감가상각비 및 경상수리비의 증가와 노임과 종묘, 농약, 사료비 등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3.6% 증가하였다

<표 1-1-26>

경지 규모별 농업소득

(단위 : 천원, %)

구분	평균	0.5ha 미만	0.5~ 1.0	1.0~ 1.5	1.5~ 2.0	2.0~ 3.0	3.0~ 5.0	5.0ha 이상
농업소득(A)	10,603	4,301	7,445	11,690	14,426	18,263	26,302	35,470
농업조수입(B)	17,284	9,564	11,842	18,244	23,161	29,185	41,192	60,120
농업소득율(A/B)	61.3	45.0	62.9	64.1	62.3	62.6	63.9	59.0
농업경영비	6,681	5,263	4,397	6,554	8,735	10,922	14,890	24,650

자료 : 농림부 농업정보통계관실

<표 1-1-27>

지대별 농가 소득

(단위 : 천원, %)

구 분	평 균	도시근교	평 야	중 간	산 간
농업소득(A)	10,603	8,343	13,658	11,215	10,107
농업조수입(B)	17,284	14,433	22,053	18,822	15,969
농업소득율(A/B)	61.3	57.8	61.9	59.6	63.3
농업경영비	6,681	6,090	8,395	7,607	5,862

자료 : 농림부 농업정보통계관실

(2) 농외소득

1997년 호당평균 농외소득은 상업 및 서비스업 등 겸업수입의 증가와 노임, 급료, 임대료, 배당이자등 사업이외 수입증가로 전년대비 10.6% 증가한 8,278천원이었다

<표 1-1-28>

농외소득의 구성

(단위 : 천원, %)

	'90	'95	'96	'97
농 외 소 득	2,841	6,931	7,487	8,278
겸 업 소 득	589	1,527	1,522	1,823
- 겸 업 수 입	1,038	2,842	3,285	3,847
- 겸 업 지 출	449	1,315	1,763	2,024
사 업 이 외 소 득	2,252	5,404	5,965	6,455
- 사업이외 수입	2,550	5,976	6,649	7,153
· 노 임 · 급 료	2,196	5,163	5,672	5,990
· 임 대 료 · 배 당 이 자	280	688	807	978
· 기 타	74	125	170	185
- 사업이외 지출	298	572	684	698
· 차 입 금 이 자	290	538	660	661
· 기 타	8	34	24	37

자료 : 농림부 농업정보통계관실

경지규모별 농외소득을 보면, 0.5ha 미만 농가의 농외소득 비중이 59.4%로 가장 높고, 경지규모가 클수록 농외소득 비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농산물 가공이나 서비스업에서 얻은 소득인 겸업소득도 0.5ha미만의 농가가 3,252천원으로 가장 높고, 노임·급료 등 사업이외 소득도 0.5ha미만의 농가가 9,910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1-29>

경지규모별 농외소득

(단위 : 천원, %)

구분	평균	0.5ha 미만	0.5~ 1.0	1.0~ 1.5	1.5~ 2.0	2.0~ 3.0	3.0~ 5.0	5.0ha 이상
농외소득	8,278 (35.2)	13,162 (59.4)	8,404 (40.9)	6,363 (27.7)	6,187 (24.7)	5,349 (18.8)	4,742 (13.5)	2,872 (6.7)
겸업소득	1,823	3,252	1,307	1,516	1,130	1,492	1,360	2,945
사업이외소득	6,455	9,910	7,097	4,847	5,057	3,857	3,382	△73

주 : ()은 농가소득에 대한 농외소득 비중임

자료 : 농림부 농업정보통계관실

지대별 농외소득을 보면, 취업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도시근교 지역이 12,541천원으로 가장 많고, 농업의존도가 높은 중간 및 산간지대가 낮게 나타났다

<표 1-1-30>

지대별 농외소득

(단위 : 천원, %)

구분	평균	도시근교	평야	중간	산간
농외소득	8,278	12,541	7,892	8,050	5,890
겸업소득	1,823	2,720	1,757	1,696	1,602
사업이외소득	6,455	9,821	6,135	6,354	4,288

자료 : 농림부 농업정보통계관실

나. 가 계 비

'97년도 호당평균 가계비는 17,045천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교제증여비, 관혼상제비, 피복 및 신발비의 증가율은 둔화되고, 음식물비가 쌀값 상승과 부식비 구입가격 상승으로 증가하였으며, 농촌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광열수도비와 교통통신비 등이 크게 증가하였다.

가계비중 음식물비가 차지하는 비중인 엔젤계수는 전년의 20.0%에서 20.4%로 다소 높아졌다. 가처분소득중 가계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평균소비 성향은 전년의 73.8%에서 73.2%로 소폭 감소하였다.

<표 1-1-31>

가계비 구성

(단위 : 천원, %)

구 분	'95	'96	'97	증감율('97/'96)
가 계 비	14,782	17,039	17,045	0.0
음 식 물 비	3,118	3,411	3,485	2.2
주 거 비	1,187	1,199	1,226	2.3
피복 및 신발비	627	677	641	△5.3
광열 · 수도비	484	583	705	20.9
교양 · 교양오락비	1,703	1,895	1,913	0.9
(교 육 비)	(1,553)	(1,737)	(1,754)	(0.9)
교 제 증 여 비	3,450	4,478	4,201	△6.2
관 혼 상 제 비	1,755	1,944	1,918	△1.3
보 건 의 료 비	1,001	1,089	1,115	2.4
교 통 통 신 비	793	914	997	9.1
기 타	664	849	844	△0.6

자료 : 농림부 농업정보통계관실

다. 농가자산

'97년도 호당평균 농가자산은 184,503천원으로 전년대비 9.2% 증가하였다. 고정자산은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토지평가액의 증가와 농촌의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건물의 평가액 증가, 기계화의 추진에 따른 대농구 평가액

증가로 전년대비 7.3% 증가하였다. 유동자산은 미곡 등 재고농산물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1.2% 증가하였다. 유통자산의 경우에, 예·저금, 대부금, 보험·적립금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23.9%의 높은 증가를 보였다.

<표 1-1-32>

농가자산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95	'96	'97	증감율 (97/96)	
농가자산	158,171	168,901	184,503	9.2	
고정자산	토지	105,444	111,080	120,724	8.7
	건물	19,306	21,772	23,465	7.8
	대농구	3,057	3,474	3,588	3.3
	대동물	5,539	5,162	4,135	△19.9
	대식물	988	1,177	1,237	5.1
소계	134,334	142,665	153,149	7.3	
유동자산	소동물	288	264	180	△31.8
	재고농산물	3,647	4,590	4,679	1.9
	재고생산자재	163	198	254	28.3
	소계	4,098	5,052	5,113	1.2
유통자산	현금	330	381	311	△18.4
	예금·저금	15,403	15,703	19,798	26.1
	대부금	1,306	2,205	2,651	20.2
	보험·적립금	1,749	1,890	2,368	25.3
	기타	951	1,005	1,113	10.7
소계	19,739	21,184	26,241	23.9	

자료 : 농림부 농업정보통계관실

라. 농가부채

'97년도 호당 평균 농가부채는 13,012천원으로 전년보다 10.9% 증가하였다. 농가부채가 증가한 것은 토지, 건물, 대동물구입과 겸업자금, 재산적 지출 등 생산성 부채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생산성부채 증가율 : 7.1%).

또한 교육비, 가계생활비, 관혼상제비용 등 가계성부채와 채무상환용 부채도 전년대비 각각 21.7%와 27.7% 증가하였다.

농가부채의 용도별 구성비율을 보면, 토지구입, 건물의 신·중축, 대농구입비 등과 겸업자금, 재산적지출등 생산성부채가 75.2%를 차지하고 가계성부채 및 채무상환용 부채는 각각 13.6%와 11.2%로 나타났다

<표 1-1-33>

용도별 농가부채

(단위 : 천원, %)

구분	'90	'95	'96	'97	
농가부채 (증감율)	4,734 (21.4)	9,163 (16.2)	11,734 (28.1)	13,012 (10.9)	
생산성	토지·건물	1,202	3,810	4,564	4,969
	대동물	284	576	596	617
	농기계	722	1,263	1,352	1,330
	단기영농비등	938	1,682	2,624	2,865
소계 (증감율)	3,146 (24.6)	7,331 (18.4)	9,136 (24.6)	9,781 (7.1)	
가계성	교육비	210	231	273	331
	생활비	601	674	993	1,190
	관혼상제비	204	205	192	254
	소계 (증감율)	1,015 (16.9)	1,110 (5.2)	1,458 (31.4)	1,775 (21.7)
채무상환용 (증감율)	573 (13.0)	722 (12.8)	1,140 (57.9)	1,456 (27.7)	
비중	생산성	66.5	80.0	77.9	75.2
	가계성	21.4	12.1	12.4	13.6
	채무상환용	12.1	7.9	9.7	11.2

자료 : 농림부 농업정보통계관실

농가부채를 차입처별로 보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부채는 전년대비 11.9% 증가한 12,304천원으로 전체 부채중 9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차입 부채는 전년대비 4.6%가 감소한 708천원으로 5.4%의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어 건전한 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표 1-1-34>

차입처별 농가부채

(단위 : 천원, %)

구분	'90	'95	'96	'97
금융기관 (농협)	4,078 (3,858)	8,364 (7,364)	10,992 (8,500)	12,304 (9,561)
개인차입 (비중)	656 (13.9)	799 (8.7)	742 (6.3)	708 (5.4)

자료 : 농림부 농업정보통계관실

부채 규모별 농가분포를 보면, 부채가 전혀 없는 농가는 전년의 18.9%에서 20.4%로 높아졌으며, 5,000만원 이상 고액 부채농가는 전년의 5.5%에서 7.5%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부채의 비중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토지, 건물, 대동물, 대농구, 겸업자금, 재산적 지출 등 생산성 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표 1-1-35>

부채 규모별 농가분포

(단위 : %)

	'95		'96		'97	
	분포	누적분포	분포	누적분포	분포	누적분포
부채없는 농가	19.5	19.5	18.9	18.9	20.4	20.4
200만원 미만	17.6	37.1	18.2	37.1	17.7	38.1
200 ~ 400	13.3	50.4	11.1	48.2	10.2	48.3
400 ~ 600	9.2	59.6	7.2	55.4	6.0	54.3
600 ~ 800	5.5	65.1	5.3	60.7	4.5	58.8
800 ~ 1,000	4.5	69.6	3.7	64.4	4.2	63.0
1,000 ~ 2,000	15.3	84.9	14.8	79.2	14.5	77.5
2,000 ~ 3,000	6.3	91.2	8.3	87.5	7.7	85.2
3,000 ~ 4,000	3.2	94.4	4.0	91.5	4.6	89.8
4,000 ~ 5,000	2.0	96.4	3.0	94.5	2.7	92.5
5,000만원 이상	3.6	100.0	5.5	100.0	7.5	100.0

자료 : 농림부 농업정보통계관실

농가부채를 경지규모별로 보면, 0.5~1.0ha 경작농가의 부채는 9,256천원으로 평균의 71.1% 수준이며, 5.0ha 이상은 평균부채의 4.3배 수준에 해당하는 55,758천원이었다. 이는 호당경지규모 확대에 따른 투자 증대에 따라 부채의 절대규모도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1-36>

경지규모별 농가부채

(단위 : 천원, %)

구분	평균	0.5ha 미만	0.5~1.0	1.0~1.5	1.5~2.0	2.0~3.0	3.0~5.0	5.0ha 이상	
농가부채	13,012	9,801	9,256	12,564	18,206	17,232	28,833	55,758	
차입처별	금융기관 (비중)	12,304 (94.6)	8,988 (91.7)	8,761 (94.7)	12,167 (96.8)	17,522 (96.4)	16,606 (96.4)	27,476 (95.3)	52,722 (94.6)
	개인차입	708	813	495	397	684	626	1,357	3,036
용도별	생산성 (비중)	9,781 (75.2)	7,122 (72.7)	6,770 (73.1)	9,428 (75.0)	14,294 (78.5)	12,748 (74.0)	22,347 (77.5)	47,407 (85.0)
	가계성 (비중)	1,775 (13.6)	1,563 (15.9)	1,478 (16.0)	1,782 (14.2)	2,193 (12.1)	2,300 (13.3)	3,167 (11.0)	3,506 (6.3)
	채무상환용 (비중)	1,456 (11.2)	1,116 (11.4)	1,008 (10.9)	1,354 (10.8)	1,719 (9.4)	2,184 (12.7)	3,319 (11.5)	4,845 (8.7)

자료 : 농림부 농업정보통계관실

부채의 상환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유통자산 대 농가부채 비중은 49.6% 수준이고, 예·저금에 대해서는 65.7%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여전히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7>

농가자산과 부채 비중

(단위 : %)

구분	'90	'95	'96	'97
부채/유통자산 (부채/예·저금)	72.5 (112.7)	46.4 (59.5)	55.4 (74.7)	49.6 (65.7)
부채/농가자산	6.0	5.8	6.9	7.1

자료 : 농림부 농업정보통계관실

마. 농가 편의용품 보유 현황

농가 편의용품중 칼라TV, 냉장고, 전화, 가스렌지는 모든 농가에 보급되었다. 최근 자동차와 컴퓨터의 보급율이 증가하여 자동차는 2.6호당 1대, 컴퓨터는 5.3호당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8>

농가편의용품 보유현황

(100호당 : 대)

구분	'90	'95	'96	'97
칼라 TV	96.3	133.6	137.9	141.4
세탁기	37.4	81.0	85.1	86.7
냉장고	100.0	109.4	110.6	112.8
전화	98.0	99.9	100.0	99.9
가스렌지	95.4	102.6	102.6	103.5
자동차	5.0	29.6	35.5	39.2
컴퓨터	미조사	12.3	16.3	18.7

자료 : 농림부 농업정보통계관실

바. 전·겸업 농가별 주요 현황

전·겸업 농가별 주요현황을 보면 농가소득은 2종 겸업농가에서, 농업소득 및 부채는 1종 겸업농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계비와 자산은 2종 겸업농가, 이전 수입은 전업농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39>

전·겸업 농가별 주요현황

(단위 : 천원, %)

	전업농가 (A)	1종겸업 (B)	2종겸업 (C)	대 비	
				B/A	C/A
농가소득	21,046	26,151	26,547	124.3	126.1
농업소득	13,850	16,266	4,315	117.4	31.2
농외소득	2,128	5,646	17,831	265.3	837.9
이전수입	5,068	4,239	4,401	83.6	86.8
가계비	15,843	17,689	18,708	111.7	118.1
농가자산	178,591	197,974	201,691	110.9	112.9
농가부채	14,589	17,903	11,913	122.7	81.7

자료 : 농림부 농업정보통계관실

사. 도별 주요 현황

도별 농가소득은 수도권에 인접하여 농외 취업기회가 많은 경기도가 호당 평균 30,467천원으로 가장 높고, 호당경지면적이 많고(전국평균의 1.2배) 미곡, 채소, 축산의 수입이 많은 충남이 호당평균 26,565천원으로 그 다음을 기록했다. 전작위주의 농업경영으로 농업소득이 적고 농외소득이 평균 이하인 강원도는 20,577천원으로 가장 적고 미작위주의 농업경영과 농외취업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전남이 21,034천원으로 낮게 나타났다.

농가부채는 경기도가 건물, 대동물, 대농구 등 생산시설 투자와 단기 영농비, 점업자금, 재산적 지출 등이 상대적으로 높아 호당 평균 16,378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북은 미작위주의 농업지역으로 생산설비투자가 적고, 가계성 부채중 가계잡비를 제외한 부채가 낮게 나타나, 호당평균 9,709천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표 1-1-40>

도별 주요 현황

(단위 : 천원, %)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세 주
농 가 소 득	30,467	20,577	21,380	26,565	21,254	21,034	22,442	23,507	22,381
농업소득	9,933	8,855	9,824	15,609	10,102	8,965	11,245	8,784	12,498
농외소득	15,920	7,457	7,204	6,706	6,215	6,703	6,371	10,501	7,716
이전수입	4,614	4,265	4,352	4,250	4,937	5,366	4,826	4,222	2,167
가 계 비	21,228	16,106	15,367	17,496	15,549	15,986	17,483	15,979	18,758
농 가 자 산	466,024	151,552	133,594	153,130	124,899	127,166	159,229	152,109	286,523
농 가 부 채	16,378	14,525	14,357	14,918	9,709	10,860	13,444	11,781	12,977

자료 : 농림부 농업정보통계관실

(농업통계담당관실 사무관 신대식)

3. 농가판매와 구입가격

가. 개 황

1997년중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연평균 기준으로 전년대비 2.9% 하락한 반면 농가구입가격지수는 2.3% 상승하여 농가교역조건이 전년보다 5.1% 악화되었다.

<표 1-1-41>

농가교역조건 동향

(1995=100)

구 분	1980	1985	1990	1995	1996	1997
농가판매가격지수(A)	39.3	54.6	73.7	100.0	105.2	102.2
농가구입가격지수(B)	39.8	58.3	75.4	100.0	104.3	106.7
농가교역조건(A/B×100)	98.7	93.7	97.7	100.0	100.9	95.8

자료 : 농협중앙회

나. 농가판매가격 동향

1997년도 연평균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2.2로 전년도의 105.2에 비해 2.9% 하락하였다. 이를 유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곡 물

1997년중 곡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5.3으로 두류(△1.2%)와 서류(△7.4%)가 하락했으나 미곡(1.6%), 잡곡(3.5%)이 상승해, 연평균 기준으로 전년대비 1.2% 상승하였다. 미곡은 일반미(1.2%)와 찰쌀(6.6%) 가격이 상승했으며, 잡곡은 옥수수(3.0%)와 조(22.9%)의 가격이 올랐다. 두류는 콩(△0.4%), 콩나물콩(△1.4%), 팥(△4.8%), 녹두(△2.9%) 등이 하락했으며, 서류는 고구마(32.8%)가 상승했으나 감자(△18.7%)는 하락하였다.

(2) 청과물

1997년중 청과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0.4로 과실이 1.5% 상승했으나

채소가 1.4% 하락하여 연평균 기준으로 전년대비 0.6% 하락하였다.

채소의 경우 엽채류는 시금치($\Delta 8.2\%$)와 쑥갓($\Delta 1.7\%$)의 가격이 떨어졌으나 배추(0.9%), 양배추(5.5%), 상추(4.6%), 열무(10.8%), 미나리(1.1%), 깻잎(28.0%), 부추(7.0%) 가격이 상승해 1.6%의 오름세를 보였다. 근채류는 무(49.3%)와 당근(1.5%) 가격이 올라 39.0% 상승하였다. 조미채류는 마늘(22.2%), 파(18.6%), 생강(44.9%)이 올랐으나 고추($\Delta 16.9\%$)와 양파($\Delta 10.4\%$)가 내려, 4.3%의 하락세를 보였다. 과채류는 호박(0.4%)이 오른 것을 제외하고 오이($\Delta 5.2\%$), 참외($\Delta 1.6\%$), 수박($\Delta 13.7\%$), 토마토($\Delta 2.5\%$), 딸기($\Delta 4.3\%$), 가지($\Delta 11.8\%$)의 가격이 떨어져 5.8% 하락하였다.

과실류는 포도($\Delta 5.2\%$), 감귤($\Delta 1.3\%$), 감($\Delta 9.9\%$)이 내렸으나 사과(10.2%), 배(9.1%), 복숭아(5.4%), 밤(0.3%)이 올라 전년에 비해 1.5% 상승세를 보였다.

(3) 축산물

1997년중 축산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89.7로 유란이 1.9% 상승했으나 가축이 11.8% 내려 연평균 기준으로 전년대비 10.6% 하락하였다. 가축은 돼지(18.4%)와 염소(1.0%)가 오르기는 했으나 한우($\Delta 20.1\%$), 한우송아지($\Delta 28.0\%$), 유우($\Delta 28.1\%$), 유우송아지($\Delta 29.2\%$), 닭($\Delta 13.6\%$)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유란은 우유가 전년과 변동이 없었으나, 계란(8.7%)과 벌꿀(2.5%)은 오름세를 보였다.

(4) 기타농산물

특용작물, 화훼, 부산물 등 기타농산물의 1997년중 농가판매가격 지수는 108.4로 연평균 기준으로 전년대비 2.2%의 상승세를 보였다.

특용작물은 인삼($\Delta 3.0\%$)과 표고버섯($\Delta 4.8\%$) 가격이 내렸으나, 참깨(4.8%), 들깨(1.3%), 땅콩(3.0%), 엽연초(3.9%), 느타리버섯(4.0%) 가격이 올라 지난해에 비해 2.1% 상승하였다. 화훼류는 안개꽃($\Delta 9.0\%$)을 제외하고 국화(6.0%), 장미(6.1%), 백합(2.4%), 카네이션(8.4%), 거베라(8.3%) 가

격이 올라 4.1% 상승하였다. 이밖에 부산물(벼짚)은 지난해에 비해 0.2% 상승하였다.

<표 1-1-42>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1995=100)

구 분	가중치	농가판매가격지수		동락률 (%)
		1996년	1997년	
총 지 수	1000.0	105.2	102.2	△2.9
곡 물	323.3	113.9	115.3	1.2
(미 곡)	288.7	114.9	116.7	1.6
(맥 류)	13.6	100.0	100.0	0.0
(잡 곡)	3.7	105.9	109.7	3.5
(두 류)	7.8	103.9	102.7	△1.2
(서 류)	9.5	114.6	106.1	△7.4
청 과 물	296.6	101.0	100.4	△0.6
(채 소)	208.5	104.6	103.1	△1.4
(과 실)	88.1	92.5	93.9	1.5
축 산 물	322.3	100.4	89.7	△10.6
(가 축)	294.7	100.4	88.3	△11.8
(유 란)	27.6	102.5	104.4	1.9
기 타 농 산 물	57.8	106.1	108.4	2.2
(특 용 작 물)	48.8	108.6	110.8	2.1
(화 획)	6.7	90.1	93.8	4.1
(부 산 물)	2.3	100.1	100.5	0.2

자료 : 농협중앙회

다. 농가구입가격 동향

1997년도 연평균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06.7로 지난해의 104.3에 비해 2.3% 상승하였다.

(1) 가계용품

1997년중 가계용품의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11.3으로 주거비를 제외한 식료품, 피복비, 보건의료비, 교육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 잡비가 올라, 연평균 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4.6% 상승하였다.

식료품은 밀가루, 고구마 등 곡류(0.4%)와 계란, 우유 등 유란류(10.8%), 양파, 간장 등 유지조미료(10.8%), 과자, 빵, 두유 등 기호품(13.8%) 등이 올라 3.5%의 상승세를 보였다. 보건의료비도 감기약, 소화제, 영양제 등의 약품(1.0%)과 입원비, 진찰료 등 병원비(6.4%), 한방진찰료(3.7%) 등이 올라, 4.5% 상승하였다. 교육교양오락비는 납입금 등 교육비(6.0%)와 노트, 그림물감 등의 문방구비(11.0%), 운동기구, 필름 등의 기타오락비(3.1%)가 올라 전년대비 5.7% 상승하였다. 한편 교통통신비는 기차요금(5.0%), 시외버스요금(6.6%), 택시요금(4.3%), 우편료(4.4%) 등이 올라 2.4% 상승하였으며, 피복비(5.9%), 가계광열비(14.2%), 미용위생(4.9%) 등 기타잡비도 오름세를 보였다. 주거비는 냉장고(Δ 1.3%), 세탁기(Δ 1.1%), 컴퓨터(Δ 20.9%) 등이 내려 1.3% 하락하였다.

(2) 농업용품

1997년중 농업용품의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00.0으로 연평균 기준으로 전년 대비 1.3% 하락하였다.

농업용품 가격지수가 하락한 것은 한우(Δ 14.6%), 한우송아지(Δ 23.3%), 유우송아지(Δ 30.1%) 등의 가축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농광열비는 석유(20.8%), 경유(29.2%), 휘발유(22.8%) 등이 올라 21.1% 상승했다. 이밖에 비료(5.5%), 농약(4.2%), 농기구(2.6%), 사료(5.4%), 영농자재(7.5%) 가격도 상승하였다.

<표 1-1-43>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1995=100)

구분	가중치	농가구입가격지수		동락률 (%)
		1996년	1997년	
총지수	10200.0	104.3	106.7	2.3
가계용품	524.9	106.4	111.3	4.6
(식료품)	97.6	102.3	105.9	3.5
(피복비)	39.1	103.4	109.5	5.9
(주거비)	48.7	97.7	96.4	△1.3
(가계광열비)	35.6	111.4	127.1	14.2
(보건의료)	69.8	108.0	112.9	4.5
(교육교양오락)	121.5	112.7	119.2	5.7
(교통통신)	76.5	105.7	108.2	2.4
(기타잡비)	36.1	104.6	109.7	4.9
농업용품	403.7	101.4	100.0	△1.3
(종자)	17.4	100.5	100.5	0.0
(비료)	24.3	100.3	105.8	5.5
(농약)	24.6	103.7	108.0	4.2
(농기구)	83.6	101.6	104.2	2.6
(영농광열)	13.9	111.2	134.8	21.1
(가축)	129.9	97.8	82.2	△15.9
(사료)	77.7	104.8	110.5	5.4
(영농자재)	32.3	102.7	110.4	7.5
농촌임료금	71.4	105.8	110.2	4.2
(농업노동)	31.7	109.7	116.5	6.3
(기타임금)	22.8	106.4	108.5	2.0
(도정료)	8.2	103.5	106.5	2.8
(농기계임차료)	28.7	102.1	104.5	2.3

자료 : 농협중앙회

(3) 농촌임료금

1997년중 농촌임료금지수는 110.2로 지난해에 비해 4.2% 상승하였다. 이중 농업노동임금은 남자(7.0%), 여자(5.3%)가 모두 올랐는데 남자의 경우는 급식물을 포함하여 하루 3만 8,711원이었고 여자는 2만 7,779원이었다. 목수와 미장이 등에게 지급되는 기타임금도 2.0% 상승하였는데, 목수와 미장의 하루 임금은 급식물평가액을 포함하여 각각 7만 3,509원과 7만 1,148원이었다. 쌀 도정료는 전년대비 2.8% 상승하였고, 농기계임차료는 경운기(3.3%), 트랙터(2.9%), 이앙기(1.2%), 벼탈곡기(4.1%), 건조기(3.3%) 등의 임차료가 올라 2.3%의 상승세를 보였다.

<표 1-1-44>

농촌임료금 동향

(단위 : 원/1일, 급식물평가액 포함)

구	분	1980	1985	1990	1995	1996	1997
농업노동	남 자	6,509	9,695	18,563	33,237	36,156	38,711
	여 자	4,841	6,940	13,224	23,791	26,349	27,779
기타임금	목 수	13,185	19,130	37,509	67,221	71,934	73,509
	미 장 이	12,612	18,205	36,014	66,792	70,044	71,148

자료 : 농협중앙회

4. 농림어업 부가가치

1997년에 농림어업의 실질부가가치는 18조 1,030억원으로 전년의 17조 6,853억원에 비해 2.5% 증가하여 둔화추세를 나타냈다. 이는 주로 재배업과 어업부문에서의 성장에 힘입은 것으로, 다른 부문은 지난해와 비교할 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부문별로는 농업부문 부가가치가 재배업의 성장에 힘입어 15조 3,838억원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하였다. 재배업은 지난해 성장률 3.3%에는 미치

지 못하지만 2.4% 성장하였다. 지난해까지 높은 성장을 기록했던 축산업과 농업서비스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지난해 1.8% 성장했던 임업부문은 4.1% 마이너스 성장을 했으며, 어업부문은 지난해 5.4%보다 높은 9.3% 성장함으로써, 농림어업의 성장을 이끌었다.

<표 1-1-45> 농림어업 부가가치 추이

(단위: 10억원, 1990년 불변)

구 분	'90	'94	'95	'96	'97	증감률(%) (전년대비)
농 립 어 업	15,592.4 (15,592.4)	16,380.4 (21,498.3)	16,986.5 (23,012.9)	17,658.3 (24,545.3)	18,103.0 (24,055.9)	2.5
농 업	13,264.7	13,792.6	14,540.8	15,105.1	15,383.8	1.8
- 재 배 업	11,700.9	11,909.1	12,493.3	13,024.6	13,338.6	2.4
- 축 산 업	1,323.8	1,630.9	1,787.9	1,810.6	1,778.9	△1.6
- 농업서비스	237.0	252.6	259.6	269.8	266.3	△1.3
임 업	648.2	573.6	533.5	538.4	516.5	△4.1
어 업	1,682.6	2,014.2	1,912.2	2,014.9	2,202.7	9.3

주 : ()은 경상가격
자료 : 한국은행

전년도와 비교해 농업의 비중은 변화가 없지만, 재배업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재배업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재배업의 성장보다는 다른 부문의 위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축산업은 꾸준히 성장하여 그 비중이 1995년에 10.3%에 이르렀지만, 이후 감소추세를 보여 1997년에는 5.9%로 줄어들었다. 어업과 임업이 농림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에 각각 4.1%와 10.0%로 감소하고 있다.

<표 1-1-46>

농림어업 구조 추이

(단위 : 10억원, %)

구 분	'90	'94	'95	'96	'97
농 립 어 업	15,592.4 (100.0)	21,498.3 (100.0)	23,012.9 (100.0)	24,545.3 (100.0)	24,055.9 (100.0)
농 업	85.1	83.8	85.5	85.9	85.9
- 재 배 업	75.0	73.0	73.7	75.2	78.3
- 축 산 업	8.5	9.4	10.3	9.2	5.9
- 농업서비스	1.5	1.5	1.5	1.5	1.7
임 업	4.2	4.1	3.9	3.9	4.1
어 업	10.8	12.1	10.6	10.2	10.0

주 : 경상 부가가치 기준

자료 : 한국은행

5. 농업생산성

농가에서 영농작업에 투입한 주요요소를 보면, 호당 노동시간은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고, 농업자본액은 1997년 들어 둔화추세로 돌아섰다. 경지면적은 1993년 이후 큰 변화가 없다.

1997년에 호당 영농 투입시간은 1,219시간으로 전년에 비해 74시간 감소하였다. 이는 수도작을 비롯한 영농작업에서 농업기계화가 광범위하게 진전되어, 농기계가 노동을 점차 대체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호당 농업자본액은 25,782천원으로 전년대비 0.3% 증가하는데 그쳤다. 호당 경지면적은 전년(1.36ha)보다 조금 줄어든 1.35ha였다.

<표 1-1-47>

농가호당 생산요소 투입량

구 분	단 위	'91	'93	'94	'95	'96	'97
영 농 시 간	시 간	1,398	1,447	1,396	1,376	1,293	1,219
농업자본액	천 원	11,984	17,439	19,217	21,323	25,707	25,782
경 지 면 적	10a	12.03	13.36	13.50	13.54	13.66	13.55

자료 : 농림부 농업정보통계관실

1997년에 전반적인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농산물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대부분의 농업생산성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던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10,780원으로 전년(10,573원) 대비 1.9% 증가하여, 성장세가 다소 주춤했다. 10a당 토지생산성은 970천원으로 감소추세로 돌아섰으며, 자본생산성도 0.51원으로 전년(0.53원)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 면적에 투입되는 노동시간을 나타내는 노동집약도는 90시간으로 전년(95시간)에 비해 5.5% 감소하였다. 단위면적당 투입되는 자본액을 나타내는 자본집약도는 1,903천원으로 1991년 이후의 상승추세를 이어갔다.

<표 1-1-48> 농업생산성 지표

구 분	단 위	'91	'93	'94	'95	'96	'97
노동생산성	원/시간	6,043	6,940	8,714	9,387	10,573	10,780
토지생산성	천원/10a	702	778	929	954	1,001	970
자본생산성	원/원	0.70	0.60	0.65	0.61	0.53	0.51
노동집약도	시간/10a	116	108	107	102	95	90
자본집약도	천원/10a	996	1,305	1,424	1,575	1,882	1,903

주 : 1. 노동, 토지, 자본 생산성은 농업부가가치 기준

2. 자본생산성 = 농업부가가치/농업자본액

자료 : 농림부 농업정보통계관실

(농업정보통계관실)

제 2 장 국내농산물 수급동향

제 1 절 국내 주요 농산물 수급동향

1. 식량작물

경지면적이 감소됨에 따라 경지이용면적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97년 경지이용면적은 2,097천ha로 '96년 2,142천ha에 비해 45천ha가 감소되었다.

식량작물 재배면적은 '96년도의 1,340천ha보다 26천ha가 줄어든 1,314천ha를 유지하였으나, 식량작물중 벼재배면적은 전년의 1,050천ha보다 2천ha가 늘어난 1,052천ha였다. 이는 '96년부터 시작된 쌀산업발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벼재배면적 확보시책과 시중쌀값 상승으로 쌀생산농가의 소득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전체 경지이용면적중 식량작물 비율이 전년도 62.6%에서 62.7%로 증가하였다.

맥류의 경우에는 '97년 보리 파종기에 잦은 강우로 인해 파종이 저조하여 재배면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되었다.

<표 1-2-1>

주요작물의 경지이용면적 추이

(단위: 천ha, %)

년도	경지 이용 면적	식 량 작 물					채 소	과 실		기 타		
		소계	구성비	미곡	백류	기타 품목		구성비	구성비			
'90	2,409	1,669	69.3	1,244	160	265	277	11.5	132	5.5	331	13.7
'93	2,285	1,467	64.2	1,136	117	214	318	13.9	154	6.7	346	15.2
'94	2,205	1,403	63.6	1,103	85	215	303	13.7	161	7.3	338	15.3
'95	2,197	1,346	61.3	1,056	90	200	322	14.6	172	7.8	357	16.2
'96	2,142	1,340	62.6	1,050	95	195	311	14.5	171	8.0	320	14.9
'97	2,097	1,314	62.7	1,052	70	192	285	13.6	174	8.3	324	15.4

주: 기타는 시설작물, 수원지, 기타작물임
 자료: 농림부 농업정보통계관실

전체곡물 생산량은 매년 감소추세였으나 '97양곡년도에는 총 6,031천톤이 생산되어 전년도 5,504천톤에 비해 527천톤의 생산이 증가되었는바,

이는 벼재배면적 증가와 사상유례없는 기상여건의 호조로 국내곡물생산량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쌀의 대풍에 따른 것이다.

소비량은 그동안 증가추세를 보여왔으나 '97년은 19,828천톤으로 '96년보다 1,039천톤이 감소되었는바, 이는 사료용 소비가 지난해보다 큰폭으로 감소한데 기인한것이며,

식량용 소비는 쌀소비의 감소 둔화와 밀, 콩등 식용곡물의 소비정체로 전년의 10,495천톤에 비해 다소 줄어든 10,425천톤으로 나타났다.

전체곡물 자급도는 30.4%로 '96년보다 4.0% 증가되었고, 사료를 제외하면 57.9%로 전년도 52.4%보다 5.5%가 상승하였다.

<표 1-2-2>

연도별 전체양곡 수급 추이

(단위 : 천톤)

양곡년도	'80	'85	'90	'95	'96	'97
생 산	7,048	7,102	7,013	5,816	5,504	6,031
수 입	5,051	5,051	10,022	14,258	14,278	14,161
소 비	12,596	14,667	16,282	19,974	20,867	19,828
- 식량용	10,124	9,921	9,981	10,601	10,495	10,425
- 사료용	2,472	4,746	6,301	9,373	10,372	9,403
연 말 재 고	2,179	2,280	3,657	3,119	2,304	2,398
자 급 륜(%)	56.0	48.4	43.1	29.1	26.4	30.4
(사료용 제외시)	(69.6)	(71.6)	(70.3)	(55.7)	(52.4)	(57.9)
1인당 연간소비량(kg)	195.1	181.7	167.0	160.5	160.2	157.8

자료 : 농림부 식량정책국

한편, 국민의 식생활변화에 따라 육류·과일·채소류 소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 양곡소비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97년도 국민 1인당 양곡소비량은 '96년의 160.2kg에서 157.8kg으로 2.4kg 줄어 들었다.

곡종별로 보면 쌀이 전년도 104.9kg에서 2.5kg가 줄어든 102.4kg 으로 나타났으며, 보리, 옥수수, 콩은 전년에 비해 각각 0.1kg씩 소비량이 증가되었으나, 밀과 기타 곡물의 경우는 전년에 비해 각각 0.1kg씩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3>

1인당 연간 양곡소비량 추이

(단위 : kg)

양곡년도	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 류	기 타
'70	219.4	136.4	37.3	26.1	1.1	5.3	10.2	3.0
'80	195.1	132.4	13.8	29.4	3.1	8.0	6.3	2.1
'85	181.7	128.1	4.6	32.1	3.1	9.3	3.1	1.4
'90	167.0	119.6	1.6	29.8	2.7	8.3	3.3	1.7
'93	159.2	110.2	1.7	29.9	3.1	7.8	3.4	3.1
'94	160.9	108.3	1.7	32.5	3.0	8.9	3.1	3.4
'95	160.5	106.5	1.5	33.9	3.3	9.0	3.0	3.3
'96	160.2	104.9	1.6	33.8	3.6	9.3	3.5	3.5
'97	157.8	102.4	1.7	33.7	3.7	9.3	3.6	3.4

자료 : 농림부 식량정책국

(식량정책과 서기관 김현수)

2. 원예·특용작물

가. 채 소 류

'97년에 채소류의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6.3% 감소된 364.2천ha이다. 생산량은 9,806천톤으로 '96년보다 3.9% 감소되었고, 1인당 소비량은 연간 145.0kg인 것으로 추정된다.

봄무·배추 생산량은 전년보다 1.7%가 감소된 1,484천톤으로 평년생산량 1,437천톤보다는 3.3% 늘어나 가격이 안정되었다. 고랭지무·배추는 재배면적이 12천ha로 전년대비 16% 감소되었으나 작황이 좋아, 생산량은 440천톤으로 '96년과 비슷하여 수급상 어려움이 없었다. 가을무·배추는 재배면적 감소와 생육초기의 가뭄으로 과잉 생산된 '96년보다 19.2% 감소된 2,442천톤이 생산되었으나, 김장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수급은 비교적 안정되었다.

고추는 재배면적이 77.4천ha로 전년보다 15% 정도 감소하였으나 기상여건 호조로 풍작을 이루어 수요량(190천톤)보다 11천톤이 많은 201천톤이 생산되었다. 마늘은 재배면적이 36.3천ha로 전년보다 14% 정도 감소한데다 작황도 평년 수준에 불과하여, 수요량보다 적은 394천톤이 생산되었다. 양파는 재배면적이 12.5천ha로 29% 증가되어 수요량(650천톤)보다 90천톤이 많은 740천톤이 생산되었는데, 특히 조생양파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채소특작과 농업사무관 염상열)

<표 1-2-4>

채소류 수급 동향

(단위 : 천톤)

		'90	'94	'95	'96	'97
수요	계	8,697	9,385	10,670	10,337	9,957
	내수	8,677	9,358	10,611	10,302	9,932
	수출	20	27	59	35	25
공급	계	8,697	9,385	10,670	10,337	9,957
	생산	8,677	9,222	10,586	10,209	9,806
	수입	20	163	84	128	151
1인당 소비량(kg)		132.6	140.8	158.5	152.2	145.0

자료 : 농림부 농산원예국

나. 과 실 류

과수 재배면적은 낮은 소득, 노목원 폐원 등의 영향을 받은 사과외의 경우에 '96년보다 3.9천ha가 감소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 포도 등의 증가에 힘입어 500ha가 증가하였다. 과실 생산량은 상주, 김천, 옥천, 영동 등 일부지역에서 포도개화기 서리피해가 있었고, 기타 지역에서 9월 이후 가을가뭄 영향으로 과실 비대가 다소 부진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착과량이 많았고, 성과수 면적도 증가해 '96년대비 11%가 증가한 2,452천톤을 기록하였다.

(과수화훼과 농업사무관 김석호)

<표 1-2-5>

과실류 수급동향

(단위 : 천톤)

구	분	'90	'94	'95	'96	'97
공 급	생 산	1,766.2	1,929.6	2,300.1	2,207.3	2,451.6
	수 입	37.2	180.1	183.5	187.7	226.5
소 비	내 수	1,790.4	2,103.1	2,472.7	2,383.7	2,664.8
	수 출	13.0	6.6	10.9	11.0	13.3
1인상 소비량(kg)		41.7	47.3	55.4	52.3	57.9

자료 : 농림부 농산원예국

다. 특용작물

참깨는 재배면적이 49천ha로 전년대비 15% 증가하고, 생산량이 33천톤으로 전년대비 14% 증가하였다. 소비량은 전년대비 3.7천톤이 감소하였다.

땅콩 재배면적은 5.6천ha로 전년대비 2% 감소하였고, 생산량은 1% 증가한 10.9천톤을 기록하였다. 연간 땅콩 소비량은 소비대체가 가능한 아몬드 등 견과류 수입증가에 따라 감소추세이며, 자급율은 33%이다.

(채소특작과 농업사무관 김홍범)

<표 1-2-6>

특용작물 수급 동향

(단위 : 천톤)

		참					평				
		'90	'94	'95	'96	'97	'90	'94	'95	'96	'97
수	계	51.8	98.0	88.9	103.0	103.6	44.2	36.0	31.1	36.5	36.3
	당년소비	47.7	79.0	86.3	94.0	90.3	40.1	32.7	28.8	32.7	32.6
	차년이월	4.1	19.0	2.6	9.0	13.3	4.1	3.3	2.3	3.8	3.7
공	계	51.8	98.0	88.9	103.0	103.6	44.2	36.0	31.1	36.5	36.3
	전년이월	-	9.4	19.0	2.6	9.0	8.1	5.9	3.3	2.3	3.8
	생 산	39.7	16.3	27.9	31.9	29.4	28.7	17.0	16.8	17.2	10.8
	수 입	12.1	72.3	42.0	68.5	65.2	7.4	13.1	11.0	17.0	21.7
자급률(%)		83	21	32	34	33	72	52	58	53	33

자료 : 농림부 농산원예국(생산은 전년도 생산량임)

라. 인삼류

인삼의 재배면적은 '90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였으나 '96년부터 전매제 폐지를 계기로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어, '97년에는 9,903ha로 전년대비 10.7% 증가하였다. '97년 생산량은 11,259톤으로 전년대비 11.0% 증가되었다.

(채소특작과 농업서기관 장승진)

<표 1-2-7>

인삼 생산 동향

	'90	'94	'95	'96	'97
면 적	12,184ha	10,123	9,375	8,940	9,903
생 산 량	13,889톤	14,292	11,971	10,147	11,259
농 가 수	36,404호	30,500	23,172	23,304	20,399

자료 : 농림부 농산원예국

마. 잡 사 류

'97년도에 1,739ha의 뽕밭에서 54천상자의 누에를 사육하였다. 누에고치로 사육된 것은 300여상자에 불과하여, 누에고치 생산량은 8.8톤에 불과하였다. 54천상자는 혈당강화제의 누에가루 생산용으로 대부분 사육되었으며, 8.8톤의 누에고치도 제사공장에서 생사원료로 쓰이지 않고, 일부 도의 잠사기관에서 제사 시험용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양잠의 목적과 형태가 완전히 바뀌어 달라진 모습이며 수년내 국내에서 누에고치생산은 전무할 전망이다.

'95년도에 누에사육량이 32천상자로 최저점을 기록하였다가 '97년에 누에사육량이 다시 54천상자로 69%나 증가한 것은 누에가루를 이용한 혈당강화제 개발에 따른 새로운 수요창출에 기인한 때문이다. 누에가루 첫 생산년도인 '95년에 121톤, '96년에 250톤, '97년에 270톤의 누에가루가 생산되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누에가루를 이용한 혈당강화제 생산기술의 국내의 특허등록이 곧 이뤄질 것이다.

또한 '96년에 누에 동충하초의 대량 생산기술을 개발한데 이어 '97년에는 누에 동충하초의 항암, 항피로면역 증가효과가 발표되어 '98년에 누에 동충하초의 체계적 대량생산이 예상된다. 이로써 양잠산업의 새로운 전환과 양잠산물의 수요창출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수화훼과 농업사무관 김영술)

<표 1-2-8>

양잠 현황

	'76	'90	'95	'96	'97	'97/'90
재배농가(천호)	488	32	5	4	4	12.5%
뽕밭면적(천ha)	82.9	13.3	2.5	1.8	1.7	12.8
누에사육량(천상자)	1,296	171	32	50	54	31.6
고치생산량(톤)	41,704	4,635	210	12	9	0.2
고치생산액(백만원)	59,531	30,277	1,703	84	71	0.2

자료 : 농림부 농산원예국

<표 1-2-9>

누에고치 수급 동향

(단위 : 천톤)

구	분	'90	'91	'92	'93	'94	'95	'96	'97
수 요 (A)	계	6.7	6.0	6.0	5.0	2.9	2.5	1.1	0.2
	내 수	2.5	2.6	1.7	1.5	1.0	1.5	0.8	0.1
	수 출	4.2	3.4	4.3	3.5	1.9	1.0	0.3	0.1
공 급 (B)	계	9.8	8.1	7.4	5.8	3.7	2.7	1.2	0.3
	이 월	2.9	2.3	2.1	1.4	0.8	0.8	0.2	0.1
	생 산	4.4	3.8	2.6	1.6	0.8	0.2	-	-
	수 입	1.6	2.0	2.7	2.8	2.1	1.7	1.0	0.2
재 고(B-A)		2.3	2.1	1.4	0.8	0.8	0.2	0.1	0.1
잠사류수출액(백만\$)		515	567	581	586	526	452	497	427

주 : 1. 수출은 생사로 생산되어 견연사와 견직물의 가공원료로 공급된 양임.

2. 잠사류 수출액 : 견연사, 견직물, 견제품의 수출총액임.

자료 : 농림부 농산원예국

3. 축산물과 사료작물

가. 축 산 물

'97년 육류 소비량은 1,339천톤으로, 전년보다 2.8% 증가하였다. 그러나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소비증가율은 전년도 5.8%보다 다소 둔화되었다.

쇠고기 소비량은 지난해보다 12.0% 증가한 362천톤, 돼지고기 소비량은 1.8% 증가한 698천톤, 계란 소비량은 1.6%가 증가한 477천톤으로 나타났고, 닭고기 소비량은 1.4% 감소한 279천톤이었다. 1인당 소비량은 지난해보다 0.6% 늘어난 29.3kg이었다. 이중 쇠고기는 7.9kg으로 전년보다 0.8% 증가했고, 돼지고기와 계란은 각각 15.3kg와 189개(10.4kg)로 보합으로 나타났으며, 닭고기는 0.2%가 감소한 6.1kg이었다.

우유는 지난해보다 2.9% 감소한 2,394천톤을 소비하였고 1인당 소비량도 1.2% 감소한 53.3kg을 기록하였다.

<표 1-2-10> '97 축산물 수급 동향

(단위: 천톤)

		공 급				소 비	수 출	차년어월
		이 월	생 산	수 입	계			
육 류	계	12.8	1,195.6	249.8	1,458.2	1,339.1	52.0	67.1
	쇠 고 기	3.8	237.0	167.0	407.8	361.8	-	46.0
	돼지고기	4.0	698.7	64.8	767.5	698.3	51.6	17.6
	닭 고 기	5.0	259.9	18.0	282.9	279.1	0.4	3.4
우 유		109.0	1,984.0	444.0	2,537.0	2,394.0	11.0	132.0
계 란		-	478.0	-	478.0	477.2	-	0.8

자료 : 농림부 축산국

<표 1-2-11> 1인당 연간 축산물 소비량

(단위: kg, 개)

구 분	'90	'94	'95	'96(A)	'97(B)	증△감 (B-A)
육 류 (kg)	19.9	25.8	27.4	28.7	29.3	0.6
쇠 고 기	(4.1)	(6.1)	(6.7)	(7.1)	(7.9)	0.8
돼지고기	(11.8)	(14.2)	(14.8)	(15.3)	(15.3)	-
닭 고 기	(4.0)	(5.5)	(6.0)	(6.3)	(6.1)	△0.2
계 란 (천개)	167.0	181.0	184.0	189.0	189.0	-
우 유 (kg)	42.8	46.8	47.8	54.5	53.3	△1.2

자료 : 농림부 축산국

<표 1-2-12>

육류 자급율

		'90	'94	'95	'96	'97
총 소 비 량	육류(천톤)	853.8	1,147.0	1,230.9	1,303.1	1,338.5
	국내산	769.1	1,017.0	1,047.7	1,102.3	1,121.5
	수입	84.7	140.8	183.2	200.8	217.0
	(자급률)(%)	(90.8)	(89.6)	(86.3)	(87.4)	(87.6)
	쇠고기	177.0	269.8	301.2	322.9	362.0
	국내산	94.9	147.3	154.7	173.9	227.8
	수입	82.1	122.5	146.5	149.0	134.2
	(자급률)(%)	(53.6)	(54.6)	(51.4)	(53.9)	(62.9)
	돼지고기	504.8	632.5	661.7	696.9	698.3
	국내산	502.2	613.9	625.0	654.9	633.5
	수입	2.6	18.3	36.7	42.0	64.8
	(수출)	(5.9)	(11.1)	(14.3)	(36.9)	(51.6)
	(자급률)(%)	(100.7)	(98.8)	(96.6)	(99.3)	(98.1)
	닭고기	172	244.6	268.0 (5.7)	283.3 (10.6)	279.1 (17.6)
	계란(백만개)	7,151	8,047	8,262	8,544	8,690
우유(천톤)	1,879	2,078	2,144	2,465	2,394	
국내산	1,879	1,947	1,948	1,991	2,293	
수입	-	131	196	474	101	
(자급율)	(100)	(92.3)	(90.9)	(80.8)	(95.8)	

주 : '95~'97 닭고기 총소비량중 ()는 수입물량임.
 자료 : 농림부 축산국

육류 자급률은 총소비량 1,339천톤 중에 국내산이 1,122천톤이고 52천톤이 수출됨에 따라 87.6%를 유지하였다. 품목별로는 쇠고기가 62.9%, 돼지고기가 98.1%, 닭고기 93.5%, 우유가 95.8%를 기록하였다.

(축산정책과 행정사무관 박상윤)

나. 사료작물

'97년에 가축용 사료의 총 수급량은 21,748천톤으로 전년보다 10.0%가 감소하였는데, 이중 농후사료가 16,870천톤, 조사료가 4,878천톤으로 추정된다. 농후사료 중 양축용 배합사료의 생산은 16,000천톤으로 전년보다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표 1-2-13>

사료 수급 추이

(단위: 천톤, %)

	'80	'85	'90	'94	'95	'96 (A)	'97 (B)	증감율 (B/A)
합 계	7,561	13,250	17,154	22,559	23,302	24,222	21,748	△10.2
농후사료	3,996	7,322	11,211	14,488	15,700	16,827	16,870	0.3
- 배합사료	3,464	6,467	10,567	13,678	14,856	15,933	16,000	0.4
- 농가자급사료	532	855	644	810	844	894	870	△2.7
조사료	3,565	5,928	5,943	8,071	7,602	7,395	4,878	△34.0
- 사료작물 및 목초류	781	1,974	2,832	2,505	2,498	2,291	1,919	△16.2
- 산야초, 볏짚 등	2,784	3,954	3,111	5,566	5,104	5,104	2,959	△42.0

주 : 조사료는 말린 무게 기준임.

자료 : 농림부 축산국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대비 0.4% 증가하였다. 축종별로는 비육우용이 5.6%, 양돈용이 1.3%가 증가한 반면, 양계용이 2.2%, 낙농용 3.7% 감소하였다. 지난 10여년간 배합사료 생산이 늘어난 것은 국민 식생활과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축산물 소비량이 증가하여, 가축사육두수가 늘어나고 사육규모가 전업화되었기 때문이다.

배합사료 사용량이 증가됨에 따라 배합사료 제조에 필요한 원료곡물 수입량도 크게 늘어났다. 약 76% 이상의 배합사료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해외 곡물가격에 따라 국내 사료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해외곡물가격 변화에 따른 가격인상 요인을 흡수할 수 있는 국내 기반이 취약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내 사료자원의 개발을 통해 사료자급도를 높여 건전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산지 초지개발과 청예 및 담리작 사료작물의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97년에 신규로 676ha의 초지를 조성하였다.

<표 1-2-14> 배합사료 용도별 생산량

(단위: 천톤, %)

	'80	'85	'90	'94	'95	'96 (A)	'97 (B)	증감률 (B/A)
합 계	3,464	6,467	10,529	13,678	14,856	15,933	16,000	0.4
양 계 용	1,872	2,310	3,274	3,492	3,766	3,849	3,763	△2.2
양 돈 용	769	1,924	3,551	4,481	4,725	4,994	5,062	1.4
낙 농 용	514	994	1,790	2,057	2,095	2,168	2,087	△3.7
비육우용	306	1,209	1,667	3,194	3,681	4,136	4,366	5.6
기 타	3	30	247	454	589	785	722	△8.0

자료 : 농림부 축산국

'97년말 현재 초지 총관리면적은 59천ha로 435천톤(말린 무게 기준)의 목초를 생산하였다. 초지조성은 환경문제로 인한 규제강화와 지가 및 인건비의 상승 등으로 어려운 반면, 전용 등에 의한 관리제외 면적은 늘어나고 있다.

<표 1-2-15> 초지조성 실적

(단위: ha, 천톤, %)

	'85	'90	'94	'95	'96 (A)	'97 (B)	증감률 (B/A)
신규조성면적	5,111	616	525	413	373	676	81
관리 면적	80,732	89,903	69,474	66,301	62,649	59,236	△5.4
목초생산량	649	742	469	462	441	435	△1.4

자료 : 농림부 축산국

(축산경영과 서기관 최갑용)

제 2 절 식품수급 동향

1. 식품소비와 식생활의 변화

1인당 연간 곡류 소비량은 1990년 이후 큰 변동이 없으나, 쌀의 소비는 1990년 120.8kg에서 1996년 107.8kg으로 매년 1.9% 감소하였다. 서류의 소비량도 1990년 11.0kg에서 1996년 10.8kg으로 매년 0.3% 감소하였다. 반면, 채소류, 과실류, 육류, 우유류 등의 소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 육류의 소비증가율이 높다. 채소류는 1990년에 132.6kg에서 1996년 152.2kg으로 증가하였으며, 육류는 1990년에 23.6kg에서 1996년 34.0kg로 매년 6.3% 증가하였다.

<표 1-2-16> 1인 1년당 식품 공급량, 1990~96

(단위: Kg)

	1990	1993	1994	1995	1996	연평균 증감률
곡 류	175.4	170.0	172.9	173.1	172.9	△0.2
쌀	120.8	113.7	112.6	110.6	107.8	△1.9
서 류	11.0	14.7	12.2	11.0	10.8	△0.3
설 당 류	11.7	15.9	17.4	17.8	16.8	6.2
두 류	10.3	9.8	11.1	11.1	11.3	1.6
채 소 류	132.6	153.5	140.7	160.6	152.2	2.3
과 실 류	29.0	35.1	35.1	39.1	36.9	4.1
육 류	23.6	28.6	29.8	32.7	34.0	6.3
계 란 류	7.9	8.5	8.4	8.6	8.7	1.6
우 유 류	31.8	34.8	32.8	38.5	41.7	4.6
어 패 류	30.5	31.6	32.5	33.4	35.0	2.3
해 조 류	5.7	11.7	12.4	11.7	9.3	8.5
유 지 류	14.3	13.3	13.9	14.2	14.6	0.3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년도.

식생활 양식의 변화에 따라 1인당 에너지 공급량은 1990년 이후 매년 0.6% 증가하였으며, 1996년의 에너지 공급량은 2,957kcal로써 전년도와 거

의 같은 수준이었다. 식물성 에너지 중 전분질을 통한 에너지 공급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데 이는 종래의 곡물 중심의 에너지 공급 패턴이 육류 위주로 점차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

품목별 비중을 보면 1996년에 총에너지의 84.6%를 식물성 식품에서 섭취하였으며, 그 중 곡물류에서 61.1%의 에너지를 섭취하고 있어 에너지의 곡물의존도가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동물성 식품의 에너지 구성비는 1990년 12.5%에서 1996년에는 15.4%로 증가하였다.

<표 1-2-17> 1인 1일 에너지 공급량, 1990~96 (단위: Kcal)

	1990	1993	1994	1995	1996	연평균 증감률(%)
총에너지	2,853 (100.0)	2,872 (100.0)	2,950 (100.0)	2,959 (100.0)	2,957 (100.0)	0.6 -
식물성	2,457 (87.5)	2,464 (85.8)	2,534 (85.9)	2,520 (85.2)	2,502 (84.6)	0.3 -
- 전분질	1,837 (67.6)	1,803 (62.8)	1,839 (62.2)	1,806 (61.0)	1,806 (61.1)	△0.3 -
- 채소류	162 (6.0)	195 (6.8)	198 (6.2)	209 (7.1)	186 (6.3)	2.3 -
- 기 타	458 (14.0)	466 (16.2)	497 (17.5)	505 (17.1)	510 (17.2)	1.8 -
동물성	395 (12.5)	408 (14.2)	416 (14.1)	439 (14.8)	456 (15.4)	2.4 -

자료: (표 1-2-16)과 동일

도시가계의 식료품 지출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외식비의 증가를 꼽을 수 있다. 1990년부터 1997년 사이 외식비는 연간 19.4% 증가해 왔으며, 도시근로자 가구의 총식료품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에 20.4%에서 1997년에 36.3%로 증가하였다. 금액면에서도 1990년에 4만 4,800원에서 1997년 15만 5,000원으로 약 3배 증가하였다.

식료품 중에서는 전통적인 식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육류, 낙농품, 과실류 등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주류에 대한 지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표 1-2-18>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 1990~97

(단위: 천원, %)

	1990	1993	1994	1995	1996	1997	연평균 증감률
소비지출	685.7	1,021.0	1,140.4	1,265.9	1,426.9	1,489.5	11.7
식료품	219.5 (100.0)	301.7 (100.0)	341.6 (100.0)	367.1 (100.0)	409.5 (100.0)	427.5 (100.0)	10.0 -
- 곡류 및 식빵	42.0 (19.1)	45.3 (15.0)	46.6 (13.6)	46.7 (12.7)	54.4 (13.3)	53.5 (12.5)	10.0 -
- 육류	26.2 (11.9)	36.0 (11.9)	38.4 (11.2)	42.2 (11.5)	44.3 (10.8)	43.7 (10.2)	7.6 -
- 낙농품	10.4 (4.7)	15.4 (5.1)	16.4 (4.8)	17.1 (4.6)	17.6 (4.3)	17.9 (4.2)	8.1 -
- 어패류	21.1 (9.6)	28.3 (9.4)	30.4 (9.0)	33.3 (9.1)	36.2 (8.8)	35.0 (8.2)	7.5 -
- 채소·해조류	24.6 (11.2)	31.0 (10.3)	36.6 (10.7)	35.6 (9.7)	37.6 (9.2)	38.8 (9.1)	6.7 -
- 과실류	15.6 (7.1)	22.3 (7.4)	28.0 (8.2)	28.5 (7.8)	30.5 (7.5)	30.9 (7.2)	10.2 -
- 조미식품	11.7 (5.3)	15.6 (5.2)	16.8 (5.0)	15.7 (4.3)	16.5 (4.0)	15.9 (3.7)	4.5 -
- 빵 및 과자류	12.6 (5.7)	11.8 (3.9)	12.7 (3.7)	13.5 (3.7)	15.1 (3.7)	15.9 (3.7)	3.4 -
- 차와 음료	7.0 (3.2)	7.1 (2.3)	8.3 (2.4)	8.7 (2.3)	9.5 (2.3)	10.1 (2.4)	5.4 -
- 주류	3.1 (1.4)	4.2 (1.4)	4.9 (1.4)	5.0 (1.4)	5.4 (1.3)	5.5 (1.3)	8.5 -
- 기타식료품 ¹⁾	0.4 (0.2)	5.2 (1.7)	4.8 (1.4)	5.0 (1.4)	5.8 (1.4)	5.2 (1.2)	0.0 ²⁾ -
- 외식	44.8 (20.4)	79.6 (26.4)	97.8 (28.6)	115.7 (31.5)	136.6 (33.4)	155.0 (36.3)	19.4 -

주 : 1) 1990년까지는 식료품 관련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고, 1991년부터는 기타식료품에 대한 지출임.

2) 1993~97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임.

자료 :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각년도.

2. 식품수요와 공급현황

가. 식품수요

1인당 식품 공급량은 최근 들어 육류, 과일류, 빵 및 과자류에 대한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서구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이들 품목의 소비 수준이 높은 편은 아니다. 우리 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식품 공급량 중에서 곡류(172.87kg), 두류(13.53kg), 채소류(152.17kg), 어패류(44.26kg) 등의 소비수준은 서구 국가들의 소비수준보다 비교적 높은 반면, 과일류(36.85kg), 육류(34.03kg), 계란류(8.69kg), 우유류(41.72kg) 및 유지류(14.64kg) 등의 소비수준은 아직 낮은 편이다. 특히, 육류와 과일류의 소비수준은 서구 국가들의 1/3~1/4 수준이며, 우유류는 약 1/6에 불과하다.

<표 1-2-19> 주요국별 1인 1년간 식품 공급량 비교

(단위: kg)

	한 국	일 본	대 만	미 국	독 일	파키스탄
연 도	1996	1995	1994	1992-94	1992-94	1992-94
곡 류	172.87	119.2	102.02	115.0	94.0	155.6
서 류	10.79	38.6	22.15	62.5	77.5	8.7
실 탕 류	16.83	19.2	25.12	67.5	43.0	25.0
두 류	13.53	9.1	30.25	10.9	10.2	5.9
채 소 류	152.17	123.0	93.33	106.4	88.8	21.0
과 실 류	36.85	57.3	136.54	150.4	122.0	37.2
육 류	34.03	43.5	72.39	121.6	90.5	13.8
계 란 류	8.69	20.2	16.42	13.4	12.4	1.6
우 유 류	41.72	91.3	21.26	254.7	227.9	103.4
어 패 류	44.26	72.3	38.37	22.0	12.3	2.3
유 지 류	14.64	18.6	25.97	29.8	34.9	15.9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년도

우리 나라 국민 1인 1일 영양소별 섭취량을 보면, 철분과 비타민A를 제외한 모든 영양소의 섭취량이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지방질의 섭취가 크게 증가하였다.

1996년의 단백질 총공급량은 국민 1인 1일당 98.4g으로써 전년대비 1.5g 증가하였다. 이 중에서 동물성 단백질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1995년에는 전체 공급 단백질의 42.0%를 차지하였다.

1996년의 지방질 총공급량은 국민 1인 1일당 78.7g으로써 전년의 76.9g보다 1.8g 증가하였다. 이 중에서 동물성 지방은 전체 공급지방의 34.3%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어 우리 나라 국민의 지방질 섭취 패턴이 동물성 식품에서 유지류 등의 식물성 식품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기질 중 칼슘공급량은 국민 1인 1일 공급량은 616mg으로써, 전년도에 623mg보다 7mg 감소하였다. 철분의 공급량은 1996년에 16.5mg으로 전년도와 비교할 때 큰 변화는 없었다. 비타민 A를 제외한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C, 나이아신 등의 영양소들은 전년도에 비해 조금씩 증가하였다.

<표 1-2-20>

1인 1일당 영양 공급량

	1990	1993	1994	1995	1996	연평균 증감률(%)
단백질(g)	88.9	91.7	94.5	96.9	98.4	1.7
동물성단백질비중(%)	37.1	38.7	38.5	40.5	42.0	-
지방질(g)	61.6	74.1	77.3	76.9	78.7	4.2
동물성지방질비중(%)	35.3	34.4	33.7	34.3	34.3	-
칼슘(mg)	478	601	573	623	616	4.3
철(mg)	26.7	25.1	25.3	16.7	16.5	△7.7
비타민A(IU) ¹⁾	4,467	5,750	6,020	1,309	1,276	△2.5 ²⁾
비타민B ₁ (mg)	1.86	1.90	1.94	1.91	1.92	0.5
비타민B ₂ (mg)	1.44	1.49	1.51	1.48	1.51	0.8
나이아신(mg)	19.9	19.1	19.8	20.7	21.0	0.9
비타민C(mg)	124	160	142	146	143	2.4

1) 1995년부터 비타민A는 단위가 IU에서 R.E.로 전환됨.

1R.E. = [식물성(I.U.)/300 + 동물성(I.U.)/100] / 3.33

2) 1995-96의 연평균 증가율임.

영양소별 권장량(Recommended Dietary Allowance: RDA)²⁾ 대비 섭취율을 보면, 우리 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섭취하는 총에너지는 권장량의 88.6% 밖에 되지 않아 충분한 에너지를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소별로 보면, 단백질, 철분, 티아민, 나이아신, 비타민 C 등의 영양소는 권장량보다 과다 섭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철분과 비타민 C의 섭취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칼슘(75.4%)과 비타민 A(67.2%) 등은 권장량보다 과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우리 나라 국민들의 영양소 섭취가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21> 영양권장량(RDA)에 대한 영양소별 섭취비율 추이

(단위: %)

영양소 연도	에너지	단백질	칼슘	철분	비타민A	티아민	리 보 플라빈	나이 아신	비타민C
1990	90.0	127.8	82.0	173.3	76.5	109.9	101.4	156.2	154.9
1992	89.1	117.7	84.1	173.0	80.3	113.6	95.3	123.6	194.2
1993	90.0	117.9	84.0	176.0	67.7	140.1	97.3	120.6	175.6
1994	85.0	121.8	91.8	192.0	62.0	109.0	100.2	122.8	176.9
1995	88.6	116.7	75.4	159.5	67.2	108.8	96.0	119.8	185.4

자료: 보건복지부, 「'95 국민영양조사결과보고서」, 1997. 3.

국민 1인당 1일당 영양공급량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공급영양소는 소득 수준이 낮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는 높은 반면, 선진국인 미국, 유럽 국가들에 비교하면 낮은 수준에 속한다. 1995년 우리

2) 중등(中等)활동을 하는 몸무게가 60Kg이고 연령이 20~49세 사이의 성인남자 1인이 1일 동안 활동하는 데 필요한 권장량이다.

1인 1일 에너지 소비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text{에너지소비량}) = B_m \times t_s + \sum E_n \times t_w$$

- B_m : 기초대사량 (Kcal/분)
- t_s : 수면시간 (분)
- E_n : 각종 활동 중 에너지 소비량 (Kcal)
- t_w : 각종 활동시간 (분)

나라 국민 1인 1일 공급에너지는 2,957kcal이나, 1992~94년에 미국, 독일 등은 이미 3,300kcal를 넘어섰다.

에너지원(源)을 보면, 한국과 파키스탄은 에너지원의 60% 이상을 곡류를 통한 전분질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본도 약 50%를 전분질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서독의 에너지 공급량 중 전분질을 통한 식물성 에너지의 비중은 약 28.0%인 반면, 육류 소비를 통한 동물성 에너지의 비중은 23% 이상으로 우리 나라보다 훨씬 높다. 우리 나라도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에너지원이 점차 전분질 식품에서 동물성 식품으로 이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2-22> 주요 국별 1인 1일당 영양 공급량 비교

	한 국	일 본	대 만	미 국	독 일	파키스탄
연 도	1996	1995	1994	1992-94	1992-94	1992-94
에너지(kcal)	2,957	2,638	3,012	3,610	3,382	2,400
- 전분질(%)	61.1	49.4	40.9	28.8	28.0	61.4
- 설탕(%)	6.0	7.6	8.7	17.4	12.4	10.1
- 동물성(%)	14.3	21.7	23.0	24.9	23.6	10.2
- 유지류(%)	12.1	13.9	21.0	18.2	20.4	14.5
- 기타(%)	6.5	7.3	6.4	10.6	15.4	3.5
단백질(g)	98.4	90.0	95.7	112.5	98.3	58.9
- 동물성(g)	41.3	48.4	49.2	72.6	58.5	17.3
지방질(g)	78.7	86.4	135.1	142.3	143.4	62.0
- 유지류(g)	40.0	39.8	70.8	74.0	77.7	39.5
1인당GNP(\$)	10,548	41,185	12,439	27,551	29,450	446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년도.

1996년에 우리 나라 국민 1인 1일 단백질 공급량은 98.4g으로, 미국의 112.5g(1992~94년)보다는 낮지만, 일본의 90.0g(1995년), 대만의 95.7g(1994년), 독일의 98.3g(1992~94년)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동물성 단백질의 비중은 서구 국가와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이는 우리 나라 국민이 동물성 단백질은 적게 소비하지만, 간장, 된장, 두부와 같은 식물성 고단백식품을 많이 소비하는 전통적인 식습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나라 국민 1인 1일 지방질 공급량은 국민소득의 증대와 식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1996년에 78.7g로 증가했지만, 대만의 135.1g(1994년), 미국의 142.3g(1992~94년), 독일의 143.4g(1992~94년) 등과 비교하면 아직도 절반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전통적인 식생활 패턴, 축산물의 섭취량 부족, 유지류의 공급 부족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나. 식품 공급

총생산량에서 수출입과 종자용 및 감모, 폐기 등을 감안한 1996년도 순식용 식품의 공급은 전반적으로 1995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곡류의 공급량은 전년도에 약간 줄었는데, 쌀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밀가루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채소류, 과일류, 육류, 우유류의 공급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류나 두류, 어류 등의 공급은 감소하거나 전년도에 비교해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1-2-23> 연도별 주요 식품의 공급량

(단위: 천 톤)

	1990	1993	1994	1995	1996
곡류	7,520	7,491	7,686	7,719	7,873
- 쌀	5,177	5,008	5,005	4,933	4,911
- 밀가루	1,274	1,318	1,447	1,521	1,538
서류	473	648	540	491	491
두류	440	429	495	493	515
채소류	5,685	6,760	6,253	7,163	6,930
과실류	1,241	1,547	1,562	1,744	1,679
육류	1,010	1,258	1,323	1,457	1,550
- 쇠고기	177	228	264	296	313
- 돼지고기	505	601	620	634	668
- 닭고기	172	236	240	189	200
계란류	338	375	373	383	396
우유류	1,364	1,534	1,459	1,718	1,900
어패류	1,307	1,390	1,446	1,488	1,594
어류	899	866	1,017	966	1,073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년도.

1996년에 주요 식품의 자급률³⁾을 보면, 전년에 비해 몇 가지 품목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자급률이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표 1-2-24 참조). 전년도에 100%가 넘었던 어패류의 자급률이 95%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우유류의 자급률은 100%에 도달했다. 곡류의 자급률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며, 특히 쌀의 자급률은 1995년의 91.1%에서 1996년 89.9%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채소류의 자급률은 1996년에 98.7%로 꾸준히 높은 자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과일류도 자급률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육류의 자급률은 1995년에 90% 수준이 무너졌으나, 1996년에 다시 90.8%로 상승했다. 쇠고기 자급률은 1995년에 50.8%에서 1996년에 53.8%로 조금 상승해 1990년대에는 지속적으로 50%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자급률은 96%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1-2-24>

연도별 주요 식품 자급률 추이

(단위: %)

	1990	1993	1994	1995	1996
곡류	43.8	34.4	28.3	30.0	27.2
- 쌀	108.3	96.8	87.7	91.1	89.9
두류	24.5	16.8	14.9	11.7	11.7
채소류	98.9	98.4	97.8	99.2	98.7
과실류	102.5	92.1	92.1	93.2	92.6
육류	92.9	93.1	91.0	89.2	90.8
- 쇠고기	53.6	55.6	54.6	50.8	53.8
- 돼지고기	100.3	100.9	98.3	96.6	99.3
- 닭고기	100.0	99.4	99.2	98.1	97.6
계란류	100.0	100.4	99.6	99.9	100.0
우유류	92.8	93.2	92.9	93.3	83.0
어패류	121.7	110.7	106.7	100.4	95.1
유지류	8.0	7.3	3.8	4.8	5.2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식품의 자급률은 해당 식품의 국내수요량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 여기에서는 국내소비량을 기준으로 하여 구했다. 즉,

$$\text{식품의 자급도} = \frac{\text{국내생산량}}{\text{국내소비량}}$$

3. 食品加工産業 現況

가. 生産 現況

식품가공산업은 생활여건의 핵가족화, 도시생활중심의 생활여건변화, 국민소득향상 등으로 소비가 증가됨에 따라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식품가공산업의 생산액은 '96년 5인 이상 사업체 기준 25조 6,528억원으로 제조업 전체 생산액의 6.4%에 달하고 있다. 한편 여기에 5인 미만 영세 식품가공업체의 생산액을 더하면 전체 식품가공산업 생산액은 '96년 현재 2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식품가공산업의 생산액 동향을 보면 '80년 3조 4,780억원에서 '96년 25조 6,528억원으로 16년간 약 7배 이상의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같은 기간동안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180%가 증가되었다.

<표1-2-25> 식품가공산업의 부문별 생산액

(단위 : 억원)

부 문 별	1980	1985	1990	1993	1996
제 조 업	362,791	770,329	1,779,088	2,559,261	4,019,530
음·식료품	34,780	65,940	131,043	180,898	256,528
식 료 품	26,766	52,259	103,522	147,263	206,059
육 가 공	405	2,580	8,715	15,365	26,050
유 가 공	4,075	8,291	15,188	24,882	35,182
수산가공	2,265	6,077	14,203	19,467	22,818
과채가공	719	1,319	3,422	7,812	7,130
곡물가공	2,961	4,691	8,101	15,008	27,401
식용유지	1,645	5,068	6,456	4,142	7,103
빵·과자·국수	7,112	12,519	24,113	31,302	38,402
식품첨가물	1,620	3,689	6,870	10,684	16,327
기타식료품	5,965	8,024	16,453	18,600	25,648
음 료 품	8,014	13,680	27,521	33,635	50,469
알콜성 음료	6,070	9,375	14,498	19,654	26,057
비알콜성음료	1,944	4,306	13,022	13,981	24,412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식품가공산업의 부문별 성장추이를 보면 모든 부문에서 생산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90년대 들어와서 식용유지산업, 과채가공산업 및 수산가공산업의 생산액은 감소 내지 정체추세에 있다. 반면 이들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의 생산액은 '90년대에도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데, 특히 육가공산업, 유가공산업, 비알콜성 음료산업의 신장세가 현저하였다.

비알콜성 음료산업은 소득수준의 향상과 건강지향적 소비자 기호에 따라 다양한 제품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층의 음료소비 확대로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비알콜성음료의 생산은 소비자의 건강지향적 식기호에 맞추어 새로운 다양한 음료제품 생산으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가공산업의 생산은 요구르트와 치즈, 아이스크림 등을 중심으로 유제품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유제품의 수입개방으로 유제품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유가공산업의 생산증가율도 둔화 내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빵·과자·국수제조업은 빵·국수 소비증가에 힘입어 수입자유화에 따라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빵·과자·국수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식품가공업체의 생산액은 절대규모 면에서 빵·과자·국수제조업, 유가공산업, 곡물가공산업, 알콜성음료산업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빵·과자·국수제조업의 생산액은 전체 식품가공산업 생산의 1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가공산업, 곡물가공산업, 알콜성음료산업도 각각 13.7%, 10.7%, 10.2%의 생산비중을 점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가공식품의 수입자유화에 따라 식품산업 부문별 생산 비중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유제품과 육가공품의 국제경쟁력이 취약하여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유가공산업과 육가공산업이 식품가공산업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生産業體 現況

식품가공업체수는 5인 이상 사업체 기준 '80년 4,425개 업체에서 '96년 6,055개 업체로 동기간에 36.8% 증가하였다. 또한 5인 미만 영세 식품가공업체 약 36,000개 업체를 더하면 '96년 식품가공업체수는 약42,000여개소에 이르고 있다.

<표 1-2-26>

식품가공산업 부문별 가공업체수

(단위 : 개소)

부 문 별	1980	1985	1990	1993	1996
제 조 업	30,823	44,037	68,872	88,864	97,144
음·식료품	4,425	4,484	4,476	5,637	6,055
식 료 품	3,186	3,497	3,886	5,106	5,557
육 가 공	83	75	138	365	407
유 가 공	108	62	63	110	113
수산가공	796	1,239	1,434	1,982	1,804
과채가공	140	164	216	376	487
곡물가공	695	238	522	714	824
식용유지	94	67	73	64	76
빵·과자·국수	630	560	550	680	760
식품첨가물	113	132	167	205	317
기타식료품	527	960	723	610	769
음 료 품	1,246	987	590	531	498
알콜성 음료	1,239	946	530	335	244
비알콜성음료	25	41	60	196	254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식품산업내에서 식료품제조업체의 수는 증가한 반면 음료품제조업체의 수는 같은 기간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다. 식료품 제조업체중에서 육가공업, 과채가공산업의 업체수는 이들 산업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에 대한 꾸준한 수요증가와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가공산업 참여 활성화에 힘입어 비교적 높은 신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음료품 제조업체수는 '80년 1,246개 업체에서 '96년 498개소로 60.0%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알콜성음료산업의 업체수 감소 때문이다. 알콜성음료 제조업체수는 전통민속주인 탁주 제조업체수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80년 1,239개 업체에서 '96년 244개 업체로 80.3%나 감소하였다. 반면 비알콜성음료산업의 업체수는 비알콜성음료의 수요증가에 힘입어 '80년 25개 업체에서 '96년 254개 업체로 916.0%나 증가하였다.

식품제조업체중 업체수 비중은 '96년 기준 수산가공산업이 29.8%로 가장 높으며, 곡물가공산업과 기타식품산업, 빵·과자 및 국수제조업도 각각 13.6%, 12.7%, 12.6%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점하고 있다.

다. 雇備實態

식품가공산업은 가공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5인 이상 사업체 기준 '96년 189천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해 제조업 전체 종사자 2,898천명의 6.5%에 달한다. 식품가공산업 종사자는 '80년 161천명에서 '96년 189천명으로 지난 기간 17.4% 증가하였지만, '90년대 이후만 보면 인력절감 측면에서 시설자동화의 진전으로 식품산업의 종사자수는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같은 추세는 3D업종으로 분류됨에 따른 인력난과 시설자동화설비의 확대추세에 따라 계속될 전망이다.

'96년 기준 종업원수의 구성비가 높은 부문은 수산가공산업과 빵·과자·국수제조업이며, 이중 수산가공산업은 식품가공산업 전체 고용의 22.0%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업체수와 종업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수산가공산업의 업체가 다른 식품가공산업의 업체에 비하여 영세하고 노동력에 의존하는 단순가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빵·과자와 국수제조업은 식품가공산업 전체고용의 21.4%를 차지하고 있다. 식품가공산업내에서 이 두 산업이 전체 식품가공산업 고용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유가공산업이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9%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

만 종업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4%로 매우 낮다. 이는 유가공업이 장치산업으로서 종업원 1인당 생산액이 250백만원은 식품가공업 평균 135백만원에 비하여 85% 정도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이같은 경향은 대표적인 장치산업인 음료품산업과 식용유지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음료품 산업과 식용유지산업의 종업원 1인당 생산액은 각각 245백만원과 274백만 원에 달하고 있다.

<표 1-2-27> 식품가공업 부문별 종업원수

(단위: 명)

부 문 별	1980	1985	1990	1993	1996
제 조 업	2,014,751	2,437,997	3,019,816	2,885,349	2,897,672
음·식료품	160,839	171,181	197,672	188,707	189,423
식 료 품	131,565	149,745	172,920	169,245	168,853
육 가 공	4,218	5,719	11,441	16,217	19,965
유 가 공	10,608	9,434	10,240	13,638	14,077
수산가공	28,557	45,947	53,139	47,657	41,623
과채가공	7,346	7,620	8,754	11,076	10,746
곡물가공	14,734	10,975	10,360	10,507	11,726
식용유지	4,652	4,747	4,857	2,735	2,595
빵·과자·국수	41,552	41,611	45,633	44,368	40,560
식품첨가물	2,119	7,575	9,979	8,633	10,692
기타식료품	17,716	22,236	18,517	14,414	16,869
음 료 품	29,274	27,436	24,752	19,462	20,570
알콜성음료	20,473	17,035	12,792	11,300	10,027
비알콜성음료	8,801	10,401	11,960	8,162	10,543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가공업과 서기관 이능완)

제 3 절 농림산물 교역 동향

1. 농림산물 수출입 동향

가. 수출 동향

1997년에 농림산물 수출액은 1,847백만달러로 국가전체 수출액 136,164백만달러의 1.4%를 차지하였으며, 전년 1,829백만달러 대비 1.0%가 증가하였다. 수출품구성내역을 살펴보면 농산물이 1,190백만달러(65%), 축산물이 318백만달러(17%), 임산물이 339백만달러(18%)을 기록하였다.

<표 1-2-28> 농림산물 수출 동향

(단위 : 백만달러, %)

	'90	'93	'94	'95	'96	'97	전년대비 증가율
총 수출	65,016	82,236	96,013	125,058	129,715	136,164	5.0
농림산물	1,405	1,263	1,463	1,747	1,829	1,847	1.0
농축산물	795	810	952	1,243	1,424	1,508	5.9
임산물	610	453	511	504	405	339	△16.3

자료 : 농림부 국제농업국

농림산물 수출액은 '96년에 비해 1.0% 증가하였으나, 주 수출시장인 일본의 경기침체, 동남아 외환위기 등 해외시장여건과 국내시설 재배면적 감소 등 국내생산여건의 악화로 인하여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주요품목별 수출 동향을 보면, 농축산물은 돼지고기, 김치, 화훼류 가공식품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인 반면, 사과, 배, 인삼류 등의 수출은 감소하였다. 임산물은 밤, 버섯류, 화강암 등 값싼 중국산 제품의 대일 수출증대와 환경문제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주요 국가별 수출동향을 살펴보면, 대일본 수출이 812백만불로 전체 농림산물 수출액의 44%를 차지하였고, 대러시아연방의 수출액은 318백만불

로 17%를 차지하였으며, 대중국의 수출액은 304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무역진흥과 사무관 윤동진, 조일호)

나. 수입 동향

농림산물 수입액은 10,203백만달러로 국가전체 수입액 144,610백만달러의 7.1%를 차지하여, 전년 10,940백만달러 대비 6.7%가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농림산물 수입이 감소한 원인은 '96년에 폭등하였던 곡물가격이 '97년 들어 생산과 재고가 늘어난데 힘입어 안정화추세를 보인데 기인하였다.

주요품목별로 '97년 수입동향을 보면 농림산물 총 수입액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농축산물 가운데 옥수수 1,254백만불, 밀 594백만불, 쇠고기 481백만불, 대두 515백만불, 사탕수수당 420백만불이 수입되었다. 국내 자원개발이 어려운 목재의 수입은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원목, 제재목, 건축용 목제품 등의 수입이 감소하였다

<표 1-2-29>

농림산물 수입 동향

(단위 : 백만달러, %)

	'90	'93	'94	'95	'96	'97	전년대비 증감율
총 수입	69,844	83,800	102,348	135,119	150,339	144,616	△3.8
농림산물	5,419	7,269	7,989	9,677	10,940	10,203	△6.7
농축산물	3,754	4,571	5,426	6,899	8,152	7,619	△6.5
임산물	1,665	2,698	2,563	2,778	2,788	2,584	△7.3

자료 : 농림부 국제농업국

주요 국가별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으로부터 수입액이 3,041백만불로 전체 농림산물 수입액의 30%를 차지하였고, 중국이 1,280백만불로 12.5%, 호주 695백만불로 6.8%를 차지하였다.

(무역진흥과 사무관 윤동진, 조일호)

2. 농림산물 남북교역 동향

가. 농림산물 교역규모

'97년도 농림산물 남북교역 규모는 통관기준으로 18.1백만불로 24% 증가하였고, 국가전체 통관액 308백만불의 5.9%를 차지하였다. 특히,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동포를 돕기 위하여, 밀가루 9,905톤과 분유 278톤을 반출하였다.

<표 1-2-30>

교역 동향 총괄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통 관 실 적		
	'96	'97	증 감 률
전 체	252.0	308.3	22.3
농 립 산 물	14.6	18.1	24.0

자료 : 농림부 국제농업국

나. 농림산물 교역동향

(1) 반출입 통관실적 총괄

반출입 통관실적을 살펴보면, 반출은 774만불로 전년의 257만불보다 202% 증가하였으며, 반입은 1,040만불로 전년의 1,200만불보다 14% 감소하였다. 반출에서 농산물은 724만불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한산 반입에 따른 물물교환 형식이 그 주종을 이루고 있다. 반입농산물은 316만불로, 농림산물 전체 물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표 1-2-31>

반출입 통관실적

(단위 : 천달러)

		'96	'97	증감률(%)
반 출	계	2,567	7,744	201.7
	농 산 물	2,544	7,241	184.7
	입 산 물	23	503	2,087.0
반 입	계	12,055	10,402	△13.7
	농 산 물	8,429	3,162	△62.5
	입 산 물	3,626	7,240	99.7

자료 : 농림부 국제농업국

(2) 주요 품목별 반출입 통관실적

농림산물 반출 총품목수는 8개 품목으로 전년도 9개 품목에 비해 1개 품목이 감소하였으며, 이중 농산물은 밀가루, 분유, 식용유 등 7개 품목이고, 입산물은 펄프가 금년도 신규로 반출되었다.

<표 1-2-32>

주요 품목별 반출 실적

(단위 : 천달러)

구 분	주 요 품 목	년도별 반출실적		
		'96	'97	증가율(%)
농 산 물	밀 가 루	809	3,208	296.5
	분 유	1,415	2,081	47.1
	기 타	320	1,952	510
	소 계	2,544	7,241	184.6
입 산 물	펄 프	-	503	-
	고 사 리	5	-	-
	솔 앞 기 림	18	-	-
	소 계	23	503	2,086.9
농림산물 계		2,567	7,744	201.7

자료 : 농림부 국제농업국

한편 농림산물 총 반입품목은 14개로 농산물이 4개, 임산물이 10개 품목으로서 '96년보다 9개 품목이 감소되었다. 반입 농산물은 대부분 한약재로서 반입 농산물 316만달러중 한약재가 257만달러로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산물은 전년 대비 100%가 늘어난 724만달러로 버섯류 268만달러, 호두 164만달러, 소나무꽃가루 163만달러가 반입되었다.

<표 1-2-33>

주요 품목별 반입실적

(단위 : 천달러)

구분	주요 품목	년도별 반입실적		
		'96	'97	증가율(%)
농산물	팥	1,701	63	△96.3
	메밀	434	-	
	참깨	423	-	
	들깨	928	463	△50.1
	한약재	2,614	2,572	△1.6
	기타	2,329	64	△97.3
	소계	8,429	3,162	△62.5
임산물	호두	866	1,637	89.0
	버섯류	752	2,679	256.3
	고사리	666	662	△0.6
	소나무꽃가루	800	1,629	103.6
	더덕	430	206	△52.1
	기타	112	427	281.3
		소계	3,626	7,240
농림산물 계		12,055	10,402	△13.8

자료 : 농림부 국제농업국

(무역진흥과 농업사무관 조일호)

제 3 장 국제농업 동향

제 1 절 국제곡물 수급과 가격동향

1. 국제곡물 수급 동향

가. 생 산

1997/98년 세계곡물 총생산량은, 엘니뇨 영향으로 일부 국가의 곡물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당초 예상보다 감소폭이 크지 않고, 주요 생산국의 밀과 콩 생산이 크게 늘어나서 전년보다 2.0% 증가한 2,042백만톤으로 추정되었다. 최근 곡물생산이 회복됨에 따라 기말 재고율은 '96/'97년도의 15.1%에서 금년에는 16.5%로 회복될 전망으로, 이는 FAO적정재고 17~18%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세계 밀 생산량은 미국, 러시아와 주요 수입국 중 중국, 동유럽 등의 대폭적인 생산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4.7% 늘어난 609.8백만톤으로 전망되었다. 쌀 생산은 필리핀·버마·방글라데시 등에서 기상악화와 재배면적 감소로 부진한 반면, 미국·태국·인도 등 주요 생산국에서 증가하여 전년보다 0.4% 증가한 381.4백만톤으로 전망되었다.

옥수수 생산량은 세계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에서 전년 대비 약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주요 생산국의 재배면적 감소와 기상악화로 전년보다 0.9% 감소한 585.8백만톤으로 예상된다. 콩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주요 생산국의 재배면적 증가와 작황호조로 전년 대비 15.7% 증가한 152.2백만톤으로 전망되었다.

나. 소비

곡물 소비량은 쌀, 밀, 콩 등과 사료용 옥수수과 잡곡류를 중심으로 늘어나 전년보다 1.7% 증가한 2,007.3백만톤으로 예상된다. 특히, 밀, 잡곡류 등 사료소비는 693.3백만톤으로 전년보다 2.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교역

곡물 교역량은 쌀, 콩 등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전체 곡물 교역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밀·옥수수 등은 감소하여, 전년대비 1.1% 감소한 277.3백만톤으로 전망된다.

라. 기말재고

1996/97의 경우 주요 곡물생산 국가의 옥수수 등 잡곡류에 대한 급격한 생산감소로 기말 재고율이 14%에 불과하였다. '97/'98년에는 생산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34.9백만톤 증가한 332.2백만톤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말 재고율도 16.5%에 이를 전망이다.

<표 1-3-1> 세계 곡물 기말재고 상황

(단위 : 백만톤)

	전체곡물		쌀		밀		옥수수		콩	
	전년비	%	전년비	%	전년비	%	전년비	%	전년비	%
생산량	2,042.2	2.0	381.4	0.4	609.8	4.7	585.8	△0.9	152.2	15.7
소비량	2,007.3	1.7	379.3	0.5	585.2	1.3	591.3	3.5	145.6	6.7
교역량	277.3	△1.1	21.6	6.9	114.9	△2.4	70.0	△3.3	39.1	6.8
기말재고	332.2	11.7	54.0	5.0	134.8	22.4	80.5	△6.3	19.6	50.8
재고율(%)	16.5		14.2		23.0		13.6		13.5	

자료 : USDA '98.4.11 발표자료 근거

<표 1-3-2>

세계 곡물 수급 상황

(단위 : 백만톤, %)

		'95/'96	'96/'97(A) (감정)	'97/'98(B) (전망)	증△감 (B-A/A)
전체곡물	생 산	1,835.6	2,002.0	2,042.2	2.0
	소 비	1,895.3	1,972.9	2,007.3	1.7
	수 출	275.6	280.5	277.3	△1.1
	기말재고	268.0	297.3	332.2	11.7
쌀	생 산	371.2	379.9	381.4	0.4
	소 비	371.1	377.4	379.3	0.5
	수 출	20.2	20.2	21.6	6.9
	기말재고	49.4	51.9	54.0	4.0
밀	생 산	537.5	582.4	609.8	4.7
	소 비	550.3	577.6	585.2	1.3
	수 출	114.2	117.7	114.9	△2.4
	기말재고	105.3	110.1	134.8	22.4
옥수수	생 산	515.5	591.4	585.8	△0.9
	소 비	543.8	571.3	591.3	3.5
	수 출	78.2	72.4	70.0	△3.3
	기말재고	65.8	85.9	80.5	△6.3
콩	생 산	125.0	131.6	152.2	15.7
	소 비	131.4	136.4	145.6	6.7
	수 출	32.0	36.6	39.1	6.8
	기말재고	17.6	13.0	19.6	50.8

주 : 1. 전체곡물은 밀, 옥수수, 쌀, 콩과 잡곡(보리, 호밀, 귀리, 수수 등)을 포함한 수치임.

2. 중·단립종 쌀 생산량은 세계 쌀 생산량의 10%, 교역량은 세계 쌀 교역량의 10%로 추정됨.

자료 : USDA '98. 4 발표자료 근거

2. 국제곡물 가격 동향

과거 2~3년간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감소로 국제곡물 가격은 크게 상승했으나, 1997/98년에 생산이 늘어나고 아시아지역의 금융위기가 곡물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 옥수수, 밀, 쌀, 콩 등 대부분의 곡물 가격이 전년동기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다.

밀 가격은 전년보다 25.6% 내린 톤당 122달러, 옥수수 가격은 13.2% 내린 톤당 10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쌀도 미국 캘리포니아산 중립종 1등급품 가격이 전년보다 5.3% 내린 톤당 39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표 1-3-3> 국제 곡물가격 동향

(단위 : 달러/톤, FOB, 현물가격, %)

	'93	'94	'95	'96	'97		'98		전년대비 (%)
					5월	평균	4월	5월	
밀	140	146	174	188	164	153	126	122	△25.6
옥수수	102	106	119	159	121	118	108	105	△13.2
콩	240	240	235	288	331	292	246	247	△25.4
미국쌀	394	499	418	468	419	421	397	397	△5.3

주 : (밀) US. Portland, White Wheat 1등급품가격, (옥수수·콩) US. Gulf 2등급품 가격
(미국쌀) US. California, Medium 1등급품가격

자료 : USDA '98. 4 발표자료 근거

(식량정책과 사무관 최상영)

제 2 절 주요국가의 농업동향 및 양국간 통상협력

1. 주요국가의 농업동향

가. 미 국

미국은 선진산업국가인 동시에 세계 최대의 농업국가이다. 약 4억ha에 이르는 농경지(초지포함)에서 미국 총인구의 1.9%에 해당하는 약 5백만명이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다. 농업경영은 주로 가족농이 중심이고, 회사형

태의 기업농도 많이 있다. 1997년 현재 전국의 가족농과 기업농을 합쳐 농업경영단위가 되는 농장수는 2,058천호(연간 농산물 천달러이상 판매농가 기준)로서 총가구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농장당 농경지면적은 190ha수준이며, 농장수의 감소에 따라 농장당 농경지 면적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미국은 연간 3억 3천만 톤에 이르는 곡물(밀, 쌀, 옥수수 등 사료곡물)과 7천 5백만톤의 유지작물(대두 등)을 생산하여 세계 주요 식량공급처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과채류와 축산물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양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1997년도 미국의 농산물 수출액은 572억달러로서 총 수출액의 8.9%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비중은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 농산물 수출액을 보면 대두, 옥수수, 밀, 쇠고기, 채소, 과일 등의 순이며, 국가별로는 일본이 미국 농산물의 가장 큰 수출시장이고, 다음으로 캐나다, 멕시코, 한국, 대만 순이다. 미국은 농산물을 많이 수출하지만 동시에 수입도 많이 하고 있다. 농산물 수입액은 1997년에 363억달러로 농산물 수출액의 63% 수준이다. 농산물 수입액은 절대금액이 약간씩 증가하고 있으나, 총 수입에 대한 비율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1997년에 총 수입에 대한 농산물 수입의 비중은 4.2%였다. 한편, 미국의 농업정책은 기존의 공급관리형에서 시장 지향형으로 전환되었다. 이전에는 농업생산력 증대로 인한 만성적인 과잉생산압력을 식부면적 감축계획(ARP: Acreage Reduction Program)과 휴경제도(Set-aside)등 직접적인 수단을 통해 해소하는 동시에 상품신용공사(CCC)의 9개월간 비상환 용자, 3년기한의 농가보유 비축제도(FOR: Farmers Owned Reserve)를 통해 시장출하 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예방해 왔었다. 그러나, 1996년 농업법에서 ARP와 휴경제도를 폐지하고 FOR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또한 작물의 특징적인 식부기준면적도 사실상 총 기준면적의 개념으로 대체됨에 따라 채소와 과일을 제외한 어떤 작물도 식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업정책의 핵심을 이루었던 목표가격과 그에 근거한 부족분 지불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소득지지가 생산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완전한 디커플링(decoupling flexibility contracts payment)로

대체 하였다. 즉 생산면적, 생산량 및 시장가격과 관계없이 농민에게 매년 고정된 정부지불금이 7년 동안 지급되게 됨으로써 농민소득 지지에서 정부의 역할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미국은 신흥민주주의 국가(Emerging Democracies)에 대한 수출, 특히 가공농산물 및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수출비중 증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세계시장에서 수출농산물의 구성도가 변화하고 있고, 또한 UR타결과 그에 따른 소득과 수요증가에 대응한 미국의 농산물 수출정책의 질적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통상협력과 김대근 사무관)

<표 1-3-4> 미국 농업주요지표

	단 위	'97		단 위	'97
○ 농가호수	천 호	2,058	○ 밀 생산량	천톤	68,761
- 총 가구대비	%	2.1	○ 옥수수 생산량	"	237,896
○ GDP대비 농업비중	%	1.2	○ 수수 생산량	"	16,589
○ 농경지 면적	천ha	391,867	○ 벼 생산량	"	8,114
- 호당경지면적	ha	190.4	○ 대두 생산량	"	74,223
○ 농외소득율	%	84.3	○ 농산물 수출	백만\$	57,245
○ 곡물자급도	%	139.6	- 총 수출대비	%	8.9
○ 1인당 쌀소비량	kg/년	8.5	○ 농산물 수입	백만\$	36,289
○ 1인당 육류소비량	"	80.3	- 총 수입대비	%	4.2

- 자료) 1. USDA, Agricultural Statistics('95~'98)
 2. USDA, Agricultural Outlook('98. 7)
 3. 농경지면적에는 휴경면적, 초지면적 포함, 곡물자급도=식용+사료용
 4. 농외소득율, 곡물자급도, 1인당 쌀 및 육류소비량은 '96실적임.

나. 중 국

(1) 농업경제동향

1997년 중국의 농업은 대체로 양호한 발전추세를 보였다. 식량 생산량이 1996년보다 2.4% 감소된 4억 9,250만톤에 이르렀는데 하곡, 조생벼 생산량이 1억 7,240만톤으로서 1996년에 비해 154만톤이 증산된 반면 추곡은 약간 감소되었는데, 특히 옥수수 생산량이 1억 1,000만톤으로서 전년에 비해 14%나 감소되었다. 채소생산량은 3억 1,300만톤, 육류는 5,354만톤 알류는 2,100만톤, 우유는 810만톤, 수산물은 3,651만톤, 수산물은 5,045만톤으로서 1996년에 비해 대부분 10%이상 증산되었다. 이로 인하여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일반 소매시장에서 쌀은 2.30RMB/kg으로서 하반기 상승추세, 대두가격은 3.20RMB로서 하반기 상승추세를 보여 식량가격은 전반적으로 전반기에는 국제시장 가격보다 낮고 후반기에는 높은 추세를 보여줬다.

중국 농산물 수출입 총액은 247억달러로서 1996년에 비해 0.6% 줄었다. 수출총액은 146억달러로 5.2% 늘어난 반면 수입총액은 102억달러로 7.9% 감소되었다. 중국은 몇 년간 식량을 수입해 오다가 1997년에 순수출국으로 전환되었다. 수출은 859만톤으로 1996년에 비해 4.8배 늘고 수입은 705만톤으로 41.4% 감소되어 순수출량이 154만톤이나 되었다. 곡종별로 보면 밀은 순수입량이 186만톤으로서 77.4% 감소되었고 쌀 순수출량은 62만톤, 옥수수 순수출량은 661만톤이었다. 다만 대두는 수입이 크게 늘어나 261만톤으로서 사상 최고 기록을 나타냈다.

농민 1인당 순수입은 2,090RMB로서 1996년에 비해 8.5%가 늘어났고, 가격요소를 제외할 경우 4.6%가 늘어났다. 현금 순수입은 1996년에 비해 185RMB가 늘어난 1,404RMB로서 총수입액의 67%를 차지했다. 1996년에 비해 증가폭이 감소된 것은 농산물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 또는 하락추세를 보여 인플레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였고 특히 재배업 수입이 명목가격으로 2% 증가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순수입의 구조가 재배업보다

축산업 등 다른 분야의 비중이 늘어나고 비농산업의 성장추세가 여전히 강하였고, 동·중·서부간 지역격차도 점차 축소되는 현상을 나타냈다.

(2) 주요 농업 및 농촌경제 정책

중국은 농업과 농촌의 경제발전을 위해 「9.5계획 및 2010년 장기목표 건의」에 따라 양·면·유 등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 증산을 이루고 농민 순수입을 보다 많이 늘려나가 농민생활을 보다 부유하게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농촌경제체제와 농업성장 방식을 개혁하여 농업의 집약화, 농촌의 공업화, 농촌경제의 시장화 등 발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 주요 정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 식량자급율을 95% 이상으로 늘리고 순수입량을 국제소비량의 5%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아래 1인당 식량생산량을 400kg 정도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간농지의 확대, 경지전용 억제, 경지이용율 제고를 통해 파종면적을 최대한 늘리고, 종자개량, 비료시비, 병충해방제 등 선진농업기술을 널리 보급하는 한편 기술훈련을 확대하여 농업기술 성과를 제고하여 단위당 생산량을 늘려나가는 동시에 식량유통체제 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농민의 재배의욕을 늘려나간다.

둘째 : 농업생산, 유통, 가공을 하나로 연결하는 농업 산업화경영을 통해 농업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농업의 종합효율을 늘려나가고, 농촌 유희노동력을 활용하여 현대농업의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한다. 이를 위해 주도산업의 확립 및 육성, 생산·유통·가공 일체화경영의 추진, 농산물 시장의 개척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셋째 : 향진기업의 구조조정 등 적극적 개혁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 농업의 소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한다.

넷째 : 농업집약화 수준을 높여나간다. 선진 농업기술의 도입 및 확대 보급을 통해 기술성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농민들에 대한 응용교육을 적극 시행한다.

다섯째 : 농촌 유희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단일 농업경제를 농·림·목·

어업 등 종합농업으로 발전시키고 농업생산 서비스체계를 확립하고 농전수리기본 건설을 촉구하여 유희노동력을 흡수하고, 향진기업의 발전을 촉진하여 농업의 공업화 및 소도시 건설을 이루어 농촌지역의 2차, 3차산업 종사요원을 늘려나간다.

(통상협력과 사무관 이상진)

다. 일 본

(1) 농업경제 동향

1996년 일본의 농업생산은 쌀을 비롯해서 과일, 육용우, 돼지 등의 생산 감소로 전년보다 2.0% 감소하였다. 농업 총생산액은 10조 2,489억엔으로 전년대비 1.9% 감소하였으며, 농업생산소득은 전년대비 4.6% 줄어든 4조 4,138억엔이었다. 1996년 농산물 가격지수는 0.5% 하락하였고, 1997년에는 6.0% 떨어졌는데 반해 1996년 농업생산자재 가격지수는 2.2% 상승하였고, 1997년에는 7.8% 하락한 데에 따른 것이다. 1996년도 농업 취업인구는 전년보다 1.8% 감소한 321만명이었다. 농가 총 호수는 1997년에 3,344천호로서 최근 5년간에 10.6% 감소하였으며 이중 판매농가는 2,568천호로 5년간 11.1% 감소하였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농축산물은 가격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일본의 수입의존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식육, 신선채소, 과일가공품 등의 수입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1997년 일본의 농림수산물 수입액은 국내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0.6% 증가한 8조 3,337억엔이며, 국가 총 수입액에서 점하는 비율은 20.3%로 전년(21.8%)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수출액은 2,791억엔으로 전년대비 19.8% 증가를 나타냈는데 이는 엔화가치 하락을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일본은 세계 최대의 농림수산물 수입국 자리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는 농림수산물은 1997년 2,169억엔으로 총 농림수산물 수입액중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주요 수입대상국 중에서 9번째 나라로 되어 있다.

1997년도 쌀 MMA 544천톤(현미·정미 실물기준)이 미국, 태국, 호주, 중

국, 베트남 등에서 도입되었다. 수입방식별로는 SBS 55천톤, 일반수입 489천톤이었는데 일반수입에서는 수입계획 물량을 사전에 정해서 입찰을 시행함으로써 값이 비교적 비싼 미국산 쌀이 50%수준 입찰되는 결과를 나타낸 것이 특징이었다.

(2) 신농업기본법 제정 추진

일본은 1961년 농업기본법 제정 이후 농지정책, 농업생산기반정책, 농촌정비 등을 통해 농업구조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현행 농업기본법은 제정된 지 37년이 경과하여 농업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현실에 맞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농림수산성은 새로운 기본법 제정을 위해 1994년 10월 『UR 농업합의관련 대책대장』에서 새로운 농업기본법 제정을 착수하기로 하고, 1995년 10월 농림수산성 대신의 사적 연구회로서 「농업기본법에 관한 연구회」가 발족되어 1996년 10월에 농업 신기본법 검토를 위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정부가 식품 소비자 입장을 고려하여 소비자를 중시하고, 농업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구하여 농업과 농촌을 국민과 좀더 가깝게 연결시키는 것이 농업발전의 조건이 됨을 강조한다. 따라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 솔직한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를 깊게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농업 종사자 문제에 대해서는 농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널리 모집하여 기술경영 연수 및 농업조건 정비실태, 즉 마을영농, 농업서비스 사업체 등에 대해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일본정부는 이 보고서를 기초로 총리대신 산하에 각계 대표로 구성된 「식량·농업·농촌 기본문제조사회」를 2년 한시기관으로 설치('97.4)하고, 본격적으로 작업을 진행하여 1997년 12월 중간보고서를 정리하였고, 1998년 8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지금까지 가장 큰 쟁점사항은 국내 농업생산위치 정립, 자급율 목표 설정, 주식회사의 농지취득, 중산간지역에 대한 직접소득보상에 관한 문제이다.

(통상협력과 사무관 이상진)

라. EU

(1) 농업경제동향

EU 15개 회원국의 경지면적은 136백만ha, 농가수 781만호, 호당경지면적 16.4ha, 농림어업 종사자수는 약 786만명이며 농업총생산액은 2,074억 ECU 정도이다. 농산물 생산액은 우유생산이 1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돼지고기 11.5%, 쇠고기 11.1%, 곡물류 9.2%, 신선채소 8.7%, 와인 5.8%, 가금육 및 신선과일이 각각 4.3% 순으로 되어 있다. 프랑스와 그리스 등은 곡물생산 비중이 높고 이태리, 스페인 등 지중해 연안 국가들은 주로 과채류를 생산하고 독일, 아일랜드, 덴마크 등은 축산물을 많이 생산한다. EU 전체로 볼 때 농림어업종사자가 전체 고용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인데 영국(2.1%), 벨기에(2.7%), 스웨덴(3.0%) 등은 그 비중이 낮은 반면 그리스(20.4%), 아일랜드(11.1%), 포르투갈(11.5%) 등은 높은 편이다. EU 농업생산액은 전체 GDP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인데 스웨덴(0.4%), 독일(0.8%), 네델란드(0.9%) 등 낮은 국가와 그리스(7.3%), 아일랜드(4.8%) 등 비교적 높은 국가가 혼재되어 있다.

EU의 농업생산은 공동농업정책추진, 가맹국확대, 기술변화에 의한 단수증가 등으로 인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EU 농산물이 세계 농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맥 16.2%, 설탕 14.0%, 쇠고기 14.4 돼지고기 20.3%, 탈지분유 36.8%, 치즈 41.3%, 버터 26.4%, 전지분유 43.7%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EU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공급증가가 수요확대를 상회하고 있어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과잉공급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주요 농산물의 자급율(1993/1994)을 보면 곡물전체는 125%(쌀 제외), 밀 141%, 보리 122%, 옥수수 108%, 육류 105%, 전지분유 211%, 탈지분유 122% 등으로 밀을 비롯한 곡물과 낙농제품의 과잉현상이 심한 편이다.

EU 역내 교역을 제외한 전체 역외 수출입액중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이 8.2%이며 수입이 11.8%이다. 농산물 역외 수출의 주요 대상국은 미국(11.2%), 일본(7.4%), 스위스(6.9%), 러시아(7.8%) 등이며 최근에는

일본이외 러시아, 체코, 헝가리 등 동구권으로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은 음료를 비롯하여 곡물, 과채류, 육류 등의 비중이 크며, 농산물 역외 수입의 주요 대상국은 미국(13.6%)이 으뜸으로 높고 그 외 브라질(7.4%), 아르헨티나(4.6%) 등으로서 주로 과채류, 목재, 동물사료, 수산물 및 커피 등이 수입되고 있다. EU의 농산물 교역은 역내 무역이 역외 무역에 비하여 비중이 크며 역내 무역 증가율이 역외 무역 증가율 보다 높다. 농산물 무역적자는 1995년도 현재 177억 ECU를 나타내고 있다.

<표 1-3-5> EU 농업의 주요 지표(1995)

국 가 (15개국)	농림어업 종 사 자 (천명)	농 업 총 생 산 액 (백만ECU)	식량자급률 (%)	농 산 물 무역수지 (백만ECU)	농산물 비중(%)		
					수 출	수 입	가계비 ¹⁾
벨 기 에	102	6,771	55	△24	11.9	12.9	17.3
덴 마 크	114	6,908	128	5,132	28.1	15.8	20.7
독 일	1,197	32,567	112	△16,904	5.7	11.5	15.0
그 리 스	780	8,497	93	△670	33.1	17.9	36.4
스 페 인	1,119	23,353	89	△167	15.8	15.6	20.0
프 랑 스	1,080	45,579	204	8,082	14.5	11.4	18.3
아일 랜드	140	4,381	87	4,426	20.3	9.8	34.8
이 태 리	1,489	31,223	82	△11,303	7.1	15.3	20.1
룩셈부르크	6	197	-	△24	11.9	12.9	18.2
네덜란드	243	17,112	30	12,820	22.8	15.1	14.6
포르투갈	507	3,490	-	△2,681	8.3	16.5	32.1
영 국	533	18,231	104	△9,987	7.3	11.4	20.7
스웨덴	123	2,219	125	△362	5.8	7.9	19.9
핀란드	156	3,165	133	488	7.8	8.6	23.2
오스트리아	267	3,704	110	△1,281	6.5	8.2	19.1
전 체	7,857	207,397	-	△17,710	8.2	11.8	19.7

註 ¹⁾은 '92년 자료임

자료: European Commission, " The Agricultural Situation in the European Union", 1996

(2) 공동농업정책(CAP) 개혁

EU는 곡물, 육류 등의 지속적인 과잉생산에 따른 재고 해소와, EU예산 중 농업부문의 효율적 사용, UR협상 타결에 따른 수출 보조감소에 대비한 전반적인 정책의 조정 필요성에 따라 1992년 5월 CAP 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1992년 CAP 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지지가격(Intervention Price)을 큰 폭으로 인하하고 그에 따른 소득손실분은 휴경을 전제로 한 직접 소득보상제를 실시한다는 점이다. EU는 1992 개혁을 통해 종래 가격지지 위주에서 직접 소득보상제를 병행하여 농업지지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1992 CAP 개혁의 목표는 지지가격을 30% 낮추고 휴경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생산 감축을 유도하여 농업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고, 지지가격을 인하하여 사료용 농산물 등 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하여 농업경쟁력 제고와 수출확대를 달성하기 위함이었다. 또 다른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는 UR 농업협정의 원만한 이행을 위한 사전적인 정책조정에 있었다. 새로운 농업 보호장치의 도입을 제한하고 전체적인 지원 수준을 낮추도록 한 UR 협정의 테두리 속에서 지지가격의 인하에 따른 농민소득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당시 EU의 중요한 과제였다. EU는 이와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의 부족불제도(deficiency payment)와 유사한 보상지불제(compensatory payment)를 도입하여 UR 협상에서 허용대상 정책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지지가격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농민에 대한 소득지지 수준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

한편, '97.7 EU 집행위는 2000-2006년간의 EU 활동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개혁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Agenda 2000」을 발표하였는데 그 일부로 공동농업정책의 개혁방안도 제시하였다.

「Agenda 2000」에서 나타난 CAP 개혁방안은 미국의 '96년 농업법 제정으로 부족분 지불제도 폐지에 따른 2000년의 차기 WTO 농산물 협상대응,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요구, 국제 경쟁의 가속화에 따른 열악한 경제환경에 처해있는 집단에 대한 사회적 책임문제 해결과 같은 대외적 변화에 능동적

으로 대처하고, 한편으로는 동구권 국가를 EU에 포함시키는 EU 확대문제, 정부의 재정부담증가에 따른 농민들을 시장경제에 적응시켜야 하는 문제와 같은 내부적 도전에 대응할 필요성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CAP개혁의 주요 목표는 EU의 농산물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차기 WTO농산물 협상과 EU의 확대에 대비하여 농산물 지지가격을 10~30% 감축하되 직접지불을 확대하며 농촌개발을 위한 지원을 효율화하는데 두고있다.

「Agenda 2000」에 포함된 CAP의 주요개혁방안으로는

첫째, 과잉 생산이 우려되는 곡물, 쇠고기 및 낙농분야의 지지가격을 축소하고 WTO에서 허용된 직접지불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곡물분야에 있어서는 지지가격(Intervention price)은 2000년까지 20% 감축하고 소득 손실보상금을 상향지급하며 직접지불을 조건으로 실시하는 휴경비율을 제도상 17.5%(현재적용 5%)에서 0%로 설정하고 신축적으로 운영하며 쇠고기분야는 BSE과동 등에 따른 공급통제로 제고가 낮아지고 있으나 2005년까지 제고가 늘어날 전망되므로 지지가격을 2000년부터 3년간 30%감축하고 손실보상금은 상향지급하며 낙농분야에 있어서는 지지가격을 2005년까지 10% 감축하고 현행쿼타는 2005년까지 유지하여 급격하게 생산쿼타제도를 폐지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둘째, 농촌개발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현재 낙후지역개발, 사양산업의 지원, 장기실업극복지원, 취업상태개선지원, 농업구조조정 지속화 지원 등 7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 구조조정기금을 낙후지역개발, 사양산업 지원 등 3개 분야로 축소하여 낙후지역개발을 중점지원하고 농업분야기금(EAGGF : 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중 조기 은퇴, 환경농업 및 조림정책분야를 구조조정기금 중 농촌개발부분 기금을 흡수·통합하여 비농업부분까지 광범위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동구권확대와 관련하여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등 6개국을 1차 가입대상국으로 하여 '98년이후 협상을 시작하여 2001/2004년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1998년 3월 18일 EU 집행위는 EU집행위원 전체회의에서 CAP개혁을 포

합한 4개 분야에 대한 패키지 제안을 통과시킴으로서 'Agenda 2000'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동 조치의 규범화를 위한 작업을 상당히 진전 시키고있다. 그러나, 동 제안들은 EU 회원국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들이어서 각 회원국들은 집행위의 작업과정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여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회원국들간의 타협과 조정이 예상되며, 특히 공동농업 정책의 개혁에 대해서는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어 패키지 제안은 본래의 제안보다 크게 변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통상협력과 사무관 김대근)

2. 양국간 통상협력

1997년은 WTO 출범 2년째 되는 해로서 UR협상이후 양국간의 농업통상현안은 주로 시장접근과 관련한 저율관세물량운용과 동·식물검역분야에서 발생하였고,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시장 점유율이 큰 기존교역국가와의 통상현안은 많이 해소된 반면 세계교역의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에 새로이 진출하려는 국가와의 통상현안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양자간의 현안 해결에 있어서 상대국의 제기사항 중 불합리하거나 오해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적극적인 설득을 통하여 해결하고, 국제기준이나 정신에 비추어 정당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제도 개선을 통해 통상마찰을 줄여 나가고 있다. 아울러, 상대국의 불합리한 무역관행에 대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양자협약에서 제기함으로써 우리농산물의 수출애로 해소와 함께 상대국의 개별제기현안에 대한 공세를 완화하도록 노력하였다.

미국은 단일국가로는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으로서 우리나라에 4번째로 많은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입 중 미국산이 3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1996년 농업법의 제정을 통하여 농업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무엇보다도 농산물 수출확대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를 수출확대 가능성이 큰 새로이 부상하는 시장

(Newly Emerging Market)으로 간주하고 수출관련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나, 최근에는 원칙보다는 실리형 접근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한·미간 통상현안은 주로 새로운 현안이 발생할 경우 실무협의를 통하여 사전확인 및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양국간의 마찰을 완화하도록 조기 경보체계와 유사한 통상무역 실무협의체와, 식물검역 전문가회의 등을 통한 전문가간의 협의채널을 운용해 오고 있다. 한·미간의 주요 농산물 통상현안은 주로 UR 협상에 따라 설정된 저율관세 시장접근물량 운용, 수입통관 과정에서 일어나는 동·식물검역 관련 현안이 대부분이다. 특히 1997년에는 수입 쇠고기에 대한 검역과정에서 O-157이 검출되어 축산물 위생검사가 주요현안이 되었다. 저율관세 시장접근과 관련하여서는 WTO협정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함을 적극 설명하고, 식물검역과 관련하여서는 SPS협정에 따른 검역병해충 개념도입 등 우리자체의 제도개선 계획에 따라 식물방역법 등을 개정하여 국제기준과 조화시킴으로써 대부분의 쟁점이 해소되었다. 한편, 새로이 발생한 O-157검사관련 문제는 검사 자체의 완벽성에 대해서는 미측도 충분히 인정하였으며, 미생물검사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양국의 식생활 습관의 소비에서 서로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시켜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축산물 위생검사업무가 우리 부로 이관됨에 따라 국제적인 기준과 관례 등을 고려 과학적이고 투명한 규정과 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

일본은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입국이며 우리 농산물의 가장 큰 수출시장이다. 우리와 농업여건이 비슷하고 농업분야에서 통상현안은 크게 발생하지 않아 양자간의 별도의 통상협의 채널은 운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농업통상분야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 APEC, WTO, OECD, FAO등 다자간 국제기구에서 상호 정보교류와 공조체제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양국간의 상호보완적 농업기술협력의 필요성으로 일찍부터 한·일 농업기술협력위원회를 통하여 농업기술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앞으로 WTO 차기농산물 협상등 다자간 국제기구에서의 공조를 강화하고 상호 정보교환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중국은 '92년 8월 한·중 수교이후에 농산물교역이 급격히 증가하여 왔으며 우리나라에 2번째로 많은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다. 양국의 통상현안협회는 매년 개최되는 한·중경제공동위원회와 한·중무역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측은 우리와의 전체무역적자 만회를 위해 농산물의 대한국 수출에 관심이 매우 크며 주로 가금육 등 육류의 수입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양국간의 농업의 상호보완적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96년 한·중 농업분야의 전반적인 교류협력강화를 위해 양국 농업부간 “한·중 농수산협력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1997년 11월 제2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양국 농업부간 다방면의 긴밀한 협력기틀이 마련되었다. 또한,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될 경우 경제규모나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각종 국제기구(APEC, WTO, FAO등)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양국 농업분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15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EU는 미국의 대 아시아 중시정책에 대한 견제세력으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시장을 중시하고 있으며, EU 집행위원회와 개별국가간의 현안협회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한·EU간의 현안 협회는 매년 개최되는 한·EU고위협의회와 동시에 개최되는 분야별 협의의 하나로 농업분야 전문가 협의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1997년도 한·EU간의 농업분야 주요 현안은 그 동안 지속되어온 동·식물 검역상의 수입허용 문제가 주류를 이루었다. 동·식물 검역과 관련하여 EU측은 개별국가 중에 가축질병이 없는 지역을 한데 묶어 질병 비발생을 인정해 주는 동물검역상의 권역화 원리(Principle of Regionalization)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우리측은 SPS협정 등에서 명시한 지역화개념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OIE 등 관련 국제기구에서 국제적으로 수용 가능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된 후에 검토해야 함을 강조하여 대응하여 왔다. 개별국가와의 검역 현안에 대해서는 관련 국제규정과 국내규정에 따라 관련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일부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우리측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수출국의 자료제출이 늦어지는데서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삼계탕의 대EU 수출촉진을 위하여 그 동안 위생측면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네델란드와 프랑스에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EU전지역으로 수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U집행위에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는 경제의 높은 대미의존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 아시아지역과의 경제 및 무역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입이 대부분 미국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어 캐나다를 차별한다는 인식하에 접근하고 있다. 캐나다와의 현안협이는 주로 1년에 2번씩 개최되는 한·캐나다 특별동반자관계작업반(SPWG: Special Partnership Working Group meeting)회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캐나다와의 농업분야 통상현안은 주로 캐나다의 대한민국 수출비중이 큰 알팔파, 유채유, 맥아, 사료용보리 등 농산물의 관세인하와 쿼타증량 요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 품목은 우리가 국내적으로 필요한 사료원료나 가공용 농산물이기 때문에 국내 수급사정, UR협상결과 등을 감안 운용하고 있음을 설명하여 큰 쟁점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우리 농산물의 수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사과, 배의 검역조치 등을 개선토록 요구하여 현재 캐나다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삼계탕의 수출문제도 검역전문가간의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캐나다와의 농업기술협력강화를 위해 '95년에 한·캐나다 농업협력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여 양국 농업연구기관간 협력과제를 발굴하여 상호보완적 농업기술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다.

호주는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입에 있어 제4위를 차지하고, 아시아 시장을 매우 중시하는 국가중 하나이며, 현안에 대한 접근방법이 미국을 배경으로 하여 전면에서 나서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호주와의 통상현안 협이는 매년 개최되는 한·호경제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통상현안은 호주산 과실류, 가금육 등의 수입허용과 관련한 동·식물검역 분야이다. 동·식물 검역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서는 국제기준 및 우리의 검역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며 타조고기 등 야생조수(Game Meat)의 고기는 우리의 전통적인 식생활 관습상 식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을 강조하여 대응하였다. 또한 한국산 배의 대호주 수출을 위해 양국의 검역 전문가간 협의를 통해 수출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는 등 큰 진전을 보았다.

(통상협력과 사무관 김대근)

제 3 절 농업관련 국제기구 관련활동

1. WTO 활동

세계무역기구(WTO)의 '97년도 활동중 가장 두드러진 사항은 차기 협상에 관한 논의의 개시였다. 그 동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차기 협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2000년 이전에 UR과 같은 포괄적 협상방식의 뉴라운드(New Round)출범에 대해 미국과 EU가 대립하고 있다.

EU는 새로운 포괄적인 뉴라운드(Millennium Round)를 주장하면서, 포괄적 협상방식은 분야별 협상방식에 비해 많은 국가의 참여가 가능하며, 약소국들의 관심사항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미국은 추가 무역자유화를 위해서 분야별 협상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며, 포괄적인 협상 논의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국내적으로 환경 및 노동분야의 비판증가와 신속협상권(Fast Track Authority : FTA)의 획득 실패로 포괄적인 협상방식보다는 분야별 협상방식이 더욱 신속하며 효율적이고, 논의대상을 미국 의도에 따라 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어, 이를 선호하고 있다.

포괄적인 뉴라운드(New Round) 논의와 별도로 농업부문 추가 협상문제는 현행 농업협정 20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이행기간 만료 1년전'에 협상을 하게 되어 있다. '96년 싱가포르 WTO 각료회의 준비 단계부터 케언즈 그룹을 중심으로 농업분야 후속 협상관련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EU, 일본 등은 이러한 후속협상 공론화 주장에 대해 시기상조

등의 이유를 들어, 강한 반대입장을 견지하여 이를 관철하였다. 각국의 UR 이행에 관련한 '분석 및 정보교환(Analysis and Information Exchange : AIE)' 작업은 '97년부터 WTO 농업위원회의 비공식회의를 통해 농업분야 차기 협상과제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논의초기에는 UR 협상 결과의 이행 평가 중심으로 진행되다가 점차 차기 농산물 협상과제에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차기 협상과 관련하여 주요국의 동향을 보면, 미국은 차기협상을 대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농업부문의 정부보호를 과감하게 줄이고 시장경제 원리의 확대 도입한 새로운 농업법 마련하여 가격지지제도(부족불지불제도)를 철폐하였다. 또한 농가당 매년 고정 보조금을 지급하여 농가소득을 보장('96~2000년)하면서 생산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농산물 시장개방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최근 식품안전성 주장론자들은 미국에 새로운 식품 관련 질병을 가져온 것은 무역자유화의 증대에 따른 과채류 수입의 급증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무역협상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미행정부는 새로운 협상을 위한 신속협상권(FTA)을 의회로부터 획득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무역대표부(USTR)내에 농업실의 인력을 대폭 보장하고 농업담당 대사를 신설하여, 농업분야 협상력을 크게 확충하고 있다.

EU는 UR의 가시적인 성과가 재고 감소와 재정부담 감소를 통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회원국들의 UR결과에 대한 불만을 무마해 나가고 있으며, 새로운 협상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동안 재정부담 감축을 목표로 곡물생산 제한과 재고 감축 등에 치중한 결과, 기존의 EU곡물시장을 많이 상실하였다. 최근 EU집행위는 2000년 개혁방향(Agenda 2000)을 발표하였는데 이 가운데 공동농업정책의 개혁 방향이 제시되어있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알젠틴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당초부터 농업보조가 낮았기 때문에 추가 재정부담 없이 수출시장 확대이익을 누리고 있다. 농산물 수출시장 확대가 국내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문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WTO에서는 차기 협상

을 앞당기고 농업의 환경영향을 들어 보조금과 관세를 철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APEC에서는 농산물을 품목별 조기자유화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중이다.

일본은 국내 쌀 재고가 늘어나 고심중이며 차기 협상에서는 쌀 관세화 유예를 고수하고 MMA 물량도 줄이기 위한 의지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적으로 최근 관세화유예의 대가로 최소시장접근을 많이 허용함으로써 재고가 늘고 있다는 비판이 있고, 언론을 중심으로 차기 협상에서 쌀 관세화 유예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일본은 UR협상 결과 만들어진 현행 농업협정의 틀이 지나치게 수입규제 중심으로 되어 있어 불공평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식량수입 개도국들은 UR출범으로 인한 농산물 수입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WTO 차원의 식량원조, 특혜관세 등의 지원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교역질서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들이 장기 저리로 농산물을 팔아주고, 식량원조를 늘리며,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97년에는 WTO 농업위원회 공식·비공식회의를 통해, 각국의 UR 이행 결과를 점검하고, 차기 협상 준비를 위한 '분석 및 정보교환(AIE)' 작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공식회의는 각국이 제출한 UR 이행 결과 통보안을 기초로 회원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통보안을 제출하여 회원국들의 점검을 받은바 있다. 비공식회의를 통한 준비작업은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의제별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제로는, 관세쿼타 관리방안, 우회적 수출보조회피문제, 예외조항(green-box) 보조를 엄격히 하는 문제, 국영무역제도(수입국영무역, 수출국영무역)의 무역제한 효과, 생산제한과 관련된 직접지불제도(Blue box)의 재검토, 관세화에 따른 높은 관세의 문제점, 잔존 비관세 문제 등이다. 이러한 작업은 앞으로 후속 협상시 논의의 실질적 기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97년에 우리나라는 WTO가 발족된 이후, 농산물에서 처음으로 모조분유

의 수입증가를 이유로 산업피해 구제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모조분유는 탈지분유에 유장분말 또는 곡분을 섞은 유제품으로 '94년 이후 모조분유 수입 급증에 따라 국내 우유생산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여 축협중앙회가 무역위원회에 산업피해조사와 구제조치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이를 조사하여 산업피해판정과 산업피해구제조치를 건의함으로써 취해진 조치인데, WTO 규정에 합치하는 것이다. 무역위원회가 건의한 피해구제조치 내용은 앞으로 4년간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것이다.

- 15,595톤(초년도) → 16,483.9(2차년도) → 17,372.8,(3차년도) → 18,261.7(4차년도)

이에 대해 이해 당사국인 EU, 호주, 뉴질랜드와 사전협약('97.2.4~2.5, 제네바)를 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우리측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하였다.(1997년 3월 7일) 수입수량설정 기준년도는 '93. 7~'96. 6로 설정하였고, 물량은 당초 무역위원회가 건의한 내용보다 킬로그램을 증량하여 시행하였다.

<표 1-3-6> 긴급 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킬로그램

	'97. 3. 7~'98. 2	'98. 3~'99. 2	'99. 3~2000. 2	2000. 3~2001. 2
킬 타 량	20,251톤	21,691	22,927	24,234

자료 : 농림부 축산국

EU는 우리나라의 수입제한조치가 세이프가드(SG)협정과 GATT 제19조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였다.(1997년 8월 15일) 이와 관련하여 수차에 걸쳐 양자협의를 통해 EU집행위와 합의를 이루었으나, 네덜란드, 프랑스 등이 반대함에 따라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국제협력과 사무관 김종철)

2. OECD 활동

가. OECD 농업위원회 활동

우리나라는 '96년 12월 12일에 OECD 29번째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97년은 OECD 가입에 따른 성과를 최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정책의 주안이 두어졌던 한해였다. OECD 회의에 옵서버 자격에서 의제에 대해 자유롭게 공식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입장으로 바뀐에 따라, 과거에 비해 회의준비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게 되었고, 기초 농업통계 자료 제공 등의 의무도 이행해야 하였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농림부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농림부 및 관련 기관·단체를 망라한 OECD 대책위원회가 1997년 2월에 구성되어, 논의 동향을 점검하고 분야별 대응방향을 협의하였다.

1987년 OECD 농업정책개혁 원칙이 수립된 이후, OECD는 매년 PSE/CSE라는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회원국들의 농업지원 현황과 새로이 도입된 정책 등을 정리하여 소개하는 활동을 펴 왔는데, '96년도 점검 및 평가보고서에 대해 3월 작업반 회의와 4월 농업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특히 이 보고서의 마지막에 언급된 1996년 11월 세계식량정상회담(World Food Summit) 결과가 객관적으로 소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본 등과 더불어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사무국이 당초 마련한 초안을 객관적인 내용을 바꾸어 놓을 수 있었다.

'97년에 OECD 농업위원회에서 가장 크게 다루어졌던 안건은 '92년 이후 6년만에 '98년 3월에 개최되는 각료급 농업위원회 준비였다. '97년 1월에 개최된 제123차 농업위원회에서부터 각료급 농업위원회에 상정될 사무국보고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이후 '98년 3월 5-6일 이틀 동안 각료회의 모임을 몇번으로 할 것인지, 모임시 사회는 어느나라가 할 것인지, 각료회의 의장국과 부의장국은 어느 나라가 맡을 것이며, 오찬모임시에는 어떤 주제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토의를 진행할 것인지, 외부 초청연사를 들 것인지, 오찬모임시 사회는 어느나라가 할 것인지 등이 논의되었다. 이 과

정에서 사무국과 회원국들이 가장 많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분야는 각료 회의시 토론자료로 제출되는 사무국 보고서의 검토와 각료 공동선언문 초안의 작성이었다.

농업각료회의의 제출 보고서는 2종으로, '87년 농업정책개혁 원칙이 수립된 이후 회원국들의 농업정책개혁 노력을 총 점검하는 보고서와 추가 정책개혁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였다. 첫 번째 보고서는 '97년 1월 제123차 농업위원회에 처음 상정되었다. 두 번째 보고서는 '97년 4월 제124차 농업위에 처음 상정되었으며, 9월 제125차 농업위원회에서 재검토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무국은 회원국의 서면 의견을 요청하기도 하였는데, 우리나라는 회의시 발언과 서면의견을 통해 1996년 세계식량정상회담에서 강조된 식량안보의 다측면적 특성과 농업의 다원적 특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일본, 노르웨이, 포르투갈 등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국가와 사전에 입장을 교환하는 노력을 계속하였다.

그 밖에도 농업통계전문가회의(1997년 1월), 육류낙농품그룹회의(1997년 11월), 농촌개발이사회그룹회의(1997년 10월)에 소관 부서가 참석하여 활동을 펼쳤다. 규제개혁 및 카르텔 금지규정 제정 논의 등 농업위원회 이외 다른 위원회 논의에 대해서도 근대산업과 구별되는 농업분야의 특수성을 강조하였다.

(국제협력과 사무관 서해동)

나. OECD의 한국농업정책 검토

OECD 농업위원회는 1987년 각료이사회에서 합의한 농업분야에 있어서 시장경제원리의 확산 등 농정개혁원칙에 따라 회원국간 토론을 통하여 각 회원국 농업발전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전 회원국에 대한 농정·평가[국별 농정검토제도(Country Review)와 이를 바탕으로 한 연례점검·평가제도(Monitorng & Evaluation)가 있음]를 시행하여 왔으며, 우리 나라도 1996년 12월 OECD 가입으로 OECD 사무국은 '97년 중에 한국농정검토(Country Review)를 위한 기초작업을 추진하였다.

OECD 관계관 방한과 한국농정전반에 대한 정책설명에 이어 농업지지수 준 측정을 위한 '79~'96년간의 품목별 수급 및 가격자료 및 사업별 재정지출 등의 자료를 제공하였다. OECD사무국은 한국농정검토보고서 초안(제1부: 일반경제 및 농업개황, 제2부: 농업정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98년 말까지는 한국농정 검토보고서를 완성하기 위해 '97.11.28~12.3에 우리측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보고서 내용 개선방안, 통계자료 확인 및 보완방안, PSE/CSE(생산자보조상당치/소비자보조상당치) 자료점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정·검토하였다.

(국제협력과 사무관 이명순)

3. FAO 활동

FAO(국제식량농업기구)에서는 '97년도에 제29차 총회(11월), 이사회(6월, 11월) 및 식량안보위원회(4월), 농산품문제위원회(2월), 농업위원회(4월), 식량농업유전자원회의(5월) 등의 여러 회의를 통하여 세계식량농업상황을 평가하고 식량안보증진방안, 세계식량정상회의(1996년 11월) 행동계획의 이행 및 모니터링, 환경보전과 연계되는 농업생산, 식량농업유전자원의 보전과 활용 등이 논의되었으며, FAO기구 자체의 효율성 제고방안도 제기되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여러회의에 참가하여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한 바 세계식량상황에 대하여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곡물 공급상황의 불안정성을 지적하고 적정 수준의 국내 생산을 통한 식량안보가 달성되어야 함과 농업의 다원적기능 및 부존자원의 효과적 활용 등을 강조하였으며, FAO의 조직과 예산이 더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운용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그 밖에도 식물위생 및 검역제도 표준화를 위한 국제식물보호협약개정회의(1월)에 참가하여 수입국의 입장에서 검역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농약에 대한 국제거래 사전 통보절차 및 가공식품의 국제규격 표준화 등의 논의 과정에도 참석하였다.

또한 총회에 참석한 우리 대표는 중국, 캐나다, 프랑스 주요국 대표와 면담을 통해 농업현황과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지 협의체의 틀속에서 양국간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FAO 사무총장과 면담을 통해 FAO와의 협력증진 방안을 협의하고 대북한 농업지원 등에 있어서 상호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한국인의 사무국 진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국제협력과 사무관 윤기호)

4. WFP 및 IFAD의 대북한 지원사업

WFP(세계식량계획)의 주요 공여국이 된 우리나라는 '95년부터 시작된 WFP의 대북 긴급식량지원사업에 계속 참여하여 '96~'97년도(2차 및 3차) 기간중 22.5백만\$을 지원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북한 식량난의 객관적인 평가, 분배의 투명성, 확보, 북한의 자구노력 유도를 위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표 1-3-7> WFP의 북한식량지원상황

지원 Appeal	기 간	금 액	수 량
1 차	'95. 9~'96. 6	7.3백만원\$	23.8천톤
2 차	'96. 7~'97. 3	27.2	69.7
3 차	'97. 4~'98. 3	134.3	402.0
4차(계획)	'98. 4~'99. 3	378.2	658.0

IFAD(국제농업개발기금)은 북한의 농업개발사업을 위해 장기저리의 차관자금('96~2001년간 잠업 15.7백만달러, '98~2002년간 축산 28.9백만달러)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IFAD는 또한 북한의 농촌개발을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위해 북한농촌복구 및 투자 프로그램을 수립하였으며 협력 회원국 또는 기관과 소요자금 마련방안을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그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의 견해를 표명하여 북

한의 농촌개발과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 방안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국제협력과 사무관 윤기호)

5. APEC 관련활동

1989년 1월에 호크 호주 수상의 제안에 따라 아·태지역 협력을 위해 공식 출범된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은 1994년 보고르 정상회의 선언에 따라 선진산업국의 경우는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역내 무역·투자자유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자유화 행동지침(Osaka Action Agenda)이 채택되었다. 동 행동지침에 따라 1996년부터 협의가 진행되어 1996년 11월 필리핀 정상회의에서는 각국의 자유화 행동계획(Individual Action Plan)이 채택되었으며, 각국은 동 행동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무역·투자자유화를 추진토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자유화에 있어서의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1997년 분야별 조기자유화(Early Voluntary Sectoral Liberalization : EVSL)의 15개 대상 분야를 확정하였고 1998년도에는 이들 분야의 이행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분야별 조기자유화란 무역·투자자유화 및 원활화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APEC 회원국들이 자발성과 신축성에 기초하여 특정분야에 있어서 보고르선언의 2010/2020 목표보다 더욱 조속한 시기내에 무역자유화를 이룩하자는 움직임이다. 1996년 APEC 수빅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각 회원국에게 역내 무역·투자·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기자유화 대상분야를 발굴하고 이 분야의 자유화를 성취할 수 있는 제안을 제출할 것을 각료들에게 지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논의가 시작되었다.

각 회원국은 1997년 8월 15일까지 1차로 자신들이 희망하는 대상분야를 선정하여 제출하였는데 이에 30개 산업의 61개 분야가 포함되어 1997년 8월의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 및 10월의 특별고위관리회의를 통하여

유사한 분야간 통합 등을 통해 41개의 대상분야가 1997년 각료회의 및 정상회의에 상정되었다. 그중 1997년 벤쿠버정상회의는 정상선언문을 통하여 각국의 지지정도, 경제적 중요성, 회원국간 이익균형 등을 감안한 15개 분야를 조기자유화 대상분야로 선정하였다. 9개 분야에 대하여는 1998년 6월 까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999년부터 이행할 것과 나머지 6개 분야는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9개 우선 추진분야는 완구, 수산물, 환경 제품 및 서비스, 화학, 임산물, 보석, 에너지 및 관련장비, 의료장비, 정보통신 MRA이며, 6개 후속검토분야는 식품, 유지종자 및 관련제품, 비료, 자동차표준, 고무, 민간항공기이다.

(통상협력과 사무관 김상현)

6. 농업·환경·무역 연계 논의동향

“지구정상회의”라고 불리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되어, 지구환경보호와 개발의 일반원칙인 “리우선언”과 21세기를 향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인 “의제21”이 채택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지구환경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이때부터 지속가능개발이라는 큰 목표아래에서 각 분야별로 환경과 연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농업의 경우에도 지속가능한 농업(Sustainable Agriculture)의 개념이 퍼지면서, 환경친화적인 농업정책 도입을 비롯하여 다방면에 걸친 논의가 여러 국제기구를 통하여 추진되고 있다.

OECD에서는 경제·환경정책 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지속가능한 개발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환경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1년 OECD 환경각료회의가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을 주창하면서 환경정책위원회(Environment Policy Committee : EPOC)를 중심으로 다른 위원회와 합동으로 환경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중에서 농업관련 EPOC 활동으로는 농업과 환경간의 관계분석을 위하여 '93. 9부터 농업위·환경정책위원회 공동작업반회의(Joint Working

Party of the Committee for Agriculture and the Environment Policy Committee : JWP)를 세워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 회의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을 살펴보면 농업정책 개혁과 환경과의 연계를 들 수 있다. 농업정책개혁이란 그 동안 OECD 국가에서 채택해온 농업정책이 가격, 생산과 무역에 왜곡을 초래하였고, 농업의 경제적 효율성 감소 및 전체경제의 비용부담의 원인이 되었음을 지적하여, 농업지원(생산연계 보조금)을 줄여나가고, 친환경적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밖에 이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사안으로서는 농업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계량적인 수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13개 분야별 농업환경지표 개발 사업과, 그리고 농업 무역자유화와 환경효과와의 관계논의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1995년 출범한 WTO에서는 마라케쉬 각료회의(1994년 4월)에서 채택된 '무역과 환경에 관한 결정문'에 따라 무역환경위원회(CTE,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를 설치하여, 무역과 환경에 관한 10개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 CTE(무역환경위원회)는 수십차례의 공식·비공식회의를 개최한 결과를 1996년 1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차 WTO각료회의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각료회의에서는 각국간의 입장차이가 뚜렷하여 강제적 효력을 갖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무역환경위원회를 상설하여 지금까지 추가적인 논의를 계속해 오고있다.

농업부문과 관련하여 CTE가 다룬 주요 의제는 "무역제한 및 왜곡제거의 환경적 편익"이다. 논의 쟁점은 무역 왜곡조치(농업보조금, 고관세 등) 제거가 환경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초래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 농산물 수출국(케언즈 그룹)은 농업보조금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차기라운드에서 농업협정이 환경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EU, 일본, 스위스 등은 농업보조금의 다양한 환경효과와 각국의 특수사정이 고려되어야 하며, 농업보조금 논의가 차기 농산물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각국의 치열한

입장대립으로, 무역왜곡 제거를 포함한 무역 자유화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환경편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또다른 환경 악화도 초래할 수 있다는 양측의 주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OECD, WTO 등 국제기구에서의 논의와는 별개로 환경보전을 위해 무역을 규제하는 각종 국제 환경협약도 증가하고 있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00년 이후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관한 법적 구속력있는 의정서를 채택하여,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뿐만 아니라, HFCs, PFCs, SF₆ 등 대체프론도 감축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밖에도 멸종이 지속되고 있는 다양한 생물종을 보전하고 환경친화적 지속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생물다양성 협약과 유전자 조작등에 의한 새로운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취급 및 사용에 관한 국제규범 제정을 위한 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 그리고 선진국 등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등 유해 화학물질의 국가간 교역에 있어서 사전통보 승인 절차를 적용하도록 하는 유해화학물질 사전통보승인(PIC)협약 등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환경협약의 제정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각종 국제기구의 논의방향과 협약제정 등을 통한 논의 방향이 환경보전형 지속개발에 그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사전에 지속가능 농업정책을 적극 개발·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국제환경관련 규범제정 과정에 우리정부가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통상협력과 사무관 이상재)

7. WTO/SPS위원회 동향

1997년에도 3차례의 회의가 개최('97.3 7차 회의, '97.7 8차 회의, '97.10 9차 회의)되어, 『적정보호수준 결정의 일관성』관련 지침작성, 『국제기준 사용여부 감시절차』 개발, 『협정의 운영 및 이행상황 검토』 등 SPS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회원국간의 SPS관련 양자현안 문

제 등이 논의되었다.

SPS협정은 수입국이 유지하고 있는 SPS조치(수입식품 위생검사와 동·식물 및 그 생산품의 검역)가 국제교역을 왜곡시키는 비관세 장벽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삼고 있는 바, 농산물 수출국과 농산물 수입국은 SPS협정의 구체화 방향을 주도하기 위하여 열띤 논쟁을 하였다. 우리나라는 일관성 지침 및 감시절차 등 토의시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영된 지침 및 절차가 제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였다.

회의가 진행됨에 따라 협정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논의가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으며, 수입국과 수출국의 의견대립이 보다 극명해지고 있다. 단적인 예로 제9차 회의에서 의장이 미측 제안을 대폭 반영한 「적정보호수준 적용에 있어서의 일관성」 달성을 위한 지침안을 제시하였으나, 동지침의 영향을 크게 받게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등을 비롯한 수입국들이 지침작성을 위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함에 따라 위험평가 및 일관성의 개념 등을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동 지침은 세부사항별로 회원국 입장이 충돌함에 따라 완성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9차 회의에서는 국제기준의 사용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임시절차가 합의되었으나, 아직도 실제 감시활동에 활용할 국제기준의 선정, 표준서식의 마련 등에 많은 난제가 남아있다. 협정의 운용 및 이행상황 검토와 관련하여서는 검토대상 및 검토방법 등을 결론짓지 못하였으며 회원국별로 검토대상 협정조항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달라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7년 SPS위원회에서는 양자현안이 과거보다 많이 거론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동식물 검역기능의 강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내소비자 및 산업을 보호함은 물론 SPS협정과 관련된 통상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통상협력과 사무관 이상진)

제 2 편 1997년도에 시행한 주요 농정 시책

여백

제 1 장 농촌발전대책 추진 지원토대 확립

제 1 절 구조개선사업 및 농특세 예산조달

1. 농어촌 구조조정사업 재원 확보

가. 예산편성 기본방향

'97년 구조조정사업 예산은 WTO 출범 3년차를 맞아 그동안 농업 구조 개선사업의 추진성과를 더욱 가시화시키는 한편, 국내외 식량 수급 변화에 대응하는 쌀 자급기반의 확충과 농촌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아울러 1994년 6월 수립된 『농어촌발전대책』을 재원면에서 차질없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42조원 구조개선투자사업('92~'98)』과 『15조원 농어촌 특별세 투융자사업(1994~2004)』의 소요예산을 계획대로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나. 예산 규모

42조원 농어업 구조개선과 15조원 농특세 투자사업 예산을 모두 합친 1997년 농어업 구조조정사업 예산규모는 8조 2,013억원으로 1996년 예산 대비 11.3% 늘어났다.

42조원 농어업 구조개선사업 예산은 6조 7,013억원으로 1996년 예산 대비 16.0% 증가하였으며, 15조원 농특세 투자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1조 5,000억원으로 편성되었다.

<42조원 구조개선 및 15조원 농특세사업 예산규모>

- 42조원 구조개선예산 : ('96) 5조 7,760 → ('97) 6조 7,013억원, 16.0% 증가
- 15조원 농특사업예산 : ('96) 1조 5,900 → ('97) 1조 5,000억원, 5.7% 감소

다. 중점 투자분야 및 재원확보 내용

(1) 42조원 농어업 구조개선사업

42조원 농어업구조개선 투융자사업 예산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반 정비 등 구조개선 핵심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농업생산성 향상 및 영농기계화 기반 확충에 필수적인 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밭기반정비사업 등과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위한 농업용수 개발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전년보다 38.2% 늘어난 2조 1,396억원이 책정되었다.

농업기계화사업에 농기계공급 위주에서 마을 보관창고 등 농기계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전년 수준인 4,518억원이 책정되었다. 농업인력 육성사업에는 농업인 후계자 1만명, 쌀전업농 7천명, 과수 및 채소등 전업농 1,200호를 육성하기 위해 4,463억원이 책정되었다.

도매시장, 공판장, 포장센터 등 농산물유통시설의 하부구조 확충 및 규격출하, 물류표준화, 농산물 안전성 및 품질제고 확보를 위한 유통구조사업에 전년보다 18.1% 증가한 4,543억원이 책정되었다.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시설현대화, 기술개발, 축산업구조개선 등의 사업에도 전년 대비 각각 △8.51%, 12.2%, △2.3% 조정된 3,126억원, 2,047억원, 6,923억원이 책정되었다.

농촌에 살면서도 다양한 취업을 통하여 도시인 못지않는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농촌소득원 개발사업 예산은 지난 해 50.4%가 증액된 점을 고려해 전년보다 조금 증가한 5,554억원이 책정되었다.

어업과 임업부문의 구조개선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어업부문은 1997년 7월1일로 수산물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점을 고려해 전년보다 20.0% 증액된 4,714억원이 책정되었다. 임업부문은 25.6% 증액된 4,319억원이 책정되었다.

반면, 일부 과잉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농기계 보조지원사업은 규모가 다소 축소되었고,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및 공판장지원사업과 같이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개편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2) 15조원 농특세 사업예산

15조원 농특세 투융자사업 예산은 농업경쟁력 강화사업과 농촌생활여건 개선 및 농업인 복지향상이 균형을 이루도록 당초 계획대로 1조 5,000억원이 책정되었다.

1997년 농특세 총예산 1조 5,000억원중 경지정리, 유통구조개선, 기술개발 등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예산은 9,043억원으로 60.3%이다. 농촌도로·하수도 정비 및 주택개량·폐수처리·생활용수개발 등의 농촌생활여건 개선 예산과 농어촌지역 국민연금·의료서비스·공공도서관건립·직업훈련·학자금융자·오지 및 낙도 교통지원 등 농업인 복지증진 예산은 5,957억원으로 39.7%이다.

<표 2-1-1> 42조원 구조개선 + 15조원 농특세사업 예산(1997)

(단위 : 억원)

사 업 명	42조 + 15조계획	'92~'95	'96	'97	전년비 증가율(%)
1. 생산기반정비	129,063	38,617	19,110	25,156	31.6
2. 농업기계화	30,720	14,650	4,457	4,518	1.4
3. 시설현대화	19,699	6,730	3,618	3,362	△7.1
4. 기술개발 및 정보화	17,266	6,374	2,375	2,557	7.7
5. 정예인력육성	26,076	10,898	4,430	4,748	7.2
6. 소득원개발	24,682	9,935	5,291	5,554	5.0
7. 축산업구조개선	55,053	22,207	7,084	6,923	△2.3
8. 유통구조개선	37,027	11,180	5,461	5,672	3.9
9. 영농규모화	25,408	12,866	3,375	3,808	12.8
10. 생활환경·복지개선	76,573	12,734	8,574	8,259	△3.7
11. 어업구조개선	37,760	12,255	5,811	6,531	12.4
12. 임업구조개선	24,650	11,580	4,074	4,925	20.9
계	503,977	170,026	73,660	82,013	11.3

<표 2-1-2> 42조원 구조개선 투융자사업 예산(1997)

(단위 : 억원)

사 업 명	42조계획	'92~'95	'96	'97	전년비 증가율(%)
1. 생산기반정비	86,063	35,366	15,487	21,396	38.2
2. 농업기계화	30,720	14,650	4,457	4,518	1.4
3. 시설현대화	17,699	6,530	3,418	3,126	△8.5
4. 기술개발 및 정보화	12,226	5,548	1,825	2,047	12.2
5. 정예인력육성	23,576	10,536	4,083	4,463	9.3
6. 소득원개발	24,682	9,935	5,291	5,554	5.0
7. 축산업구조개선	55,053	22,207	7,084	6,923	△2.3
8. 유통구조개선	22,477	8,610	3,847	4,543	18.1
9. 영농규모화	25,408	12,866	3,375	3,808	12.8
10. 생활환경·복지개선	10,348	3,765	1,523	1,602	5.2
11. 어업구조개선	24,225	10,187	3,930	4,714	20.0
12. 임업구조개선	21,500	10,914	3,440	4,319	25.6
계	353,977	151,114	57,760	67,013	16.0

<표 2-1-3>

15조원 농특세 투융자사업 예산(1997)

(단위 : 억원)

사 업 명	15조계획	'92~'95	'96	'97	비 고
1. 생산기반정비	43,000	3,251	3,623	3,760	○ 당초 투자 계획 인 1조 5천억 반영
2. 농업기계화	-	-	-	-	
3. 시설현대화	2,000	200	200	236	
4. 기술개발 및 정보화	5,040	826	550	510	
5. 정예인력육성	2,500	362	347	285	
6. 소득원개발	-	-	-	-	
7. 축산업구조개선	-	-	-	-	
8. 유통구조개선	14,550	2,570	1,614	1,129	
9. 영농규모화	-	-	-	-	
10. 생활환경·복지개선	66,225	8,969	7,051	6,657	
11. 어업구조개선	13,535	2,068	1,881	1,817	
12. 임업구조개선	3,150	666	634	606	
계	150,000	18,912	15,900	15,000	

(기획예산담당관실 서기관 조봉환)

2. 농어촌구조개선 투융자사업 평가

가. 농어촌 투융자 사업 개요

UR협상에 따른 농산물 개방확대에 대응하여 '92년에 착수한 42조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획기간 : '92~'98)과 WTO체제 출범에 대응하기 위하여 '94년부터 착수한 15조 농특세사업(계획기간 : '94~2004)의 외형적인 총투자계획은 지방비 부담, 농업인의 자부담 등을 모두 포함하여 56조 7천억원 수준 규모이다.

42조 구조개선사업 투융자 사업계획의 총규모는 국고투융자 35조 4천억원(보조16조5천), 지방비 3조 8천억원, 자부담 2조 5천억원으로 구성되었으며, 15조 농특세 사업은 '94년 계획수립 당시 부처간 협의에 의해 분야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교육부에서 대학생학자금 지원,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 의료지원, 행정자치부에서 농어촌상하수도 정비 등 10개부처가 나누어 분산지원하고 있다.

<표 2-1-4> 농어촌 투융자계획

(단위 : 억원)

	42조 구조개선사업	15조 농특세사업	계
국 고	353,977	150,000	503,977
지 방 비	37,916	-	37,916
자 부 담	25,128	-	25,128
계	417,021	150,000	567,021

나. 농어촌 투융자 내역

'92부터 '97까지 42조 구조개선사업 및 15조 농특세사업 투자액은 42조 6,833억원으로 총 투자계획대비 75% 수준이며, 그중 지방비, 자부담 등을 제외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한 실적은 농특세 4조 8천억원을 포함하여 31조 7천억원이다.

<표 2-1-5> 총 투융자 실적

(단위 : 억원)

	총 투자계획			집행실적('92-'97)			'98계획		
	42조 ('92-'98)	15조 ('94-2004)	계	42조	15조	계	42조	15조	계
○국 고	353,977	150,000	503,977	268,799	48,686	317,485	65,864	12,662	78,526
- 보조	164,915	129,931	294,846	132,118	42,325	174,443	34,654	11,342	45,996
- 융자	189,062	20,069	209,131	136,681	6,361	143,042	31,210	1,320	32,530
○지방비	37,916	-	37,916	46,529	-	46,529	7,295	-	7,295
○자부담	25,128	-	25,128	62,819	-	62,819	12,606	-	12,606
계	417,021	150,000	567,021	378,147	48,686	426,833	85,765	12,662	98,427

투융자 내용은 경지정리, 저수지개발, 도매시장 건설, 농어촌도로포장 등 SOC성격의 투자와 시험, 연구, 개발 등 정부직접시행사업에 15조 1천억원 (48%)이 투자되었고,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물류센터, RPC(미곡종합처리장), 포장센터 등 유통·가공사업에 투자된 금액이 3조 2천억원 (10%)이며, 농기계, 축산, 온실 등 실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에게 직접 지원된 사업비는 13조 4천억원(42%) 수준이다.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등에게 지원된 내용을 보면 농업인이 되갚아야 하는 융자금의 10조 9천억원으로 81.3%이고 순수한 보조금은 18.7%인 2조 5천억원 수준이다.

특히 농특세사업은 '94~'97기간중 4조 8천억원이 투자되었지만 그중 2조 8천억원은 농어촌주택 및 하수도정비, 오지낙도교통지원, 농어촌의료지원, 농어민연금, 농어촌도로정비 등 타부처에서 추진하는 농어촌지역복지 및 생활환경시설 개선사업이고, 농업부문에 지원된 금액은 43%인 2조 1천억원이며 대부분 대구획경지정리, 물류센터 건설, 임도건설 등 SOC성격의 사업에 투자되었다.

<표 2-1-6>

지원 대상별 투융자 실적

(단위 : 억원)

	42조 구조개선		15조 농특세		계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계
○ 농업인 지원사업 등	27,230	130,198	3,779	5,220	31,009	135,418	166,427
- 농업인 지원	22,676	105,649	2,224	3,743	24,900	109,392	134,292
- 생산자단체 등	4,554	24,549	1,555	1,477	6,109	26,026	32,135
○ 생산기반확충 등	104,888	6,483	38,547	1,140	143,435	7,623	151,058
- SOC사업	85,043	4,393	28,894	-	113,937	4,393	118,330
- 교육, 복지 등 정부사업	19,845	2,090	9,653	1,140	29,498	3,230	32,728
계	132,118	136,681	42,326	6,360	174,444	143,041	317,485

다. 농어촌 투융자사업의 평가 및 개선방향

이러한 투융자결과 IMF 경제위기속에서도 주곡자급으로 사회안정에 크게 기여했고, 사시사철 우리식탁에 신선한 채소·과일이 오를수 있는 주년 공급기반이 갖추어 지는 등 농업분야의 성장을 위한 물적기반은 어느정도 구축되고 있으나, 농업인의 경영능력, 유통체계 등 소프트웨어 부문발전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능력·경험이 없는 부적격자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이 부실화된 사례도 일부 발생하였고, 또 일부사업은 과도한 보조지원으로 자금의 공급과잉을 초래하거나 보조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업비를 신청한 후 이를 유용하는 등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이 부적당한 사례도 있었다. 더구나, IMF위기에 따라 첨단영농, 고에너지 사용, 해외의존형 사업은 내수부진, 유가상승, 금융비용 증가 등의 충격에 극히 취약한 면을 보인 사례도 상당히 있었다. 현재 전체 투융자 사업대상자 중 30% 정도가 IMF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0%는 회생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20%는 경영지도와 운영자금지원으로 회생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회생이 불가능한 사업자는 과감히 퇴출시키고 회생이 가능한 사업자는 경영컨설팅, 운영자금 지원 등을 통해 회생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의 농업관련 투융자는 위와 같은 부실사례가 반복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경영종합자금제를 도입하여 수요자중심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방대학, 민간자문회사 등을 활용한 경영컨설팅을 강화하며,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전문성과 심사평가 기능을 정립하는 등 농림사업의 집행 및 사전·사후 관리강화로 부실·비효율 투자를 방지하는 대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투자심사담당관실 사무관 정연호)

제 2 절 농림사업의 객관적 평가 실시

1. 사업평가 개요

가. 평가배경 및 목적

1994년도에 수립된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42조 원 구조개선사업의 조기집행과 15조원 농어촌특별세 신설 등으로 농어촌에 대한 투자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투융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1996년부터 2차례의 중간평가를 실시하였다. 중간평가에서 사업추진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후속조치로 개선·보완과제를 선정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특히, 1997년 4월에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계의 전문가, 비농업부문 국책연구소 및 민간연구소 등 외부 전문평가기관이 참여하는 농림사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점검·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나. 평가대상

산업별 평가와 제도 및 정책사업 평가로 구분하여, 산업별로는 쌀산업·축산사업·시설원예산업·과수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정예인력육성사업·생산기반조성 및 규모화사업·시설공사 회계평가·농산물유통개선사업·농업기계화사업·농업투융자정책·농업금융정책 및 협동조합제도개선·농촌교육 및 복지증진사업 등 주요제도 및 정책사업도 평가대상에 포함시켰다.

산업별 평가는 산업성장률·생산성 향상·자금률·규모화 진전·농가소득 제고 및 안정·소비자 및 시장지향성·유통효율화·가격안정효과 등을 평가하였다. 정책목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에 대한 '적합성'과 정책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효과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

의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주요제도 및 정책평가는 정책목표와 방향의 적절성, 정책과 사업의 연계성, 사업별 우선순위와 투자규모, 자금지원방식 등을 평가하고, 현지조사를 통한 평가와 평가지표에 따른 사업별 정책목표와 성과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병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림사업 외부평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평가방향을 설정하는 등 종합조정(총괄)하도록 하였다.

<표 2-1-7> 분야별 평가참여기관

분 야 별	평 가 참 여 기 관
협동조합 및 농업정책금융 평가 농업기계화사업 평가 쌀산업 평가 과수산업 평가 원예산업 평가 축산산업 평가	건국대 김영철 교수 서울대 강봉순 교수 동아대 황연수 교수 진주산업대 조덕래 교수 경상대 이영만 교수 한우·낙농 : 서울대 권오상교수 양돈·양계 : 전남대 김석현교수
분 야 별	평 가 참 여 기 관
농업재정투융자정책 농업인력육성, 농산물유통 농어촌복지·교육 증진사업 생산기반정비사업 및 규모화사업 시설공사에 대한 회계평가	한국조세연구원 박정수박사 삼성경제연구소 민승규박사 한국산업경제연구원 김용갑박사 LG경제연구소 이용만박사 안건 회계법인 이인순회계사

<표 2-1-8>

농림사업 중간평가 비교

	1단계 평가	2단계 평가	외부 평가
평가지기	1996. 2.~1996. 6.	1996. 10.~1997. 4.	1997. 4.~1997. 12.
평가기관	농림부, 농경연	농 경 연	농경연, 학계, 국책 및 민간 연구소
평가중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별 추진 실태 ○ 제도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별 성과 ○ 경쟁력제고대책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방향의 적합성 평가 ○ 산업과 사업의 종합평가 ○ 농업부문 투융자 방향
평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2조 구조개선 사업의 164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축산, 원예, 특작 등 14개 품목 ○ 주요 제도개선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 산업별 대책, 투융자제도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업 투융자 효과를 지원사업별로 분석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지표에 의한 성과 분석 ○ 경쟁력제고대책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투융자 효과 분석 ○ 산업별, 사업별 종합평가 ○ 1999년 이후 투자방향 제시

2. 사업평가 결과

가. 평가결과 종합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평가 결과, 농어촌 투융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농업성장률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농업생산성의 향상·영농규모화와 전문화의 진전·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효율성 증대·농산물수출증가 등 농업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되고 농업관련산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쌀산업의 구조 개선이 미흡하고, 전문영농인력의 부족, 판매·유통체제의 미흡, 중소농을 위한 정책개발의 부족, 지방농정의 자율성 미흡 등 앞으로 농정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나. 산업별 평가결과

(1) 쌀산업

쌀 산업은 벼재배면적의 확보와 단수증대를 통해 쌀자급이 달성되었고, 유통부문에서 수매·방출제도의 개선, 쌀값 계절진폭의 확대, 미곡종합처리장의 확충 등 민간 유통기능 활성화로 쌀값의 안정·유통마진의 축소 및 재정부담의 경감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었다. 생산기반정비와 농업기계화 진전 등으로 노동생산성도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완과제로써 공공비축 등 양곡관리제도의 개선, 지역단위에서의 논 면적 확보 및 체계적인 이용, 영농의 기계화 및 농지기반정비를 통한 논 농사의 수익성 향상, 고품질다수성 품종의 개발, 농지와 농업용수의 오염방지 등과 함께 다양한 유형의 직접지불제 실시, 농작물재해보험 및 보상제도의 실시 등 보완적인 소득지지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축산업

<한우산업>

한우산업은 규모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돼 인건비 절감 등 생산비 상승이 둔화되거나 부분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고급육 생산 지표인 1등급 출현율이 증가하였고 브랜드화를 통한 품질개선도 많이 진전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최근 전업농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생산비 절감을 위한 규모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분산지원보다는 전업화가 가능한 농가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생산비를 하락시키기 위해서는 송아지 사육농가의 전업화를 통해 송아지 생산비를 줄여야 하며, 고급육 생산을 위한 브랜드 육성시 기존의 군 단위 육성보다 광역 단위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산지 소 수매제도는 장기적인 고급화 전략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부재정도 낭비될 소지가 있어 품질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수매제

도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축산분뇨 처리를 위해서는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적극 권장하는 한편, 수분조절제의 확보와 생산된 비료의 유통망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자금지원도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낙농산업>

낙농산업은 호당 평균 젖소 사육두수가 30두에 달할 뿐만 아니라 최근 한계농가의 이탈로 규모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의 단위당 실질 생산비는 1992년 대비 3.2% 하락하였으나 농후사료와 조사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완과제로는 종축 개량과 공급확대를 통한 두당 산유량 증대가 필요하며, 감소추세에 있는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을 위한 정책개발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낙농 관련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가공업체간의 경쟁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않으면서 우유의 수급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낙농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양돈산업>

돼지 사육호수는 급속히 감소한 반면 호당 평균 사육규모는 급속히 증가하여, 규모화된 농가의 사육두수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규모화 진척과 더불어 시설근대화 목표도 원만히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993~2001년 생산비 33% 절감목표는 달성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완과제로는 양돈산업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유통체계 및 시설 개선을 위한 투융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가축방역 사업비의 대폭적인 확충과 함께 양돈단지의 기자재 구매·생산물의 판매·방역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 사육시설의 확대를 지원할 때는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고, 퇴비화 시설에서 생산된 퇴비의 원활한 판매를 위한 유통체계도 효율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계산업>

육계 사육농가수는 연평균 8.7%씩 감소하는 반면, 3만수 이상 규모 농가수는 연평균 31.1%씩 증가하였고, 산란계 사육농가수는 연평균 6.4%씩 감소한 반면, 3만수 이상 규모 농가수는 연평균 8.1%씩 증가하는 등 규모화, 전업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더불어 시설근대화도 상당 부분 진척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자동화에 따른 노동 투입량의 감소 등으로 생산비가 절감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1993~2001년 사이의 양계산물 생산비의 절감목표(닭고기 22%, 계란 15%절감)가 향후 1~2년 내에 달성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1990년 대비 육계(10kg) 생산비는 21%, 계란(10개)생산비는 11% 감소하였다(1995년 불변가격 기준).

보완과제로는 우수 품종의 초생추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규모화된 종계장 및 부화장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와 함께 닭고기 냉장유통체계 확립과 계란집하장을 추가 건설하여 이들 집하장이 도매시장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양계산물 유통개선 및 유통 하부구조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3) 시설원예산업

현재 시설원예사업(시설채소, 시설화훼)이 농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 수준이지만, 2000년에는 18~20%수준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향후 농업부문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시설원예(시설채소)농가의 경영규모도 1990년 680평에서 1995년 1,000평으로 확대되었고, 은실의 현대화·자동화로 노동투입시간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이와 토마토는 일본에 비하여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적으나 생산비가 낮아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시설원예사업의 성장으로 육묘산업이 분업화·전문화되는 등 전후방 연관산업이 발전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완과제로는 시설원예사업이 생산지원사업과 유통지원사업으로 각기 따

로 지원되어 비효율적이며, 농가의 기술수준이 예전의 관행 재배 단계에 머물러 있어 대규모 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영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위하여 이동식 단동형 온실을 고정식 연동형으로 교체하고, 현대화·자동화를 통하여 경영규모화와 생산비의 절감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첨단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경영인 육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유리온실·경질판온실·파이프 비닐온실 등의 유형별로 다양한 표준모델 개발이 필요하고, 시설원예 자재의 국산화를 위해 자재업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최근 분업화가 시작된 공정육묘산업의 발전을 위해 생산유통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원예 경영체에 수출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제공이 필요하고 개별경영체에 대한 지원은 장기 저리의 융자방식으로 지원하되, 지원대상의 선정과정과 사후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4) 과수산업

1994년 이후 모든 과실의 노동생산성(복숭아 제외)과 토지생산성(감귤 제외)이 증가한 반면, 생산비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감귤 등 일부 과실의 농가수취가격이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과를 제외하면 과실의 소득률은 1994년 이후 뚜렷하게 향상되었다. 또 배 가공음료 개발의 성공으로 가공용 소비량이 1996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보완과제로는 과수산업은 장기적으로 생력형 산업을 실현하고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경영체를 중심으로 영농규모화사업 자금을 집중 지원하여 경영규모의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생산유통지원사업의 지원을 강화하여 전문 전업농의 육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신규 참입농가, 작목전환 농가, 과원 구조조정 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 한국형 재배체계를 개발하고 이에 따른 재배기

술 보급과 함께 과원 구조조정에 적합한 품종, 소비자 기호변화에 대응하는 품종을 개발하고 출하조절과 재고파악을 위한 종합적인 정보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 향후 추진방향

1996~97년에 3차에 걸쳐 실시된 중간평가는 농림투융자 사업과 각종 지원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투융자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목적이 있었다.

1단계 평가(1996. 2~6)에서는 세부사업별 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굴하였다. 2단계 평가(1996. 10~1997. 4)는 산업별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3단계 외부평가에서는 1·2단계 평가가 내부기관에 의한 평가이었던 점을 감안, 학계 전문가와 국책연구기관, 민간연구소에 평가를 의뢰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였다.

앞으로 이들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투자심사담당관실 행정주사 정영환)

제 3 절 농림행정 색신 및 법령·제도 개선

1. 농림법령 및 제도 개선

정부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농업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총 8건의 농림법률을 제·개정하였다.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는 등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키기 위해, 「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하여 농업생산에 농약·비료 및 가축사료 첨가제 등 화학자재의 기준사용량을 설정하고, 환경농산물 표시제도를 도입하였다.

낙농업과 낙농 관련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낙농진흥법」을 개정하여 낙농 관련단체로 구성되는 '낙농진흥회'를 설립하고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안정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토록 하였다. 집유는 축산업협동조합으로 일원화하여 원유(原乳)의 수급을 자율적으로 조절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하여 농림부가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판매에 이르는 전과정을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양축농가·축산물 가공업체·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유기농산물의 품질기준을 새로 정하고 생산·유통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조사해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미강(쌀겨)착유업체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업체간의 자율적 경쟁을 보장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미강착유장려법」을 폐지하였으며, 양잠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뽕잎·누에 등을 양잠산물로 규정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잠업법」을 개정하였다.

우리 나라의 토종개인 진돗개를 체계적으로 보호·육성하기 위해, 「한국진도견보호육성법」을 개정하였으며, 「초지법」을 개정하여 초지 조성 및 초지 전용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농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였다.

(법무담당관실 사무관 남동익)

법 률 명	주 요 제·개 정 내 용	공 포 일 (시행일)
「미강착유장려법」 (폐지)	○ 착유업체의 자유로운 미강수집 및 착유활동 등 업체간 자율경쟁을 보장코자 폐지	'97. 3. 7 ('97. 3. 7)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부분개정)	○ 농수산물의 물류표준화에 필요한 포장자재, 시설 및 기계화, 자동화장비의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근거 마련 ○ 유기농산물의 품질기준 설정 ○ 거래되기 전단계의 농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 조사 실시 근거 마련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도 강화, 유통관리 전담기관의 기능확대	'97. 3. 7 ('97. 9. 8)
「초지법」 (부분개정)	○ 초지조성심의위원회 폐지 ○ 단지조성지구 지정·고시제도 폐지 ○ 초지조성 전용허가권자를 시장·군수로 일원화 ○ 초지조성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 이전시 승인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로 완화	'97. 4.10 ('98. 4.11)
「잠업법」 (부분개정)	○ 뽕잎, 누에 등을 양잠산물로 규정 ○ 보급종 누에씨의 수출검사를 의무검사에서 희망검사로 변경 ○ 생사류의 수급안정을 위해 설치되었던 잠업진흥기금 폐지 등	'97. 8.22 ('97.11.23)
「한국진도견보호육성법」 (전문개정)	○ 법명을 "韓國珍島犬保護育成法"에서 "진도개보호육성법"으로 변경 ○ 우수한 혈통을 유지·보전시키기 위하여 전문사육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사육장을 "진도개시범사육장"으로 지정	'97. 8.22 ('98. 2.23)

법 률 명	주 요 제 개 정 내 용	공 포 일 (시행일)
「낙농진흥법」 (전문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과 가격을 민간자율로 조절할 수 있도록 축협중앙회등 낙농단체로 구성되는 「낙농진흥회」 설립 ○ 낙농진흥회는 낙농가와의 계약에 따라 구입한 원유를 유가공업체등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개별집유체계를 집유조합으로 일원화 	'97. 8.22 ('99. 1. 1)
「환경농업육성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생산에 있어 농약·비료 및 가축사료 첨가제 등 화학자재의 기준사용량을 준수하도록 하고,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환경농업'으로 정의 ○ 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 주체별 책무와 역할 규정 ○ 일반환경농산물을 제외한 환경농산물을 생산하여 환경농산물 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하여야 하며, 시판물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97.12.13 ('98.12.14)
「축산물위생처리법」 (전문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명을 "畜産物衛生處理法"에서 "畜産物加工處理法"으로 변경 ○ 종전의 수육, 원유에 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등도 축산물의 범위에 포함시킴 ○ 축산물에 들어있는 항생물질, 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과 축산물에 사용하는 첨가물의 사용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농림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 ○ 작업장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에 대한 규정 신설 	'97.12.13 ('98. 6.14)

2. 농림행정 쇄신 및 규제 완화

가. 주요 추진상황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타결과 1995년의 WTO체제의 출범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이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함에 따라, “민간의 창의와 사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하였다.

우리 사회와 행정을 둘러싼 이런 국내외의 여건변화를 배경으로, 정부는 1993년 이후부터 ‘행정쇄신위원회’와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쇄신 및 규제완화과제를 발굴하여 민간의 창의를 제고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각종 행정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거나 완화하였다.

농림부는 1994년부터 ‘농업인 불편신고센터’를 '94년부터 설치하여 농업인에게 불편을 주거나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농업인의 불편해소와 부담경감에 주력하였다.

농림행정분야는 1993~1997년에 총 438건의 행정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 1997년말 총 408건의 개혁과제를 개선하였고, 미완료과제 30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법령 등의 개정작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표 2-1-10>

농림행정 쇄신 및 규제완화 추진상황

(’97.12.31 현재)

과제 발굴	계	행정위과제	경제행정규제 개혁과제	농업인불편 해소과제
확정 과제	438	185	117	136
완료 과제	408	167	108	133
미완료과제	30	18	9	3

나. 주요 개선내용

1997년도 농림분야의 행정규제 완화는 농업관련산업에 대한 진입제한 완화 및 사업자의 부담경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

었는데,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통분야>

- 농·수·축협의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
 - 농·수·축협이 설립한 공판장 및 집하장에만 면제되던 개발부담금을 유사한 유통시설인 물류센터도 면제대상에 포함시킴
- 자연녹지지역에 농수산물 직판장 건립 허용
 - 자연녹지지역에 1만㎡ 미만의 대형직판장 건설이 가능하도록 함(종전에는 1천㎡ 미만만 가능)

<축산분야>

- 축산물 가공관리업무의 일원화
 - 종래 이원화되었던 축산물가공식품 관리체계(생산·도축:농림부, 가공·유통·판매: 보건복지부)를 농림부로 일원화
- 축산물위생용기의 제조업 허가제의 완화
 - 축산물위생용기의 제조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

<산림분야>

- 독립가 인정요건 완화
 - 소유산림: 50ha → 30ha
 - 용 재 림: 20ha → 10ha
 - 유 실 수: 10ha → 5ha로 독립가 인정요건 완화
- 산림형질변경 허가지내 토사석 반출 개선
 - 산림을 형질변경하여 발생하는 토사석을 반출할 때 별도의 반출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개선하여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시 토사석 반출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반출시에는 별도의 반출허가 생략

(행정관리담당관실 사무관 박수진)

3. 재해지원 등 추진

1997년도에 호우(5회), 우박(5회), 태풍(2회), 해수범람(1회), 가뭄(1회), 돌풍(1회), 폭풍설(1회), 폭풍우(1회)등 총 17차례의 크고 작은 재해가 있었다

주요피해로는 농작물 침관수등 66,498ha, 농경지 유실·매몰 2,512ha, 수리시설·방조제 788개소, 비닐하우스 124ha, 축사파손 199동, 가축폐사 86만 6,000 마리, 그밖에 인삼·버섯 재배시설, 잠실·초지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농가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원기준인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고, 재해농가에 복구비용 부담경감을 위하여 재해복구 지원단가를 인상하였다.

대파대의 경우 일반작물 및 인삼에 대하여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수·화훼 및 버섯류의 경우에도 일반작물기준으로 대파대를 지원받는 등 불합리하였던 것을 피해작물에 상응한 대파대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개정하였다.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초지, 비닐하우스, 잠실복구비, 가축입식비, 농업시설 등의 복구지원단가를 인상하여 실질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재해지원제도를 개선하였다.

<표 2-1-11> 과수·화훼·버섯류 대파대 지원단가

(단위 : 천원/ha)

과수(표목기준)		화훼(종묘기준)		버섯류(종묘기준)
사과	1,700	백합	18,200	30,000
배	1,600	안개초	10,500	
단감	1,400	장미	10,500	
복숭아	1,200			
포도	1,200			
감	2,100			
귤	2,100			

자료 : 농림부 농산원예국

<표 2-1-12>

복구지원단가 상향조정 내역

	종 전		개	선
○ 초지복구비				
- 경운초지	2,930,000	원/ha		3,130,000
- 불경운초지	2,115,000	"		2,290,000
○ 비닐하우스				
- 파이프비닐온실	21,500	원/m'		71,740
- 철판페트온실	78,000	"		80,120
- 철판재하우스	5,810	"		6,070
○ 잠 실				
- 치잠공동사육사	157,000	"		163,200
- 애누에공동잠실	75,000	"		78,000
- 일반잠실	40,800	"		42,400
- 조상육잠실	14,300	"		14,800
○ 가축입식(돼지)				
- 자 돈	45,630	원/마리		47,000
- 육성돈	75,000	"		78,000

자료 : 농림부 농산원예국

<표 2-1-13>

'97 재해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지원액 합 계	직 접 지 원			간 접 지 원					농업 시설
	계	농약대	대과대	계	영농자금 이자감면	수업료 면제	무상양곡 지원	이재민 구호	
95,261	6,155	2,103	4,052	9,144	3,096	580	4,965	503	79,962

자료 : 농림부 농산원예국

(농산기술과 식물검역사무관 김후동)

4. 농정모니터제 운영

1990년대 들어 농업투용자가 대폭 강화되면서 농정시책에 대한 효과적인 피드백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PC통신(농림수산정보망, 약칭 AFFIS)을 이용한 농정모니터제도가 도입되었다.

1996년 4월 “농촌현장의 목소리”(VOICE)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농정모니터제도는 제반 농정시책에 대한 현장 농업인, 일선 농정실무자 및 농업관계자들의 평가·비판·문제제기·제안 등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우리 농업과 농정의 개선·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총 1,200명의 농업인·공무원 및 생산자단체 직원을 연결하는 폐쇄형 시스템으로 구축되었다.

1997년초에는 회신체제가 확립되었고, 1997년 4월 15일에는 개방형 회원제로 전환됨으로써 농업인·농업관계자들과 농림부간에 폭넓은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모니터 선정도 자발적 가입방식으로 변경되었다.

1998년 6월 초까지 농정모니터망을 통해 총 557건의 건의와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자발적으로 가입한 모니터의 비중('98. 6. 10 전체모니터 579명 중 102명)이 증가하면서 의견제출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표 2-1-14>

건의·제안 수신 추이

	'96				'97				'98 (6.10현재)	
	2/4	3/4	4/4	계	1/4	2/4	3/4	4/4		계
모니터 의견 수신건수	37건	74	39	150	66	41	46	53	206	201건

농정모니터망은 전자게시판과 전자메일기능을 이용, 의견·제안을 접수·회신하는 것 외에도 1997년도에는 온라인 토론을 50회 개최하여 농촌 여론을 수집하였으며, 모니터활동을 돕기 위해 주요 시책정보도 제공하였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사무관 김영준)

5. 축산식품 가공업무관리 일원화

제185회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997년 11월 18일 「축산물가공처리법」(축산물위생처리법개정법률안)이 본 회의에 상정되어 참석의원 158명중 찬성의원 90명(반대21, 기권47)으로 심의·의결된 후,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 및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1997년 12월 13일 공포되었으며 공포된 「축산물가공처리법」은 '98. 6. 30 시행령, '98. 7. 3 시행규칙이 공포되면서 법 시행을 하게 되었다.

이로써 1985년 7월 1일 「축산물가공처리법」(농림부)에서 「식품위생법」(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관된 축산식품 가공업무가 13년만에 환원되었다. 더욱이 이번에는 1985년에 「식품위생법」으로 이관된 축산물가공업이외에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및 축산물 판매업도 「축산물가공처리법」 소관 사항으로 변경됨으로써, 우리 나라도 선진국(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덴마크·화란등)들과 같이 농장부터 식탁까지(farm to table) 전문적·체계적으로 일관된 위생관리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축산식품관리업무가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일원화됨으로써

- 가축의 사육·도축·가공·유통·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전문가에 의한 일관성 있는 위생관리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을 생산·공급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 위생문제 발생시 역추적하여 축산식품위생과 가축방역을 연계하여 원인을 규명 후 제거함으로써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식품의 위생수준 향상에 효율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고,
- 산지소값이 큰 폭으로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식육판매점의 쇠고기 가격이 하락하지 않음에 따른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 국내 및 수입축산식품의 위생검사를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일정하게 수행함으로써 국제협정(WTO/SPS)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으며,

- 그간 농림부가 아무런 권한과 책임도 없이 지원해 왔던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사업('91~'97, 4,586억원)을 농림부 책임하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법제명이 「축산물위생처리법」에서 축산물가공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되기 이전과 같이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변경되었으며
- 도축(계)장 등의 인·허가 관리형태가 작업장의 설치 허가후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던 것에서, 영업의 허가(또는 조건부 허가후 조건이행의 신고)를 받도록 변경되었으며,
- 지금까지는 도축(계)업, 집유업 및 용기등 제조업만이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한 허가사항이었으나,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도축(계)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및 축산물보관업이 허가(또는 조건부 허가후 조건이행의 신고)사항이 되며,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및 용기등 제조업은 신고사항이 된다. 따라서 농림부가 관리업무이던 용기등 제조업이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완화되며, 허가사항인 축산물가공업 및 축산물보관업과 신고사항인 축산물운반업 및 축산물판매업이 보건복지부(식품위생법)로부터 농림부(축산물가공처리법)로 이관되게 되며,
- 축산물의 범위가 현행 수육 및 원유에서 식육(수육)·원유·식품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으로 확대되고,
- 축산물작업장의 범위도 도축(계)장 또는 집유장에서 도축장·집유장·축산물가공공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으로 확대되며,
- 「식품위생법」 소관인 식품판매업소 중 식육판매업소·식육부산물 전문판매업소·우유류판매업소·축산물수입판매업소가 앞으로는 축산물판매업소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영업 신고대상이 된다.

축산물 가공업무 일원화 추진경위

- 1994년 6월 WTO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축산물가공업무 일원화 건의
<사유> : 시장이 개방된 여건에서 생산자의 가공산업 참여로 농가소득 증대 및 축산식품의 위생 및 안전성 제고
 - 1994년 10월 : 국무총리실에서 조정의견을 제시했으나 미합의
 - 축산물 1차 가공품(정육·포장육·시유 등)은 농림부에서 관장 의견

- 생산자·소비자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산물가공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할 것을 건의
 - 1995년 2~3월 : 축협중앙회(전국조합장 일동)와 서울시·충남도에서 행정쇄신위원회, 농림부 및 보건복지부에 건의
 - 1996년 2월 : 소비자·농민연대 37개 단체(소비자단체 9, 생산자·농민단체 28)에서 행쇄위에 농림부로의 일원화 건의

- 1997년 2월 : 행정쇄신위원회는 축산물가공식품관리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하기로 심의·의결
 - 1995년 3월 : 행정쇄신 과제로 채택하여, 2년간 33개 단체와 유관기관에 의견 문의와, 현지 합동점검 및 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 33개 기관중 30개 행정기관·시도·단체가 농림부로 일원화 동의
 - 국무총리실에서 대통령께 보고후 관계법(축산물위생처리법·식품위생법)을 개정토록 관련부처에 통보('97. 4. 7)

- 정부입법 추진경과
 - 1997. 5. 28 : 농림부에서 “축산물위생처리법개정안”을 경제차관회의에 상정하였으나, 보건복지부 반대로 유보

- 1997. 7. 10 :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
- 6개 부처 차관회의에서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토록 결정
- 1997. 7. 14 : 경제장관회의에 동법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유보됨
- 재경원 주재로 관련 부처간에 협의한 후 재상정기로 결정
※ 재경원 1급 주재로 관련부처 협의를 했으나, 담보상태

□ 1997. 7. 11 : 축산물위생처리법개정 입법청원

- 청 원 자 : 한국낙농육우협회장 김남용 등 축산 관련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 236명
- 소개의원 : 신한국당 이상배 의원 등 155명

□ 1997. 7. 28 :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청원심사 소위원회 개최

- 축산물가공업무 일원화를 위한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은 입법 청원
절차대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제안 추진기로 결정

□ 1997. 11. 3 :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키로
하고, 법률안 심사소위 회부 결정

□ 1997. 11. 5 :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안 기초·
성안

□ 1997. 11. 10 : 제9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 의결

□ 1997. 12. 13 : 축산물가공처리법 공포

6. 낙농제도 개선

「낙농진흥법」은 1967년 1월 16일 법률 제1873호로 제정되어 그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WTO 출범 등 개방화시대에 대응해 나가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낙농가 등은 개방화시대에 맞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1988년 법 개정 여부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이래 10여년의 진통 끝에 1997년 8월 22일 「낙농진흥법」이 법률 제5,349호로 개정 공포되었다.

개정된 「낙농진흥법」은 축협중앙회와 낙농관련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낙농진흥회”를 설립하여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과 가격을 민간자율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원유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심의회가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해결하고 업계 스스로 신속한 생산 조절을 통해 수급안정을 기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원유의 수급안정과 낙농가의 보호를 위해 낙농진흥회는 낙농가와 의 계약에 따라 원유를 구입하고 유가공업체 등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원유의 소량·중복 집유 체계에 따른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원유의 집유를 지역축협 및 낙협으로 일원화하도록 하였다. 유가공업체가 실시함으로써 낙농가 및 소비자의 우유위생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던 원유의 검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제삼자가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검사 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축산위생과 수의사무관 곽형근)

제 2 장 농촌발전대책 및 선진농업의 기반구축

제 1 절 농업전문경영체의 육성

1.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업인 육성

국내 농림업이 생산성 높은 기술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생산기술과 고급경영기법을 실천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농업을 선도할 농업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농업인후계자를 1981년부터 선정하기 시작하였으며, 1992년부터는 매년 9,000명(어업인 후계자 1,000명 제외) 수준으로 증원하여 선발, 지원하고 있다.

일정수준의 경영기반과 경력, 발전가능성을 갖춘 농업인을 대상으로 199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업농육성사업은 1996년 14,640명, 1997년에는 11,644명을 선정, 지원하였다.

<표 2-2-1> 1997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농 업	축 산
계	20,170	15,504	4,666
농업인 후계자	8,526	3,860	4,666
전업농	11,644	11,644	-

주 : 축산전업은 1995년부터 축종별 경쟁력제고 사업에서 별도 추진
자료 : 농림부 농업정책국

농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는 '96년 2,200만원, '97년 2,660만원 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균 5천~1억원을 개인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차등 지원받았으며, 자금지원 이외에도 기술교육, 해외연수, 각종 정보 등을 제공받았다.

1995년부터 경영규모 확대와 시설·장비 현대화로 국제경쟁력을 갖출 정도로 발전한 농업경영체를 선도농업경영체로 선정, 그 사업장을 모델농장으로 조성하여 농과계 학생과 농업인에 대한 현장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996년에 70개소를 선발하여 개소당 8,000만원씩 지원하였고, 1997년에는 55개소를 선발하여 8,000만원씩 지원하였다.

(농촌인력과 사무관 오병석)

2. 품목별 농업인 교육

국제화·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기술농업의 조기실현을 통한 국제기술경쟁력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안정된 소득원 확보를 위한 농가의 농업기술정보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도농촌진흥원, 시군 농촌지도소에서는 128만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관별로 영농기술, 농업기계, 농촌생활과학, 4-H회원 교육 등을 실시하여 높은 수준의 영농기술과 과학적인 생활기술의 습득은 물론 수입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태세와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1) 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새기술 습득을 희망하는 농업인 741명을 대상으로 지역농업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영농지도자의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소득작목 전문기술 및 경영기법, 농정시책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2) 전업농가 교육

21세기 우리농촌과 농업발전의 주역을 육성하기 위한 전업농육성사업을 1997년 자금수혜자 26,563명(중앙 1,542, 지방 25,021)을 대상으로 전업농가

로서의 사명감 고취와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자질함양을 위해 농정시책·정신교육, 품목별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였다. 밭작물, 채소, 화훼, 특작분야는 중앙단위 연구소·시험장에서 3일간, 과수분야는 특화작목시험장·연구소에서 2일간, 쌀분야는 지방단위에서 2일간씩 각각 실시하였다.

(3) 선도개척농 교육

선도개척농으로서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품목별 전문기술교육을 통한 선도농업 실천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경종 2개분야, 원예 6개분야, 축산 4개분야의 29명에 대해 4주간 교육을 실시하였다.

(4) 선도농업경영체 교육

생산기술, 경영기법등 모든 방면에서 앞서가는 선도농업경영체로 선발된 55명에 대하여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모델화를 위하여 정부시책, 교육기법, 교육장설치운영, 현지견학 등 4일간 교육을 실시하였다.

(5) 산업기능요원 교육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예정인 농업인 예비후계자 982명을 대상으로 각도 농촌진흥원에서 3일간에 걸쳐 성공적 영농정착을 위한 농정시책 교육과 영농기술 및 경영교육을 실시하여 미래농촌의 주역양성에 기여하였다.

(6) 신규농업인후계자 교육

1996년에 선정된 농업인후계자 및 사업승계자 8,594명을 대상으로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할 수 있도록 시군 농촌지도소에서 2일간씩 교육을 실시하였다.

(7) 영농공개강좌

KBS와 공동으로 해당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하여 전국 18개지역에서 5,398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화품목에 대한 공개 강좌를 실시하였다.

(8) 개방화에 대응한 선도지도자 교육

개방화·세계화 시대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중견 농촌지도자의 지도력 함양을 위하여 1,954명의 선도지도자에게 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인의 적응 태세, 지도자의 역할과 농업인조직 육성방안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9) 품목별 농업인 상설 교육

지역별 주력품목을 대상으로 품목별조직 농업인 중심의 상설교육을 실시하여 자율학습능력을 배양하고 전문기술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군별 3개 이상의 품목을 선정, 77,239명을 대상으로 품목별 생산 및 유통단계별로 연 4회에 걸쳐 상설교육을 실시하였다.

(10) 새해 영농설계교육

1~2월중 전국적으로 실시된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작목기술반, 생활개선반 등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총 755,051 농가를 대상으로 전년도 영농상의 문제점 개선, 수입개방에 대한 인식과 자신감 고취, 작목별 개방화 대응전략과 핵심기술, 주요농정시책 등을 교육함으로써 농업인이 새해영농을 알차게 설계하고 영농기술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11) 농업기계 교육훈련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중앙단위교육에서는 전국 농업기계교관 207명을 대상으로 새로 보급되는 기종의 취급조작 및 정비수리 전문기술 등 신기종 농업기계교육을 1주일간 실시하였다. 또한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농업계 실과교사 108명을 대상으로 정비수리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업기계 정비기능사 1급 자격소지자 60명에 대한 보수교육과, 농업 회사법인 대표 등 250명에게 회사설립에 필요한 등기절차와 농업기계 공동관리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농촌진흥원과 농민교육원이 주관하는 도단위교육에서는 기계화영농사 915명과 일선 농촌지도사 287명을 대상으로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의

기종을 단일반으로 편성하여 3주간의 정비수리교육을 실시하였다.

농촌지도소 주관으로 실시하는 시군단위교육에서는 이앙기, 관리기, 경운기 등 소형기종 구입농가 중심의 농업기계 실수요자 15,414명을 대상으로 포장작업과 고장이 많은 부분에 대한 점검정비요령 등을 교육하였으며, 농촌부녀자의 영농역할 확대에 따라 농업기계보유농가 부녀자 5,247명에게 운전조작과 포장작업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도로주행형 기종 보유농가 137,172명에게 주행중 안전을 위한 보수 교육을 실시하였다.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은 154개소의 농촌지도소에서 420명(농기계교관 146명, 수리요원 274명)의 수리 전문지도반을 편성, 204대의 순회차량을 이용하여 30,669개의 오지마을을 28,748회에 걸쳐 순회하면서 202,806대의 고장기계를 수리해 주었으며, 자가정비수리 능력을 향상을 위해 258,297명에게 대해 개별적 기술지도를 실시하였다.

(농업진흥청 기술연수과 농촌지도관 김진군)

3. 농업계 교육 활성화

전국에 약 3만여명의 농림수산계 고교생이 재학중이나, 입학정원이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졸업후의 영농종사율도 20% 미만에 불과하다. 이는 농업여건이 타산업에 비하여 어렵기 때문이지만 그보다는 농업계학교가 실험실습을 위한 첨단시설장비의 부족으로 내실있는 농(어)장 경영실습과 선진기술교육이 어려워 영농기반 및 의지가 있는 학생들도 농림수산계 학교 입학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전문농어업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대학과 농수산계대학도 연구시설 미비, 시설장비의 노후 등으로 선진과학기술교육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국제화·개방화 속에 농림수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기업농 체제로의 이행 등 농업구조의 개선을 선도할 전문경영인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계 고등학교 중 농고는 도별 1개교씩 9개교, 수고는 해역별 1개교를 자영자양성학교로 지정하여 집중 지

원하였다. 농업계 전문학교는 농촌진흥청 산하에 농업전문학교를 설치하고, 농림수산계대학은 지역, 기능 분야를 고려하여 16개 특성화대학을 선정, 지역 농림어업 발전과 과학기술연구개발센터로 활용하도록 지원하였다.

1997년 12개 자영자 양성 농수산고등학교에 138억원, 8개 특성화대학에 80억원 등 총 218억원을 실험실습 시설·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지원하였으며, 한국농업전문학교에 23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2-2>

농림수산계 학교지원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94	'95	'96	'97
자영농·수고	-	184	138	138
농업전문대	-	13	-	4
특성화대학	20	50	60	80

자료 : 농림부 농업정책국

(농촌인력과 사무관 전종철)

4. 농업경영혁신 종합지원

농업 투·융자 확대 및 구조개선으로 영농이 규모화, 현대화되고 있으나 농업인의 경영능력 부족으로 부실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동일한 영농조건으로 경영체의 기술, 경영 여하에 따라 생산량 및 수익성의 큰 차이가 나타나는 등 농업경영혁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경영진단, 경영 및 정보화 교육실시, 컨설팅서비스 제공, 종합자금 지원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첫째, 1998년말까지 주요품목 40개를 대상으로 표준진단표를 보급하여 스스로 문제점을 보완토록 유도하고 농촌진흥청에 학계, 컨설팅업계, 관계기관, 농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업경영진단협의회를 구성하며, 농·축협을 통한 각종 경영정보제공과 농업자금 종합 지원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둘째, 농업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공통교재를 제작하여 농업

인 경영교육 과정에 활용토록 보급하였다.

셋째,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전문경영체에 대한 집중경영교육이 실시되도록 농업법인경영체, 전업농육성대상자, 후계자 등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현장교육 등 집중경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넷째, 농업인의 교육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농업인들은 진단표 작성과 다른 농가와의 비교를 통해 스스로 농업경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농촌인력과 사무관 김영준)

5. 법인경영체의 육성

가.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경영체로서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 단체가 설립하여 협업적 농업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1991년 25개소, 1992년 61개소, 1993년 232개소, 1994년 1,012개소, 1995년 1,250개소, 1996년 1,117개소, 1997년 517개소 등 총 4,214개소가 설립되었다.

매년 설립이 증가하는 이유는 첫째, 개별경영보다 법인화하여 경영하는 것이 영농의 규모화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자본·기술집약형 농업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더 유리하고, 둘째, 정부의 각종 세제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농업정책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도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7년 1월부터 시행된 정부지원 자격요건 강화로 자금 수혜 목적의 설립은 앞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은 크게 영농조합법인 자체에 대한 지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으로는 첫째,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농지소득 전액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고 기타소득은 조합원당 1,200만원 공제후 그 잔액에 대하여만 과세되며, 농약, 비료, 농기계 등 농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둘째, 조합법인 고유의 업무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사업소세가 면제되며 영농조합법인 소유 농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가 분리 과세된다.

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으로는 첫째,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교육세가 감면되고 법인의 농지소득에 대한 배당소득도 면제된다. 농지이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조합원당 연간 1,200만원까지 감면된다. 둘째,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영농조합법인이 지역농업을 유지·발전시키는 중심적인 농업경영체로 자력 성장할 수 있도록 농협 및 시·군, 농촌지도소 등이 경영 및 기술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나.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가의 영농대행과 영농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991년부터 위탁영농회사제도를 보완·발전되었다. 농산물 생산은 물론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까지 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94. 12. 22)에 설립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자격은 농업인과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로서 설립자가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형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사항을 살펴보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법인세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 감면, 농업경영이나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 농업회사법인이 구입하는 농약, 비료, 농업기계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업회사법인이 업무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이 면제된다. 이외에도 정부에서는 농업기계 구입자금, 농업기계의 보관창고 및 간이수리시설자금, 농업경영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하였다.

농업회사법인은 1990년에 6개소를 시작으로 1991년 61개소, 1992년 171개소, 1993년 282개소, 1994년 339개소, 1995년 337개소, 1996년 300개소, 1997년 99개소 등 총 1,595개소가 설립되었다.

다. 농업회사법인 등 법인경영체 지원

법인경영체는 생산뿐 아니라 관련 2·3차 산업기능을 포괄하는 농업경영(Agribusines)의 중심체로서 지역 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지원을 하였다. 그러나 일부 법인경영체의 경우 사업에 대한 비전없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향이 있고, 경영체 운영 경험 및 세무, 회계, 마케팅 등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등과 규모확대, 시설현대화 등을 위한 추가자금과 운영자금 지원체제 미비 등으로 부실운영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는 출자 등을 통해 자체 조달하도록 유도하고, 법인경영체의 정책사업 대상 신청자격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실적, 구성원의 자질, 자본(출자)규모, 사업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등 정책사업 대상자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성실하게 운영하는 법인경영체만 지원받도록 하고 있다.

법인경영체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사업실적 보고, 경영장부 기장을 의무화하고,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에 대한 법인명의의 등기 실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법인경영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마케팅, 회계, 세무, 사업계획 및 실적평가 등에 필요한 경영교육, 정보화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수경영체에 대한 후속자금으로 1997년도에 2,000억원을 지원하였

으며, 1998년도에 5,000억원의 농기업경영자금을 조성, 지원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촌인력과 서기관 신영정)

제 2 절 주요곡물의 자급기반 확충 및 시설현대화

1. 생산기반 확충

가. 일반 경지정리사업

일반경지정리사업은 기계화 영농기반 확충을 통한 노동력 절감 등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업구조개선사업의 핵심사업으로 1960년대부터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그 동안 경지정리사업은 연간 2~3만ha 규모로 연차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1980년대 국고 50%, 지방비 30%, 주민부담 20%이던 보조율을 지방비 및 농민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왔다. 1993년도 봄 마무리부터는 주민부담을 없애고 국고 80%, 지방비 20%로 전액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1993년 봄마무리사업까지 총 소요사업비의 80%를 국고에서, 20%를 지방비에서 지원해 오던 것을 1993년 가을착수부터 사업비 상승억제를 위하여 시행면적 기준으로 예산단가의 80% 해당액만 국고에서 정액지원하고, 국고지원액 이외의 소요사업비는 지방비로 부담토록 하였다. 이는 지방 재정자립도가 낮고, 경지정리 대상면적이 많이 남아 있는 농어촌 시·군에서 추가되는 지방비를 부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을 기피하는 등 계획물량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1995년 가을착수분부터는 예산단가의 10%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국고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고 지원방식을 제한적 정률제로 개선하여 지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수준

을 다소 향상시켰다.

그러나, 아직도 소요사업비에 비해 예산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며, 정부는 실제 소요 사업비 수준으로 예산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지정리사업은 쌀 뿐만 아니라 채소 등 국민 식생활의 기본이 되는 식량자급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경운, 이앙, 방제, 수확 등 일련의 영농과정을 기계화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도 이를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997년 봄까지 경지정리사업의 전체적인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목표 논면적 80만ha의 82%인 65만 8천ha를 국고 3조 3,137억원, 지방비 1조 1,861억원, 농민부담 2,711억원 등 4조 7,709억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다. 1997년에는 국고 5,023억원과 지방비 2,474억원 등 총 7,497억원을 투자하여 1996년 가을에 착수한 2만 7천ha를 5월에 완료하였고, 1997년 가을에 2만 2,600ha를 착수하여 1998년 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표 2-2-3> 일반경지정리 추진현황

(단위 : 천ha)

구 분	총논면적	목 표	'97봄까지	'98이후
사 업 량 (천ha)	1,163	800(915)	658(755)	142(160)
- 진 흥 지 역	745	665(760)	572(655)	93(105)
- 진 흥 지 역 밖	418	135(155)	86(100)	49(55)

주 : 면적은 마무리 논면적기준, ()는 구역면적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1970년대 이전에 경지정리된 지역은 평야부의 집단화된 쌀생산 핵심 우량 농지이나 당시의 영농수단인 경운기 등을 이용한 영농방식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었다. 따라서 필지규모가 600~1,200평으로 작고, 농로가 없거나 협소하며, 용수로와 배수로가 겸용 또는 토공으로 되어 있어 대형 농기계

작업과 물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평야부의 집단화된 쌀 생산핵심지역의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재정비함으로써 쌀생산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1994년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고 이를 재원으로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만ha를 개발목표로 설정하고, 1994년 가을에 5천ha를 시작으로, 1997년 봄마무리까지 4만1천ha를 완료하고, 1997년 가을에 1만4천ha를 착수하여 1998년 봄에 1만4천ha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이미 경지정리된 집단화된 우량농지 중 지역주민의 사업시행 희망도와 생산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필지규모를 3천평 이상으로 대형화하고, 용수로와 배수로를 매필지마다 접하도록 설치하는 동시에 콘크리트 구조물화하는 등 시설을 현대화하며, 농로는 기존의 폭 1.5~4m를 4~7m로 확장·정비하여 대형기계화 영농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표 2-2-4> 연차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

(단위 : 천ha)

구 분	목 표	'97까지	'98계획	'99이후
사 업 량	200	41	14	145

주 : 봄마무리 기준임.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다. 밭기반 정비사업

밭기반 정비사업은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을 위하여 생산기반 시설이 취약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암반관정 등의 수원공개발, 농로 개설, 밭경지정리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1970년대에는 일부지역에서 밭용수개발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쌀증산 및 고미가정책 등의 영향으로 우량밭이 논으로 전환되어 밭정비가 정착되지 않았다. 1990년대 들어 국민소득증대와 더불어 식생활이 변화하면서 신선채소, 과일 등에 대한 선호가 증가

하였다. 이에 따라 발작물의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밭기반정비 여건이 성숙되어 1994년부터 전국 단위로 밭기반정비를 시행하게 되었다.

사업 초년도인 1994년에는 국고지원율이 60%로 지방비 부담이 어려운 일부지역에서는 지방비(40%)를 부담하지 못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고, 사업추진방식도 착수 당해년에 완료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고지원율을 1995년에 70%, 1996년에 80%로 상향 조정하였고, 사업추진 방식도 착수 당해년도 완료방식에서 2개년차 사업완료 방식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밭관정의 전기요금이 양곡생산 전기료보다 과중하여 1997년 6월부터 양곡생산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양곡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도록 하여 농민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밭기반이 정비된 지구에 시설채소 등 관련사업과의 연계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국민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농업경쟁력 제고, 아름다운 국토공간을 가꾸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논으로 확산 재배되고 있는 발작물을 밭으로 유인하여 쌀자급면적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어, 앞으로도 주요 시책사업의 하나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표 2-2-5>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천ha, 억원)

구 분	총발면적	목 표	'97까지	'98계획	'99이후
사 업 량	761	110	21.6	8	80.4
사 업 비	-	25,794	4,305	1,987	19,502

자료: 농림부 농촌개발국

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어촌지역의 도로의 확·포장사업은 1970년대에 새마을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추진되었고, 1985년부터 농어촌소득원 도로사업으로 농림부 주관하에 추진되었다. 1990년 12월 「지방양여금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 제정으로 농어촌소득원 도로사업이 내무부로 이관되어, 1991년부터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통합되어 추진되고 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농어촌생활권 위주의 개발로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개선 등에는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대형농기계의 보급확대 등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1995년도에 별도의 기계화경작로사업을 농림부 주관하에 시작하였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농로는 개설되었으나 농로가 협소하고 비포장되어 나타났던 기계화영농, 농산물 운반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였고, 주산단지와 미곡종합처리장 등 농업의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간의 유기적인 연결로 유통구조개선에 기여하였다.

기계화경작로 사업이 농업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생활도로로도 이용되고 농촌에 개발 파급효과가 큰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표 2-2-6>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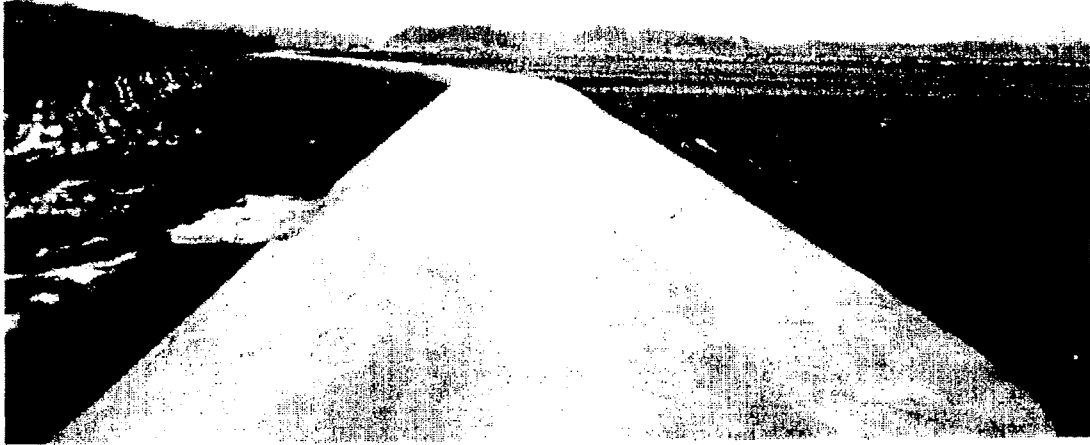
(단위 : 천km, 억원)

구 분	목 표	'97까지	98계획	99이후
사 업 량	22	3.5	2.1	16.4
사 업 비	28,600	3,477	2,130	22,993

자료: 농림부 농촌개발국

<그림 2-2-1>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마. 배수개선사업

수해상습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으로 1997년에는 1,437억원을 투입하여 약 9천ha를 준공함으로써 총 대상면적 20만7천ha중 8만1천ha를 완료하였다. 호우시 하루 이상 침수되는 지역에는 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등을 설치하고, 지하수위가 높아 과습한 지역에는 흡수관 등 지하암거 배수시설을 설치하였다.

<표 2-2-7>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ha)

구 분	총대상	%	'97까지	%	'98계획	%	'99이후	%
지표배수	174	100	79	46	4	2	91	52
지하배수	33	100	2	5	-	0	31	95
계	207	100	81	39	4	2	122	59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및 방조제 등의 수리시설을 개수 또는 보수하여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각종 재해의 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1997년도에 수리시설개보수에 투입된 예산은 총 1,919억원으로, 농조수리시설 개보수에 1,595억원,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에 198억원 및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에 126억원이 투입되었다. 또한 1994년부터 계속된 가뭄으로 물이 고갈되거나 저수량이 적은 저수지의 준설 사업에 304억원이 투입되었다.

<표 2-2-8>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개소)

구분	총대상	%	'97까지	%	'98계획	%	'99이후	%
농조수리시설	12,708	100	4,706	37.0	109	0.9	7,893	62.1
국가관리방조제	91	100	46	50.5	9	9.9	36	39.6
지방관리방조제	1,401	100	310	22.1	163	11.0	928	66.3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사. 농업용수 개발사업

농업용수개발은 예산에 비해 사업시행중인 물량이 많아 준공이 지연되고 사업효율이 저하됨에 따라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예산규모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규모 농업용수개발은 경북 성주, 경남 하사, 전북 동화 3개지구에 451억원이 투입되어 11,746ha를 공사중에 있다. 1997년도 중규모용수개발사업은 136개 지구에 2,433억원을 투입하여 23개지구 5,318ha를 준공하였으며, 소규모 지표수개발, 지하수개발, 한발대비 등 일반농업용수 개발에 825억원을 투입하여 영농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표 2-2-9>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계획

(단위 : 천ha)

총답면적	개발대상면적	'97까지	'98이후
1,176	1,100	889	211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아.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은 하천수계를 중심으로 한 대단위 지역을 권역으로 하여 농업용수 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 등을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수자원 확보와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은 물론, 상습침수를 해소하고 우량농지 창출 등으로 영농환경개선 및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1970년에 금강·평택지구를 시작으로 1996년까지 총 21지구 26만 7천ha를 추진하여 그중 1980년에 착수한 대호지구('96 완공) 등 14지구 14만 1천ha를 완공하고 7지구 12만 6천ha는 계속 사업중이다.

1997년에는 국고 2,101억원, 농지관리기금 670억원 등 총 2,771억원을 투입하여 새만금지구 등 7지구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1991년에 착공한 새만금사업은 국고 1,241억원, 농지관리기금 400억원 등 총 1,641억원을 지원하여 어업보상과 방조제 물막이공사를 추진하여 전체 공정의 33%를 달성하였다.

<표 2-2-10>

대단위 농업종합 개발사업 추진계획

(단위:ha, 억원)

구분	지구명	개발면적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규모			사업기간
				'96까지	'97실적	'98이후	
계	21지구	266,937	50,321	21,909	2,771	25,641	
준공	14지구	141,407	10,223	10,223	-	-	
시행중	7지구	125,530	40,098	11,686	2,771	25,641	
	영산강Ⅱ	20,700	3,524	3,151	150	223	'76~'98
	금강Ⅱ	43,000	4,572	696	320	3,556	'89~2004
	미호천Ⅱ	4,430	1,394	501	180	713	'89~2000
	홍보	8,100	2,224	689	300	1,235	'91~2001
	영산강Ⅲ-1	13,160	5,723	933	150	4,640	'85~2003
	영산강Ⅲ-2	7,840	2,414	645	30	1,739	'89~2004
	새만금	28,300	20,247	5,071	1,641	13,535	'91~2004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정비과 사무관 남궁박)

2. 생산·유통시설의 현대화

가. 원예특작부문 지원

원예산업은 생산·유통시설 시설현대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1997년에 생산자조직을 대상으로 4,545억원을 지원하여 시설채소 40개소, 양념채소 10개소, 고랭지채소 29개소, 과수 150개소, 화훼 15개소, 특작 145개소 등 총 389개소의 생산·유통단지를 조성하였다.

개소당 사업비는 시설채소 33억5,500만원, 양념채소 32억6,800만원, 고랭지채소 4억1,500만원, 과수 12억6천만원, 화훼 38억6,200백만원, 특작(버섯) 5억6,400만원이다. 지원조건은 보조 40%(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40%, 자담 20%이다.

현대화된 자동온실 보급은 유리온실 29ha, 경질판온실 1ha, 파이프비닐

온실 179ha를 설치·지원하여 품질고급화 및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첨단기술농업의 확산을 촉진하였다.

(채소특작과 농업사무관 염상열)

<표 2-2-11>

'97 품목별 지원실적

	사업량 (개소)	'97 지원내역(백만원)				
		계	국 고	지방비	용 차	자 담
계	389	454,514	91,578	91,128	180,905	90,903
고랭지채소	29	14,285	3,532	3,082	4,814	2,857
양념채소	10	32,680	6,536	6,536	13,072	6,536
시설채소	40	80,520	16,104	16,104	32,208	16,104
화 해	15	34,758	6,952	6,952	13,903	6,951
과 수	150	222,450	44,490	44,490	88,980	44,490
특 작	145	69,821	13,964	13,964	27,928	13,965

나. 인삼산업 육성지원

인삼산업은 「인삼사업법」에 의거 전매제에 의해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관리하여 오다가, 1996년 7월 1일 「인삼산업법」이 제정 발효됨에 따라 전매제가 폐지되고 인삼관련 업무가 재정경제원에서 농림부로 이관되었다. 농림부는 1997년도에 329억원을 인삼 생산기반 확충 및 경쟁력제고사업에 투자하여 인삼 재배 농가에 255억 6천만원을 용자 지원하였고, 우량묘삼 생산 및 보급사업 40ha, 6억 5,300만원, 재배시설 현대화사업 380ha에 34억 2천만원 그리고 인삼전용농기계 사업 50개소에 7억 2천만원을 지원하여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였다.

또한 인삼 생산지에 저장, 가공, 포장, 판매 등 인삼 종합처리시설 2개소에 25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다.

<표 2-2-12>

'97 인삼산업 육성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별	단위	사업량	지원내역				
			계	국고	지방비	용자	자부담
계			182,588	3,278	2,438	29,595	147,277
○인삼생산지원							
- 인삼식재자금	ha	2,130	170,400	-	-	25,560	144,840
- 우량묘삼생산	"	40	1,088	218	218	435	217
- 재배시설현대화	"	300	5,700	1,140	1,140	2,280	1,140
- 인삼전용농기계	개소	50	1,200	240	240	480	240
○인삼종합처리장	개소	2	4,200	1,680	840	840	840

(채소특작과 농업서기관 장승진)

다. 축종별 경쟁력제고 사업

1993년까지는 축사시설개선사업 위주로 지원하였으나, 1994년부터 축산물 수입 개방에 대비하고 생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축종별 경쟁력제고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축종별 경쟁력제고사업은 2000년대 축산업을 이끌어 나갈 전문화·규모화된 경영체를 육성할 목적으로 사육기반시설, 축사시설 현대화 및 장비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였다.

특히 1997년도에 한우는 비육사업은 축소하고 조사료 기반확충사업과 연계하여 번식농의 경쟁력 향상에 중점 지원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을 우려하여 축사시설의 신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돼지는 시설현대화 및 규모화 지원을 계속하여 사육기술 및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규격돈을 생산함으로써 돼지고기 수출확대에 기여하였고, 분뇨처리시설과 연계 지원하여 환경오염방지에도 노력하였다.

닭은 사육수수의 증가보다는 시설현대화와 자동화 및 규모화에 중점 지원하여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표 2-2-13>

'97 축종별 경쟁력제고사업 지원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량	지원내역		
		계	용자	자부담
한우	900개소	56,300	39,412	16,888
젖소	573	138,287	19,988	8,998
돼지	1,583	233,810	163,667	70,143
닭	551	116,598	76,500	40,098

자료 : 농림부 축산국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축종별 경쟁력제고사업으로 1997년까지 한우 4,100호, 젖소 2,300호, 돼지 1,600호, 닭 600호 등 총 8,600호가 축산 전업농 수준으로 규모화되었다.

(축산정책과 사무관 박상운)

라.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

2001년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비, 낙후된 국내 축산물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복잡한 유통구조의 단순화, 그리고 육류 유통을 부분육·냉장육·브랜드육 유통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축산물 종합처리장(Live-stock Packing Center)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까지 축산물종합처리장 10개소를 건설하여 국내산 육류유통량의 30~40%를 공급할 계획으로 1994년 12월부터 1997년 3월까지 3차에 걸쳐 사업대상지 10개소를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다. 1997년까지 축발기금에서 369억원을 지원하였다.

축산물종합처리장은 가축생산·도축·가공·판매(수출)를 일괄 처리하는 선진국형 유통시설로 축산물유통단계를 현행 5~6단계에서 3~4단계로 축소하여 축산물 직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유통 비용 및 마진을 20%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축산물유통과 수의서기관 이희우)

<그림 2-2-2>

<축산물종합처리장의 육가공라인>



3. 농업기계화

가. 농업기계 공급지원

농가의 농기계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기계화를 통한 농업생산비 절감 등 농업경영개선을 위해 1997년도에 경운기 7만9,200대, 이앙기 4만6,100대, 콤바인 8,100대, 곡물건조기 7,500대, 바인더 3,700대, 관리기 4만1,000대, 트랙터 2만2,700대 등 총 27만9천대를 공급하였다. 벼농사의 주요 농작업의 기계화율은 1996년 97%에서 1997년에는 98%로 높아졌다. 밭작물분야는 과수, 채소 주산단지 중심으로 기계화가 추진되었으나, 주요 농작업의 기계화율이 아직 42% 수준에 머물고 있어 밭작물분야의 기계화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표 2-2-14>

연도별 주요 농업기계공급 및 자금지원

(단위 : 대, 백만원)

	'93	'94	'95	'96	'97
○농기계공급	197,624	222,113	245,902	281,559	278,990
- 경운기	60,971	81,799	79,750	83,269	79,171
- 트랙터	13,029	14,523	17,282	19,605	22,652
- 이앙기	37,072	29,193	34,234	38,524	46,108
- 바인더	4,060	4,844	3,597	4,189	3,731
- 콤바인	3,920	8,063	8,047	7,611	8,091
- 곡물건조기	3,646	4,880	5,313	7,311	7,467
- 관리기	58,598	44,194	47,617	44,581	41,058
- 기타	18,328	34,617	50,062	76,469	70,712
○자금지원	631,244	617,835	679,798	743,875	819,138
- 보조	222,287	285,465	310,864	355,852	311,425
- 용자	408,957	332,370	368,934	388,023	507,713

자료 : 농림부 농산원예국

농업기계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3~1997년까지 「농기계 반값공급」을 실시하여, 일반농가에 대하여 농가당 200만원 이내에서는 구입비의 50%, 200만원을 초과시는 100만원을 보조 지원하였다. 농기계 이용조직(농업회사법인, 작목반등 공동이용조직) 및 쌀 전업농에게는 사업비의 50%를 보조 지원하였다. 농기계 반값공급기간 동안 총 3조 4,924억원의 보조 및 용자금 을 지원하여 122만6천대의 농기계가 공급되었다. 이로써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이 줄어들고 생산비가 하락하였으며 노령화, 부녀화에 따른 일손부 족에도 불구하고 적기영농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대형 트랙터와 축산용 농기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농기계 생산을 국 산화 생산함으로써 농기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고용을 창출하였다.

일반농가에 대한 농기계 반값공급이 소형농기계 중심으로 지원됨에 따라 소형 농기계 중심의 단순기계화를 촉진시켜 일손부족 해소에는 기여하였으 나, 저비용의 대형 일관기계화는 미흡하였다. 영농의 규모화와 대형농기계

의 일관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영농규모가 큰 농기계 이용조직과 전업농에 한하여 대형 농기계 중심의 보조지원을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농기계이용조직에 대하여는 40% 보조, 50% 용자로, 쌀전업농에 대하여는 20% 보조, 70% 용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1997년에 주요 농업기계 27만9천대를 공급하였으며, 1997년말 주요 농업기계의 보유량은 333만1천대로, 농기계의 보급률은 농가 100호당 경운기 63.9대, 트랙터 8.9대, 이앙기 20.5대, 콤바인 5.0대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담을 경감하고자 1989년 1월 1일부터 농기계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농업기계 가격이 9.1%인하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1986년부터 농업 기계용 면세유 공급제도를 도입하여 1997년에 농업기계용 면세유 2,489천kl를 공급하여 3,141억원의 농가부담을 경감시켰다.

<표 2-2-15>

주요 농업기계 보유현황

(단위 : 천대)

	'93	'94	'95	'96	'97
계	2,777.7	2,920.9	3,042.9	3,201.2	3,331.5
경운기	799.1	836.8	868.9	910.4	945.8
트랙터	76.8	88.7	100.4	113.3	131.4
이앙기	211.3	229.4	248.0	271.1	302.9
바인더	65.1	66.4	67.0	67.9	68.9
콤바인	67.7	70.2	72.3	73.8	74.3
관리기	162.3	201.5	239.5	272.8	315.9
방제기	718.2	717.0	712.9	716.8	703.4
양수기	352.7	375.1	384.9	407.6	397.4
탈곡기	150.6	138.2	122.0	109.9	95.8
곡물건조기	32.0	34.4	28.4	38.1	44.1
기타	292.5	301.4	320.6	329.4	251.6

자료 : 농림부 농산원예국

(생산지원과 서기관 이한필)

나. 농업기계 이용조직 육성

(1) 농업회사법인 지원

농업회사법인은 1991년에 16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설립한 이래, 1997년까지 총 1,397개소에 대해 1,231억원의 농기계 구입자금 등을 지원하였다. 중대형 농기계를 중점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덜어주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여 농촌노동력 부족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농기계 구입자금은 보조 50%(국고 25%, 지방비 25%), 용자 40%, 자부담 10%의 비율로 보조금 62억원과 용자금 3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농기계 보관창고도 120개소를 용자 지원하였다.

또한 기 육성한 농업회사법인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는 경영이 건실한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5천만원 사업비 이내에서 대체 농기계 구입자금을 40% 보조 지원할 계획이다.

<표 2-2-16> '97 농업회사법인 농기계 구입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97까지	'97 사업량	지 원 내 역			
		계	국 고	지 방 비	용자 및 자담
1,397개소	124개소	12,400	3,100	3,100	6,200

자료 : 농림부 농산원예국

(생산지원과 기계사무관 김진희)

(2) 공동이용조직 육성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을 통한 이용률 제고와 구입비 경감을 목적으로 1981년부터 조성해 온 기계화영농단은 1994년말까지 총 44,960개소로 이 기간중 해체된 영농단 28,043개소를 제외하고 1997년말 현재 16,917개소가 운영중이다.

기계화영농단은 5호 이상이면 임의로 조직이 가능하여 법인체과 같은 주체가 없어 농기계가 사유화되거나, 공동관리로 인한 관심 소홀로 고장이

빈발하거나 내용연수 이내에 폐지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1995년부터는 영농조합법인과 지역농협에 등록된 작목반 등 공동작업 요건을 갖춘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사업대상을 전환함으로써 실질적인 조직에 지원이 되도록 하였으며, 명칭도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으로 바꾸었다. 1997까지는 사업비의 50%를 보조(국고 25%, 지방비 25%) 40%를 용자지원하였으나, 1998년도에는 보조 40%(국고 20%, 지방비 20%), 용자 50%의 조건으로 보조율을 축소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1997년도에는 보조금 304억원과 용자금 189억원을 지원하여 1,605개소의 공동이용조직을 육성하였으며, 4,825대의 농기계를 지원공급하였다. 또한 농기계 이용률을 제고하고 자금지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 이용 조직에 대하여는 동력경운기, 보행형 동력이앙기, 관리기를 보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2-2-17> '97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구입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97까지누계	'97사업량	지 원 내 역			
		계	국 고	지 방 비	용자 및 자담
4,742개소	1,605개소	61,006	15,184	15,186	30,636

자료 : 농림부 농산원예국

(생산지원과 공업서기관 한한수)

다. 농업기계 사후관리 및 기술훈련 강화

(1) 사후봉사 및 기술훈련

농업기계의 공급확대에 따른 부품공급과 수리 등 사후관리지원을 강화하고 농업기계 이용율을 높이며, 농업인의 농기계 수리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로 하여금 공급한 농기계에 대하여 부품공급과 신속한 수리를 책임지도록 하였다. 1981년도부터는 일정 기준의 수리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춘 농기계 사후 봉사사업소를 면·군·도단

위로 구분하여 지정, 육성해 오고 있다.

농기계 사후봉사사업소의 전문수리기사 확보를 위해 1997년에는 수리 기사 249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여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한편, 농업인 스스로 농기계를 점점 수리할 수 있도록 기계화 영농사 915명을 양성하였다. 농기계의 신속한 수리를 위하여 수리용 부품 확보자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1997년에도 153억원을 지원하였고 1998년도에는 18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수리용부품을 신속히 파악, 공급할 수 있도록 사후봉사사업소간의 부품관리 전산망을 확대 설치하였다.

<표 2-2-18> 농업기계 사후봉사 지정업소 설치현황

(단위 : 개소)

	'93	'94	'95	'96	'97
도 단 위	40	40	35	34	34
군 단 위	797	889	897	903	948
면 단 위	2,201	2,237	2,155	2,096	2,099
계	3,038	3,166	3,087	3,033	3,081

자료 : 농림부 농산원예국

농업기계의 운전조작과 정비능력을 배양하여 농업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고, 농업기계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소를 중심으로 농업기계 기술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농업기계 기술훈련은 중앙단위인 농촌진흥청에서는 교관요원 및 수리기사 등 전문기술인력을 교육하고, 도단위 농민교육원에서는 기계화영농사와 농업기계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형기종을 포함한 기종별 전문훈련을 실시하며, 군단위 농촌지도소에서는 부녀자 및 소형기종의 실수요자에 대한 조작훈련 및 보수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정밀기종은 정밀작업을 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 생산업체에서 기술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훈련시설 및 장비의 확충으로 기술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1997년도에 18억 3,600만원을 보조지원(국고 9억 1,800만원, 지방비 9억 1,800만원)하여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훈련용 농업기계 165대를 공급함으로써 1997년말 현재 훈련용 농업기계 4,409대를 보유하게 되었다.

<표 2-2-19> 농업기계 기술훈련 실적

(단위 : 천명)

	'93	'94	'95	'96	'97
계	80.0	77.6	86.4	184.9	194.8
전문기술인력	5.0	4.6	4.3	3.8	3.0
부녀자	5.1	5.1	5.0	5.4	5.2
실 수요자	69.9	67.9	77.1	175.7	186.6

자료 : 농림부 농산원예국

(2)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농업기계는 사용하는 기간보다 보관하는 기간이 길어 농기계를 어떻게 보관하느냐가 고장 예방과 내용연수 연장의 관건이 됨에 따라 마을공동으로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를 1995년도부터 80% 보조지원하여 설치하기 시작하여 1997년도까지 2,19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1998년도에도 1,50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농기계 보급이 확대되고 대형화함에 따라 지역실정에 따른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를 위하여 1억 2,1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확보하여 20~60평형과 60~170평형의 가변형 표준설계도를 제작보급하여 개별농가들의 설계비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생산자원과 공업서기관 한한수)

라.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의 개발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농업기계를 지정·고시하고 생산 또는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1994년 11월 11일자로 「농업기계화촉진법」을 개정하여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요령을 1995년 7월 6일자로 고시하였다.

1997년 12월까지 지정·고시된 신기술 농업기계는 시설원에 및 과수를 대상으로 접목작업과 방제 등에 소요되는 노동력을 크게 덜어줄 수 있는 채소 자동접목기와 무인 자동방제기 등으로 현재까지 8종이 개발되었다.

<표 2-2-20> 신기술 농업기계 주요 특성

농기계명	제조업체명	형식	주요특성
무인자동방제기	중앙공업(주)	배터리구동형	온실내부 또는 노지에서 유도선을 따라 무인자동주행하면서 방제작업 실시
원거리용 고성능방제기	(주)한성농산기계제작소	견인및탑재형	농약살포장치의 상하, 좌우 등을 원격조절하여 과수, 벼, 감자 등의 방제작업 실시
채소자동접목기	(주)유평기연	호접형	수박등 채소류를 자동으로 접목하고 클립핑
과수형 승용관리기	아세아산업공사	4륜구동형 무한궤도형	전·후방의 동력취출축과 작업기 부착장치를 이용 여러가지 작업기를 부착하여 병해충 방제등 10여가지의 과수원 관리작업 실시
버섯자동 천공집종기	(주)한농정공	4조식	원목을 이용한 버섯재배시 천공, 종균접종, 마개봉합작업을 일괄 자동화
벼품위 자동판정기	쌍용기계 산업사	탈망정선식	소량의 벼를 이용 재현율과 설현미율을 정확히 자동계측하여 벼 품위 판정의 정밀도를 향상
승용관리기 (논용, 밭용)	아세아종합기계(주) 중앙공업(주)	승용형	승용관리기 본체에 여러 가지 작업기를 부착하여 논농사와 밭농사에 이용
자동관수분배기	보경산업	무인자동형	양수기에 연결하여 관수예약일, 관수시간, 관수주기 및 관수 토출구를 작목과 생육상태에 따라 임의로 선정하여 무인 자동형으로 급수 가능

4. 농업자재 공급

가. 농약의 수급관리

1997년에는 약효·약해·독성·잔류성 등 안전성이 확인된 신규 농약 7개 품목을 추가 등록하여 농약품목수는 1996년 727개에서 734개로 늘어났다. 농약의 총소비량은 최대 소비량을 보인 1991년의 27,476톤에 비해 9.7%가 감소하였으며, 전년과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1997년에 꾸준히 증가하던 원예용의 소비량이 5.0% 감소한 반면, 수도용은 버벌구 방제로 인하여 전년대비 28.6%가 증가하였다.

<표 2-2-21> 연도별 농약 소비상황

(단위 : 성분량, 톤)

연도별	계	수도용	원예용	제조제	기타
'90	25,082	8,429	8,681	5,509	2,463
'94	26,282	5,512	12,606	5,506	2,658
'95	25,834	4,867	11,934	5,817	3,216
'96	24,641	5,526	10,490	5,962	3,116
'97	24,814	6,526	9,967	6,043	2,278

자료 : 농림부 식량정책국

농약의 공급은 농약판매 자율화계획에 따라 1990년부터 농약제조업체가 연간 수요량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농약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1997년 총 수요량의 25%정도는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이 농가로부터 신청받은 수요량 전량을 제조업체와 일괄 구매계약을 맺어 공급하였으며, 나머지 75%정도는 시판상을 통하여 공급하였다.

(생산지원과 농업사무관 이진찬)

나. 종자의 수급관리

주요 식량작물 우량종자 공급사업은 농업생산성 향상의 기본이 되고 있지만, 채산성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주도로 관리운영되고 있다.

'70년대초까지는 각도가 국비 보조로 원종을 생산하여 독농가에 무상으로 채종농가와 일반농가간에 자율교환 방식으로 공급하여 왔으나, 채종종자 전량이 교환되기 어렵고 종자의 생산, 정선, 저장방법의 낙후로 품질이 떨어져 종자갱신 효과가 미흡하였다.

주요 식량작물 우량종자의 원활한 수급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75년부터 종자기금을 설치하여 벼, 보리, 감자, 옥수수, 콩 5개 곡종의 종자를 저가로 생산하여 수요농가에 직접 공급하고 있다.

'98년도 현재 벼, 보리, 감자, 옥수수, 콩종자 24,402톤을 생산하여 수요농가에 공급하였으며, 벼종자의 24%, 보리 17%, 씨감자 20%, 옥수수 45%, 콩종자의 8%를 갱신하여 식량증산에 기여하고 있다.

<표 2-2-22>

연도별 보급종 공급량

(단위:톤)

	계	벼	보리	감자	옥수수	콩
'76	9,976	933	745	6,191	-	107
'80	4,056	2,035	275	886	412	448
'90	15,199	8,265	2,139	4,047	442	306
'95	18,629	9,021	1,548	4,746	188	396
'98	24,402	12,620	1,421(P)	9,665	194	502

<표 2-2-23>

곡종별 증수율

(단위:%)

벼	보리	감자	옥수수	콩
106	112	150	165	110

(농산정책과 농업사무관 이재현)

다. 비료의 적정공급 및 가격안정

(1) 농업용 비료 소비량

'97년의 농업용 비료 총소비량은 성분량 기준 882천톤으로 이는 '96년 908천톤의 97% 수준이며, 비료 소비량을 성분별로 보면 질소질 446천톤

(50%), 인산질 199천톤(23%), 가리질 237천톤(27%)으로 나타났다.

<표 2-2-24>

비료 소비량 추세

(단위: 성분량/천톤)

		'90	'95	'96	'97
3요소별	질 소 질	562	472	456	446
	인 산 질	256	223	209	199
	가 리 질	286	259	243	237
계		1,104	954	908	882
단복비별	단 비	333	251	241	231
	복 비	771	703	667	651
ha당 소비량(kg)		458	434	424	421

자료: 농림부 식량정책국

비료 공급체계는 '88년 1월부터 정부의 비료판매가 자율화 조치에 따라 종전에 정부에서 취급하던 비료 공급업무가 농협 자체사업으로 전환되었다.

'97년 농협취급 비료의 공급량은 780천톤으로 전체 비료 공급량 882천톤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12%(102천톤)는 시판으로 공급되었다.

(2) 농업용 비료가격 안정시책 추진

농업인 영농비 경감과 비료가격 안정을 위하여 '62~'87년까지는 정부가 비료가격을 결정하고 비료공급에 따른 판매가격 차손을 비료계정에서 부담 하였으나, '87년 『비료산업개선대책』에 따라 '88년부터 비료판매 자율화를 실시하고 비료의 생산 및 판매의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비료의 품질개선을 유도하였고, 비료판매 원가절감을 위하여 '89년 10월부터 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비료가격 인하효과를 가져온 바 있다.

비료 판매가격은 '88년부터 자율화하였으나 '90년 8월에 발생한 걸프전으로 비료원료인 나프타 등의 가격이 급등하여 국내비료가의 대폭 인상(25%)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농업인 부담경감과 비료 공급가격 안정을 위하여 '91년부터 농협취급 비료는 구매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농업인

에게 판매하고 판매가격 차손을 매년 재정에서 보전해 오고 있다.
(’91~’97년 지원액:4,105억원)

<표 2-2-25> '97 주요비종별 대농업인 판매가격(20kg당)
(단위: 원, %)

비종별	구매가격(A)	판매가격(B)	차액(C)	보조율(C/A)
요소	6,730	5,300	1,430	21.2
용성인비	5,970	3,650	2,320	38.9
이목작복합비료	7,110	5,800	1,310	18.4
일모작복합비료	7,190	5,500	1,690	23.5
평균	6,598	5,145	1,453	22.0

주: 평균은 농협에서 공급하고 있는 전체비종(15종)의 평균임
자료: 농림부 식량정책국

(생산지원과 농업사무관 신창호)

제 3 절 농업기술개발 보급과 정보화 촉진

1. 농업기술개발

가. 개 요

농업기술개발사업은 농특세 재원을 활용하여 산·학·관·연 협동연구를 추진하는 특정연구사업과 민간참여가 어렵고 공익적 성격이 강한 농업기반 기술을 농촌진흥청·산림청 등 국가연구기관을 통하여 기술을 개발하는 공공기술개발사업등 두축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림부 주관으로 추진되는 특정연구사업은 첨단기술개발사업과 현장애로 기술개발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중 첨단기술개발사업은 산·학·관·연 협동으로 생명공학, 신소재 등 6대 핵심기술분야를 개발하는 첨단기술개발 과제와 정부 정책상 긴요한 기술을 일관 연구 개발하는 기획연구과제로 구분된다.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은 영농현장의 애로기술분야를 산·학·연 협동

으로 개발하는 현장애로과제와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특수농법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농촌지도기관과 농업인이 직접 연구에 참여하는 농업인개발과제로 구분된다.

국가연구기관을 통하여 추진하는 공공기술개발사업은 경상연구사업과 공동연구사업으로 구분되며, 이중 경상연구사업은 기초연구, 응용 및 실용화 연구를 실시하는 기본연구와 작황시험 및 위탁시험연구로 구분된다. 또한 공동연구사업은 신기술 및 농자재를 개발하는 대형공동연구와 선진기술을 조기에 도입하는 국제공동연구, 중앙과 지방연구기관이 지역적응성 검토 등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신품종 개발 공동연구로 구분된다.

나. 농업특정연구사업

1997년 농업특정연구사업의 신규과제를 공개 공모한 결과, 현장애로기술 개발과제는 총 213과제, 첨단기술개발과제는 323과제, 기획연구과제는 39과제가 접수되어 농림기술관리센터의 3단계 평가와 농림기술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는 56과제, 첨단기술개발과제는 76과제, 기획연구과제는 11과제가 선정되었다. 농업인개발과제는 총 237과제가 접수되었으나 농촌진흥청의 3단계 평가결과 최종적으로 130과제가 선정되었다.

특히 1997년에는 첨단농업기술의 조기 실용화를 도모하고 국가차원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개발이 시급한 중점애로기술을 기획연구과제로 선정, 과제지정 방식에 의하여 품목별 일관연구를 추진하였다. 농업인들이 영농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기술개발에 선도농가(단체) 등이 직접연구에 참여하는 농업인개발과제도 신설하여 추진하였다.

농업특정연구사업은 1994년말부터 시작하여 1997년말까지 총 1,060과제를 선정, 1,451억원(정부 1,339, 기업 112)을 지원하였다. 이중 1997년말까지 완료된 과제수는 총 294과제로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한 과제가 46건, 산업체에 기술이전을 추진중인 과제가 109건, 영농현장적용 및 정책자료

활용 과제가 139건으로 집계되었으며 특허출원건수는 60과제에 136건에 이른다.

기술개발이 완료된 과제중 기업체와 기술이전 및 기술료 징수계약을 체결한 우수기술개발 과제는 모두 7개이다.

<표 2-2-26> 기업체 기술이전 과제 내역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기술이전 기업체	기 술 료 징 수 액
○온라인 컴퓨터 건조제어기 개발	안동대학교	영농농기구제작소	11,335천원
○장어통발어선활어창 냉각시스템개발	한국어선협회	청강냉동공업사	기술료 감면
○축산분뇨 및 액비처리를 위한 연속시스템 개발	(주) 우 진	(주)우진테크	52,740천원
○고추공동집하 및 자동화처리 시설 개발	상주산업대학	신흥기업사	9,000천원
○식이버섯 자실체 및 균사체를 이용한 가공제품 개발	포천중균배양소	포천버섯개발	기술료 감면
○소의 브르셀라병에 의한 양축 농가의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를 위한 대책 연구	전북대학교	(주)한국미생물연구소	32,700천원
○밀랍의 제법과 활용에 관한 연구	농협전문대학	마천농협	기술료 감면
계 : 7개과제			105,775천원

한편 농업기술개발사업은 농정목표에 맞는 중장기 기술개발 목표 및 방향의 재설정 필요하고, 재설정된 목표와 방향에 따라 분야별·품목별 중점개발과제 선정, 기술개발 우선순위 설정 등이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각계 각층의 요구에 따라, 국가차원의 「농업기술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농림부가 주관하여 농진청·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 기본

계획(안)을 수립한 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기관인 농림기술관리센터에 실무작업반과 전문작업단(10개 분야 63명)을 구성하여 분야별로 세밀한 검토 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분야별 원로학자·전문가·농업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위원회(44명)의 자문을 받아 수정·보완한 후, 1997년 12월 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강당에서 2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단위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1997년 12월 6~16일까지는 8개도의 대학·연구기관 강당에서 산·학·관·연 관계자 1,19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단위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분야별 기술개발목표 및 방향설정, 10개 분야 169개 중점개발과제를 선정하는 등 「농업기술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2-2-27> 분야별 중점개발과제 선정

(단위 : 백만원)

분 야 별	중점개발 과제수	소 요 예 산
1. 경종작물	14	12,900
2. 원 예	27	18,600
3. 축 산	25	17,900
4. 임 업	15	6,700
5. 가 공	18	14,600
6. 유 통	10	5,800
7. 농 기 계	18	9,200
8. 자원·환경	21	18,600
9. 생명공학	10	13,800
10. 경영·정보	11	5,080
합 계	169	123,180

(농산정책과 농업사무관 허순범)

다. 분야별 농업기술개발

농업은 그 특성상 기후나 토양 등 자연조건에 따라 단순한 모방이나 기술이전만으로 직접 적용이 불가능한 생물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독자적인

농업기술의 개발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농업국은 농업을 첨단생물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제도를 정비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농업도 종합산업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총체적인 기술개발체제로 전환하여 국제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는데 주요 개발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쌀 생산대책 기술개발

1993년에 113만6천ha에 이르던 벼 재배면적이 1997년 105만2천ha, 2004년에는 92만ha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온실효과, 엘니뇨 등 이상 기상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주곡의 안정적 생산 기술개발이 무엇보다도 선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벼 수량 증대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인 벼 품종육성연구를 추진한 결과, 1993년 이후 개발된 양질 다수성 벼 품종은 10a당 수량이 677kg인 다산벼, 663kg인 남천벼와 같은 초다수성 품종을 비롯하여 39품종에 이르게 되었다. 이들의 재배면적도 1992년 11만4천ha에서 1997년 60만1천ha로 확대 재배되어 국내 전체 재배면적의 57%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1997년에는 중만생 양질 내도복성 남평벼, 내도복 직파용 화명벼, 향기나며 찰진 아랑향찰벼, 유색미인 흑진주벼, 흑남벼 등 10품종을 개발 보급하였다.(표 2-2-24)

생력 저생산비 영농을 위해 트랙터용 무논정지균평기를 개발하여 정지균평노력을 33% 절감하였으며, 승용이앙기용 제초입제 살포장치를 개발하여 제초살포노력을 98% 절감하였다. 재배기술에서는 직파-이앙 윤환재배로 잡초발생을 20%에서 4%로 감소시켰으며, 파종초기부터 담수유지로 잡초발생을 억제하는 직파재배기술, 벼 건답직파 절수재배기술 등을 개발하였다. 또 벼 요철골 직파재배법을 개발하여 노력시간 37%, 생산비 17%를 절감하고 담수표면산파의 도복 및 입모불안정을 개선 보급하였다.

용도별	품종명	수량성 (kg/10a)	적용지역	특기사항
양질	화동벼 (수원409호)	550	동해안 냉조품지 및 북부평야	단간, 내도복성, 내냉성, 등숙양호, 양식미
양질 (직파용)	화명벼 (수원423호)	542	중부 및 중남부 평야	중만생종, 직파용, 복합내병성, 양식 미
양질	남평벼 (이리416호)	528	대전이남평야지 1,2모작지	중만생종, 내도복성, 2모작 만식적 응성
"	남강벼 (밀양126호)	552	남부내륙평야지 1,2모작지	중만생종, 숙색양호, 내도복성, 줄무 늪잎마름병강
"	영해벼 (영덕19호)	538	동해안 냉조품지,	중생종, 복합내병성, 내풍성
단기성	그루벼 (수원416호)	586	대전이남 소득 작물 후작지	만식적응성, 단기성, 내재해성, 양식미
찰벼	아랑향찰벼 (밀양146호)	537	남부평야지 1,2모작지	중만생종, 식미증진용, 향찰
"	상주찰벼 (상주18호)	507	중남부 중산간지 및 북부평야	조생종, 찰벼, 직립, 내도복성
유색미	흑진주벼 (수원415호)	405	북부평야 및 중 산간지 중부2모작	극조생종, 유색미(흑자색), 흰잎마름 병 저항성, 가공 및 식미증진용
"	흑남벼 (익산427호)	497	대전이남 평야지 1,2모작지	중만생종, 유색미(흑자색), 가공용 흰잎마름병 저항성강(K1)

(2) 품목별 경쟁력 제고기술 개발

품목별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재배(사양)되고 있는 69개 작목을 경쟁력 수
준과 재배면적, 생산액, 자급도, 농가소득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전략, 기초,
기타작목으로 분류하였다. 전략작목은 국제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한 신품종
개발과 생산비절감 및 품질의 고급화기술 개발을 위해 수출지향과 내수지
향으로 구분하고 수출지향작목은 기존 15개작목에서 11개 작목으로 축소하
였다. 기초작목은 자급유지가 가능하고 국민기호도에 맞는 다용도 신품종개
발에 중점을 두었고, 기타 작목은 농가소득차원에서 기여도가 낮아 생산축소
와 함께 성장작목으로 대체되어야 할 작목으로 지역특화작목 및 유전자원
확보에 연구 초점을 맞춰 기술개발을 추진하였다.

<표 2-2-29>

'97 전작물 품종 신규장려품종

작물명	품종명	수량성 (kg/10a)	적용지역	특기사항
쌀보리	강호쌀보리 (이리36호)	414	충남이남 쌀보리 재배 지역	호위축병강, 내한성, 내습성, 내도복성, 양질
밀	서둔밀 (수원261호)	619	전국(산간고냉지 제외)	조숙, 양질 생면적성 양호, 다수성
	새올밀 (밀양29호)	524	전남북, 경남북	극조숙, 내도복성, 다수성
콩	대원콩 (수원181호)	293	전국(제주 및 산간 고냉지 제외)	황색, 대립, 광지역성
	장미콩 (밀양67호)	288	전국 (산간고냉지 제외)	두부 및 장류콩(가공적성양호), 황함유 아미노산함량 높음, 내재해성, 다수성
	다원콩 (수원182호)	244	전국	흑색, 소립, 내도복성
	일품검정콩 (밀양69호)	267	전국 (산간고냉지 제외)	조숙, 내도복성, 다수성, 단경
녹두	어울녹두 (전남10호)	163	전국(제주 제외)	동시성숙, 소립, 다수성
고구마	연미고구마 (북포26호)	2,328	전국(강원도 제외)	고전분, 식미우수
참깨	화흑깨 (수원148호)	92.2	단작 : 전국 2모작 : 전남북, 경남	고등숙, 다수성, 검정깨
	경흑깨 (경북1호)	105	2모작 : 경남북	흑색종실비율, 고올레인산, 내도복성, 내병성
들깨	양산들깨 (수원46호)	143	전국	고 ω -3지방산 함유, 다수성, 엽실겸용
	영호들깨 (밀양4호)	154	전남북, 경남북	조숙, 다수성
땅콩	기풍땅콩 (수원109호)	336	전국	소분지, 조숙, 대립, 간식용
	팔광땅콩 (익산7호)	358	전국	고협실비율, 담홍색종피, 종실중 균일도 양호
	대청땅콩 (밀양6호)	342	충청 이남	극대립, 직립, 소분지형, 내재해, 다수성

※ 수량성 : 전작기준

이러한 체계하에 기술개발을 추진한 결과, 원예분야에서는 고추공정육묘 전용상토를 개발하여 60억원의 수입대체효과를 거두었으며, 과수3과종 13 품종 256주의 과수 바이러스 무독묘를 양성하여 산업화 하였다. 또 백합종구의 생장점 배양, 백합 바이러스 검정키트 개발, 기관조직배양 증식기술 등 백합 종구 바이러스 무병화 및 조직배양 생산기술도 개발 보급하였다.

시설원예분야는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터널형 단동하우스 연동화에 의한 보온구조개선 기술개발로 열손실을 28% 절감하고, 상하이동커튼이용 난방 공간을 조정하여 초기생육 연료비의 55%를 절감하는 기술을 개발 보급하였다.

또한 밭작물 분야에서는 조숙 양질 다수성 강호쌀보리, 양질 다수성 만생종 대원콩, 내도복 제과용 및 가공용 화흑깨 등 맥류 3품종, 전작 6품종, 특작 7품종 등 16품종을 개발하였다.(표 2-2-25)

재배기술개발분야에서는 벼 수확동시 보리과종 재배기술을 확립하여 노력 70% 절감, 11% 증수를 이룩하였으며, 축산기술분야에서는 가축개량을 위한 한우 16두, 젖소 2두의 보증종모우를 선발하였고, 산양 성장호르몬을 이용한 형질전환돼지 개발과 농약 10종, 동물약품 설파제 3종에 대해 사료 중 유해물질 동시분석법 등을 개발하였다.

(3) 환경보존형 농업기술개발

농업생산활동은 비료·농약 등 농업자재의 사용과 가축사양시 분뇨발생 등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농업환경문제가 농업생산 못지않게 중요하게 인식됨으로써 쾌적한 농촌환경 유지와 지속가능한 환경보존형 농업기술개발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은 발토양조사 및 검정사업을 추진하여 경사도 15% 이하 전국 발토양 58만3천ha중 39만7천ha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고, 이를 근거로 116만6천점중 62만점의 토양검정 시비처방서를 발급하여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과 적절한 토양관리의 기본자료를 제시하였다.

또한 농업환경 변동 모니터링을 통하여 우리 나라 발토양 854개소에 대

한 비옥도와 밭작물 6종 120점에 대한 농약·중금속 오염정도를 조사한 결과 인산과 칼리성분이 높고 유기물은 낮은 편이었으며, 농약은 검출한계 이하로, 중금속은 자연함량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벼, 밭작물 4, 원예작물 41 등 46개작물에 대해 작물별 표준 시비량을 설정 시비기준을 하향 조절 보급하였다.

(4) 첨단과학기술의 실용화 촉진

주요 농작물의 유용 유전자원 확보와 재해저항성 신작물 개발 및 주변 첨단 전기·전자·신소재 등의 주변기술을 도입하여 첨단기초 과학기술의 조기 정착 및 실용화를 추진한 결과, 생명공학기술의 농업적이용 분야에서는 배초향에서 「로즈마린산」, 아마란스에서 「스쿠알렌」의 기능성 물질을 탐색하고, 참깨에서 「리그난」, 들깨에서 「알파리놀렌산」추출기술을 개발하였다. 누에 신기능성 물질 개발 및 약리효과 검색에서는 면역활성제 「지모산」 대비 면역증강효과가 2배인 동충하초의 대량생산기술을 개발하였으며 누에로부터 새로운 항균성 단백질 「누에신」을 개발하였다. 또 생물종의 유전형 진단을 위한 다범위 DNA 표지인자, 산업폐수의 응집성 및 과일 방부효과를 갖는 미생물 선발, 오이 모자이크바이러스 저항성 토마토 등을 개발하였다.

농업기계 개발에서는 무인 주행에 필요한 조향, 속도 등 여러 가지 제어 신호를 검출할 수 있는 농용트랙터 제어신호검출장치를 개발하였으며, 트랙터의 위치, 방위각, 조향각 등의 신호를 단일화하여 연결하는 트랙터 자세 측정신호 인터페이스장치를 개발하였다.

(5) 농업기자재 개발

비료, 농약 등을 적게 투입하여 농업생태계를 보존하고 수확농산물의 안전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수확량이 많으면서 고품질인 농산물 생산에 역점을 두고, 농기계는 농작업의 편이성과 안전성, 작업효율, 비용 등에 역점을 두고 개발을 추진하였다. 비료·농약개발에서는 벼 이삭거름용 N, K 복비

에 벼잎집무늬마름병약인 Flutolanil을 피복하여 비료사용과 동시에 벼잎집무늬마름병약을 살포할 수 있는 농약·비료 복합제 Flutolanil+N,K를 개발하였다.

농업기계개발에서는 땅콩캐기·꼬투리따기·정선·담기 일관작업형으로 노동시간을 96% 절감할 수 있는 땅콩수확기, 원예작물 예냉·저온 저장고, 사과집기·이송·상자담기 일관작업형인 사과 상자담기 자동장치, 벼수확 상온통풍건조 및 저장겸용인 농가형 FRP 벼 건조저장빈, 절화의 줄기절단과 동시에 잎떨기, 결속일관작업형으로 시간당 238단을 결속할 수 있는 절화운반·결속장치, 양액냉각 및 살균처리로 폐양액을 재활용할 수 있는 양액 냉각 및 살균장치 등 17종을 개발 보급하였다.

(농촌진흥청 연구조정과 농업연구관 류갑희)

(6) 농업경영 기술개발

전문경영체 육성지원을 위해서 농업법인 경영관리 프로그램과 양계단지의 공동경영으로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보급하였으며, 경영여건별 난방비 추정프로그램, 연료사용량 수준별 난방기 종류의 선택방법, 백합종구의 자가양구에 따른 수익성 증대효과, 가족전업농 중심 느타리버섯 경영모형 설정, 농번기 노동력 제약에 따른 벼+시설채소 경영규모 모형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였다. 또한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설채소 수출농가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농산물 산지유통을 개선하기 위한 양파의 판매방법별 소득증대방안도 제시하였다.

주요 농축산물 63작목 82작형에 대한 수익성을 분석하여 농가의 작목선택을 위한 의사결정 자료로 제공하였다.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보전형 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가축분뇨처리의 효율화 방안을 연구하여 퇴비센타운영에 의한 양돈농가의 분뇨 처리비용절감 방안을 제시하였고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유추도입경영과 중·대추도입경영의 수익성분석, 강제환우의 의사결정 여부, 입추시기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

방안, 양계단지 참여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방안, 양계단지 공동경영에 의한 생산성 증대방안을 개발보급하였다. 그리고 시설채소, 축산농가의 기술·경영 대응방안도 수립하여 보급하였다.

(농촌진흥청 경영개선담당관실 농업연구관 강경하)

(7) 국제농업기술 협력강화

전문분야별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상주연구원 활동을 강화하여 국제미작연구소(IRRI)와 수도유망품종 육성, 국제옥수수·밀연구소(CIMMYT)와 옥수수 및 밀 품종 육성, 아시아채소연구개발센터(AVRDC)와 십자화과 채소 품종개발 등의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유전자원을 수집하고, 최신 농업 기술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국제농업연구협의단(CGIAR) 산하 16개 연구기관, 18개 유엔기구 및 정부간기구와 공동연구, 연구원 연수 및 전문가교류 등의 기술교류협력을 수행하였고, 미국, 일본, 중국,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등과 국가간 협력을 통한 농업기술 교류를 추진하였다.

또한, 아시아지역 작물 들연변이 전문가회의 등 7회의 국제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유전공학 및 기초과학 등 첨단농업분야에 11명의 연구원을 선진 농업국의 관련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연수를 실시하였다. 생물다양성, 유전자원 보존과 활용 및 기후변화 등 세계농업 쟁점분야 전문요원의 활동을 강화하여 국제화 훈련 실시 및 관련 분야 국제회의에 참여하여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우리의 선진 농업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이전하기 위하여 미곡생산, 축산, 잠업 등 5개 분야에 23개국 78명의 외국인 농업기술자들을 초청하여 분야별 관련기관에 위탁 훈련을 실시하였고, 원예, 작물생산, 잠업 등 6개 분야 10개국에 13명의 농업전문가를 파견하였다.

(농촌진흥청 국제협력담당관실 농촌지도관 안진곤)

라. 농업기술 보급

(1) 새기술·정보의 신속한 제공

(가) 지방지도기관에 대한 새기술·정보 제공

1997년은 1월 1일을 기해 6,696명의 연구·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되었다. 지방직화에 따른 중앙-지방간 사업의 연계성 약화를 방지하고 지방 농촌지도공무원의 현장지도 활동을 촉진함과 동시에 지역 농업인의 기술지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방지도기관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제공하였다. 시험·연구결과 개발된 새로운 기술이 현장지도에 활용될 수 있도록 「농촌지도사업 활용자료」를 제작 지원하고, 매주·매월 간격으로 다음주(달)에 농업인에게 보급·지도할 핵심기술 지도 내용을 전산망을 통하여 전시군에 동시 제공하고 있으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가축전염병 발생정보를 신속하게 발표하였다.

(나) 농업과학기술지원단 편성으로 현장애로기술 지원

새로운 농업기술을 적극 보급하고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하는 등 농업기술보급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학 교수, 연구·지도관 등 분야별 전문가 80명을 3개 분야 12개반으로 편성하여 중앙농업과학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였다. 식량작물, 원예축산, 작물보호 등 분야별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기술 보급, 영농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해결, 농업인대상 전문교육 강사지원 등 일선 지도기관의 요청시, 혹은 영농상 문제점 발생시 현장을 찾아 지도활동을 지원하였다.

(다) 농업인 한자리 종합상담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

농촌지도소를 농업현장과 가까운 쪽으로 이전하고 조사, 시험, 상담기능을 보장하여 지역농업개발을 선도하고 농업인의 현장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 지도역량을 구축하는 한편 지역의 유망소득작목을 개발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지역특화가 유망한 2~3개 작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새기술실증시범포를 2ha 내외로 설치 운영하고, 농업생산의 기본요소인 토지, 물, 기상을 정밀 분석 처방하여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재해경감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에서 필요한 우량종자, 종묘를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대량생산 시설을 갖추고 우량신품종을 농가에 보급하였다. 또한 가축의 질병과 임신여부를 진단 처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농기계의 운전조작과 고장수리에 관한 실습과 현장 순회수리 장비를 갖추고 교육, 실습, 수리활동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농촌여성을 중심으로 생활과학기술, 생활예절, 농업인 건강과 편의시설을 갖춘 생활과학실을 연중 개방 운영하여 실기교육을 실시하였다.

경영상담실을 설치하여 기술수준, 영농규모 등 개별농가수준에 맞는 심층 상담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 여기에는 농사기술백과 등 농업기술이나 경영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농림사업의 홍보, 사업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휴대용컴퓨터 및 CD-ROM에 의한 이동식 상담지도도 병행 실시함으로써 농업인이 한자리에서 기술, 경영, 생활상담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농촌지도소는 지역농업개발센터로 육성하여 지역농업기술의 중추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농촌진흥청 지도기획과 농촌지도관 강주석)

<표 2-2-30> 농촌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계	'94	'95	'96	'97	'98	'99이후	비고
계	412개소 (31,536)	111 (4,556)	115 (5,391)	98 (6,641)	44 (7,474)	21 (3,567)	23 (3,907)	
○ 새기술실증 시범포	136개소 (22,068)	9 (1,335)	9 (1,335)	30 (4,450)	44 (7,474)	21 (3,567)	23 (3,907)	'99까지 완료계획
○ 과학영농시설	276개소 (9,468)	102 (3,221)	106 (4,056)	68 (2,191)				'96까지 지원완료
- 우량종묘생산 시설	67 (5,643)	21 (1,710)	28 (2,394)	18 (1,539)				
- 농기계공작실	69 (2,404)	26 (875)	30 (1,052)	13 (477)				
- 가축질병진단실	60 (1,200)	26 (520)	28 (560)	6 (120)				
- 생활과학실습실	64 (115)	16 (30)	17 (30)	31 (55)				
- 종합검정실	16 (106)	13 (86)	3 (20)	- -				

* ()는 국비지원액임

(2) 새기술 보급 및 지역특화 시범사업

(가)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환경보전 농업기술 보급을 위하여 시험연구 결과 개발된 새로운 품종, 재배기술, 기계 등을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보급하고 기술농업의 조기 실현과 농가소득증대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1,129개소(식량작물 6종 322개소, 소득작목 6종 151개소, 환경보전 농업기술 7종 646개소, 농촌여성 일감갓기 1종 10개소)의 새기술 시범포를 설치하였다. 새로 육성된 품종과 신기술을 집중 투입 전시하여 농업인들에게 실증 시범하고 생육중기 및 수확기에 인근 농업인들을 다수 참석시켜 평가회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대농업인 지도자료로 활용하는 등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였다.

(나) 지역특화 시범사업

지역특성에 맞는 새소득작목을 개발보급하여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선진농업 기술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지역특화 시범사업을 작목별 주산지 중심으로 13종 376개소 설치 운영하였다. 새로개발된 기술을 종합투입하여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고 협업경영, 시설 현대화 및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생산물의 저장, 가공, 포장, 공동출하로 상품성 향상 및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특산품의 생산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대외 경쟁력 확보로 수출농업을 육성하였다. 그 결과 농가 소득이 인근농가보다 40%가 증가된 4,178만7천원이었으며, 그 외에 에너지 절약형 농업 기술인 수막하우스, 온수보일러, 지중난방, 태양열 지중난방등 난방비 절감 새기술도 보급하였다.

(농촌진흥청 식량작물과 농촌지도관 박종욱)

(3) 농작물 병해충 방제

(가) 병해충 발생상황

병해충으로 인한 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벼 병해충 예찰포 150개소, 소득작물 병해충 발생 예찰포 50개소와 벼 병해충 관찰포 1,341개소, 보리, 과수, 채소, 특작, 고추 등 기타작물 관찰포 309개소를 설치하여 정밀예찰을 실시하고 적기방제 지도자료로 활용하였다. 농업인과 관계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18일~9월 26일에 총 18회(예보 3, 주의보 9, 경보 6회)에 걸쳐 농작물 병해충 발생 정보를 발표하였다.

금년도 벼 병해충 총발생면적은 108만9천ha로써 전년의 98%, 평년의 58%이며 병해 발생은 전년의 94%, 평년의 53% 수준으로 잎도열병, 이삭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은 전년 평년보다 적게 발생하였다. 해충 발생은 전년의 101%, 평년의 61%가 발생하였다. 특히, 벼멸구는 전년에 비해 발생시기는 늦었으나 9월초까지 계속된 고온지속으로 증식이 많아져 전년보다 많

은 334% 벼물바구미는 155%가 발생되었으나 이화명나방, 흑명나방 등은 지난해 보다 발생이 적었다.

<표 2-2-31>

병해충 발생현황

(단위 : 천ha, %)

구분	계	도열병	문고병	백엽고병	벼멸구	이화명충기타
'97발생면적	1,089	48	359	2	147	533
'96대비	98	96	95	838	334	84
평년대비	58	38	65	5	84	55

(나) 병해충 방제상황

지난해에 이어 쌀생산을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예찰과 방제를 추진한 결과 사상 최대의 풍년농사를 달성할 수 있었다.

금년도 병해충 총 방제면적은 1,118만3천ha로 재배면적 105만2천ha의 10.6회 방제에 해당되며 전년대비 118%에 해당된다.

특히 벼멸구가 7월 이후 고온지속으로 증식이 많아져 8월 5일에는 병해충 방제 총동원령을 시달하고 벼멸구 방제에 총력을 다하였다. 계속된 벼멸구 증식으로 대대적인 벼멸구 방제 작전이 시작됐으며, 9월에는 분제 농약이 부족한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헬리콥터를 동원하여 농약을 현장에 수송하고 방제를 독려하여 전체 재배면적의 2.7회에 해당하는 284만3천ha를 방제하였다.

또한 벼 병해충 방제 현장지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7월부터 9월까지는 쌀생산 중앙기술지원단 33명을 병해충방제 기술지원단으로 전환하여 5회에 138명을 담당지역별로 보내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신속하게 기술지도 하도록 하였다.

병해충 방제 지도를 위한 대농업인 홍보활동으로는 리플렛 3종 15만개를 제작 배부 하였고 TV·라디오 65회, 신문 52회 및 농업기술지, 농약유통

정보 등 전문잡지에도 총 11회에 걸쳐 방제기술을 게재하였다. 또한 예년 추진상황과는 별도로 『벼 병해충 방제총람』 2,500부를 제작하여 일선기관에 배부하였다.

(농산정책과 농업서기관 정황근)

2. 농업정보화 촉진

우리 농업이 새로운 국제환경에서 타산업과 타국의 농업을 상대로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산업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첨단과학기술을 응용하는 새로운 농업경영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정부는 새로운 영농기술개발·보급과 선진화된 농업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농촌생활환경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농림수산정보화 촉진계획」의 중점과제는 농업정보화 기반의 확충, 이용자편의 위주의 실용적인 농업정보 개발·보급, 농업경영 및 유통효율화를 위한 정보화 지원사업, 정보통신 이용교육을 통한 농업인의 정보화인식 제고 등이다.

가. 농업정보화 기반의 확충

정부는 기관간 역할분담을 통하여 정보를 전문화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의 방지는 물론 농업인이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림수산관련 13개 기관·단체를 연결한 농수산종합정보망을 구축하였다. 또한 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각종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농림수산정보망(AFFIS)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의 보급·확산에 따라 농림부를 비롯 관련기관·단체의 홈페이지를 연계한 농림종합홈페이지 「농림한마당」(주소: <http://www.agr.or.kr>)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참여기관·단체를 늘려갈 방침이다.

<표 2-2-32> 농림수산정보망(AFFIS) 이용현황

구분	접속건수(월/회)	이용시간(월/시간)	가입자수(명)(누계)
'94.	9,507	1,559	837
'95.	32,388	5,754	7,020
'96.	87,689	16,031	17,734
'97.	55,011	7,635	36,871
'98. 5.	84,628	11,560	48,860

자료 : 농림부 농업정보통계관실

나. 실용적인 농업정보의 개발·보급

농림부를 비롯하여 관련기관·단체별 농업관련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으나, 정책정보, 통계정보 등이 정보제공기관 위주로 되어 있다. 농산물 출하관련정보, 영농기상정보 등 실제 농업경영 활동에 필요한 사용자 위주의 정보개발 및 정보서비스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

농업경영을 과학화, 합리화하기 위하여 1998년 5월 현재 16종의 농업경영지원용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하였으며, 앞으로 이를 더욱 발전시켜 예측, 분석, 진단, 의사결정에 이르는 생산·경영 전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농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표 2-2-33>

기관별 주요 데이터베이스(D/B)

분 야	데이터베이스명
농림부	정책·정보DB, 농업통계DB등
해양수산부	양식기술, 연근해어업등 수산DB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병해충예찰등 농업기술 DB
산림청	임산물 유통정보등 임업관련DB
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통계, 수출입 농수산물등 무역관계DB
농어촌진흥공사	농지정보DB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련 문헌, 농업관측정보DB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식품가공기술, 특허관계DB
농·수·축·임협중앙회	품목별 시황조사, 경제사업현황DB
농지계량조합회	경지정리등 농지정리정보DB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농수산물유통, 지역·상품정보, 영농성공사례 영농자재DB등

자료 : 농림부 농업정보통계관실

<표 2-2-34>

경영지원용 소프트웨어 개발 현황

분 야	구 분	S/W 명
농업경영	법 인 경 영 체	농업경영체 종합관리시스템
	농 가 경 영	복합농가 경영분석/진단시스템
원 예	채 소	채소농가 경영관리시스템(2종)
	화 획	화훼경영관리시스템
	과 수	과수원 종합관리시스템
축 산	낙 농	착유우 농장종합관리시스템 낙농경영분석시스템 낙농사양/경영관리 S/W
	양 돈	양돈사양관리(WIN 3.1용) 양돈경영관리시스템
	양 계	양계농장 종합경영관리시스템
	한 우	한우농가 종합관리시스템
기 타	일 반 농 가	농가 생활설계시스템

자료 : 농림부 농업정보통계관실

다. 정보통신이용교육 강화

농업 및 농촌지역에 정보화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농업인에 대한 정보통신 이용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998년 1만 3천명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1999년 이후 1만5천~2만 명으로 교육인원을 확대하여 2004년까지 12만 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업인 정보화과정을 기본과정, 전문과정으로 체계화하고, 기본과정은 지자체에서 주관하며, 지역의 학교시설, 시군청 전산실 등을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농업인이 현지에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문과정은 농림수산정보센터 교육원에서 담당하며 PC이용교육, 영농S/W 활용방법, 기본과정 교관의 사전교육을 담당한다.

<표 2-2-35> 정보통신 이용교육 현황

구분(누적)	계	정보교육	전문교육	경영교육	특별교육	순회교육
'96. 12.	3,739	2,988	-	751	-	3,988
'97. 12.	12,168	4,304	-	2,209	587	5,068
'98. 5.	14,354	4,906	17	2,438	719	6,274

자료 : 농림부 농업정보통계관실

라. 농산물 유통정보 서비스의 확대

정보이용자가 원하는 정보 제공을 위하여 농산물 유통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였다.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유통정보망을 현재 15개 시장으로 확대하고 시황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생산자의 출하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오이·풋고추·참외등 시설채소를 대상으로 9개 시군 200여 주산단지 작목반, 단협 및 산지공판장을 연결한 「시설채소 생산·유통 종합정보화시스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을 통한 주산단지 작목반간 생산계획 및 출하상황 등 정보공유 및 협력관계 구축으로 생산자가 농산물의 생산 및 출하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농산물 물류센터 및 하나로클럽을 대상으로 물품관리, 출하관리 등의 물류정보시스템을 전산화하여 시장별 출하분산과 역류 방지 등을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하였다.

<표 2-2-36>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시스템 구축 현황

대상품목	대 상 지 역
시설오이	전남(순천, 광양, 고흥, 구례, 보성), 경남(진주, 창녕)
풋 고 추	경남(진주, 밀양, 창녕)
참 의	경북(성주)

제 품 정 보	서 비 스 내 용
생산관리	- 작물재배의향 및 생산계획 - 작목반별 일일 생산·출하내역 등 지역간 생산·출하정보관리 및 동향정보
유통정보	- 산지공판장 경락정보 - 공영도매시장 유통정보 등
품목별 전문 DB	- 품목별 전문 멀티미디어 DB서비스 (종묘, 자재, 토양, 기상, 병충해등)
통신서비스	-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응용한 전자직거래 - 농산물홍보 - 전자게시판, 전자우편 등

자료 : 농림부 농업정보통계관실

<표 2-2-37> 공영도매시장 유통정보망구축 현황 및 계획

구 분	도 매 시 장 명
'98. 5	서울(가락동),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창원, 수원, 청주, 충주, 전주, 울산, 천안, 구리, 안양
'98. 12까지	안산, 춘천, 익산
'99 이후	부산제2, 인천제2, 포항, 진주, 원주, 대구제2, 고양, 대전제2, 성남, 순천, 구미, 마산 등

자료 : 농림부 농업정보통계관실

<표 2-2-38> 농산물 물류정보시스템 구축현황 및 계획

구분	대상사업장	
	구축현황	구축계획
농산물물류센터	양재, 창동	청주, 군위, 전주, 천안, 용인 부산, 대전, 김해, 장성, 금산
생활물자물류센터	동탄(기흥), 화순, 구미, 전주, 창원	
하나로클럽	파주, 안산, 창원, 대구, 광주	김포, 김천, 성서

자료 : 농림부 농업정보통계관실

마. 원격영농기술 지도시스템 구축 운용

농업인들이 영농기술 상담, 농업정책 문의 등을 위하여 농촌지도소나 정부기관을 찾아갈 필요없이 화상 멀티미디어를 통하여 농사지도 전문가나 관련 담당공무원과 직접 대화하고,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격영농기술지도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특히 작물·원예·축산관련 농업화상정보를 DB로 구축하여 농업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표 2-2-39> 원격영농기술지도 시스템운영 현황

대상기관	구축기관	비고
연구기관(4)	농촌진흥청, 수의과학연구소, 원예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0'97 원격영농기술 교육 및 상담 : 50회 2,232명
지도기관(3)	안성군·김제시·함안군농촌지도소	

바. 정보화응용 지원사업 확대

농업정보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선 영농현장이나 농업행정부문에 응용할 수 있는 각종사업에 대한 정보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농산물

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거래알선, 수출사례정보, 국가별 수입규제, 관세율 등 무역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여 각종 무역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가축질병을 진단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 또는 조기발견 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주요 가축질병에 관한 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이를 검색 관리할 수 있는 가축질병 예찰·방제시스템도 개발 운영중이다.

또한, 농촌지역의 토양, 지형, 용수, 경지정리 등 농지 및 농산자료에 관한 종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농업지형정보시스템(RGIS)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사. 농림부 홈페이지 개설·운영(<http://www.maf.go.kr>)

농업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농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농림부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는 안내, 열린농정, 대화마당, 농림한마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내에서는 농림부 조직과 해방 이후 현재까지 농정 변천사를 제공하고, 열린농정에서는 정책부서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정책정보, 농업통계정보, 농업관련 해외정보 등을 제공한다. 대화마당에서는 국민이 농정당국에 정책에 대한 문의·건의 또는 불편사항 등 의견을 개진하거나 국민상호간에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안방에서 민원 등 필요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열린농정 구현에 노력하고 있다. 농림한마당은 농업관련 기관, 단체, 협회, 대학, 회사 등의 홈페이지를 상호 연계시킨 홈페이지로써 한번 접속으로 각종 농업 관련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농림부 홈페이지는 향후 농림정책정보의 공식 제공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개선·확대 발전시킬 계획이다.

(정보화진흥담당관실 서기관 김종천)

제 4 절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 및 수급안정

1.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가.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농수산물의 대량·신속한 유통체제 구축과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해 2001년까지 전국 주요 거점도시에 34개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하기로 한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였다.

성남, 정읍, 서울서남, 인천제2, 안동(확장)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새로 착공되었고, 1994년에 착공된 구리, 안양, 안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신규 개장되어 수도권 농수산물유통기능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로서 1997년말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건설목표 34개소 중 17개소가 개장되었고 12개 지역이 착공하였거나 건축공사 중에 있으며 5개 지역은 부지매입 및 설계중에 있다. 1997년도에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을 위해 489억원의 국고예산을 지원하였다.

<표 2-2-40>

'97 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현황

(단위 : 천평, 백만원)

	구 리	안 양	안 산
위 치	구리시 인창동 117	안양시 평촌동 934-1	안산시 이동 528
규 모			
- 부지	56.5	25.2	12.9
- 연건평	32.7	19.2	6.0
총건설비	109,400	72,178	7,513
- 국고	54,700	36,089	3,756
- 지방비	54,700	36,089	3,757
건설기간	'91~'97	'92~'97	'90~'97
- 착공일	'94. 6. 28	'94. 9. 28	'94. 2. 28
- 준공일	'96. 12. 14	'97. 3. 25	'97. 10. 18
- 개장일	'97. 6. 9	'97. 9. 6	'97. 11. 25
주 이용권	서울 동부 6개구 구리시, 남양주시	안양·의왕·군포·광명·과천시	안산시흥시, 화성군

나. 농산물공판장 건설

도매시장이 없는 중소도시지역의 농산물 유통량 증가에 따른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98년까지 67개소를 건설하기로 한 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하였다.

1997년도에는 나주, 영천, 괴산, 전주, 영주, 상주농협을 사업자로 한 6개 농산물공판장이 새로 개장되었고, 평창·서산·예산원협, 논산·부여·장수·성주농협을 사업자로 한 7개 지역 농산물공판장이 신규 착공되었으며, 여기에는 76억원(보조51억원, 용자25억원)의 국고가 투입되었다.

이로써 전국에는 농협이 자체적으로 건설한 33개소를 포함하여 54개 농산물공판장이 개장되어 산지 농산물 처리능력을 제고하고 농산물 공정거래 질서유지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표 2-2-41>

1997 완공 농산물공판장 현황

(단위: 평, 백만원)

	나주원협	영천농협	괴산농협	전주농협	영주농협	상주농협
규 모						
- 부지	5,571	3,592	1,665	2,987	1,072	2,559
- 건물	1,490	639	1,073	1,821	726	954
총건설비	3,686	1,728	2,935	5,486	1,839	1,965
- 국 고	833	691	832	2,034	650	786
- 지방비	417	346	416	1,017	325	393
- 국고용자	417	346	416	1,017	325	393
- 자부담	2,019	345	1,271	1,418	539	393
개 장 일	'97.10.30	'97.7.3	'97.8.19	'97.6.12	'97.11.8	'97.4.3

다.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

기존 도매시장과는 달리, 주문에 의한 집·배송 형태의 새로운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유통경로를 다원화하고 산지 생산자와 소비지 판매망을 직접연결시켜 유통단계를 축소함으로써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2004년까지

소비지 유통권을 중심으로 대도시 외곽에 16개소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97년 중에는 양재동, 창동, 청주, 부산, 천안, 전주, 장성, 군위, 대전, 김해 등 10개소를 계속사업지구로 추진하였다.

<표 2-2-42>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 추진내역

(단위: 억원)

구 분	사업규모(평)		총사업비(국고)			'97까지	사업기간
	부 지	건 물	보 조	용 자	계		
양 재	20,420	17,932	402	52	454	415 (52)	95-97
창 동	10,291	11,597	342	321	663	586 (321)	95-98
청 주	20,000	5,559	135	89	224	190 (89)	95-98
부 산	5,000	6,505	200	-	200	116	95-98
천 안	39,757	10,000	210	85	295	115 (85)	96-99
전 주	10,000	6,000	126	67	193	87 (67)	96-99
군 위	35,500	5,700	151	32	183	62 (32)	96-99
장 성	27,835	5,487	-	140	140	29 (29)	96-99
대 전	13,700	5,000	95	82	177	-	97-2000
김 해	20,000	7,000	138	60	198	-	97-2001
계 보 용 조 자			1,795	987	2,722	1,599 925 674	

※ ()내서는 용자

라.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제도개선

1995년 1월부터 시행한 전품목 상장경매제도실시, 산지수집상 등록제 도입, 도매시장 평가제도 강화 등으로 도매시장 거래질서가 많이 개선되었으나, 일부 도매법인의 형식적인 기록상장관행이 존속되고 경매에 대한 불신이 상존하고 있어, 1997년도에 정부에서는 기록상장되고 있는 특정품목에 대하여는 중도매인수를 늘려 중도매인간에 경쟁체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문제품목에 대하여는 산지선도금을 집중지원토록 하였다.

또한 경매시간대인 야간에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나 관리공사 직원으로 하여금 야간근무 비중을 늘려 상인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였으며, 소매행위와 비허가 상인을 근절하기 위해 도·소매 구역을 분리 하였다.

2. 농축산물 수급안정

가.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

재배면적의 증감과 기상여건에 따라 품·종의 차가 크고, 가격의 등락이 심한 채소류의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무·배추·고추·마늘·양파·파에 대해서는 재배의향, 파종실적, 작황, 가격동향 등 농업관측 정보를 조사하였다. 동 관측자료를 농업관측협의회에서 심의 분석한 후 농업관측월보를 매월 6만부씩 제작, 배포하였으며, 이를 전산정보화하여 이용자들이 농림수산정보망(AFFIS), 인터넷 등 공중통신망을 통해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1995~1997년에 정부와 농협이 공동으로 채소가격안정사업자금 2,475억원을 조성하여 1997년에 무·배추(봄, 고랭지, 가을), 마늘·양파, 대파·고추에 대하여 산지농협과 농민간에 24만7천톤을 계약재배한후 가격동향에 따라 출하를 조절하도록 함으로써 성출하기 수급 및 가격을 안정시켰다.

고추는 과잉 생산되어 수확기 이후 가격이 하락됨에 따라 민간가공 및 저장업체와 산지농협에 농안기금 200억원을 지원하여 수매하도록 함으로써 가격안정을 도모하였다.

<표 2-2-43>

주요 채소류 가격안정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톤, 백만원)

구분	'90		'93		'94		'95		'96		'97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총계	74.0	28,472	342.2	75,203	61.2	24,914	219.0	60,470	387.4	127,479	289.7	215,559
정부수매비축	8.9	17,914	12.0	40,562	-	-	57.6	24,982	1.1	1,234	-	-
고추	3.5	15,204	7.6	35,769	-	-	-	-	-	-	-	-
마늘	1.1	1,602	4.4	4,793	-	-	14.6	16,832	1.1	1,234	-	-
양파	4.3	1,108	-	-	-	-	43.0	8,150	-	-	-	-
민간수매	42.3	8,805	87.1	24,361	27.9	18,478	76.6	17,969	44.6	47,492	42.5	38,006
마늘	20.2	8,093	29.6	17,212	11.3	13,578	14.1	11,566	16.6	13,472	14.1	14,245
양파	22.1	712	57.5	7,149	16.6	4,900	62.5	6,403	18.0	4,074	22.4	4,199
고추	-	-	-	-	-	-	-	-	10.0	29,946	6.0	19,562
정부출하조정	22.8	1,753	243.1	10,280	33.3	6,436	3.8	217	98.0	4,300	0.2	353
계약재배	-	-	-	-	-	-	81	17,302	233.0	72,300	247	177,200

자료 : 농림부 농산원예국

(채소특작과 농업사무관 염상열)

나. 과실류 수급안정지원

1997년도 과실재배면적은 사과는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 포도 등이 증가하여 1996년도 보다 0.5천ha가 증가하였다. 착과량 증가와 성과수면적 증가의 영향으로 과실생산량도 1996년 대비 11%가 증가한 245만2천톤이 생산되었다.

과실생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 과종의 수확기 가격이 전년 동기보다 안정세를 보인 반면, 사과의 경우 1995년 이후 재배면적 및 생산량 감소, 배의 경우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요증가 등 영향으로 수확기 가격이 강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주요과실(사과·배)의 정부비축사업 및 민간수매지원을 통해 수급안정 및 산지가격을 지지하고 단경기 출하조절을 통하여 소비지 가격을 안정시켰다.

(과수화훼과 서기관 이기해)

<표 2-2-44>

과실류 가격안정사업 추진실적

(단위 : 톤, 백만원)

구분	'94		'95		'96		'97	
	물량	지원액	물량	지원액	물량	지원액	물량	지원액
합계	99,349	27,264	216,981	43,910	75,768	18,401	54,763	17,031
정부비축 사과수매	273	361	3,060	3,098	1,308	1,770	2,000	2,799
민간수매	99,076	26,903	213,921	40,812	74,460	16,631	52,763	14,232
(저장용)	14,503	11,644	20,173	15,905	8,150	6,033	5,878	4,535
사과	9,397	7,212	15,359	11,225	5,398	4,051	4,219	3,353
배	3,355	3,211	2,952	3,270	2,227	1,519	1,038	811
단감	1,347	855	1,268	1,141	525	463	621	371
참다래	404	366	594	269	-	-	-	-
(가공용)	84,573	15,259	193,748	24,907	66,310	10,598	46,885	9,697
사과	42,800	7,671	107,694	15,130	34,668	4,642	31,792	5,360
복숭아	4,770	1,125	11,212	1,591	5,026	1,456	2,717	873
포도	6,276	1,813	27,615	3,536	14,883	2,500	6,204	2,242
감	30,727	4,650	47,227	4,650	11,733	2,000	4,320	300
배	-	-	-	-	-	-	1,852	922

자료 : 농림부 농산원예국

다. 축산물 수급안정 지원

쇠고기는 소 사육두수, 소비성향, 경제성장목표 등을 지표로 총 수요량과 국내산 생산량을 추정하고 수입쇠고기 킬로그램에 대한 수입시기, 수입품목 등을 조정하여 수급을 조절하여 왔다.

그러나, 1992년부터 산지 소값이 계속 상승하자 정부의 송아지 입식자제 홍보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송아지 입식과열로 1996년에는 소 사육두수 과잉(1996년 12월 284만 4천두, 적정사육두수 250~260만두)을 초래하여 산지 소값이 하락했다. 소값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1997년 1월 25일부터 축산

발전기금 2,891억원을 투입하여 총 99,541두의 소를 수매하였다. 또한, TV·라디오 인터뷰, 신문보도, 장관친서 전달, 세미나, 지방순회교육, 리플렛 제작 배포 등을 통하여 소값 안정 및 소비촉진 홍보를 실시하여 1997년 쇠고기 소비는 36만 2천톤으로 전년보다 12%가 증가하였다.

한편, 쇠고기의 시장공급량을 줄이기 위하여 여름철 비수기의 수매육에 대한 방출 중단(7. 10~9. 4), 수입쇠고기의 방출량 감축을 통하여 수매육 9천톤, 수입육 37천톤 등 총 46천톤을 1998년으로 이월시켰다.

또한, 2001년 소와 쇠고기 수입개방을 앞두고 수입개방 이후에도 한우산업이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재점검하고 양축농가, 축산학계, 축산관련단체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1997년 7월 14일 새로운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한우전업농 1만호 육성, 3만호의 개량농가 육성, 제주도의 한우송아지 생산기지화, 송아지 생산안정제 실시, 조사료 생산 및 공급확대, 자가배합사료 생산지원 확대, 한우개량촉진 및 축산물종합처리장 10개소 건설 등이다. 동 대책의 착실한 추진으로 2001년 이후에도 한우산업이 수입쇠고기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돼지고기는 돈가 상승을 우려하여 국제가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내가격안정을 위해 1997 상반기에 수급조절용 1만 9천톤과 MMA 1만 5천톤을 수입 유통시켰다. 그러나, 대만구제역 발생으로 대일 수출이 호전되자 1998년에 이어 산지가격이 100kg당 20만원까지 급등하기도 하였다.

1997년 7월 이후 돼지고기 수입개방에 따라 7~9월중에는 돼지고기 수입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11월 이후 소비부진에 따른 돼지 산지가격 하락과 외환위기에 따른 환율 급등으로 수입이 급감하였으나, 1997년 총 수입은 6만 5천톤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하였다.

돼지사육두수는 전업규모농가 중심으로 계속 증가하여 1997년 9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총 사육두수가 700만두를 넘어 양돈 호황을 실감하게 되었으나, 하반기에는 출하증가로 산지가격이 13만원대까지 떨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돼지고기 수출은 일본수입량의 40%를 차지하던 대만의 구제역 발생에 따른 수출중단과 우리의 돼지고기 수출촉진대책 추진으로 전년대비 40% 신장한 5만 2천톤을 수출하는데, 이중 고부가가치 상품인 냉장육은 21%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1997년 일본 전체수입량중 한국산 점유량이 10%로 상승하였다.

닭은 공급측면에서 생산주기가 짧고, 가격등락 진폭이 매우 큰 특성을 지니고 있고 다른 축종보다 일찍 수입개방이 되어 수급대책을 세우기가 어려운 반면, 단시일내에 수급균형이 이루어지는 특성도 지니고 있다.

양계는 계열화사업을 통해 15개 계열업체로 하여금 양계산물 자율수매 비축 등 탄력적인 운영을 지도하였고 양계협회가 회원들의 사육수수를 양계수급에 맞게 조절토록 하였다. 또한 수급 및 가격에 대한 동향·전망·대책을 수립하여 시·도, 양계협회, 축협중앙회에 통보할 뿐 아니라, 양계협회·축협중앙회와 수시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유도하였다.

닭 사육수수에 영향을 미치는 종계·부화업에 있어 미등록업자에 대한 단속으로 불량 병아리 보급과 투기성 사육을 차단하였다. 양계협회의 자조금을 활용하여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닭고기, 계란 소비촉진 홍보 활동을 하고 양계산업을 위한 세미나도 개최하였다.

양계부문은 생산주기가 짧고 수입개방이 되어있는 상태이므로 민간자율 수급조절에 기본방향을 두고 있으며, 정부는 방역, 검역, 수출, 소비홍보 등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주고 있다.

한편, 우유소비는 그간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 식생활 향상에 힘입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우유 연평균 소비증가율은 1970년부터 1980년까지 21.2%, 1981년부터 1990년까지는 13.2%씩 매우 큰폭으로 증가하였으나, 1991년 이후 1997년까지는 3.6%씩 증가하는데 그쳤다. 국민 1인당 우유 소비량은 연간 40kg에 달한 1988년까지는 큰폭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크게 둔화되고 있다.

1997년도 우유 총수요는 245만 1천톤이며, 이중 2,44만톤은 국내에서 소

비하고, 1만 1천톤은 수출하였다. 공급측면에서 보면 198만 4천톤은 국내산으로 공급되었고, 나머지 44만 4천톤은 수입되었다. 우유 자급률은 81% 수준이었으며, 국민 1인당 연간 우유소비량은 53.3kg이었다.

1997년말 분유재고(탈지분유·전지분유)는 전년동기대비 1,086만 6천톤보다 31.5%가 감소한 744만 1천톤이었다. 1995년 10월 발생한 우유 위생논쟁 이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던 재고는 1997년 들어 일시 감소되었으나, 외환위기(1997. 12. 3) 이후 경기침체와 계절적 수급 불균형이 겹쳐 다시 증가하였다.

모든 유제품의 수입이 자유화 됨에 따라 탈지분유·전지분유·조제분유·버터·치즈 등은 수입량이 늘었으나 모조분유는 산업피해 구제조치로 인하여 수입이 2만 4천톤으로 전년도 3만 2천톤보다 25% 감소하였다.

(축산경영과 사무관 정병규)

(축산유통과 축산사무관 신대식)

제 5 절 농축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과 환경농업육성

1. 농축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안전성 검사의 목적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축산물을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제경쟁력을 향상하는데 있다. '98년들어 지금까지 총 70개 품목 5,000점에 대한 농약잔류, 중금속, 아프라톡신 등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속성검사방법을 도입 시범적으로 2,000점을 실시하고 향후 성과를 분석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조사대상품목 내역은 곡류는 쌀을 비롯한 3개 품목, 채소류는 딸기·오이·콩나물 등 47개 품목, 과일류는 복숭아·포도·사과 등 11개 품목, 그외 버섯·참깨 등 9개 품목이다. 앞으로 분석시설·장비·인력 확충계획에 맞추어 1999년 이후에는 거의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연간 27,000점 이상을 조사할 계획이다.

축산물의 경우 쇠고기·돼지고기 및 닭고기는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등 잔류물질에 대하여 도축시 지육검사(1998년도에 50,000건)를 실시하고, 이와 더불어 도축전의 소는 항생물질을, 돼지는 설파제 등에 대한 생체검사(1999년도에 30,000건)를 실시하고 있다. 축산물 위생처리를 위하여 사육단계에서부터 도축·가공·유통·판매단계별 위해요소를 발굴하여 중점관리하는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 system)를 도입하여 위생적인 식품을 생산·공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차별 조사계획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안전성 분석능력 증대를 위하여 분석인력 및 분석장비·시설을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다. 화학·농화학 등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를 선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전문분석 요원을 양성(96명)할 계획이다. 시·도 지소에 안전성조사 분석실을 설치('96) 5개소 → ('97) 8개소 → ('98) 9개소)하고, 신속·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GC, HPLC 등 첨단분석장비도 설치('96) 409대 → ('97) 652대 → ('98) 822대)할 계획이다.

(유통관리과 서기관 신금성)

2. 축산물 위생 및 가축방역대책

가. 축산물 안전성 및 위생수준제고대책

1997년도 주요사업을 보면 도축장 시설현대화를 실시하였고 간이도축장을 폐쇄하였으며 도축장경영자, 종업원, 축산물검사원의 책무 및 위생검사사항을 준수토록 축산물작업장(도축장·도계장) 위생관리요령(SSOP)을 제정하였다.

육류중 유해성 잔류물질 및 미생물검사요령을 제정 시행하여 항생물질 등 잔류물질 17종과 살모넬라, 대장균O-157:H7 등 미생물 4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1)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요령(S.S.O.P)

축산물을 생산할때 도축·가공단계에서 미생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SSOP를 제정 시행하였다.

SSOP는 축산물작업장경영자, 종업원, 축산물검사원이 도축시 지켜야 할 위생관리 수칙을 정한 것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시행에 앞서 전단계로 시행하고 있다.

SSOP는 시스템화된 도축장관리 요령으로 축산물작업장 종사자는 동요령에서 정하는 기준대로 작업에 임하면 축산물이 미생물에 오염되는 기회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1999년부터 시행계획에 있는 HACCP시행을 위한 연구도 대한수의사회와 서울대가 공동으로 금년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의과학연구소에서는 국내 3개 도축장을 대상으로 한국형 모델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육류중 유해성 잔류물질 및 미생물검사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설파제 등 유해잔류물질 17종 8만여점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결과 항생제 등이 잔류허용기준치 보다 높게 검출된 소 29두에 대하여 폐기처분토록 하였으며, 2001년까지는 113종에 대하여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육류에 대한 미생물검사를 강화하여 대장균 O-157:H7, 살모넬라등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고 있으며, 축산물작업장의 오염수준을 검사하여 도축장에서부터 미생물오염을 방지코자 일반세균, 대장균등의 미생물을 검사하여 작업장오염도의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1997년 4종 3,552건에 대하여 검사하였으며 2001년까지 8종으로 검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표 2-2-45>

연도별 국내산 축산물안전성검사현황

항 목	'91	'93	'95	'96	'97	'98(p)
○ 도축물량						
- 소(천두)	545	687	780	850	1,125	
- 돼지(천두)	9,454	9,679	10,178	10,794	10,918	
- 닭(백만수)	181	227	313	338	346	
○ 검사항목(종)						
- 유해물질	1	3	3	7	17	30
- 미생물	-	-	-	2	4	5
○ 검사물량(건)						
- 잔류물질		46,255	49,556	72,840	80,020	80,000
- 미생물				2,585	3,552	4,000
○ 불합격물량				7두	29두	

※ 주요 불합격 사유 : 잔류허용기준초과

(축산위생과 수의사무관 이길홍)

나.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최근 양축농가의 가축사육형태가 다두화·집단사육화되어 질병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축질병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피해는 축산업 총생산량의 약 20% 정도로 연간 약 1조 2천억원이나 된다.

양축농가는 질병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 및 치료약품을 과다 사용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곧 축산물내 유해잔류물질의 축적으로 이어져 국민보건의 위해 요소로 대두되었다.

정부는 가축질병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안전 축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1996년 6월부터 주YG축전염병 근절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2차년도인 1997년에는 가축방역예산 20,690백만원(국비 11,716, 지방비 3,638, 기금 5,336)을 투입하여 2,709만 1천두의 가축에 예방주사, 검진, 기생충구제, 가축혈청검사를 추진하였다.

(1) 전염병 피해예방을 위한 공동방역체계 확립

정부는 공동방역사업단 운영요령을 제정·시행(1996. 12. 31)하였다. 또한 1997년 53개소의 공동방역사업단을 설치, 촉발기금 15억2,400만원을 지원하여 방역차량, 예방약 보관냉장고, 고압세척기 등 10종의 장비를 확보하여 운영토록 하였다.

(2) 방역기술교육 실시 및 홍보강화

양축농가,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공수의 등을 대상으로 가축방역 홍보용 책자 및 비디오를 제작·보급하였다. 가축방역에 대한 참여 및 방역의식 고취를 위해 가축방역전진대회(1997. 7. 11), 가축방역 CPX 훈련('97. 7. 28~7. 31), 각종 세미나, 심포지움,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3) 가축전염병 발생시 조기신고체계 확립

가축전염병 의심 및 발생시 양축농가의 조기신고를 유도하여 초동방역 실시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종전에 시가의 80% 지급하던 보상금을 신고 시점 및 방역조치 상황에 따라 시가의 40%, 68%, 80%, 100%로 4단계 차등지급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조기신고체계를 확립하였다

(4) 병성감정 및 검진업무 기능강화

수의과학연구소에 15명의 전문가로 병성감정전담반을 구성하고 이동진단 차량으로 현장 역학조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민간 병성감정 기관 지정을 종전 7개소에서 수의과학대학과 인간연구소를 추가하여 17개소로 확대하여 현지 질병진단 치료, 방역상담 및 기술교육을 강화하였다.

(5)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기능강화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의 인력보강을 위해 병무청에 협조를 얻어 1998년부터 공익근무요원 162명을 확보, 시도별 배치·운영토록 하였다. 살처분가

축과 폐사축 등 소각처리를 위한 소각로를 가축위생 시험소별로 1기씩 설치할 계획이며, 기동방역차량('97:28대, '98:19대) 및 침단검사장비('97:15대, '98:14대)를 지원하여 진단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6) 가축질병방제 전산망 확충

가축질병 정보, 발생신고, 질병진단 및 방역조치 상황 등을 조기에 파악하여 양축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보통신부에서 개발용역비(1차 : 576백만원, 2차 : 625백만원)를 지원받아 양축농가와 수의과학연구소, 시도 가축위생시험소간 초고속 전산망에 의한 가축질병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7) 종돈장·종계장·부화장의 위생관리 강화

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 종계장 인증요령을 고시(1996. 9. 2)하여 동고시에 의하여 신청을 한 6개소의 종돈장 및 4개소의 종계장에 대하여 1년 동안 전염병 발생상황 등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8) 도축장·도계장의 가축운반차량 소독실시 의무화

가축수송차량 등의 소독요령을 고시(1988. 2. 2)하여 가축수송차량 등에 대하여 소독을 의무화하였고, 45개소의 도축장 및 도계장이 소독시설을 갖추도록 축발기금(37억 6,400만원)에서 용자 지원하였다.

(축산위생과 수의사무관 임경종)

(축산위생과 수의사무관 김창섭)

다. 「구제역」 국내유입방지대책

1997년 3월 20일 대만에서 악성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이 발생하여 사육하는 돼지 1,100만두중 465만두가 감염되어 18만두가 죽고 385만두는 살처분되었다. 이에 따른 양돈 관련산업의 손실액은 약 3조 5천억원에 이르렀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우제류동물의 입, 발굽등에 물집과 염증이 생기는 치료 불능의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가축 전

염병증 전파력이 가장 빠르고, 발생시는 근절이 어려워 양축농가와 관련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따라서 국제 교역상 가장 중요한 규제대상 전염병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발생시는 소, 돼지, 양 등 가축과 그 생산물 수출을 중단시켜야 한다.

정부는 「구제역」의 국내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구제역특별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공·항만 검역강화, 유관기관(국방부, 관세청, 해양경찰청 등)과 협조하여 항구적인 「구제역」 방역체계를 구축하였다.

(축산위생과 수의사무관 임경종)

(축산위생과 수의사무관 김창섭)

(축산위생과 수의사무관 이홍섭)

<표 2-2-46>

구제역특별방역대책 주요추진내용

일시	추진사항	주요내용
'97. 3.20	대만산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금지 조치	○ 대만산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금지 조치
3.22	대만산 수입돼지고기 반송	○ 1997년 2월 17일이후 도축된 대만산 돼지고기 반송지시 및 협조요청
3.25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밀수입 방지 협조요청	○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밀수 등) 불법 반입 단속강화 협조 및 검역철저 지시 (관세청, 해양경찰청, 동물검역소 등)
3.25 ~ 4. 3	양축농가에 대한 구제역 방역교육 긴급실시	○ 포천, 안성, 홍성, 김제, 김해지역에서 양축농가 방역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구제역 방역교육·홍보실시
4.16	악성전염병방역심포지움 개최	○ 구제역발생에 대비한 국내방역 강화
4.22	구제역발생특별방역대책 국무회의 보고	○ 구제역(FMD) 개요, 대만의 발생 상황 및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 추진내용 ○ 차관회의보고(5. 1) 및 관계부처 국장회의(5. 1)
4. 2 ~ 5. 2	구제역 특별방역추진실태 조사	○ 서·남해안의 항만주재 유관기관 협조 실태, 동물검역 홍보물 부착 및 홍보사항, 동남아지역 입·출항 선박 및 횡수 선적 물품조사, 외항선의 잔반처리 실태 등 조사
5. 9	구제역특별방역대책 추진 협조요청	○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제2조정관 주재로 구제역특별방역추진 관련 부처에 적극 협조 요청 및 구제역특별방역 세부 실시요령 통보
5. 9	구제역 관련 합동담화문 발표	○ 구제역예방을 위해 양축농가가 지켜야 할 사항 등(재경원장관, 내무부장관,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5.15	구제역 관련 홍보	○ 공보처에 홍보내용과 TV자막 방영문안 협조 요청 ○ 구제역 방역홍보용 비디오 500개 제작·배부
7. 2	구제역방역대책 추진 관련부처 협의회	○ 구제역방역대책 추진협의회 결과보고 및 통보내용 협조 요청

일 시	추진 사항	주요 내용
'97. 7.11	가축방역전진대회 개최	○ 공동방역사업단, 일선방역행정기관의 가축 질병방역체계를 점검(경기 수원)
7.28 ~7.30	구제역 모의방역훈련(CPX) 훈련	○ 구제역발생을 가상하여 초기단계부터 현장 위주의 방역도상훈련 실시 - 의심가축 신고, 현지조사, 병성감정, 긴급 방역조치 및 관련기관 업무체계 점검
8.26 ~9. 6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 관련부처 실태 합동조사	○ 공·항만 검역강화·밀수입 단속, 음식물 찌꺼기 처리실태 부처별 소관 추진실태 (농림부, 관세청, 해양경찰청)
9.10	구제역 백신비축	○ 구제역백신(O ₁ , A ₂₂ , Asia 1) 50천두 추가 비축
10.27	구제역 국제공동심포지움	○ 구제역방제전략, 진단기술, 방제경험 등 - 대만 가축위생과장, 독일 구제역 전문가
12.26	구제역 유입방지관련 부처 협의회	○ 12월중 대만에 구제역 재발생으로 동절기 구제역 유입방지 대책 적극 협조요청

3. 환경농업육성

가. 여 건

최근 환경문제는 국제적인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구온도의 상승, 열대우림의 감소, 산성비, 사막화 등 개발위주의 경제성장 및 지속적인 산업화로 자연생태계의 자정능력이 떨어져 지구전체의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구환경문제는 특정분야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에너지, 산업, 무역, 생활문화 등 모든 분야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이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및 영향이 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 또는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분야가 환경친화적인 방향

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울러 개별국가의 대응노력과 함께 세계 각국이 공동 참여하는 국제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농업분야의 환경관련 국제동향을 살펴보면, 1992년 6월 리우선언 및 그 세부실천계획인 「의제21」의 채택으로 농업정책의 친환경측면에서 재조명, 토지자원의 합리적 이용, 토양의 보전·복구, 수자원 관리, 병해충종합관리 등 지속적 농업 및 농촌 개발에 관한 사항을 실천토록 의무가 부과되었다. OECD 농업/환경위원회 합동회의는 농업정책을 친환경적으로 개혁하기 위하여 농업정책의 환경에 대한 영향분석과 아울러 작물양분관리, 농약사용, 농업용수사용, 농지이용 및 보전 등 농업부문의 환경지표를 개발중에 있다. CODEX는 유기농산물 등에 대한 기준, 표시방법 등 유기식품에 대한 기준 설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종 국제기구 및 협약에서 현행 농업을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의 농업환경을 살펴보면, 농약, 화학비료 등의 과다사용과 축산분뇨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농경지, 농업용수 등 농업환경과 자연환경이 오염될 뿐만 아니라, 농경지의 유효인산 및 칼리함량의 증가, 산성화 및 유기물 함량의 저하 등으로 지력을 떨어져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이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농업환경기반의 유지·보전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농산물에 대한 기호 변화에 부응하고, UR 이후의 차기라운드에 대비하는 환경농업정책의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환경농업과 농업서기관 여인홍)

나. 환경농업육성방향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극대화하고 환경저해요인을 최대한 감축하여 농업을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1996년 7월 「21세기를 향한 농림환경정책」을 수립하였다.

동계획에 따라 1996년부터 2010년까지 15년간을 3단계로 구분하여,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제1단계에서는 환경농업의 추진체계 및 유통체계 정

비 등 환경농업에 대한 기초를 확립하고, 실천가능한 부분은 기술체계를 정립하여 농가에 보급해 나간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제2단계에서는 개발된 환경농업의 신기술을 체계적으로 보급하고, 지역단위의 환경농업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그린 라운드(GR) 대비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등 본격적인 환경농업의 보급단계로 정해 추진해 나간다. 2010년까지의 마지막 3단계에서는 농업의 모든 분야에서 환경농업의 기반을 확립하여, 새로운 기술과 자재 활용으로 차원높은 환경농업을 전국적으로 정착시키는 단계로써 정해 환경농업을 완성시켜 나갈 계획이다.

환경농업은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생산을 지속 가능케하는 농업형태로써 농업생산의 경제성 확보,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을 말한다.

정책방향은 농사를 지으면서 발생하는 농약·화학비료·축산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대한 줄이고, 농토의 지력과 농업용수의 수질 등 농업자원을 유지·개량해 나가며,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를 육성하는 것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1997년 환경농업 주요시책

(1)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원 경감대책 추진

(가) 농약사용량 감축 추진

우리나라 농약사용량은 1991년 2만 7천톤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여 1997년에 2만 4천톤 정도로 3천톤 정도가 줄었다.

2004년까지 농약사용량을 50% 줄일 수 있는 기술의 개발·보급에 목표를 두고 농약사용량을 줄이는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1997년에는 전국적으로 병해충 관찰포 1,650개소, 예찰포 200개소를 통한 과학적 정밀예찰 활동을 종전 월 2회에서 월 4회로 강화하고, 예찰결과에 대하여는 관련기관·단체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예찰회의를 개최('97 : 18회)하여 예찰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병해충 방제를 지도하는 등 적기 방제에 힘썼

다. 또한, 병해충 종합관리(IPM)체제의 조속한 확산을 위해 전문지도사 99명, 농업인 3,155명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농약 사용량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한편, 생물농약과 독성이 낮은 농약을 계속 개발·보급하고,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를 위한 대농업인 교육('97 : 767천명)을 확대 실시하였다.

(나)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추진

화학비료는 연간 95만톤(성분량 환산) 정도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농촌진흥청이 추천하고 있는 작물별 적정시비량 추정치 70만톤보다 25만톤이 많은 양이다. 이로 인해 농경지 토양에 인산·가리가 과다 집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작물에 흡수되지 않은 잉여 비료성분은 지표수에 유입되어 하천과 호수의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등의 환경오염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비료사용량을 2004년까지 40%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데 목표를 두고, 1997년에는 전국 146개 농촌지도소에 설치된 토양종합검정실을 통해 10만 5천점의 토양을 정밀 검정하여 토양에 부족한 비료만 적정량을 시비토록 처방하였다. 또한, 저인산·저가리 복합비료 2만 6천톤, 완효성 비료 1천톤, 입상배합비료 1만 6천톤 등 환경친화형 비료의 사용을 확대하고, 축산분뇨, 부산물 등을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함으로써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줄이고 비료성분의 유실량을 감축시켜 나가고 있다.

(다) 축산분뇨 처리대책 추진

축산분뇨의 발생량은 1997년 12월 현재 축종별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연간 46백만톤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분이 3천만톤(66%), 뇨가 1천 6백만톤(34%)으로 추정된다.

1997년말 기준 축산분뇨 설치대상농가 8만 4천농가중 89%인 7만 5천농가가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설치농가중 80%는 자원화시설 20%는 정화시설을 설치하였다.

축종별로는 분뇨처리가 비교적 용이한 닭의 설치율은 83%로 낮으나, 소

규모의 경우라도 별도의 분뇨처리시설이 필요한 돼지의 경우는 95%로 대부분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다.

<표 2-2-47>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현황

(단위 : 개소)

	설치대상	설치현황			미설치
		소계	자원화시설	정화방류시설	
계	84,285 (100%)	74,930 (89)	60,138	14,792	9,355 (11)
허가대상	6,094 (100)	6,061 (99)	5,205	856	33 (1)
신고대상	39,342 (100)	36,603 (93)	30,631	5,972	2,739 (7)
간이대상	38,849 (100)	32,266 (83)	24,302	7,964	6,583 (17)

자료 : 농림부 축산국

또한, 1997년도에는 1,274억원을 투입하여 5,389개소에 신규로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축산분뇨 자원화 촉진을 위하여 톱밥제조시설(10개소)과 왕겨연화시설(3개소)을 설치하였다. 가축분뇨자원화 및 이용기술개발 연구(8개 과제)를 농기획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그동안의 축산분뇨처리 사업을 총점검하고 앞으로의 축산분뇨 처리방향 설정을 위해 「축산분뇨처리 보완대책」을 수립 시행하였다.

(축산정책과 행정사무관 박상운)

(라) 폐영농자재 수거 추진

농약이나 비닐 등 영농자재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약빈병이나 폐비닐로 인한 농업환경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부 산하의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통하여 농약빈병과 폐비닐을 유상수거하고 있다. 매년 농약빈병은 7천만개, 폐비닐은 9만 2천톤 정도가 수거되고 있으며, 이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하여 평시의 수거와 아울러 연 4회 정례 수거기간을 정하여 집중 수거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에는 농약빈병 38백만개(발생량의 56%), 페비닐 53천톤(발생량의 57%)을 수거하여 수거실적이 전년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수거율을 높이기 위하여 1997년 10월부터는 한국자원재생공사의 마을단위 순회수거와 병행하여 농협이 농용자재 운반 후 마을 단위로 수집되어 있는 농약빈병을 수거할 수 있도록 수거체계를 개선하였다. 사용자인 농업인 책임하에 수거할 수 있도록 각종 농업인 교육시 중점 계도하고, 작목반 등 영농조직을 통한 수거지도 및 농업관련 전문지, 반회보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농업인의 의식을 바꿔나가고 있다.

농기계는 1997년말 보유대수가 333만 1천대로서 이중 약 3.6%인 12만대 정도가 폐농기계인 것으로 추정된다. 1997년도에는 이들 폐농기계중 10만 1천대(발생량의 84%)가 수거됐으며, 나머지는 농가에서 부품을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폐농기계를 원활히 수거하기 위하여 폐농기계를 수거, 해체, 압착하는 폐농기계처리장 설치를 1994년부터 지원하여 현재 각 시·도별로 1~2개소씩 전국에 13개소를 설치하였다. 시·군에서 “폐농기계 확인 스티커”를 부착하면 폐농기계처리장에서 수거·처리토록 수거체계를 갖추고, 농기계 구입자금도 폐농기계 처리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제도화하였다.

(2) 농업환경 유지·개량정책 추진

(가) 토양개량제 공급·객토 등 농토배양사업 추진

우리 나라 토양은 모얍자체가 산성인데다 화학비료 의존형 농법으로 생산력이 떨어지고, 지력은 일본에 비하여 절반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토를 배양하기 위해 토양개량제 시용, 객토 등 농토배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 1996년까지 보조 50%, 자담 50%로 공급하던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개선하여 1997년부터는 100% 보조사업으로 전환하고, 공급물량도 1996년 31만 6천톤에서 1997년 43만 8천톤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농협을 통하여 들녘별로 공동 살포토록함으로써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켰다. 아울러 토양개량효과를 높이기 위해 1998년에는 공급물량을 확대하여 전 농경지가 6년 1주기로 개량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객토사업은 1996년까지 1년 상환의 단기성 농업경영자금으로 지원함에 따라 농업인이 사업을 기피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1997년부터는 국고사업으로 전환, 융자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17.6천ha에 대하여 객토를 실시하였다.

특히, 1995~1996년까지 전국 70개 금속광산 인근 농경지에 대하여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오염여부를 조사한 결과, 16개 광산의 인근 농경지 265ha가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나 시급히 개량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시설설치 면적을 제외하고 실제로 개량이 가능한 200ha를 개량해 나가기로 하고, 1997년도에 1차로 169ha의 농경지 개량을 위해 10억원을 투자하여 30cm이상의 복토 및 석회 시용을 추진하였으며, 1998년에는 31ha를 개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안전농산물 생산차원에서 토양의 오염여부를 계속 조사·점검하여 추가로 발견되는 오염농경지도 단계적으로 개량해 나갈 계획이다.

(나) 농업용수 수질관리

농업용수의 수질관리를 위해서, 전국의 2만 8천개 주요 농업용수원을 대상으로 수질측정망을 1997년까지 175지점에 설치하여 농업용수의 수질을 점검하고, 농업용수 수질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수질개선공법 연구등을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도모하였다. 수질이 나쁜 농업용수원에 대하여 수질개선대책을 수립, 1999년부터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수질측정망도 2001년까지 550지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3) 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

환경농업실천농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생산·유통시설 등을 지원하고, 쉽게 환경농업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환경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하였다. 그 외에도 환경농업실천농가가 생산한 환경농산물의 판로를 보장하여 유통을 활성화시키는 등 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추진하였다.

(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지원 사업 추진

중산간지의 경지면적 1ha미만인 중소농가를 대상으로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토양 및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토착미생물생산시설, 유기·자연농업식 축사 등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장비를 다양하게 지원하였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1,000개소의 단지조성을 목표로 단지당 2억 5천만원씩, 총 2,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1995~1997년까지 3년간 795억원을 투자하여 318개 단지를 조성하였으며, 1998년에는 200억원을 투자하여 80개소의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나)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계획 수립

환경농업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해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지구당 20억원씩, 총 3,780억원을 투자하여 189개소의 환경농업지구를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1998년에는 신규로 100억원을 투자하여 5개 지구를 시범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다) 환경농업에 대한 기술의 개발·보급 추진

민간부문에서 사용되어져 오고 있는 환경농업 관련 농법이나 자재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체계의 정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97년까지 수집된 농법·자재 36건을 검토하여 16건을 검증대상과제로 선정하여 약 3년에 걸쳐 과학적인 사용량, 방법, 효과 등을 검정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검증결과에 따라 효과가 좋은 농법이나 자재는 보급·발전시켜 나가고, 효과가

없는 것은 폐기함으로써 환경농업의 기술 및 보급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지대별 특성에 맞는 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상수원보호구역, 산촌 지역, 평야지 대단위 수도작지역 및 고랭지의 4개 권역별로 환경농업모형을 개발·보급할 계획을 수립하고, 1997년도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모형개발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환경농산물의 유통 활성화 지원

환경농산물은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고 생산·출하시기가 편중되는 등 수급이 불안정하며,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일부 환경농산물은 제값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농산물 판매장 확충, 구매자금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하였다. 1997년 서울시에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8개소(양천, 강남, 관악, 은평, 용산, 광진, 강북, 강서)를 개장하였으며, 농협에도 유기농산물유통본부, 슈퍼, 하나로마트 등에 전문판매코너를 설치하여 소비자들이 환경농산물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농산물 유통에 참여하는 단체에게 1997년도에 처음으로 구매자금 12억원을 지원하여 환경농산물의 수급안정을 도모하였다. 앞으로도 환경농산물 판매장 확충, 구매자금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농산물의 철저한 품질관리와 보증을 위하여 국립농산물검사소는 1993년 12월부터 유기·무농약재배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실시하고, 1996년 3월부터는 저농약농산물도 품질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1997년말 현재 인증 품목은 모두 52개 품목으로 1,020농가, 22천톤의 환경농산물이 품질인증을 받았다. 품질인증을 받은 환경농산물이 계속 확대되도록 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자체, 농협, 민간단체 등의 자체품질보증을 통하여 얼굴있는 상표를 개발함으로써 환경농산물을 차별화하여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환경농업과 농업사무관 안영수)

(4) 환경농업육성법 제정

환경문제와 관련한 국제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내적으로는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환경농업에 대한 정책수요도 증대하고 있어, 환경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추진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환경농업육성법을 1997년 12월 13일 제정·공포하였다.

(가) 법제정 추진경과

1995년 1월 16일 농림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연농업협회 등이 참석하는 「환경보전형농업육성에관한법률」 제정 간담회를 개최하여 법률제정방향 등을 논의하고, 법률제정기초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등 본격적으로 법률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1995년 11월과 1996년 7월에 2차례에 걸친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었으나, 동 법률안은 법 적용대상을 유기농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 따라서 의원입법을 보류하고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을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이후 3차례의 실무작업반회의, 3차례의 법령정비협의회, 농림부 정책심의회를 거쳐 1997년 5월 15일 농림부 시안을 확정하였으며, 동 시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입법예고, 관련부처·단체에 의견을 조회,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의견수렴과정에서 환경부는 환경에 관한 업무가 환경부 고유업무로써 별도의 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환경부의 기본법으로 각 부처의 환경관련 업무추진이 가능하고, 각 부처별로 환경관련 개별입법을 추진할 경우 환경부 소관법과 중복된다고 환경농업법 제정에 반대하였다. 1997년 7월 2일 당정회의에서 환경농업 관련법은 1995년 11월부터 의원입법으로 추진해 왔던 법이므로 당초 의도대로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신한국당의 의견에 따라, 7월 8일 의원입법으로 「환경농업육성법제정법률안」이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다.

1996년 7월 16일 이길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보전형농업육성및지원

에 관한 법률안』과 「환경농업육성법제정법률안」 두 법률안이 제184회 국회(임시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같이 검토되게 되었다.

9월 29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및 관련단체 대표의 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한 후 11월 5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개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성안하였다. 11월 10일 제185회 국회(정기회) 제9차 위원회에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의결되었으며, 11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12월 13일 공포되었다.

(나) 환경농업육성법 주요내용

「환경농업육성법」은 1998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며,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농업생산에 있어서 농약·비료 및 가축사료첨가제 등 화학자재의 기준사용량을 준수하고, 축산분뇨 등의 적절한 처리를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며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환경농업”으로 정의함. (제2조)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 및 민간단체에 대해 환경농업을 추진하기 위한 각 주체별 책무와 역할을 규정함. (제3조 내지 제5조)

다. 농림부장관은 매 5년마다 환경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실천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제6조 및 제7조)

라. 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함. (제8조)

마.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 개선대책을 추진함. (제9조 및 제10조)

바.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함. (제11조 및 제12조)

사. 환경농업의 기반구축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교육훈련 및 홍보를 통해 환경농업의 발전을 도모함. (제13조 내지 제15조)

아. 환경농산물을 일반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전환기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저농약농산물 5종으로 구분하고, 환경농산물(일반환경농산

물 제외)을 생산하여 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하게 하며, 그 시
판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함. (제16조 내지 제18조)

자. 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함. (제19조)

차. 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과 농업관련 단
체의 장 등에게 환경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제20조)

차. 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환경농업의
기준 및 목표를 수립하도록 함. (제21조 내지 제22조)

(환경농업과 농업사무관 안영수)

제 6 절 농산물 수출진흥 및 수입관리

1. 농산물 수출진흥대책

농산물 수출은 그동안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경쟁력강화 시책과 적극적
인 시장개척활동에 힘입어 90년대 이후 정체상태에서 벗어나 1994년부터
증가세로 반전되었고, 1997년에는 18억 4,700만불을 수출하여 UR협상이 타
결된 1994년에 비해 25% 증가하였다.

수출의 획기적 증가가 어려운 이유는 외국바이어가 원하는 고품질 규격
농산물생산기반이 취약한 상태이고, 생산농가와 수출업체가 영세하여 안정
적인 수출물량 확보가 어려워 지속적인 수출이 곤란할 뿐아니라, 국내 수
출품의 규격화, 등급화 및 디자인과 포장 등 상품화 기술에 대한 수출지원
체제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시간내의 노력으로 눈에 띄는 수출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
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수출기반조성을 위해 대내적으로 수출유망품목
을 개발하여 규격을 표준화하고 포장을 개선함으로써 상품성을 제고하는
한편, 1997년까지 수출단지 72개소를 조성하였다. 대외적으로는 해외시장

정보조사 및 신속·전과체계 구축과 국제농업박람회를 통한 특별기획전을 개최하였다.

가. 해외시장 개척

(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박람회 참가는 제품 판매활동, 기업 이미지 제고, 정보수집, 바이어 확보 등 수출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업 활동을 한자리에서 가능케 하는 효율적인 마케팅 수단이다. 우리 나라는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장기적인 수출기반 조성, 바이어 발굴, 세계시장정보 입수 등을 목적으로 국제식품박람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해 왔다. 박람회 참가를 위한 자금, 정보, 인력 등은 주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지원되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중소 수출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가 증가하였으며 수출의욕도 상승하였다.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는 1988~92년 기간에도 9회의 참가실적이 있으나 본격적으로 참가하기 시작한 것은 1993년 이후이다. 지난 5년간(1993~97) 참가 실적은 총 76회에 달한다.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대상 지역은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1993년에는 유럽, 일본, 미주, 한국에 국한되었으나 1997년에는 유럽 3회, 일본 2회, 미주 3회, 중국 3회, 브라질 1회, 호주 1회, 러시아 1회, 싱가포르 1회, 한국 1회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의 박람회 참가가 증가하고 있다.

1997년에는 470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품목수는 1,977개로 증가하였다. 박람회 현장에서 외국 바이어와 직접 상담을 통해 이루어진 수출 계약액은 1993년 2,656만달러에서 1997년 1억 6,412만달러로 급증하였다. 또한 박람회 참가 규모와 회수가 증가함에 따라 참가에 필요한 사업비도 증가하여 1997년에는 총 25억원이 소요되었다.

<표 2-2-48>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실적

(단위 : 천불)

	1993	1994	1995	1996	1997
참가회수(회)	10	18	15	17	16
참가업체수(개)	212	299	365	508	470
출품품목수(개)	915	1,221	1,322	1,826	1,977
수출계약액(1천달러)	26,856	76,873	107,609	140,691	164,122

(2) 해외홍보

우리 산물의 특성과 좋은 이미지를 외국바이어와 소비자들에게 알려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해외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홍보사업은 전문성과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어 영세한 농산물 수출업자가 이를 담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사업의 기본방향은 주요 수입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을 통한 수요창출과 이미지 제고 효과를 극대화하고, 홍보대상 상품의 수출시기를 감안한 집중적 홍보활동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세계 널리 알려나가는 것이다.

주요 홍보 수단으로 책자, 전문지, 방송, 옥외광고, 리플렛 등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무역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수출 유망상품 디렉토리는 1993년부터 매년 3000~50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영어, 일어, 중국어 3개국어로 발간되고 있다. 광고사업은 1993년 2회를 시작으로 1997년에는 13회의 광고를 해외유명식품 전문지에 게재하였다. 주요 전문지로는 「International Fruit World」(스위스), 「K. B. D. V」(캐나다), 「Her World」(싱가포르), 「Asia Fruit」(영국) 「Nikkei Restaurants」(일본)등을 이용하고 있다. 그밖에 재미교포신문, 중국시보, 연합보 등의 일간지를 이용한 광고와 라디오 코리아 등의 방송광고도 이용하고 있다. 1996년부터 일본의 오사카, 시부야, 나고야에 TV식 전자 광고판을 설치하여 김치, 청과류, 돼지고기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밖에 홍보용 VTR(영·중·일어)을

제작하여 국제박람회를 통해 상영, 배포하여 우리농산물의 우수성과 한국의 식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나. 농산물 수출지원체제 강화

농산물 수출업체의 우수 농산물 구매지원을 위하여 원료 구매자금, 시설자금 등을 1996년의 1,512억원에서 1997년에는 1,766억원으로 확대 지원하였으며, 대출절차의 간소화와 서류감축 등을 통하여 보다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1995년 3월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처음 실시한 농수산물 수출보험제도는 1996년 6월에는 보험료 부담액을 50% 경감하였으며, 1996년 10월에는 가격상승위험에 대한 가입대상품목을 종전의 24개 품목에서 전품목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보상비율도 보험 계약액의 40%에서 60%로 확대하였다.

이 결과 농수산물 수출보험의 계약체결 실적은 1996년도에 323억원에서 1997년에는 47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수출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발굴·해소하기 위해 1997년도에 「농산물 수출애로 상담실」을 설치·운영한 결과, 총 160건에 달하는 수출애로 사항을 발굴하여 장단기 해소대책을 마련·추진하였다.

(무역진흥과 사무관 남동익, 윤동진)

2. 수입관리

1997년에는 시장접근물량 이외에 7월 1일자로 신규개방된 37개품목의 수입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이미 자유화된 품목에 대하여는 국내산업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업피해구제조치, 조정관세부과 등 WTO 규범과 국내 관련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1) 37개 신규개방품목에 대한 수입관리

1997년 7월 1일 오렌지, 돼지고기, 닭고기 등 37개 품목이 신규 개방됨에 따라 이들 품목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관련산업에 피해가 우려됐다. 품목

별 수입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수입품의 국내판매가격, 소비자 반응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수입급증으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피해에 대비하였다. 수입물량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국내에 없는 유해병원균이나, 식물병해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동식물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지 않도록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였다.

또한 수입개방에 대한 정부시책을 언론과 소비자단체 등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급격한 수입증가를 방지하였다.

(2)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시장접근물량 67개 품목군중 쌀, 쇠고기, 고추, 마늘, 참깨 등 19개 주요 품목은 1996년과 마찬가지로 국영무역으로 수입하였으며, 수입시기는 국내 생산 시기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수급안정과 수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이들 품목에서 발생한 수입 이익금(1997년 잠정:3,750억원)은 닭고기, 돼지고기 등 수입권공매 품목에서 나온 수입이익금(250억원)과 함께 농안기금이나 축발기금 등에 납입토록 하여 관련품목의 경쟁력 제고사업에 재투자토록 하였다.

국내생산이 부족하여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종돈, 종계, 종자용 옥수수 등 9개 품목군의 원자재와 국내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저율 관세 물량 확대가 불가피한 참깨, 대두, 팥, 전분 등 12개, 총 21품목군에 대하여는 저율관세 물량을 필요한 만큼 늘려 국내 관련산업을 보호하였다.

(3) WTO가 허용하는 각종 수단을 최대한 활용한 수입관리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량에 대하여는 고율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증가를 억제하였고, 특히 관세화 대상품목인 땅콩, 메밀 등 61개 품목에 대하여는 수입물량과 가격이 일정수준을 넘을경우 자동적으로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국내외 시세차익을 노린 수입급증에 대비하였다.

이미 자유화된 품목중 저가로 수입되는 당면, 표고버섯 등 11개 품목에

대하여는 최고 90%까지 관세를 인상 조정(조정관세 부과)하여 수입을 억제하였다. 특히 모조분유에 대하여는 산업피해구제 제도를 활용하여 그동안 수입증가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무역진흥과 농업사무관 조일호)

제 7 절 농촌활력증대 및 농업인 복지증진

1. 농촌생활환경의 지속적 개선

가. 정주생활권 개발

정주권개발사업은 농업생산 및 소득기반과 함께 주택 등 생활환경을 마을단위로 집중 개발하되, 문화마을조성사업은 중심마을 위주로 신규택지 개발 또는 재개발 방식을 도입하여 지구당 2~3만평에 100~300호 규모의 현대식 기반을 갖춘 마을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정비가 가능한 마을에 대해서는 일반정주권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농어촌생활환경을 연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1997년에는 총예산 3,498억원(국고 80, 지방양여금 1,643, 지방비 704, 융자 1,071)을 투입하여 일반정주권개발사업으로 256개면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여 54개면에 대한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문화마을조성사업은 신규 21개 지구를 포함하여 61개 지구에 대한 마을기반조성을 추진하여 19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정주권개발면과 기반시설이 완료된 문화마을지구에 4천동의 농어촌 주택을 개량 정비하였다. 또한 농어촌의 환경개선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마을조성과 연계하여 21개 지구에 대한 마을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였다.

2004년까지 전국 771개면에 대하여 정주권개발사업의 제1단계 지원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면당 1개소 수준의 문화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선진화된 농어촌마을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마을 정비는 면당 2~5년간의 사업기간 동안 최고 45억원(보조 30, 융자 15)을, 문화마을조성사

업은 지구당 3년 내외의 사업기간 동안 50억원(보조 20, 용자 30) 수준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농어촌지역의 환경개선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마을하수처리시설을 문화마을과 연계하여 지구당 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 농어촌도로 확·포장

<표 2-2-49>

도로포장 현황

(’95년말 현재)

구 분	총 연 장(km)	포 장 도(km)	포 장 륜(%)
고 속 도 로	1,825	1,825	100
일 반 국 도	12,043	11,993	100
특 별 시 · 도	14,082	12,759	91
지 방 도	12,925	9,853	76
시 · 군 도	29,439	19,958	68
농 어 촌 도 로	62,459	14,077	23
(’96년말)		(15,398)	(25)

자료 : 1996년 「건설교통통계연보」(농어촌도로는 내무부 제공)

낙후된 농어촌도로를 대폭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양여금의 농어촌도로 배분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농특세 예산을 추가 지원하여 농어촌도로 포장률을 1996년 25%에서 2004년에는 47%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표 2-2-50>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획

구 분	계	’94~’96	’97계획	’98~2004
사업량 (km)	17,168	3,469	1,280	12,419
사업비(억원)	44,210	9,336	4,117	30,697

자료 : 내무부 지방재정경제국

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표 2-2-51> 상수도 보급현황(1996년말 현재)

(단위 : 천명)

구 분	총 인 구	급수인구	미급수인구	보급률(%)
○ 도시지역	38,296	35,415	2,881	93
- 특별시, 직할시	21,841	21,417	424	98
- 도의 시지역	16,455	13,998	2,457	85
○ 농촌(군)지역	9,130	3,408	4,722	42
계	46,426	38,823	7,603	84

자료 : '97 상수도 통계

농촌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1996년말 42% 수준으로 도시지역(93%)에 비하여 상당히 낙후되었으며, 특히 면단위 이하에 산재된 자연마을중 상수도 공급을 받은 마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대부분 마을은 우물·하천 등 자연수나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으나, 날로 심각해지는 농촌지역 수질 오염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면단위 이하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에 암반지하수를 개발하여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를 다목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암반지하수개발)을 1994년부터 추진하여 1997년까지 1,464개소를 개발하였으며, 2004년까지 5,000개소의 암반관정을 개발할 계획이다.

<표 2-2-52>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계획

구 분	추진목표	'97까지	'98계획	'98이후
사 업 량(개소)	5,000개소	1,464	400	3,136
사 업 비(억원)	8,500억원	2,530	680	5,290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라. 농촌생활여건 개선

1997년에도 농촌 생활환경의 지속적인 개선과 농촌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환경개선, 농작업환경 개선, 농촌여성 일감갓기 등의 주요사업과 생활개선회 육성,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용자금 438억원을 지원하여 12,500호에 부엌과 목욕실을 개량하거나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급탕기를 설치하였으며, 2004년까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농업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농작업 환경개선 지도로는 82개소에 29억원(개소당 3,500만원, 국비 50%)을 들여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고,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162개소를 육성하여 종합적인 농작업 환경개선과 건강관리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시군당 4개소씩 설치할 계획이다.

농촌여성들의 경제력 향상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자긍심과 농촌정착의지를 고취시키고, 농가경제에도 도움을 주기 위하여 농촌여성 일감갓기 사업장을 신규로 국비 10개소, 지방비 41개소를 육성하고, 기존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품질향상과 포장개선, 판로확보 등으로 우수한 상품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1996년부터 육성해온 제2차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109개소에 대해서는 1차년도 요구조사와 여건조성을 바탕으로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활력화를 위해 생활개선사업 차원에서 노인교실, 공동부업, 건강증진활동, 봉사활동, 전통문화 전승활동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한편,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생활개선회원들이 앞장서서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근검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근검절약 실천대회, 생활용품교환 바자회, 교육(4,245회, 181천명) 등을 추진하였고, 합리적인 가정경영을 위해 농가용 가계부를 제작·보급하였다.

우리 농산물 애용과 한국형 식생활문화의 정착을 위해 우리 콩으로 담근 간장·된장 보급, 전통문화 계승과 건전한 생활문화 보급 등을 추진하였다. 생활개선회 6만 3천여 회원을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도록 지원하였으며 과학적 생활기술 보급을 위해 농촌여성 23만명을 대상으로 생활과학기술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고 농촌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생활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중앙과 도, 시군 지도기관의 유기적인 협력하에 사업을 추진하였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국 생활개선과 생활지도관 임평자)

2. 다양한 소득원 개발

가. 농공단지 운영 지원

농공단지 개발의 활성화와 기지정 농공단지의 내실화를 위하여 1994년 5월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을 개정하여 1991년 12월부터 중단된 지방비 융자재원에 대한 여신을 재개하였다. 「산림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대체조립비 납부를 면제시켰으며,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을 1994년 9월과 1996년 5월 및 1997년 12월에 개정하였다. 이러한 제도 보완과 지원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2004년까지 400개소의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40만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줄 계획이며, 1998년도에는 4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나. 농촌관광 휴양자원 개발

과수, 화훼, 축산 등 작목입식과 휴게소, 식당, 농특산물직판장, 편의시설 등을 설치·운용함으로써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촌으로 흡수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관광농원과 휴양단지, 민박마을 등을 개발·육성할 계획이다.

구 분	합 계	'97까지	'98계획	'99이후
사업량 (개소)	1,176	601	52	523
- 휴양단지	68	10	-	58
- 관광농원	700	382	20	298
- 민박마을	408	209	32	167
지원액 (백만원)	305,473	135,538	16,894	153,041

주 : 관광농원의 경우 자부담 개발 사업량은 제외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정비과 서기관 오진택)

3. 농어업인 복지제도 확충

가. 농어촌 교육여건과 개선대책

(1) 농어촌교육환경 실상과 문제점

농어촌지역의 교육여건은 질적·양적으로 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이는 농어촌학생의 학습결손을 초래하고 도시학교 학생과의 학력격차를 심화시켜 농어업인 자녀의 도시유학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었다.

열악한 교육현실로 단기적으로는 농촌주민의 복지 수준과 영농정착 의욕을 저하시켜 청·장년층의 이농을 심화시켰으며, 장기적으로는 농촌지역의 공동화 현상과 더불어 구심점을 약화시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2) 농촌교육환경 개선방향

농촌사회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젊고 유능한 후계세대의 육성이 농정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종합적인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1994년 6월 14일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추진방안』을 확정하여 농촌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3) 농어촌교육 환경개선 추진상황

(가)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전면급식 실시

농어업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체위향상과 균형있는 영양공급을 위해 농어촌 초등학생에 대한 학교급식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1993년에 시작하여 1997년까지 농어촌소재 전체 초등학교 3,531개교를 대상으로 실시중에 있으며, 1996년기준 연료비는 학생 1인당 23원, 급식비는 1인당 총소요액(600원)의 1/3인 200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다.

(나) 농어촌학교 컴퓨터 보급

읍·면 단위 초·중·고교에 1993~95년까지 80억원을 지원하여 1,376개 학교에 2만대를 보급하였으나, 기종이 구형이고 수적으로 부족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교단선진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1997~99년까지 전국 초·중·고교의 20만 학급에 6,000억원 지원할 계획이며, 1997년도에는 6만 8천학급에 2,040억원을 지원하여 각 학급에 586PC 및 VCR, TV 등 첨단 시청각교재를 보급하였다.

<표 2-2-54> 교단선진화사업 연차별 추진계획

	계	'97	'98	'99
학 급 수	200 천학급	68	66	66
지 원 액	6,000 억원	2,040	1,980	1,980

자료 : 교육부 학교정책총괄과

(다) 농어촌 교육시설의 개선

농어촌의 교육시설은 대부분이 노후되어 도·농간의 균등한 교육환경 조성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농어촌지역 교육시설 현대화를 위해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제정(1995. 12. 29)하고 1996~2000년까지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1996년에 2,657억원 1997년에 2,500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2-55>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 투자계획

(단위 : 억원)

1996실적	연차별 투자계획					비 고
	계	'97	'98	'99	2000	
2,657	1조원	2,500	2,500	2,500	2,500	

자료 : 교육부 학교정책총괄과

(라)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농어촌지역 주민과 학생들에게 각종 문화 및 정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토록하여 농어촌에 대한 애향심과 문화적 욕구충족 및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 1995~2004년까지 총100관(군지역 60, 면지역 40)을 건립할 계획이며, 1995~97년까지 26개관을 완공하였다.

또한 도서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총 10억원의 장서구입비 지원계획을 병행 추진하여 1995~97년까지 468관에 30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2-56> 공공도서관 지원 추진실적과 계획

		지 원 실 적			'98~2004 계 획	계
		'95	'96	'97		
건립비 지원	개소	9	9	8	74	100
	지원액(천원)	90	90	80	580	840
자료구입지원	개소	154	160	154	-	-
	지원액(억원)	10	10	10	70	100
지원액 계(억원)		100	100	90	650	940

자료 : 문화관광부 도서관박물관과

(4)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경감 추진상황

(가) 농어업인의 교육비 지출현황

농어촌지역은 열악한 교육여건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높다. 농어가의 교육비 지출은 1988년도에 67만원에서 1994년에 135만원으로 2배이상 증가하였으며, 농어가 소비지출중 1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된 요인은 자녀의 도시유학으로 인한 추가비용이다.

<표 2-2-57> 농어가와 도시가계의 교육비 지출 비교

(단위 : 천원)

	농 어 가		도 시 가 구		도시가구대비 농어가교육비
	총소비지출	교육비(%)	총소비지출	교육비(%)	
1998	6,031	670(11.1)	5,612	405(7.2)	1.65배
1992	10,046	1,041(10.4)	11,303	1,014(9.0)	1.03
1994	13,334	1,350(10.1)	13,685	1,273(9.3)	1.06
1996	17,039	1,735(10.2)	16,745	1,637(9.8)	1.06

자료 :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

(나) 농어가의 교육비 부담경감시책 개요

농림부에서는 농어업인의 과중한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어촌발전종합대책실천계획」(1989. 4)에 의한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1994년에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여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용자와 농어촌지역 출신 도시유학생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비롯하여, 기타 자영농과생 급식비지원, 새마을장학기금 설치를 통한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2-58>

농어촌지역의 교육비 부담요인별 비중

	납입금	과외비	교재비	유학비	잡부금·기타
시 지역	38.4 %	54.9	3.7	2.5	0.6
군 지역	46.5 %	28.8	9.7	13.7	1.3

자료 :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

(다)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농어촌 중·고등학생에 대한 학자금지원 사업은 1990년도에 면지역에 거주하는 중학생 전원과 실업계고교 1, 2학년생 등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추진하였다.

<표 2-2-59>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정책의 변천

연도	대 상	비 고
1990	면지역 중학생, 실업계고교 1, 2학년생	전액 국고 지원
1991	면지역 중학생, 실업계 고교생	실업계 고교생 3학년 추가
1992	면지역 중 2, 3학년, 실업계 고교생	읍지역중 도서벽지 실업고생 추가 지원 1993부터 지방비 2/3부담
1994	면지역 실업계 고교생	중학생 의무교육 전면 실시(교육부 지원)
1997	읍·면지역, 시의 개발제한구역 실업계 고교생	읍지역 전체, 시의 개발제한구역 확대 지방비 70%부담

자료 :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

지원대상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경지소유규모 1ha미만의 영세농가와 이에 준하는 양축가·임가·어가의 자녀로서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한다.

1990~96년까지 실업계고교생 및 중학생 102만 9천명에 대하여 3,20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1997년에는 대상자를 읍지역과 시의 개발제한구역 농어가까지 확대하여 9만 5천명에게 507억 원을 지원하였다.

<표 2-2-60>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실적

(단위 : 천명, 백만원)

'90~'92		'93~'94		'95		'96		'97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624	148,038 (148,038)	230	85,308 (28,397)	91	42,919 (13,536)	84	43,886 (14,616)	95	47,626 (15,187)

자료 :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

이 사업은 영세한 농어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어 공교육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199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농어가의 총 소비지출액중 교육비 비중을 감소시켰다.

(라) 농어촌출신 도시유학생 기숙사 건립

정부는 도시지역에 진학(유학)하는 농어촌출신 학생을 위해 1995~2000년까지 농특세 재원 360억원을 투자하여 각 도에 1개소씩 전국 9개 시지역에 기숙사를 건립중이다. 이 사업은 농어업인의 교육비(하숙비) 부담경감은 물론 건전한 면학분위기 조성과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도모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표 2-2-61> 기숙사 건립 투자계획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투자계획(억원)	40	60	80	80	80	20
사업량(개소)	신규 2	계속 2 신규 4	계속 4	계속 4 신규 2	계속 2 신규 1	계속 1

주 : 1995년 신규지역 : 충남(대전), 경남(창원)

1996년 신규지역 : 충북(청주), 경북(경산), 전남(화순), 전북(전주)

부지 미확보 지역('99 착수예정) : 강원, 경기, 제주

자료 : 문화관광부 청소년기획과

(마)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부양의무자의 자녀로서 대학 및 전문대 등에 입학한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등록금을 무이자로 용자해 주어 농어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줄였다.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방안』의 일환으로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에 근거하여 추진중인 이 사업은 매년 2만명에게 학기당 100만원(연간 200만원)한도로 지원하여 1994~2004년까지 농특세 재원 총 2,100억원으로 21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표 2-2-62>

학자금 용자 실적

(단위 : 명, 백만원)

	94	95	96	97	비 고
지원학생	1,743	19,174	19,936	19,937	
지 원 액	1,731	19,085	19,849	19,850	

자료 : 교육부 교육진흥과

(5) 농어촌학생의 대학진학기회 확대

(가) 특별전형입학제도의 도입 배경

정부는 도·농간에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여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진학기회 확대를 위해 『농어촌학생 대학특별전형입학제도』를 『농어촌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1995년 「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1996학년도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나) 특별전형입학제도 시행 성과

1997학년도에는 전국 338개 대학중 300개 대학이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을 실시하여 15,246명이 입학하였으며, 1998학년도에는 315개 대학에 17,508명이 입학하였다.

<표 2-2-63>

'97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입학 현황

(단위 : 교, 명)

구 분	실시대학	미실시대학	모 집 정 원		합격생수
				비율(%)	
계	300	38	16,008	2.8	15,246
일 반 대 학	153	30	8,711	2.8	8,415
전 문 대 학	147	8	7,297	2.9	6,831

자료 :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

이 제도는 농어촌발전대책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농어촌학생의 사기진작과 자신감을 고취함으로써 농어촌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농어업인의 농어촌 정착 유인을 제공하고 이농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특별전형제도 시행후 농어촌지역 고교생 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표 2-2-64>

농어촌소재 고등학교 학생수 변화 추이

	1993	1994	1995	1996	1997
학생수(명)	372,920	367,348	378,603	382,473	389,736
증감률(%)	△3.18	△1.49	3.06	1.02	1.90

자료 :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

(여성정책담당관실 사무관 서극수)

나. 농어업인 후생복지 증진

(1) 농어업인 후생복지정책의 본격적 추진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1994년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방안』을 확정하고 재원조달을 위한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였다. 따라서 농어촌지역의 낙후된 의료공급기반과

연금제도 도입 등 복지현안 사항이 농어촌특별세의 재정적 지원하에 본격적인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2) 농어업인 연금제도의 도입

(가) 농어업인연금제도 도입배경

1960년대이후 급속한 산업화에 영향을 받아 우리 농어촌은 청장년층의 지속적인 이농과 평균수명의 연장 및 직장 퇴직고령자의 귀향 등으로 농촌 인구의 노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전되었다.

60세 이상의 인구는 1970년대에 총인구의 1.4%에서 1990년도에는 7.7%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대에는 10.3%, 2021년에는 18.5%로 늘어날 전망이다.

<표 2-2-65> 우리나라 노령인구 증가 추이

(단위 : 천명, %)

	'70	'80	'90	2000	2021
총 인 구(A)	31,435	37,407	43,390	46,489	50,586
60세 이상인구(B)	1,704	2,268	3,320	4,809	9,358
60세 이상인구비율(B/A)	5.4	6.1	7.7	10.3	18.5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및 장래인구추계」

한편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의 증가는 전통적 대가족 제도의 붕괴와 더불어 그에 따른 노인부양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게 되었고, 노인들은 대부분 자신의 노후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보다 청장년층의 이농현상이 두드러지는 농어촌지역에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 안정적 노후대책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나) 농어업인 연금제도 도입경과

정부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기간내에 농어업인의 노후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을 농어촌지역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마련하여 1994년 3월 14일~5월 4일까지 충남 홍성군내 3개 읍·면에 대한 1차 모의적용사업을 실시한 후,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994년 6월 농어업인연금제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1994 정기국회에 국민연금법개정안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1994년 11월 21일~12월 27일까지 강원 명주, 전남 담양, 경북 예천 지역에 2차 모의적용 사업을 실시하여 적용대상 관리, 보험료 부과체계, 농어업인 관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준비단계, 일제신고단계, 전산화일구축 등 단계별로 농어업인연금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1997년도말 현재 총 가입자는 206만 1천명이며, 이중 농어업인 가입자는 97만 1천명으로 나타났다.

<표 2-2-66> '97 농어업인연금 가입자 현황

(단위 : 천명)

가입대상	가 입 자				미가입자
	계	농어업인	비농어업인	납부예외	
2,186	2,061	971	621	469	125

※ 미가입자 대부분은 비농업인이며 납부예외자는 학생·군인 등 무소득 가입대상자임.
자료 : 보건복지부 연금제도과

(다) 연금보험료 등 농어업인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확대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매월 보험료 2,200원(최저 등급보험료의 1/3)과 관리운영비 전액을 농어촌특별세 재원으로 2004년까지 지원하며, 보험료의 납부편의를 위해 분기납·선납·납부예외 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또한 연금제도는 18세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인을 당연 가입토록 하고 있으나 노령인구 비율이 월등히 높은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1995년 시행당시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고령농어업인에게 '9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가입기회를 부여하는 특례노령연금제도도 도입하였다.

<표 2-2-67>

농어업인연금 지원현황 (농특세)

(단위 : 억원)

총소요액	'94	'95	'96	'97	'98~2004
8,000	10	455	598	696	6,241

자료 :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

(3)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가) 농어촌의료서비스 실태와 문제점

우리나라의 의료시설과 의료인력은 대부분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의 도시집중율은 더욱 심한 편이다.

이처럼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의료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는 1994년부터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2004년까지 4,785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우선 농어촌 군단위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읍·면 단위의 보건지소 및 도서벽지 지역의 보건진료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보강을 위한 진료시설·장비 등의 개선과 농어촌지역 민간의료기관의 시설개선 지원(융자) 등 종합적 의료공급기반의 정비·확충 사업에 착수하였다.

(나) 농어촌 의료공급기반 확충사업 추진상황

농어촌 공공보건의료기관 진료기능 확충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에 『농어촌의료서비스기술지원단』을 설치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간 경쟁방식을 도입하여 각 지역 보건소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확충계획과 사업추진 방법을 제시토록 하고 이를 심사하여 지원규모를 차등화하는 등 효율적 추진방안을 모색하였다.

1994~97년까지 농어촌 공공보건의료기관에 1,428억원을 투자하여 의료기관(병원)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농어촌주민에게 친근감과 친화도를 높이도록 외관을 정비하는 한편, 진료업무의 질적향상, 원거리 주민에 대한 순회진료체계 마련 등 내실있는 진료여건을 구비하여 농어업인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민간의료기관 육성에도 302개 의료기관에 1,140억원을 지원하였다.

(4) 농어촌 보건소의 한방진료와 공중보건한의사 제도 도입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질병은 장기간의 무리한 노동에 따른 통증과 관절 부위의 질병이 많아 물리치료의 요구가 높고 한방진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이러한 농어촌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부는 1997년부터 농어촌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고 1998년부터 공중보건한의사를 배치하는 「농어촌보건소 한방진료서비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표 2-2-68> 농어촌보건소의 한방진료실설치 및 공중보건한의사 배치계획

		계	1997	1998	1999	2000	2001
한방진료실	사업량	138 개소	48	40	50	-	-
	사업비	1,288백만원	460	368	460	-	-
공중보건한의사 배치		180 명	-	10	50	60	60

자료 : 보건복지부 한방제도담당관실

(5) 의료보험제도

(가) 의료보험제도의 현황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1977년 50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1988년에는 농어촌지역에 확대되었고, 1989년에는 도시지역까지 확대되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체계는 보험료 부담과 급여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시·군·구 등 행정구역 단위로 보험자(조합, 공단)를 구성하여 각 보험자별 독립채산방식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의료보험조합수는 모두 373개(직장 145, 공·교 1, 농어촌 93, 도시 134)이다.

(나) 농어업인 의료보험료 부담경감방안 추진상황

<국고차등지원제도>

정부는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조합의 재정안정을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구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국고지원방식을 도시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고,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농어촌지역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고지원액의 일정액('96년 15.8%에서 '97년에는 21.6%)을 차등지원하는 『국고차등지원제도』를 도입하여 1997년에 농어촌지역 조합에 925억원을0 추가 지원 하였다.

<재정공동사업추진>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60세 이상 노인의료비와 100만원 이상 고액진료비에 대하여 모든 조합이 공동부담하는 『재정공동사업』의 실시로 1997년도 농어촌지역조합에 988억원의 지원효과가 있었다.

(다) 의료보험급여 확대

농어업인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40세 이상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진단을 1995년부터 격년제로 실시하고, 의료보험 급여기간을 1997년 270일에서 1998년에는 300일로 연장하였으며, 2000년부터는 연중 급여가 가능하게 된다.

(여성정책담당관실 사무관 서극수)

제 3 편 1998년도 농정 시책

여백

제 1 장 1998년도 농업정책 방향

제 1 절 1998년도 농정 목표

1998년도 농정의 여건은 WTO 출범 이후의 개방화와, 특히 지난해말 발생한 IMF 외환위기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1995년 WTO체제 출범 이후 우리 농업은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본격적인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값싼 외국농산물과 힘겹게 경쟁해 오고 있다. 또한, IMF사태로 인해 농축산자재의 가격이 급등하고 시중금리가 크게 인상되어 생산비가 높아진 반면, 농축산물의 소비는 위축되어 농가들이 이 중·삼중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농가의 부채상환능력 저하로 이어져 농가부채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한편, 1998년에 농업을 중시하는 “국민의 정부”가 새로 출범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농업인들의 기대수준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UR 타결 이후 지난해까지 농정추진상황을 돌이켜 보면, 농업부문에 적지않은 투자가 있었고,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는 등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으나, 많은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특히 첨단시설과 규모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나, 해외원자재와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IMF 위기앞에 커다란 취약성을 드러내었다. 규모화에 상응한 농업인들의 기술·경영능력 향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일부 부적격한 사업대상자의 선정, 농가의 경험미숙,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사업이 부실화되고 농촌투자의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1998년에도 WTO/IMF로 인한 어려운 여건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내외 농산물시장에서 가격 및 품질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또한 농업 생산 측면에서 비용상승 요인과 농산물 수요측면에서 소비위축 현상도 우리나라

가 IMF 외환위기에서 벗어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국내외적으로 저투입의 지속가능한 환경농업(LISA)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으며, 무역과 환경을 연계시키려는 국제적인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엘니뇨 등 기상이변과 중국의 식량수입국으로의 전환, 그리고 세계적인 물부족 현상의 심화 등 세계적인 식량수급 불안요인은 점증하고 있어 주곡자급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국민의 정부』가 금년 2.25일부터 출범하고 농업을 중시하겠다는 새정부의 통치철학이 대통령 취임사 등을 통해 발표되면서 새정부의 농정에 대한 농업인들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환율상승에 따라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호전되어 수출에 적합한 규격농산물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해외시장개척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경우, 농산물 수출확대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IMF사태이후 증가하고 있는 귀농인구는 농촌임금의 안정과 농촌사회의 활력화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적인 농정여건의 변화와 그간의 농정추진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바탕으로 IMF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한편,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우리농업이 적절히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하에 농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국민에게 값싸고 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이 갖고 있는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극대화해 나갈 것이다.

둘째, 농업인의 소득을 다른 산업의 종사자들과 대등한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셋째, 농업인이 보람과 의욕을 가지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이러한 농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가족농을 중심으로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발전시켜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품질·안전성 등 유통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경영의 다각화 등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로 이를 보완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가족농의 기술·경영혁신과 정보화를 본격 추진하여 사업경

영을 내실화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농업의 환경보전, 지역사회 유지 등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직접지불제 등 WTO 체제에 맞는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농업인의 부담경감과 복지증진 대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인·시민·소비자단체 대표등이 참여하는 『農·消·政』의 긴밀한 협력하에 『열린농정』을 적극 추진하여,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이 주인이 되는,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입안·기획단계는 물론 집행단계까지 농업인·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참여농정』을 적극 실천하고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현장농정』을 강화할 것이다. 특히 장관이 직접 농촌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지도와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이동장관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현장에 기초한 정책이 수립·집행되도록 정책운용체계도 개선해 나갈 것이다. 농정추진 기관·단체의 조직과 기능을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중심으로 과감히 개편하는 등 『봉사농정』을 적극 실천하여 농업인에 대한 봉사기능을 극대화할 것이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서기관 안 호 근
사무관 김 덕 호)

제 2 절 1998년도 농정방향

1. 주곡자급으로 민생안정과 식량안보 확보

불안한 세계 식량사정과 통일에 대비하여, 쌀의 자급기반을 확고히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량농지의 전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산업 및 주택용지 등 비농업용 토지는 가급적 산지와 구릉지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겠다. 또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정밀 조사하여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우량농지 보전시책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얼굴있는 쌀』 유통체제를 마련하고 민간의 쌀유

통 기능을 활성화하여, 우리 쌀의 품질과 안전성을 차별화해 나갈 것이다.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가족농을 계열화하여 계약재배에 의한 품종통일·공동작업·브랜드 판매로 비용을 절감하고 품질향상을 도모할 것이다. 또한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건조·저장시설과 운영자금의 지원을 확대하여 수확기의 벼 매입기능을 확충함으로써 쌀값 하락을 방지하는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양곡관리제도를 WTO체제에 부합하면서도 농가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체제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WTO체제하에서는 매년 수매보조금을 일정수준(750억원) 감축해야 하므로 농가소득지지 및 비축물량 확보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확대와 용자수매제 도입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

2.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동시보호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더욱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정기 직거래장터 확대 개설, 대도시 금융점포 내에서 농·수·축·임산물 공동판매 확대 등 주요 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농산물의 직거래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제정하여 직거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농산물 물류센타를 2001년까지 12개소를 개설하여 유통경로를 다양화하며, 직거래장터와 물류센타를 효율적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 유통기관의 역할분담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11% 수준인 직거래 물량의 비중을 2001년에 25% 수준으로 향상시킬 것이다.

이와 함께 산지유통 혁신과 물류 효율화로 유통비용을 대폭 절감해 나갈 것이다. 산지 농협을 경제권 중심으로 통폐합하여 농산물의 수집·판매기능을 강화하고, 농산물 포장과 유통시설을 규격에 맞게 정비하여 산지에서부터 파렛트 적재 출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직거래 장터·소비자단체·대형 요식업체 등 수요자와 산지농협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전산망·수송망 등의 시스템도 계속 구축해 나갈 것이다.

농산물도매시장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을 마련함으

로써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유통비용을 절감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자경매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하고 출하예약제를 실시해 나가며, 현행 5~7%로 되어 있는 청과부류 상장수수료를 98년중에 1%P 이상 인하할 것이다. 또한 신규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도매상 제도 도입, 관리·운영을 일원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3.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고품질·안전농산물 공급

지난해 제정된 『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시행령을 제정하여 환경농업의 정착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환경농산물 표시제를 철저히 시행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환경농업단체에 품질인증권을 부여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농산물의 유통활성화를 위해 환경농산물 판매장의 확충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또한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환경보전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의 실시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민·관의 합동으로 병해충종합관리제도(IPM)와 작물양분종합관리제도(INM)를 조기에 구축하여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대폭 절감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1999년부터 친환경농업(IPNM) 시범마을을 지정하고 농촌진흥청과 농·축협로 하여금 전담지도팀을 구성해 운영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물과 흙을 살리고 사람의 생명도 살리는 환경농업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토양을 건강하게 하고 물을 맡게 하는 동시에 안전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흙살리기 운동』과 『푸른들가꾸기 운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특히 『푸른들가꾸기 운동』은 겨울철에는 노는 땅에 사료작물과 녹비작물을 재배하고 여름철에는 퇴비를 생산함으로써 조사료의 국내생산을 확대하고 토양 유기물의 함량을 높여 지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저투입 친환경농업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되도록 하여 그동안 겨울철에 방치되었던 땅을 활용하게 함으로써라 토양침식 방지, 대기정화 뿐만 아니라 겨울철의 농촌의 경과도 좋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축산분뇨의 자원화와 유기질비료화를 장려하며, 농업용저수지의 오염실태를 조사하여 수질개선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자원절약형 농업과 실용성이 높은 농업 과학기술도 진흥해 나갈 계획이다. 조사료의 생산확대를 위해 우수 농가 및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남은 음식물의 사료화를 적극 추진하는 등 국내 부존자원을 활용한 저투입 지속가능한 자원절약형 농업구조로 전환시켜 나갈 것이다. 토착기술의 현대화와 관행 환경농업기술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실시하여 우수한 환경농업의 기술과 자재를 개발·보급하고, 우수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농업과학기술상』을 제정하여 정기적으로 시상할 것이다.

4. 수출농업 본격 전개로 우리 농업의 활로 개척

2004년 수출목표 50억달러를 조기에 달성한다는 목표로 국내 소비안정에 기반을 둔 수출규격품 생산지도를 강화할 것이다. 수출전문단지 위주로 생산·유통시설지원과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수출업체와 계약생산체제를 확립해 나갈 것이며, 20개 수출전략품목에 대한 전담연구팀을 운영하고 현장의 기술애로를 타개하는데 중점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또한 키위, 호접란, 파프리카 등 수출가능품목을 추가로 발굴하여 생산·유통기반을 확충하는 등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농림부장관 주재의 『농산물 무역확대 대책회의』를 정례화하고, 『농산물수출탑』 시상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며, 수출애로상담실을 확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농산물의 수출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수출전담기관으로 개편하여 정보·자금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주문정보서비스제도를 실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원하는 해외시장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시장개척 활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강화해 나가기 위해 수출농산물 구매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보험료 인하 등 농산물 수출보험제도를 개선해 나가며, 현지시장에 맞는 다양한 해외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5. 농업구조조정의 촉진으로 경쟁력 제고

본격적인 개방시대를 맞아 외국농업과 경쟁에서 이기는 길은 생산성 높은 농업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가족농의 특성과 유형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 비용절감과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규모화된 가족농은 기술·경영·정보의 혁신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일반 가족농은 가공·유통 참여와 경영의 다각화 등으로 전체 판매액을 증대하여, 소득이 안정되도록 할 것이다.

농업인력 육성시책을 체계화하고 법인경영체의 내실화 방안을 강구·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농업인의 기술·경영혁신을 체계적으로 유도해 나갈 것이다. 농업인 스스로가 기술·경영 수준을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경영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유형별 경영모델과 우수사례 제시, 품목별 표준진단표의 개발·보급 등 벤치마킹 기법에 의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지도소·특성화대학·생산자단체 등의 경영컨설팅 기능을 확충하는 등 현장밀착형 컨설팅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농업인의 기술 수요에 부응한 실용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유전공학 등 첨단기술의 농업분야 응용과 농업인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기술애로 해소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기술개발을 위하여 분야별·품목별 핵심기술을 기획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집중 개발해 나가고, 기초기술 등 중장기 기술개발과제는 종합적인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업 정보화 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농업생산·유통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농립수산 정보망을 확충하는 등 정보제공 체계를 보강하고, 농업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경영지원 프로그램(S/W)도 개발 보급해 나갈 것이다. 농업인의 정보이용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6. 농정개혁의 추진과 농정추진체계 개편

그동안 제기된 농정의 비효율과 문제점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새 농정의 틀을 정립하고 중장기 농정개혁방안 마련할 것이다. 농업정책자금

의 지원방식을 농업인의 자율과 책임경영을 극대화하면서 시장경쟁의 원리에도 부합하도록 개선하여, 농업종합자금제도 및 기금통폐합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농정추진기관·단체의 유사·중복기능은 통합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은 민영화하는 등 농정추진 조직은 농업인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혁신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1998년 3월부터 구성·운영중에 있는 「농정개혁위원회」,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 「협동조합개혁위원회」를 통하여 농업인·시민·소비자·학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100대 국정과제과 IMF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한 제반시책 등을 구체화한 국민의 정부 『농촌발전대책』과 투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서기관 안호근)

제 3 절 1998년도 농림부문 예산 확보

1. 1998년 농림예산과 추경 편성방향

가. 1998년 농림예산 편성방향

1998년 농림예산 편성방향은 농림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투자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었는데 특히 다음 사업들에 역점을 두고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첫째, 42조원 농어촌구조개선 투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15조원 농어촌특별세 투자사업을 안정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둘째, 주곡인 쌀 자급기반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농업인의 참여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농촌발전계획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그 동안의 농림사업의 점검과 평가결과를 반영해 농림사업의 투융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넷째, 신규 사업은 사업 타당성이 매우 높고 농업인들의 경영합리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것을 우선 반영하였다.

나. 1998년 추경예산 편성방향

IMF위기로 인한 국가 전체 재정의 어려움으로 삭감 추경을 편성하고 1998년 농림예산도 불가피하게 당초예산보다 축소조정하게 되었다. 농림 부문 추경예산은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첫째, IMF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해 농가의 경영안정지원사업·농산물유통개선사업·쌀 생산기반확충사업 등의 감액은 최소화하고, 일부 필요한 사업은 증액하였다. 농업·축산경영자금은 농자재·사료 등의 가격상승에 따라 농업인의 운전자금 수요가 늘어난 점을 감안하여 지원자금 규모를 확대하고, 정책자금의 금리인상을 최소화하여 농업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차보전예산은 증액하였다. 농산물도매시장과 공판장 건설 등의 사업비는 농산물유통구조의 조기 개선을 위해 일부 증액하고, 미곡종합처리장 및 토양개량제 공급 등 쌀 생산기반의 확충사업과 농산물 수출지원사업 및 가축 방역 예산 등 중점 추진하여야 할 사업은 그 감액 폭을 최소화하였다.

둘째, 중장기 계속사업인 농업생산기반 확충은 사업별로 적절한 규모로 조정해 사업추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국가와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와 배수개선사업 예산은 재해의 사전 예방차원에서 당초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중규모용수와 수리시설개보수 등 농업용수개발사업은 당초예산이 크게 증액된 점을 감안하여 증액기조가 유지되도록 적정수준 감액조정하였고, 대단위 농업개발사업도 지구별 여건에 맞게 감액하였다.

셋째, 1997년에 준비 미흡으로 추진 실적이 부진한 사업과 투자규모가 큰 신규시설 설치사업은 농업경영여건이 매우 악화된 점을 고려해 큰 폭으로 감액조정하였다. 일반경지정리사업은 1997년 가을착수면적을 감안해 사업량을 축소하고, 농산물 물류센터사업 등 이월이 과다한 사업은 정상적 집행이 가능한 필요소요 예산만 반영하였다. 유리온실과 축사 등 신규시설 설치사업은 농업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반영해 대폭 축소하였다. 농기계구입자금 역시 신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대폭 축소하고, 사후관리 강화, 공동이용 활성화를 통해 이용율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2. 1998년 당초 농림예산과 추경 규모

1998년 당초 농림예산은 1997년 농림예산 7조 9,798억원보다 6.9% 증가한 8조 5,276억원이 반영되었으나, 국가 예산이 총 재정규모 기준으로 8조 4천억원이 삭감되고 일반·재특·농특예산 기준으로 1조 4,500억원 축소조정됨에 따라, 농림예산도 7,952억원이 축소된 7조 7,324억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다. 이는 1997년 농림예산 7조 9,798억원보다 3.1%, 1998년 당초예산보다 9.3% 축소 조정된 규모이다.

1998년 당초 농림예산과 추경예산의 기능별·재원별 규모와 사업비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3-1-1> 1998년 농림예산 기능별·재원별 규모(2청 예산 포함)

(단위 : 억원)

구분		'97예산 (A)	'98예산	'98추경 (B)	증감 (B-A)	%
기 능 별	○ 순사업비	58,126	62,711	52,797	△5,329	△9.2
	○ 부담경감등	10,278	7,288	7,767	△2,511	△24.4
	○ 채무상환	7,887	6,368	7,931	44	0.6
	○ 양곡지원	945	6,336	6,472	5,527	584.9
	- 수매지원	-	1,023	1,159	1,159	-
	- 양곡증권기금	945	5,313	5,313	4,368	462.2
	○ 기본적경비	2,562	2,573	2,357	△205	△8.0
계 (농림부)		79,798 (73,107)	85,276 (78,160)	77,324 (71,215)	△2,474 (△1,892)	△3.1 (△2.6)
재 원 별	○ 일반회계	17,570	21,190	20,965	3,395	19.3
	○ 농특회계	55,697	58,433	52,034	△3,663	△6.6
	○ 재특회계	6,531	5,653	4,325	△2,206	△33.8
양곡관리특별회계		17,713	12,701	12,837	△4,876	△27.5
농특세관리특별회계		-	278	269	269	-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1,743	1,875	1,704	△39	△2.2

<표 3-1-2>

1998년 농림예산 주요 사업별 사업비 규모

(단위 : 억원)

구분	97예산 (A)	98예산	98추경 (B)	증 감 (B-A)	%
I. 투융자사업	52,659	56,818	47,761	△4,898	△9.3
1. 생산기반조성	24,775	27,123	22,394	△2,381	△9.6
2. 농업기계화	4,463	4,183	3,638	△825	△18.5
3. 생산 및 유통개선	11,593	12,262	10,628	△965	△8.3
4. 기술개발 및 정보화	816	786	666	△150	△18.4
5. 인력육성	4,725	4,909	4,455	△270	△5.7
6. 소득원개발 및 농가자금지원	4,540	5,851	4,502	△38	△0.8
7. 생활환경개선	1,551	1,551	1,302	△249	△16.1
8. 기타사업	196	153	176	△20	△10.2
II. 부담경감 및 소득보전	7,437	5,621	6,387	△1,050	△14.1
III. 채무상환	7,848	6,350	7,905	57	0.7
IV. 적자보전	2,841	1,667	1,380	△1,461	△51.4
V. 양곡지원	945	6,336	6,472	5,527	584.9
사업비계	71,730	76,792	69,905	△1,825	△2.5
VI. 기본적경비	1,377	1,368	1,310	△67	△4.9
소관합계	73,107	78,160	71,215	△1,892	△2.6

3. 1998년 농림예산 주요 제도개선내용

1998년도 농림예산에서는 그 동안의 농림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중심으로 보완하는 한편, 농촌투자의 효율성을 계속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예산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인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자구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지원은 축소하고 융지지원은 늘렸다.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자금지원사업은 1993~97년에 실시한 반값공급 보조를 폐지하고 융자로 전환하여 지원하

고, 이자율은 6.5%에서 4.5%로 인하하였다. 과실·채소·특작생산유통지원
은 국고·지방비·자부담을 각각 20%와 용자 40%지원에서 국고·지방비
각각 10%, 자부담 20%, 용자 60% 지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농산물 가공산
업지원도 국고 40%·용자 40%·자부담 20% 지원에서 국고 30%·용자
50%·자부담 20%로 조정하였다. 농산물포장센터지원은 국고 40%, 지방
비·용자·자부담을 각각 20% 지원에서 국고·용자 30%와 지방비·자부
담을 각각 20%로 조정하였다.

둘째, 농림사업의 사업지원단가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였다. 농업인후
계자사업은 1인당 2,500만원 지원에서 3,000만원으로 20% 인상하고, 경지
정리사업은 ha당 지원액을 2,360만원에서 2,520만원으로 약 7% 인상하였
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매 건당 485원에서 513원으로 6% 인상하고, 농
지규모화 직접지불사업은 ha당 258만원에서 268만원으로 4% 인상하였다.

셋째, 비슷한 농림사업은 통폐합하여 일선 기관 및 농촌현장 등에서 효
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특산단지조성사업은 농산
물 가공산업의 육성사업에,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과 화훼생산유통지원사
업은 시설원예 생산유통지원사업에, 인삼생산유통지원은 특작생산유통지원
사업에 통합시켰다.

넷째,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건전화를 위해 일반회계의 출연금 800억원을
반영하였다. 1994년 이후 중단된 일반회계 출연금을 반영하여 농지관리기금
의 재원운용의 건전화를 기하도록 하였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서기관 조봉환)

제 2 장 1998년도 주요 농정시책

제 1 절 주곡의 안정적 자급과 양곡관리제도 개선

1. 우량농지보전 시책의 지속추진

우리국민의 주곡인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량농지의 보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산지가 전체국토면적의 65%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인구증가 및 경제성장에 따라 비농업 목적의 토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전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정된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면서 농업생산의 기반인 농지를 적절히 보전·유지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량농지의 보전시책은 근본적으로 일정한 규모의 농지를 양적·질적으로 확보하여 농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존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농업환경을 보호하여 농지가 농업생산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는 물론 진흥지역밖의 농지라 하더라도 우량화·집단화되어 있어 보전가치가 큰 농지에 대하여는 농업목적으로 활용되도록 그 보전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도시용토지 수요에 대하여는 농지보다는 산지와 구릉지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여 농지대 산지의 전용비율을 현재의 6:4수준에서 5:5수준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산지활용에 따른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산지활용시 자연친화적 개발이 되도록 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산지개발에 따른 비용절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그리고 현재 농지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시켜 주는 산지편입비용을 70%에서 50%로 하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기존농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반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인구의 고령화·과소화에 따라 휴경농지면적이 최근 5년간('93~'97) 연평균 51천ha에 달하는 등 농지감소가 타용도 전용등 외부적 요인보다는 농업내부적 요인으로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리경작지정제도를 적극 시행하여 휴경지 생산화를 추진하는 한편 '96년 이후 농업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이용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의무를 부과할 것이다.

'98년의 경우 전국적으로 2,269명(638ha)에게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한 바 있으며, 특히 처분의무를 부과 받은 후 1년 이내에 농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에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20/100을 매년 이행 강제금으로 징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조치를 하여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농지법시행령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우량농지 보전시책의 제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준농림지역의 농지보다 보전가치가 크고 농업용수보호에 영향이 큰 농업보호 구역에서의 음식점·숙박시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건축허가·신고의 대상이되는 콘크리트 구조물형태의 버섯재배사 설치 또한 농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도록 하고 농지조성비 부과 단가도 농지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현실화해 나갈 생각이다.

(농지관리과 사무관 강상구)

2. 생산기반 확충

가. 일반 경지정리사업

일반 경지정리사업은 불규칙한 농지와, 이에 부설된 용·배수로, 농로를 기계화 영농에 맞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편리한 영농을 도모한다. 또한 환지를 통하여 분산되어 있는 농지를 집단화함으로써 마을 주민들간 공동영농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전업농 등 전문농업경영체가 대규모로 영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등 농촌의 변화에 대응하는 농업부문의 기초 사업이다.

그동안 경지정리사업은 사업비가 저렴한 평야지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추진하여 어느 정도 진척되었다. 앞으로 경지정리 대상은 급경사 지역, 산간 지역 등 주로 산간농촌지역인데 사업여건이 열악하며 소요사업비가 정부에서 책정·지원하고 있는 예산단가보다 높아 지원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1997년에 경지정리 대상지를 보완 조사하여 농업진흥지역내 경지정리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농업진흥지역밖 등 대상지를 정밀재조사하여 대상지를 조정하였다. 이 사업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써 쌀 생산비를 줄이고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1997년도에 농업진흥지역을 대상으로 국고 5,023억원과 지방비 2,474억원 등 7,497억원을 투자하여 1996년 가을에 착수한 27,000ha를 마무리하고, 새로이 22,600ha에 착수하였다.

<표 3-2-1> 일반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

(단위 : 천ha)

구 분	총논면적	총계획	'97까지	'98이후
사 업 량	1,163	800(915)	658(755)	142(160)
- 진 흥 지 역	745	665(760)	572(655)	93(105)
- 진 흥 지 역 밖	418	135(155)	86(100)	49(55)

주 : 면적은 마무리 논면적 기준, ()는 구역면적 기준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1970년 이전에 경지정리된 지역으로 평야부의 우량농지이나 농로가 없거나 협소하고, 용수로와 배수로가 겸용 또는 토공으로 되어 있으며, 필지규모가 600~1,200평으로 작아 대형 농기계 작업과 물관리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필지 규모를 3천평 이상으로 대형화하고 용·배수로를 분리 정비 및 구조물로 현대화하며, 농로를 대형기계통행과 농산물의 운반에 편리한 규모로 확장·정비하는 사업으로써 1994년부터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개발목표는 200천ha인데, 1997년까지 41,000ha를 마무리하였고, 1998년에는 지난 가을에 착수한 14,000ha를 영농기 이전에 완료계획으로 추진하는 등 쌀생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표 3-2-2> 연차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

(단위 : 천ha)

구 분	목 표	'97까지	'98계획	'99이후
사 업 량	200	41	14	145

주 : 봄마무리 기준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다. 밭기반 정비사업

전체 밭면적 76만ha중 집단화된 우량농지와 품목별 주산단지(과수, 화훼, 채소, 특용작물단지 등)를 중심으로 생산자 단체가 잘 조직되어 있고 농업인의 사업희망도가 높은 지역, 그리고 지형, 경사, 토양, 토심 등 개발여건이 양호한 밭 11만ha를 대상으로 2조 5,794억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1994~97년에 4,305억원(국고 3,269억원, 지방비 1,036억원)을 투자하여 채소, 화훼, 과수, 특용작물단지 21,600ha에 진입도로, 경작로, 용수원 개발, 용·배수로 등을 설치하는 등 밭작물의 생산기반을 정비하였다. 1998년에는 1,987억원(국고 1,560억원, 지방비 387억원)을 투자하여 8,000ha를 정비

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받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확대하고 받기반 정비사업 추진업무 개선을 통한 내실있는 개발로, 밭농사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표 3-2-3> 연차별 받기반 정비사업 추진계획

(단위: 천ha, 억원)

구분	목표	'97까지	'98계획	'99이후
사업량	110	21.6	8	80.4
사업비	25,794	4,305	1,987	19,502

자료: 농림부 농촌개발국

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영농작업은 농기계 확대 보급으로 첨단화·대형화 되어가는 반면, 영농작업의 근간인 경작로는 비포장 상태이기 때문에 쌀경쟁력 제고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따라 2004년까지 농협진흥지역내의 논 74만ha와 이미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내의 논 61만ha 등 80만ha 안에 있는 내의 주요농로 22,000km를 확·포장할 계획이다.

1995~97년에 3,500km를 추진한 결과, 영농시간 단축, 농산물 운반 용이, 생활환경 개선, 영농작업 기계화 촉진 등 사업효과가 높아 농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1998년도에는 2,130억원을 투자하여 2,100km를 확·포장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사업량 사업비를 증액 지원하여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농업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표 3-2-4>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계획

(단위 : 천km, 억원)

구 분	총 계 획	'97까지	'98	'99이후
사 업 량	22	3.5	2.1	16.4
사 업 비	28,600	3,477	2,130	22,993

자료: 농림부 농촌개발국

마. 농업용수개발사업 등 기타

농업용수개발사업은 1960년대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영농기반조성사업으로 최근 지속적인 풍년농사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수리답률은 7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촌용수개발 10개년계획(1995~2004)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수리답률 88%를 이룩하여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용수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농업용수개발사업은 물리면적 규모에 따라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로 구분하여 개발하고 있다. 물리면적 3,000ha 이상의 대규모 농업용수개발은 경남 하사, 경북 성주, 전북 동화 등 3개 지구 11,746ha에 추진중이다. 물리면적 50~3,000ha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중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은 113개 지구 36,226ha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그 중 22개 지구 4,671ha는 1998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물리면적 50ha 미만인 소규모 지표수개발사업은 23개 지구 774ha를 대상으로 1998년에 완료할 계획이다.

배수개선사업은 농경지 침수방지로 안정영농을 도모하고, 농지이용률을 높이는 한편, 영농기계화를 촉진하여 노동력 절감, 단위 생산량 증가로 소득증대 등에서 효과가 크다. 앞으로 2010년까지 21만ha에 대한 방제시설을 완비할 계획이며, 수렁은 개량으로 영농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지하배수개선사업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은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수자원 확보는 물론 기계화 영농기반구축, 상습침수 해소, 우량농지 창출 등으로 영농환경개선과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1998년에는 시행중에 있는 새만금지구 등 7개 지구에 국고 1,675억원과 농지관리기금 1,660억원 등 총 3,335억원을 투자하여 총공정을 36%에서 44%까지 높일 계획이다.

농조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및 용수로 등 수리시설 12,708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저수지를 비롯하여 농조가 관리하고 있는 10,573개소의 수리시설 중 1961년도 이전에 설치되어 35년 이상 경과한 노후시설이 34%인 3,567개소이고, 용수로 3만km중 65%인 2만km가 토공으로 되어 있어, 용수로의 콘크리트화 등 시설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국가관리방조제 91개소, 지방관리방조제 1,401개소 등 전국 1,492개소의 방조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1961년도 이전에 설치된 노후시설이 68%인 1,017개소에 달할 뿐 아니라, 방조제 외측보호 사석의 유실, 배수갑문 콘크리트 구체 및 철재 문짝의 부식 등이 심하여 해일 발생시 시설붕괴 및 해수유입에 의한 농작물의 염해피해 등 재해예방을 위한 개보수 사업의 확대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1998년에는 2,859억원을 투입하여 281개 시설에 대한 개보수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농촌정비과 사무관 남궁박)

3. 주곡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쌀식량안보 강화

최근의 엘니뇨현상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많은 국가의 곡물생산이 감소되어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국의 월드워치연구소와 일본의 농림성에서도 인구증가, 농업용수 부족, 환경악화 등으로 생산량의 증가 추세가 둔화되어 중·장기적으로 세계곡물 수급사정은 불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식량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최대한의 국내생산능력(Capacity)을 확보하고 부족량에 대해서는 국제시장에서 안정적인 확보방안을 모색하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양곡의 총수요량 2,000만톤중 1,400만톤을 수입에 의존하고 나머지 600만톤만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되는 양곡 600만톤중 88%인 530만톤은 쌀로서 우리나라의 곡물자급은 쌀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주곡인 쌀의 경우, 지난 2년간의 연속 풍작으로 금년도 쌀자급도는 108%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998년 양곡년도말의 쌀재고는 107만톤(745만석)수준으로 예상되어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권장수준(62일분)을 약 28만톤 초과하여 안정된 재고를 확보하고 있으나 과거 경험을 비추어볼 때 한해만 흉작이 들더라도 수급불안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통일 시대에 대비해서라도 쌀의 자급은 매우 중요하다.

<표 3-2-5>

쌀수급 현황

(단위 : 천톤)

양 곡 년 도	생 산	수 요	재 고
1995	5,060	5,557	659
1996	4,695	5,225	244
1997	5,323	5,070	497
1998(P)	5,450	5,041	1,073

이를 위해 정부는 주곡의 자급의지를 확고히 하여 농업인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쌀생산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여 영농의욕을 고취해 나가는 한편, 우량농지는 최대한 보존하고 산업·주택용 토지는 산지와 구릉지 활용을 유도하고, 5~10년 단위의 산업용지 공급계획을 조정하는 등 논 면적을 2004년까지 110만ha를 확보하고 벼 재배면적은 92만ha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주곡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경지정리등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정리하여 2004년까지 논면적의 73%인 80만ha에 대해 경지정리를 완료하고, 농업용수개발은 논 면적의 88% 97만ha를 수리답화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단위면적당 500kg이상의 고품질 다수확품종개발·보급을 추진하

고 사료용 곡물수입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휴경지·한계농지 등을 활용하여 사료작물의 재배확대와 국내 부존자원 이용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식량정책과 서기관 김현수)

4. 양곡관리제도의 개선

현행의 정부수매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매년 750억원씩 감축되는 보조금의 범위내에서 수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수매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에도 40만석 수준의 수매량이 감소되어야 하며 수매가격을 인상할 경우에는 1% 인상시마다 10만석 수준을 추가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이로인해 풍작시 수매물량을 확대하거나 작황부진시의 가격인상이나 정부의 안정적인 비축미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현행 수매규격은 외관상 단순규격에 따라 전국적으로 단일가격으로 수매되고 있어 소비자기호가 반영되지 못하는등 양질미 생산 유인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WTO체제하에서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수매제도개선과 함께 직접지불제 확대, 소비자기호에 맞는 「얼굴있는 쌀」 유통체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쌀생산농가의 재배의욕 고취를 위해 적정수준의 쌀값계절진폭 유지를 통해 생산된 쌀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식량정책과 서기관 김현수)

제 2 절 농산물유통구조의 획기적 개혁

1. 농산물 유통개혁 추진배경

그동안 수차례 농산물 유통개선대책을 추진한 결과, 산지에는 포장센터나 집하장, 소비지에는 도매시장·물류센터 등의 유통시설이 확충되는 등 성

과가 있었다. 그러나 생산자와 소비자가 피부로 느낄만한 유통비용절감 등의 성과가 미흡하여, 농산물 유통정책에 대한 불만과 개선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유통개방시장과 농산물수입이 자유화되고, 대형유통업체가 급속히 확산되어 수입과 직거래를 통해 농산물 구입이 늘고 있다. 산지로부터 소비자까지 원하는 농산물을 원활히 공급하지 못할 경우, 우리 농산물의 판로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IMF사태의 영향으로 직거래를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1998년에는 직거래 등을 활성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그동안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로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에 대해서도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원점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998년 3월 19일 농업인, 소비자, 유통인 및 관계전문가등으로 구성된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유통시설의 효율성 증진

가.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농수산물의 대량·신속한 유통체계구축을 위해 건설하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98년에 익산, 안동 등 2개 지역이 추가로 개장되며, 강릉, 포항, 고양, 대전제2, 순천, 구미, 원주, 광주제2, 마산 등 9개 지역이 신규로 착공될 계획이다. 이로써 계획목표 34개 전지역이 완공되었거나 공사중에 있게 된다.

전국 17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순조로운 공사진행을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IMF체제에서 필요한 공사비 확보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나. 농수산물공판장 건설

산지 농산물의 신속한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농협을 사업자로 하여 중소 도시에 건설하고 있는 농산물공판장은 1998년에 진해, 제주, 밀양, 평창, 서

산, 논산, 부여, 예산, 장수, 성주 등 10개 지역이 새로 개장될 예정이며, 보령, 고흥, 진도 등 3개 지역이 신규로 착공된다. 또한 시설부족으로 물량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는 남원원협 공판장은 확장사업을 하게 된다. 이로써 농산물공판장 건설사업은 1998년까지 정부가 목표로 하는 67개소가 모두 개장하거나 착공되게 된다.

다.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설로 유통경로 다원화

정부는 유통경로의 다양화와 유통단계 축소방안의 하나로 2004년까지 16개소의 물류센타 건설을 지원할 계획이며, 1998년에는 양재동, 창동, 청주, 부산 등 4개소가 개장할 계획이다. 생산자가 사전에 계약에 의해 규격상품을 물류센타에 공급하면 물류센타는 소매점·대량수요처 등 실수요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원하는 여러 종류의 농수산물을 “세트”로 배송해 주는 형태의 유통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소위 중간상인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절감되는 유통마진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앞으로, 도매시장, 물류센타 등 다양한 유통시설이 개장되면 유통경로간 경쟁이 치열해져 그 만큼 출하자의 선택폭이 넓어지고 출하된 농수산물도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농업인들이 선별포장을 해서 실수요자와 직접 주문거래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공정거래의 문제도 대부분 해소되리라 전망된다.

라.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제도 개선

1998년에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영도매시장의 상장수수료를 1%수준 인하할 계획이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경매도 일부 도매시장법인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농산물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래제도를 다양화하여 출하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과 도매시장 관리업무와 운영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마. 생산자조직중심의 산지유통혁신

산지유통의 혁신을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조직망을 보유하고 있는 농협이 산지유통을 책임지고 추진하는 체제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협의 역할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이 선행되어야 하며 산지농협을 경제권 중심으로 통폐합하여 농산물 유통사업 추진의 규모화·전문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1997년말 현재 1,286개의 산지농협을 1998년에는 1,086개소로 조정하고 2001년까지 500개소로 조정하여 유통사업 등 경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들 농협을 중심으로 「산지유통시범농협」을 선정하여 포장센터 등 유통시설 설치비, 하역기계장비, 포장재비 등의 구입자금 및 운영자금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시범농협을 중심으로 공동규격출하·공동계산제 및 직거래 등 선진화된 산지유통 모델을 정착시켜, 이를 전농협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다.

<표 3-2-6> 산지유통시범농협선정 현황

'97	'98까지	2001까지
30개소	60	150

특히, 주산지 중심의 산지유통 시범농협을 중심으로 우수작목반 및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육성하여 농협과 연계시켜 채소류, 과실류에 대한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공동규격출하를 활성화하여 농협의 공동출하비율을 현재 35% 수준에서 2004년까지는 70% 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들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농업관측을 내실화하고, 사전적, 자율적인 농산물 생산조정, 출하조절을 할 수 있도록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시켜 농산물가격을 안정시켜 나갈 것이다.

3.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가. 직거래의 중요성 및 의의

「농산물직거래」는 유통개혁의 일환으로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직거래의 개념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대면거래하는 좁은 의미에서부터 생산자와 소비자의 정신적 유대관계 차원까지 포함하는 입장까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직거래는 「광의의 직거래」로서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간 직거래, 공공기관이나 민간유통업체에 의한 직거래, 사이버마켓이나 물류센터를 통한 직거래 등 다양한 형태와 경로를 포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러 가지 유형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좁은 의미의 직거래나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직거래는 가격형성이나 품목 및 물량확보, 대금결제, 유통비용 절감 등의 측면에서 비효율성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개방화·정보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오늘날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 유통경로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도매시장 중심의 유통체제가 가지는 경직성이나 비효율성을 줄이도록 촉진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

또, 생산자의 거래교섭력을 높이고, 유통비용을 절감하며, 유통주체간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소비자의 욕구를 바로 생산자에게 반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사회활동 내지는 정신활동의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효과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직거래는 선진국의 경우에도 특히 경제가 어려울 때 적극 실시된 적이 있다. 미국은 1976년 'The Farmers to Consumers Direct Marketing Act'라는 직거래 유통법을 제정하여 농민시장 개설과 운영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사례가 있으며,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선진국도 국가나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직거래를 발전시켜오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변화하는 유통여건에 부응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유통체제를 정착시킨다는 근본적인 목적이외에도, 당면한 IMF체제하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농민, 소비자, 상인, 정부 등은 국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범국민 화합차원의 간접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나. 향후 추진방향

추진은 단계적으로 하게 되는데 우선 농·수·축협 등 각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직거래사업을 추진하여, 초기에는 직거래 붐 조성차원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형태의 '협의의 직거래'를 중심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기직거래장터의 개설, 금융점포내 직판코너 확충, 차량순회이동판매, 기획판매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으로 직거래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광범위한 자발적 확산을 위해 '광의의 직거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생산자단체와 실수요업체·소비자 조직간 직거래, 공공기관이나 민간유통업체에 의한 직거래, 물류센터·사이버마켓 등을 통한 직거래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업의 비용효과분석을 실시하고, 이 중 장기적으로 발전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모델화하는 작업을 통해 직거래를 제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활발한 사업을 통하여 국민에게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유통개혁의 현장을 제공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유통마진절감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기존소매업소의 가격인하를 유도하며, 대형유통업체의 산지직구입 확대를 자극하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직접 기여하는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도농간 연대의식을 높여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도 안정감을 제공하고자 한다.

직거래 사업의 거점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500평에서 3,000평 정도의 규모화된 정기직거래 장터를 개설하며, 금융점포내의 직판코너를 확대하고, 기존 점포도 농수축산물을 공동으로 판매하는 점포로 형태를 바꾸어 매장

이 설치된 점포에서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병행함으로써 다른 금융기관과의 차별화를 통해 금융고객의 증가 등 시너지 효과를 거두도록 할 예정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직거래를 제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경로인 물류센터의 건설과 가맹점 확보도 활발히 추진하여, 2001년까지 12개소 개장을 목표로 '98년 중 서울 양재동과 창동에 이어 2개소를 추가 개장할 예정이며, 배송거래처와 사업자회원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도시지역 소비자단체 및 대량실수요처와 산지간 직접 연계로 직거래하는 형태인 자매결연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제도적 보완과제 해결에도 노력을 기울여, 농산물직거래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제정을 추진하여 생협활동을 뒷받침하며,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에 축산물 이동판매에 대한 시설규정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법의 소지를 없애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으로 직거래의 의의와 범위 및 성과를 효과적으로 알려 국민의 이해를 돕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직거래 운영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직거래 촉진을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인터넷 직거래 마당, 농민시장 목록집 등의 제작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손쉽게 동참할 수 있는 정례화되고 제도화된 시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유통정책과 서기관 이준원)

제 3 절 농업구조조정 추진으로 경쟁력 제고

1. 농업인력 육성

인력육성사업은 규모화된 전문 농업경영체를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영농규모화와 더불어 농촌지역의 중추인력을 육성함으로써 농업개방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로 평가되었다.

보완과제로서는 규모화, 전문화된 새로운 농업경영체가 증가하고 있으나 개별 경영체별로 기술·경영수준의 차이가 크고, 농가 스스로 경영혁신을하도록 유도하는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하므로, 발전단계에 따른 체계적인 인력육성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를 위하여 현행 후계자, 전업농, 선도농가 등으로 분리된 농업인력육성체계를 영농규모와 경영능력을 기준으로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전문가족농), 선도농업경영인 등으로 연결되는 체계로 통합하고 보조사업은 용자로 전환함으로써 전문경영체의 발전단계에 따라 적기·적량의 자금은 종합지원하는 자금공급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업인 육성

국내 농림업이 생산성 높은 기술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생산기술과 고급경영기법을 실천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젊은층의 이농 현상이 계속되는 상황하에서 앞으로 우리 농업을 선도할 농업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농업인후계자를 1981년부터 선정하기 시작, 1992년부터는 매년 9,000(어업인후계자 1,000명 제외) 수준으로 증원하여 선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일정수준의 경영기반과 경력, 발전가능성을 갖춘 농업인을 대상으로 199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업농 육성사업은 1996년 14,640명, 1997년에는 11,644명을 선정, 지원하였다.

<표 3-2-7> 1997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농업	축산
계	20,170	15,504	4,666
농업인후계자	8,526	3,860	4,666
전업농	11,644	11,644	-

주: 축산전업은 '95년부터 축종별 경쟁력제고 사업에서 별도 추진

자료: 농림부 농업정책국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농업인후계자는 평균 20~50백만원, 전업농 육성대상자는 평균 50~100백만원을 지원하되, 개인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자금지원 이외에도 기술교육, 해외연수 실시, 각종 정보제공 등의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1995년부터 경영규모확대와 시설·장비 현대화로 국제경쟁력을 갖출 정도로 발전한 농업경영체를 선도농업경영체로 선정, 그 사업장을 모델농장으로 조성하여, 농과계 학생과 농업인에 대한 현장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1996년에 70개소를 선발하여 개소당 8,000만원씩 지원하였고, 1997년에는 55개소를 선발하여 8,000만원씩 지원하였다.

나. 농업경영혁신종합지원

농업 투·융자 확대 및 구조개선으로 영농이 규모화, 현대화되고 있으나 농업인의 경영능력 부족으로 부실사태가 발생하고 동일한 영농조건이라도 경영체의 기술, 경영능력 여하에 따라 생산량 및 수익성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통한 농업경영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 노력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경영진단, 경영 및 정보화 교육실시, 컨설팅서비스 제공, 종합자금 지원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첫째, 주요 품목에 대한 표준진단표를 1998년말까지 개발·보급하여 농업경영체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개선토록 유도하고 농촌진흥청 주관하에 학계, 컨설팅업계, 관계기관, 농민단체 등이 참여 농업경영진단협의회를 구성하고 농·축협을 통해서도 각종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지원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둘째, 농업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통교재를 제작·보급하여 농업인 경영교육과정에 활용토록 하며,

셋째, 앞으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농업법인경영체, 전업농육성대상자, 후계자 등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현장

교육 등 집중경영교육을 실시하고

넷째, 농업인의 교육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현장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나갈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정책노력의 근본취지는 농업인들은 진단표 작성을 통해 농업경영상의 문제점을 스스로 진단하여 경영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고, 다른 농가와의 비교를 통해 끊임없이 경영개선의 목표를 상향조정해 나감으로써 최고 수준으로의 발전을 지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결국 농업분야 전체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 투융자의 효율성 제고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다. 가족농을 중심으로 한 농업인력육성

WTO체제 출범후 개방과 경쟁이라고 하는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격경쟁력 위주의 농업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한 결과 시설이 현대화되고 규모도 커지는 등 성과도 있었으나 좁은 국토에서 물리적인 한계가 있고, 많은 투자와 오랜시간이 소요되며, IMF사태 이후 여건변화로 대규모·첨단시설 사업의 취약점이 노출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농을 중심으로 규모화·전문화·협동화를 추진함으로써 『규모의 경영』과 『소득의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고 가격경쟁력 뿐 아니라 품질, 안정성 등을 높여 차별화된 농산물 생산을 통해 종합적인 상품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저장·유통·가공 등으로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범위의 경제』를 도모하고 저비용·고효율 농업구조를 조기에 정착시켜 농업체질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후계자·전업농 등 정예인력육성사업을 내실있게 개편하여 규모화·전문화된 가족농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면서 규모화·전문화가 어려운 가족농을 중심으로 품목별, 분야별 협동화·조직화·법인화를 유도하여 공동생산, 공동출하 등 규모의 유리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저장·유통·가공분야에 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여 범위의 경제를 도모하고 품질, 안전성, 브랜드화 등을 통한 상품차별화와 친환경농업육성, 직거래

등으로 가족농의 소득증대를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영·정보화교육, 경영컨설팅 등 경영혁신 종합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감으로써 농업경영체의 경영과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농촌인력과 사무관 오병석)

2. 법인경영체의 육성

가.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 단체가 설립하여 협업적 농업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1991년 25개소, 1992년 61개소, 1993년 232개소, 1994년 1,012개소, 1995년 1,250개소, 1996년 1,117개소, 1997년 517개소 등 총 4,214개소가 설립되었다.

이와같이 매년 설립이 증가하는 이유는 첫째, 개별경영보다 법인화하여 경영하는 것이 영농의 규모화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자본·기술집약형 농업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더 유리하고, 둘째, 정부의 각종 세제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농업정책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7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부지원 자격요건 강화로 자금 수혜목적의 설립은 앞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은 크게 영농조합법인 자체에 대한 지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으로는 첫째,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농지소득 전액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고 기타소득은 조합원당 1,200만원 공제후 그 잔액에 대하여만 과세되며, 농약, 비료, 농기계 등 농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둘째, 조합법인 고유의 업무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 소유농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가 분리 과세된다.

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으로는 법인의 농지소득에 대한 배당소득과 농지 이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조합원당 연간 1,200만원까지 면제된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농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영농조합법인이 지역농업을 유지·발전시키는 중심적인 농업경영체로 자력 성장할 수 있도록 농협 및 시·군, 농촌지도소 등에서는 경영 및 기술지도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나.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가의 영농대행으로 영농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0년도부터 설립된 위탁영농회사제도를 보완·발전시킨 제도로써, 농산물 생산은 물론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까지 허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게 하는 등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7조)에 설립근거를 마련하였다.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자격은 농업인과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로서 설립자가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형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사항을 살펴보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법인세는 면제되고 농지소득외의 소득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 감면되며, 농업경영이나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 농약, 비료, 농업기계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농업회사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이 면제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에서는 농업기계 구입자금, 농업기계의 보관창고 및 간이수리

시설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하였다.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은 1990년에 6개소를 시작으로 1991년 61개소, 1992년 171개소, 1993년 282개소, 1994년 339개소, 1995년 337개소, 1996년 300개소, 1997년 99개소 등 총 1,595개소가 설립되었다.

다. 농업회사법인 등 법인경영체 지원

법인경영체는 생산뿐 아니라 관련 2·3차 산업기능을 포괄하는 Agribusiness의 중심체로서 지역 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경영체의 경우 사업에 대한 비전없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향이 있고, 법인 운영 경험 및 세무, 회계, 마케팅 등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등과 규모확대, 시설현대화 등을 위한 추가자금부족 등으로 부실운영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는 출자 등을 통해 자체 조달하도록 유도하고, 법인경영체의 정책사업 대상 신청자격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실적, 구성원의 자질, 자본(출자)규모, 사업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등 정책사업 대상자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성실하게 운영하는 법인경영체만 지원받도록 하고 있다.

법인경영체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사업실적 보고, 경영장부 기장을 의무화하고,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에 대한 법인명의의 등기 실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법인경영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마케팅, 회계, 세무, 사업계획 및 실적평가 등에 필요한 경영교육, 정보화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우수경영체에 대한 운전자금으로 1997년도에 2,00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998년도에 5,000억원의 농기업경영자금을 조성, 지원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촌인력과 서기관 신영정)

3. 농업의 기계화 및 현대화

가. 농업의 기계화

(1) 농업의 기계화 추진방향

농업기계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기계 이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농기계 공급중심에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기계화시책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기본 방향으로는 벼농사는 전문경영체 중심으로 규모화와 대형 일관기계화를 추진하되 벼농사의 건조작업은 2004년까지 완전기계화 하고, 채소, 과수, 화훼 등 밭작물과 축산분야에도 기계화를 촉진하며, 주요 농기계의 적정공급 모델을 보급하여 농기계 이용율을 증대하는 한편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생력기계화 효과가 큰 농기계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2) 농기계 지원공급

농기계 반값공급으로 중소형 농기계를 중심으로 보조지원함에 따라 일부 소형농기계는 필요이상으로 공급되었다는 여론이 있어 1998년부터는 일반 농가에 대한 농기계 구입자금 보조지원을 중단하고 융자지원으로 전환하였다.

영농의 규모화와 대형 일관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자조직 100개소, 농기계공동이용조직 1,000개소에 대하여 개소당 100백만원 범위내에서 대형농기계 중심으로 보조40% 융자 50%를 지원할 계획이며 아울러, 쌀전업농 6천호에 대하여도 호당 사업비 23.5백만원 범위내에서 보조 20%, 융자 70%조건으로 구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구입자금 융자지원 금리를 1997년의 연리 5%에서 1998년 1월 1일부터 3%로 인하하였으나 1998년 4월 15일부터 4.5%로 조정하였다.

또한, 농기계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개발한 지역별 주요농기계의 적정공급모델을 기초로 트랙터, 동력이앙기, 콤바인

등 6개 주요농기계에 대하여 시·군별로 경지면적, 기종별 부담면적 등을 감안하여 보유목표를 설정하고 실제 공급상황을 분석하여 적정대수의 농기계 공급을 유도하고 이후의 농기계 지원공급 업무에 적극 활용토록 할 것이다. 그리고 작목별 경영규모별로 최적규격의 농기계를 공급하여 과투자를 방지하고 저비용의 일관 기계화를 추진하므로써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화연구소로 하여금 작목별 경영규모별 기계화모델을 개발토록 하고 농업회사법인이나 농기계공동이용조직, 쌀전업농 선정시에 동 모델을 적극 활용토록 하였다. 한편 이미 보급되어 있는 중고농기계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농기구써비스센터가 설치된 지역농협에 중고농기계 매매알선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지원비율도 1997년까지는 구입가격의 80%이내에서 지원토록 하였으나 1998년부터는 90%선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3) 농기계 사후관리 강화

농기계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수리용부품을 적기에 공급하여 적기영농을 가능케하고 농기계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수리용부품 확보자금을 1999년의 153억원에서 1998년에는 180억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트랙터, 콤바인등 대형정밀농기계의 원활한 수리를 지원하기 위해 4개군에 개소당 9억원씩을 지원하여 광역농기계 수리센터 4개소를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고장을 예방하고 이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1,500개소와 농업회사법인 농기계보관창고 8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영농기 농기계 사용시 발생하는 수리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주관으로 연 2회(3~4월, 8~9월) 전국농기계순회수리봉사를 실시토록 하고 시·군농촌지도소 주관으로 마을단위 순회수리봉사도 수시로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농기계 사후봉사업소의 수리기사와 농업회사법인의 농기계 운전요원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농기계 수리기사 및 운전요원에 대한 병역특례 407

명을 배정하였으며, 농업인의 농기계 수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마을 단위에 기계화영농사 1,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4) 밭작물 및 축산분야의 기계화 촉진

벼농사 주요농작업의 기계화율은 1997년 현재 98%에 달하고 있으나 밭농사 주요농작업의 기계화율은 42%에 머물고 있어 기계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밭작물과 축산분야의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마늘, 사과, 시설오이, 시설장미, 양돈 5개작목을 대상으로 14개의 경영규모별 기계화모델을 개발 보급하였으며 1998년중에 양파, 양계를 대상으로 경영규모별 기계화모델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사료작물수확기, 반전집초기, 축사용고압세척기 등과 같은 농기계를 1998년부터 추가로 지원공급하고 있으며, 자동관수분배기등 생력기계화 효과가 큰 밭작물용 농기계 7개를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하여 생산 및 구입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무, 배추, 고추 등 5개작목에 대하여 기계화재배양식의 표준화를 추진하므로써 밭작물용 농기계의 개발 비용을 줄이고 이용율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첨단 농업기자재의 국산화개발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농업기자재 생산자금도 30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 보다 밭작물 분야의 기계화가 앞선 유럽이나, 일본, 미국 등의 농기계 개발보급 현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밭작물 농기계의 개발 보급을 촉진하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315백만원을 지원하여 1998년 11월 16일~21일(6일간) KOEX에서 '98 서울국제농림축수산물기계박람회(SIEMSTA '98)을 개최할 계획이다.

나. 농업시설의 현대화

(1) 미곡종합처리장 설치·확대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가가 생산한 벼를 산물로 수집하여 건조·저장·가공 및 판매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일괄처리하는 현대화시설인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를 확대하여, 농촌노동력 절감 및 물류유통 H합

리화로 생산비 및 유통비용을 낮추고, 자동화시설을 이용한 포장의 규격화 및 미질의 차별화로 상품성을 높여 소비자의 입맛에 부응한 고품질의 “지역특산미”를 생산·공급함과 아울러 수확기 농가보유물량을 흡수 처리하여 산지가격을 지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같이 산지 쌀 유통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미곡종합처리장은 1991년 농협에 2개소를 시범 설치하였고, 1992년~96년에 218개소를 설치한데 이어, 1997년에는 33개소를 설치하였다.

1998년에도 50개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2004년까지 쌀 주산지를 중심으로 40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표 3-2-8>

미곡종합처리장 설치현황

(단위 : 개소, 억원)

	'91~'96	'97	'98 계획	'98~2004	계
개 소 수	220	33	50	97	400
사 업 비	3,771	500	700	1,995	6,966

(2) 원예·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시설원예 농업경영체에 대한 생산시설의 집단지화, 현대화 및 자동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1998년에는 시설채소 농업경영체에 52,338백만원, 화훼농업경영체에 25,489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노지채소의 주산지를 중심으로 생산기반 시설과 산지유통시설 및 기계화에 필요한 장비 등을 종합지원하기 위해 27,383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용작물은 품목별로 재배를 규모화할 수 있도록 생산·유통시설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생산기반 구축과 생산성향상 및 부가가치를 재고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82,416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밖에 화훼유리 온실 단지를 조성하여 종묘연구 등의 화훼수출 계열화 사업으로 1,360백만원,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으로 137,353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3) 축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2001년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비, 낙후된 국내 축산물유통의 선진화 및 복잡한 유통구조의 단순화, 그리고 육류 지육 유통을 부분육·냉장육·브랜드육 유통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축산물종합처리장(Live-stock Paking Center)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까지 종합처리장 10개소를 건설하여 국내 육류유통량의 30~40%를 공급할 계획이며, 1998년 4월 9일 경기도 안성축산물종합처리장 가동을 시작으로 전라북도 익산시 (주)부천, 경상북도 군위군의 동아축산, 포항시 명신산업 등 4개소가 1998년에 완공 가동이 되며, 1999년에 3개소, 2000년에 3개소가 건설된다.

축산물종합처리장은 가축생산·도축·가공·판매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선진국형 유통시설로서 현행 5~6단계의 유통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여 축산물 직거래를 활성화시켜 유통비용 및 마진율을 20% 이상 절감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국내산 육류의 국제경쟁력 제고로 수출의 중심기지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생산지원과 기계사무관 박상민)

4. 농업기술의 개발·보급

가. 공공기술개발

(1) 개 요

우리농업은 UR타결에 따른 시장개방의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경제위기로 IMF 관리체제를 맞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다.

경기침체로 인하여 농축산물 수요는 위축되는 반면에 고환율·고금리의 여파로 농자재 가격이 인상됨으로써 농업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당분간 농가경제수지의 전망도 낙관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최근 농업부문에 적지않은 투자를 하였으나 우리농업의 현실은 외국의 자원과 기술에 과다하게 의존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IMF위기앞에 취약함

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농업이 살아갈 길은 고유의 토착기술을 현대 과학기술과 접목시켜 우리실정에 맞는 한국형 “농업과학기술의 개발” 밖에는 없다고 하겠다.

특히 국내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자원절약형 기술,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 나갈 때 오늘의 위기는 빨리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농업인의 기술수요에 부응한 실용기술을 개발하고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을 농업분야에 응용하여 실용성있는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겪고 있는 기술애로를 해소하는데 중점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개발과제의 선정 및 연구수행과정에 농업인과 민간연구소의 참여를 확대하고, 「대한민국 농업과학기술상」을 제정하여 우수한 기술을 개발한 연구자들을 격려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2) 첨단기술개발사업

농업기술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개발하거나 타 산업분야에서 개발된 첨단기술을 농림분야에 접목하여 농림업의 생산성 향상과 대외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으로서 첨단기술개발과제와 기획연구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첨단기술개발과제는 자유공모과제로서 지원대상 기술은 품종 및 첨단생산 기술, 기계화 및 자동화시스템개발 기술, 고부가가치 제품 및 복제생산을 위한 생명공학 기술, 환경 및 자원보전형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 및 정보 기술 등이며 연구과제당 지원기간은 3~5년이내, 연구비는 5억 원이내를 지원한다.

또한 체계적인 연구기획에 바탕을 둔 과제지정 공모방식에 의한 품목별 일관기술을 개발하는 기획연구과제는 에너지절감 등 비용절감형 기술, 농업을 종합생물산업화 할 수 있는 기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첨단 가공·저장·유통기술, 산림자원의 이용·보전 및 새로운 용도개발 기술, 통일대비 북한농업 공여기술, 국가정책 목표달성 및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중점기술 등이며 연구과제당 지원기간은 3~6년 이내, 연구비는 10 억원이 내로써 「농업기술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라 원예, 축산등 10개 분야별 중점개발대상 과제를 년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중점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3)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농업인들이 영농현장 또는 일상생활에서 겪고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농업인의 기술수요에 부응한 실용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와 농업인개발과제로 구분하여 자유공모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는 기술개발 수준이 첨단기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로서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술, 농업용 기계·자재개발 기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등이 이에 해당되며, 연구과제당 지원기간은 3년이내이며 지원금은 2억원이내 이다.

또한 농업인개발과제는 농업인이 직접 연구에 참여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기할 수 있는 실용기술로서 시험·연구가 미치지 못하는 국지적인 지역 영농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의 기술, 이미 개발된 기술의 현장적용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적인 보충기술 등의 과제를 발굴·선정하여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애로기술을 개발하며 연구과제당 지원기간은 2년이내, 연구비는 3천만원 이내로써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4)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농림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범 정부적으로 적극 지원함으로써 벤처형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육성·발전을 기하고, 이를 통해 우리 농림산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사업으로서 1998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는 농림기술개발사업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기술로서 신규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술,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실용성이 높은 기술등이며 특히 하이텍기술, 수출산업화

가 기대되는 기술, 수입대체 효과가 큰 기술은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연구 과제당 지원기간은 3년이내, 연구비는 3억원이내로써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5) 농업기술개발 촉진대회 개최

우리나라 농업기술은 기초·응용·개발연구 등 전반적인 수준에 있어서는 세계 평균수준으로 평가되나 아직도 국제수준과 비교하여 낙후된 부분이 많다. 21세기 농업은 첨단과학기술 주도의 농업이 될 전망이며, 이러한 시대적인 조류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새로운 첨단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더욱 촉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농업현장에서 새로운 기술을 연구·개발한 우수한 연구개발자를 발굴·포상함으로써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우수연구인력의 참여를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우리농업을 21세기의 종합생물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농업과학기술상」을 제정, 시상할 계획이다.

한편 1994년말부터 시작하여 1997년말까지 기술개발을 완료한 과제는 총 294개 과제으로써 이중 46과제는 산업체에 관련기술을 이전하였으며 109과제는 산업체에 기술이전을 추진중에 있으며 139과제는 농업현장 적용 및 정책자료로 활용중에 있다.

앞으로 이들과제의 연구성과가 조기에 농업인과 산업체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표 3-2-9>

기술개발 성과활용 내역

	'95 완료	'96 완료	'97 완료	계
계	17	93	184	294
○ 산업체 기술이전	2	22	22	46
○ 산업체 기술이전 추진	7	27	75	109
○ 현장적용 및 정책자료 활용	8	44	87	139

※ 특허출원 : 60과제(136건)

(농산기술과 농업사무관 허순범)

나. 농업기술개발

인구증가와 소득향상으로 세계 식량수요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5년에 지금수준보다 2배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개도국의 공업위주 성장전략, 세계적인 기상이변 등으로 국제곡물 재고량이 감소하여, 2010년에 곡물 부족량은 2억 1,0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IBRD 추정)

식량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수확 고품질 품종의 지속개발, 첨단기술을 접목한 작목별 기술개발, 이러한 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화 등이 필수적이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의 보존, 자연자원의 생산적 활용과 농업생산환경을 유지 보존할 수 있는 환경보전형 농업기술의 개발 등은 우리농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첩경이라 할 수 있다.

(1) 다수확 고품질 품종의 지속 개발과 보급

지속적으로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주곡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은 500kg/10a 이상 양질 다수성 품종 40개, 550kg/10a 이상 4개 등 많은 우수한 품종을 개발·보급하였다. 그러나 직파재배 전용품종, 소득작물 후작용 단기성 품종과 병충해 및 재해저항성 품종 등의 개발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2004년까지 양질 다수성 품종은 600kg/10a, 초다수성은 1.000kg/10a에 목표를 두고 작물시험장은 소얼 수증형 초다수성 및 유색미 품종개발, 호남농업시험장은 양조용벼 및 자포니카형 초다수 품종개발, 영남농업시험장은 향미벼 및 다얼 수증형 초다수 품종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또 미질개선, 내냉성 및 무성생식 유전자원 탐색 등 첨단기술 개발은 국내대학, 국제미작연구소, 미국 벼 유전자원센터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1998년에는 양질 다수성 품종인 익산 420호 등 12계통, 초다수성 품종 수원 441호 등 3계통, 직파재배전용 품종 밀양 149호 등 3계통에 대해 지역적응 검정시험을 실시하고, 소득작물 전·후작용 단기성 품종 밀양 151호를 개발하여 육성할 계획이다.

(2) 품목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질향상 기술개발

밭작물은 작목이 다양하고 소규모 자가소비형 재배가 많으며 타 작목에 비해 소득이 낮고 생산기반이 취약하여 새로운 품종육성과 재배기술개발이 미흡하다. 농촌진흥청은 소비자 기호에 맞는 용도별 고품질의 다수성 품종 개발에 목표를 두고 취반용 쌀보리 “수원 351호” 등 2계통, 나물용 콩 “수원 184호”, 장류용 콩 “밀양 76호”, 기계화 적성 참깨 “수원 170호”, 후기녹체성, 종실·사일리지 겸용 옥수수 “수원 132호” 등의 지역적응 검정을 실시하고 아밀로스 함량이 1% 이하인 찰성 밀을 개발할 계획이다. 생력기계화 재배와 수확후 관리기술개발을 위하여 벼 수확 동시 보리파종 재배기술 실용화, 보리 콤바인 수확후 건조·조제 등 생력화 기술개발, 참깨 과립종자 이용 파종 일관작업체계 확립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원예작물 가운데 배추, 무, 고추 등 주요 채소류의 품종육성은 세계적 수준이나 기타 채소류 종자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과수는 “황금배” 등 21개 품종은 개발되어 있으나 적과 및 수확노력절감 등 생력재배 기술개발은 미흡하고, 화훼류는 연구역사가 짧아 국제 기호성 품종육성과 무병종구 생산기술이 낮으며, 종구·종자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채소는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고품질 다수성 채소품종과 병해 복합 저항성 품종을 육성하고, 배추의 파종, 정식, 수확 등 기계화 일관기술체계 기술개발, 고추 공정육묘기술 및 기계화 정식 재배기술개발, 주요채소류 바이러스 분리동정 및 진단항체 키트 개발, 토마토 배지경 재배시 착색 및 당도 향상 기술개발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과수는 중생종 사과 원교가-12호, 고당도 배 원교나-17호 등 16계통의 우량품종에 대해 지역적응성 검정을 실시하고, 사과, 배, 감귤 등에 대한 바이러스 무독묘 생산 기술체계 개발, 수출용 황금배 동녹방지를 위한 과피보호제와 전용봉지개발, 저온·저산소 저장, 신기능 포장재, 발효가공품 등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화훼는 틈나리 10계통의 지역특성검정, 국화 흰녹병 저항성과 고기호성 품종 4종 개발, 비모란 접목 선인장과 산취 신품종 11계통 육성 등 고품질

신품종을 육성할 계획이다. 생력 재배기술 개발을 위해 백합 상자재배기술 확립과 구근선별기 개발, 스프레이 국화 연 4기작 재배기술 개발, 장미 양액재배 기술체계를 확립하고 수입 구근화훼 무병종구 생산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축산은 젖소, 종돈, 종계 등의 종축과 원료사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내 조사료와 대체사료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고급육형 한우종모우 선발 및 우량 암소 핵군 조성과 다산·강건성인 수입 대체 종돈 우량계통을 조성하고, 사료가격상승에 따른 고분자 화합물을 응용한 반추가축용 비소화 조사료개발, 조사료 생산용 우량사료 작물 품종개발, 남은 음식물 사료화 기술개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환경농업 기술개발

(가) 농약 사용량 절감 기술개발

농약 사용량은 1975년에 8,600톤(100)에서 1980년에 18,000톤(212), 1991년에 27,500톤(319)으로 급속히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과다 사용에 의한 농산물 안전성과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농약 사용량 절감을 위해서 과학적인 정밀예찰결과를 전산분석하여 병해충 발생을 조기에 예측하고 신속하게 적기방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병해충과 잡초 종합관리를 위해 1997년의 벼멸구 발생과 피해특징을 종합 정리하여 금후대책을 마련하고, 온실가루이 좀벌 등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 시스템 연구, 오이덩굴쫄깃병 방제를 위한 비병원성 균주 대량제조법 등을 개발하여, 농가실증시험 등을 통하여 확립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무사마귀병 등 문제 병해충의 발생 생태조사를 실시하여 피해확산이 되지 않도록 종합방제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생물농약개발연구는 고추역병 길항세균 AC-1의 실용화와 오이흰가루병 중복기생균 배양법, 벼 흰빛잎마름병 방제용 항생물질 분리와 활성검정을 추진할 것이며, 농산물과 환경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추가로 설정하고, 양액주입 농약의 안전한 사용기술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나) 화학비료사용량 절감기술개발

비료 사용량은 1980년 수준의 95%로 감소되었으나, ha당 사용량은 1980년 299kg/ha에서 1996년에 405kg/ha로 증가하여 균형시비 미흡과 과량시비로 인한 인산칼리함량이 과다집적된 토양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작물의 양분요구량, 토양비옥도, 환경영향을 고려한 적정시비량을 산출하여 46작물(벼, 밭작물 5, 노지채소 18, 시설채소 18, 과수 4작물)에 대한 시비기준량을 하향 조정하였다. 1998년에는 피망, 양상추 등 양채류와 참취용 산채류에 대한 표준시비기준을 확립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축 분뇨의 생산량 증가에 따라 유기질 비료 사용을 감안한 화학비료의 적정사용량을 설정하여 이를 절감할 계획이다. 환경친화형 비료로써 천연수지를 이용한 완효성복비를 개발하고 가축분을 이용한 성형유기질 복비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기·자연농업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위하여 유기자연농업 활용자재를 수집·분석하고, 생육촉진효과시험을 실시하여 수량성 증대, 병해충 억제, 품질향상 등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다) 토착 환경농업기술 개발

옛부터 농업은 물질순환의 조화속에서 이어져 왔으나, 산업혁명 이후 인구증가로 농작물의 생산성이 요구됨에 따라 비료의 생산과 사용량이 늘어났다. 이에 수반한 병해충 발생량 증가로 농약 사용량이 늘어나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농업생태계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비료·농약의 사용량을 줄이면서 토양에 유기물 공급을 늘려 주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농약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천적이용 해충방제 시스템 연구는 온실가루이 좀벌을 17개 지도소에 분양하고 그 증식기술을 보급하여 생육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포식용애, 진디벌의 농가실증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비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 재활용 연구를 수행할 것이며, 유기 자연농법에 사용하고 있는 자재를 수집·분석하고 이들에 대한 생육촉진과 병해억제 효과를 검증하며 미생물제, 효소제, 천혜늑죽, 목초액 등 활용자재의 효과확인 포장시험을 확대하여 실시할 것이다. 선도농가에 대하여 기술 체계의 타당성 사례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협

과 공동으로 73과제의 환경농업 현장연구를 수행하여 환경농업 체계화를 위한 기술지원과 과학적 검증을 수행할 계획이다.

(4) 주변 첨단과학기술의 농업적용을 위한 실용화 기술개발

주변 첨단과학을 이용한 농업기술은 선진농업국들에 비해 연구 기간이 짧고 연구기반이 취약하다. 또한 유전자 조작, 신물질 개발기술 등은 기초 단계이고, 전자·신소재 등의 이용기술은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다. 그러나 농업분야에 첨단 기초과학기술을 조기에 정착하고 농가현장에서 실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유전형질개량에 생명공학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초다수 복합저항성의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전자·신소재·로봇 등 주변기술을 이용하여 저비용 생력재배기술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미래농업을 주도할 유전공학기술의 연구기반 구축을 위해 유전자 전환·조작기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벼 제초제 저항성 계통의 포장검정, 고추 역병·탄저병 저항성 계통의 능력검정, 벼 신품종 개발 효율증진 등을 위한 게놈(Genome) 연구를 추진할 것이다. 동충하초 적응 균주선발과 대량 재배체계 확립, 단색구름버섯과 말불버섯에서 항암성 물질 탐색 및 분리 등으로 신기능 신소재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종자전쟁에 대비해 국내의 유전자원 수집을 확대하고 특성검정 12,000점, 활력검정 25,000점에 대해 평가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또한 전자, 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자율주행 무인트랙터와 토마토 수확로봇을 개발하고, 영상처리기술을 이용한 과일 품질판정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5) 우수 농기자재와 품질관리 기술개발

우리 농업여건에 적합하고 고효율 우수 농기자재를 개발하여 농가에 조기 보급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생력 영농을 추진하고 있다. 비료·농약개발은 천연수지를 이용한 배추, 양파용 완효성복비와 가축분 이용 벼, 고추 성형 유기질복비 개발, 온실가루이좀벌 이용 해충방제 농가실증시험, 두배논 등 4품목에 대한 초다수계 벼 안전 제초제 선발, 비병원성 미생물 이용 오이 덩굴

쪼김병 방제시험, 고추역병 길항세균 AC-1 실용화와 오이흰가루병 중복 기생균 제제의 기술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기계개발은 파종기계화를 위한 마늘 파종기, 무·참깨 비닐멀칭 파종기, 고정밀 방제를 위한 농약 정전살포장치, 수확기계화를 위한 마늘·양파수확기, 고구마 수확기, 고품질 쌀 가공기계화를 위한 세라믹연미기, 건식연미기, 벼 도정수율 자동측정기 등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시설 기자재 개발은 분상토넣기 및 이식장치, 작물 이동식 양액재배장치, 상변화물질을 이용한 고효율 축열시스템, 에너지 절약형 온실 보광시스템, 느타리·양송이 균상배지 입·폐상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주변 첨단기술을 응용한 기술개발에서는 토마토 수확로봇과 농작업자를 인식하여 추종하는 파트너 로봇, 근적외선 이용 비파괴 사과 당도 판정시스템, 근적외선과 영상처리기술을 조합한 과일 내외부 비파괴 품질 판정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개발계획이 추진될 것이다. 농기자재 품질관리 강화에서 농약의 품질검사를 연 650점에서 800점, 비료는 연 400점에서 600점으로 확대하고, 부정불량 농약·비료 유통단속강화를 위해 각도원, 종자관리소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독농가, 판매상 등을 통한 유통농약·비료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제조업체의 자체 품질관리와 농약·비료 판매상의 등록기준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농업기계 시험평가는 평가방법을 합격과 불합격 검사에서 시험평가위주로 보완 발전시키고, 원예·축산 농기계의 시험평가기술도 중점 개발할 계획이다. 농기계의 안전관리기준도 강화하고, 시험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연구사업에 반영시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6) 농업경영 기술 개발

농업경영 연구는 농가경영혁신을 위한 경영·정보화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목적을 두고 전문생산조직체 육성에 필요한 농업회사법인의 경영관리 개선과 영농조합법인 유형별 경영관리 개선에 관한 연구, 그리고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벼농사용 주요 농기계의 적정교체 시기를 분석하고, 벼농사 선진경영체의 경영우수요인을 구명할 계획이다. 개방화에 대응한 품목

별 경영모형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배 전업농 우수 경영모형 설정, 양돈계 열화 사업의 경영모형 정립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확대 가능품목의 경영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와 축산물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화에 필요한 한우번식기반 안정화를 위한 경영개선방안 연구, 한우농가의 의사결정을 위한 가격예측모형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설원에 현대화를 위한 채소 시설현대화에 관한 경영·경제적 연구와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채소류 가격변동에 대응한 출하방안 연구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보전형 농업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축분뇨처리의 효율화방안 연구와 지역성장작목의 경영규모 확대 가능성 연구, 귀농농가의 경영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영관리의 전산화를 위해서 품목별 경영성과 표준진단 프로그램과 사과·배 영농조합법인 회계·판매·구매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매년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수익성을 조사분석하여 농가의 경영진단과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경영개선담당관실 농업연구사 황규석)

(7) 국제농업기술 협력 강화

농업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선진농업국의 연구기관과 대학, 국제농업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과 기술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제농업 연구기관에 상주연구원 추가 파견을 통한 품목별 전문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며, 선진농업국 대학과 관련연구기관에 첨단농업 기술개발을 위한 국외특별훈련을 내실화 할 계획이다. 국가간 협력사업을 활성화하여 선진농업국과 첨단농업기술정보를 교환 하고 연구원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농업기술을 향상시키며, 개도국 및 북방국가와 협력으로 유용 유전자원의 교류의 기술이전을 촉진시켜 우리 나라의 위상을 높히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신 선진 농업기술을 조기에 도입

하여 활용하고, 쟁점분야의 전문요원과 국제전문가를 양성하여 토론회 개최, 분야별 국제회의 참가를 통하여 우리 나라의 견해를 개진하고 대응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제협력담당관실 농촌지도관 안진곤
농촌지도사 정준용)

다. 농업기술 보급

(1) 새기술·정보의 신속한 제공

1998년도를 농업인 농촌지도소 방문의 해로 설정하고, 농업인이 농촌지도소의 지역농업개발센터를 통하여 기술개발, 경영상담, 전문기술 보급, 편의시설 제공 등을 활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새기술 실증시범포와 교육훈련시설 등 지도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과학영농기자재를 이용하여 농업인이 느끼는 애로기술을 해결하며 새로운 기술을 적극 보급하면서 한편, 경영상담실을 정보은행화하여 최신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모든 지도공무원을 분야별 전문상담 서비스요원화하여 농업인에게 만족을 주는 지도활동을 전개하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일선지도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은 주간·월간농사정보, 병해충발생정보, 농작물생육상황 등을 전산화하여 전국의 농촌지도소에 동시 제공하고, 국내외 농업관련 생산 및 유통정보를 수집하여 지도 자료화할 것이다. 또한 지방지도기관의 기술수요를 파악하여 적극 지원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농업과학기술지원단으로 편성하여 지방지도기관의 문제점과 애로기술을 현장에서 해결해 주는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지도기획과 농촌지도관 강주석
농촌지도사 김영수)

(2) 새기술 및 지역특화 시범사업

1998년도 기술보급사업의 중점 방향은 안전하고 절약하는 영농기술로 경제회생에 기여하고 농업인의 전문 경영능력배양과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두었다.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새기술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총 1,426개소(식량작물 6종 362개소, 소득작목 8종 247개소, 환경보전농업기술 10종 817개소, 농촌여성 일감갓기 1종 10개소)를 작목별 주재배지역과 집단사육지역을 중심으로 설치 운영함으로써 농업인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인근농가에 그 파급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지역특성에 알맞는 새소득작목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시험연구 결과로 정립된 새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여 생력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협업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기술집약형 선진농업 기술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써 1998년에 하우스 환경개선 124개소, 트랙터부착 작업기이용 과수재배 80개소, 인공배지 양액재배 36개소, 환경 자동조절 버섯생산 24개소, 고품질 돼지고기생산 16개소등 총 14종 362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382억원(국비 20%, 지방비 20%, 용자 40%, 자부담 20%)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로써 품질향상과 생력 기계화로 생산성 증대와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고, 생산물의 저장, 가공, 포장, 공동출하에 의한 부가가치 증대로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식량작물과 농촌지도관 조병관
농촌지도사 김동진)

(3) 품목별 농업인 교육을 통한 기술보급

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현장농업인의 육성을 위해 농촌진흥청과 도농촌진흥원, 시군 농촌지도소는 1,097천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관별로 영농기술, 농업기계, 농촌생활과학, 4-H회원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농업인이 높은 수준의 영농기술과 과학적인 생활기술의 습득은 물론 농산물 수출에 대한 적극적인 태세와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가) 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중앙단위에서 새기술 습득을 희망하는 농업인

861명을 대상으로 새로 연구개발된 기술 및 현장애로기술 중심의 전문교육을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핵심농업인 육성에 기여토록 할 예정이다.

(나) 전업농가 교육

21세기 농업과 농촌발전의 주역을 육성하기 위한 전업농 육성사업은 1998년에 선정된 7,419명(중앙 1,662명, 지방 5,757명)을 대상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품목별, 작형별 체계적인 전문기술과 경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밭작물 채소, 화훼, 특작분야는 중앙단위 연구소·시험장에서 2~3일간, 과수분야는 특화작목시험장·연구소에서 2일간, 쌀분야는 지방단위에서 2일간 교육할 예정이다.

(다) 선도개척농 경영교육

선도개척농으로서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품목별 전문기술교육을 통한 선도농업 실천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농업인 25명에 대해 2일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라) 선도농업경영체 교육

생산기술, 경영기법 등 모든 방면에서 가장 앞서가는 선도농업경영체로 선발된 20명에 대하여 일반농가와 법인경영체에 대한 발전모델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3일간 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마) 산업기능요원 교육

산업기능요원에 편입 예정인 농업인 예비후계자 844명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영농정착 추진을 위해, 각도 농촌진흥원에서는 3일간에 걸쳐 농정시책 및 정신교육과 전문영농기술 및 경영교육으로 미래 농촌의 주역 양성에 기여할 것이다.

(바) 신규 농업인후계자 교육

농업후계인력에 대하여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전문기술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1998년에 선정한 농업인후계자 및 사업승계자 7,969명을 시군 농촌지도소에서 2일간 교

육할 예정이다.

(사) 영농 공개강좌

KBS와 공동으로 해당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하여 전국의 교육희망 주산지역에서 5,000명을 대상으로 전문기술교육에 대한 공개강좌를 실시함으로써, 지역특화품목의 개발과 육성을 촉진하고 농업인의 품목별 전문기술을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아) 품목별 농업인 상설 교육

지역별 주력품목을 대상으로 품목별 조직농업인 중심의 상설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습활동 증진과 전문기술 및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군별 3개 이상의 품목을 선정하여 77,135명에게 품목별 생산 및 유통단계별로 연 4회에 걸쳐 상설교육할 계획이다.

(자) 새해 영농설계 교육

1~2월중 전국의 농업인 667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작목기술반, 생활개선반 등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주요 농산품목의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핵심기술을 선별 제시함으로써 농업인의 새해영농설계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차) 농업기계 교육훈련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중앙단위교육에서는 전국 농업기계교관 220명을 대상으로 새로 보급되는 기종의 취급조작과 정비수리 전문기술 등 신기종 농업기계교육을 1주일간 실시할 것이다. 또한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농업계 실과교사 150명을 대상으로 정비수리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후계기능인력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농업기계 정비기능사 1급 자격소지자 50명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원과 농민교육원이 주관하는 도단위교육에서는 기계화영농사 1,000명은 3주간, 일선 농촌지도사 302명은 1주간 심도있는 농기계 정비수리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의 기계화영농을 선도하는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농촌지도소 주관으로 실시하는 시군단위 교육에서는 이앙기, 관리기, 경운기 등 소형기종 구입농가 중심의 농업기계 실수요자 15,249명을 대상으로 포장작업과 고장이 많은 부분에 대한 점검정비요령 등을 다룰 것이다. 농촌부녀자의 영농역할 증대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농가 부녀자 5,166명에게 운전조작과 포장작업 위주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농촌 노동력 부족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도로주행형 기종 보유농가 11만 1,690명에게 주행중 안전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시군농촌지도소별로 작목별 전문지도사와 합동수리반을 편성하여 100회 이상 수리점에서 거리가 먼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농기계의 고장원인과 안전운행요령 중심으로 순회수리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기술연수와 농촌지도관 김진균
농촌지도사 김이기)

(4) 농가경영컨설팅 체계 구축

21세기 선진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쟁산업」, 「농업인=기업인」이라는 새로운 경영마인드와 농가경영관리기법이 필요함에 따라, 일반기업체의 경영혁신기법인 벤치마킹제를 농가 경영에 도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농가경영개선본부를 설치하여 일선의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농촌지도소는 농가경영개선센터를 설치하여 분야별 전문지도사를 중심으로 기초컨설팅을 실시하고, 도농촌진흥원에는 농가경영개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기초컨설팅으로는 해결이 곤란한 사항이나 더욱 전문적인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담수준별 컨설팅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와 같은 체계를 바탕으로 농가경영컨설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스스로 자기의 경영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표준진단표를 개발하여 농촌지도소에 보급할 계획이다. 농촌지도소는 자기경영체의 진단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진단표에 따라 경영진단을 하면, 알기 쉬운 그림형태의 진단결과와 함께 앞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할 사항을 처방하여

농가에 통보하게 된다.

따라서 처방서에 의한 농가의 경영혁신 노력과 농촌지도계통의 농사기술+경영기술+농업정책 등 종합적인 컨설팅을 통하여 합리적 농가경영 개선을 이룩함으로써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

(농촌진흥청 경영개선담당관실 농촌지도관 정호근)

라. 비용절감형 축산경영체계 구축

(1) 조사료생산 확대

1998년도 조사료 수요는 총 717만톤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목초와 사료작물 231만톤, 볏짚·산야초 294만톤, 수입조사료 39만톤을 공급하고, 부족분은 배합사료로 대체할 계획이다.

1998년 양질조사료 공급율은 총 조사료 공급량의 32%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 56%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로써 조사료와 농후사료의 공급비율을 정상수준이 되도록 하고, 사료비를 낮추기 위한 조사료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표 3-2-10> 1998년도 조사료 수급계획 (단위 : 천톤)

구 분		'97	'98	2001	2004	
수 요	한 육 우 용	5,990	5,585	5,795	5,409	
	낙 농 용	1,593	1,584	1,659	1,688	
	계(A)	7,583	7,169	7,454	7,097	
공 급	양 질 조사료	목 초	435	412	518	560
		사료작물	1,132	1,424	2,015	2,800
		답 리 작	352	475	518	640
		계(B)	1,919	2,311	3,051	4,000
	공급율 (B/A)	25%	32	41	56	
	수입 조사료	250	385	390	500	
	볏짚·산야초등	2,709	2,942	3,364	2,597	
	합 계 (C)	4,878	5,638	6,805	7,097	
부 족 량 (A-C)		2,705	1,531	649	0	

(가) 사료작물 재배이용 확대로 배합사료 절감

IMF사태에 따른 축산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사료작물 재배를 늘려 양질 조사료를 생산·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료포(田作)와 논뒷그루를 이용한 사료작물 재배를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평야의 벼 재배지대, 낙농지대 또는 한우개량단지과 같이 입지여건이 좋은 지역에 읍·면단위로 1개소씩(개소당 이용농가 10호, 재배면적 10ha 이상) 답리작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재배면적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조사료생산 확대를 위한 농가 지원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거 사료작물 재배, 볏짚 암모니아 처리, 생볏짚 곤포 사일리지, 초지조성, 농기계·장비 구입비 및 기반시설 등에 필요한 사업비 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 볏짚·농업부산물 등 부존자원 사료화

볏짚은 국내에서 가장 풍부한 사료자원이다. 그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수거기를 지원하고, 생볏짚 사일리지 일관기계화사업을 1998년에 도당 2~3개소씩 총 36개소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 성과를 보아,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에 대한 지원을 차츰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다) 우량 목초 및 사료작물종자 확보·공급

초지와 사료작물 재배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량 목초와 사료작물 종자를 적기에 확보하여, 재배농가에 공급하는 일이 중요하다. 국내산 청예용 옥수수종자는 종자공급소에서 신청을 받아 179톤을 1998년에 공급하고, 신품종인 수원 118호는 도입종보다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외국산 우량종자를 확보하기 위해 축협중앙회로 하여금 해외에서 매년 5,000톤을 계약생산하여 적기에 수입·공급하도록 하고, 종자공급 체계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지금까지 축협중앙회를 통해 목초와 사료작물종자를 공급받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대상농가에 대하여 종자대를 지원하고 있으나, 생산자협회나 단체를 통해 우량 종자를 공급받은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종자공급요령을 보완할 계획이다.

(라) 신규 초지조성과 기성초지 사후관리

신규 초지조성은 환경문제 등으로 인한 규제강화와 농촌인력부족 등으로 확대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개발 가능한 산지중 국공유지를 조사하여 희망하는 농가에 알선하고, 초지조성비를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조성된 초지는 전용을 가능한 억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생산성이 낮은 초지는 종자·비료 등 자재대를 지원하여 우량초지로 보완해 나갈 것이다.

(마) 조사료 생산의 기계화 촉진

조사료 생산의 기계화를 통해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인력난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조사료 기계화단지를 1996년까지 415개소를 육성하였다. 앞으로 600개소까지 육성할 목표로 매년 20~30개소에 대해 신규로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경영과 축산사무관 이상수)

(2) 남은 음식물의 사료화 시범사업 추진

남은 음식물의 사료화에 대한 합리적인 제조공정, 안전성확보, 사양 관리 기준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우선 축산기술연구소의 연구사업과 연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돼지 1,500두 이상을 사육하는 양축가로, 1일 10톤 이상 남은 음식물 원료확보가 가능한자 중에서 11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시범사업 추진방법은 남은 음식물의 사료화 제조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개소당 최대 3억원에서 연리 5%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하였다. 사료화 제조공정은 대상자가 임의로 선택하되 축산기술연구소와 남은음식물사료화연구회에서 기술지도를 받도록 하였다. 대상농가에 대한 사전 기술교육은 1998년 6월 12일에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실시하고, 농가에

사후관리 점검표를 작성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축산기술연구소가 현장 순회 지도를 하도록 조치하였다.

정부는 남은 음식물 사료화에 대한 합리적인 제조공정, 기자재 선택방법, 안전성 확보, 영양균일화 방법, 급여 방법, 경제성 분석 등에 대한 양축가 기술 지도지침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1999년부터 사업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축산경영과 축산사무관 이재용)

5. 농업정보화의 확대 추진

가. 농업정보화의 기반 마련

농업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농업인의 정보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1994년부터 추진하여 온 농림수산종합정보망을 확충함으로써 실질적인 농업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1998년 현재 농림부, 농촌진흥청,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13개 주요 기관간에 구축되어 있는 종합정보망을 산하기관과 단체 및 연구소 등으로 확충하여 2000년까지 50개 기관·단체를 연결할 예정이다.

1998년 현재 농림수산정보서비스(AFFIS)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112개 정보제공기관(IP)을 2000년까지 2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정보제공 대가를 지불하는 등 IP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도시지역에 비하여 열악한 여건에 처해 있는 농촌지역의 정보통신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전용 통신망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관단체에서 사용하는 전용통신망과 농촌지역에 농업정보를 제공하는 AFFIS망을 단일망으로 연동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전화회선으로 접속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통신망을 구축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도시소비자와 농축산물 전자상거래 등을 조기에 실현하고 농업정보화를 촉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 농업경영 및 유통의 정보화 촉진

(1) 이용자 편의위주로 농업정보 정비·체계화

기존의 기관별, 분야별 농업정보를 품목별로 종합하여 농업인의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위주의 농업정보 체계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1999년중 오이, 풋고추, 무, 배추, 한우 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전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2001년까지 10개 품목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수혜자인 농업인과 소비자의 정보이용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농업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각 기관단체의 DB를 검색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소재 안내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다. 이로써 어떤 기관단체나 민간기업이 보유하고 생산한 정보라도 농업인이나 소비자가 한번의 접속으로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는 사실전달 수준에 머물고 있는 농업정보서비스를 생산·출하조절 등 농업인의 영농·경영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종합된 정보서비스체계로 개선함을 뜻한다.

(2) 유통분야 정보화의 강화

새로운 유통형태인 전자상거래를 농축산물분야에 도입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주도로 농축산물코드 및 거래서식을 1988년에 표준화하여 그 기반을 구축하고, 농림수산정보센터내에 『CYBER장터』인 『직거래마당』과 『통합몰』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직거래마당』은 생산자, 유통업체 등의 정보 게시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몰』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을 소비자가 쉽게 찾아가서 가격 등을 비교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자체 쇼핑몰을 구축하고, 민간쇼핑몰도 농축산물

취급을 확대하도록 생산농민, 가공업체 등을 알선하거나 홍보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농협물류센타에서 센타와 소매점간 운용하고 있는 전자문서교환(EDI) 체제를 산지농협과 확대 실시하여 유통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단순가격 위주의 유통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실시간대로 제공함으로써, 생산자가 적기에 출하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통정보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3) 품목별 농업경영진단 소프트웨어(S/W) 개발과 보급

농업인 스스로가 경영상태를 분석·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S/W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1998년중 양돈분야의 S/W를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한 후, 2004년까지 시설원예 및 낙농 등 10개 주요품목을 대상으로 개발·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인 스스로가 농업용 S/W와 온라인 통신망을 활용하여 동일 품목의 다른 생산자의 경영상태를 분석함으로써 자기경영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벤치마킹)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갖추도록 추진할 것이다.

온라인 경영진단 S/W의 활용을 통하여 농가의 모든 자료를 품목별, 지역별로 통합관리·분석함으로써, 농업인은 신속하고 정확한 경영진단자료를 획득하고, 정책담당자는 구체적인 현장의 자료를 활용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다. 농업인의 정보이용능력 제고 및 정보문화의 확산

2004년까지 12만 농업인에 대해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1999년 이후 매년 15,000명 이상으로 교육인원을 확대하여 정보화마인드를 제고하고 이용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자금을 지원받는 농업인과 법인체는 정보화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추진하고 생산자조직이나 지자체 등이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의 컴퓨터와 정보통신 이용능력,

농업정보화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전문화해 나갈 계획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활용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정보화 마인드를 높이기 위한 기본교육부터 품목별·분야별로 영농활동과 경영에 실질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교육까지, 농업인이 자기능력과 여건에 맞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 교육기관간 체계적인 역할분담을 통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자체는 지역농업인 등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개별 기관단체는 자체임직원과 조합원등에 대하여 기본교육과 분야별 특화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전문기관에서는 기본교육 이수자에 대한 전문교육과 지자체등의 정보화교수요원 육성등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농업인이 정보기기와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동기를 유발시킴으로써 농업·농촌정보화를 생활화시키기 위하여 정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홍보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수사례발굴·보급, 표어·스티커보급등의 각종 이벤트를 활성화하고 농업인이 쉽게 접근가능한 인쇄매체(포스터, 팸플렛, 농업정보 소식지등)를 통한 홍보사업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보화진흥담당관실 서기관 김종천)

제 4 절 수출농업의 기틀구축

1. 수출여건과 전망

1998년도 농산물 수출은 돼지고기, 김치, 인삼류 등의 수출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19.1%가 늘어난 22억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표 3-2-11>

'98년도 농산물 수출전망

(단위 : 백만달러, %)

	'95	'96	'97	'98 (전망)	전년대비 증가율
국가 전체	125,058	129,715	136,164	147,500	8.3%
농림산물	1,747	1,829	1,847	2,200	19.1
농산물	1,087	1,164	1,190	1,364	14.6
축산물	156	260	318	436	37.2
임산물	504	405	339	400	18.0

주 : 수출전망 추계 : 국가전체(통상산업부), 농축산물(농림부), 임산물(산림청)
 자료 : 농림부 국제농업국

일반적으로 우리 농산물은 해외농산물에 비해 생산가격이 높고 품질경쟁력이 낮은 실정이다. 수출되고 있는 농산물의 경우에도 국내수급과 가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출물량 공급과 수출선유지·확보가 향후 수출확대의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WTO 체제의 출범이후 국내생산기반 정비등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해외시장개척 활동에 힘입어 수출확대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특히 IMF체제하에서 국내수요부진을 수출로 돌파하기 위해 생산농업인, 수출업체, 정부가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그만큼 수출여건도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 농산물 수출진흥대책 추진

국민의 정부에서는 기존의 비용절감 접근방식 뿐만 아니라, 시장성·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농산물의 등류별 경쟁력 실태를 재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선농산물의 대일수출확대를 포함한 수출농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또한 사업추진방식, 지원내용 등에 대한 기존의 수출확대대책을 개선·보완하여, 품목별 수출목표설정 및 목표관리제를 운영하여 나갈 계획이다.

가. 국내 소비안정에 기반을 둔 수출규격품의 생산지도 강화

화훼, 과실 등을 중심으로 현재 72개소의 수출전문생산단지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나 단지조성시에만 우선 지원될 뿐 지속지원 등 수출에 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1998년까지 조성하기로 한 88개 수출전문생산단지에 대해서는 품종선택에서 재배, 생산시설, 선별 포장, 가공저장시설에 이르기까지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생산된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수출농산물의 구매자금과 포장자재비, 운송비, 디자인 개발비 등의 자금지원도 늘려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돼지고기, 김치, 배, 백합 등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20대 수출전략품목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등 9개 기관에 전담연구팀을 설치·운영하여, 품질향상을 촉진시키고 생산·유통자금 등을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키위, 호접란, 파프리카 등 신규수출가능품목도 추가로 발굴하여 생산·유통기반 확충 등 수출지원시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나. 농산물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체제를 대폭 강화

1996년부터 설치 운영중인 『수출애로 상담실』을 더욱 확대·설치(동검, 농업진흥청, 산림청)하여 생산자와 수출업체가 품종선택, 재배, 포장, 가공, 수송 등 생산·수출과정에서 겪는 현장애로 요인을 분석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해소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1998년에는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농산물 무역확대 대책회의』를 신설하여 연 2회 개최함으로써 월별 수출동향과 대책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요인 해소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동회의시 해외시장개척과 수출증대에 공로가 많은 생산농업인과 수출업체에 대하여는 『농림산물 수출탑』과 포상을 확대 실시하고 수상자에게는 자금지원 등 각종 정부지원에 있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수출전담기관으로 개편하여 정보, 자금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며, 수출검역, 통관, 선적 등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전자문서교환(EDI) 지원체계 구축과 함께 수출전략품에 대한 『주문정보서비스제도』, 팩스신문(농수산물 수출입 뉴스), Green Bell Service 등을 통해 생산자, 수출업체 및 해외바이어가 원하는 국내·외 시장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수산물무역진흥센터 건립을 1998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01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국제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등 각종 농업관련 대규모 전시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농수산물의 판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 바이어 상담, 자금지원, 무역정보 제공 등 수출입과 관련해 수출입 종합지원 기능(one-stop 서비스체제)을 수행하고, WTO 개방체제 하에서 선진농업국가건설을 위해 공세적 수출농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다. 수출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와 해외시장 개척활동 강화

농산물 수출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기 위하여 수출농산물 구매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보험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격상승 위험품목의 확대, 보험요율 인하 및 보험보상비율 인상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장개척사업은 우리 식품에 대한 잠재수요를 발굴하고 식품문화를 전파하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참가비용지원을 통해 농산물 수출업체의 국제유명박람회(1998년: 14회) 참가를 유도하고 전시·홍보·수출상담 등으로 우리 식품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려 신규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이다. 특히, 일본, 홍콩 등 주요 수출국에 대해서는 특별기획전, 시식회, 간담회 등 각종 이벤트 행사와 병행하여 해외판촉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동경, 홍콩 등지는 옥외 전광판을 설치하여 인삼, 김치, 돼지고기 등 주요 수출상품을 소개하고, 국제전문지 광고게재, 홍보용 VTR 제작·배포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전시회도 상시 개최할 계획이다. 동경, 뉴욕 등 해외 주요 수출시장에 설치·운영중인 6개의 해외 농업무역관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현지적응상품 개발, 주요 전통품목 전시·홍보, 이벤트행사 개최 및 일일사무소 제공, 수출 안내 등 수출지원기능을 전담해 나갈 것이다.

(무역진흥과 사무관 남동익, 운동진)

3. 수입관리대책

가. 1997년도 평가

1997년 7월 1일부터 농산물 37개 품목이 추가로 개방됨에 따라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되었으나, 초기의 시장선점을 위한 일부 물량의 집중 이외에는 큰 영향 없이 정착되고 있다. 농림산물 전체의 수입은 1996년에 109억달러에서 1997년에 102억달러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수입내역을 보면, 옥수수 등 사료용 곡물과 목재류 등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수입한 것이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시장수요에 따른 불요불급한 품목의 수입은 전체의 35%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 3-2-12>

1997년 농림수산물 수입현황

(단위 : 억달러)

총수입액	불가피한 수입					기 타
	사료용곡물	목재류	사탕수수당 제분용 밀	사료곡물제외한 시장접근물량	계	
102	23	23	8.7	11	65.7	36.3

자료 : 농림부 국제농업국

이러한 결과는 국내외 가격차만큼 고율관세의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등 적절한 보호장치를 한 뒤에 농림산물이 개방되었고, 우리 농림산물의 경쟁력이 그 동안의 시책에 힘입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WTO협정에 따라 개방된 품목의 관세율이 연차적으로 하락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세율 하락 이상으로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표 3-2-13>

농축산물 개방 일정표

	개방품목수	주요 품목	수입자유화율
'94말까지	1,178	바나나, 배, 키위, 유채 등	83.1%
'95. 1. 1	166	보리, 옥수수, 대두, 고추, 마늘, 참깨 등	94.6
'96. 1. 1	2	포도, 사과주스	94.8
'96. 7. 1	13	버터, 연유, 유당, 인조꿀, 누에고치 등	95.7
'97. 7. 1	37	돼지고기, 닭고기, 오렌지, 감귤 등	98.3
2001. 1. 1	8	소, 쇠고기 등	98.9
잔여품목	16	쌀 관련품목	98.9
계	1,420		

자료 : 농림부 국제농업국

나. 1998년도 수입관리 대책

(1) 시장접근물량의 적절한 수입관리 추진

WTO협정 내용과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쌀, 쇠고기, 고추, 마늘 등 83개 주요품목은 국영무역 형태로, 탈지분유, 전지분유 등 16개 품목은 수입권공매방식으로 수입하여 그 이익금을 농업투자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내 생산시기를 감안하여 수입시기를 조절하는 등 시장접근물량의 적절한 수입관리로 국내농업 보호와 WTO협정 이행을 동시에 조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2) 관련법상 각종제도의 적극 활용

저가 농산물의 수입증가로 생산기반이 취약한 국내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무, 당면, 표고버섯 등 13개 품목에 대한 조정관세 부과로 관세율을 인상할 것이다(표고버섯 : 30% → 90%). WTO 이후 신규 개방품목의 수입 급증에 대응하여 낙화생, 메밀, 녹두, 고구마, 감자 등 60개 품목의 수입량이 기준물량을 초과할 때에는 특별긴급관세제도를 발동하여 추가관세를 부과하도록 할 것이다. 낙화생, 메밀 등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가격이 낮

을 경우에도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수입급증으로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는 무역위원회에 산업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등 국내 관련법상의 각종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3) 원산지표시제 실시 및 단속강화

저가의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위장되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산(175개), 국내산(148개) 및 가공품(105개)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및 위장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수입농산물의 국내 유통질서 및 차별화를 확립하도록 할 것이다.

(4) 동·식물검역기능 강화

WTO출범에 따른 검역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제2단계 동·식물검역기능 강화계획(1996~1998)을 수립하여, 2000년대의 선진검역 검사체제를 확보하도록 강구하고 외래병해충 유입을 막아 국내농업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무역진흥과 농업사무관 조일호)

제 5 절 국내 부존자원을 활용한 저투입 친환경농업 육성

1. 축산분뇨의 자원화와 Recycle(유기질비료화)

'98년도에는 축산분뇨처리의 해결없이는 더 이상의 축산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각오아래 축산분뇨의 자원화시책을 더욱 촉진시켜 나가고 있다. 이를위해 '97년보다 7.9% 증가한 1,375억원의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예산을 투입하여 규제대상 이상의 대부분 농가에 시설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설치된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과 가동을 위하여 1,500명에게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우수처리농가의 발굴·홍보와 기술상담 실시, 시설설치업체의 시공능력 홍보, 품질보증 및 사후책임봉사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축분비료 생산시 수분조절재로 쓰이는 톱밥, 왕겨 등의 확대 공급을 위하여 톱밥제조시설 10개소, 왕겨 팽연화시설 20개소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산림사업 현장에서 간벌목 등을 활용한 톱밥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동식 톱밥제조기(8대)의 구매·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축분비료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축분비료 200천톤(100억원)에 대한 차손보전사업을 실시하고, 우수축분퇴비 생산업체를 지정·홍보하여 축분비료의 품질향상을 기해나가고 있다.

'9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축산분뇨 자원화 및 이용기술개발연구사업의 조기 실용화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더 이상 축산분뇨는 환경오염원이 아닌 귀중한 자원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자원화연구 및 논리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축산정책과 사무관 박상윤)

2. 국내부존자원을 활용한 저투입 친환경농업육성

'98년에도 국내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입농자재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최소화하여 농업환경을 유지·개량하는 한편 모든 농업 관련 활동이 환경친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환경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유도할 수 있는 시책 및 제도를 개발하여 영농주체인 농업인들이 환경농업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가 만족하는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안전농산물을 생산·공급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원 경감

농약의 경우 병해충종합관리(IPM)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병해충 예찰주기를 단축하는 등 적기에 병해충 방제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한편, 농약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생물학적 병해충방제기술의 개발과 환경친화형

농약의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농약사용량을 줄여 나가고자 한다. 또한, 화학비료의 경우에는 토양정밀검정을 통한 적정 시비 등 작물양분종합관리(INM) 사업을 추진하고, 작물별 시비기준을 확대 설정하여 비료의 적정사용을 유도하며, 환경친화형 비료 및 유기질비료의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IPM·INM기술을 실천하는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99년부터는 IPM·INM기술을 마을단위로 실천하는 시범지역을 선정·지원하여 앞으로 이들 기술이 조속히 확산·정착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분뇨의 경우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및 자원화기술 개발, 축분퇴비의 수요처 개발 등 축산분뇨처리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나. 농업환경의 유지·개량

농경지의 지력증진을 위해 규산·석회의 공급량을 확대하여 '98년도에는 농경지를 6년1주기로 개량해 나가고 2000년부터는 공급주기가 4년 1주기로 단축되도록 추진해 나가며, 저위 생산논등에 대한 재토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현재 민간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흙살리기 운동」과 「푸른들가꾸기 운동」을 적극 지원하여 화학비료·농약의 과다사용을 방지하고 사료작물이나 녹비작물 재배를 통하여 조사료의 자급기반을 확충하면서 지력을 높여 환경농업의 기틀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흙살리기 운동은 농경지에 대한 토양진단을 실시하여 부족한 성분만을 시비토록함으로써 작물의 건전한 성장과 토양중에 비료성분이 과다하게 집적되는 것을 방지하여 토양을 튼튼하게 하는 운동으로서, 이를 위해 지금까지 3,040대의 간이 토양검정기를 공급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공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반면에 푸른들가꾸기 운동은 겨울철 노는땅에 호밀등의 사료작물과 자운영등의 녹비작물을 심고 여름철에는 퇴비를 생산함으로써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배합사료를 국내에서 생산된 조사료로 대체해 나가고 토양유기물 함량을 높여 지력을 증진시킴으로써 그 동안 수입농자재에 주로 의존해온 우리농업을 국내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고자 한다. 이 운동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사료작물 69천ha, 자운영 4천ha를 파종할 계획이다.

푸른들가꾸기운동은 겨울철에 방치되어 있던 땅을 활용하게 됨에 따라 토지생산성을 높임은 물론 토양침식으로 인한 지력약화도 막을 수 있으며, 겨울철 동안 농촌의 경관도 좋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농업용수의 수질개선을 위해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을 1997년 175개소에서 1998년에는 200개소로 확충하고, 오염우려 용수원에 대한 종합적인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업용수 수질개선공법 연구를 1999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 환경농업실천농가 육성

1998년도에는 중소농고품질농산물 생산단지 80개소와 환경농업지구 5개소를 조성하여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가 농업환경을 유지·개량하면서 환경농산물을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고, 토착 환경농업기술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환경농업기술체계를 정립하는 등 환경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하며, 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 확대 설치 및 환경농산물 구매자금 확대 지원 등 환경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시키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라. 환경농업육성제도 완비

1997년도에 제정된 환경농업육성법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하여 환경농산물 표시제도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농업과 농업사무관 김희열)

제 6 절 농업인 소득지원과 복지지원 강화

1. 직접지불제의 단계적 도입

UR 타결이후 전세계적인 농정의 기조는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종래의 가격지지 및 수출보조 정책 등과 같은 정책은 연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신 정부가 시장기능을 통하지 않고, 즉 시장을 왜곡하지 않고 재정에 의하여 농가에 직접 소득보조를 하는 정책을 허용보조로 분류되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직접지불정책은 EU를 중심으로 1970년대 중반부터 도입되어 왔으나 UR 타결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1996년 농업법(Farm Bill)을 개정하면서 종래의 부족분지불제(Deficiency payment)를 폐지하고 「생산탄력계약지불제(Product Flexibility Contract Payment)」를 도입하는 등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였고, 일본도 1998년부터 도작경영안정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직접지불제를 도입하기 위한 검토가 행해졌다. 그 결과 1997년부터 고령농가의 경영안정과 전업농 등의 경영규모확대를 위하여 「규모화촉진직접지불제」를 실시하였고, 이를 위해 1995년 제정된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및 시행규칙을 1997년 2월에 제정하였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강조되고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는 시점에 비추어 1999년부터 친환경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현재 실무작업단을 구성하여 시행규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한편 이와 아울러 직접지불제의 확대 도입을 위하여 농촌경제연구원을 중심으로 조건불리지역·환경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농업정책과 사무관 이천일)

2. 농가경영안정대책 추진

IMF 경제위기아래 농자재 가격상승과 이자비용 증가 및 농산물 소비 감소로 농업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 가운데 농가부담 경감은 대선 공약사항으로써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축산 및 시설원에 농가의 정책자금 상환(5,752억원)을 3~9개월 유예 조치하였으며 저리의 농업·축산경영자금을 지난해보다 6,500억원이 늘어난 4조4,700억원을 확보·공급하였다. 이와 함께 11조 2,842억원에 달하는 농특회계와 농·축산경영자금이 조달금리 상승으로 3.5%P의 금리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1,79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이 가운데 2%P를 인하 조치하였다. 또한 농안기금, 축발기금 등 6조 1,619억원에 달하는 농림부소관 기금에서 지원되는 각종 농업자금은 조달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같은 금리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농·축협도 농가부채 경감조치에 동참하여 금년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상호금융자금(6조원)을 6~12개월 연기 또는 대환조치하고, 이미 연체된 상호금융자금(3조 5천억원)에 대해서도 연체이자의 징수를 6~12개월 유예하기로 조치하였다

앞으로 농가부채대책은 농민단체장, 학계, 생산자 단체가 참여한 「농가부채대책위원회」의 논의를 기초로 수립하되 '98하반기, '99년간 상환도래하는 정책자금중 IMF로 특히 어려운 사업을 선별하여 2년간 상환유예하고 상호금융은 협동조합의 책임하에 상환유예 및 이자율 인하를 강구토록 유도해 나가고자 한다.

금번 대책에서는 엄밀한 경영평가를 통하여 노력하였으나 외부요인에 의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옥·석을 가려 선별지원하고 자금유용자 및 회생불능자는 지원에서 제외하며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신규자금지원을 배제하는등 도덕적 해이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금융과 사무관 안형준)

3. 농어촌교육·의료 등 복지지원 강화

가.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

(1) 농어촌 초·중·고교 학교급식 확대

(가) 초등학교 학교급식 전면 실시

농어업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의 체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학교급식제도를 통해, 1997년도까지 3,321개교에 급식시설 설치를 완료하였다. 1998년도에도 신설학교 34개교에 급식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농어업인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급식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표 3-2-14> 1998년도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 현황

구 분	도서벽지형	농어촌형	도시형	계
학 생 수(명)	75,098	528,457	17,599	621,154
예산액(백만원)	8,240	19,018	2,831	30,089

자료 : 교육부 학교보건환경과

(나) 농어촌지역 중·고교까지 의무급식 확대와 학부모 부담경감

신체발달이 왕성한 중·고등학생들에게 따뜻하고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유지·증진 및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게 하며, 학부모의 도시락 부담을 덜어주는 학교급식은 전면 실시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등학교 급식확대를 추진하여 1998년중 70% 이상, 1999년 전반기까지 100% 완료를 목표로 관련부처간에 재원마련 등을 위한 협의가 진행중이며, 중학교급식은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2002년까지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 중학교 급식실시 현황

- 도지역 : 전체 1,850교중 414교 실시(22.4%)
- 전 국 : 전체 2,720교중 447교 실시(16.4%)

※ 고등학교 급식실시 현황

- 도지역 : 전체 1,228교중 315교 실시(25.7%)
- 전 국 : 전체 1,921교중 407교 실시(21.2%)

(2) 농어촌학교 정보화 교육시스템 구축

정보화 사회에서 농어촌출신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농어촌학교의 정보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교단선진화사업계획」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하여 1998년도에 66,000학급에 1,98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모든 학급에 586PC 및 VCR, TV 등 첨단 시청각 장비 보강에 투입되어 도·농간 교육여건의 균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기타 농어촌지역 교육·문화여건 개선

농어촌학교의 노후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1997~2000년까지 1조원을 투자하는 「농어촌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해, 1998년도에 2,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농어촌학생과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정보·지식 습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추진중인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 1998년도중 7개관에 50억원의 건립비와 10억원의 자료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노후교실 개축, 각종 학습관련 자료 및 시설 확충을 통한 「농어촌 우수고교 육성사업」과 난방·정보·문화시설을 등을 확충하는 「농어촌현대화시범학교건립계획」의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 농어촌학생 대학입학기회 확대

1996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된 농어촌학생 대학특별전형 입학제도는 농어업인이 피부로 실감하는 농정개혁의 하나로 정착되어 가면서 농어촌사회의 활력 증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8학년도에는 전국 344개 대학중 315개 대학이 농어촌학생에게 특별전형을 실시하였으며, 17,508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3-2-15>

1998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현황

(단위 : 개교, 명)

구 분	실 시 대 학		모 집 정 원		합 격 생 수	
		미 실시대학		비율(%)		비율(%)
계	315	29	18,610	2.8	17,508	94.1
일반대학	163	23	9,568	2.8	9,161	95.7
전문대학	152	6	9,042	2.9	8,347	92.3

자료 :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

(5) 농어업인 자녀교육비 부담경감사업 추진

농어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실업계 고교생 학자금 지원,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농어촌 출신 학생을 위한 기숙사 건립,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새마을장학금 지원 등의 사업을 1998년에도 계속 시행할 계획이다. 1998년도 사업별 투자규모는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103천명에게 663억원, 대학생 학자금 융자가 2만명에게 200억원, 자영농과생 급식비는 2,051명에게 13억원, 새마을장학금은 3,000명에게 5억원을 지원하고, 농어업인 자녀의 하숙비 부담경감을 위해 기숙사 건립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정책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서극수)

나. 농어업인연금제의 내실화

1998년 2월 현재 농어촌지역의 연금가입자는 206만명(농어업인 97만명, 비농어업인 62만명, 납부예정자 47만명)으로 94.3%에 해당되어 정착단계에 도달하고 있다. 미가입자는 대상자의 5.7%인 13만명으로 그 대부분이 비농업인이다.

앞으로 농어업인연금의 성공적인 정착과 내실화를 위하여 보험료 납부제도 개선, 「효도연금보내기운동」 등을 사회운동 차원에서 전개하고, 연금수급사례 등을 집중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연금보험료 장기체납자 일

소를 위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확대하고, 도시지역까지 연금제도 확대 시행에 대비하여 늘어나는 연금관리직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어가마다 방문을 통한 이해·설득 노력과 계몽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다. 농어촌 의료환경 개선

(1)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의료기반이 취약한 농어촌지역의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활권역 별 민간병원을 지역중심병원으로 집중 육성하는 등 1998년중에 80개소의 병·의원에 200억원을 용자할 계획이다. 진료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145개소의 시설과 장비 개선에 429억원을 지원하는 등 농특세 재원 629억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지속 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2) 의료보험료 부담경감과 급여 확대

지역조합의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공동사업은 노인의료비·고액진료비를 직장·공교·지역조합이 공동부담하는 조합간 재정조정사업으로 1998년중 농어촌조합에 총 1,077억원의 지원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보험급여비 국고지원 예산의 일정액을 소득수준과 노인인구비율 등을 산정하여 농어촌지역에 유리하게 차등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의료보험료 부담을 줄여나가는 국고차등지원사업의 추진으로 1,182억원을 농어촌조합에 추가 지원하게 된다.

그밖에도 농어촌주민에 대한 정기적 건강진단 실시, 노인 단독세대에 대하여 보험료의 50% 감면, 노인의 의원급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을 3,200원(치과 3,700원)에서 2,100원으로 경감, 65세 이상 노인의 연중 보험급여 실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어촌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고 공중보건한의사 제도를 도입하여 노인 등 농어촌주민에게 한방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농어촌인구

의 노령화에 따른 만성퇴행성질환 증가에 대비하여 물리치료실 등을 확충하고, 의료보험 연간적용기간을 1997년 270일에서 1998년에는 300일로 연장하여 시행하며, 2000년부터는 연중급여를 실시할 계획이다.

(3) 의료보험 조직의 통합관리를 위한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가) 조합방식의 실상과 문제점

현재의 소규모 조합운영방식은 직종별·지역별 재정력 격차를 크게 하고 위험분산이나 규모의 경제성 면에서 취약해 조합 운영난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직장 취업과, 퇴직, 거주지 이동 등 자격변동에 따른 조합간 자격관리의 연계성 문제가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누락자와 이중자격자 등도 생겨나, 의료보험의 질서가 문란해져 의료보험조합 통합이 사회 문제화되었다.

(나) 의료보험조직의 통합을 위한 각계의 노력

정부는 이러한 관리 운영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조합의 재정 안정화와 농어업인 등 피보험자의 의료보험료 부담경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의료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보험 관리조직을 시·도별 조합으로 통합하는 방식과 지역조합을 모두 하나로 통합하는 방식 등 몇 가지 방안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비롯한 각 정당에서도 각급 사회단체 등 국민여론을 반영하여 농어촌 의료보험 관리체계 개선과 보험료 부담경감 대책 마련을 위하여, 나름대로 통합의료보험법안 마련을 추진해 왔다.

(다) 「국민의료보험법」 제정과 통합의 기대효과

그 결과, 전국의 227개 지역 의료보험조합을 통합 일원화하고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과 관리 및 운영을 통합하는 「국민의료보험법」이 1997년 11월 18일 제185회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상정되어 가결되고, 1997년 12월 31일 공포되어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현재 통합법안의 시행을 위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설립위원회』를 설치하여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료보험법의 시행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국민의 편익은 우선 시·군조합간 장벽이 사라졌으므로 보험종 없이도 주민등록 신고에 의해 관리될 수 있으며, 여행이나 출장 중 어느 곳에서라도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보험진료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의료보험료의 징수관리가 전산화되면 자격관리 누락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개정법안의 시행은 의료보험제도에 있어 상당한 발전과 국민편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의료보험료 등의 부담경감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라. 농촌생활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98년에는 농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능력있는 농촌여성 육성을 위한 과학적 생활기술 보급을 목표로 농가주거환경개선,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농작업환경개선, 농촌여성 일감갓기 등의 주요사업과 생활개선회 육성, 특색있는 농촌생활문화 조성, 농촌여성생활과학 기술교육, 농업인 영양개선 및 한국형 식생활 정착지도 등을 전개해 갈 계획이다.

농업인들의 건강한 농업노동 수행과 농촌생활의 활력증진을 위해 '98년에는 102개소에 51억원(개소당 50백만원, 국비·지방비 50%)를 들여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고, 162개소의 농작업환경개선 시범마을을 육성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올바른 노동관리와 농부중 예방에 주력하고자 한다.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금 280억원을 지원하여 8,000호에 부엌과 목욕실을 개량하거나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급탕기를 설치할 것이며, 이외에도 농촌 생활공간의 편이화를 위한 농업인의 요구에 걸맞는 과제를 발굴·확대해 갈 것이다.

농촌여성들의 경제력 향상에 대한 욕구를 농외소득활동과 연계·발전시킴으로서 자긍심과 농촌정착의지를 고취시키고, 농가경제에도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농촌여성 일감갓기사업을 신규로 국비지원 10개소, 지방비지원 43개소를 육성하고, 기존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품질향상과 포장개선, 판로

확보 등으로 우수한 상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다. 특히 올해는 소비자단체를 초청한 일감제품 설명회와 일감갓기사업장 현장 견학의 기회를 통해 일감제품의 도농간 직거래의 확대와 농·소·정 협력체제 구축에 주력할 것이다.

한편 농업인들이 모범이 되어 국가의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역의 생활개선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학습단체인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근검절약 및 저축의 생활화를 확산시킬 것이다.

제2차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109개소에 대해서는 2년간의 여건조성을 바탕으로 노인들의 역할을 활성화하고 보람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무리 지도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농산물 애용과 한국형 식생활문화의 정착 지도, 우리 콩으로 담근 간장·된장 보급(도시소비자 1,500가구), 향토음식연구회 육성, 농업인 영양개선 등의 식생활 개선, 지역에서 전승되는 유·무형의 전통문화 발굴과 건전한 생활문화 보급 등을 추진하며, 생활개선사업 과제를 종합적으로 투입하는 생활개선시범마을을 제6차로 1,380마을 선정하여 3년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6만3천여 생활개선 회원들을 농촌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주도할 선도실천자로 육성할 것이며, 과학적 생활기술 보급을 위한 생활과학기술교육을 20만명에게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생활개선과 생활지도관 임평자)

4. 여성농업인의 역할제고 및 권익신장

가. 추진배경

'70년대 산업화과정에서 농촌청장년층이 농촌을 떠남에 따라 농촌여성의 영농참여가 급격히 증가하고 농업생산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96년말 현재 전체 농가인구의 51.8%와 전체농업종사자의 51.1%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표 3-2-16>

농가인구 및 농업종사자중 여성비율 추이

(단위: 천명)

	'70		'80		'90		'95		'96		'97	
	농가 인구	농업 종사자	농가 인구	농업 종사자	농가 인구	농업 종사자	농가 인구	농업 종사자	농가 인구	농업 종사자	농가 인구	농업 종사자
전체	14,422	7,497	10,827	6,641	6,661	4,240	4,851	3,294	4,692	3,419	4,468	3,265
남성 (%)	7,164 (49.7)	3,666 (48.9)	5,415 (50.0)	3,331 (50.2)	3,279 (49.2)	2,123 (50.1)	2,373 (48.9)	1,633 (49.6)	2,263 (48.2)	1,673 (48.9)	2,149 (48.1)	1,604 (49)
여성 (%)	7,258 (50.3)	3,831 (51.1)	5,412 (50.0)	3,310 (49.8)	3,383 (50.8)	2,117 (49.9)	2,478 (51.1)	1,661 (50.4)	2,429 (51.8)	1,746 (51.1)	2,319 (51.9)	1,661 (51)

자료 : 농림부 농업총조사 1998년

이와같이 농촌여성이 농업의 주요인력으로 성장함에 따라 '98년 2월에는 농촌여성 전담부서로 종전의 농촌인력과 여성계를 확대·개편하여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주요정책내용

여성농업인 역할제고 및 권익신장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의 전문경영인력화,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정비 및 여성차별 철폐를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을 전문경영인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여성이 농업인후계자로 신청하는 경우 50점을 가산하고, 동점일 경우 20%의 범위내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표 3-2-17>

연도별 여성농업인 후계자 육성 실적

(단위: 명, %)

연도별	'92	'93	'94	'95	'96	'97	'98
후계자수	9,000	9,000	8,340	9,730	8,227	8,256	7,837
여성수	213	267	442	595	707	823	1,011
비율(%)	2.4	3.0	5.3	6.1	8.6	9.7	12.9

자료 : 농림부 농업정책국

또한 여성농업인을 위한 전산교육 등 각종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 등 지역협의체에 연도별 여성참여 최소목표율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 농협에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복수조합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여성의 가입을 촉진하고, 여성대의원, 여성이사·감사로서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직능제 도입 등 여러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여성차별 철폐를 위해서는 먼저 농촌사회의 남녀간의 역할분담에 관한 의식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양성평등에 관한 계몽자료를 개발하여 이를 교육자료로 널리 활용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농촌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육시설의 확충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위와 같은 제반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시·도 및 시·군의 여성농업인 담당부서의 일원화 등 추진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여성정책담당관실 사무관 한종현)

5. 농어촌의 생활환경개선

가. 정주생활권개발사업 지속추진

1990년대 이후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투자의 성과로 농업생산성 향상 등으로 소득수준은 상당히 높아졌으며 생활환경개선부문도 1990년도 이후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왔으나 아직도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은 도시에 비하여 열악한 실정이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1998년에도 총 2,938억원(국고보조 68, 지방양여금 1,383, 지방비 592, 국고융자 894)을 투융자하여 일반정주권개발사업으로 252개면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60개면을 완료,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마을기반시설 55개 지구를 추진하여 21개 지구를 완료할 계획이며,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신·개축 및 개량 등 주택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마을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문화마을의 기반시설이 완료된 지구에 대하여 농어촌 생활환경개선과 수질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을하수처리시설 27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나. 시행체계개선 및 주민참여 확대

그간에 추진되어온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이 주로 관주도로 추진되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었으나 앞으로는 정주권개발 및 문화마을조성 등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주민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어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주민합의에 기초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할 계획이며,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중심생활권을 중심으로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문화마을조성사업도 주택용지조성 후 분양에 따른 입주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외지인의 유입 등으로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의 참여가 저조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규주택용지조성 방식을 탈피하여 지역특성에 맞고, 농촌지역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존의 중심마을을 현대식으로 정비하여 현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에게 최대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다. 다양한 농어촌주택표준모델 개발·보급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주택개량시 건축설계에 소요되는 설계비 등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995년도와 1997년도에 28개의 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를 개발·보급하였으며, 앞으로 주민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농촌지역에 적합한 가변성을 수용한 다양한 농어촌 주택표준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여 주민이 주택건축시 편리하도록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촌정비과 사무관 김주호)

6. 농업재해농가 지원강화

그 동안 수해나 가뭄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복구의 기준이 되는 복구비용단가를 현실화하고, 농지소유 규모 및 피해율에 따라 정한 복구지원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하여 왔으나, 복구지원을 받을 피해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지원은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업재해를 입은 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복구지원기준단가의 인상과 일부 영세농가(2ha)에 편중되어 있는 복구지원 대상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금년에는 피해농가의 복구비용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복구지원기준단가 중 농약대 36.1%, 대파대 7.8%, 초지복구비 5.4~9.2%를 인상하여 조금이나마 피해농가에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복구지원대상은 현행 농지소유규모가 2ha미만의 영세농가로서 3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이재민구호, 생계지원, 중·고생 학자금면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경작규모가 큰 농가는 영농에 투자하는 비용이 많고 농작물 소득에 의존율이 높아 피해발생시 농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실정으로 재해 때마다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앙정부에 복구지원기준 상향조정을 여러 차례 요구해 온 바 있다.

이에 지원대상 농지소유규모 2ha미만의 상한을 없애고 자연재해를 입은 2ha이상 농가도 이재민구호, 생계지원, 중·고생 학자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하여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 관한규정」을 개정하는 등 지원대상 범위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산정책과 식물검역사무관 김후동)

제 7 절 농정추진체계의 개편

1. 농업인·소비자·정부의 협조체제 강화

국민의 정부출범이후 농림부는 농업정책의 입안단계부터 집행단계까지 농업인과 소비자를 참여시키고, 농업인의 현장애로를 적극적으로 찾아 해결하며, 농림공직자의 의식개혁과 더불어 중앙단위 및 지방단위의 농정추진조직, 기능을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위주로 개편하는 참여농정, 현장농정, 봉사농정을 통하여 「열린농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농정개혁을 위한 농정개혁위원회, 유통개혁위원회, 협동조합개혁위원회에 농업인, 시민, 소비자단체 대표 등을 참여시키고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를 도입하였으며, 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간담회(1998. 3. 13), 농·소·정 원로회의(1998. 5. 29) 등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여론수렴을 위해 장관주재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으며, 양과, 축산물, 우유 등의 수급안정을 위해 농업인·소비자·유통인·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농·소·상·정」 유통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촉진 캠페인도 실시하였다.

한편, 농림부는 농업인에게 무한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농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농정추진 기관·단체의 조직과 기능을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기획예산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경우 민간과 결합되는 물류센터, 직판장 등을 매각하고 수출지원전담기관으로 개편한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조직인 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그동안 기관간의 기능중복으로 인한 비효율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바, 1단계로 '99년까지 3개 기관별로 자체구조조정을 먼저 실시한 후, 2단계는 2000. 1월까지 3개 기관을 통합한 가칭 「농업기반공사」를 설립하여 생산기반 확충·관리 및 구조개선 전담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농업정책과 사무관 이상훈)

2. 현장농정의 실천

농림부는 농촌현장으로 찾아가 농업인의 애로를 적극 해결해주는 「현장농정」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현장농정의 일환으로 장관이 주말을 활용하여 직접 농촌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지도와 농업인의 민원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해 주고 농정시책에도 반영하는 「이동장관실」을 운영하여 농업인 및 언론으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동장관실」 운영은 1998년 3월 8일 한우농가가 밀집된 경기도 안성지역을 시작으로 1998년 8월 23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총 46회를 운영하였다. 건의사항 315건중 119건을 현장에서 해결하고, 84건은 검토후 1주일내 조치하였으며, 불가사항(32건)은 현장에서 즉시 통보하고 지역숙원사업 지원요구 등 예산수반사항(80건)은 내년도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검토, 조치할 계획이다.

「이동장관실」 운영으로 정부와 지자체, 농업인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노력하자는 데 대해 상호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실·국장 등 실무공무원들의 현장감각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와 함께 장관의 업무부담이 과중하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농림부는 「이동장관실」 운영을 몇회 더 운영한 후 종료하고, 그대신 「이동농정실」을 운영하여 차관·차관보·기획관리실장이 차례로 현장을 방문하여 여론수렴과 농업인과의 대화 및 애로해결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업인·농업인 단체 대표등을 1일 명예장관에 위촉하여 농정의 이해도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일일명예장관제」를 7. 22부터 월 2회 시행함으로써 현장농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농업정책과 사무관 이상훈)

3. 농림사업 투융자방식 개선

앞으로 농업인 개인에 대한 소득지원사업은 자생력 강화차원에서 단계적

으로 보조를 줄이고 저리용자사업으로 전환해 나가는 한편, 보조는 원칙적으로 생산·유통기반시설 등 농업SOC성격의 공공사업과 환경농업실천사업 등 외부효과가 큰 사업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농업인과 법인경영체에 대한 보조는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용자로 전환해 나가고 생산자조직 및 생산자 단체에 대한 보조도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가되, 환경농업 실천사업(축산분뇨처리사업 등)과 같이 외부효과가 큰 사업과 부존자원 활용사업 등은 보조를 유지해 나가고 경영혁신지원 등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신규사업도 일부보조를 병행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용자지원비율과 지원조건은 사업별로 공공성의 정도, 농가에 미치는 영향, 지원받을 대상자의 범위, 소득발생정도 등을 종합검토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되 원칙적으로 용자비율은 70~80%수준 이내에서 하고 용자금리는 사업성격·지원대상에 따라 신축성있게 적용하며 용자지원기간은 시설의 내용년수 범위내에서 사업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금융과 사무관 조재호)

4. 농림행정 쇄신 및 규제 개혁

1993년 이후부터 5년간 행정쇄신위원회와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 등을 통하여 약 6,000여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구비서류 감축과 행정절차 완화 등 지엽적인 개선에 치우쳐, 국민들의 일상경제생활과 밀접한 금융·토지·건축·공장설립 등 핵심 경제규제분야의 개혁은 부진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 규제개혁의 추진방식 전반을 다시 검토하고, 그 동안의 규제개혁대책기구를 『규제개혁위원회』로 일원화하여 규제개혁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의 연차별 규제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혁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부도 앞으로 5년간의 연차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기본방향은 ① 기득권의 축소와 농업인의 직간접적 이익증진 지향, ② 허가·등록 등 각종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규제로 전환, ③ 규제기준과 절차의 투명화 및 간소화 등이다. 반면에 쌀 등 기초식량의 자급기반 유지에 긴요한 우량농지의 보전과 농지이용 관련분야·국민보건 및 식품안전성 확보분야·환경보전 및 유해물질 관리분야 등과 관련된 규제는 존치시키되, 규제의 수단과 방법을 합리화하여 규제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사무관 박수진)

5. 농정추진조직의 개편

가. 농림부 및 외청의 직제개편

(1)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의 농림조직개편안

새정부는 당면한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의 새로운 국가도약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 정부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의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행정의 종합성·전략성·기동성을 제고시킨다.

둘째, 행정조직의 유사기능을 통폐합하여 정부생산성을 제고시킨다.

셋째, 행정규제를 완화해 시장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행정체제로 전환해 나간다.

넷째, 정책수행에서 시장원리와 경영효율성의 개념을 도입한다.

다섯째, 고객 지향적이고 수요자 중심적인 행정조직 체계를 만든다.

여섯째, 중앙기능을 지방에 이양하고, 정부기능을 적극적으로 민영화하거나 민간에 위탁한다.

일곱째, 환경과 사회복지 분야의 행정기능은 확충하고, 통일 대비 행정체제를 구축해 나간다.

이상의 기본원칙에 따라 1998년 1월 7일 사회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14명의 심의위원과 8명의 실행위원으로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위원장 박권상, 심의위원겸 실행위원회위원장 김광웅)가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는 총무처의 정부측 조직개편안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한국공공정책학회 등에서 연구하여 마련한 개편안을 토대로 12차례의 실행위원회 회의와 7차례의 심의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합동회의, 수차례의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1998년 1월 26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다.

이 개편안에 포함된 농림조직부문의 개편안에 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농림조직의 주요 개편방향

- 1) 농업센서스 등 농업 기본통계 기능을 통계청으로 이관한다.
- 2) 농림부의 집행기능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한다.
- 3) 본부 및 소속기관을 과감히 정비한다.
- 4) 동·식물검역 기능을 보완·강화한다.
- 5)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관리기능과 조직을 대폭 축소한다.
- 6) 산림청의 지방조직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통합을 추진한다.

(나) 기구 및 정원조정

<표 3-2-18> 농림부 직제개편 현황

	차 관 보	실	국	관	과	담당관
현 행	1	2	5	8	30	12
개 편	1	1	6	5	24	16
증 감		△1	+1	△3	△6	+4

- 본부 정원중 40인을 감축
 - 1급 △1, 2·3급 △2, 3·4급 △2, 4·5급 △3, 기능직 △32

- 소속기관 정원중 992인을 감축(1998년 763인, 1999년 229인)
 - 1급 △1, 2급 +1, 3급 +1, 4급 △5, 5급 이하 △845, 기능직 △143

<표 3-2-19> 농촌진흥청 직제개편 현황

	국	관	과	담당관	1차기관	2차기관
현행	2	3	10	10	13	27
개편	2	2	9	7	12	18
증감		△1	△1	△3	△1	△9

- 본청 정원중 34인을 감축
 - 2·3급 △1, 3·4급 △4, 4·5급이하 △3, 기능직 △26
- 소속기관 정원중 236인을 감축
 - 3·4급 △11, 4·5급이하 △51, 기능직 △174

<표 3-2-20> 산림청 직제개편 현황

	국	관	과	담당관	1차기관	2차기관
현행	3	2	11	8	9	40
개편	3	2	11	6	8	6
증감				△2	△1	△34

- 본청 정원중 10인을 감축
 - 4급 △2, 8급 △1, 기능직 △7)
- 소속기관정원중 815인을 감축
 - 3급 △1, 4급 △5, 5급이하 △607, 기능직 △202

(2) 농림직제 개편 추진실적 및 계획

(가) 농림직제 전문 제정(1998. 2. 28. 시행)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출범 이후 정부조직법을 신속히 개정(1998. 2.28 법률 제5,529호)해 정부조직을 개편해 나갔다. 이 개편안에 포함된 농림부 직제의 주요 골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정책실(1급)과 개발기획관(3급)은 폐지하고, 농정·식량·농산심의관(2급) 및 원예특작국은 농업정책국·식량정책국·농산원예국으로 개편하였다(△3관, +2국).

둘째, 농업통계정보관(2·3급)은 농업정보통계관(3급)으로 개편하고, “생산통계담당관”과 “유통경제통계담당관”은 “농업통계담당관”으로 개편하며, “통계정보처리담당관”은 “정보화진흥담당관”과 “정보화지원담당관”으로 분리하여 농업정보화 기능을 보장하였다.

셋째, 농촌개발국의 기반정비과는 폐지하여 그 기능을 농촌정비·농촌용수·시설관리과로 조정하며, 기획관리실에 “여성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국제농업국의 “기술협력과”를 폐지하였다.

넷째, 농산정책심의관 소속의 농업기계자재과를 “생산지원과”로 개칭하고, 농산정책심의관실과 원예특작을 통합해 농산원예국을 신설하였다. 농산정책심의관실의 환경농업과는 식량정책국의 관할하에 두었다.

농림직제 개편안

농업통계정보관		농업정보통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정보기획담당관 — 생산통계담당관 — 유통경제통계담당관 — 통계정보처리담당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계기획담당관 — 농업통계담당관 — 정보화진흥담당관 — 정보화지원담당관

농업정책실		농업정책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정기획과 — 농지관리과 — 농촌인력과 — 농업금융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정책과 — 농지관리관 — 농촌인력과 — 농업금융과

		식량정책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정책과 — 식량관리과 — 기반정비과 — 농산기술과 — 환경농업과 — 농업기계자재과 — 농정기획심의관 — 식량정책심의관 — 농산정책심의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정책과 — 식량관리과 — 환경농업과

원예특작국		농산원예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예특작과 — 채 소 과 — 과수화훼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기술과 — 채소특작과 — 과수화훼과 — 생산지원과

이와 같은 농림기구의 개편을 통해 종래 1차관보 2실 5국 8관 30과 12담당관을 1차관보 1실 7국 4관 27과 13담당관으로 개편(△1실, +2국, △4관 △3과 +1담당관)하고, 본부 공무원 정원 40명을 감축하였다. 동물과 축산물의 검역 및 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이던 「수의과학연구소」(정원 146명)를 농림부 소속으로 조정하였다.

<표 3-2-21> 농림부 공무원 정원 조정현황('98. 2.28)

(단위 : 명)

	계	정부	별정	1급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기능
'98. 2.27	593	2	9	2	11	1	14	29	50	130	183	46	116
'98. 2.28	553	2	9	1	9	1	14	27	50	130	181	45	84
증 감	△40	-	-	△1	△2	-	-	△2	-	-	△2	△1	△32

<표 3-2-22> 농림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 조정현황('98.2.28)

(단위 : 명)

	계	별정	일반직			연구직		기능
			소계	5급이상	6급이하	연구관	연구사	
'98.2.27	3,975	449	2,942	225	2,717	-	-	584
'98.2.28	4,121	449	2,950	227	2,723	29	63	630
증 감	+146	-	+8	+2	+6	+29	+63	+46

농촌진흥청은 기술협력관(2급)을 폐지하여 기획관리관 소속의 국제협력담당관(4급)으로 축소하고, 기술지도국은 기술보급국으로, 종자공급소는 종자관리소로 개편하였고, 동시에 작물보호과와 법무담당관을 폐지하였다. 또한 수의과학연구소(146명)를 농림부소속으로 이관함으로써 2국 3관 10과 10담당관을 2국 2관 9과 7담당관으로 개편하고, 정원 185명(본청 14명, 소속기관 171명)을 감축하였다.

산림청은 공보담당관과 비상계획담당관을 폐지하여 3국 2관 11과 8담당관을 3국 2관 11과 6담당관으로 개편하였고, 정원 44명(본청 5명, 소속기관 39명)을 감축하였다.

(나) 1998 하반기 시행 직제개정계획

정부조직개편심의회위원회가 확정된 농림조직개편안에 의하면, 1998년 7월 1일부터 국립농산물검사소장(1급)의 직급을 2급으로 격하시키고, 본소의 4과(사무과·품질관리과·검사관리과·생사검사과)를 3과(생사검사과 폐지)로 축소한다. 또 농업총조사·농업기본통계조사·농가경제조사·농산물생산비조사·양곡소비량조사 기능을 통계청으로 이관하고, 농업통계사무소 및 출장소 소속공무원 정원 410명을 통계청으로 이관한다. 국립농산물검사소의 지소·출장소와 농업통계사무소·출장소를 통합하여 시·도단위 지소를 6개소로, 시·군단위 출장소를 80개소로 광역화하고, 지·출장소의 통폐합으로 국립농산물검사소 공무원 정원 136명과 농업통계사무소 공무원 정원 162명을 감축한다. 증가하는 수출입 동·식물의 검역과 축산물검사 수요 등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 국립동물검역소와 수의과학연구소를 통합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개편하고, 1998년 중에 동·식물검역인력 70명(행정 4명, 전산 2명, 수의 32명, 식물검역 32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소속의 잠사곤충연구소(5과 1관리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은 농업과학기술원의 산업곤충부(4과)로 편입한다. 정원 102명(본청 20명, 소속기관 82명)을 감축하며, 산림청 소속 임업연구원의 산림생물부(3과)를 『산림생물과』로 축소하고, 임목육종연구소를 『임목육종부(4과)』로 축소하여 임업연구원에 통합해, 정원 52명(본청 5명, 소속기관 47명)을 더 감축해 나간다.

이와 같이 1998년중 3차례의 정원 조정을 추진하게 되는데, 각 기관별 공무원 정원에 대한 증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2-23>

각 기관별 공무원 정원 조정계획

(단위 : 인)

		'98.2.27 까지(A)	2.28개정 (B)		7. 1이후 (C)		8. 1이후 (D)	
				B-A		C-A		D-A
농림부	본 부	593	553	△40	553	△40	553	△40
	소속기관	3,975	4,121	+146	3,413	△562	3,358	△617
	계	4,568	4,674	+106	3,966	△602	3,911	△657
농촌진흥청	본 청	354	340	△14	340	△14	320	△34
	소속기관	2,326	2,155	△171	2,155	△171	2,073	△253
	계	2,680	2,495	△185	2,495	△185	2,393	△287
산림청	본 청	196	191	△5	191	△5	186	△10
	소속기관	1,442	1,403	△39	1,403	△39	1,356	△86
	계	1,638	1,594	△44	1,594	△44	1,542	△96

나. 농림관련 기관 및 단체의 정비현황과 계획

농업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투자·출연기관과 농·축·임협 등 농림관련 단체는 비대화되고, 그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고 있다는 외부 비판이 제기되면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조직개편기구에 맞추어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대대적인 기능조정을 통한 체계개편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국정 100대과제의 하나로 『농림수산관련 조직의 축소·조정으로 효율성 제고』가 채택되었고, 각 기관·단체별로 기능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는 개방화·지방화·정보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어업인들로부터 신뢰받는 모범 공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본사를 기획·조정·통제 중심으로 기능을 축소할 계획이다. 인력은 지방현

장 중심으로 배치(1997년 1,576명 → 1998년 1,610명)하고 풀(pool)제로 운영하며, 지부조직은 광역화해 나가고 간접인력은 최소화하는 등 조직정비안을 1998년 상반기중에 확정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998년 하반기중에 현재의 5본부 20처(실) 9지사 7사업단 83지부(총 138부)를 4본부 19처(실) 9지사 6사업단 75지부(총 132부)로 축소할 계획이다. 기획본부와 관리본부는 통합하여 관리본부로 개편하고, 농지이용사업처(3부)와 정주권개발처(3부)도 통합하여 농어촌정비처(4부)로 개편할 것이다. 농어촌연구원의 환경연구실과 담수호연구실을 통합하고, 연구 조정실은 폐쇄하며, 지방조직중 화옹사업단(2부)과 시화사업단(2부)를 통합하고, 83지부를 75지부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러한 기구 통폐합을 통해 1998년 하반기중 임직원 정원 80명을 감축하고, 1999년중 100명을 추가 감축할 계획이다.

기술이 보편화된 경지정리, 소규모 농어촌 용수개발,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 등 단순 공정의 설계·공사감리에 민간의 참여기회를 확대시키고, 민간이양이 어려운 고난도·종합적인 첨단기술 경험이 요구되는 국가전력 차원의 정책사업과 공익적 수요분야 위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쌀 전업농 중심의 농지규모화 사업은 축산·원예 전업농을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지원 체계로 개편하고, 지하 저장시설 및 첨단 유리온실사업, 간척농업 시범단지조성사업 등은 연구개발 차원에서 시범운영하며, 자회사 또는 생산자단체로 이관해 나갈 계획이다.

(2)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는 1967년 설립이래 증산위주의 가격지지정책기조하에서 정부를 대신하여 우리나라 식품저장·가공산업의 발전과 농수산물 수출입 및 수매비축사업을 통한 농수산물 가격안정과 생산자보호에 큰 역할을 수행해 왔다. 최근 개방화에 따라 수매, 비축기능 역할이 축소되고 생산자단체나 민간의 저장, 가공, 유통분야에 대한 참여가 활성화됨에 따라, 새로운 국가정책기조와 21세기 농정방향에 걸맞게 그 기능과 역할조정 및 방향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산물 유통개선과 수출농업정책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한 농산물수출전담기관으로서 국영무역, 남북협력 및 유통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이다. 유통개선 시범 선도사업으로 운영중인 화훼공판장, 직판장 물류센터 등은 생산자단체나 민간과 기능이 중복되고 경합되므로, 민간에 이관하고 자회사인 한국물산(주)과 매일유업(주)도 구조 조정 차원에서 정리할 계획이다.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지원 기능과 역할은 강화하고, 국영무역은 종합관리하여 수급관리를 효율화하며, 남북한 농업협력사업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유통여건에 부응하여 물류표준화, 유통경영체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와 같은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현재 정원(948명)을 '98년도까지 30% 이상(600명)으로 감축해, 저비용·고효율체제로 전환할 것이다. 한국냉장은 사업구조를 개편하여 축산물 전문기관으로 육성해 나가되, 단계적으로 민영화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정부출연 연구기관

정부주도 경제개발시대에 범국가적 연구개발의 필요에 의해 설립된 공공조직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기획예산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994년에 17개 연구실에서 3회에 걸쳐 5부 2실로, 6개 지원부서는 4개로 축소해 왔다. 또한 1998년 예산정원 151명을 2000년까지 10% 감축하여 136명으로 운영한다는 목표로 지원부서 조직과 인력을 감축해 나갈 계획이나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은 1998년 1월 2단 11부 7실 7과 1역을 1단 2본부 4실 5과 1역으로 조직을 대폭 축소하였다. 1997년 정원 201명을 1999년까지 11% 감축하여 179명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998년 4월 27일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에서 ①출연 연구기관 기능과 역할의 합리적 재정립, ②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연구소간 경영체제 구축, ③ 기업경영개념 도입, ④ 고객 및 성과중심의 연구시스

템 구축을 기본원칙으로 한 경영혁신방안을 제시하고, 각 출연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강도높은 구조조정 방안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1998년 5월 7일 기획예산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한 관련부처 장관 참석회의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시안』이 제시되었다.

이 시안에서 ① 운영시스템 구성에서는 중립적 비상설 평가기구를 설립하고, 연구원장은 공모 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한 후보자중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정원 관리제를 폐지하여 유연성 있는 조직관리로 전환하고 기준경비는 '98예산 기준 대비 20%정도 삭감해 나가며, ② 관리 방법 개선에서는 주무부처의 간섭을 배제하고, 출연기관의 연구를 조정할 “연합이사회”를 두어, 기본 연구비는 출연금으로, 나머지 연구사업비는 주무부처에 계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후 공청회(2회)와 당정협의, 공공노조대표와의 간담회(3회), 행정개혁위원회의(12회) 등을 거쳐 1998년 5월 12일에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의결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 방안의 주요 골자는 ① 출연연구기관간 유사·중복기능의 조정, ② 구조조정 차원에서 경상비 20% 삭감, ③ 정부예산지원 방식의 개선, ④ 이사회제도 혁신, ⑤ 민간경영개념 도입, ⑥ 성과주의에 입각한 인센티브제 구축, ⑦ 산·학·연 협동 연구활동 활성화이다. 이러한 방안의 실현을 위해 각 출연연구기관의 개별법을 폐지시키고, 『출연연구기관 관리기본법』(가칭)을 제정·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4) 농지개량조합연합회와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회원농조의 지도·지원 사업과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 농지개량조합(105개)과 별개의 법인체로서, 수평적 관계를 갖는다. 전국 농지개량조합장들은 농지개량조합과 연합회의 계통조직화를 요구하고 있고, 농업단체 운영개선방안 연구결과에서도 농조와 연합회는 계통 조직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서 농어촌진흥공사는 농업생산 기반조성·정비사업과 농촌생활환경정비개선사업, 농지규모화사업 등을 추진한다. 농지개량

조합은 농조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과 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 농지 또는 농지의 보전·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재해복구, 농사개량사업을 맡는다.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조사연구와 지도사업, 기반 정비사업에 수반하는 환지사업, 경지정리사업에 수반하는 조사·설계와 공사감리, 농지개량조합 자립육성금고의 조성 및 운용관리 등을 수행한다. 따라서 각각 고유의 업무영역에 대한 기술 전문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1998년 하반기중 본부부서 5실 4처 1시험소를 3실 4처 1시험소로 축소하고, 지방부서 46개소를 39개소로 통합하며, 지방단위 조직중 제주출장소를 폐지할 계획이다. 인력은 현재 정원 1,047명을 2000년까지 692명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농림부 본부는 기획·조정기능 중심으로 축소·조정하는 한편, 지방조직과 현장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게 된다.

농지개량조합은 수계중심으로 조직되어 있고, 그 규모가 수혜면적 (85ha~37,534ha)에 따라 다양하다. 1989년부터 조합비를 농지 10a당 벼 5kg(1997년 6,300원)으로 인하하고 운영경비 부족액중 일부는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으나, 정부지원(연간 1,000억원)이 충분하지 못해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1997년에 3,000ha 미만의 농지개량조합은 전무제도와 지소의 “부”제도를 폐지하고, 정원 368명을 감축(4,392 → 4,024명)하였다. 수혜면적 3,000ha 미만의 소규모 조합합병 추진의 근거를 마련(농지개량조합법)하여 소규모 조합의 자율합병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5) 농·축·임협 등 생산자 단체

농·축·임협 등 협동조합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1994년 12월 농·축·임협법을 개정하였다. 중앙회장과 조합장의 피선거권을 조합원으로 제한하고 중앙회·조합 이사회의 2/3 이상을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품목별 전문조합 설립요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1997년 1월에 『농협합병촉진법』을 제정하여 1,350개의 지역조합을 2001년까지 500개로 통합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역농협 규모의 경제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1997년중 85개

조합이 28개 조합으로 통합되어 57개 조합이 소멸됨).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협동조합의 속성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1997년말 「경제위기극복대책단」을 구성하여 총정원 719명을 감축(중앙본부 84명, 지역본부 152명, 연수원·교육원 36명, 사업소 72명, 금융점포 375명)하였다. 그 중 219명은 여신지원·채권 관리, 전산개발, 사업장 신설 등 신규사업에 증원하고, 나머지 500명은 1997년 12월 17일자로 감축조정(1997년 11월 18,148명 → 1997년 12월 17,648명)하였다. 회원조합은 1998년중 1,500여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중앙회는 한계사업장 구조조정을 위해 만성적 적자가 지속되는 지사무소 27개소(금융점포 13개소, 사업소 4개소)를 폐쇄 조치하였다.

농협중앙회는 지도·기획·조사·농정협동·국제협력 등 연합회적 기능과 농산물가격안정·미곡수급안정사업 등 공익적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자회사의 지주회사역할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농산물판매사업, 영농자재사업, 생산물자사업 등 사업기반이 취약한 경제사업은 우선적으로 자회사 체제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업협동조합은 축산업경쟁력 제고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축협합병촉진법을 제정하여 193개 조합을 2001년까지 154개소로 통합할 계획이다. 중앙회 조직과 인력의 개편 추진으로 1997년말 본부장 2명 감축(7명 → 5명), 본부기구 통폐합(23부 3실 1국 → 19부 3실), 미국사무소 폐쇄 등을 단행하였다. 1998년 6월말까지 관리직 300명을 감축 또는 사업부서에 전진배치할 계획이며, 자회사를 합병(2개소 → 1개소)하고 실적부진 은행점포를 통폐합해 나갈 계획이다.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임산미생물사업소와 먹는샘물사업소를 유통센타로 통합하여 7개 사업소를 5개 사업소로, 진안훈련원을 양산훈련원에 통합하여 3개 훈련원을 2개 훈련원으로 축소하고, 상임이사 1명을 감축하며, 도지회 차장 8명을 감축(17명 → 9명)하는 등 중앙회 인력 89명을 감축하고, 회원조합정원도 311명을 감축(2,257명 → 1,946명)할 계획이다. 인삼협동조합도 관리인력을 감량하고 신규인력채용을 억제하여 1998년중 중앙회 정원의

10%, 조합정원의 5%를 감축할 계획이다.

농·축·임협 등 협동조합의 장기적인 기능과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협동조합개혁위원회』(위원장:농림부기획관리실장·협동조합연구소 황민영 이사장)가 한시적으로 설치되었다(1998년 4월 4일~12월 31일). 이 위원회는 협동조합중앙회와 회원조합의 구조조정 방안과 경영관리체제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되는데, 추진할 과제의 조사·연구 등을 위해 관계기관 실무자급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운영중이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사무관 정희준)

6. 협동조합개혁 추진

가. 협동조합개혁 추진배경

그동안 농·축·임협 등 생산자단체인 협동조합은 조합장과 중앙회장의 직선제 실시 등으로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조합의 합병추진, 중앙회의 독립사업부제 실시 등 사업의 전문화와 조직의 효율성 증진에 노력해 왔다.

그 결과 경제사업분야에 있어서는 유통판매사업 확대로 농산물 공동판매의 시장점유율이 30%수준에 달했고 영농자재 및 생활물자의 원활한 공급과 신용사업을 통하여 자체 예수금을 투입, 농촌자금공급창구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지도사업분야도 조합원에 대한 영농기술지도, 경제사업지도, 회원조합 육성 등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비판은 계속 제기되고 있는바 그 이유를 살펴보면 협동조합이 생산·유통·가공·판매 등 경제사업에 소홀히 하면서 신용업무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중앙회 기구가 비대화되고 하향식 조직운영으로 조합원의 불만을 사고 있고 협동조합이 임직원을 위한 조직이 되고 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94 협동조합법 개정이후 조합의 자율성은 크게 제고된

반면, 조합경영에 대한 책임이 따르지 못하여 경영부실을 초래하는 사례와 무엇보다 유통,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미흡하다는 비판과 함께 협동조합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나. 협동조합 개혁위원회 활동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협동조합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협동조합을 농업인을 위한 봉사조직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지난 1998년 4월 13일 농업인대표, 생산자단체, 학계 등 각계전문가가 대거참여하는 「협동조합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협동조합개혁위원회」의 기본방향은 농업인과 회원조합 중심의 운영체제 구축, 협동조합 사업운영의 전문화·효율화 추진, 경영여건변화에 대응한 조직·기능 정비 등이며 그 동안 7차례의 회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농업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혁방안을 마련하였다.

「협동조합개혁위원회」의 개혁과제는 협동조합 구조조정, 협동조합 경영관리체제 개선, 협동조합 지도감독 강화 등 크게 3개부문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협동조합 구조조정」으로 중앙회 조직개편, 회원조합 구조조정 등이 다루어지며, 중앙회의 정비방안으로 경제사업은 도시점포 단계에서부터 물류센타에 이르기까지 농산물 유통사업을 확대강화하고 신용사업은 국제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대농민 지원(농업자금, 경제·지도사업 및 복지향상)을 효율화하도록 체제개편을 검토하고 품목별연합회 기능강화 및 협동조합 협력체제 구축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회원조합의 구조조정에는 조합합병 등을 통하여 부실조합을 과감히 정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협동조합 경영관리체제 개선」에 있어서는 책임경영제 확립, 이사회 기능 활성화, 임원선출제도 개선, 여성조합 참여확대안 등이며 여기에서는 중앙회의 경우 부회장 중심의 전문경영인 체제 강화 또는 전문경영인을 회장으로 임명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회원조합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 조합의 상임이사제 도입 의무화 및 자격요건 강화, 임원선출제도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후보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셋째, 「협동조합 지도·감독강화」에서는 조합 자체감사 기능강화, 회원조합에 대한 중앙회 지도감사 기능강화, 회원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강화 등이 검토되었다.

다. 협동조합개혁 추진방향

IMF이후 공공부문은 물론, 금융기관과 기업 등 사회 모든분야가 군살과 거품을 빼고 생산성과 효율을 높이는 구조개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차체에 협동조합도 진정으로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하며 조직을 가볍게 하고 업무를 혁신하는 등 구조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협동조합의 개혁은 「농업인이 살아야 농업도 살고 조합도 산다」는 기본이념하에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과 조직으로 농업인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를 기준 잣대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협동조합개혁위원회」에서는 약 3개월간 협동조합 개혁 문제를 광범위하게 논의하여 전반적인 개혁방안을 지난 7월말 정부에 제출하였다.

아울러 협동조합이 농업인의 자조조직임을 감안, 각 협동조합별 강력한 자체개혁방안과 농·축·임·삼협의 공동개혁안을 마련토록 하였는데 각 협동조합별로 자체구조개혁 계획을 수립하여 '98. 8월까지 제출하고 '98. 9월까지 중앙회 통합 및 지역 이종조합간 합병을 포함한 4개 협동조합 공동개혁안을 제출토록 하였다. 한편, 농·축·임·삼협의 개혁안을 협의조정 및 추진을 위해 농림부내에 「협동조합개혁기획단」을 별도 운영한다.

정부는 「협동조합개혁위원회」에서 제출한 건의안과 협동조합이 제출한 개혁방안을 기초로 농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농업인에게 이익이 되고 농축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협동조합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농업금융과 서기관 박형규)

7. 『농업·농촌기본법』 제정 추진

정부에서는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적인 농업동향에 대응하여 다가올 21세기에도 우리 농업과 농촌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농정의 이념과 발전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위한 정책수단을 제시하기 위해 금년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농업·농촌기본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여건변화가 어느때보다도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다가올 여건과 이에 대응한 과제를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개방·국제기구의 역할강화·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본격적인 「개방과 경쟁」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에도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여 구조조정을 빠르게 추진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단지,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영농여건상 소외되는 농가가 발생할 수 있고, 농업의 특성상 투자의 회임기간이 길어 타 산업분야와 소득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방법으로 농가의 소득 문제를 해소하는가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둘째, 국가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서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다원적 기능이 중요시 됨에 따라, 농업의 식량안보·고용흡수·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어떻게 유지·발전 시키는가 하는 문제가 부각되게 되었다. 또한 도·농간 균형발전 요구에 대해서도 농촌의 쾌적성과 편의성(amenities)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역개발을 하는 문제가 중요시되게 되었다.

셋째, 지방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특색에 맞는 농업발전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제도의 개선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과 상향식 농정추진체계 등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농업부문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중요시됨에 따라 어떻게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이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인가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결국, 이상의 논의된 과제를 종합해 보면 앞으로 농업은 경쟁력을 갖춘 종합 과학 산업, 국토환경·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공익산업으로의 발전을 추구하고, 농업인은 기업가 정신으로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어엿한 경제주체로서 성장해 나가며, 농촌은 다양한 경제·사회·문화활동의 기반으로써 자연과 문명이 조화된 지역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농업·농업인·농촌의 바람직한 미래상이며, 동시에 「농업·농촌기본법」의 기본이념이라 하겠다.

새로이 제정될 농업·농촌기본법은 농업분야의 법률체계를 조화롭게 정비한다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 농업분야에는 기본적인 성격을 가지는 법률로서 지난 '67년에 제정된 「농업기본법」과 '90년에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있다.

그러나 농업기본법은 제정된지 30년이 경과되어 그동안의 농업여건 변화를 감안 할 때 사실상 死文化되어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은 42조 구조개선사업을 법제화한 성격이 강한 집행법·한시법적 성격이 강한 법률로써 당초 제정목적상 42조 사업이 완료되는 금년말에는 어떤 형태로든 손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이 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하여 법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며 필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또한,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정개혁과제에 대한 입법화를 통하여 이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다. 예를들어 주곡의 안정적 자급,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의 육성, 농업구조개선을 통한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 지적재산권 보호, 벤처농업육성, 통일대비 농정, 직접지불제도등 소득지원, 농촌지역개발, 여성농업인력육성등의 과제에 대한 정책을 기본법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농업정책과 사무관 이천일)

8. 농정모니터제 운용 개선

농정모니터제도는 농림부 본부와 농촌 현장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당초의 취지대로 농정의 피드백시스템으로서 정착하려면, 몇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농정모니터망의 성패는 궁극적으로 농업경영에 대한 자부심과 농업·농정에 대한 안목을 갖춘 우수한 모니터를 확보하는 데에 달려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1997년중 지속적인 정리·교체를 통해 모니터망의 인적 기반 강화를 추진해 왔지만, 아직도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취약한 형편이다. 따라서 1998년에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은 모니터의 지속적인 교체·정리 및 교육을 통해 600명(농업인 400명) 규모의 정예화된 네트워크를 정착시키는 일이다.

다른 문제는 농정모니터제도가 농정시책의 기획·입안과 효과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모니터들의 제안이나 건의가 단발성에 그쳐 체계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998년 들어 시행중인 농정모니터망 우수제안추천위원회의 모니터의견에 대한 추천심사활동은 농촌현장의 건의와 제안을 농정시책의 기획·입안으로 연결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농정모니터망은 농림부의 주요 시책을 현장 실정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체화하는 노력을 통해 농업인·농업관계자들의 농정시책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무형의 정책인프라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행정관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김영준)

제 8 절 WTO자기 농업협상 대책 추진 및 남북농업 교류·협력 활성화

1. 차기 농업협상 논의동향

가. WTO 차기 협상관련 동향

WTO 농업협정상 농업분야의 차기 협상은 1999년 말에 개시하여 1년 내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다. 1996년 12월 싱가포르 각료회의시 농업분야 차기 협상 준비차원의 분석 및 정보교환(Analysis and Information Exchange: AIE) 작업을 1997년부터 개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WTO 농업위원회는 1997년부터 비공식회의(AIE작업)를 개최하여 차기 협상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 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들(Cairns그룹)은 AIE 작업에 적극 참여하여 협상에 충분히 준비하려는 의도인 반면 우리나라, 일본, EU, 스위스, 노르웨이 등 농산물 수입국들은 가능한 한 AIE작업에 한정시키려고 1998년 5월에 개최된 제2차 WTO 각료회의는 차기협상 준비작업을 위한 논의를 1998년 9월부터 일반이사회에서 시작하도록 결정하였다. 미국과 EU는 준비작업 추진시기, 협상방식 등과 관련하여 다른 견해를 보이고는 있으나, 차기 농업협상은 1999년말까지 준비작업을 마친 뒤, 예정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나. 농업분야 주요 논의 사항

(1) 농산물 수출입국간 기본 입장

(가) 수출국 입장

미국은 차기 농업협상을 과감하게 시작해야 하며, 2001년 협상이 진행중이라도 회원국은 이행기간과 같은 속도로 관세와 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기협상의 중점과제는 ① 시장접근의 개선, ② 수출보

조의 철폐, ③ 국영무역의 투명성과 운용개선, ④ 생명공학을 이용한 농산물 인증 등이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EU와 일본 등이 보조수준이 높으며 아직도 시장 개방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이를 차기협상의 주요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나) 수입국 입장

EU는 차기협상이 포괄적이어야 하며, 환경, 사회적 표준(Social Standard), 노동 등을 의제로 지적하고, 농업분야에 대한 협상도 포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 일본은 수입국과 개도국, 선진국과 후진국간에 균형,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등이 차기협상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식량안보와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커다란 중요성을 부여하고, 이를 강조하고 있다.

(2) 주요 분야별 논의 동향

(가) 시장접근물량 관리방식

저율관세로 들어오는 수입 농산물의 관리방안에 대해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미국, 호주 등 수출국들은 저율관세 물량의 수입 보장을 주장하고 있고, 우리나라, 일본, EU 등 수입국들은 수입기회만 부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저율관세 물량 관리방안과 관련해 국영무역, 쿼타공매, 생산자 단체 개입문제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나) 특별긴급수입관세제도(SSG)

미국,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호주 등 수출국들은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국제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에 부과하는 추가관세제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EU는 이 문제에 관한 논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우리나라와 일본은 이 제도가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 고관세과 비관세 장벽 문제

수출국들은 고관세, 잔존 비관세 장벽, 종량세, 수입허가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협의하자고 주장하나, 우리나라,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EU, 인도 등은 상기 내용이 UR협상에서 합의한 사항이므로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라) 허용대상 국내보조의 분류기준

수출국들은 허용국내보조의 세부적인 분류기준을 설정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수입국들은 허용보조의 세부적인 분류 기준 설정이 국내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항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 생산제한과 관련된 직접지불제도

생산제한과 관련된 직접지불제도의 유지와 관련하여 수출국들과 수입국들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미국 및 케언즈 그룹은 이 제도를 폐지하자는 입장이며, EU·일본·노르웨이·우리나라 등은 이를 유지하는 입장이다. 이는 EU 공동농업정책의 기본 방향과 관련되는 것으로 앞으로 EU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바) 국영무역제도

미국은 국영무역제도가 기본적으로 무역을 왜곡하는 효과가 있고, 운영의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우리 나라와 일본은 수입국영무역이 다자 무역체제하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고 필요한 제도임을 강조하고 있다.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도 국영무역제도가 WTO 규정상 금지된 제도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사) 수출보조의 철폐문제

수출국들(케언즈그룹)은 수출보조가 특정지역의 국가와 특정 품목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출보조의 철폐 주장하고 있다. EU는 수출보조

가 감축 약속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협력과 사무관 김종철)

2. 대외협상 체계 구축

가. 추진 기본방향

차기 농업협상의 논의에 대비하여 수출국들의 조기 협상개시 시도를 철저히 저지하고, 주요 국제기구의 논의에 대해서는 APEC은 WTO의 연장선 상에서, OECD는 WTO협상 이슈의 논의의 장으로서 철저히 대비하며, 주요 이해관계국과의 사전공조체제를 구축하고 국내적으로 철저히 대응체제를 마련하여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향이다.

나. 세부대책 추진

차기협상을 대비하기 위해 협상대책단을 구성하고 그 산하에 통상정책협의회, 협상추진반, 실무지원반을 설치하여 운영할 것이다. 통상정책협의회는 농산물 협상에 대비한 협상대책 자문 등 대외통상정책에 대한 자문을 하고, 협상동향을 알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여기에는 농업관련 단체, 소비자 단체 대표, 언론,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협상추진반은 결정된 입장을 바탕으로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협상에 직접 참여하며 협상 시작과 동시에 가동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있다. 실무지원반은 협상의제 및 정보를 분석하고 국내에 미치는 영향 등 협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분석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차기 농산물 협상의 대응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KREI와 공동으로 품목별, 분야별 UR협상결과 이행 현황 및 국내농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대외적인 협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협상 주도국인 미국과 EU의 동향, 양자협의 동향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OECD, FAO, APEC, IPC 등 차기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우리 입장을 개진할

것이다. 또한 EU, 일본 등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와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작업도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대내적인 공감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농업인, 소비자,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 사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며, 특히 언론을 통한 충분한 사전 브리핑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제협력과 사무관 김종철)

3. OECD 한국농업정책검토와 WTO 차기협상

OECD 한국농업정책 검토를 위하여 '98. 3월에 전체보고서 초안(1부: 일반 경제 및 농업개황, 2부: 농업정책, 3부: 농업지지분석)이 마련되어 분야별 재검토 및 수정작업을 거쳐 1998년 5월에 OECD 식량농업수산물국장(Mr. Gerald Viatte) 및 관계자 방한으로 우리측과 최종 실무토론회(Round Table Discussion)를 갖고 한국농정 검토보고서의 종합평가 부분인 “요약 및 결론” 부분을 도출하게 된다.

이같이 마련한 전체 보고서를 가지고 보고서 검토국가(미국, 일본)를 중심으로 한 OECD 전 회원국과 한국 농정 전반에 대한 토론을 위하여 1998년 6월 29일, OECD 본부(파리)에서 개최될 한국농정검토회의에 농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5명의 정부대표단이 참가하여 우리 농업의 실상과 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촌개발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과 1997년말 외환위기로 직면한 농업구조조정 계획 등에 관한 우리의 관심사항을 OECD 회원국들에게 알리게 될 것이다.

1998년 하반기 중에는 한국농정검토 보고서에 대한 회원국들의 검토의견 점검과 1997년도 정책분석자료 등을 보완하여 최종 보고서가 완성되면 OECD 농업위원회에 보고 후 1998년말/1999년초에 공식보고서가 발간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OECD에서의 한국농업정책검토는 우리의 농업전반이 국제기

구에서 대외적으로 최초로 평가되는 것이며, 다가오는 WTO 차기협상에 대한 논의가 제네바를 중심으로 고조되고 있는 점은 감안, 수입국으로서 식량안보가 점차 강조되어지고 있는 우리 농업여건 아래서 향후 농산물 개방과 농정방향에 대한 우리 입장이 보고서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제협력과 사무관 이명순)

4. 남북농업교류·협력 활성화

가. 북한식량 수급상황과 전망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체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매년 200만 톤 이상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식량난은 집단생산체제의 비효율성,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비료·농약 등의 영농자재 부족, 수송체계의 마비가 주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최근 연속된 기상재해(홍수, 가뭄)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촌진흥청 분석에 의하면 1998년 북한의 곡물 수요량은 1인 1일 450g 배급기준으로 530만톤이나 1997년 곡물생산량이 쌀 150만톤, 옥수수 160만톤 등 총 349만톤에 불과해 180여만톤이 부족한 실정이다. 북한은 이러한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100만명 이상의 정규군을 유지하고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금수산 기념궁전건설 등 정치선전에 막대한 자원을 낭비함으로써 식량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현재와 같은 집단적인 농업생산체제, 생산기반, 영농자재 공급, 농업기술 수준 및 자원배분체제하에서는 매년 기근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의 식량문제는 외부의 일회성 지원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식량부족사태를 가져온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북한당국의 농업부문개혁과 자원배분의 왜곡을 개선하는 자구적인 해결노력이 필요하다.

나. 대북농업지원 및 교류·협력 방안

정부는 북한식량문제의 본질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북한에 대한 지원을 △북한 식량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유도하고, △북한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남북관계의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기본방향하에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남북적십자간 합의에 따라 한국적십자사를 통해서 질서있게 추진해 나가며, 정부차원의 지원은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 식량문제의 근원적 해결차원에서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국제적 차원에서도 UN회원국의 일환으로서 UN기구의 대북지원에 대하여 우리의 경제력 등에 상응한 규모로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차원에서는 1995년 대북 쌀지원을 포함하여 1998년 4월 현재 2억 7,342만달러, 민간차원에서는 3,101만달러, 국제적 차원은 5억 434만달러를 북한에 지원하고 있다. 대북농업지원은 인도주의 차원의 단기적인 식량지원을 고려하되 근본적인 북한의 농업생산력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식량지원은 최소비용으로 영양공급효과를 극대화하되 투명성을 확보해나가고 종자, 비료, 농약 등 북한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농자재지원에 중점을 두며 농업생산기반확충, 수해복구, 산림녹화(조림)사업 등 대단위 투자를 요하는 중장기적 개발계획은 관련국가와 컨소시엄을 이루어 추진하되 점차적으로 북한의 농업체제를 시장경제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이 보다 진전되면 농업기술협력, 농업분야 공동개발, 합작투자 등의 교류 협력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남북한의 농업에 공동의 이익을 제공한다는 원칙하에 남북한의 작부체계(남한:논, 북한:밭)를 보완하는 농산물의 계약재배와 유전자원의 공동연구, 종자·종묘의 교환 등 기술교류, 합영농장 운영, DMZ 등 제3지역의 생태농업공동개발을 추진하고 북한 농림축산업 부흥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한 농업협력과 국제킨소시엄 참여 방안(KADO 방식)도 검토하며, 나아가 남한의 자본, 기술과 북한의 인력을 결합한 민간차원의 연해주 및 만주 지역 남북한 공동개발지원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평화공존과 평화교류를 우선 실현하고 포용적 자세로 북한의 변화여건을 조성한다는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기조에 따라 남북경협 활성화조치가 발표됨으로써 남북간의 경제교류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기반이 조성되었다. 이미 국제옥수수재단(이사장 김순권)이 북한농업과학연구원과 남북농업협력사업자 및 사업승인을 획득하여 최우량 옥수수 신품종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하였고, 두레마을(대표 김진홍)이 북한의 나진·선봉지역에 10만평의 직영농장과 1,00만평 규모의 계약재배를 추진하는 협력사업자 승인을 획득하고 협력사업 승인단계에 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우선적으로 농업분야에서 교류협력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보다 많은 농업협력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남북한의 농업부문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비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설치되어 있는 「북한농업연구센터」와 연계하여 학계, 연구기관, 농업인 단체 및 정부부처가 광범위하게 참여한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를 설치하여 남북농업 교류협력을 위한 정보, 기술, 자문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북한농업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통일이후 식량의 안정적 확보 및 남북한 농업생산체제, 시장·유통, 농지제도의 조화로운 통일방안의 수립을 연구중에 있다.

(농업정책과 사무관 이동원)

<표 3-2-24>

대북지원 현황

(1995. 6~1998. 4. 20)

지원구분	지원금액	시기 및 품목 등
○ 정부차원	2억 7,342만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 쌀 15만톤(2억 3,200만달러) ○ '96: 혼합곡물(WFP, 200만달러) 분유(UNICEF, 100만달러) 기상장비(WMO, 5만달러) ○ '97: WFP 등 국제기구 경유 12,737만달러 - '97. 11: 포그레인 등 수해복구 장비지원 (UNDP, 12만달러) ○ '98: WFP 경유 1,100만달러 - 옥수수 3만톤, 밀가루 1만톤
○ 민간차원	3,101만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 9~'97. 5 19차에 걸쳐 국제적십자사 경유 496만달러(밀가루, 분유, 라면 등) ○ '97. 6~ '97. 10 남북적십자간 직접지원 1,733만달러(옥수수, 밀가루, 라면, 비료) ○ '98. 3~'98. 5 872만달러 - 비료 800톤, 옥수수, 밀가루 등 49,813톤
○ 국제적 지원	5억 434만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산하기구: 2억 5,078만달러 ○ 국제적십자사: 3,337만달러 ○ 기타(NGO 등): 2억 2,019만달러 * 우리측 기여분 제외
합 계	8억 877만불	

제 9 절 IMF 위기극복을 위한 농림분야 지원대책

1. 사료곡물과 영농자재의 안정적 확보 공급

가. 사료곡물의 수급안정 지원

국내 금융시장의 구조적 불안으로 촉발된 외환·금융위기는 환율을 1997년 10월 853원/\$에서 1,400~1,600원/\$ (최고 1997년 12월 24일 1,850원/\$)까지 급등시켰다. 급기야 1997년 11월 21일에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여 12월 3일에 IMF 자금지원을 받기 시작했고, 그 조건으로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IMF의 권고를 수용하는 공식합의에 도달하였다.

환율급등은 외환자금 부족을 야기하여 밀·사료 등 원료곡물 도입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신인도가 하락하여 국제결제은행(BIS)의 전전 자기자본비율 기준 8%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원료곡물 도입상의 수입 신용장(L/C) 개설이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은행대출이 경색되고 자금회수 증가속에 결제분이 도래한 사료제조업체에 현금수요가 증가되며, 일부업체의 출고조절로 시중유통이 왜곡되는 사례도 적발되었다.

농림부는 IMF 프로그램하에서 외환·금융위기에 대처하여 사료 원료곡물 도입상의 L/C 개설지원, 농업용 면세유류, 비료·농약 등 농자재의 안정공급, 주요 농산물의 수급동향 점검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1997년 12월 16일 「농산물 수급안정대책 상황실」을 개설·운영하였다. 외환위기가 일단 진정되어, L/C 개설과 해외 신용자금 사용이 호전되고, 원료곡물 재고 2개월분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등 상황이 개선되면서, 1998년 2월 25일에 상황실을 축소하여 유통국으로 이관하였다.

<표 3-2-25> 밀·사료 원료곡물 L/C 개설·지원('98. 6.25)

(단위 : 백만원)

	밀 (계분협회)	사 료			총 계
		사료협회	축 협	소 계	
'97. 12. 16~6. 25 (농·축협)	151.9 (26.0)	556.4 (131.6)	241.8 (241.8)	798.2 (373.4)	950.1 (399.4)

<표 3-2-26> GSM-102 자금 사용실적('98. 6.25)

(단위 : 백만원)

품 목	계 획	배 정	CCC 승인실적			비 율	
			L/C 개설	L/C 미개설	소 계	계 획 대 비	배 정액 대 비
사 료 원 료	343	343	179.8	8.9	188.7	55	55
밀	210	210	77.9	38.1	116.0	55	55
대 두	200	200	108.0	14.7	122.7	61	61
옥 수 수	137	137	117.2	-	117.2	86	86
소 계	890	890	482.9	61.7	544.6	257	257
육 류 기 타	170	170	39.0	129.2	168.2	99	99
계	1,060	1,060	521.9	190.9	712.8	67	67

※ 1. 추가배정 3억 6,000만달러(사료원료 9,300만달러, 밀 6,000달러, 대두 1억달러, 옥수수 3,700만달러, 육류·기타 7,000만달러)

2. 원면 3억 2,000만달러, 원피 1억달러, 목재 2,000만달러 별도

사료 원료곡물 도입의 L/C 개설을 지원하기 위해, 농·축협을 중심으로 수입 신용장을 직접 개설하도록 하였고, 미국 농무부의 수출신용자금 General Sales Manager : GSM-102) 등 해외 신용자금을 확보하여 사료 원료곡물 외상도입을 위한 소요자금으로 사용하였다. 1998년초에 확보한 GSM-102자금중 6억달러와, 4월중 추가확보한 자금중 2.9억달러 등 총 8.9억달러의 신용자금을 곡물류 수입에 배정하여, 6월 25일 현재 약 5.4억달러를 밀, 대두, 옥수수, 사료 원료곡물 도입에 사용하였다.

GSM-102 자금외에, 캐나다, 호주의 소맥위원회(CWB, AWB)로부터 수출신용을 제공받았으나 민간신용자금의 이용실적은 작았다. 캐나다 수출개발공사(Export Development Corporation: EDC)와 캐나다 농산물 수입을 조건으로 1998년 3월 30일에 총 2억 900만 캐나다 달러(곡물류 9,900만)의 수출신용 사용에 합의하였다.

그 밖에도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지급보증 대상에 사료협회가 포함되도록 보증특약조항 개정을 추진하고, 곡물류 도입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철폐하도록 재경부와 협의하여 영세 사료업체의 곡물류 도입에 따른 신용담보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사료 유통과정에서 사재기나 가수요, 그리고 제조업체 등의 출하조절로 인한 수급불안을 차단하기 위하여, 제품공장에 농산물검사소 직원을 상주시켜 출고를 독려하고, 대리점에 대한 유통동향 점검 등으로 유통부조리를 집중 단속하였다. 밀가루 등 농림부 소관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적발로 소비자들에게 물품이 품귀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한 것도 성과라 할 수 있다. 「농산물 수급안정대책 상황실」 개설이후 함께, 밀가루 등 매점매석 사례 9건을 적발하여 고발조치하였다. 1998년 2월말 이후 생필품이나 사료의 사재기에 관한 적발사례가 없어, 수급안정을 반증하고 있다.

나. 영농자재의 안정공급

환율급등과 고금리로 농자재의 가격상승을 기대한 가수요를 불식시키고 제조업체의 원활한 생산지원을 위하여, 비료, 사료 등 농자재 가격을 1998년초에 조기 현실화하였다. 1998년 2월 현재 1997년 11월 대비하여 배합사료 36%, 요소비료 43%, 농업용 면세유(경유기준) 72%가 상승하였다. 이는 환율을 1,400원/\$를 기준한 것으로, 환율진정과 국제원유가 하락으로 수차례 조정되었다.

유가인상에 따른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

의하여 1998년에도 농업용 유류에 대해서는 면세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물량도 전년대비 5% 증가한 259만kl를 배정하였다. 점차 사용이 증가하는 농업용 LPG에 대해서도 1998년부터 면세혜택을 추진하여, 첫해에 10,700톤을 공급하게 되었다.

비료, 농약 등의 안정적 물량확보를 위해 농협이 조기에 구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생산 선도금 등으로 농약제조업체에 500억원, 비료 회사에 430억원을 지원하였다. 농약은 1998년중 농협구매를 전년대비 30.5% 확대하여 2,060억원에 상당하는 물량을 구매하도록 하였다. 배합사료 가격 인상에 따른 사료대체를 위해, 475억원을 추가 지원하여 조사 및 생산확대, 남은 음식물 사료화, 자가 배합사료 시설지원 및 섬유질 사료 제조시설 확대 등을 추진함으로써 국내 부존사료 활용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였다.

환율급등으로 발생한 농기계 가격인상 요인을 인건비 절감, 경영개선 등으로 흡수하여 1998년 농기계 가격을 전년대비 9% 상승한 수준에서 안정시킬 계획이다. 농기계생산 비축자금 500억원을 조기에 지원하고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금리도 연 5%에서 3%로 인하하여, 농민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표 3-2-27> 농자재 재고량과 판매 동향

	재 고 량			제 품 생 산 량		
	전년동기	'98. 2	비 고	전년동기	'98. 2	증감율(%)
배 합 사 료	-	2,492천톤	원료(46일본)	53,478	46,472톤/일	△13.1
면세유한도	-	-	-	770	786ℓ/일	2.0
비 료	764	547천톤	제품(농협)	3,643	5,747톤/일	57.8
농 약	6,745	7,408천톤	제품(공장)	70	50톤/일	△28.6

(유통관리과 사무관 김윤중)

2. 농·축산 경영자금 지원

농자재 가격상승과 농산물 소비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자금 지원을 위해 농·축산 경영자금을 1997년 3조 8,200억원보다 6,500억원이 확대된 4조 4,700억원을 지원하였다. 최근 시중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5%인 정책자금 금리가 8.5%로 인상될 요인이 있었으나, 추경에서 1,790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함으로써 2%가 낮은 6.5%로 금리인상을 최소화하였다. 담보력이 취약한 농업인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농·축산 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신용대출 한도를 무보증인 경우에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보증인 경우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앞으로 농업인의 경영비 상승으로 인한 자금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자금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금융과 사무관 조재호)

3. 귀농자에 대한 영농정착지원 추진

가. 귀농가구 동향

최근 2~3년전부터 경기침체 등으로 실업이 늘어나면서 귀농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농업도 자기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최근 귀농 가구가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1998년 1월~6월중 귀농가구 조사결과 4,141 가구가 귀농하여 IMF사태이후 급속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농현상은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최근 국가적 과제인 실업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최근 귀농농가는 젊은계층 위주(30~40대 86%)로 이루어지고 있어 농촌인력 구조개선에도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표 3-2-28>

연도별 귀농가구 현황

구분	'90	'91	'92	'93	'94	'95	'96	'97	'98 (6월까지)
귀농가구수	371	299	413	618	662	922	2,060	1,823	4,141
누계	371	670	1,083	1,701	2,363	3,285	5,345	7,168	11,309
구성비(%)	3.3	2.6	3.6	5.5	5.9	8.2	18.2	16.1	36.6

- 귀농연령 : 30대 52, 40대 25, 50대 16, 60대이상 7%
- 귀농전직업 : 회사원 40, 자영업 26, 노무자 24, 공무원 3%
- 주영농분야 : 경종 54, 축산 13, 채소 13, 과수 10%

나. 귀농자 영농정착 지원대책

IMF한파로 기존농업인도 영농여건이 어려워진 가운데 영농경험, 영농기반이 없이 귀농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제공 및 교육을 통한 가능한 젊고 능력있는 인력이 성공적으로 영농에 정착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들의 성공적 영농정착을 위해 먼저, 정확한 안내와 정보제공을 위해 농림부와 농촌지도소에 귀농상담실(전국 162개소)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농림부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농촌생활, 주택, 농지구입, 자녀교육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국의 시·군 농촌지도소를 통하여 품목선택, 기술·경영지도, 선도농가견학 및 실습알선 등을 지도·상담해 주고 있다.

둘째로 귀농인의 영농기술 습득을 위하여 농촌진흥청과 각 시·도 지도기관 및 농협, 귀농운동본부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영농기초지식,양교육등 귀농교육을 대폭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귀농후에는 농촌진흥청,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는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등 130여개 과정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귀농자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00억원의 재원(예비비 200, 농업경영자금 200억원)을 확보하여 귀농자 영농정착자금을 특별지원하고 있음. 본 특별지원 자금은 귀농교육을 이

수하고 농촌으로 주소지를 옮긴 55세 이하의 귀농자에 대하여 경종농업, 축산, 채소, 원예, 환경농업을 전업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귀농자로서 영농기반시설 및 농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1인당 2천만원 한도에서 년리 6.5%, 2년거치 3년 상환조건으로 농협을 통해 융자지원하는 사업이다.

<표 3-2-29> 귀농창업자금 지원실적

계 획(A)		실 적(B)		비 율(B/A)	
인 원	예 산	인 원	자금집행	인 원	자금집행
2,000명	400억원	656명	109억원	32.8%	27.2%

(농촌인력과 사무관 전원주)

4. 농림분야 실업대책 추진

가. 농지소유와 이용실태 조사업무에 보조인력 채용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농정시책 추진의 기초자료인 농지원부 일제 정비사업에 실직자를 업무보조요원으로 고용하고 있다. 이로써 실직자에게 일시적인 근로기회 제공을 통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시·구·읍·면 등 일선 행정기관에 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 경감과 전산처리 능력을 보완함으로써 농지원부 정비의 내실화와 정책활용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1998년 4월 20일~7월 31일까지 총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한 결과 연인원 13만명(하루 3,248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였다.

나. 숲 가꾸기 사업추진

간벌, 천연림 보육, 덩굴 제거, 등산로 정비 등을 통해 숲의 자원화 촉진과 실업해소에 기여하고자, 1~2단계 사업으로 구분하여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1단계 사업은 130억원을 투입하여 1998년 5월 2일~8월 14일까지 206

개 시·군·구 667개 사업장에서 간벌 등 나무 가꾸기 3,255ha, 도시근교 산림정비 565ha, 356km를 정비하는 것이다. 제2단계 사업은 351억원을 투입하여 1998년 8월 15일~12월(약 100일)에 민유림 8,500ha, 국유림 11,000ha, 시범림 500ha를 대상으로 하루 8,000명을 고용하여 연인원 80만명의 고용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다. 서울역 광장에 「농촌 일자리 합동안내센터」 설치·운영

최근 늘어나고 있는 도시의 노숙자를 포함한 실직자들이 농번기 농촌의 일터와 연결되도록 안내하기 위하여 1998년 6월 1일~6월 16일까지 서울역 광장에 「농촌인력은행·숲 가꾸기·귀농합동안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하루 평균 299명 등 상담에 응하여 총 3,585명에 대해 상담을 받아, 농협 249명, 축협 51명 등 345명을 농촌 일자리에 투입하였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농촌진흥청, 지도소, 농·축·임협 등에 상시 구직창구인 「취업정보안내센터」를 운영하여, 도시실직자의 농촌일자리를 알선할 계획이다.

라. 농어촌 용·배수로 준설사업 추진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배수로에 퇴적된 흙 준설과 수초제거로 용·배수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제2단계 공공 근로사업 기간인 1998년 8월~12월(84일 정도)에 299억원을 투입하여, 용·배수로 4,900km를 준설하고, 수초 제거사업으로 하루 8,300명을 고용하여 연인원 70만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농촌인력과 사무관 전원주)

여백

제 2 부 임업부문

제 1 편 1997년도 임업동향

제 2 편 1997년도 임정의 성과

제 3 편 1998년도 임정시책

여백

제 1 편 1997년도 임업동향

여백

제 1 장 국내외 임업동향

제 1 절 해외 임업동향

1. 세계의 산림자원 동향

1995년 현재 세계 산림면적은 3,454백만ha로서 지역별로는 남미 25%, 구 소련 24%, 북중미 16%, 아프리카 15%, 아시아 14%, 유럽 4.2%, 대양주 2.6%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표 1-1-1>

세계의 산림면적

(단위 : 백만ha)

	'90	'95	연평균변화량	연평균변화율
세 계	3,511	3,454	△11.3	△0.3%
아 시 아	491	474	△3.3	△0.7
아프리카	539	520	△3.7	△0.7
유 럽	144	146	0.4	0.3
북 중 미	538	537	△0.3	△0.1
남 미	894	871	△4.8	△0.5
대 양 주	92	90	△0.09	△0.1
구 소 련	813	816	0.6	0.1

자료 : FAO, State of the World's Forests, 1997

그리고 국가별로는 러시아연방, 브라질, 캐나다,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자이레 순으로 산림면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2>

산림면적이 큰 나라들

국 가	세계산림면적중 점유비율(%)
러시아연방	22.1
브 라 질	15.9
캐 나 다	7.1
미 국	6.2
중 국	3.9
인 니	3.2
자 이 레	3.1

자료 : FAO, State of the World's Forests, 1997

세계산림은 1990년~1995년까지 5년동안 연평균 11.3백만ha씩 감소하였다. 산림면적 감소의 주요원인은 화전경작과 농지, 공업용지 및 주거용지로의 전환과 열대목재의 남벌 등이다.

열대림의 경우 1980년말 1,910백만ha이던 산림이 1990년에는 1,756백만ha로 10년동안 154백만ha의 열대림이 사라졌다. 이는 연간 15.4백만ha가 감소된 것으로 열대림의 0.8%가 매년 파괴된 것이다. 지역별 연간 열대림 감소추세를 보면 아시아지역이 매년 3.9백만ha, 중남미 4.1백만ha, 아프리카 7.4백만ha로서 각각 1.2%, 0.7%, 0.8% 감소되었다. 1990년말 현재 중남미에 918백만ha(52%), 아프리카에 528백만ha(30%), 아시아에 311백만ha(18%)의 열대림이 존재하고 있다.

세계의 산림축적은 1990년 현재 3,100억m³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남미, 구소련, 북중미에 74%가 집중되어 있으며 이중 침엽수가 37%인 1,140억m³이고 활엽수가 63%인 1,960억m³이다.

<표 1-1-3>

지역별 임목축적

(단위 : 억m³)

계	아프리카	북중미	남미	아시아	유럽	대양주	舊소련
3,100	250	640	915	380	120	60	733
(100%)	(8)	(21)	(29)	(12)	(4)	(2)	(24)

자료 : FAO, Global Forest Resources, 1990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인공조림지에서 생산한 목재를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표 1-1-4>

인공조림지 보유 주요국

국 가	산림면적중 조림지 비율(%)	인공림에서 생산된 원목이 산업용재로 쓰이는 비율(%)	비 고
아르헨티나	2.2	60	
브라질	1.2	60	
칠레	17.1	95	
뉴질랜드	16.1	93	
잠비아	0.5	50	
짐바브웨	0.4	50	

자료 : FAO, State of the World's Forests, 1997

개도국 지역의 인공조림지는 80% 이상이 아시아-대양주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1990년 현재 100만ha 이상 인공조림지를 가진 나라는 아래 표와 같이 브라질, 칠레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대양주권 5개국이다.

<표 1-1-5>

개도국의 인공조림

(단위 : 백만ha)

구 분	1980		1995	
	조림면적	비율(%)	조림면적	비율(%)
계	40.2	100	81.2	100
아프리카	3.1	7.7	5.2	6.4
중남미	4.5	11.2	9.1	11.2
아시아,대양주	32.6	81.1	66.9	82.4

자료 : FAO, State of the World's Forests, 1997

<표 1-1-6>

인공조림지 보유 주요개도국

국 가	중 국	인도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베트남	한 국	칠 레	아르헨티나	태 국
면 적 (천ha)	33,800	14,620	6,125	4,900	1,470	1,400	1,015	547	529

자료 : FAO, State of the World's Forests, 1997

(국제협력과 행정사무관 안용덕)

2. 세계의 목재수급 동향

세계의 원목생산량은 1994년도에 급격히 증가하여 34억6,000만m³에 달하였다. 산업용 원목생산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에서 크게 회복되고 있으며, 개도국에서도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1994년에 세계 산업용 원목생산량은 약 14억6,700만m³으로 이는 1990년 수준보다 약 9%가 감소한 수치이다. 연료용 목재생산량은 개도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 연료용 목재생산량은 원목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

다. 이는 인구가 증가하고 농촌지역에서 목재가 여전히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에너지소비량의 5%를 목재에 의존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0.9%에 비해 개도국은 에너지의 15%를 목재로 충당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는 58%, 남미 15%, 아시아 11%로 저개발지역일수록 목재에너지 의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목재(제재목과 목재패널)와 종이의 대부분을 선진국이 소비하고 있으며 1인당 소비량이 개도국의 10배 이상이 된다. 1인당 연간 목재소비량을 보면 선진국이 가공목재 0.3m³, 종이 0.15톤이고 개도국은 가공목재 0.03m³, 종이 0.012톤에 불과하다.

<표 1-1-7>

세계 목재생산 및 소비현황(1994)

구분		연료목숱탄 (백만m ³)	산업용원목 (백만m ³)	제재목 (백만m ³)	목재패널 (백만m ³)	fiber furnish (백만톤)	종이·종이보드 (백만톤)
세계	생산	1,891	1,467	413	127	271	269
	소비	1,890	1,476	411	126	271	267
선진국	생산	191	1,051	303	92	219	213
	소비	193	1,070	298	97	211	199
개도국	생산	1,700	417	110	36	52	57
	소비	1,697	406	112	30	60	67

자료 : FAO, State of the World's Forests, 1997

세계인구의 1/5이하가 사는 유럽, 미국, 일본이 세계 목재의 절반이상을 소비하고 있으며, 세계 종이 생산량의 2/3이상을 소비하고 있는 등 임산물 수요의 증가와 교역확대를 조장하고 있으며 선진국이 앞장서고 있다. 열대산 원목 공급은 주요 아시아 생산국들이 환경규제와 관리규제를 강화함으로써 크게 영향을 받았고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열대산 목재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일부 수입국들이 열대산 목재를 온대산 목재로 대체하기 시작함으로써 아시아지역의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칠레나 뉴질랜드 등의 온대지방 국가의 수출이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

1994년에 열대산 제재목의 생산량은 생산국들의 국내소비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저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생산국들이 원목수출에서 가공품 수출로 전환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1994년에 세계 목재패널생산량은 전년도에 비해 4%가 증가하였다. 열대지방의 개도국에서 베니어판 생산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시아제국(諸國)의 수출주도 산업화가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4년에 제지 및 판지의 세계생산량은 10년간의 지속적인 산업발전에 힘입어 5%가 증가하였다. EC(8.5%), 북미(4.5%)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반면에 구소련지역과 일부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정등급의 제지에 있어서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함으로써 가격이 1993년의 가격폭등 이후 사상 최고치로 급등하였다.

<표 1-1-8>

품목별 5대 생산국(1994)

구 분	국별 생산비중 (%)
연 료 용	인디아(14), 중국(11), 브라질(10), 인도네시아(8), 나이지리아(5)
산업용원목	미국(27), 캐나다(12), 러시아연방(9), 중국(7), 브라질(5)
제 재 목	미국(23), 캐나다(15), 러시아연방(7), 중국(6), 일본(6)
목재패널	미국(25), 독일(8), 인도네시아(8), 캐나다(6), 일본(6)
fiber finish	미국(34), 중국(10), 캐나다(9), 일본(9), 독일(4)
종이.종이보드	미국(30), 일본(11), 중국(10), 캐나다(7), 독일(5)

자료 : FAO, Yearbook of Forest Products, 1994

1994년에 세계 목재펄프생산량은 EC와 북미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제지산업의 수요가 확대됨으로써 크게 회복되었다. 목재펄프와 목재칩의 교역량과 가격은 1993년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1994년 세계 제재목 생산량은 북미, EC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생산량 증가로 인해 1993년보다 다소 증가하였다. 침엽수 제재목의 가격은 1993년의 사상 최고 수준에서 하락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발틱연안 국가를 제외한 중앙 및 동유럽과 구소련지역에서는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침엽수 제재목의 생산량이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하여 1994년도 생산량은 900만 m^3 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생산량에 비해 35%나 감소한 것이다.

목재펄프의 세계생산량은 지난 5년간의 정체이후 1994년에 5%나 증가하였다. 이는 재생용지의 수급이 압박을 받아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현재 목재펄프 생산량을 확대시키는 것은 선진국에서의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크게 제한을 받고 있다. 그 결과, 목재펄프가격은 1994년 말에 급등하기 시작하여 1990년의 최고가격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 재고량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1994년에 임산물의 세계교역액은 펄프 및 제지수출가격이 크게 회복되고 일반적으로 수출량이 증가함으로써 인해 전년도에 비해 5%나 증가하였다. 더욱이 원목, 제재목, 그리고 목재패널의 가격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교역량은 원목과 열대산 제재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임산물에서 증가하였다.

FAO 자료에 의하면 세계의 목재소비량은 1994년에 약 34억6,000만 m^3 이 었으나 2010년에는 50%가 증가한 51억 m^3 로 예측하고 있고 제재목은 1993년에 432백만 m^3 를 생산하였으나 2010년에는 745백만 m^3 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목재패널은 1993년에 133백만 m^3 를 생산하였으나 2010년에는 313백만 m^3 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인구의 증가와 산업발달로 목재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상응한 공급의 지속증가는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92년 리우환경회의를 전후하여 환경보존의 강화를 세계적인 규범으로까지 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과 자원보유국의 자원보존의지가 보다 강해지고 있어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목재수급의 균형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림에 의한 자원증가, 소비의 절약과 함께 기술개발에 의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대체재 개발에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국제협력과 행정사무관 안용덕)

3. 임업분야 국제회의 동향 및 협약체결

가. 일반동향

1992. 6.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한 의제 21(산림황폐방지, 지속가능한 산림개발, 생물다양성 보존)과 산림원칙성명의 후속조치를 위하여 UN을 비롯한 국제기구(FAO, ITTO) 지역협의회(몬트리올, 헬싱키프로세스) 및 산림관련 비정부기구(NGO)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어 왔으며, 현재 이에 대한 방향 정립을 위한 국제적인 지침기준과 지표를 강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의 국내적인 이행을 위한 자국의 산림법령의 개정 등 활발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47차 UN총회(1992. 12)에서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에 의제 21의 이행상황을 검토·감시할 지속개발위원회(CSD) 설치를 결의하였다.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는 각국이 보고한 산림관련 사항과 산림원칙에 대한 국제기구 이행 전반을 최종 평가하기 위하여 동 산하에 산림에 관한 정부간패널(IPF)을 설립하여 1995~1997년까지 지속가능한 개발·이용 관리에 관한 지표개발 및 법적 구속력을 가진 포괄적 산림관련 국제규범 작성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UN지속개발위원회는 유엔차원에서 산림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산림패널을 승계하여 모든 정부가 참여 논의하는 정부간산림포럼(IFF)을 새로이 구성하여 지난 1997. 10월 제1차 정부간산림포럼을 뉴욕에서 개최하였으며, 향후 2000년까지 4차회의를 개최하여 최종안을 UNCSD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다. 제1차 회의 주요 논의의제는 다음과 같다.

- 국제 산림협약 체결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정부간 협상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설치 논의

- 모든 형태의 산림, 특히 개발도상국 산림의 경영, 보존, 개발활동의 지원을 위한 국제기금 설치 검토
- 모든 산림제품의 비차별적인 국제교역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문제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지원을 위한 기술이전 문제
- 산림훼손의 원인분석, 전통적인 산림관련 지식, 환경보호를 위한 산림 복구문제, 산림보존문제 등

산림문제는 관련 국제회의외에 기후변화협약 회의와 생물다양성협약 회의에서도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1997. 11, 일본 도쿄)에서 1990년 기준대비 1차 목표기간(2008-2012)에 온실가스 배출 평균 감축량은 미국 7%, 일본 6%, EU평균 8%, 전체평균 5.2%이며, 우리 나라는 아직 개발도상국들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지만 OECD에 가입한 선발 개도국으로서 감축목표를 설정토록 계속 압력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책이 시급하다.

교토회의에서는 토지이용변화와 산림부문에서의 배출/흡수량을 감축목표 이행실적에 반영기로 하였다. 목표년도의 순 흡수량이 기준년도(1990년)의 순 흡수량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만큼 산업부문에서 더 배출할 수 있으므로 온실가스 주흡수원인 산림의 보전과 이의 확대가 국내 대응책으로 주요하게 떠오르고 있다.

나. FAO 제13차 산림위원회

FAO 산림위원회는 2년마다 FAO 본부인 로마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13차회의는 1997. 3월에 개최된 바 있는데 이 회의에 산림청에서는 임업정책국장의 1명이 참석하였다. 주요의제는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과정 및 정부간 산림패널(IPF) 등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후속조치에 대한 것이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주요 논의사항은 산림자원 조사평가의 강화, 기준 및 지표의 정의, 임산물 무역촉진, 국가산림계획 이행 및 국제적 제도체제이다.

정부간 산림패널(IPF) 주요 의제는 일반동향에서 전술한 바의 정부간 산림포럼에서 논의한 내용과 같으며, 유엔기구인 FAO 차원에서 이에 대한 기본입장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외에 산림위원회와 FAO 지역임업위원간 역할분담, 1996. 11 로마에서 개최된 지구식량정상회의 활동계획에서 임업에 미치는 영향, 산림유전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이 논의되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과 지표에 대한 국내적 이행은 이미 캐나다, 미국, 러시아 등은 이론적 단계를 정립한 후, 산림모델링을 현지에 설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 국내 적용체계의 수립을 위하여 선진모델링 현지방문을 통하여 관리, 경영 현황 등 관련자료의 수집 분석이 필요하다.

유엔가입으로 우리 나라의 FAO 분담금이 1997년 280만\$에 달하고 있으나 임업분야에서 관련 전문가의 FAO 진출은 전무한 실정이다. 계속해서 FAO에서는 관련 전문가의 채용공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나 마땅한 임업전문가를 보낼 재원이 없는 형편이다.

FAO에 막대한 국고를 지원하는 만큼 그에 상응한 전문가의 진출이 요구되고 있다.

산림위원회 14차회의는 1999. 3월 로마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다. 국제열대목재 (ITTO) 이사회

국제열대목재 제22차 이사회가 1997.5.21~29간 볼리비아 산타크루즈에서, 제23차 이사회는 1997.12.6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되었다. 매년 상·하반기에 2회 개최되며 상반기에는 열대목재생산국에서, 하반기에는 ITTO 본부가 소재한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되고 있다.

국제열대목재이사회는 그 구성원이 50개 회원국으로 생산국 27개국, 소비국 23개국이 모여 열대림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달성, 열대목재 교역추진과 열대산림국가의 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생산국은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순이며, 소비국 순위는 일

본, 중국, 한국 순이다. 우리 나라는 1960년대의 하반기에서 1980년대초까지 산업화 과정에서 열대목재 생산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열대목재 원자재를 들여와 이용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의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1970년대에는 최대 합판생산국 이기도 하였다.

열대 산림국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에 속한 나라들로 원주민의 생계유지를 위한 화전경작으로 매년 수백만ha의 산불을 발생시키고, 지나친 남벌과 도벌 등은 열대산림의 파괴를 불러오고 있어 지구산소 공급원인 열대림의 보존은 전 세계의 주요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상품에 대한 통합프로그램으로부터 독립하여 1983년 열대목재협정을 채택, 1986년 11월 국제열대기구(ITTO)를 결성, 일본 요코하마에 본부를 두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86년부터 1997년까지 행정분담금으로 1,678천\$을 납부하였으며, 처음으로 열대산림사업지원금(특별회계) '96년-10천\$과 '97년도에 100천\$을 인도네시아, 가이아나, 가봉, 볼리비아, 피지, 중국, 필리핀에 10천\$-20천\$을 지원했다. 1997년 하반기에 우리 나라는 IMF 금융지원을 받는 입장이 되어 열대 산림국에 대한 사업비지원은 당분간 어렵게 되고 있다. 일본은 매년 15,000천\$ 내외를 지원, 전체 사업비의 80%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비지원은 열대산림국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의한 산림경영과 목재가공산업에 기술적인 지원을 통하여 열대림의 생태계 보존과 생물다양성을 유지함으로써 지구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라. 기후변화협약

우리 나라의 가입은 1993년 12월 동 협약에 비준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제1차 당사국총회(1995. 3, 베를린)에서는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강화를 위해 베를린 위임(Berlin Mandate)을 결정하였으며, 제2차 당사국총회(1996. 7, 제네바) 각료회의에서는 각료 선언을 채택하여 베를린 위임사항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채택하였다.

제3차 당사국총회(1997.12, 교토)에서는 기후변화협약 부속의정서를 채택하여 선진국의 200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산림 등 흡수원(Sink)에 의한 배출 온실가스의 흡수기능을 새로이 추가하고 배출권 거래 및 공동이행 등의 도입으로 의무이행의 신축성을 제고하였다.

교토총회에서는 선진국의 200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에 대한 합의로 향후 한국등 선발개도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무부담 압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미국 상원의 결의를 통해 한국, 멕시코(OECD 가입국), 중국, 인도에 대하여 의무국가로 규정하였으며, 금년 5월 미국 Ulbright 국무장관 방한시 우리 나라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미국의 강한 압력이 예상된다.

교토회의 이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주요 의제로 다루다가 본회의 이후 흡수원을 고려한 순배출량 개념을 도입하여 산림의 중요성이 급부상되고 있다.

1998년 11월초 제4차 당사국총회가 아르헨티나에서 개최 예정이며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조정실의 주관하에 범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산림청은 산림대책반을 6월중 구성하여 흡수원의 보전 및 확대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마. 생물다양성협약

우리 나라는 1994. 10월 동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그동안 1994~1996년까지 3차례의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었으며, 1998. 5월에는 제4차 당사국총회가 슬로바키아에서 개최되었다.

생물다양성은 지구생태계의 구성요소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현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귀중한 자원이다

인구증가, 산업화, 열대림파괴 등으로 지구생물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1990년대는 하루에 140여종이 소멸하였으며, 2000년대는 전체 종수의 20%가 멸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체제 구축을 위한 지구적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모색키 위해 1992 브라질 리우에서 생물다양성 협약을 채택하게 되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물다양성과 그 구성요소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의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에 관한 의무, 기술에의 접근 및 기술이전에 관한 의무, 생명공학의 관리 및 이익배분, 토착민·지역사회 전통지식 보호인정 등이다.

앞으로 산림청에서는 산림생물다양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자생식물의 자원화·산업화를 위한 특허출원을 장려하여 국가식물자원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화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협력과 임업서기관 전진표)

4. 외국의 임업동향 및 임업정책

가. 말레이시아 임업현황

(1) 산림현황

총 국토면적 32.97백만ha 중 58%인 19.12백만ha가 산림이다. 지역별 산림을 보면 말레이 반도 6.02백만ha, 사바주 4.40백만ha, 사라와크주 8.70백만ha로 구성되어 있다.

<표 1-1-9>

말레이시아 산림면적

(단위 : 백만ha)

지역	토지면적	산림면적					
		총계		영구산림지 (PFE)			기타
		면적	점유율(%)	보전림	생산림	계	
말레이반도	13.16	6.02	45.7	1.90	2.77	4.67	1.35
사바	7.37	4.40	59.7	0.49	2.85	3.34	1.06
사라왁	12.44	8.70	69.9	0.60	5.40	6.00	2.70
계	32.97	19.12	58.0	2.99	11.02	14.01	5.11

주 : PFE : Permant Forest Estate(영구산림지)
 기타 : 국립공원 야생동물서식지, Stateland Forest(타용도 전환림)등
 자료 : Ministry of Primary Industries Malaysia, 1994

영구산림지는 합리적인 토지이용의 개념하에 전국에 걸쳐 충분한 면적을 산림으로 영구히 보전코자 지정되었으며, 보존·생산·휴양·연구 및 교육의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다. 영구산림지 중 약 78%인 11.02백만ha가 목재 및 비목재임산물의 생산을 위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지침하에 관리되고 있다.

나머지 2.99백만ha는 토양, 물, 야생동물, 환경 등을 목적으로 보전림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편 타용도로의 전환을 위해 약 4백만ha에 달하는 Stateland Forest가 있으며, 약 1백만ha에 달하는 천연림이 국립공원과 야생동물서식지의 보호를 위해 지정되어 있다. 천연림의 임상별 분포를 살펴보면, 약 16.78백만ha의 면적이 Dipterocarp림으로 전체 산림면적의 88%를 점유하고 있다.

<표 1-1-10>

말레이시아 천연림의 임상별 분포

(단위 : 백만ha)

지역	토지면적	산림면적				점유율(%)
		계	Dipterocarp	Swamp	Mangrove	
말레이반도	13.16	6.02	5.55	0.30	0.17	45.3
사바	7.37	4.40	3.93	0.19	0.28	60.2
사라와크	12.33	8.70	7.30	1.24	0.16	70.6
계	32.86	19.12	16.78	1.73	0.61	58.2

자료 : Ministry of Primary Industries Malaysia, 1994

2) 산림행정

수도 쿠아라룸푸에 본부를 둔 산림청(Department of Forestry)은 제1차 산업부(Ministry of Primary Industries)산하에 있으며, 청장은 산림작업부(Forest Operation Division) 및 산림개발부(Forest Development Division)로 대별하여 각 부서별 차장 1명과 차장보 1명을 두어 감독하고 있으며 하부조직으로 다시 8개부(Unit)를 두어 임업을 경영하고 있다.

지방산림조직을 보면 말레이시아 반도 10개주, 사라와크주 및 사바주 등 도합 12개주에 지방산림청 (State Forestry Department)이 설립되어 있다.

3) 임업정책

- 산림경영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민과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이익을 극대화한다.
- 국토 보전으로부터 최대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조림, 갱신을 통한 산림개발계획을 추구한다.
- 보존임지 외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보장하고, 우선 토지개발기관에 의한 정확한 협동계획으로 자원의 이용과 고용창출기회를 부여한다.

- 산림의 최대수확달성 등을 목표로 강력한 연구계획을 수행한다.
- 임산업에 부응키 위한 인력과 요원을 육성한다.
-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사회의 이해를 돕고 후손들에게 임업의 중요성을 알린다.

나. 대만의 임업현황

(1) 산림현황

산림은 전 국토의 52%인 1,865천ha로서 이중 용재생산림은 1,987천ha(96%)에 이르며 산림축적은 ha당 175m³이다. 그리고 산림소유 형태는 국유, 공유, 사유로 구분되어 있다.

<표 1-1-11> 대만의 임상별 면적

구분	임상별	면적(ha)	%	비고
용재림	침엽수림	415,200	23	용재림 소유현황 국유림 1,631,792(87%) 공유림 46,782(3%) 사유림 186,126(10%) 계 1,864,700(100%)
	혼효림	156,400	9	
	활엽수림	1,081,900	6	
	대나무	133,000	7	
	계	1,786,500	100	
비용재림	침활혼효	78,200		
		1,864,700		

자료 : Forestry of Republic China, 1992

(2) 산림행정

대만의 헌법에 의하면 임업 및 임업관계 업무는 중앙정부에 의하여 시행되며 그 효력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미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산림법에 근거하여 조직된 임업행정조직을 보면 대체로 중앙에는 농업위원회 소속하에 임업국을 두어 임업행정을 총괄하며, 도청 및 시에는 농림국 또는 농림건설국을, 2개 특별시는 건설국을 두어 임업을 추진하고 있다.

(3) 산림정책

산림자원의 증식과 수자원 및 토양보존을 제일 목적으로 하여 3대 임업정책을 수립 1975년에 발표하였다.

첫째, 국토를 보존하여 미래세대에 물려준다.

둘째, 보호림 구역을 확대한다.

셋째, 국유림은 대만정부의 산림청과 임업연구원이 관리한다.

전기한 기본목적을 이루기 위해 1976년 산림경영법을 제정하여 산림을 관리해 왔으며 1991년에는 대만 산림청 및 행정법규를 제정하였다. 주요내용은 임업행정체계 수립, 산림자원보존, 하천관리강화, 산림경영 및 보호, 휴양림개발, 자연생태계 보호 등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4) 산림경영

(가) 산림경영 기본계획

계획기간은 10년간으로 하고 중간 점검은 5년마다 시행하며 종료년도에는 재수정한 후 차기계획을 수립한다. 경영계획에 포함된 사항은 산림자원보존계획, 국토보호계획, 자원의 다목적이용, 임도개설과 산림보호 등이다.

(나) 조림사업

인공림은 대만산림의 36%인 676,903ha이다. 대만의 국유림은 전산림의 2/3인데 임상을 보면 침엽수, 활엽수, 대나무로 구성되어 있다. 공유림과 사유림은 대체로 해변의 방풍림, 농지보호방풍림, 보존림, 경제림 등 대만인공조림의 48%인 325,994ha이다.

(다)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

홍수조절, 수원함양, 하상정지, 사태방지, 토양유실 방지 등 그 기능이 다양하다. 이러한 목적으로 439,419ha를 「보안림」으로 지정고시하였다. 이를 소유별로 보면 국유림이 96%, 사유림이 4%를 점하고 있다.

(라) 산림휴양림 조성

지난 20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생활양식이 바뀌어 여가와 오락생활이 국민생활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대두되었다. 그러므로 1965년 정부는 국민의 욕구에 부응코자 산림욕장, 야외캠프 등 휴양림을 조성케 되었다. 현재 5개소 대규모 산림휴양림과 10개소의 소규모 휴양림을 설립하였는데 매년 약 22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마) 병충해 방제 및 산불방지

고온다습한 기후는 각종 병충해발생 여건의 원인이 되어 결국 건강한 인공조림지를 훼손시키고 있다. 아직까지도 원인불명의 병원이 많다. 한편 인위적 피해를 막기 위하여 10개소의 경방탑설치 268핸드폰 연락망, 578개소 유선 전화 연락소, 방화선 구축, 산불 진화기 등 모든 지역을 커버할수 있으며 현지 작업장과의 연락망도 구축해 놓았다.

(바) 임산물 생산

목재소비형태별 소비량은 원목(1.53%), 제재목(22.84%), 합판(29.1%), 펄프(36.7%) 및 기타(9.75%)로서 1990년 총소비량은 976만m³에 이른다. 1950년대 국내소비량을 자국에서 충당하였으나 1970년도부터 수요의 대부분을 외재로 충당하기에 이르렀다.

1953 ~ 1969 국내재 공급 86%

1970 ~ 1975 국내재, 외재 각 50%

1976 ~ 1991 외재 95% 수입

1992 ~ 이후 외재 계속 수입

용재외 부산물생산 소득액은 최근 연간 790백만\$에 이르는데 이는 임산물 생산 총량의 18.6%로 주로 대나무순, 과일류이다.

(국제협력과 임업서기관 전진표)

제2절 국내 임업동향

1. 산림자원 현황

우리 나라의 1997년말 현재 산림면적은 6,441천ha로 국토면적의 65%가 산림이다. 이 중 국유림은 1,414천ha(22%), 공유림은 488천ha(8%)이며, 사유림은 4,539천ha로 전체 산림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산림은 그동안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주택 산업시설 용지 등 타목적으로 전용되어 매년 감소되어 왔다. 1991년까지는 연평균 8천여ha가 전용되었으나 그 후로는 연간 4천여ha씩 감소되어 산림의 타목적 전용은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1-12>

소유별 산림면적 및 축적

(’97년말 현재)

	면적		축적		ha당 축적
		%		%	
계	6,441천ha	100	340,824천m ³	100	53m ³
국유림	1,414	22	112,634	33	80
공유림	488	8	24,868	7	51
사유림	4,539	70	203,322	60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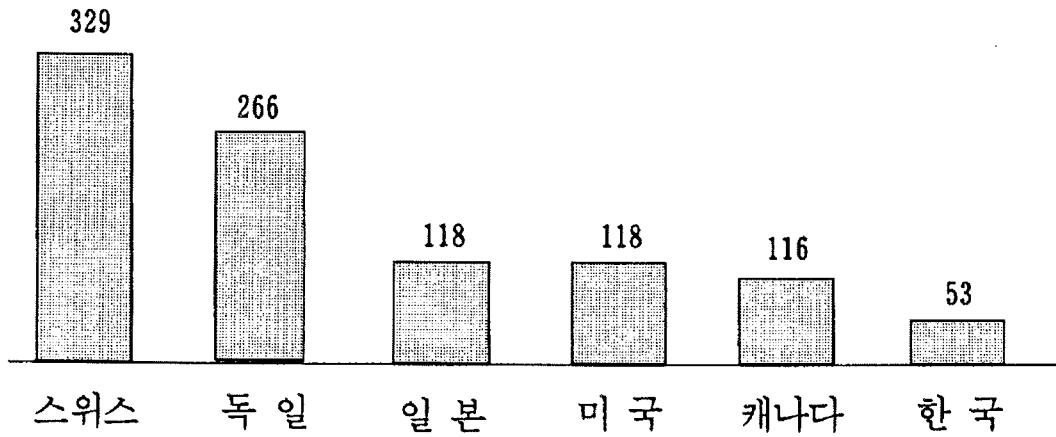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임목 축적은 제1,2차 치산녹화 10년계획(1973~1987)과 제3차 산지자원화 계획(1988~1997)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음으로써 1997년말 임목 축적은 ha당 53m³가 되었다. 이는 기본계획 추진 이전인 1972년도의 11m³에 비하면 4.8배 이상 증가 된 것이다. 임상별 산림면적은 침엽수림이 2,788천ha로 전체의 43%이고, 활엽수림은 1,686천ha로 26%, 혼효림은 1,778천ha로 28%이며, 기타 죽림·무림목지는 189천ha로 3%이다.

<그림 1-1-1>

선진임업국의 ha당 임목축적

(단위 : m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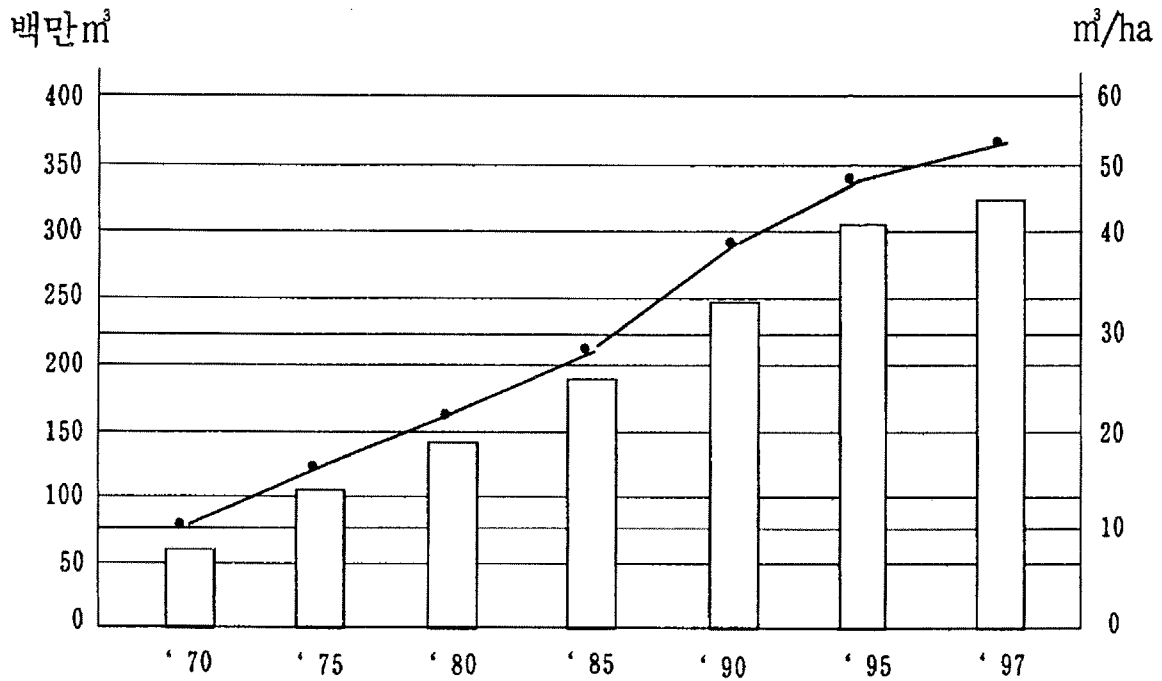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그림 1-1-2>

임목축적 및 ha당 임목축적 추이

■ 총 임목축적

● — ha당 임목축적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영급별 산림면적 분포는 30년생 이하가 5,241천ha로 전체 산림면적의 84%이고, 31년생 이상은 1,011천ha 16%이며, 임목축적은 30년생 이하가 전체 축적의 67%인 227,711천m³이며, 31~40년생은 18% 61,168천m³, 41년생 이상은 15%로 51,945천m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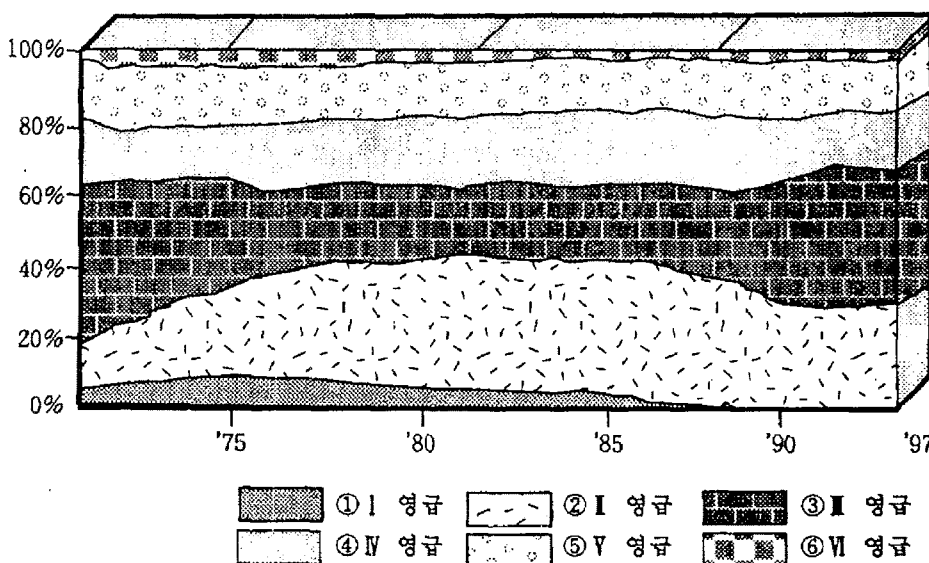
〈표 1-1-13〉 **임상별·영급별 임야면적**

(단위 : 천ha)

	계	1~10년생	11~20년생	21~30년생	31~40년생	41년생이상
계	6,252 (100%)	862 (14)	2,299 (37)	2,080 (33)	620 (10)	391 (6)
침엽수림	2,788	566	1,077	865	200	80
활엽수림	1,686	156	464	636	230	200
혼효림	1,778	140	758	579	190	111

주 : 총 면적에서 죽림과 무림목지 등 189천ha는 제외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그림 1-1-3〉 **영급별 임목축적 추이**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임업정책과 임업서기관 윤경덕)

2. 우리 나라의 임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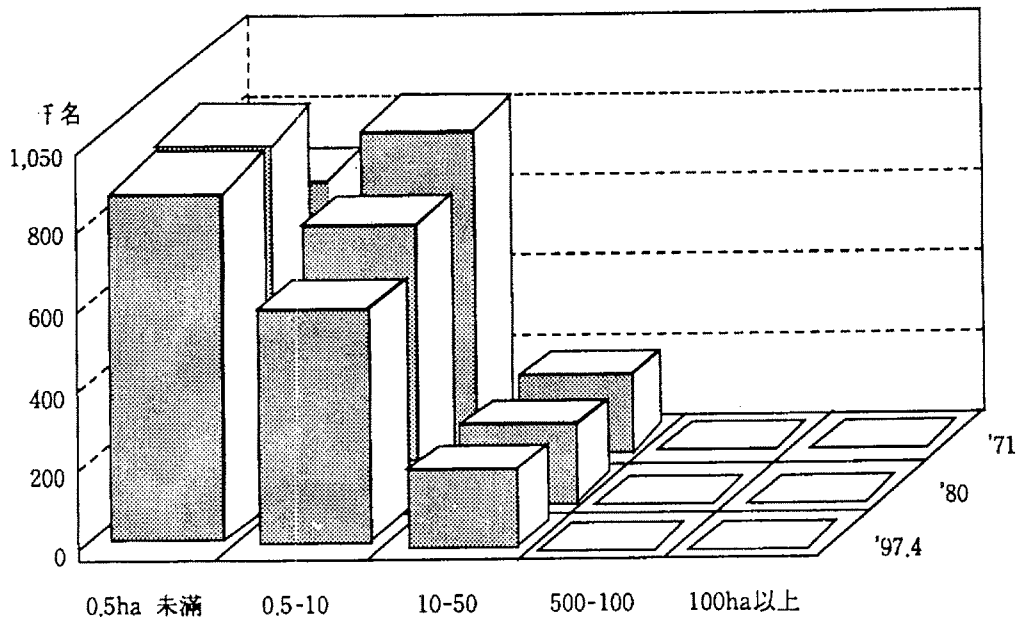
우리 나라는 1·2차치산녹화 10년계획에 이어 제3차 산지자원화계획을 '97년도에 마무리 지음으로써 국토녹화와 산림자원조성의 기반은 다졌으나, 산림자원은 녹화단계를 막 벗어난 어린 나무가 대부분이고, 임도 시설 등 경영기반 마저 취약하여 임업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이 부진하다. 우리 나라 임업의 저성장 요인은 그 동안 국토녹화와 산림자원조성 위주의 임정을 펴온 탓도 있겠으나 투자 회임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수성과 산림소유 규모가 영세한 구조적인 문제점이 임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규모의 임업경영을 위해서는 적정면적의 산림이 필요하나 1997. 4. 15 현재 우리 나라 산주수는 2,054천명에 이르고 산주 1인당 평균 소유면적은 2.2ha에 불과하다. 이는 산림기본계획 추진 이전인 1971년도 보다 산주는 294천명이 늘어났고 평균 임야소유 면적은 0.4ha가 감소되어 소유 규모가 더욱 영세화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임야의 자녀상속과 묘지 등의 분할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평균 임야소유 면적은 더욱 작아질 전망이다.

1997. 4. 15 현재 임야소유 규모별 산주 비율은 10ha미만의 산주가 1,976천명으로 96%에 달하는 반면, 이들이 차지하는 산림면적은 2,443천ha로서 전체 사유림 면적의 53%에 불과하다.

<그림 1-1-4>

소유규모별 산주수 추이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또한 산주 중 46%가 산림소재 지역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재 산주이며,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면적은 사유림면적의 51%에 이른다. 이는 '71년도 부재 산주 16%에 비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났고 산림면적은 21%에서 51%로 2.4배나 늘어났다.

<표 1-1-14>

사유림 소유형태별 추이

(단위 : 천명, 천ha)

	산 주 수			면 적		
	계	소재산주	부재산주	계	소재산주	부재산주
1971	1,760 (100%)	1,485 (84%)	275 (16%)	4,583 (100%)	3,641 (79%)	942 (21%)
1996	2,198 (100%)	1,190 (54%)	1,008 (46%)	4,616 (100%)	2,248 (49%)	2,368 (51%)

주 : 위 표는 시·군·구 기준이며 전국기준 산주수('96)는 2,054천명임.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이와 같이 영세한 산림소유 구조는 규모의 임업경영을 어렵게 하고, 더욱이 증가 추세에 있는 부채 산주의 임야소유 목적이 산림경영 보다 재산 증식이나 토지확보에 있어 임업경영의 활성화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규모의 임업경영을 위하여 임야를 교환·분합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신규로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 개선을 통하여 소유 규모가 개선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임업정책과 임업서기관 윤경덕)

제2장 임산물 수급동향

제1절 임산물 생산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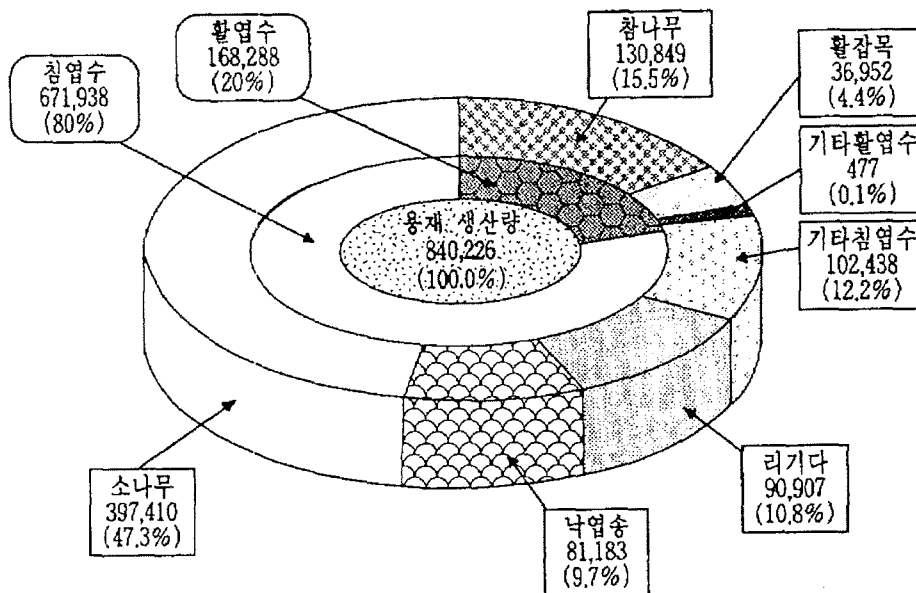
1997년도 임산물 생산액은 1조1,106억원으로서 전년도보다 5.8%가 증가되었는 바, 이중 목재부문 생산액은 5,254억원으로 전년도보다 7.3% 증가되었고 부산물부문 생산액은 5,852억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4.5% 증가되었다.

산림법상에는 임산물로 규정되어 있으나 국민총생산(GNP) 산출시 채석업으로 분류하는 토석류 생산액은 전년도의 10,575억원보다 1.4%가 증가한 10,725억원으로 약간 증가추세를 보였다.

토석류를 제외한 임산물 생산액의 품목별 구성비율은 종실류와 농용자재가 전체 임산물 생산액의 61.8%를 점유하여 제일 높고 그 다음은 버섯류 8.5%, 산나물이 7.9%순이다.

<그림 1-2-1>

1997년도 임산물 생산액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1996년 대비 생산액 증감내역을 보면 연료 35.1%, 산나물 15.3%, 섬유원료 11.1% 증가한 반면 죽재 50%, 수지 36.4% 감소하였으며 특히 연료의 생산액 증가 추세가 특기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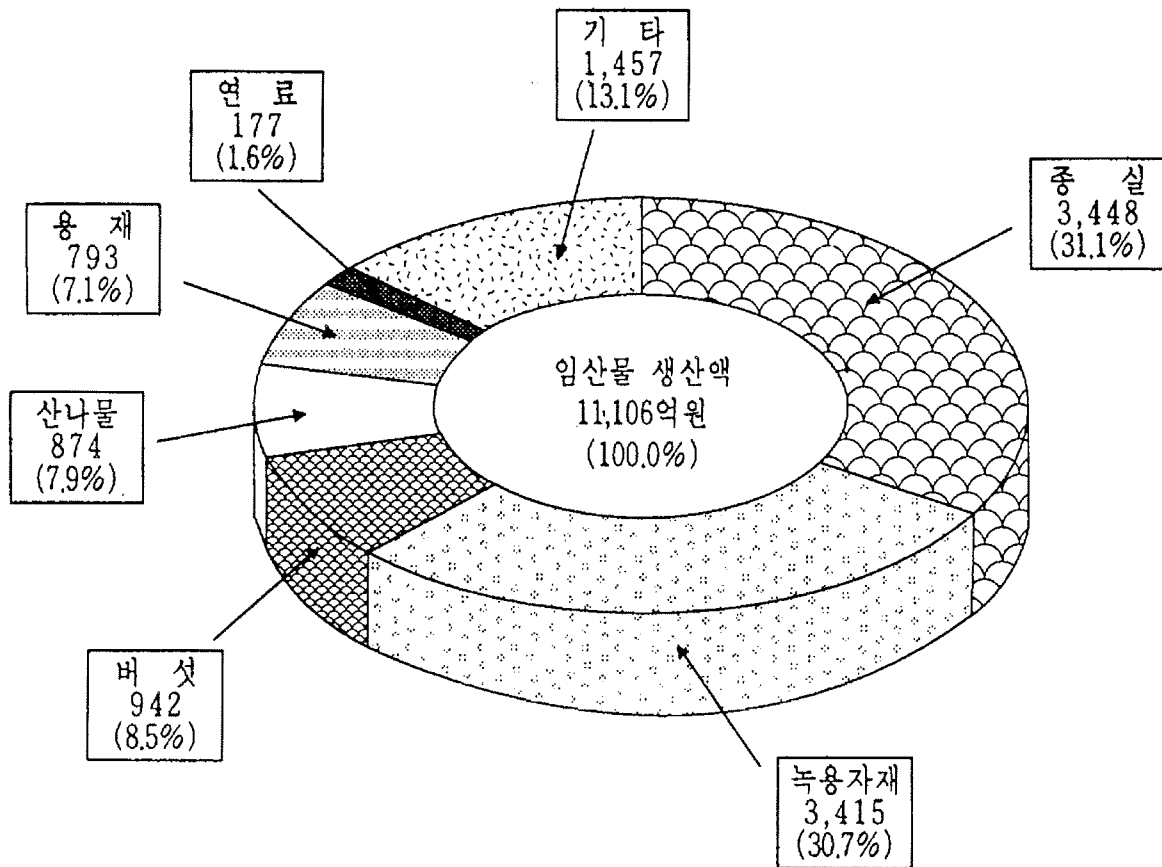
1. 용 재

1997년도 용재 생산량은 840천m³이고 생산액은 793억원으로 임산물생산액 11,106억원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수종별로는 소나무 397천m³, 참나무 131천m³, 리기다 91천m³, 낙엽송 81천m³, 활잡목 37천m³ 등으로 이들 5가지 용재가 전체용재 생산량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1-2-2>

1997년도 용재생산량

(단위 : m³)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1997년도 국내재 이용량은 815천m³로 1996년도에 비해 1.2% 감소하였다.

용도별 이용실태를 보면 펄프용재 330천m³, 표고자목 용재 114천m³, 건축용재 107천m³, 토목용재 51천m³, 연료용재 37천m³, 갱목용재 36천m³, 농용재 19천m³, 포장용재 10천m³, 기타 111천m³가 이용되었다.

수종별로는 침엽수가 총 649천m³로서 소나무 405천m³, 낙엽송 118천m³, 리기다소나무 90천m³, 잣나무 24천m³, 해송 8천m³, 삼나무 3천m³, 편백 1천m³가 이용되었고, 활엽수가 총 166천m³로서 참나무 152천m³, 아까시나무 1천m³, 기타 수종은 12.1천m³가 이용되었다.

2. 종 실 류

임산물 생산통계 조사대상 종실류는 밤, 호두, 대추, 잣, 도토리, 은행, 비자, 산딸기 및 기타 종실류인 머루, 다래, 산초, 개암 등이다.

<표 1-2-1>

연도별 종실류 생산량

(단위 : M/T)

	'90	'91	'92	'93	'94	'95	'96	'97
계	95,801	102,005	117,549	93,136	119,169	112,070	126,741	146,039
밤	85,043	89,747	101,216	80,994	100,163	93,655	108,346	129,673
대 추	5,953	7,578	11,216	7,038	12,560	13,180	13,969	11,061
호 두	906	1,023	1,118	1,173	1,514	1,311	1,149	1,167
잣	868	715	435	969	1,578	1,084	496	1,004
기 타	3,301	2,942	3,038	2,962	3,354	2,840	2,781	3,134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1997년도 종실류 생산량은 146,039M/T이고 생산액은 3,448억원으로 임업 총생산액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2%가 증가하였다.

주요 품목별 생산량은 밤 129,673M/T, 대추 11,061M/T, 도토리 1,663M/T, 호두 1,167M/T, 잣 1,004M/T 등이며, 5가지 종실이 전체종실류 생산의 대부분(99%)을 차지하고 있다.

(임산물유통과 사무관 이규태)

3. 버섯류

주요 임산버섯은 송이, 표고, 느타리, 목이버섯 등으로 1997년도 버섯류의 총 생산액은 942억원이며 임산물 생산액의 8.5%를 점유하고 있다.

품목별 생산은 표고(3,800M/T, 676억원), 송이(243M/T, 251억원), 자연생 느타리(99M/T, 5억원)순으로 생산되었다.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자연식품 이용이 일반화 되어 밤, 잣, 표고, 산나물 등의 국내소비가 증가됨에 따라 최근 값싼 저질품이 중국 등으로부터 다량 수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국내산 선호로 생산증가와 함께 가격도 대부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임산물유통과 사무관 이규태)

<표 1-2-2>

연도별 버섯류 생산량

(단위 : M/T)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계	2,903	2,997	2,424	3,647	3,231	3,143	4,106	4,325	4,260
송 이	954	945	324	773	137	146	654	168	243
표 고	1,530	1,648	1,761	2,254	2,580	2,694	2,824	3,404	3,800
목 이	26	24	21	64	27	28	25	26	22
느타리	219	87	107	220	168	134	464	617	99
기 타	174	293	211	336	319	141	139	110	96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제2절 임산물 수출입 동향

1. 임산물 수출

1997년도 임산물 수출액은 3억 4천만\$로서 1996년보다 16% 감소하였으며,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합판, 마루판, 섬유판, 제재목, 석재, 밤, 송이버섯, 표고버섯 등이다

품목별 가격경쟁력의 전반적인 하락, 국내 생산량 저조, 국제경기 침체가 맞물려 임산물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국산재를 원자재로 하는 섬유판은 생산시설 확충 및 기술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결과 수출이 전년대비 134%로 급증하였다.

품목별 수출비중은 석재 28%, 밤 26%, 합판 9%, 송이 9%, 섬유판 8%, 마루판 5%, 제재목 3%, 표고 2%, 기타 10% 순이며, 국별 수출비중은 일본 74%, 중국 11%, 홍콩 3%, 미국 2%, 네덜란드 2%, 기타 8% 순이다.

<표 1-2-3>

임산물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

(단위 : 천\$)

품 목 별	1994	1995	1996	1997
계	511,132	504,554	405,205	339,072
목 재 류	111,988	118,639	121,806	109,593
- 합 판	38,987	47,699	53,506	30,624
- 섬 유 판	3,412	7,764	11,550	27,035
- 제 재 목	18,259	15,836	11,183	9,831
- 기타목제품	54,742	55,104	57,117	69,138
석 재 류	209,330	176,932	122,563	93,693
산 립 부 산 물	189,814	208,983	160,836	135,786
- 밤	140,707	114,768	112,871	88,393
- 송 이	25,458	64,527	27,563	30,088
- 표 고	11,612	14,658	9,415	8,292
- 기 타	12,037	15,030	10,987	9,013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표 1-2-4>

임산물 국별 수출실적(1997)

(단위 : 천\$)

국 별	계	목재류	석재류	산림부산물
계	339,072	109,593	93,693	135,786
일 본	249,567	34,202	91,760	123,605
중 국	37,215	34,326	720	2,169
홍 콩	9,733	5,842	22	3,869
미 국	7,393	3,334	444	3,615
네덜란드	6,918	6,689	5	224
러시아	5,068	4,937	33	98
독 일	3,899	3,676	13	210
아랍에미리트	2,174	2,174	-	-
대 만	1,804	1,231	244	329
싱가포르	1,743	988	152	603
영 국	1,460	1,434	2	24
포르투갈	1,405	1,405	-	-
캐나다	1,042	905	5	132
기 타	9,651	8,450	293	912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2. 임산물 수입

1997년도 임산물 수입액은 25억 8천 4백만\$로서 1996년도에 비하여 7% 감소하였으며, 주요 수입품목은 원목, 제재목, 합판 등 목재, 석재, 로진, 아몬드, 고사리, 표고버섯 등이다.

전반적인 수입동향을 보면 합판제조용으로 원목의 일정부분을 대체하는 추세에 있는 단판과 산림부산물중 로진, 도토리, 표고버섯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의 수입이 감소하였다.

국내 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원목의 경우 수입량은 8,266천m³로 전년보다 3% 증가하였으나 단가하락으로 수입액은 877백만 \$로 9% 감소하였으며, 라디에타소나무 수입점유율(수량 4,992천m³, 전체수입의 60% 점유)이 확대됨에 따라 뉴질랜드, 칠레산 원목수입은 증가하였다. 국별 점유율은 뉴질랜드 41%, 칠레 18%, 러시아 11%, 미국 9%, 파푸아뉴기니 5%, 말레이시아 5%, 기타 11% 순이다.

품목별 수입비중은 목재류 92%(원목 37%, 합판 19%, 제재목 19%, 기타 17%), 석재류 4%, 부산물 4%이며, 국별 수입비중은 인도네시아 17%, 말레이시아 16%, 미국 14%, 뉴질랜드 12%, 중국 11%, 칠레 9%, 파푸아뉴기니 3%, 기타 18% 순이다.

(국제협력과 행정사무관 박기남)

<표 1-2-5>

임산물 주요품목별 수입실적

(단위 : 천\$)

품 목 별	1994	1995	1996	1997
계	2,552,230	2,778,983	2,787,995	2,583,884
목 재 류	2,407,152	2,596,257	2,554,726	2,366,262
- 원 목	1,011,575	1,047,332	961,860	877,117
- 제 재 목	372,835	408,530	464,494	452,520
- 단 판	55,460	48,893	63,932	111,708
- 합 판	535,927	593,861	528,867	449,052
- 파티클보드	72,267	91,318	76,734	53,651
- 섬유 판	68,585	39,596	26,226	25,350
- 기타목제품	290,230	366,727	432,613	396,864
석 재 류	58,122	91,226	113,099	97,595
산 립 부 산 물	86,956	91,500	120,170	120,027
- 대 나 무	691	511	586	561
- 로 진	15,494	21,486	25,161	27,099
- 등 나 무	786	872	500	391
- 기 타	69,985	68,631	93,923	91,976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표 1-2-6>

임산물 국별 수입실적('97)

(단위 : 천\$)

국 별	계	목 재 류	석 재 류	산림부산물
계	2,583,884	2,366,262	97,595	120,027
인도네시아	437,952	432,217	248	5,487
말레이시아	403,053	402,822	-	231
미 국	354,273	324,463	5,058	24,752
뉴질랜드	304,055	303,564	-	491
중 국	293,838	169,355	48,585	75,898
칠 레	222,748	222,592	-	156
러 시 아	77,384	77,101	2	281
파푸아뉴기니	67,304	67,304	-	-
호 주	52,670	51,290	54	1,326
카 나 다	49,530	47,992	1,521	17
일 본	37,739	31,523	5,555	661
솔 로 몬	32,994	32,994	-	-
기 타	250,344	203,045	36,572	10,727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제 2 편 1997년도 임정의 성과

여배우

제1장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

제1절 산지자원화계획 평가

1. 산지자원화계획의 성과

산지자원화계획기간(1988~1997) 동안의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을 살펴 보면 첫째, 32만ha의 조림과 천연림보육 등 303만ha의 육림사업 실행으로 산림자원 조성기반을 구축하였다. 둘째, 임도 및 유통시설의 확충으로 임업의 생산성 향상과 임업의 산업화 여건을 조성하였다. ha당 임도밀도가 1987년 0.15m에서 1997년 1.9m로 향상되고 임산물종합유통센터 등 92개소의 유통시설을 설치하였다. 셋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수련장 등 다양한 휴양시설을 110개소 조성하고 산림문화영역의 개발과 다양한 문화행사의 개최로 쾌적하고 건전한 산림휴양·문화 정착에 기여하였다. 넷째, 낙후된 산촌의 정주환경 개선과 소득원 개발로 활기찬 산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다섯째, 목재자원의 안정적 확보기반 확대를 위하여 해외조림을 1993년부터 시작하여 23천ha를 실시하였으며 자원보유국과 임업협정을 체결하는 등 산림자원의교를 강화하였다.

<표 2-1-1> 산지자원화계획기간 투자실적

계 획	실 적	비 율
2조4,285억원	5조2,987억원	○ 계획대비 : 218% ○ 불변가격 : 146%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특히 산지자원화계획 후반기에는 「산림제도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경영 임정을 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첫째, 전국의 산림을 기능과 이용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편하여 산지

관리체계를 정비하였다. 둘째, 「임업진흥촉진법」을 제정하고 임업세제를 개선하여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셋째, 국유림관리조직을 지방산림관리청으로 개편하고 책임경영제를 도입하여 현장경영체제로 전환하였다. 넷째,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산불방지조직을 보강하고 진화장비를 확충하였다.

2. 미흡한 점

전체산림의 70%를 차지하는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고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의 추진이 미흡하였다. 국내재의 수익성 저하, 산림소유규모의 영세화 등으로 인한 산주들의 자발적인 산림투자 기피로 간벌 등 육림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다. 사유림 경영을 선도할 독립가, 후계자 및 협업체조직 등 경영주체에 대한 육성지원과 산촌인구의 감소와 임금상승에 따른 임업노동력 확보 대책도 그 실적이 미미하였다.

한편, 시·군 통합 이후 도시지역산림은 전 산림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그간 국토녹화와 산지자원화 우선정책 추진으로 도시림 조성·관리를 위한 정책의 개발과 추진에 소홀하였다.

(임업정책과 서기관 류광수)

제2절 제4차 산림기본계획 수립

산림기본계획은 1973년 제1차 치산녹화 10년계획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매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 추진해 왔다. 그간 3차례에 걸친 기본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우리 나라는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조기녹화성공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제4차 산림기본계획』은 지난 1·2·3차 산림기본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국내외 임업여건을 감안, 21세기 우리 임정이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선진 일류국가의 격에 걸맞는 산림복지국가 건설과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산림정책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1.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가. 정책목표

제4차 산림기본계획은 정책목표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에 두고 「보다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경쟁력있는 임산업」을 육성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증진시켜 나가고자 한다.

나. 추진전략

첫째, 「산지」는 산림의 다양한 이용수요를 조화롭게 충족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산지관리체계를 확립한다.

둘째, 「임업」은 경영기반 구축과 지속적인 경제림화 촉진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한다.

셋째, 「환경」에 있어 산림생태계 보전과 산림환경기능의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한다.

넷째, 「산촌」은 임업인 육성과 소득원 개발로 활력있는 정주 공간으로 조성한다.

2. 중점 추진과제

제4차 산림기본계획기간중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합리적 산지관리체계 확립, 경영입정의 촉진과 임업인 육성, 산림자원의 경제림화 촉진과 관리기반 구축, 임산업의 경쟁력 강화, 산림생물자원의 보전·관리 강화, 산림재해의 방지와 도시림 확충, 산림휴양·문화의 진흥과 산촌종합개발, 산림자원 외교의 강화와 남북 임업협력의 증진 등 8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가. 합리적 산지관리체계 확립

전국 산림을 임지별 이용목적에 따라 보전대상 산지는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개발대상 산지는 규제를 완화하여 토지공급 능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생산·공익임지는 전용기준을 강화하고 지역별로 총량규제해 나가며 준보전임지는 능동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산지개발시 산림경관을 보전하고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지개발 방식을 지양하고 자연친화적인 방식으로 산지를 이용하며 지형, 개발유형, 생태계보호 등을 고려한 산지개발 기준을 정립해 나갈 것이다

한편 산림의 경제·환경기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리, 경제, 생태적 환경을 기준으로 산림통합관리권역을 설정하고 현행 행정구역 단위의 지역계획체제를 향후 유역별 통합관리체제로 전환을 도모해 나가고자 한다.

나. 경영입정의 촉진과 임업인 육성

국유림은 책임경영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경영팀에 대한 사업실행의 자율권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역특성에 따른 계획적 경영을 유도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영팀별 담당구역 및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시범경영모델을 개발, 보급하며 경영성과 평가제도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사유림은 규모와 주체에 따라 영세산주의 소규모 산림은 협업경영으로, 부재산주 등의 방치된 산림은 대리경영으로, 독립가 등의 대규모 산림은 개별경영으로 경영을 차별화하고 임업투자의 장기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복합경영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고자 한다.

사유림 경영의 활성화를 위한 주체로 독립가, 임업후계자, 협업체를 육성하고 이들의 자율경영을 최대한 지원해 나가며 전문경영인 양성 훈련기관을 설립하고 임업기계·기술·기능인훈련원을 특성화하여 기술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다. 산림자원의 경제림화 촉진과 관리기반 구축

인공식재림과 보육천연림을 합한 「경제림」을 2050년까지 산림 면적의 55%수준인 350만ha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자원가치가 낮은 나무는 경제수종으로 개량하고, 어린 나무는 잘 가꾸어 1997년 현재 4%에 불과한 목재 자급률을 2007년에는 10%, 2050년에는 30%로 높여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영목적과 이용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우량천연림보육사업을 확대해 나가며 지역별 완결원칙으로 대대적인 육림 사업을 실행할 계획이다.

우량형질의 묘목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조림용종자는 전량 채종원 및 채종림에서 공급하는 국가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묘목생산시설을 현대화하며 OECD기준에 맞는 산림용 종묘의 품질보증제도도 도입해 나갈 것이다.

한편, 산림자원 관리와 경영의 기반이 되는 임도는 생산임지 중심으로 확충하고 우리 산림지형과 체형에 알맞는 기계장비와 작업시스템을 개발하여 임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한다. 외국에 비하여 임도시설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전국 기본임도망을 구축하여 1997년 현재 12,413km인 임도를 2007년까지 29,100km로 확대하여 ha당 임도밀도를 4.6m로 높여 나가며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보전형으로 시설해 나갈 계획이다.

라. 임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내재의 활용 촉진과 산림소득의 향상을 위해 목재산업과 소득전략품목을 육성시켜 나감으로써 임업의 산업화를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합판생산시설을 활엽수위주에서 원목도입이 용이한 침엽수시설로 전환하고 표준규격제와 품질인증제를 도입하며 국산재를 목조주택 및 가구산업용재로 생산 공급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MDF 등 보드류산업 육성으로 간벌 및 폐목재의 활용도를 증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단기소득임산물은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생산을 규모화하고 전문화하여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하고 직매장 등 유통시설의 확충과 정보망 구축으로 산지와 소비지의 직거래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마. 산림생물자원의 보전·관리 강화

산림생물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백두대간을 축으로 천연보호림 등 보전산림을 확대지정하고, 광릉수목원을 국립수목원화하여 산림생물자원 보전·관리의 중심센터로 육성하며 도 단위의 지방수목원을 확충하여 국립수목원과 연계한 현지의 보전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야생조수보호구역을 성역화(Sanctuary)하고 야생조수 실태조사와 서식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서식환경의 조성으로 적정밀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바. 산림재해의 효율적인 방지와 도시림 확충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를 확립해 나가고자 한다. GIS를 활용한 산불위험 예보 및 진행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중앙과 지방, 공중과 지상을 연결하는 산불종합통신망을 구축하며 대형헬기를 확충하여 과학적인 산불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솔잎혹파리 등 산림병해충에 대해서는 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조기발견과 적기방제를 실행하고 외래유입해충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수입목재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며 침단생물농약 개발, 내병충성 품종 선발육성 등 종합적인 방제를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산사태 및 토사유출에 대비하여 산사태발생정보지도를 작성하여 위험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방댐을 확충하여 산불 진화용 물확보 등 다목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의 녹색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획기간중 5대강유역 산림 116만ha를 집중관리해 나가고자 한다. 상류지역을 중심으로 수원함양보안림을 계획적으로 확대하고 수원함양기능이 높은 수종으로 개량하여 수자원 저장

및 정수능력을 증진해 나갈 계획이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지역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 도시림을 기능별로 구분하고 도시림 총량기준을 정하여 도시 기본계획에 반영하며 도시생활환경림의 조성을 확대하고 도시민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 산림휴양·문화의 진흥과 산촌종합개발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급증하고 있는 산림휴양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연휴양림 등을 확대 조성하는 한편, 가족단위의 쾌적한 휴양지를 조성하여 건전한 휴양문화의 정착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휴양시설은 지역특성에 따라 도시근교형, 산촌개발형, 산림산악형 등으로 특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숲속교육과 산림체험을 통한 청소년의 심성수련과 신체단련으로 제2의 화랑도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숲속수련장을 확대 조성함으로써 초·중·고등학생에게 보다 많은 수련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백두대간, 문화유적지 등을 포함하는 국토순례망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는 산림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산림문화축제를 개최하는 등 종합적인 진흥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의 46%를 차지하는 산촌이 국토의 균형발전과 산림관리의 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산촌인구가 유지내지 증가될 필요가 있다. 1995년부터 추진한 산촌개발사업을 투자효과가 높은 산촌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2007년까지 240개 마을을 개발할 계획이다. 개발모델을 지역특성에 따라 임업소득형·산림휴양형·농림업복합형 등으로 유형화하고 투자방향을 정립하여 특색있는 산촌을 조성하며 주거환경의 개선으로 활력있는 정주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 산림자원외교의 강화와 남북임업협력 증진

지구산림보전과 연계한 자원의 무기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외조림을 확대하고 산림자원외교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고자 한다. 국내자원만으로는 목재공급에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안정적인 산업용재 공급을 위하여 2050년까지 100만ha를 조림한다는 장기목표 아래 1997년까지 24천ha인 사업량을 2007년까지 260천ha로 확대해 나갈으로써 2050년에는 총목재수요의 50%를 해외조림목으로 충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산녹화 성공기술의 이전 등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동북아 중심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지구산림협약 제정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생물다양성협약 및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한 산림부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국익을 적극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북한의 황폐지 복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갈으로써 통일에 대비한 한반도 종합산림관리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다락밭 만들기, 연료채취 등으로 북한 산림이 황폐화되어 자연재해와 식량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 부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통일 후 국토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산림 실태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해 나가며 산림재해 복구지원 및 기술연구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임업정책과 서기관 류광수)

<표 2-1-2>

제4차 산림기본계획 투자 소요액

(단위 : 백만원)

분 야 별	사 업 비				
	합 계	국 고	용 자	지방비	자부담
합 계	13,378,159 (100%)	6,072,721 (45)	2,673,287 (20)	2,585,908 (20)	2,046,243 (15)
1. 산지관리체계의 확립	9,804	9,304	-	500	-
2. 경영임정 촉진과 임업인 육성	1,168,549	711,324	337,660	56,732	62,833
3. 산림자원의 경제림화 촉진과 관리기반 구축	3,733,733	1,941,656	459,642	943,130	389,305
4. 임산업의 경쟁력 강화	2,777,527	373,179	1,613,745	106,700	683,903
5. 산림생물자원의 보전·관리 강화	439,984	370,989	1,000	66,995	1,000
6. 산림재해방지와 도시림 확충	2,467,354	1,191,724	-	1,247,060	28,570
7. 산림휴양·문화의 진흥과 산촌종합개발	768,925	470,553	141,900	151,072	5,400
8. 국제임업협력 증진	1,038,859	46,360	119,340	-	873,159
9. 지원체계의 확립	973,424	957,632	-	13,719	2,073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표 2-1-3>

제4차 산림기본계획 주요지표 전망

구분	단위	1995	2007	장기전망				
				2010	2020	2030	2040	2050
□ 산림면적	천ha	6,452	6,374	6,359	6,317	6,292	6,283	6,288
<임상별>								
○ 경제림	"	2,342	2,875	2,967	3,229	3,427	3,457	3,472
- 인공식재림	"	2,064	2,252	2,281	2,345	2,385	2,415	2,430
- 보육천연림	"	278	623	686	884	1,042	1,042	1,042
○ 보전림	"	4,110	3,449	3,392	3,088	2,865	2,826	2,816
<임지별>								
○ 산림면적	천ha	6,452	6,374	6,359	6,317	6,292	6,283	6,288
- 생산임지	"	3,554	3,535	3,530	3,510	3,485	3,480	3,400
- 공익임지	"	1,503	1,515	1,525	1,555	1,605	1,705	1,800
- 준보전임지	"	1,395	1,324	1,304	1,252	1,202	1,098	1,088
<영급별(사업지)>								
○ 계	천ha	4,832	4,774	-	4,731	4,712	4,706	4,706
I	%	18	9	-	7	8	10	12
II	"	40	20	-	10	8	8	9
III	"	31	27	-	15	10	8	8
IV	"	8	23	-	20	14	10	8
V	"	2	14	-	20	18	14	10
VI	"	1	6	-	16	18	16	14
VII	"	-	1	-	9	14	16	16
VIII	"	-	-	-	3	8	13	15
IX	"	-	-	-	-	2	5	8
X	"	-	-	-	-	-	-	-
□ 임목축적								
○ 총축적	백만m ³	309	508	554	699	821	927	1,016
- ha당 축적	m ³	48	80	87	111	131	148	162
○ 연간 성장량	천m ³	14,261	18,892	18,888	19,668	19,326	20,670	22,629
- 성장율	%	4.82	3.84	3.51	2.72	2.39	2.25	2.25

구분	단위	1995	2007	장기전망				
				2010	2020	2030	2040	2050
○ 벌채계획량	천m³/년	1,241	3,379	3,805	5,453	8,052	11,160	15,005
- 주별	"	263	2,748	3,175	4,902	7,631	1,0821	14,590
- 간별	"	280	452	453	398	327	331	414
- 기타	"	698	178	178	153	94	8	2
- 벌채율	%	8.7	17.9	20.1	27.7	41.7	54.0	66.3
○ 임목비축량	천m³/년	13,020	15,513	15,083	14,215	11,274	9,510	7,624
○ 벌채면적	천ha		27	28	34	46	56	64
- IV영급 이하	"		20	19	16	18	15	8
- V영급 이상	"		7	9	18	28	41	56
□ 목재수급								
○ 총목재수요	천m³	24,351	29,269	0,746	35,348	38,559	40,531	42,043
- 제재목	"	5,900	6,149	6,213	6,583	6,698	6,815	6,934
- 합판	"	3,897	4,396	4,530	5,099	5,220	5,441	5,670
- 보드류	"	3,061	3,703	3,863	4,395	4,924	5,451	5,975
- 기계펄프	"	655	937	1,015	1,235	1,397	1,469	1,506
- 화학펄프	"	7,167	10,245	11,098	13,506	15,281	16,060	16,466
- 갱목	"	139	22	16	10	10	10	10
- 기타	"	3,532	3,818	4,010	4,611	5,029	5,287	5,484
(원목수요)	"	(9,284)	(10,695)	(11,081)	(11,867)	(12,750)	(13,699)	(14,006)
○ 목재공급	천m³	24,351	29,269	30,746	35,348	38,559	40,531	42,043
- 내재	"	1,055	2,872	3,234	4,635	6,844	9,486	12,754
- 외재	"	23,296	26,397	27,512	30,713	31,715	31,045	29,289
* 해외조림목	"	0	2,200	4,200	8,400	12,400	16,400	20,800
○ 자급율	%							
- 총목재자급률	"	4.3	9.8	10.5	13.1	17.7	23.4	30.3
- 원목자급률	"	11.4	26.8	29.1	39.1	53.7	69.2	91.1
* 안정자급률	"	4.3	17.3	24.2	36.9	50	63.9	79.8

주 : 안정적 자급률은 총 목재 공급중 국내목재와 해외조림목이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제3절 산림관련법령정비

1. 산림법령

임산물생산 및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임야의 매매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생산확인용 검인제도 및 임야매매증명제도를 폐지하는 등 산림경영에 장애가 되는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매년 증가하고 대형화하고 있는 산불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고 진화하기 위하여 산불관리통합지침을 제정할 수 있도록 「산림법」을 개정(법률 제 5323호, 1997. 4. 10.)하였다.

또한, 산림용 종·묘의 가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에 맞는 향토수종의 개발을 촉진하고,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는 경우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개발한 경우에는 개발이전 토지상태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가격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산정하도록 하여 지가상승에 따른 과도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채석단지 지정면적을 20헥타르 이상에서 10헥타르 이상으로 감축·완화함으로써 채석단지 지정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산림법시행령」을 개정(대통령령 제15517호, 1997. 11. 29)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보전임지를 인접토지와 의 합필을 조건으로 분할하는 경우 3헥타르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조성한 휴양림 입장료를 휴양림조성자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신고없이 벌채하도록 하는 한편, 종전에는 분묘로부터 10미터 이내에서는 산림의 형질변경을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5미터 이내로 함으로써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산림법시행규칙」을 개정(농림부령 제1276호, 1998. 2. 13.)하였다.

2. 임업진흥촉진법

1960년대 이후의 치산녹화를 중심으로 한 보호위주의 산림법으로는 임업을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임업의 구조개선·임산물소득원개발 및 임산물유통·가공업의 지원을 통하여 임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임업인의 경영능력 및 권익을 증진시켜 임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도록 「임업진흥촉진법」을 제정(법률 제5325호, 1997. 4. 10.)하였다.

또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을 개정하여 특별회계내에 임업진흥사업계정을 신설하여 임업구조개선, 임산물가공업지원 등을 강화함으로써 임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유림소유자의 협업경영에 대한 자금지원, 임산물소득원개발·육성을 위한 주산단지지정, 독립가·임업후계자에 대한 임업경영자금 보조·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면적이 70퍼센트 이상되는 지역을 임업진흥권역으로 지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임업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임업진흥촉진법시행령」을 제정(대통령령 제15518호, 1997. 11. 29.)하였다.

임업의 발전을 위하여 임산물가공업자에 대하여 자금 및 유통정보 등을 지원하고, 임업후계자의 요건을 개인독립가자녀, 10헥타르이상의 산림소유자 등으로 하고, 임업진흥계획에 조림·육림·임도시설·병해충방제·임산물가공업지원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임업진흥촉진법시행규칙」을 제정(농림부령 제1282호, 1998. 3. 3.)하였다.

3.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수렵면허제도 및 조수보호구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야생조수 밀렵행위, 특히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조수의 밀렵행위에 대한 벌칙강화 등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야생조수를 보호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수의 번식기간중 조수보호구 출입통제, 수렵보험가입을 의무화 함으로써 적절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을 개정(법률 제5348호, 1997. 8. 22)하였다.

건전한 수렵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수렵면허시험 합격후 수렵강습을 받아야 수렵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면허시험방법 및 합격기준을 정하고,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게 한 경우에 1억원 이상의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대통령령 제15669호, 1998. 2. 24.)하였다.

수렵면허갱신자에 대하여는 신규면허취득자에 비하여 강습과목 및 시간을 단축하고, 원앙·고라니 및 멧토끼를 인공사육허가대상 조수에서 제외하는 한편, 국내에서 번식·판매할 목적으로 야생조수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소득의 증대를 도모하도록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농림부령 제1284호, 1998. 5. 7.)하였다.

(법무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이병호)

제4절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1. 추진 개요

세계화·정보화·지방화 추세에 부응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주 등 임업인이 생산활동에 종사하면서 느끼는 각종 불필요한 규제와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하여 임야매매증명 제도 폐지 등 17건을 산림법·산림법시행령 등에 반영하여 개선 완료하였다. 또한 임업분야에 대한 규제전수조사결과 행정내부규제 225건, 대국민규제 302건을 발굴하여 행정쇄신위원회와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 제출하였다

2. 주요내용

첫째, 산림의 경영 및 임야매매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임야 거래시 시장·군수로부터 발급받던 임야매매증명제도를 폐지하였다

둘째, 자영독립가의 인정 기준을 소유산림 50ha에서 30ha 이상으로, 조림 실적이 용재림인 경우 20ha에서 10ha로, 유실수는 10ha에서 5ha로 완화하였다

셋째,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은 생산확인용 검인을 찍거나 생산확인표 부착시만 반출이 가능하였으나 이를 폐지하였다

넷째, 채석관련 규제로서 채석단지내 채석시에는 허가에서 신고로 완화하였으며, 공장 100m이내 지역에서는 채석이 불가능하였으나 공장대표자의 동의를 있을 경우 가능토록 하였고, 산림을 형질변경하여 발생하는 토사석을 반출할 때에도 별도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나 허가·신고 없이도 가능토록 하였다.

다섯째, 산림의 형질변경관련 사항으로 형질변경지는 반드시 복구토록 하던 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 또는 채광·채석 목적으로 형질변경한 지역 중 경사 15도 미만의 지역으로서 농지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는 복구를 면제토록 하였고,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때에는 사전에 복구비용을 예치하여야 가능하던 것을 농어민 등이 330㎡ 이하의 면적 및 임도 시설·공공사업 등은 복구비용 예치를 면제토록 하였다.

여섯째, 산림내 오물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을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모든 산림으로 확대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일곱째, 산불예방 활동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 또는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갈 때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신고하던 것을 허가로 강화하였다.

(행정관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김판석)

제5절 산림행정 조직개편

산림행정조직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으로 임업연구원, 임목육종연구소, 임업연수원, 산림항공관리소, 5개 지방산림관리청, 시·도에 산림과 또는 녹지과(시·군에 산림과 또는 녹지과)를 두고 있다.

정부인력 감량화 계획에 따라 실무인력 및 기능직 인력을 감축하였다.

1. 기능직 감축('97. 3. 20)

정부부문 생산성 10%이상 높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지원인력 감량화 계획에 따라 기능직 9인(운전원1, 위생원5, 방호원1, 사무원2)을 감축하였다.

2. 실무인력 조정('97. 8. 13)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인력의 감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인력 10인(6급1, 7급1, 8급8)을 감축하여 본청에 5급 3인을 증원하였다.

1994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되어 1997년에 완료되는 5급정원의 복수직급화 계획에 따라 남부지방산림관리청 사업과장을 5급에서 4급 또는 5급 복수직급으로 조정하였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사무관 김판석)

제2장 경쟁력 있는 임업육성

제1절 산지의 자원확충진

1. 경제림화 추진

가. 조림의 질적전환

경제·환경적으로 건전한 자원조성기반 구축을 위하여 과거의 대면적 벌채에 의한 획일적인 양적위주 조림에서 벗어나 생태적 질적 조림으로 전환하여 수하식재, 유용수종 혼식, 소구역벌채조림 등 복층림 및 혼효림 등의 조림을 추진하였다. 산불·병해충 등 피해지에는 지대별 복구원칙을 정립하고, 임지의 여건과 생태계 회복시기를 감안하여 수종, 분수, 시기 등을 조정 식재할 수 있도록 조림방법을 제시하여 효과적이고 완벽한 조림복구를 추진하였다.

지금까지의 목재생산을 주목적으로 한 21개 경제조림수종도 산주의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조림수종을 78개로 확대 다양화하여 산주의 호응도를 높이고 산림소득 증대와 다양한 목재수요에 대처토록 하였다. 주요도로변·관광지·사적지 주변 등에는 큰나무조림 지역 특색녹화사업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환경적 기능이 조기에 달성되도록 하는 등 양적조림에서 질적조림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경제수조림의 방법 다양화로 일률적으로 ha당 3,000본 조림하던 방법을 개선하여 수종특성에 따라 ha당 1,500본~5,000본을 식재함으로써 임업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표 2-2-1>

조 립 실 적 (1997)

(단위 : ha, 천본)

구 분	계 획		실 적		비율 (%)
	면 적	본 수	면 적	본 수	
계	18,675	54,639	21,813	57,380	117
경제수조립	16,875	51,951	17,217	52,583	102
큰나무조립	1,800	2,688	2,300	3,864	128
유실수조립	-	-	2,296	933	-

자료 : 산림청 자원조성국

또한 1996. 4. 23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군 사격장에서 발화된 초대형 산불발생으로 광대한 면적의 산림이 소실되어 산림생태환경이 파괴됨으로서 임지여건과 시기성에 따라 조립, 사방 등 적정복구방법을 채택하여 완벽한 복구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2차 피해예방과 경제·환경적으로 건전한 숲을 조성토록 하여 국토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다.

<표 2-2-2>

고성산불피해지 복구상황

(단위 : ha)

피해면적	복구방법		인공복구계획대 실적 (1996~1997)			1998~2001
	인공복구	자연복구	계획	실적	진도(%)	
3,762	2,942	820	670	670	100	2,272

자료 : 산림청 자원조성국

(자원조성과 임업사무관 심영만)

나. 육림의 확대·내실화

우리의 산림은 지난 30여년간 제1·2차 치산녹화와 제3차 산지자원화계획의 성공적 추진으로 국토녹화는 완료되었으나 조립역사가 짧아 아직 가꾸어 주어야 할 30년생 이하의 어린나무가 전체 임목지의 84%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 목재 수요량의 90% 이상을 수입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이 어린나무들을 경제·환경적 기능이 높은 우량림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림정책을 조림위주에서 육림중심으로 전환하고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간벌 등 육림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적기·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작업의 질과 성과를 높이고 있다

1997년도에는 사업 추진 방향을 생산임지 중심의 대단위 권역을 설정하여 통합 육림실행토록 하였으며, 지역완결·통합사업·보조율 단일화를 사업실행 원칙으로 설정하였다. 시장·군수는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에 대하여 총사업량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ha당 사업단비를 통합 조정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일선 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제도 정착을 유도하였다. 덩굴제거 사업에 대한 보완작업은 익년도에 실시하던 것을 1997년도부터 당년도 추기에 실시하도록 하므로써 덩굴제거 효과를 제고하였으며, 덩굴제거방법 개선의 일환으로 현행 글라신액제 주입방법을 현장애로 기술 개발과제로 개발된 디캄바도포 방법을 보급하여 인력·경비절감과 최 덩굴 고살효과를 증진하였다.

또한 영세 산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육림사업비의 정부보조율을 높여 육림사업에 산주가 적극적으로 동참토록 하였다.

<표 2-2-3>

육림 국고보조금 개선

(단위 : %)

사 업 별	1996			1997		
	국고	지방비	자부담	국고	지방비	자부담
· 풀 베 기	30	30	40	40	40	20
· 어린나무가꾸기	30	30	40	40	40	20
· 덩 굴 제 거	51	33	16	40	40	20
· 천 연 림 보 육	40	40	20	40	40	20
· 간 별	40	40	20	40	40	20

자료 : 산림청 자원조성국

1997년도 육림사업은 271,738ha를 실행하여 계획대비 105%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2-2-4>

육림실적 (1997)

(단위 : ha)

사업별	계획	실적	비율
계	258,639	271,738	105
보 식	267	267	100
플 배 기	95,036	101,976	107
덩 굴 제 거	67,913	70,407	101
어린나무가꾸기	38,588	38,791	101
천 연 립 보 육	23,234	24,312	105
간 별	33,601	35,985	107

자료 : 산림청 자원조성국

다. 종자 국가관리와 양묘생산 체계개선

WTO체제 출범으로 개방화, 자유화 조치에 따라 국경없는 무한경쟁체제에 놓여지게 되었고, OECD 가입에 따라 개방화, 자유화가 더욱 심화되어 우리 양묘업의 경우 OECD규범에 맞는 생산체제를 갖추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종묘관리의 국가종합관리기능을 강화하였다.

산림용 종자 국가관리체계 개선과 우량종자 공급원 확보를 위하여 현재 종자생산 공급원인 채종원, 채종림 중 종자과잉 수종 및 결실불량 수종을 정비하고, 조림확대 및 새로운 수종을 신규조성(지정)하였다.

채종림은 결실불량 수종인 전나무 등 188ha를 폐기하고, 독일가문비 등 114ha를 신규로 지정 하였으며, 특히 통일대비 및 산림생태 복구 녹화수종인 아까시10ha, 오리나무10ha 등의 채종림지정을 확대하였다.

채종원은 참나무류, 편백 등 8ha를 신규로 조성하였고, 종자과잉수종인 소나무, 리기다, 리기테다 등 44ha를 폐기하였으며, 과거 폐기하였던 채종

임분 중 잣나무(2.5ha), 낙엽송(2ha)을 다시 채종원에 편입시켰다.

또한, 앞으로 산주들의 다양한 조림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1997년도에는 56개수종 98,959kg의 종자를 채취 확보하였으며, 이중에서 경제적·환경적 가치가 높은 활엽수 종자의 채취비율이 59%(55,978kg)이다.

그외 묘포의 단지화·기계화를 지원하여 양묘 생산성을 향상시켰으며, 조림용 묘목검사 후 묘목품질보증표만 부착하던 것을 종묘산지증명서를 추가하고 품질보증표 색깔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등 종묘의 OECD체제 도입에 대비한 품질인증제를 정착시켜 우량종묘 유통질서를 확립시켰다.

(자원조성과 임업사무관 한문영)

2. 자원화 기반조성

가. 임도시설 확대

(1) 현 황

임도는 산림을 효율적으로 경영 관리할 목적으로 임내(林內)에 시설하는 산길로서 과거에는 단순히 임산물을 운반하는 통로 정도로 인식되어 왔으나 근래에는 임산물 운반뿐만 아니라 조림·육림·임목생산 등 산림작업을 기계화하고 원목 등 각종 임산물의 수송을 원활히 하며, 산불·병해충방제 등 산림피해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으며, 오지 산림의 개발과 미이용 자원의 활용도 제고 등 산림경영을 성력화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비를 절감하는 임업경영에 있어서의 필수 기반시설이다.

또한, 농산촌의 교통은 물론 농산물 유통도로 등으로 활용되고,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지역공도이다.

우리 나라 임도는 1968년 국유임도 개설을 시작으로 1984년부터 민유임도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그 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다.

1997년말까지 시설된 임도시설 거리는 12,413km로서 ha당 임도밀도는

1.9m에 불과하여 선진 임업국인 일본 5m/ha, 미국 10m/ha, 독일 40m/ha에 비교하면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2) 1997년도 임도 추진계획 및 실적

산림경영에 필요한 임도를 확대 시설하기 위하여 1997년도에는 총 사업비 104,640백만원을 투자하여 1,548km를 시설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결과 그 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2-2-5> 임도시설 추진실적(1997)

구분	계 획		실 적	
	물량 (km)	사업비 (백만원)	물량 (km)	사업비 (백만원)
계	1,548	104,640	1,560	102,490
국유임도	310	28,718	318	27,318
민유임도(보조)	1,050	65,770	1,024	64,432
민유임도(용자)	188	10,152	206	9,965
민유임도(순지방비)	-	-	12	775

자료 : 산림청 자원조성국

임도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도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효율도가 높은 간선임도망을 구축코자 임업진흥촉진지역을 중심으로 임업경영 및 지역개발촉진 등 다목적 효과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간선임도를 시설하고 있다.

또한 견고한 임도시설을 위하여 설계·시공 등에 필요한 산림토목기술자를 양성 배치토록 하고,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산림토목사업소를 조직 운영하여 임도시설을 전담케 하는 등 임도시공기술 축적에 노력한 결과 시공기술이 향상되고 설계의 전산화가 이루어지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3) 문제점 및 대책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유임도시설사업은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의 비율로 지원하여 시설하고 있으나, 산주 자부담 10%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내포하고 있다.

영세산주들은 부담이 과중하여 시설을 기피하고 있고 60%가 넘는 부채산주들을 일일이 찾아 협의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을 뿐만아니라, 1개노선 상에는 2km기준 평균 10~13명의 산주가 있어 의견의 일치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기본계획 노선에 따라 시설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7년 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강원·경남·제주도에서는 산주 자부담 10%를 지방비에서 부담하여 계획성 있는 임도망 구축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또한 견고한 임도의 구축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사비가 책정되어야 하나, 임도시설 km당 단비는 금년의 경우 민유임도 63백만원으로 매우 빈약하여 절·성토면의 고정시설이나 피복이 어렵고 각종 공작물을 적지적소에 구축할 수 없어 여름철 폭우시에는 피해의 예방에 그 만큼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견고한 임도를 구축하려면 km당 시설비가 최소한 85백만원 이상이 소요되므로 정부예산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이 되어야 하겠다.

<표 2-2-6>

임도시설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 : km)

구 분	1968~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누 계
계	650	1,047	1,214	1,163	1,109	2,022	1,717	1,560	12,413
국유임도	203	484	497	443	388	380	325	318	3,344
민유임도	447	563	717	720	721	1,642	1,392	1,242	7,509
누 계	2,581	3,628	4,842	6,005	7,114	9,136	10,853	12,413	12,413
ha당(m)	0.40	0.56	0.75	0.93	1.10	1.40	1.68	1.92	1.92

자료 : 산림청 자원조성국

(산림토목과 임업사무관 이철수)

나. 임업기계화 촉진

농산촌 인구의 감소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으로 임업노동의 공급은 감소되고 있는 반면 경제림 조성, 간벌 등 각종 육림사업, 임목생산사업 등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21세기에는 국내 목재자원 활용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단순노동에 의존했던 산림사업의 질적 측면도 점차 전문경영 기능 인력 확충 및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 등 전문성 제고를 요구하는 추세로 변모하고 있으며, 임업 노동생산성의 향상 없이는 임업의 경제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임업기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하도록 임업기계장비를 개발, 개량보급하고 있으며 기계화촉진을 위한 기반조성과 기계기능인 양성 등 임업기계화 관리·운영체계, 생산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밤수집기, 자동수간주사기, 식재기 등 12종의 임업기계를 개발한바 있으며, 다목적 산림차, 소형원치, 동력지타기 등 각종 산림사업장비를 개발하고 있다.

1997년까지 34,184대의 장비를 보급하였으며 향후 제4차 산림기본계획 기간인 2007년까지 336,387백만원을 투입하여 149,624대를 추가로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표 2-2-7>

임업기계·장비 보급실적(1997)

구 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임업협동조합
수량 (대)	432	8,038	569
금액 (천원)	801,000	1,510,650	5,147,794

자료 : 산림청 산림경영국

다. 전문인력 육성

임업 기능노동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기술력 향상, 농산촌의 새로운 소득원 및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능인영립단을 조직하고 있다.

임업기능인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양성을 위하여 1995년에 산림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기능인에 대한 육성과 장비지원·취업촉진방안 등을 법령으로 제도화하였으며, 1997년 임업진흥촉진법 제정시 관련 규정을 산림법으로부터 분법하였다.

1997년까지 기능인영립단은 343단 4,040명이 조직되었으며, 향후 산림사업물량이 매년 20%씩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동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임업기능인력 12,000명을(1,000개단) 2010년까지 중·장기계획에 따라 양성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연중 작업물량의 균형적인 배분을 통해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고 산재보험등 후생복지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임업기능인의 직업안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산림경영과 임업사무관 김용관)

<표 2-2-8>

영립단 조직현황('97)

합 계	국 유 립	민 유 립
46개단 557명	16개단 197명	30개단 360명

자료 : 산림청 산림경영국

제2절 임업경영기반 확충

1. 사유림경영 활성화

가. 사유림경영선도 임업인육성

산림을 30ha 이상 소유하면서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산주를 발굴하여 독립가로 인정하고, 10ha 내외의 산림을 소유하고 농산촌에 정착하여 산림을 경영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임업후계자로 선발 육성함으로써 이들이 사유림경영을 선도하고 또한 지역내 산림경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1997년말 현재있는 독립가는 334명, 임업후계자는 429명으로써 독립가는 고령화, 상속등의 사유로 증가되지 못하였으나 임업후계자는 자격요건 완화로 1997년도에는 92명의 임업후계자를 새로 선발하였다.

선발된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에게는 정부에서 영림계획에 의한 자율시업을 최대한 인정, 조림·육림등 국고보조 사업량 우선배정, 의무조림비 예치면제, 벌채사업 신고시 첨부서류 생략 등의 행정·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임업진흥기금중 독립가 육성자금 27억원 및 임업후계자 육성자금 20억원을 장기저리로(5년거치 10년상환, 년3%) 융자 지원하고 또한 각종 임업기술정보 자료제공을 통하여 산림경영 촉진과 이들에 대한 포상, 국내외 선진임업연수 기회부여 등을 통하여 사기를 북돋워 줌으로써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다.

<표 2-2-9>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선발요건

구분		선발요건	선발권자
독립가	법인	소유산림500ha 또는 조림실적300ha이상	산림청장
	모범	소유산림300ha 또는 조림실적100ha이상	산림청장
	우수	소유산림100ha 또는 용재림 50ha 또는 유실수 20ha	시·도지사
	자영	소유산림 30ha 또는 용재림 10ha 또는 유실수 5ha	시장·군수
임업후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가의 자녀 -10ha이상의 산림소유자 -10ha이상의 국·공유림 분수·대부자 -고교이상 임업분야학과 졸업자로서 5ha이상 산림소유자 -전문대이상 임업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임업경영자 또는 경영희망자 -3ha이상 산림소유자로서 산림종묘,분재소재,버섯, 야생화등 임산물생산자 또는 생산희망자 	시장·군수	

자료 : 산림청 자원조성국

<표 2-2-10>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독립가					임업 후계자	
		계	모형	법인	우수	자영		
연도별	1993	587	374	62	12	133	167	213
	1994	610	371	63	12	130	166	239
	1995	602	336	56	13	115	152	266
	1996	672	335	57	14	113	151	337
	1997	763	334	56	14	110	154	429
시도별	부산	2	2	-	-	1	1	-
	대구	2	2	-	-	1	1	-
	대전	2	2	-	-	1	1	-
	울산	7	4	-	-	1	3	3
	경기	60	28	7	1	13	7	32
	강원	128	65	15	1	28	21	63
	충북	63	32	4	3	13	12	31
	충남	65	19	2	-	7	10	46
	전북	86	35	3	2	10	20	51
	전남	133	50	13	1	14	22	83
	경북	84	37	5	4	8	20	47
	경남	130	58	7	2	13	36	72
	제주	1	-	-	-	-	-	1

자료 : 산림청 자원조성국

나. 협업경영의 내실화

영세한 사유림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한·독정부간의 임업기술협력사업 일환으로 1974년 경남 양산에 협업체를 조직한 것을 시작으로 1997년말 현재 232개 협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표 2-2-11>

협업체 조직현황(1997)

시·군	협업체수	산림면적(ha)			산주수(명)		
		가입대상	가입실적	%	가입대상	가입실적	%
45개	232	500,242	169,749	34	108,601	25,030	23

자료 : 산림청 자원조성국

협업체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업지도원 85명을 배치하고 인건비, 운영비 및 산림사업비(자부담의 30%)를 지원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 국고 922백만원을 지원, 협업체 회원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공동소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98년부터는 협업경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양적인 신규조직 확대보다는 기존조직에 대한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강원 평창, 충북 청원, 전북 진안, 전남 순천, 경남 울주군의 5개 협업체를 시범단지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지원과 임업사무관 조동하)

다. 복합경영유도

(1) 복합경영의 필요성

사유림은 산림면적중 70%를 차지하고 있으나 산주개개인의 산림 소유현실을 살펴보면 평균소유 규모가 2.1ha, 10ha 미만이 96%로서 매우 영세하며, 산림의 대부분이 20년 내지 30년생의 어린나무들로서 간벌등 육림에 대한 투자가 절실한 시기인 것이 특징이다.

이와같은 영세한 사유임업에서 목재생산을 목적으로 조림후 50년 이상 지속적으로 육림 등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조림후 50년 내지 60년 후의 목재생산시점까지의 경영여건이 어려운 기간에 산림내 공간 및 유희 노동력을 활용하는 단기·중기 소

특작물 재배로 산주의 소득증진 및 산림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복합경영방식의 도입이 필요한 때이다.

(2) 복합경영의 개념

복합경영은 장기적으로 우량대경재 생산을 목적으로 임업경영을 하면서 임내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단기·중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고 지역적 특성을 살려 휴양임업등과 연계시키는 임업경영방식이다.

세부투자사업은 산지묘포장을 조성하여 해당 산림에 맞는 수종 또는 약초 등을 파종하여 적응력을 높이고, 이를 산림내 적정한 지역에 식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로를 시설하여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장래 목재생산을 위한 시설로 사용토록 하고 기계·장비보관 및 생산물의 판매등을 위한 다용도 관리사를 시설하는등 자립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조성사업이다.

(3) 복합경영의 기대효과

농작물과 달리 관리하는데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농업과 병행하여 경영할 수 있고, 초기 기반조성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생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공해·자연산에 대한 수요증대로 소규모 면적에서도 고소득 창출이 가능하다.

(산림경영과 임업사무관 전범권)

라. 대리경영제도 도입

임업경영기술과 자본이 부족하여 방치되고 있는 산림을 산주와 산림경영주체인 임업인, 임협, 시장·군수·자치구,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와 계약에 의거 대리경영제를 도입함으로써 사유림경영을 활성화하고 산주의 소득증대 및 산림의 제기능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임업진흥촉진법제정시(1997. 12. 31. 법률 제453호)조문화 하였다.

대리경영사업을 위하여는 우선 대상산림에 대한 영림계획을 작성하여 당

사자간 약관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며 또한 대리경영자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투자수익과 재산의 보호차원에서 산림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시장·군수는 대리경영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며 산림사업별 보조율을 적용하여 보조하고 보조에 따른 자부담액을 임업진흥기금으로 장기저리로 용자지원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기술지원과 임업사무관 조동하)

2. 산촌종합개발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산촌지역에 풍부한 산림과 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개발과 생활환경개선을 병행 추진하여 낙후된 산촌지역을 산림경영과 임업진흥을 위한 중심마을로 육성함으로써 산촌주민에게는 소득증대와 복지향상, 국민에게는 휴양장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간 격차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며 산촌지역의 정주민구의 유지(증가)를 통해 임업 노동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주변 산림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1995년부터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 까지 150개 마을을 개발할 목표로 1997년말 현재 9개마을을 조성하였으며 16개 마을에 대한 사전설계를 완료하였다.

그 중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암마을은 농산어촌현대화시범사업지로 선정하여 농림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와 연계하여 집중 투자방식으로 추진하였으며 나머지 마을들도 지역주민의 의견 및 지자체의 개발의욕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조성하였다.

사전설계 16개 마을은 자연휴양림 입구마을 등 발전가능성이 큰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생산기반확충 등 소득증대에 중점을 둔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였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소득과 생활환경의 정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촌지역에 다양한 소득원개발과 생활환경개선을 병행 추진하므로써 지자체 및 산촌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WTO 출범과 더불어 농산어촌지역이 더욱 어렵게 되고 특히 산촌지역은

정부지원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알려졌으나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산촌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1·2·3차 산업이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투자되는 대표적인 산림사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또한 지역특색에 맞는 특화사업개발로 소득이 증대되고 생활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산지계획과 행정사무관 이현복)

<표 2-2-12>

산촌개발 마을현황

계	조성	실계
	9개 마을	16개 마을
25개마을	시범 : 강원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	경기 동두천시 탑동동 강원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강원 정선군 정선면 회동리 강원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충북 괴산군 연풍면 신혜원리 충북 청원군 미원면 금관리 충남 부여군 외산면 삼산리 충남 청양군 대치면 오룡리 전북 순창군 구림면 안정리 전북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전남 구례군 산동면 위안리 경북 영양군 수비면 신원리 경북 울진군 북면 상당리 경북 안동시 길안면 고란리 경남 함양군 마천면 삼정리 경남 산청군 삼장면 홍계리
	일반 : 충북 영동군 용화면 조동리 전북 장수군 천천면 와룡리 경남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경기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충남 공주시 정안면 내문리 전남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전남 보성군 응치면 대산리 경북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자료 : 산림청 산림경영국

3. 임산물 유통·이용·가공

가. 임산물유통구조개선

치산녹화기에 조림한 임목이 간벌 단계에 도달하고 있어 국내 목재생산량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밤, 버섯, 잣, 산채등 단기소득임산물 또한 국민의식수준의 향상에 따른 무공해 자연식품 선호경향으로 그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대부분이 다수의 영세생산자에 의한 부업적 소량·분산생산으로 시장교섭력이 취약하고 국내 임산물유통시장의 대부분을 중간상인이 지배하고 있어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한 물류비용과 유통마진으로 생산자의 수취가격은 낮은 반면 소비자는 비싼 가격으로 구입함으로써 수입임산물과의 가격경쟁이 불리해지고 국내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도 어려운 실정에 있다.

따라서 국내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생산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산지와 소비지를 연계한 직거래 유통체계로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유통과정에서 중간상인을 배제함으로써 임산물 생산자·소비자의 권익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임산물유통구조개선에 필요한 유통기반시설의 설치를 생산자 단체인 임업협동조합중앙회 계통조직에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다.

1997년도에는 주요 임산물 생산·소비 거점지역에 임산물직매장 13개소(인천, 달성, 춘천, 철원, 단양, 논산, 장성, 함평, 포항, 구미, 의령, 합천, 제주북부임협)와 임산물저장시설 1개소(군산임협)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간벌·소경재 등 국산재를 산지로부터 수집하여 산업원료 및 목제품 공급안정을 위해 목재집하장 1개소(진안임협)를 설치한 바 있다.

WTO체제하의 국내외적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경험축적과 유통시설의 체인화 실현, 생산자·소비자에 대한 신뢰성 제고 등으로 유통시설지의 대부분이 매출액 증가, 경영수지개선 등 점진적인 운영안정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임산물유통시설의 확대설치 및 운영 개선에 따른 생산자·소비자간 직거래 유통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유통비용 절감과 품질이

우량한 국산임산물의 공급안정으로 경쟁력을 제고시켜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국내 임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나. 임산물 가공·이용

산림자원 보유국의 목재공업화 정책추진과 최근의 지구 환경보전을 위한 벌채 및 수출규제 강화와 국제원목가격의 상승으로 물량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국내 목재수요의 96%를 수입재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목재가공산업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국내 목재가공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금지원책으로 1997년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시설현대화자금 89억원, 원자재구입자금 73억원을 융자지원하였고, 현재 활엽수 위주의 합판생산가공시설을 침엽수합판 생산시설 교체 및 보드류 생산시설 설치를 위해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10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목재수급의 안정과 가구분야 등의 사용원자재 확보를 용이하게 하였다.

(임산물유통과 행정사무관 이규태)

<표 2-2-13> 임산물 가공·이용 지원실적(1997)

(단위 : 백만원, 년)

	지원사업명	지원액	융자조건등		
			금리	기간	융자기관
계		26,257			
농특회계	· 가공이용시설 지원	8,933	5~8%	10(3)	임업협동조합
	· 가공원자재 구입	7,324	5.5	5(3)	"
재특회계	· 합판 및 보드류시설 지원	10,000	7.0	10(3)	한국산업은행

주 : ()내 숫자는 거치기간임.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4. 단기소득임산물 개발지원

단기소득임산물을 수출 및 소득전략 품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규모화에 의한 생산기반구축, 품목별 생산자 단체 육성을 통한 경영구조 개선 및 상품의 규격화·표준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정책방향으로 1997년 4월에 표고산업육성 종합대책을, 5월에 밤 산업육성 종합대책을 수립·지원해 나가고 있다.

표고의 경우 노지재배위주의 생산구조를 시설재배 구조로 전환하고자 1997년 661천㎡의 재배시설을 지원하여 시설재배 비율을 14%로 높였고, 공주, 논산, 곡성, 장흥(2), 청송 등 6개소에 표고재배단지를 조성하였다. 또한 품질좋은 표고종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1995년부터 이전확장을 추진한 임협중앙회 표고종균 생산시설(임산미생물사업소)을 '97. 10. 24 완공하여 연간 350톤 규모의 우량표고종균 생산체제를 구축하였다.

밤의 경우 가을의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저장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1997년 저온저장시설 10개소를 지원하였고, 밤 박피의 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식품개발연구원과 함께 밤박피 가공시설의 개발을 추진하여 1997년 박피율 87%의 밤 박피가공기계를 개발 완료하였다.

그외 송이균의 보호 및 증식을 위한 송이환경 개선사업을 80ha 추진하였고 산채·약초재배를 지원하여 다양한 품목이 농가소득원으로 자리잡도록 적극 유도하였다.

(임산물유통과 행정사무관 최병암)

5. 국유림경영 개선

가. 국유림책임경영제 조기정착

국유림 관리에 경쟁원리와 기업형 경영방식을 국가조직에 최초로 도입, 1996년부터 115개팀 373명의 국유림경영팀을 구성하여 일선현장 담당자중심의 책임경영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영팀의 사기양양 및 현장

경영능력 배양을 위해 1997년도에는 산림경영자 실기훈련교육(168명), 산림청 및 시·도관계관, 임정자문교수 등이 참석하여 현장임정활성화를 위한 현장토론회(1회 35명)와 국유림경영팀 운영평가대회 및 우수경영팀 부부동반 국내산업시찰(2회 49명) 등을 실시하였으며 국유림책임경영제 실시 3차년도를 앞두고 운영상의 문제점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도출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자 추진운영실태 종합평가를 실시하였다.

나. 산림경영시범단지 조성으로 선진임업 선도

(1) 사업목적

21세기 한국 임업을 선도할 수 있는 「다목적 산림경영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산림이 갖는 경제적·공익적 기능의 극대화 방안을 제시하며, 주변 농산촌지역 여건에 맞게 농림복합소득원을 연계 개발하여 풍요로운 산림지역 경제권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코자 한다.

(2) 사업내용

강원 홍천군 내면·서석면, 평창군 봉평면 일원 국유림(운두령지구) 24,480ha를 대상으로 10년간(1996~2005) 1,16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시설로는 시험연구동(5,280m²), 일반관리사(561m²), 청소년수련원, 산림박물관, 삼림욕장, 간선도로망(508km) 등으로 임목육종연구 및 조림무육시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3) 그간 추진실적

1993년도에 사업타당성조사를 시작하여 1995년도에 환경부와 사전환경타당성 검토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 및 간선도로 실시설계 53km를 완료하였고 1996년도에는 기반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간선도로 7km를 개설하였

하였고 1996년도에는 기반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간선도로 7km를 개설하였으며, 1997년도에는 주요건축물 2동(연구본부동, 후생시설동) 실시설계와 간선도로 11km를 개설하였다.

(4) 사업기대효과

미래 임업을 선도할 수 있는 첨단 임업기술개발 보급체계 정립 및 주변 농산촌민의 복합소득원 조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산림경제문화권 형성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다. 국유림확대 및 관리강화

국유림은 대부분 주요산맥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고 용재생산은 물론 수원함양, 국토보존, 대기정화 및 국민휴양공간제공, 맑은물 깨끗한 공기등 산림의 공익적, 환경적기능증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997년말 현재 국유림은 전체 산림면적의 22%에 해당하는 1,414천ha로서 일본의 31%, 독일 40%, 미국 34% 등 임업선진국의 국유림률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편, 국제적인 환경보전운동이나 산림자원의 증축, 날로 그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산림환경기능, 산림문화창달 등 경제적, 공익적 측면에서 국유경영림의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유림률을 30%까지 제고시키기 위하여 지난 1988년부터 확대 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다. 국유림의 확대는 기존국유림에 개재되었거나 연결되어 있어 산림경영에 적합한 사유림을 집중매수하고 보존 가치가 없는 국유지와 산림경영에 적합한 사유림을 상호교환하는 한편, 일 본인 명의재산이나 소유자 미복구재산 등 무주부동산을 소정의 공고절차를 거쳐 국유화하는 방법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확대소요재원은 도시주변의 보존부적합한 소규모 자투리 토지 등을 연차적으로 매각처분하여 충당하고 있다.

1997년도에는 15,000ha의 국유림을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한 결과 산림경

영적지 사유림매수 6,366ha, 국유림과 사유림과의 교환취득 430ha, 무주부 동산국유화 3,196ha 등 총 9,992ha의 국유림을 확대하였다.

(국유림관리과 행정사무관 김성륜)

<표 2-2-14>

국유림 확대실적

(단위 : ha)

구분	계	'93	'94	'95	'96	'97
합계	51,908	2,356	8,229	11,963	19,368	9,992
사유림매수	20,232	1,221	1,513	5,383	5,749	6,366
교환취득	3,139	211	2,219	177	102	430
무주재산국유화	28,537	924	4,497	6,403	13,517	3,196

자료 : 산림청 산림경영국

제3절 산림의 환경적 기능 증진

1. 맑은물 깨끗한 공기 공급기반 확충

가. 5대강유역 산림특별관리

국민소득과 여가의 증대에 따라 깨끗한 물, 맑은공기, 쾌적한 휴식공간에 대한 수요는 급증 추세에 있으나, 도시화 산업화의 진전으로 대기, 수질 등 자연환경의 악화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특히 5대강유역의 상수원오염은 국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각부처 합동으로 수질개선대책을 수립, 대처하고 있으나 깨끗한 물의 원천인 산림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청에서는 깨끗한 물 공급기지로서의 산림관리를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전국 5대강유역 산림을 중심으로 수원함양기능을 강화해 나갈 종합대책을 마련·추진코자 5대강유역을 중심으로 수원함양기

능 제고를 위한 관리대상 산림을 지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수질오염과 수량(水量) 부족에 근원적으로 대처, 깨끗한 물의 지속적인 공급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관리권역대상산림은 5대강유역 산림중 수질개선 및 수원함양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본류를 기준으로 좌우 5km 유역내 산림중 우선 취수장 주변 산림 330천ha에 대한 산림특별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 있다.

1997년도에는 상수리, 굴참나무 등 참나무류와 자작나무, 전나무 등 수원함양기능과 수질정화기능이 높고 뿌리의 양이 많은 수종 위주로 1,384ha의 조림을 추진하였으며 건전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하여 10,392ha의 육림과 수질개선관리시설을 확충하고자 황폐산지·계천등에 산지사방 11ha, 야계사방 11km, 사방댐 15개소를 시설하였다.

나. 도시 생활환경림 조성

도시화·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맑은물, 깨끗한 공기의 공급과 보건·휴양공간의 제공등 쾌적한 생활환경과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를 위하여 공해에 강한 수종과 시·도, 시·군 지역별 향토특색수종 등 다양한 수종을 도시지역, 산업시설지, 사적지, 관광지주변 등 산림·공한지에 식재하고 있다.

환경림 조성방법은 조경적 설계에 의거 공해에 강하거나 미관이 수려한 향토수종을 선정하되 수종, 지리, 입지, 수목(묘목)의 크기 등에 따라 식재본수를 조정 식재하고, 한나무씩 단목상태로 식재하는 것보다는 군상으로 식재하며, 단층 일제림보다는 복층림으로 조성하고, 침엽수와 활엽수, 큰키나무와 작은키나무를 혼합 조림하여 소음차단, 분진차단 등 대기정화능력 제고를 위해 수림대를 조성토록 하였다.

<표 2-2-15>

큰나무 조림실적('97)

(단위 : ha, 천본)

계 획		실 적		비율 (%)
면 적	본 수	면 적	본 수	
1,800	2,688	2,300	3,864	128

자료 : 산림청 자원조성국

또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우리 나라와 일본에서 공동개최하게 됨에 따라 대회 개최지는 물론 경기장 주변등 주요지역의 환경을 새롭게 단장하여 푸른한국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월드컵 대비 국토경관 조성계획을 수립하였다.

(자원조성과 임업사무관 심영만)

<표 2-2-16>

월드컵대비 국토경관조성계획

사업기간	조 립	산림정비	사방·복구	무궁화심기
1997~2002(6개년)	41천ha	395천ha	1천ha	4,000천본

자료 : 산림청 자원조성국

2. 산림휴양공간 확대와 국민의식 함양

가. 산림휴양시설 확충

(1) 자연휴양림 조성

급증하고 있는 보건휴양 수요를 충족하고 국민의 건전한 정서 함양과 아울러 농산촌 주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도록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연휴양림은 경관이 수려하고 다수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자연 생태계와 경관보존을 원칙적으로 국·공유림에 우선 조성하고 사유림에도 조성을 권장하고 있다.

자연휴양림의 조성적지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1997년말 현재 국유림에 68개소, 공유림에 51개소, 사유림에 47개소 총 166개소 173천ha의 산림이 자연휴양림 조성대상지역으로 지정·고시 되어있다.

그동안 조성실적은 1988~1997년까지 67개소를 조성하였으며, 1997년에는 6개소를 조성하였다.

휴양림의 기본시설은 진입로·오솔길·야영장·벚취·광장·급수대 숲속의집·어린이놀이터·오물처리장·화장실·숲속교실 등이 있으며 특수시설로서는 임산물판매장·낚시터·식물원·수렵장·동물원·산지과수원·조수사육장 등의 시설을 할 수 있다.

한편 조성사업비는 국유림은 전액 국고로, 공유림은 국고 70%, 지방비 30%를 부담하고 있으며, 사유림의 경우는 휴양림 조성비 일부를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있다.

<표 2-2-17>

자연휴양림 조성실적 및 계획

(단위 : 개소)

계	1988~1997	1998	1999~2007
115	67	8	40

자료 : 산림청 산림경영국

(2) 수목원 조성과 산림박물관 건립

수목원과 산림박물관 건립사업은 산림과 인간생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산림내 다양한 식물유전자원의 보전, 지역별 향토수종을 일정 지역에서 관리·보전과 아울러 산림사료의 영구적인 보전 및 관리를 통하여 산림에 대한 자연학습 교육, 대국민 계도장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1987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광릉에 있는 임업연구원 중부임업시험장 시험림내에 수목원과 연계한 산림박물관을 건립하였다.

이 수목원 규모는 약 500ha로서 난대식물원을 비롯한 수종별 특성에 따

라 15개 수목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식재수종은 약 2,800여종에 이르고 있으며, 산림박물관은 각종 산림사료와 동·식물 표본, 자연학 습장으로서의 물론 휴양공간으로서도 훌륭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1988년부터 이 같은 수목원을 각 도별로 1개소씩 확대 조성할 목표 아래 우선 1단계사업으로 1989년에 시작한 제주 한라수목원은 1994년에 완공하였으며, 강원 춘천, 충북 청원, 경북 포항, 경남 진양은 현재 추진중에 있다.

1990년부터 충남 공주에 건립하고 있던 산림박물관은 1997년에 완공하여 광릉산림박물관에 이어 우리 나라에서는 두번째로 개관하였다.

한편 1995년부터 경남 진양박물관을 1997년부터 전북 순창박물관을, 강원도는 1998년부터 산림박물관을 건립중에 있으며 경북은 현재 기본설계 추진중이다

나. 산림문화 확산

‘심고 가꾸는 문화’에 젖어있는 국민들에게 산림의 소중함과 가치를 올바르게 알려주고, 그 혜택을 좀 더 많은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산림문화사업을 실시했다. ‘산림문화 창달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심포지엄을 개최」 하였으며,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산림문화의 개념을 정립하고, 활용 가능한 새로운 정책방안을 모색했다.

각급 기관·단체 등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산림 관련 행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산림문화안내달력(리플릿)」을 제작하여 기관·단체 등에 배부했다. 그리고 「산림공무원 사진전」을 개최하였으며, 작품중 10점을 그림엽서로 제작·활용하였고, 전시작품은 자연휴양림내 ‘숲 속의 집’에 게시 활용하는 등 산림문화의 저변을 확대했다. 임업협동조합·유한김벌리의 「내설악 나무관찰 캠프」를 후원하는 등 민간단체의 산림문화 관련행사를 지원하였다.

한편, 국토의 등뼈인 백두대간을 바로 알리기 위하여 고문헌, 논문집, 종주 보고서, 신문보도 등 관련 문헌을 정리하여 「백두대간 관련 자료집」을 발간·배부 하였으며, 백두대간 개념정립과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였

다. 민간 환경보호단체의 '백두대간 환경대탐사'를 후원하였고, 정부의 관련 부처와 민간 산악·환경단체 등과 백두대간 보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산지계획과 임업사무관 최준석)

3. 야생동·식물 보호

가. 야생동물 보호

야생조수 보호사업의 지속적인 실시와 더불어 산림조성을 통한 산림생태계의 회복으로 야생조수의 서식밀도가 증가되고 있으나 아직도 총기류, 독극물, 불법엽구 등을 이용한 밀렵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특히 멸종위기 또는 희귀조수에 대한 밀렵행위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표 2-2-18>

야생동물 서식밀도

(단위 : 마리/100ha)

구 분	서 식 밀 도			기준밀도
	1987	1997	증감(%)	
평	18.6	19.7	6	20
멧벼들기	25.7	29.5	15	30
참 새	458.6	269.3	△41	250
청둥오리	198.9	655.6	230	-
쇠 오 리	91.8	142.0	55	-
멧 토 끼	6.5	8.9	40	20
고 라 니	2.2	2.4	9	5
멧 돼 지	2.5	2.7	8	-

이에 따라 총기사용에 의한 밀렵행위를 방지하고자 산림청은 경찰청과 협조하여 1996년 7월부터 공기총영치 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지속적인 밀렵 단속을 실시하여 1997년 한해동안 192건을 적발 의법조치 한 바 있다.

또한 울무나 덧등 불법엽구에 의한 밀렵행위가 근절되지 않고있어 1997년

10월 한달동안을 불법엽구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운영한 결과 총 787건, 5,091점을 수거하였다. 또한 1년동안 2,000회에 3만명을 동원 12,000점을 수거하여 폐기처분하였으며, 민간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한수렵협회와 지리산 반달가슴곰 보존협회의에 밀렵감시단을 조직 운영하는 등 불법밀렵 예방에 힘을 기울였다.

1987년부터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매5년마다 전국단위의 야생조수보호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해 오고 있으며, 1997년도는 제3차 야생조수보호 기본계획의 1차년도로써 평 등 야생조수방사 16천마리, 야생조수먹이주기 1,111천kg 등 1,750백만원을 투입하여 각종 조수보호사업을 추진하였다.

1997. 8. 22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조수보호구 관리 및 야생조수밀렵에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수렵면허제도를 개선하여 건전한 수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수번식기간중 조수보호구내에 무단출입하는 행위를 통제하여 조수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토록 하고, 수렵면허시험 및 수렵강습 의무화로 수렵인의 자질향상을 도모하며, 수렵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발생 시 적정보상 방안을 강구하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조수보호 벌칙신설 및 밀렵행위 벌칙 상향조정 등이다.

야생조수의 집단도래지 등 주요서식지를 조수보호구로 지정 관리해오고 있는데 1987년 420개소 87천ha에서 1997년말 현재 543개소 118천ha가 조수보호구로 지정되었으며, 정확한 야생조수 서식 통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전국 134개소 고정조사구를 405개소로 확대지정하여 OECD요구기준에 맞는 야생조수관련 통계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야생조수보호·관리 및 수렵행정의 과학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조수의 적극적인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94. 7월 중국임업부로부터 백두산호랑이 암수 한쌍을 도입한데이어 1997. 10월에도 백두산 반달가슴곰 암수 한쌍을 도입하여 광릉수목원 야생동물원에서 증식하는 한편, 월악산국립공원지역에 산양을 2차례(1994. 10월, 1997. 9월)

에 각각 암수 2마리씩 방사하였다.

부상당한 야생조수 치료를 위하여 전국 시·군단위로 266개소의 야생조수 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야생조수 구조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협회가 1997년도에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건축비 5억원을 지원받아 산림청에서 제공한 부지에 야생동물 보호센터를 건립함으로써 부상당한 야생조수의 구조 및 치료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1997년 한해동안 70종 1,301마리를 구조 치료하였다.

야생조수의 적정밀도 유지로 농림수산업을 보호하고, 수렵수요의 합리적인 수용으로 밀렵방지 및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고자 1982년부터 도단위로 순환수렵장을 설정운영하고 있으며 1997년 경남·북에 순환수렵장을 설정·운영하였다. 외국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제주도에 고정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수렵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강원도 춘천시의 고정수렵장을 1997. 11월개장 하였다. 수렵장 사용료등 수입금은 수렵장운영과 야생조수보호사업에 재투자하고 있으며, 수렵조수의 인공사육 방사확대와 조수 서식환경 개선사업 등에 적극투자하고 야생조수 불법포획 등 밀렵방지를 위한 감시활동에도 사용하였다.

<표 2-2-19>

엽기 수렵장 운영현황(1997)

구분	수렵장	수렵인원(명)			수입 (백만원)	포획수량 (마리)
		계	내국인	외국인		
계	4	15,920	15,756	164	6,676	12,982
순환	경 북	10,789	10,789	-	4,711	2,456
	경 남	4,246	4,245	1	1,693	2,601
고정	제 주	816	653	163	268	7,817
	춘 천	69	69	-	4	108

자료 : 산림청 자원조성국

야생조수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멸종위기에 처한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준수와 제2회 한·일 철새보호협력을 위한 실무자회의를 1997. 5월 개최하여 양국간을 이동하는 철새목록을 작성하는 한편, 철새보전을 위한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여 주변국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한강하구 및 칠원평야 두루미 도래지 421ha를 두루미 국제네트워크로 지정(1997. 3)하였으며, 전북 동진강하구 200ha를 도요새 국제네트워크로 지정(1997. 5)하여 국제적인 철새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산림환경과 임업서기관 조정웅)

나. 야생식물보호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국토의 2/3를 산지가 차지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유지할 수 있는 대부분의 지역이 산지 또는 이와 연계된 지역이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생물다양성 협약의 체결로 식물종의 보전과 체계적인 관리는 국가이익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우리 고유의 희귀·특산식물의 보호를 위해 자생지조사, 수집 및 증식, 복원, 자원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 자생식물종 보존사업 현황

지난 3년간 자생지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4,500여종 식물자원중 우리 나라 고유의 자생종이거나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에 대한 도감을 발간·배부하였으며, 1997년까지 총112종 144개 지역에 대한 자생지조사를 실시하여 증식을 위한 종자 및 생체수집, 증식기술 개발을 추진하였다.

<표 2-2-20>

자생식물 자원조사 실적

구분	1995	1996	1997
자생지조사	24종 31지역	32종 42지역	56종 71지역
생체수집	26종 1,987개체	26종 292개체	26종 1,097개체
종자수집	15종 4,595립	9종 630립	9종 1,370립
자생지 복원	5종 5지역	1종 1지역	기복원지 재조사
보전시설 설치	1종 1지역	1종 1지역	1종 1지역

자료 : 산림청 자원조성국

또한, 1996년까지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 6종 6지역에 대하여 자생지 복원을 실시하였고, 1997년 이들 복원종에 대하여 서식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우리 고유의 자생식물자원을 보전하고 우리 꽃을 농가소득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리 꽃 세계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양재동 화훼공판장내 특별전시장에서 야생화 5천여점을 전시하여 3만여명이 관람하는 성황을 이루어 우리고유의 식물자원을 새롭게 인식하는 자연학습의 장이 됨은 물론 앞으로 야생화의 수요증대와 수출산업으로서의 육성발전에 크게 기여 하였다.

그리고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기반 구축을 위해 생물다양성 협약(CBD)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구 온·한대림보전을 위해 아시아·태평양 국가가 참석하는 몬트리올프로세스에 가입하여 우리 입장을 제시하였고 특히, 1997. 7월에 서울에서 제9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산림환경과 임업사무관 강호덕)

4. 광릉숲 보전대책 추진

산림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세계 유일의 멸종위기종인 크낙새 서식지인 광릉숲은 귀중한 자연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나라 고유의 숲으로 1990년대 들어서면서 방문객의 급증과 인근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광릉숲 파괴조짐이 나타났다. 1996년에 들어서면서부터 광릉숲 보전대책 강구에 대

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997년 식목행사를 광릉에서 개최하고 지역주민·임업·환경단체 대표가 모인자리에서 대통령께 광릉숲 보전의 필요성을 보고하고 우선, 1997. 6. 1부터는 광릉숲·수목원 관리 및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사전예약제를 통한 주중에만 개방하고 산림욕장 폐쇄 및 야생동물원 입장을 금지한 결과 입장객이 83% 감소(실시전 하루평균 3,355명 → 실시후 583명)하여, 수목원내 자연식생이 10~25%정도 회복되었다.

광릉숲 관통로인 314번 지방도 주말 교통량(1997. 5. 28 ~ 6. 30 조사)이 57%감소(예약제 시행이전 9,200대→시행이후 3,900대)하였다.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오·폐수 정화시설 지도점검(남양주시, 포천군)을 강화하고 봉선사천 수질오염도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광릉숲 주변 개발억제를 위해 1997.8.1부터 문화재관리국과 협의하여 세조능 관람 구역 11천평중 5천평으로 축소하고 임시주차장에 야생초화류 및 조경수 16,500본을 식재하여 인위적인 식생면적의 증가효과를 거두었으며, 광릉숲 주변(300m 이내) 준농림지역 총 1,357필지 558ha에 대하여 필지별 재산내역, 토지이용형태, 희귀동·식물 영향여부등 개발 실태조사(1997. 9. 22 ~ 10. 22)를 하였다.

또한 광릉숲보전대책위원회 구성(1997. 6. 26)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광릉숲보전 필요성을 홍보하였다.

(산림환경과 임업사무관 강호덕)

제4절 산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1. 산지이용체계 재편

산림법에서는 지속적인 산림경영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림을 이용목적에 따라 「보전임지」와 「준보전임

지」로 구분하고, 보전임지를 다시 「생산임지」와 「공익임지」로 세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보전임지중 생산임지는 요존국유림·채종림·시험림·임업진흥촉진지역 등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으로서 집약적인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활용하여야 할 산림이며, 공익임지는 보안림·천연보호림·휴양림·사방지·조수보호구·공원·문화재보호구역·사찰림·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보전녹지지역·생태계보전지역 등 주로 개별 법률에 의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증진 목적으로 지정·관리하는 산림으로서 자연환경의 보전과 국민보건휴양의 증진을 위하여 관리하여야 할 산림이다. 준보전임지는 생산임지 또는 공익임지 외의 산림으로서 임업생산, 농림어민의 소득기반 확대, 산업용지의 공급등 다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산림이다.

전국의 산림을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하는 산림이용구분제도는 1980. 1. 4일 산림법을 개정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당시 임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경사도와 입목도 등이었다. 그러나 단순히 경사도와 입목도에 의하여 임지를 구분함으로써 산림의 위치와 역할이 고려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산지의 국토계획적인 관점에서의 관리와 산림의 경제적 이용에 적합하지 않는 등의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자 1994. 12. 22일 산림법을, 1995. 6. 23일 산림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산림의 이용목적에 고려하는 산림이용구분기준을 마련하였다. 산림을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하는 것은 사유재산권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종전의 구분내용을 대폭 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새로운 산림이용구분제도는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의 큰 틀은 유지하되 보전임지를 다시 생산임지와 공익임지로 세분하도록 하였다.

새로운 산림이용구분기준과 절차에 따라 1995~1996 기간중 시·도지사, 시장·군수(민유림),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장(국유림)이 산림이용구분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를 가지고 임업연구원장이 산림이용기본도(안)를 작성하였다. 산림이용기본도는 1:25,000 지형도에 임지별(생산임지 : 녹색, 공익임지 : 청색, 준보전임지 : 황색), 인자별(요존국유림 : 녹색 사선

등) 내용을 표시한 도면으로서 작성된 기본도(안)이 현지와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국유림관리소장의 현지확인파 수정보완과정을 거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산림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1997. 2. 14일 보전임지를 지정·고시하였다. 고시한 도면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필지별로 보전임지 지정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20일 이상 공고하였다. 공고기간중에는 산주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고 타당한 이의에 대하여는 이를 수용하여 산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필지별 보전임지 지정대장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사항을 반영하고 1997. 7. 21 임지별 면적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표와 같다. 총 산림면적 6,452천ha중 보전임지는 4,977천ha로서 77%를 차지하며 나머지 1,475천ha, 23%가 준보전임지이고 보전임지중 생산임지는 3,548천ha, 공익임지는 1,429천ha이었다.

<표 2-2-21>

보전임지 지정현황

(단위 : 천ha)

총 산림면적	보 전 임 지			준보전임지
	계	생산임지	공익임지	
6,452	4,977	3,548	1,429	1,475
100%	77%	55%	22%	23%

주 : 총산림면적은 '95년말 현재 산림통계상 산림면적임.

자료 : 산림청 산림경영국

2. 산지이용질서 확립

우리 나라는 국토면적의 65%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용토지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일부 산림지의 타용도 전용은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특히 최근 우량농지의 타용도 전용이 증가함에 따라 2000년대 쌀자급기반 유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우량농지의 전용을 대체하는 산림지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녹색공간 등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환경·휴양기능의 증진을 위한 산림의 보전도 현실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국내임산자원의 빈약으로 목재자급도가 현재 4%에 불과하고 1997년도 목재 등 임산물 수입액이 2,584백만\$에 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 산림의 임업생산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산림의 보전도 중요하다.

산림지를 둘러싼 이와 같은 현실적인 여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보전할 산림은 보전하고 이용·개발할 산림은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산림보전과 개발을 조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따라서 보전임지는 가급적 보전하고 새로운 토지이용수요는 준보전임지를 활용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준보전임지의 활용촉진을 위한 몇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첫째 1997. 1. 1일부터 총 사업부지면적중 준보전임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70%이상인 경우에는 전용부담금을 면제토록 하였다.

둘째, 산림형질변경허가제한지역을 축소조정하였다. 즉, 준보전임지로서 국도·고속도로·철도연변 및 정기항로부터 가시거리 1천미터 이내의 산림중 자연경관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시장·군수가 형질변경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하여 운용하여 왔으나 이를 폐지하였다.

셋째, 준보전임지에 대한 신고에 의한 산림형질변경대상을 확대하였다. 1만제곱미터 이내로 산채·약초·특용작물·관상수를 재배하는 경우와 2천제곱미터 미만의 창고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가능토록 하였다.

보전임지는 가급적 산림으로 보전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보전임지는 전체산림의 77%를 차지하는 광범위한 지역이고 보전·준보전임지를 구분할 때 개발예정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용·산업용 시설이나 시설성격상 보전임지에 입지가 불가피한 것은 전용을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1997. 11. 29일 산림법시행령을 개정·공포하여 보전임지 전용허가대상을 추가하였다. 생산임지안에서 화장장·납골당과 종교시설의 건축·증축을 허용하였으며 공익임지의 경우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에서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건축물의 설치가 가능토록 하였다.

(산지계획과 임업서기관 이창재)

제5절 임업기술개발·보급

WTO 체제출범에 따른 본격적인 개방화, 국제 경쟁체제의 돌입에 대비하여 농특세를 제원으로 1994년부터 2004년까지 4,650억원을 농림기술개발사업에 투입한다. 임업연구의 큰 축을 담당하는 임업연구원, 임목육종연구소에서는 1997년에는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18과제, 첨단기술개발사업 10과제 총 28과제에 1,916백만원을 투입하여 임업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1. 현장기술 개발·보급

문제해결 중심의 기술개발사업으로 1997년 “산지 불용임목의 조경수 이용기술 개발” 등 18과제에 1,043백만원을 투입하여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임업기술을 개발한 바 있다.

<표 2-2-22>

현장에로기술개발사업의 주요 기술개발내용('97)

일련 번호	과 제 명	연구기간 (년)	1997 연구비 (천원)	주요 기술개발내용
1	산지 불용임목의 조경 수 이용기술개발	'96~'98 (3년간)	80,000	- 대형목을 뿌리분 뜨지않고 이식하는 방안 - 특수토양에 대한 활착율 제고 방안
2	국산재의 신수요 개발	'96~'98 (3년간)	94,500	- 경골 목조트러스 2종 개발·제작 - 의자, 정자, 파고라등 국산재를 이용한 조립식 위락시설 개발·제작 - 구조용 집성재의 강도성능 평가 및 제조 기술 개발
3	농산촌 특산 목공예품 개발	'96~'97 (2년간)	56,000	- 권역별 목공예품 개발 및 제작 - 목공예품의 경제성 분석
4	집토끼의 수렵자원화 기술개발	'96~'97 (2년간)	38,700	- 야생에 적용가능한 품종개발 - 서식환경 조성 및 대량 인공증식 개발 - 야외 실연시험
5	식약용 오소리 대량 인공 증식기술 개발	'96~'97 (2년간)	42,000	- 인공수정기술 및 사육적정시설 개발 - 대량 인공증식법 개발
6	송이발생 예찰에 의한 환경관리 기술개발	'96~'98 (3년간)	67,000	- 송이 발생림 임분관리모델 개발 - 송이균 선발 및 대량증식 기법 개발
7	표고원목재배 기계화 및 시스템개발	'96~'97 (2년간)	72,000	- 천공 및 접종용 작업대 개발 - 원목 자동천공기·접종기 개발 - 이동식 침수통 개발
8	표고톱밥재배 기계화 및시스템개발	'96~'97 (2년간)	70,000	- 표고톱밥배지 입봉기 개발 - 표고톱밥재배용 P.P병 개발
9	폐목재의 발생실태 및 재활용 촉진방안	'97~'99 (3년간)	34,400	- 폐목재의 발생원별 추정방법 개발 - 폐목재의 발생원별 추정량 도출
10	인삼임간 청정재배 경영모델 개발	'96~'98 (3년간)	39,000	- 출아율, 직경, 근중 등 생육상황 조사 - 경영모델 개발을 위한 재배사례 조사
11	밤 수집기 개발	'96~'97 (2년간)	69,000	- 밤수집기 설계 및 제작 - 밤재배 기계화 입지 조성

일련 번호	과 제 명	연구기간 (년)	1997 연구비 (천원)	주요 기술개발내용
12	야생화 규격묘 생산 기술 개발	'96~'98 (3년간)	60,000	- 야생화 우량개체 선발 및 자원증식 - 최적 재배기술 개발, 실용화 - 규격묘 표준화, 상품성 개발 및 대량생산 실용화
13	야생화 캔재배에 의한 상품화 기술개발	'96~'97 (2년간)	43,000	- 야생화 캔상품 개발 - 캔상품 대량생산 상품성 실용화
14	야생차 임간 재배법 개발	'96~'97 (2년간)	42,000	- 직파에 의한 새로운 임간조성 기술 개발 - 임간자생지 확대조성 및 실연사업
15	분재속성재배 기술개발	'96~'98 (3년간)	44,000	- 근상처리에 의한 조기상품화 - 합식용 소재개발 - 공중취목, 멀칭처리에 의한속성화
16	밤바구미 유인제 개발	'96~'98 (3년간)	44,000	- 밤바구미 성충의 생식행동 조사 - 유인물질의 탐색 및 인지
17	한국자생조경수의 신품 종 육성 및 대량증식법 개발	'96~'98 (3년간)	74,000	- 자생조경수 신품종 개발 육성 - 신품종 대량증식법 개발
18	제주특산 흑오미자 재배법 및 대량 증식 기술과 특수성분 구명 및 천연음료개발	'96~'98 (3년간)	73,000	- 흑오미자 대량증식 기술개발 - 흑오미자의 특수성분 구명, 천연음료 개발

자료 : 산림청 자원조성국

단기소득작목의 청정재배 기술 개발, 산지수목 이식방법 제시, 야생화 묘
생산을 규격화하여 수출용 야생화 생산, 야생화 캔상품의 상업화, 토끼, 오
소리 등 야생동물 자원개발에 의한 고부부가가치 창출, 밤재배의 생력화,
표고톱밥 및 원목재배 기계화, 목공예품 개발로 목공업체의 활성화, 병해충
방제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 농산촌 소득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
다. 또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자연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선집재
기술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기술중 특허출원 예정인 기술은 선염색 폴리프로필렌섬유를 이용한 칼라복합보드 제조기술, 폐목질을 이용한 보도블럭 및 내장용재, 천공접종용 작업대, 원목자동천공기, 이동식침수통 등이 있다.

정책, 제도적 측면에서 폐목재의 효율적 관리 및 폐목재의 재활용에 대한 제도 확립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만들고, 국산재 허용능력 결정체계를 정립하여 침엽수 구조용 제재규격 및 KS규격에 활용하고자 한다.

국제 목구조학술발표회 등 학술논문발표 및 농민교육, 밤 수집기 개발 현지연찬회 및 표고톱밥재배기술 교육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기술보급을 실시하고자 한다.

2. 첨단기술 개발

생물, 화학, 기계, 생명공학, 환경공학 등을 응용하여 임업에 적용되는 첨단기술을 개발하여 장차 제기될 수 있는 문제나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농림기술개발사업으로 1997년에는 “특수지역의 생태적 산림 조성 및 관리기술 개발”등 10과제에 873백만원을 투입하여 첨단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임업기술을 개발하였다.

<표 2-2-23>

첨단기술개발사업의 주요 기술개발내용('97)

일련 번호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년)	1997 연구비 (천원)	주요 기술개발내용
1	특수지역의 생태적 산림조성 및 관리 기술 개발	'97~'00 (4년간)	80,000	- 환경오염지의 산림생태계 복원 및 관리기술 개발 - 임해매립지의 토양관리 및 식재기술 개발 - 폐탄광지 복구공법 개발
2	목질계 생활폐기물 을 이용한 건축자재 개발	'97~'01 (5년간)	80,000	- 폐목질원료를 이용한 경량, 완충성 복합보드 개발 - 목섬유, 열가소성 섬유 복합재 제조공정 기술 개발 - 보도블럭 등 후판블럭 제조기술 개발
3	액화목재의 기능소 재 개발	'96~'00 (5년간)	60,000	- 플라스틱, 필름, 접착제등 기능소재 개발 - 액화목재의 물성개선 및 기능 검증 - 액화목재의 구조분석
4	폐목질자원 및 산림 미생물을 이용한 환 경정화기술 및 시스 템 개발	'96~'98 (3년간)	138,000	- 중금속류 해독 및 제거균주 개발 - 난분해성 물질 무독화 균주 개발 - 수피 및 폐목질자원을 이용한 수정정화시스템 개발
5	산림자원으로부터 무공해생물농약의 탐색 및 개발	'96~'99 (4년간)	90,000	- 살충활성물질의 조추출물 분리 및 야외적용시험 - 천적미생물, 선충 탐색 및 개발
6	솔잎혹파리의 종합 관리시스템개발	'96~'00 (5년간)	70,000	- 개체군의 시간적, 공간적 시뮬레이션 구성 - 솔잎혹파리 관리 초고속 정보망 시범 구축
7	산림자원의 약리성 분 탐색에 의한 신 임산 소득작목 개발	'96~'98 (3년간)	100,000	- 수목 추출물의 항고혈압 효능 - 항암 및 장내세균 생육활성 - 당뇨병성 합병증 예방 및 치료 효능
8	시설양묘를 이용한 묘목의 대량생산 사업기술개발	'96~'99 (4년간)	85,000	- 생육촉진을 위한 적정 일장조건 구명 - 적정 생육을 위한 적정 용기 개발 - 경화처리를 위한 적정 환경조건 구명 - 종자의 품질향상을 위한 정선방법 개선
9	한국형 임업기계 장비 개발	'96~'98 (3년간)	125,000	- 4륜구동 탑재차량 개발 - 소형원치 드림유니트 개발
10	헛개나무로부터 간 질환치료제 및 숙취 해소제 개발	'96~'98 (3년간)	70,000	- 헛개나무 간질환 치료 성분 구명 - 숙취해소제 개발을 위한 성분 구명

자료 : 산림청 자원조성국

추출된 무공해 생물농약으로 해충방제 도모, 시설양묘 생산체계를 일반 농가 및 묘목생산업자에게 기술 이전을 통하여 농가소득에 이바지 하고자 하며, 공업단지, 매립지, 폐탄광지등 특수지역의 생태적 산림조성 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보호에 힘쓰고자 한다.

기술개발 중 특허출원 예정인 기술은 수질정화에 기여하는 폐목질 및 미생물 자원, 살충활성, 섭식저해활성, 기피활성물질, 천적선충 및 미생물 분리·동정기술, 분리된 향암 활성물질 등이다.

솔잎혹파리 피해발생, 약리작용에 의한 활성저해물질 탐색, 특수지역 관리기술 등에 대하여 학술발표하였으며, 액화목재에 대한 설명회 개최, 환경정화 시스템을 실제 폐수에 적용하여 수질정화효율을 실연하고 솔잎혹파리 우화예측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통하여 첨단기술 개발을 활용코자 한다.

(기술지원과 임업사무관 남송희)

제6절 산림재해방지

1. 산불방지

가. 주요추진상황

1997년에는 1996년 고성 대형산불과 동두천 인명피해 산불로 인한 정부 차원의 「산불방지종합대책」에 따라 전담조직을 보강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새로운 틀을 마련한 원년으로서 앞으로 산불방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산불통제관실을 신설하여 과 단위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한편 임업연수원에 산불진화교육·훈련 부서를 신설하였으며, 헬기에 의한 권역별 초동진화에 대처코자 산림항공관리소에 익산·양산지소를 설치하고 산불전문진화대를 창설·운영하여 산불을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화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진화의 효율성을 높였다.

한편,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산림안에 담배꽂초버리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 및 신설하고 산불관리 통합규정을 제정하여 산불방지에 관한 제반규칙을 규정하는 등 산불방지를 위한 제도를 정비·개선하였으며, 산불방지 일일분석·활동지침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관서 및 유관기관에 전파하여 각 기관장의 산불방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고취시키고 행정수행의 원활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산불조심 홍보를 위하여 산불방지 홍보·교육용 VTR 제작배포(450개) 및 산불조심 표어를 공모(5,043편)하여 전국민의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내무·농림부장관 담화문 배포(5천매), 농림부장관·산림청장 서한문을 발송(3회)하여 산불예방을 당부하고 산불조심 캠페인 실시, T·V, 라디오 등을 통한 산불조심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전개하였다.

나. 산불발생 현황

1997년에는 건조주의보가 6회, 117일간 지속되었으며 크고 작은 산불이 거의 매일 발생하여 산불진화에 어려움이 많은 해였다.

1994년부터 계속된 극심한 가뭄과 건조한 날씨가 1997년까지 이어지면서 총 524건 2,330ha의 산림피해를 입혔고 낮에는 물론 밤에까지 계속되어 30ha이상 대형산불이 10건이나 발생하여 1,006ha의 피해(전체 피해면적의 43%)를 보았다.

지역별 대형산불을 살펴보면 강원(6건), 경남·북(4건)의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대륙성 계절풍과 험한 산악지형으로 산불이 급속히 확산되고 건조기 강풍을 동반하여 인력에 의한 지상진화가 어려워 초동진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에서 기인된다.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 247건(47%), 논·밭두렁 소각 103건(20%), 쓰레기 소각 41건(8%), 성묘객실화 33건(6%), 담배불 실화 29건(6%), 어린이 불장난 등 기타가 71건(13%)로 모두가 사람의 부주의에서 발생한 인재(人災)이며, 군 사격에 의한 산불도 9건, 304ha의 피해를 입어 원인별 산불방지대책의 철저한 이행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요일별로는 일 105건(20%), 월 70건(13%), 화 60건(12%) 수 49건(9%), 목 70건(13%), 금 70건(13%), 토 76건(15%), 공휴일 24건(5%)으로 주로 입산자가 많은 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최근 레저 및 휴양을 위해 산을 찾는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산불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우리 나라 산불은 대부분 인재(人災)며 한순간의 실수로 많은 재산을 소실하고 환경을 파괴하므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애립의식을 가지고 산불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산불방지지도담당관실 사무관 조이성)

<표 2-2-24>

최근5년간 산불발생현황

○ 산불발생 추세

구 분	5년평균	1993	1994	1995	1996	1997
건 수 (건)	478	278	433	630	527	524
면 적 (ha)	2,249	1,752	781	1,013	5,368	2,330
건당피해(ha)	4.9	6.3	1.8	1.6	10.2	4.4
피해재적(m ²)	84041	4,884	3,623	7,197	363,685	40,815
금액(백만원)	3,182	255	254	451	13,319	1,629

○ 원 인 별

구 분	5년평균	1993	1994	1995	1996	1997
합 계	478	278	433	630	527	524
입산자실화	224	120	194	312	248	247
논·밭두렁태우기	90	73	64	138	73	103
성묘객실화	32	15	41	34	38	33
어린이불장난	18	10	24	18	30	10
기 타	113	60	110	128	138	131

○ 요 일 별

구 분	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공휴
5년평균	478	65.4	56.8	67.8	51.0	48.8	59.8	80.8	48.0
'93	278	42	31	33	25	37	51	47	12
'94	433	68	27	59	53	41	49	89	47
'95	630	83	98	107	75	42	68	92	65
'96	527	64	68	91	32	54	55	72	92
'97	524	70	60	49	70	70	76	105	24

자료 : 산림청 산불통제관실

2. 산림병해충방제

지구상의 약 60여만종의 곤충중 국내에서 지금까지 조사 확인된 산림병해충은 총 3천여종으로서 그중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끼치고 있는 산림병해충은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소나무재선충, 잣나무넓적잎벌, 솔나방, 흰불나방 등 10여종이다.

97말 현재 산림병해충 발생면적은 총 377천ha로서, '96년말 발생면적 370천ha보다 약 7천ha가 증가하여 산림면적의 약 6%에 해당되는 넓은 면적에 발생하고 있다.

이중 피해가 가장 심한 솔잎혹파리는 1988년도말에는 발생면적이 327천ha까지 달한 적이 있으나 그동안 지속적인 방제에 힘입어 '97년말 현재에는 발생면적이 208천ha로서, 전국적으로 감소추세이며 특히, 강원도 지역에 집중적인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표 2-2-25>

산림병해충 발생현황

(단위 : 천ha)

구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계	359	360	354	372	370	378
솔잎혹파리	212	211	212	215	209	208
솔껍질각지벌레	11	12	13	14	16	14
소나무재선충	(0.1)	(0.1)	(0.1)	(0.1)	(0.1)	1
잣나무넓적잎벌	10	10	8	9	10	-
밤나무해충	36	39	42	51	55	54
흰불나방등 기타	90	88	79	83	80	101

자료 : 산림청 산불통제관실

<표 2-2-26>

산림병해충 방제실적

(단위:천ha)

구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계	234	247	288	285	254(301)	281(351)
솔잎혹파리	53	64	80	105	115	123
솔껍질각지벌레	8	8	12	11	14	16
소나무재선충	2	2	3	3	1(3)	1(3)
잣나무넓적잎벌	6	10	11	8	9(10)	10
밤나무해충	71	76	91	76	38(82)	41(106)
흰불나방등 기타	94	87	91	82	77	90(93)

주 : ()내는 중복방제에 의한 연면적임.

자료 : 산림청 산불통제관실

산림병해충방제는 연중 종합방제의 실행과 조기발견·적기방제를 통하여 방제효과를 높여, 보다 건전한 산림의 보호·육성에 기여함으로써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산지자원화 촉진에 이바지 하였다.

우리 나라 소나무 3대 해충인 솔잎혹파리, 솔껍질각지벌레, 소나무 재선충 등을 중점 방제하여 계획면적 135천ha에 140천ha의 방제를 실시하여 계획대비 104%의 방제실적을 올렸으며, 흰불나방 등 환경재해 돌발해충은

90천ha를 방제하였으며, 특히 잣나무 넓적잎벌·밤나무해충에 대한 대면적 항공방제를 위하여 연 467대의 헬기를 지원, 연면적 116천ha를 적기에 방제토록 함으로써 산주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산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온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산림병해충 퇴치에 크게 기여하였다.

(산림보호담당관실 임업사무관 최덕호)

3. 산사태 예방

산사태는 강우량·지형·식생 등의 복합작용에 의해 발생하며 연속강우량 200mm 이상, 시우량 30mm 이상일 때 그 발생빈도가 높다.

1997년에는 전국의 산사태위험지 97개소 86ha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우기이전까지 비닐피복·우회수로 등으로 응급 보완 조치하였으며, 기상특보 발효시에는 관계공무원 비상근무 등 피해최소화에 노력하였으나, 충북·전남등 지역에 따라 내린 국지적 집중호우로 인하여 33ha의 산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6명에 달하였다.

피해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거 중앙재해대책본부와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총 21억원의 복구비를 투입, 항구적인 복구사업을 시행하였다.

(산림토목과 임업사무관 김동권)

<표 2-2-27>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현황(1997)

지역별	피해면적	복구비	인명피해	비고
계	33 (ha)	2,114 (백만원)	6 (명)	
충북 보은	2	117	-	-주요지역연속강우량
진천	2	93	-	·강화 448mm, 대전 378mm
옥천	1	86	5	보은 353mm, 부안 260mm
제천	1	44	-	- 최대시우량
괴산	2	73	-	·강화 89mm(8.4,00:00~01:00)
청원	1	36	-	·밀양 77mm(6.26,06:00~07:00)
충남 청양	4	171	-	
태안	3	276	-	
전남 광양	7	310	1	
경북 청송	3	139	-	
봉화	2	99	-	
기타	5	670	-	

자료 : 산림청 자원조성국

<표 2-2-28>

최근 5년간 산사태 발생추이

연도별	피해면적	복구비	인명피해	비고
평균	ha 178	백만원 6,327	명 10	
1993	109	3,525	9	
1994	66	2,203	-	
1995	423	14,094	31	
1996	257	9,699	2	
1997	33	2,114	6	

자료 : 산림청 자원조성국

제7절 해외 입업협력 증진

1. 지구환경 협력강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산림원칙」과 「의제21」의 이행상황을 평가·감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유엔 지속개발위원회(UNCSD) 산하에 세계 산림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간 산림포럼(IFF) 회의가 1997. 6월 제19차 유엔총회 특별회의에서 새로이 구성되어 산림관련 유엔 환경개발회의 채택사항의 이행상황,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무역과 환경, 국제기구 및 제도 등으로 향후 산림분야에서의 국제적인 공동이해와 합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책 권고안을 종합화하여 향후 추진방향을 정립하게 된다.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인 성격의 「산림원칙」 성명이 법적 구속력을 지닌 「산림협약」의 작성기반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간 산림포럼의 전 과정에 참여, 우리 나라 입장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다.

몬트리올프로세스 회의에서는 산림원칙 성명에서 규정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은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으며, 은·한대림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객관적 평가를 위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몬트리올 프로세스, 유럽 국가들을 주축으로 하는 헬싱키 프로세스, 남미지역 국가들 중심의 타라포토 프로세스 회원국으로서 동 회의에서 작성된 기준과 지표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해 오고 있다.

또한, 1997년 유엔특별총회 이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촉진을 위한 최초 회의인 제9차 몬트리올 프로세스 회의를 1997. 7. 7부터 7. 11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밖에도 2차에 걸친 사막화 방지협약 정부간 협상회의, 세계산림위원회 회의, 생물다양성 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목재실무그룹 등의 관련회의에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참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국제협력과 입업서기관 전진표)

2. 자원협력 강화(약정체결)

우리 나라는 주요 원목수입을 열대목재생산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주로 의존하여 왔으나, 이들 나라는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하여 1992년부터 원목수출을 금지하고 합판·성형목재 등 제2차, 3차 상품으로 가공하여 수출토록 하고 있다.

임산업계는 원목수입선을 뉴질랜드와 호주로 전환하여 온대목재인 라디에타파 소나무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들 나라에 임산자원의 장기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해외조림을 최초로 착수했다. 우리 나라의 원목도입량(8백만 m^3)의 40%를 뉴질랜드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1996년도에는 조림지 1만ha를 확보 조림에 착수하고, 호주에는 1993년도에 진출, 2만ha의 임지를 확보하여 28~35년간 조림할 계획으로 있다.

이들 나라는 임업선진국으로 임산가공산업을 비롯한 목재산업이 발달된 나라로 상호 임업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7. 4. 29일 웰링톤에서 뉴질랜드 임업부와 산림청 간에 임업협력약정을 체결하고 호주는 1997. 7. 18일 한·호주 임업협력약정을 체결하였다.

주요 협력내용은 산림자원의 개발 및 이용, 임산물 가공과 무역, 병해충 방제, 산불방지 등 산림보호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 및 지표의 개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

1998년에는 한·호, 한·뉴간 임업협력회의를 한국 서울에서 개최기로 예정되어 있다.

(국제협력과 임업서기관 전진표)

3. 통일대비 북한 산림관리방안 마련

가. 북한산림현황

북한 산림통계의 대외공표는 1970년이 마지막으로 당시 북한 산림면적은 977만ha로 북한 국토면적의 79%를 점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북한에

서 발표한 자료가 없어 정확한 북한의 산림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산림청에서 통일대비 산림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1994~1996년에 걸쳐 인공위성 화상자료를 분석하여 북한 산림자원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북한 산림면적은 845만ha(입목지 기준)로 지난 1970년보다 132만ha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감소원인은 '다락밭만들기 운동'에 따른 과도한 산림개간, 외화획득 및 목재공급을 위한 과다 벌채, 그리고 연료부족에 따른 지속적인 임산연료 채취로 추정되며 최근의 북한 홍수 및 가뭄 등 자연재해와 식량난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나. 대 책

통일후 산림은 국토의 70% 이상을 점하는 최대 부존자원이 될 것이고, 황폐지 복구, 사방, 임산연료, 산림소유 문제 등이 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 1998년에 정확한 복구 대상면적 등 황폐실태를 정밀분석하고 통일에 대비한 북한산림 관리방안을 용역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통일이전에도 교류가능한 임업분야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협력과 행정사무관 안용덕)

제 3 편 1998년도 임정시책

여백

제1장 1998년도 임업정책 방향

제1절 임정의 목표와 방향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금년은, 그동안 치산녹화기·자원화기반 조성기를 거치고 제4차 산림기본계획(1998~2007)을 추진하는 첫 해로써 우리 임정에 있어서 매우 의미있는 해이다.

최근 국토의 65%를 차지하는 산림이 그 비중에 걸맞는 역할과 주민소득과 연계된 산림시책 추진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IMF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고용창출 확대와 연계하여 방치된 산림가꾸기 사업이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당면과제를 해결하면서 임정의 목표인 산지의 자원화, 임업의 산업화, 산림의 공익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림사업 현장과 정책 그리고 연구가 접목된 열린 임정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따라서, 금년도 임정의 중점추진방향은, 첫째, 유실수·특용수 등 유망수종 조림을 확대하고, 육림기에 도달한 산림을 경제적·환경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원으로 잘 가꾸어 산림소득과 목재자급률을 높여 나가고자 한다.

둘째, 독립가·임업후계자, 임업협동조합 등 임업경영주체 육성·지원으로 임산소득을 증대시키고 자립 여건을 조성하여 사유림 경영이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다.

셋째, 임도시설 확대, 임업기계화 등을 적극 추진하며, 산촌을 소득있는 보다 살기좋은 환경으로 조성하는 등 임업경영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넷째, 국산재 이용촉진, 임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 유통구조 개선, 수출촉진 등을 통해 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다섯째, 산지를 목재생산과 환경보전 기능증진을 위해 관리하되 토지자원으로서 국토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 개발방식을 전제로 다양한

토지수요에 대처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여섯째, 산림생태계 보전과 환경기능을 증진시켜 나가고자 한다. 야생조수의 보호·증식과 밀렵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야생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도시녹지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국토경관림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생활공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휴양시설의 질적 향상과 운영체제의 합리화로 휴양기능을 증진시키고, 산림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산림에 대한 국민의 복지·문화적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고자 한다.

일곱째, 산주의 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실용적인 임업기술의 개발·보급을 위한 「산·학·연」 협동연구 체계를 긴밀히 하는 한편, 산림생물자원을 이용한 신물질개발 등 첨단기술을 개발하여 산업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

여덟째, 통일에 대비한 북한 산림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국제 임업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북한의 산림실태를 파악하고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생물다양성·기후변화협약 등 산림관련 국제적인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국익과 국제사회에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

아홉째, IMF체제가 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내재 공급확대 등 원자재 수급대책을 강구하고, 환율상승에 의한 수출촉진대책과 산림사업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을 확대하여 경제위기를 산림경영 활성화의 기회로 삼을 것이다.

이를 위해 산림경영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규제 완화와 임정추진체계를 정비해 나가며, 숲 가꾸기 사업을 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 치산녹화기에 온 국민이 산림에 쏟았던 열정과 관심을 다시 한번 모아, 21세기 지속가능한 임업경영 실현과 산림 복지국가 건설의 초석이 되고자 한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사무관 윤정수)

제2절 임업부문 예산

1. 임업예산

1998년도 임업부문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국특,농특,재특)를 합하여 모두 4,926억 원으로서 정부전체 예산규모의 0.39%이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서기관 배영돈)

<표 3-1-1>

임업부문의 예산비율

(단위 : 억 원)

	1997		1998		증△감	
		%		%		%
정부전체예산	1,182,708	100	1,257,929	100	75,221	6.4
임업부문예산	5,182	0.44	4,926	0.39	△256	△4.9

자료 : 산림청 기획관리관실

<표 3-1-2>

사업별 투자예산

(단위 : 백만원)

	1997	1998	증 △ 감	%
계	518,159	492,628	△25,531	△4.9
I. 사업비	336,487	327,384	△9,103	△2.7
1. 기관운영	434	1,505	1,071	246.8
2. 임정관리	1,050	1,125	75	7.1
3. 산지계획	1,495	656	△839	△56.1
4. 항공관리	15,546	16,057	511	3.3
5. 산림보호	36,754	38,625	1,871	5.1
6. 자원조성	73,364	69,126	△4,238	△5.8
7. 산림토목	19,404	16,896	△2,508	△12.9
8. 기술지도	5,878	5,602	△276	△4.7
9. 경영기반확충	9,272	8,688	△584	△6.3
10. 공익증진	14,862	13,854	△1,008	△6.8
11. 임업연수원	854	675	△179	△21.0
12. 임업시험	4,588	5,375	787	△17.2
13. 산림조사	272	201	△71	△26.1
14. 육종연구	4,678	5,137	459	9.8
15. 수목원관리	1,770	783	△987	△55.8
16. 다목적산림경영단지	1,374	890	△484	△35.2
17. 국유림경영	106,030	106,365	335	0.3
18. 국유재산관리	37,291	34,221	△3,070	8.2
19. 법정부담금	1,571	1,603	32	3.0
II. 기본적경비	60,498	59,677	△821	△1.4
III. 투융자(농특)	111,174	98,067	△13,107	△11.8
1. 구조개선사업계정	77,508	68,542	△8,966	△11.6
2. 농특세 전입금사업계정	33,666	29,525	△1,557	△12.3
IV. 재 특	10,000	7,500	△2,500	△25.0

자료 : 산림청 기획관리관실

2. 임업자금지원

산림은 국토보전, 수원함양 등 공익적 기능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나 투자기간이 길고 수익성이 낮은 산림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산주들이 투자를 기피하므로 장기저리융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산지자원화와 임업의 산업화를 위한 산림투자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

임업자금중 임업진흥기금은 조림, 육림, 임도시설 등 산림기반조성사업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조경수, 분재, 야생화등 중·단기 소득사업에,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은 임산물생산자단체육성, 송이, 밤 등 수매사업에 지원해 주고 있다.

1998년도의 총 융자계획은 1,615억원이고 이중 임업진흥기금 479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85억원,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576억원, 재정융자금 75억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임업정책과 사무관 이명수)

<표 3-1-3>

임업자금 융자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별 자금별	1997실적					1998계획				
	계	임업진 흥기금	농특 회계	농안 기금	재정 융자	계	임업진 흥기금	농특 회계	농안 기금	재정 융자
계	181,096	47,900	59,732	65,864	7,600	161,544	47,900	48,568	57,576	7,500
조림·육림	14,366	14,366				14,933	14,933			
임도시설	10,152	10,152				4,430	4,430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4,700	4,700				10,000	10,000			
임목생산 및 임산물생산	6,893	6,893				-	-			
임업협동조합육성	6,155	6,155				10,800	10,800			
임산소득증대	10,274		10,274			9,875		9,875		
조경수및분재소재생산	14,292		14,292			10,732		10,732		
임산물이용가공및저장	9,969		9,969			18,612		18,612		
임산물생산자단체육성	6,053			6,053		21,000			21,000	
수매지원	39,731			39,731		36,576			36,576	
기 타	58,511	5,634	25,197	20,080	7,600	24,586	7,737	9,349		7,500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제2장 1998년 주요임정시책

제1절 산지의 자원화

1. 경제림의 지속적 육성

가. 조 립

금년도 조림사업은 경제·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자원조성기반 구축을 목표로 지역, 산지특성에 맞는 생태적조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림방법 다양화, 양적조림에서 질적조림으로의 전환, 수종별 다양한 특성을 활용한 조림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경제수조림은 경영목적에 부합되도록 활엽수 5,000본/ha 식재, 낙엽송 2,000본/ha 식재 등 식재본수 조정(3,000본/ha → 1,500~5,000본/ha)과 조림방법을 개선하여 파종조림, 용기묘조림 추진으로 임업경영을 활성화하고, 도로변, 도시·마을주변, 관광지주변 등 산림과 공한지에 향토특색수종 큰나무 조림을 실행, 속성녹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기에 조성하며, 도시경관림, 미래의 숲, 생명의 숲, 명산가꾸기 등 지역특색 녹화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적극 추진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산림정책을 전개하고자 한다.

또한 생장이 빠르고 활용도가 다양하여 경제적 가치가 높은 난대림에 집중적인 투자와 관리로 난대산림자원을 육성 개발하고자 연차별 난대림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하며, 산림을 경제·환경적 기능이 복합적으로 달성되도록 시범전시림을 조성, 교육·홍보하여 경영임정시대의 산림자원조성방법을 제시하는 등 경제·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자원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고성산불 피해지에 대한 복구조림도 금년도에는 송이산복원조림(400ha)

을 완료하고, 인가주변, 도로변, 관광지주변에는 큰나무를 심어 조기녹화 경관숲이 조성되도록 할 것이며, 내륙산간지역에는 상수리나무, 잣나무 등 경제수를 심어 복구조림을 착실히 추진할 계획이다.

(자원조성과 임업사무관 심영만)

<표 3-2-1> 조 립 계 획 (1998)

(단위 : ha, 천본)

사업별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면적	본수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17,785	51,237	58,215	39,593	14,977	3,645
o 경제수조림	15,444	46,834	38,544	27,610	7,289	3,645
o 큰나무조림	1,381	2,072	9,390	4,697	4,693	-
o 고성산불피해복구	730	2,114	2,933	2,163	770	-
- 경제수	263	825	371	338	33	-
- 큰나무	305	457	2,437	1,710	727	-
- 용기묘	162	832	125	115	10	-
o 지역녹화사업	230	217	3,147	1,466	1,681	-
o 조림예정지 정리등	(3,023)	-	3,505	3,357	148	-
o 우수자치단체특색사업	(26)	-	696	300	396	-

자료 : 산림청 자원조성국

나. 육 립

우리 나라 산림은 녹화는 되었으나 아직도 30년생 이하의 어린나무가 84% 이상이고, 치산녹화기 및 산지자원화기에 심은 나무가 본격적으로 육림시기에 도달하여 있다. 따라서 녹화된 산림을 보다 가치있는 경제·환경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는 대대적인 육림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적기 사업실행, 식수와 연계한 체계적인 육림작업, 지역완결·통합사업 등을 육림시책 기본방향으로 정하여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간벌작업 등 실시와 우량 천연림에 대한 보육작업으로 사업성과를 거양하고자 한다. 또한 효과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기초자료확보를 위하여 덩굴류 및 천연림보육대상지를 일제조사하고, 천연림보육 및 도태간벌 대상지 중 표고자목·펄프용재 생산 등 특수목적 단벌기사업지는 미래목표시를 생략함으로써 예산절감과 작업합리화를 도모하고, 임업경영 취약구조개선을 위하여 조림지내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할 경우는 조림목과 재배작물 피해방지를 위하여 년 3~5회 실시하는 등 산주소득증대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자원조성과 임업사무관 한문영)

<표 3-2-2>

육림계획 (1998)

(단위 : ha, 백만원)

사업별	사업량	사업비			
		계	국고	지방비	차액
계	231,524	111,071	60,050	34,014	17,007
보 식	241	208	208	-	-
풀 베 기	101,312	33,175	15,442	11,822	5,911
어린나무가꾸기	29,688	23,998	11,715	8,189	4,094
덩 굴 제 거	47,128	9,855	4,810	3,363	1,682
천 연 림 보 육	18,680	15,150	10,587	3,042	1,521
간 벌	34,475	28,685	17,288	7,598	3,799

자료 : 산림청 자원조성국

다. 종 요

조림의 성패를 좌우하는 우량한 묘목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량종자 공급원 확보 및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1998년에는 우량종자 공급기반조성을 위해 채종원조성(11수종 15ha) 및 전나무, 활엽수 등 유용수종에 대한 신규 채종림(11수종 215ha)을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2040년까지 채종원산 종자 100% 공급목표 추진을 용재수종, 내공해수종, 환경수종, 특용수종을 신규 채종원으로 조성하고 개량효과가 높은 검정 채종원조성도 착수할 계획이다.

묘목생산에 있어서는 산주 희망수종과 4차 산림기본계획상 활엽수 조립비율이 40%인 점을 감안하여 향토 유용활엽수 묘목을 점증적으로 확대생산하고, 그밖에도 도시·공단 등 주변 식재용 공해에 강한 환경정화수종 생산, 경제적가치가 높고 수형이 아름다운 단풍나무, 느티나무와 방화 수림대 조성을 위한 내화성 수종도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고정포지의 지력향상을 위하여 객토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분비나무, 주목, 비자 등 특용수종과 일반조림이 어려운 수종 양묘를 위한 온실 시설과 산지묘포 조성확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묘목생산이 되도록 추진코자 하며, 종묘생산지 표시 등 품질인증제를 완전 정착시켜 우량 종묘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자원조성과 임업사무관 한문영)

2. 임도시설의 확대 및 내실화

가. 1998년도 임도시설 계획

임도는 산림경영의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농산촌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필수 산업화 도로로 활용되고 있어 시설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로 시설하던 민유임도를 1995년부터 농어촌특별세로 전환함과 아울러 사업량 및 km당 사업단비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견고한 임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1998시설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3-2-3>

임도시설 계획(1998)

구분	물량 (km)	사업비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용자
계	1,266	88,990	56,573	22,390	5,597	4,430
국유임도	304	28,586	28,586	-	-	-
민유임도(보조)	891	55,974	27,987	22,390	5,597	-
민유임도(용자)	71	4,430	-	-	-	4,430

자료 : 산림청 자원조성국

나. 기본방향

국·민유임도의 연계는 물론, 지역공도와 연결된 간선임도 위주의 종합적인 임도망을 구축함과 아울러 임업진흥촉진지역 및 산림시범단지 등 조림·육림, 벌채보속사업지에 집중 시설할 계획이다. 현지여건에 부합하는 설계·시공으로 견고한 임도를 구축하여 임도피해의 최소화와 기설임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보수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시설방법도 과거 물량위주에서 탈피하여 숲 속의 임도개설지에 따른 산림생태계 파괴를 최소화 하도록 노선을 선정하고 급경사지 및 토사유실 등 산림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임도시설 대상지에서 제외하고 견고하고 환경친화적인 임도가 구축되도록 총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다. 추진계획

합리적인 임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우선 지형과 당해 산림의 기능 및 장기적 시업관리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산림경영상 활용도가 높고 각종 사업이 집중되는 생산임지로서 국·민유림이 연계되고 지역개발 효과가 높은 간선임도망을 우선 선정 시설한다.

임도설계는 현지를 철저히 조사·분석하여 산림훼손의 최소화와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토록 하되, 예산에 의한 물량 위주의 설계는 지양하고 견고한 임도가 설계되도록 시공난이도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단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질적인 설계로 전환한다.

민유임도의 경우는 시설비중 산주 자부담 10%가 포함되어 있으나 산림 소유규모 영세성, 투자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으로 자부담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계획적인 임도망 구축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산주 자부담을 산림개발기금에서 융자 지원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지원한다.

임도시공에 있어서는 전년도 사전 설계분은 해빙과 동시 착공하고 1998설계분은 설계완료 즉시 발주 착공케 함으로써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무리한 시공을 방지하고, 임도시공 기술과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성실 시공토록 조치하고 하도급을 원천적으로 근절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한다.

임도는 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한 다음 관리를 잘하는 것도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이므로 각 기관별, 노선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후 정기 및 수시점검 실시 등 보수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수해피해우려 또는 상습지는 우기전 현지를 확인조사하여 사전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라. 임도시설 장기계획

우리 나라 산지특성을 감안하여 ha당 적정 임도밀도를 10m로 책정하고 2030년까지 56,000km를 시설하는 장기계획물량을 감안, 제4차 산림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차질없이 목표를 달성코자 추진중에 있으며 단계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산림토목과 임업사무관 이철수)

<표 3-2-4> 임도시설 장기계획

구분	계획	추진실적 ('68~'97)	1단계		2단계	3단계	누계
			'98	'99~2004	2005~2007	2008~2030	
사업량 (km)	계	12,413	1,266	10,473	4,969	26,879	56,000
	국유임도	3,662	304	2,141	905	7,988	15,000
	민유임도	8,751	962	8,332	4,064	18,891	41,000
사업비 (백만원)	계	528,228	87,107	674,557	321,601	1,769,623	3,381,116
	국유임도	164,360	26,703	152,176	66,210	584,402	993,851
	민유임도	363,868	60,404	522,381	255,391	1,185,221	2,387,265
ha당밀도(m)		1.92	2.12	3.74	4.27	10.0	10.0

자료 : 산림청 자원조성국

3. 임업기술개발·보급

가. 임업기술개발

WTO체제 등 새로운 세계질서에 발맞추기 위하여 무한한 혁신과 창조적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임업·임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측면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연구성과를 거양(擧揚)하고 산지의 자원화, 임업의 산업화, 산림의 공익화에 중점을 두고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4차 산림기본계획과 연계된 산림시책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 기술개발, 임산자원의 고도화 및 신용도 개발, 단기임산 신소득원 개발, 임업 생산기술 개발, 산림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임업 경영구조 및 제도개선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나. 임업기술보급

1998임업기술의 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우선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배치한 임업기술지도원 787명을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 활동에 활용하기 위하여 경영주체별로(독립가, 임업후계자, 협업체) 전담배치하여 산림시책 홍보, 경영기술정보, 행정편의를 집중 제공토록하여 각 경영주체의 산림경영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정기적으로 임업경영상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지도원으로 하여금 파악 보고토록하여 이를 임정시책에 반영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지도원들의 자질과 능력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기술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기술지도 활동의 효율화를 위하여 1998년도에 기동장비로 썬차 30대를 구입 지원할 계획이다. 임업기술지도원들에 대한 급여현실화가 되지 못하고 있어 현실화 되도록 정부예산에 반영토록하여 임업기술 지도보급에 가일층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여건 개선에 계속 노력할 것이다.

(기술지원과 임업사무관 조동하)

<표 3-2-5>

임업기술지도원 배치 운영상황

구 분	계			본회·도지회			조합 지도원
	합계	지도사	지도원	소계	지도사	지도원	
합 계	787	10	777	68	10	58	719
중앙회	9	2	7	9	2	7	-
경 기	109	1	103	7	1	6	97
강 원	87	1	86	7	1	6	80
충 북	60	1	59	7	1	6	53
충 남	82	1	81	7	11	66	75
전 북	67	1	66	7	1	6	60
전 남	120	1	119	7	1	6	113
경 북	137	1	136	7	1	6	130
경 남	108	1	107	7	1	6	101
제 주	13	-	13	3	-	3	10

자료 : 산림청 자원조성국

4. 산지이용질서 확립

1997년 재편완료한 산지이용체계 내용에 따라 보전임지는 공공용·산업용 이외 다른 용도로의 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고 새로운 토지이용수요는 준보전임지를 활용하도록 하고자 한다. 보전임지는 특히 자연환경의 근원으로서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할 것이나 필요한 규제는 법령에 투명하게 명시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규제는 과감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국토면적의 65%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산지의 타용도 전용은 불가피하나, 산지를 개발할 때에는 산림이 갖는 공익적 기능의 저해를 최소화하면서 개발하는 자연친화적 산지개발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산지를 개발할 때에는 경사진 산지를 일단 평지로 만든 다음 그 위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평지형 개발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토사유출, 경관저해 등 환경피해를 유발한 것이다.

따라서 산지를 개발할 때에는 경사진 지형을 최대한 유지하고 녹지의 보전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자연친화적 산지개발방식의 구체적인 모델등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서 연구 등을 거쳐 자연친화적 산지개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법령에 반영하여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지계획과 임업서기관 이창재)

제2절 임업의 산업화

1. 국내재 이용촉진 및 목재산업 육성

최근까지 국산재는 직경 15cm 미만의 간벌·소경재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수입재에 비하여 공급이 미약하였다.

1997년 기준으로 목재의 96%를 수입하여 가공하여 왔기 때문에 합판, 보드류 등 원목수입이 원활한 일부산업을 제외하고는 생산시설이 영세하고 국제경쟁력이 계속 약화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목재산업이 3D업종으로 인식되면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임금상승등으로 경영이 악화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IMF이후 원목의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던 제재소가 휴·폐업되는 등 국내 목재업계는 외부환경의 변화로 구조조정의 단계를 밟고 있다. 향후 임산물 가공·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을 규모화·현대화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내업계의 원자재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8년 국산재의 공급량을 300천m³ 확대 공급하며 국산재의 이용촉진을 위해 76억원을 융자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통나무 가공시설, 목탄·목초액시설, 목각시설 등 부가가치가 높은 국내 생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8년 28개소에 걸쳐 83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국산 간벌·소경재 및 폐목재를 이용하는 목탄·목초액시설 6개소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국산재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환경농업 육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건축·가구산업의 기초원자재인 합판·보드류업계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8년 75억원 융자지원할 방침이다.

합판은 1992년 리우회의 이후 원목확보가 어려운 활엽수 대신 침엽수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교체하고, 보드류는 수입재 대신 국산 소경·간벌재를 이용할 수 있는 유망산업으로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

(임산물유통과 임업사무관 고기연)

2. 단기소득임산물 육성

임산물 분야에 있어서도 시장개방 등 세계화 추세가 진행되고, 소득증가에 따라 국내 소비자의 소비패턴이 고급화·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밤, 표고, 송이, 대추, 산채 등 고소득품목의 시장적응성 및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규모화에 의한 생산기반 구축, 품목별 생산자 단체 육성을 통한 경영구조 개선 및 상품의 규격화·표준화를 통한 교부가가치화를 정책기본 방향으로 품목별 육성대책을 수립·추진중에 있다.

표고의 경우 생산량이 연평균 13%의 높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내수의 급격한 확대(연평균 26%) 국내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바, 내수충족 및 수출물량 확보를 위해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1997년까지 시설재배 1,171천㎡를 지원하였고 1998년도에는 시설재배 708천㎡를 지원하여 시설재배 비율 20%를 달성할 예정이며 표고재배단지 1997년도에 6개단지를 조성완료 하였고, 1998년에 7개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적 여건에 맞는 표준재배모델을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1997년도에 2개 모델을 개발 완료하였고, 1998년에 4개 모델을 추가 개발할 예정이며, 표고자목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신고에 의한 표고자목 벌채량을 종전 5㎡에서 50㎡으로 확대하였고, 시·군별로 「표고자목 생산구역」을 지정하

여 표고자목의 보속생산 체계를 마련하였다.

밤의 경우 지속적인 조립으로 생산기반은 조성되었으나, 생산 및 가공분야에서 기계화의 미흡으로 경영구조가 취약해지고 있어, 기계장비 및 가공시설의 개발보급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고 있다.

1998년부터 밤수집기 등 생산장비 지원을 시작하였고, 밤작업로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작업로를 임도개념에서 분리하여 시설의 법적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간소화 하였다. 또한 1995~1997까지 한국식품개발연구원과 함께 개발 완료한 밤박피가공시설을 '98년 광양과 부여에 설치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까지 10개소로 확대하여 연간 2만톤 규모의 박피 밤 공급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외 산채, 약초, 대추 등 산업화가 가능한 품목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산채, 약초의 임간청정 재배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유림의 활용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숲가꾸기와 단기소득증대를 병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임산물유통과 사무관 최병암)

3. 임산물유통구조개선

WTO체제 출범이후 자유무역확대로 목제품과 버섯, 잣, 대추, 호두 등 임산물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외국임산물과 당당히 겨루어 나갈 수 있도록 국내 임산물 생산자에 대한 경쟁력 제고와 산지와 소비지를 연계한 직거래 유통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하여 유통기반시설 확충과 품목별 전문생산자 조직 육성 및 지원강화, 생산자의 시장교섭력 제고를 위한 신속한 유통정보제공 등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임산물생산, 유통, 소비량에 따라 산지와 소비지를 연계한 권역별 임산물 유통시설 기반구축을 위하여 2004년까지 총 162개소의 임산물유통시설을 전국에 설치할 계획이다. 1998년도에는 임산물생산 주요거점지역에 임산물 직매장 16개소, 목재종합집하장 2개소 등 산지유통시설 18개 시설을 설치하여 산지 유통시설과 소비지 유통시설을 연계한 직거래 유통체계를 구축

하고 있으며, 특히 1995~1997,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한 임산물종합유통센터(여주)가 1997. 5. 23일 준공됨에 따라 IMF체제하의 경제난 극복을 위해 수입의존도가 높은 집성재, 원주가공목, 건축내·외장재등 고부가가치 목제품을 생산·공급함으로써 외화절감 효과와 더불어 산주에게도 더많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한다

생산자·소비자를 연결하는 신속하고 실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유통정보 제공을 위하여 목재집하장 등 임업협동조합중앙회 계통조직을 유통정보 담당기관으로 육성, 임산물유통전산화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DACOM, 하이텔을 통하여 살아있는 유통정보를 생산자·소비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자·소비자를 연결하는 신속하고 실제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유통정보제공을 위하여 1997년도에 임산물유통정보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1998. 6. 9부터 농림수산정보센터 정보망을 통하여 벌채허가 임산물생산량·가격동향·직거래 정보등 살아있는 임산물유통정보를 생산자·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임산물유통과 사무관 이규태)

4. 사유림경영의 활성화

사유림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내실있는 경영지도로 산주의 소득을 증진하고 사유림경영을 활성화하여 임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며 소유주체와 규모에 따른 경영차별화로 사유림경영의 규모화, 다각화, 소득화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첫째, 소규모 영세사유림은 협업경영체를 조직하여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협업경영체를 단계별로 법인화, 사유림경영주체로 육성하며, 둘째, 방치된 부채산주 산림 등은 대리경영제를 도입하여 사유림경영을 활성화하고 산주의 소득증대 및 산림의 제기능이 최고도로 발휘될 수 있도록 우선 1단계로(1999~2001)도별 1개소 이상 대리경영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이를 토대로 2단계(2002년 이후)부터는 점차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지원과 임업사무관 조동하)

5. 임업경영 주체육성

가. 독립가·임업후계자 육성

일정규모 이상의 사유림을 소유하고 산림경영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산주를 발굴하여 독립가로 인정하고, 농산촌에 정착하여 산림을 경영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임업후계자로 선발하여 이들이 사유림경영을 선도하고 또한 지역사회 임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는 사유림경영 선도자로 우선 지원 대상자인 만큼 이들의 선발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지도 및 시책홍보를 펴는 한편,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더 많이 선발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일단 선발된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에게는 정부에서 영림계획에 의한 자율시업을 최대한 인정, 조림·육림 등 국고보조 사업량 우선 배정, 의무조림비 예치면제, 별채사업신고시 첨부서류 생략 등의 행정, 기술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임업진흥기금을 대폭 확대하여 독립가 육성자금 50억원 및 임업후계자육성자금 50억원을 장기저리로(5년거치 10년상환, 년3%)융자 지원 하는 한편, 각종 임업기술정보 자료제공, 우수독립가 및 임업후계자에 대한 포상, 해외연수 기회부여 등을 통하여 사기를 북돋워 줌으로써 산림재투자의욕과 긍지를 심어줄 방침이다.

(기술지원과 임업사무관 조동하)

나. 임업기능인 육성

산촌주민을 중심으로 임업기능인을 선발·육성하여 산림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산촌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임업기능인 중·장기양성계획』에 따라 영림단을 연차별로 조직하고 있으며 1998년도에는 신규로 38개단 510명을 조직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조직된 영림단의 조기정착을 위한 장비지원으로 8종 480대, 566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산림사업의 질 향상을 위한 임업기능인 교육·훈련은 현장위주로 하여

교육과정별(신규, 보수, 순회) 차별화를 도모하고, 임업기계의 운전조작기술 및 점검·정비능력 배양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직업으로서 영림단 임업기능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충분한 작업물량 확보와 시기별 적정배분토록 하고 상조회 운영을 통한 구성원간의 결속력 강화 및 복지증진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경영과 임업사무관 김용관)

6. 산촌종합개발

산촌은 산촌주민들의 삶의 터전으로서 뿐 아니라 도시민들의 휴양장소로서, 또한 수자원 함양과 국토보전 등 국민 전체를 위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공간상의 한 부분(약46%)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특히 산촌지역의 문화적·지리적·경제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과거와 같은 단순 농림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산촌종합개발사업과 같이 산촌소득증대와 임업의 산업화를 도모할수 있는 종합적인 산림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금년도 산촌종합개발사업 계획을 보면 먼저 1997년에 설계한 16개마을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농림부, 행정자치부 소관 연관사업도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착실히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998 설계대상지 22개소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보다 효과적인 설계를 위하여 지역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내실있는 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1997년에 실시한 전국산촌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발대상산촌을 구분·지정하여 대상지 선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마을을 집중 개발하는 한편, 마을의 특성과 개발여건등에 부합하는 유형별 개발모델을 정립 함으로써 효율적인 산촌개발을 도모코자 한다.

(산지계획과 사무관 이현복)

제3절 산림의 공익화

1.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가. 환경조림 확대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도시화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대기, 수질 등 우리의 자연환경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맑은물, 깨끗한 공기의 공급과 보건·휴양공간의 제공 등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로 자연친화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로변, 도시·마을 주변, 관광지 주변 등 산림과 공한지에 향토특색수종 큰나무조림을 추진 속성녹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기에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를 대비하여 경기장 주변은 물론 주요 도로변, 관광지, 사적지 주변 등의 환경을 새롭게 단장하여 금수강산을 복원, 푸른한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조림 7천ha, 육림 68천ha, 가로수 190천본을 심고 산지사방 110ha, 훼손지 131ha를 복구하며, 무궁화 2,000천본 식재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경관림 조성, 미래의 숲, 생명의 숲, 명산가꾸기 등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역특색숲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표 3-2-6> 환경조림 추진계획(1998)

(단위 : ha, 천본)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면적	본수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1,916	2,746	14,974	7,873	7,101	-
큰나무조림	1,686	2,529	11,827	6,407	5,420	-
지역특색녹화사업	230	217	3,147	1,466	1,681	-

자료 : 산림청 자원조성국

나. 5대강유역 산림특별관리

5대강유역을 중심으로 수원함양기능 제고를 위한 관리대상산림을 지정, 체계적으로 관리해 수질오염과 물부족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고 깨끗한 물의 지속적인 공급기반을 확충하고자 수원함양에 직접 영향이 있는 5대강유역산림을 집중 관리하고 생태·환경적 기능 증진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산림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조림사업은 대면적 개발을 지양하고 소구역 조림과 수하 식재, 천연갱신 등으로 복층림을 조성하고 수자원 함양기능 및 수질정화기능을 높이도록 뿌리의 양이 많고 땅속 깊이 뻗는 수종을 선정 식재할 계획이다.

조림지 및 천연림에는 적기에 육림 등 보육작업을 실행하여 우량림으로 유도하며, 황폐산지·계천에 대한 산지·야계사방과 사방댐 시설로 수원함양 및 관리시설을 확충하는등 환경보호에도 최선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또한 5대강유역 산림특별관리를 위해 취수장주변 산림을 제외한 본류 유역 5km이내 산림(830천ha)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산림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자원조성과 임업사무관 심영만)

<표 3-2-7>

5대강유역 산림사업계획(1998)

구분	단위	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그외지역
○ 조림	ha	1,140	374	407	119	109	83	48
○ 육림	"	10,444	2,354	4,116	1,075	566	1,699	634
○ 간벌	"	2,067	662	632	263	99	284	127
○ 사방								
- 산지	ha	9	1	4	2	-	-	2
- 야계	km	10	-	5	2	-	3	-
- 사방댐	개소	1	-	1	-	-	-	-
○ 임도	km	61	13	27	5	-	1	15

자료 : 산림청 자원조성국

2. 생물다양성 보전·관리

가. 야생식물자원 보전·관리

1995년부터 임업연구원 중부임업시험장에서 추진해온 회귀 및 멸종위기 식물 보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물분류·생태전문가 및 관계 학자가 참여하여 백아도의 해변노간주, 지리산의 자주솜대, 변산의 노랑 붓꽃등 멸종위기 식물과 광릉의 광릉요강꽃, 정선의 한계령풀, 목포의 왕자귀나무등 회귀 및 특산식물을 40지역 40종을 대상으로 자생지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원시림, 회귀·특산식물의 보전을 위해 천연보호림을 확대 지정하여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개체수의 감소 및 서식지파괴가 우려되는 회귀·특산식물에 대해서는 식물생체, 종자를 수집하여 온실과 묘포장에서 각식물의 특성에 따른 증식 체계를 구명하며, 금년도에는 갯쟁이풀, 가시연꽃, 설악눈주목을 대상으로 연구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청에서 주최하고 한국자생식물협회에서 주관하는 여덟번째 우리 꽃 박람회를 개최하여 우리 꽃 사랑운동의 확산과 농가소득 및 수출자원으로의 육성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4년차인 비무장지대 생태조사는 우리 나라 생물자원의 보고인 동지대의 생물다양성 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고유의 생물자원에 대한 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한다.

나. 야생조수보호대책 강구

(1) 야생조수 보호증식

산림이 전국토의 65%를 차지하고 다양한 식생환경을 지니고 있어 먹이 식물이 풍부하여 야생조수의 서식지로는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 따라서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할 목적으로 1997년부터 제3차 야생조수보호 기

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998년도는 2차년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야생조수의 서식지 확보 및 보호 목적으로 조수보호구로 지정된 543개소 118천ha에 대한 보호·관리 강화로 서식 기반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점차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1998년부터 조수보호구별로 시장·군수가 지정고시한 조수번식기에는 조수보호구 출입을 통제하고, 보호구표지판 설치, 먹이식물식재 등 서식환경 조성을 통하여 야생조수보호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도지사가 관리해 오던 국유림지역의 중요한 야생조수 서식지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직접 조수보호구를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 반달가슴곰 생태 및 종복원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반달가슴곰 서식실태 및 생태파악을 통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부터 국내에서 인공사육하고 있는 반달곰에 대하여 DNA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여 백두산 반달곰과 국내사육곰간의 식별방법 및 유연관계를 밝혀 유전적 차이를 규명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코자 한다.

(2) 야생조수 보호 국민계몽운동 전개

산림녹화와 조수보호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야생조수 밀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서식 고유종의 13%에 달하는 65종이 멸종되거나 멸종위기에 처해있다.

이는 야생조수가 몸에 좋다는 잘못된 인식과 근거없는 속설에 따라 보신용으로 선호하는 후진성 국민의식과 불법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야생조수 밀렵 및 밀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청 주관으로 경찰청등 관련부처와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 단위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밀렵현장, 건강원, 박제상, 철물점등 유통경로를 중점으로 지속적인 특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야생조수 보호를 위한 불법엽구 자진 수거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자발적인

참여정신을 고취하고 을무나 텃 등을 수거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일제히 거행하며, 밀렵추방 결의대회 등 야생조수보호 계몽활동을 야생조수보호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수렵협회 밀렵감시단 운영, 밀렵행위에 대한 벌칙강화, 수렵면허시험제도 추진으로 밀렵근절과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을 도모하여 나갈 계획이다.

야생조수 애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조성을 위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조수 사진전, 탐조회등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한 조수보호 애호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 조수애호 모범교 지정확대와 녹색수업, 푸른숲선도원 교육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부상당한 야생조수 구조치료는 전국 동물병원 266개소를 연중 운영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신속히 구조와 치료를 할 수 있는 야생조수 전문치료병원을 1998. 4월 경기도 양주군에 개원하여, 구조전용 앰블런스등 차량 5대, X-ray, 마취총 등 각종 첨단 치료장비를 갖추고 연간 새와 짐승 2,500마리를 치료할 수 있게 된다.

(3) 야생조수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또한 야생조수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준수,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3회 한·일 철새보호협력회의 참가, 철새보호를 위한 다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나갈 계획이다

(4) 수렵제도개선 및 운영 추진

1998년 엽기(1998. 11. 1~1999. 2. 28)에는 순환수렵장은 강원도, 고정수렵장은 제주도와 강원도 춘천에서 운영 할 계획이다.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수렵면허 시험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렵면허시험을 위한 교재작성 및 문제출제, 시험시행 등을 차질없이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수렵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수렵으로 인한 신체, 생명, 재산 등의 피해발생

시 적정보상이 되도록 하고, 현행 도별 순환제로 운영되는 순환수렵장을 도내 군별 순환수렵제를 검토 추진할 방침이다.

(산림환경과 임업사무관 강호덕)

3. 산림휴양시설 확충

가. 휴양시설 확대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림내 휴양시설을 확대 조성하여 국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을 확대개발하여 자연학습공간을 조성하고, 도시 공간 주변에는 도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산림욕장을 조성하여 언제나 쾌적한 분위기에서 휴식을 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제공해 나 갈 계획이다.

<표 3-2-8>

산림휴양시설 조성계획

(단위 : 개소)

구 분	계	1997까지 실적	1998계획	1999~2007
계	315	110	18	187
자연휴양림	115	67	8	40
산림욕장	83	28	10	45
숲속수련장	117	15	-	102

자료 : 산림청 산림경영국

나. 휴양시설 조성·운영 개선방안 강구

전국에 조성·운영중인 휴양림에 대하여 4계절 운영체계 확립 등 기본시설 위주로 보완함으로써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매년 급증하는 산림휴양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계속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산림휴양시설의 조성은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국민에게 보다 나은 쾌적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수준높은 휴양림 조성에 힘써 나아갈 계획이다.

(산지계획과 임업사무관 최준석)

4. 산림문화 진흥

가. 추진배경

1990년대 들어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여가'와 '생활의 질'을 중요시 함에 따라 산림과 관련한 문화·휴양적 수요가 급증하는 등, 의식주 중심의 생활양식이 정신적·정서적 만족을 얻기 위한 문화적 복지 추구의 생활양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등산·산림욕·산악레포츠 등 산림문화휴양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산림정책은 국토녹화·산지자원화 정책과 같은 경제적 사업에 집중한 결과, 위와 같은 산림에 대한 문화적 수요에 대해서는 적절하고 구체적인 정책마련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이제는 산림정책도 경제적 기능 증진 위주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산림의 본질과 고유기능을 재조명하고, 국민들의 문화·복지적 욕구의 충족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성원과 참여속에 금수강산을 복원하는 「산림르네상스의 개화」와 임정의 당면과제 해결 및 업무영역의 확대를 위해서도 산림문화정책은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나. 기본방향

산림의 가치와 소중함을 새롭게 깨닫게 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향상 및 '산림 르네상스 개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산림문화운동의 이념적 지표를 정립하고 인식을 확산시키고 자연조화적 전통산림문화를 계승·발전시켜 국민친화적·자연친화적 산림문화공간을 조성한다. 국민들의 산림체험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산림의 문화상품화 방안을 모색한다. 그리고 이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다. 추진계획

(1) 이념적 지표정립과 인식확산

산림공무원에게는 '산림문화 마인드'를 고취시키고 국민들에게는 산림의 기능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자율적이고 효과적인 산림문화 정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임정의 지지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국민 모두가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관이나 윤리, 산림 이용자의 행동강령 등을 담은 「산림현장의 제정」과 「산림문화상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밖에 산림을 주제로 한 각종 행사의 개최 및 산림문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2) 전통산림문화의 계승·발전

문화유산은 민족의 정체성(正體性, Identity)을 지켜주는 뿌리임을 인식하여 산·나무·숲 관련 전통 문화유산을 발굴·수집·보전하며, 민족의 정기가 서려 있고 생태계의 보고(寶庫)인 백두대간을 보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황장금표(黃腸禁標) 등 유형적 산림문화재의 발굴·복원 및 무형적, 제도적인 산림문화를 연구·정리한 「산림문화총람」을 발간하였다. 그리고 관계부처와 민간공동의 「백두대간 보전협의회 구성」등을 통하여 백두대간의 합리적 보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3) 산림문화공간 조성 (Hardware개발)

산림속에서 자연을 배우며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국민친화적인 산림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생활환경림, 마을숲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숲을 새롭게 단장하여 국민들의 자연생태교육장 및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등산로에 편의시설, 위생시설 등을 설치하고 훼손지를 복구하는 등, 등산객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등산로를 합리적으로 보존할 계획이다.

(4) 산림체험의 확대와 문화상품화 (Software개발)

산림문화 교육의 확대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산림문화를 국민생활문화로 확산시켜 나가고, 산림의 문화상품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자기안내서(self-guided booklets)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산림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산림의 기능과 숲의 혜택 등에 관한 국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그리고 산림유적지·휴양지·주산단지 등과 연계한 산림문화 답사코스를 구상할 계획이다.

5. 산불방지 종합대책

가. 우리 나라 산불의 특성

우리 산림은 대부분이 20~30년생으로 불에 타기 쉬우며, 산림내 가연성 지피물이 많아 산불발생 개연성이 높고, 경사·기복이 많은 산지로 산불발생시 연소진행 속도가 빨라 급속히 확산되는 특성이 있다. 또한 산불 발생시 고온 및 난기류, 진행방향 급변 등으로 근접진화가 곤란하고 농산촌 인구감소·노령화로 자체 진화인력이 부족하며, 봄·가을철 건조기에 계절풍이 겹쳐 동시다발로 확산되는 경향이다. 또한 우리 나라 산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인재(人災)라는 것이다.

나. 1998산불방지 종합대책

산불방지 근무태세 및 공조체제 확립을 위해 산불조심기간중(봄철 2. 1~5. 15, 가을철 11. 1~12. 15)에는 산림청을 비롯하여 시·도, 지방산림관리청은 물론 시·군·구, 국유림관리소 등 전국산림관서에 산불방지대책본부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국가재난방지차원에서 행정자치부, 국방부, 기상청 등 관련부처와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시·도 주관으로 소방·경찰관서, 관할 군부대, 공원관리부서, 임업·환경단체 등과 지역 공동산불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산

불방지를 위한 총력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범 국민적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를 위해 산림의 중요성과, 산불의 위험성, 생태계 파괴의 심각성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산불위험시기에 산불조심 T·V홍보방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TV, 라디오에 직접 출연하여 특집보도를 하는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중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산불조심 캠페인의 날로 지정하여 주요 등산로, 터미널, 기차역 등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산불조심 캠페인을 전개하고 반상회, 민방위교육, 직장교육, 영농교육, 각종 회의시 산불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각종 일간지에 산불조심 당부내용을 실어 계도할 것이다.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 강화를 위하여 열차, 지하철,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계도방송 실시, 산악회 등 각종 단체에 산불조심 협조요청, 현수막·입간판 등 다양한 홍보물을 이용하여 산불조심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산불은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고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산불위험지역 입산통제 및 등산로를 폐쇄조치하고 논·밭두렁소각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여 마을별로 공동소각토록 하는 한편 기상상태별 산불예방 행동지침을 생활화 하도록 한다.

또한 군사훈련에 의한 산불방지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산채 및 약초 채취자 집중관리, 어린이 불장난 감시강화, 성묘 및 무속행위자 화기물 취급 집중감시 야간산불·방화에 대비하여 순찰조 편성운영 등 산불 취약지를 집중적으로 계도·감시하고, 강화된 산불방지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며 산불예방 계도·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나가고자 한다.

초동진화의 총력추진을 위해 산불조기발견을 위한 산불무인감시시스템 및 산불감시시설을 확대설치하여 상황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신고망 재정비 및 신고요령 등을 전파하여 산불 상황을 신속히 알리고 일단 산불이 발생하면 조기진화를 하여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는 산악형 산림으로 지상진화가 어려운 실정으로 소형 산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헬기에 의한 공중진화에 의존하고 있다.

효율적인 공중진화를 위하여 지방 격납고를 확충(1998현재 : 4개소)하여 헬기 출동시간을 단축하고 또한 위험지역은 현지에 전진 배치하여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한 무선중계기를 확대설치(1998신설 10개소)하여 산불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공중진화 기반시설인 취수원의 체계적 관리, 항공유 급유지원체계 개선 및 유조차 적정배치로 헬기에 의한 공중진화 능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지상진화를 위해서 산불진화 지휘체제를 구축하고 공중진화대와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산불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산불진화대의 정예화 및 산불진화훈련실시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뒷불감시 책임 담당제를 실시하여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산불로부터 피해를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홍보 및 예방활동과 선진진화장비를 개발·확충, 산불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길이 물려 주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6. 산림병해충방제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찰을 철저히 하여 조기발견, 적기방제를 실행함으로써 방제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솔잎혹파리는 수간주사, 천적방사, 항공엽면시비 등 가능한 방제방법을 총 동원하여 피해확산을 저지하고, 솔껍질깍지벌레, 잣나무넓적잎벌 및 기타해충도 발생 전면적에 대하여 조기 박멸토록 하는 한편, 효과적인 방제방법의 꾸준한 연구개발과 저독성농약 및 자연친화적인 방제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병해충방제와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의 균형유지 목적을 동시에 이룩하고자 한다.

1998년도 산림병해충 방제계획량은 235천ha를 책정하고 사업비 500억원

(국비 280억원, 지방비·기타 220억원), 총 투입인원 678천명, 사용약제 524톤, 헬기 연 958대를 투입하여 연중 종합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표 3-2-9>

산림병해충별 방제계획(1998)

(단위 : ha)

계	솔잎혹파리	솔껍질각지벌레	소나무재선충	밤나무해충	원불나방등 기타해충
235,216	81,070	11,331	1,578	38,210	103,027

자료 : 산림청 산불통제관실

7. 산사태 예방

산사태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발생시 원활한 복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8산림분야 풍수해방재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주요 예방대책으로는 전국의 산사태위험지를 장마기 이전까지 일제조사하여 재해위험지로 지정 고시후 특별관리토록 할 계획이며,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기상상황에 따라 산사태발생 예보제를 실시하여 인명·재산피해를 줄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반이 불안정한 절·성토법면 등 재해발생위험지는 장마기 이전에 비닐피복·우회수로 등으로 우선 보완 조치하고 위험지의 완급에 따라 연차적으로 예방사방·사방댐 등을 시공하고 있다.

특히, 1998년부터는 임도시설지에서의 산사태발생시 억지력 확보 및 피해최소화를 위해 임도시설지중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은 사방댐의 연계시공을 하도록 하여 전체 사방댐 70개소중 21개소를 임도하류지역에 시공할 계획이다.

장마기를 앞두고 재해취약지역인 골프장·스키장등 대규모 형질변경지에 대해 철저한 예방대책을 강구토록 각 시·도 및 지방산림관리청에 특별 강조하였으며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에도 협조요청하였다.

피해발생시 복구대책으로는 우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곳과 피해확대 우려 지역은 흙마대쌓기, 우회수로 설치 등으로 응급복구 조치하고 복구

우선순위에 따라 신속한 계획으로 건설한 복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유사시 인명구조 및 부상자 수송을 위해 산림청 헬기 28대 (김포 9·익산 7·양산 6·원주 6)를 활용토록 하였으며 산사태 응급복구, 대민지원 등을 위해 필요시 전국 임협계통의 장비(굴삭기 60·덤프 66·불도저 4대 등)를 동원할 예정이다.

(산림토목과 임업사무관 김동권)

<표 3-2-10> 산사태위험지 현황(1997)

(면적 : ha)

계		I 등급		II 등급		III 등급	
개소수	면적	개소수	면적	개소수	면적	개소수	면적
97	86	21	22	25	20	51	44

자료 : 산림청 자원조성국

<표 3-2-11> 산사태 발생예보 및 행동요령

○ 예보의 종류

	산사태 주의보	산사태 경보	비 고
연속강우량(mm)	100~200 미만	200 이상	발령권자 : 시장·군수
시 우 량(mm)	20~30 미만	30 이상	
일 강우량(mm)	80~150 미만	150 이상	

○ 행동요령

	산사태주의보	산사태경보
행정기관(단체)에서 할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에 산사태주의보 전파 ○ 관계공무원 및 관련기관 비상근무 체제 유지 ○ 기상정보 및 강우량 파악 ○ 위험지구 점검 실시 및 주민대피 준비 ○ 응급복구자재 점검 및 기동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에 산사태경보 전파 ○ 관계공무원 및 관련기관 비상근무 체제 강화 ○ 기상정보 및 강우량 파악 ○ 위험지구 점검 강화 및 주민대피 조치 ○ 피해발생대비 복구계획 점검
주민(임업인)이 할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사태 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 산림부산물재배시설, 양묘장, 조수사육시설 등 피해예방 조치 ○ 기상정보 및 강우상황 등 청취(TV, 라디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사태 위험지구 주민 대피 ○ 산림부산물재배시설, 양묘장, 조수사육시설 등 피해예방 조치 강화 ○ 기상정보 및 강우상황 등 청취(TV, 라디오 등)

자료 : 산림청 자원조성국

제4절 국제협력의 강화

1. 산림자원 외교 및 국제협력 강화

세계 산림자원 부국들과 자국 자원보존정책 강화추세와 국제시장에서 원목등 임산 원자재의 가격상승의 잠재성이 증가함에 따라 원자재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나라는 안정적 공급원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자원외교 활동의 강화가 요망된다.

우리 나라에 원목을 가장 많이 공급하는 뉴질랜드와는 1997년 4월에, 호주와는 7월에 양국 관계당국이 임업협력약정을 체결하였으며, 1998년에는 베트남, 미얀마 국과 협정체결을 위한 협의를 하는 등 주요국가들과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협의와 공동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아시아, 대양주 등 개발도상국 산림공무원 8개국 15명을 초청, 3주과정(6. 7~27)의 산림경영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국제열대목재기구(ITTO)를 통하여 태국에 임업분야의 특별사업지원금 1만불을 공여하였고, 또한 미얀마 사막지역에 산림녹화 시범단지 조성사업(1998~2000)을 추진중에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식량농업기구(FAO),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멸종위기에 처한야생동·식물의국제거래에 관한협약(CITES)등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하여 아국 입장표명과 국익 우선의 활동을 전개하고, 다자간 및 양자간 협력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국제협력과 임업서기관 전진표)

2. 임산물 수출촉진과 통상협력 증진

가. 임산물 수출촉진

1998년도 임산물 수출목표는 1997년도 수출 3억4천만\$보다 약 18% 증가한 4억\$로 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수출유망 우수임산물 구매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포장·운송비, 포장기계 구입비를 신규지원함으로써 수출업체의 물류비용을 절감시켜, 우리 임산물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둘째, 수출전담연구팀을 구성·운영하여 기술지도, 우수품종 개발·보급 및 수출애로해소에 중점 지원하며, 셋째, 목재산업의 주요 원자재인 원목(기본 2%→할당 0%), 합판용 단판(기본 5%→할당 2.5%)에 대하여는 할당관세를 지속 적용하여 업계의 원가부담을 경감시키고, 넷째, 해외시장정보를 신속 조사·전파하고 각종 해외박람회 수출업체를 적극 참여시켜, 임산물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협력과 사무관 박기남)

나. 통상협력 증진

양자간 통상협력을 강화하여 상대국의 우리 나라 수출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제거 및 관세인하를 유도하고, 1998년도말 타결을 목표로 하는 APEC 조기자유화 논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나라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며, 1999년말부터 시작되는 차기 농산물협상을 철저히 준비하여 우리 나라 관련산업 및 생산농가를 보호해 나가고자 한다.

WTO 협정에 따라 수입되는 밤, 잣, 대추 최소시장접근물량에 대하여는 국내산 집중 출하기를 피하여 수입되도록 하고, 수입급증품목 또는 수입급증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입을 억제할 계획이다.

<표 3-2-12>

임산물 수출목표(1998)

(단위:천\$)

		1998 목표	1997 실적	증감(%)
계		400,000	339,072	18
목재류	소 계	140,000	109,593	28
	합 판	50,000	30,624	63
	섬 유 판	30,000	27,035	11
	목 제 품	60,000	51,934	15
석재류	소 계	90,000	93,693	△4
	원 석	18,000	16,275	11
	가 공 석	72,000	77,419	△7
부산물	소 계	170,000	135,786	25
	밤	105,000	88,393	19
	송 이 버 섯	40,000	30,088	33
	표 고 버 섯	13,000	8,292	57
	명 개 잎 등	12,000	9,013	33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3. 해외조림 확대

우리 나라의 대부분의 산림이 아직은 성숙기에 달하지 않아 국내 목재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2000년대 중반에 가서도 총 목재자급률이 50%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어서 장기적으로도 수입목재에 의존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더구나 자원보유국의 목재공업화 추진과 1992년 6월 리우환경회의를 전후한 전세계적인 환경보존운동의 대두로 각국은 절벌정책과 원목수출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장기·안정적인 목재 자원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따라 생육조건과 투자환경이 유리한 투자유망국에 2050년까지 100만ha의 조림지를 확보하고 총 목재수요의 50%를 공급한다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98년에는 지원자금을 전년대비 41.5% 증가한 8,190백만원을 확보, 민간투자의 유인 및 확보된 조림대상지의 조기조림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상지 및 노동력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날로 투자여건이 악화됨을 감안하여 장기계획상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자금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조림사업비 이외에 무육관리비 지원, 용자기간도 수종별, 지역별, 용도별로 세분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용자비율의 상향조정을 추진하는 등 진출업체가 투자의욕이 고취될 수 있도록 애로사항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4. 통일대비 북한 산림관리대책

통일 가능성에 대비한 북한 산림관리대책과 추진전략을 수립하고자 다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북한 산림의 황폐실상을 규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임업연구원 주관으로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위성사진을 이용하여 북한의 황폐지 분류 및 복구대상 면적을 산출, 황폐지 위치도를 작성하여 북한산림 복구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한다.

둘째, 통일후 예상되는 제반 정책과제의 해결방안, 산지소유·이용·관리·경영방향, 산림행정개편, 황폐지 복구 및 통일비용에 관한 연구를 용역 의뢰하여 바람직한 통일대비 북한산림 관리대책을 수립코자 한다.

아울러 하반기중 북한 산림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문가를 초청, 북한 산림문제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제협력과 사무관 안용덕)

제5절 고용장출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추진

1. 숲가꾸기사업

가. 배 경

우리의 산림은 일제식민지 자원수탈정책과 6. 25동란으로 인하여 황폐되었던 산림을 범 국민적 참여와 정부의 의지로서 완전히 녹화하여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녹화성공국가가 되었다. 이와 같이 치산녹화기에 심은 나무가 본격적인 육림기에 도달하였으나, 농산촌 인력난과 예산부족으로 가꾸는데 소홀하여 많은 면적의 산림이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 연말에 IMF사태에 따라 대규모 실업발생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여 실업대책이 국정의 현안사항으로 대두되었으며 정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숲가꾸기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우리 숲을 가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이번에 숲가꾸기를 통해서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임업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실직자를 임업기능인으로 육성함으로써 농산촌정착의 계기를 마련하여 주고자 한다.

나. 추진방향

숲가꾸기사업은 고용효과가 높은 산림사업을 우선 실행대상사업으로 선정하되 대단지 경제림조성지역 등을 중심으로 사업장을 권역화하고, 기존의 산림사업과 실행목적, 작업체계, 사업공정 등을 차별화하여 실행하며,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이용가능목은 최대한 수집하여 활용토록 함으로써 국산재 활용도 증진에 기여하고, 취업자에 대하여는 산림기술교육을 실시하여 귀농정착을 지원한다.

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의 종류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간벌등 나무가꾸기사업」과 「도시근교 산림정비사업」으로 구분하여 실행하며 「간벌등 나무가꾸기사업」은 간벌, 천연림보육,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육림산물수집 등이며, 「도시근교 산림정비사업」은 등산로정비, 산지정화사업이다.

라. 1998추진계획

숲가꾸기사업의 총투자계획은 395억원(국고 357억원, 지방비 38억원)으로 1998. 5월부터 1단계 사업을 착수하여 179억원을 투입 전국 133개 시·군·구 281개 사업장에서 사업을 실행중에 있으며, 2단계사업은 8월 이후 17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표 3-2-13>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상시고용인원	사 업 비 (억원)		
			계	국고	지방비
계	35,100ha (3,000km)	7,000명	395	357	38
- 간벌등나무 가꾸기	29,400ha	5,000명	319	319	-
- 도시근교 산림정비					
· 등산로정비	3,000km	2,000명	76	38	38
· 산지정화	5,700ha				

자료 : 산림청 자원조성국

또한 숲가꾸기사업에 기능인부로 취업을 희망하는 실업자에게는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임업협동조합중앙회 산하 3개 훈련원(강릉, 양산, 진안)에서 산림의 기능과 역할, 산림작업방법, 기계장비 사용법, 안전관리 등에 관한 이론과 실기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표 3-2-14>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교육계획

계				기 간
계	강릉	양산	진안	
1,500명	500	500	500	'98.5.~11월

자료 : 산림청 자원조성국

2. 생명의 숲 가꾸기 운동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은 숲을 가꿈으로서 국토보호 및 산림자원조성에 기여하고 고용 및 자원봉사의 기회를 부여하며, 국토·자연·산림을 사랑하는 국민 정신을 함양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산림선진국의 초석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경실련 등 많은 민간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단체를 결성하여 생명의 숲가꾸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킴은 물론 숲에 감사하고 숲을 사랑하는 마음이 국민의 마음속 깊이 자리잡고 시민에게 숲가꾸기 실천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하는 숲가꾸기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자원조성과 임업사무관 박종호)

제3장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제1절 산림관련법령정비

법령에 근거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하고, 규제에 대한 기준과 범위를 구체화·명확화 하기 위하여 「산림법」을 개정하고, 화전정리사업이 완료되어 화전신고·분배등을 규정한 대부분의 조문이 존치 필요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일부 필요 조문을 경과규정으로 정하고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고자 하며, 국유임산물을 신속히 매각하기 위하여 매각방법을 개선하고, 입찰참가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특수목적용 입목 또는 원목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실수요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별채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국유임산물매각규칙」을 개정하고자 한다.

(법무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이병호)

제2절 산림행정 규제개혁

IMF 관리체제를 조기에 벗어나고 국가경쟁력을 세계 10위권대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존하는 규제의 존폐여부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경쟁을 제한하거나 국제규범에 미흡한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하고, 신설규제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강화하여 규제신설을 강력 억제하고 모든 규제의 등록과 규제총량제, 규제일몰제 등을 도입하는 산림행정규제개혁을 금년도 우리청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러한 범정부적인 규제개혁작업에 따라 임업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과중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폐지·완화하여 임업의 경쟁력을 대폭 향상시키

고자 산림행정 규제개혁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검토 작업으로서 산림청 국·과장, 교수, 독립가, 임업후계자 등이 참여하는 「산림청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였다. 산림행정 규제개혁 추진단에서 발굴된 과제를 토대로 각계 의견수렴과 자체정책 토론회(2회) 및 교수·임업인 간담회를 거쳐 규제 개혁과제로 채택하여 1998. 12월까지 기존규제 295건 중 51%인 150건을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림계획에 대한 사항으로서 사유림 영림계획작성을 의무제에서 권장제로 전환하고, 독립가 특수개발지역, 산업비림 소유자에 대한 영림기술자 고용명령제도와 시장·군수가 산주에게 영림계획의 변경을 명령하는 제도, 그리고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하지 않을 때 대집행하는 제도를 폐지한다.

둘째, 조림장려제도로써 벌채 허가시 조림비용 사전 예치의무와 임목의 벌채, 입산물의 이용·가공·판매하는자에 대한 조림명령 제도를 폐지한다.

셋째, 국유림 관리제도로써 국유림 대부기준과 취소요건을 투명화한다.

넷째, 산림형질변경제도로써 밤나무 임지 작업로의 설치와 운재로의 설치를 자율화하고 형질변경지 내에서의 건축물 준공검사제도를 폐지하며, 벌채·형질변경이 없는 소득사업은 허가·신고에서 임의로 완화한다.

다섯째, 토석관련제도로써 토석의 매각제한 조건과 무상양여 요건을 명확화하고 채석생산현황보고를 분기에서 연보로 완화한다.

여섯째, 임목벌채 제도로써 신고에 의한 임목벌채를 임의제로 대폭전환하고 신고필증제도를 폐지한다.

일곱째, 보전임지관리제도로써 3ha미만 분할금지제도와 산림전용부담금 제도를 폐지하고 전용협의기준을 투명화한다.

여덟째, 전문조합설립제도로써 전문조합 설립시 발기인 수와 동의자 수를 완화하고 설립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아홉째, 훈령·예규를 총 93건에서 53건으로 폐지 또는 통·폐합하며 각종 법령 미근거규제 21건을 폐지 또는 개정한다.

(행정관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김판석)

1998년도 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1998년 9월 일 인쇄

1998년 9월 일 발행

발행 : 대한민국 농 립 부

편집 : 농림부 농업정책과

인쇄 : 대 양 인 쇄

☎ 503-6063

<비매품>